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747-01

정책보고서 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연구



이현주·오욱찬·이윤경·이원진·성재민·이길제·박형준·이병재

【책임연구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공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 보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동연구진】

오옥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형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병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19. 6. 5.)한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요약	1
----------	---

제1부 연구의 배경과 구성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55
제1절 연구의 배경	55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58
제2장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59
제3장 연구방법과 분석틀	61
제1절 연구방법	61
제2절 분석틀	62

제2부 사회보장제도 수급현황과 소득보장효과 분석

제1장 자료의 구성과 표본 특성	69
제1절 자료의 구성	69
제2절 가중치 적용	74
제3절 표본 특성	81
제2장 인구집단별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88
제1절 근로연령층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88
제2절 노인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128
제3절 장애인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184
제4절 아동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249
제3장 욕구영역별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281
제1절 건강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281
제2절 주거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290
제3절 교육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320

제4장 소득·서비스보장 현황과 소득분배효과	329
제1절 소득보장 종합분석	329
제2절 서비스보장 종합분석	349
제3절 소득·서비스보장 종합분석	359

제3부 행정자료 연계·활용 기반과 정책과제

제1장 사회보장정책 연구와 자료 활용 경향	367
제1절 기존 사회보장정책 연구의 자료 활용 경향과 한계	367
제2절 행정자료 활용 기반의 최근 변화	370
제2장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과 시사점	374
제1절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 기반	374
제2절 북유럽 국가사례의 함의	381
제3장 행정자료 활용 방향과 정책과제	382
제1절 행정자료의 활용 방향	382
제2절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383
참고문헌	399

표 목차

〈표 2-1-1-1〉 사회보장 관련 행정자료의 소관부처와 관리조직	70
〈표 2-1-2-1〉 가구주 특성 및 지역 분포	75
〈표 2-1-2-2〉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수의 결합분포	76
〈표 2-1-2-3〉 개인 특성 분포	76
〈표 2-1-2-4〉 중복표본과 분석표본의 가구주 특성 및 지역 분포	78
〈표 2-1-2-5〉 중복표본과 분석표본, 중복개인과 비중복개인의 개인 특성 분포	79
〈표 2-1-2-6〉 원표본과 분석표본의 가구주 특성 및 지역 분포	80
〈표 2-1-2-7〉 원표본과 분석표본의 개인 특성 분포	81
〈표 2-1-3-1〉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기초분석 결과	83
〈표 2-1-3-2〉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	84
〈표 2-1-3-3〉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	84
〈표 2-1-3-4〉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 비율	85
〈표 2-1-3-5〉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개인 비율	85
〈표 2-1-3-6〉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개인 비율	86
〈표 2-1-3-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 규모	87
〈표 2-1-3-8〉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 규모	87
〈표 2-1-3-9〉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평균 가구 규모	87
〈표 2-2-1-1〉 분석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	89
〈표 2-2-1-2〉 18-64세 가구주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사업소득 있는 가구 비중	89
〈표 2-2-1-3〉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일용근로소득 있는 가구 비중	90
〈표 2-2-1-4〉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근로소득 있는 가구 비중(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비중임)	90
〈표 2-2-1-5〉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 분포	91
〈표 2-2-1-6〉 가구주 18-64세 가구 중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포함) 수급가구 비중	92
〈표 2-2-1-7〉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포함) 수급가구 비중	92
〈표 2-2-1-8〉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포함) 수급가구 비중	93
〈표 2-2-1-9〉 16-64세 가구주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별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제외) 수급가구 비중	93
〈표 2-2-1-10〉 16-64세 가구주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별 자녀 장려금 수급가구 비중	94
〈표 2-2-1-11〉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포함)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94
〈표 2-2-1-12〉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95
〈표 2-2-1-13〉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95
〈표 2-2-1-14〉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비중	96
〈표 2-2-1-15〉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비중	97
〈표 2-2-1-16〉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비중	97
〈표 2-2-1-17〉 18-34세 있는 18-64세 가구주 가구의 소득, 재산별 취업성공패키지 참가 비중	97
〈표 2-2-1-18〉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구의 평균 수급액	98

〈표 2-2-1-19〉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구의 평균 수급액	98
〈표 2-2-1-20〉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구의 평균 수급액	99
〈표 2-2-1-21〉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실업급여 수급 비중	100
〈표 2-2-1-22〉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실업급여 수급 비중	100
〈표 2-2-1-23〉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실업급여 수급 비중	100
〈표 2-2-1-24〉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실업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101
〈표 2-2-1-25〉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실업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101
〈표 2-2-1-26〉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실업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102
〈표 2-2-1-27〉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수급 비중	103
〈표 2-2-1-28〉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수급 비중	103
〈표 2-2-1-29〉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수급 비중	104
〈표 2-2-1-30〉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가구의 평균 수급액	104
〈표 2-2-1-31〉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가구의 평균 수급액	105
〈표 2-2-1-32〉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가구의 평균 수급액	105
〈표 2-2-1-33〉 2017년 일모아 재정지원에 참여한 일수가 있는 사람 중 2015년 일모아 재정지원에서도 참여한 일수가 있는 사람	105
〈표 2-2-1-34〉 모성보호 수급 가구 비중: 18-64세 가구주 가구	106
〈표 2-2-1-35〉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모성보호 수급 가구 비중	106
〈표 2-2-1-36〉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모성보호 수급 가구 비중	107
〈표 2-2-1-37〉 0-8세 아동이 있는 가구 비중: 18-64세 가구주 가구 대상	107
〈표 2-2-1-38〉 0-1세 아동이 있는 가구 비중: 18-64세 가구주 대상	108
〈표 2-2-1-39〉 모성보호 수급 가구 비중: 18-64세 가구주 가구, 0-1세 아동 있는 가구 한정	108
〈표 2-2-1-40〉 모성보호 수급 가구 비중: 18-64세 가구주 가구, 0-8세 아동 있는 가구 한정	109
〈표 2-2-1-41〉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모성보호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109
〈표 2-2-1-42〉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모성보호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110
〈표 2-2-1-43〉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모성보호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110
〈표 2-2-1-44〉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수: 가중치 부여 전	111
〈표 2-2-1-45〉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자활 수급 가구 비중	111
〈표 2-2-1-46〉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 비중	112
〈표 2-2-1-47〉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 비중	112
〈표 2-2-1-48〉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 비중	112
〈표 2-2-1-50〉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113
〈표 2-2-1-51〉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113
〈표 2-2-1-52〉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113
〈표 2-2-1-53〉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자활 근로 참여 가구 비중	114
〈표 2-2-1-54〉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자활 근로 참여 가구 비중	114
〈표 2-2-1-55〉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자활 근로 참여 가구 비중	114
[그림 2-2-1-2]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 비중	115
〈표 2-2-1-56〉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 비중	116

〈표 2-2-1-57〉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 비중	116
〈표 2-2-1-58〉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 비중	117
〈표 2-2-1-59〉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118
〈표 2-2-1-60〉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118
〈표 2-2-1-61〉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119
〈표 2-2-1-62〉 빈곤율 및 중간층 비율 변화	119
〈표 2-2-1-63〉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개인의 소득분위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평균 소득 (2017년 10월 기준)	121
〈표 2-2-1-6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본 임금 근로자(18-59세)의 사회보험 가입	122
〈표 2-2-1-6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본 18-59세 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지위 교차 분석	124
〈표 2-2-1-66〉 18-6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 가입	125
〈표 2-2-1-67〉 18-6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직역연금 가입	125
〈표 2-2-1-68〉 18-6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고용보험 가입	126
〈표 2-2-1-69〉 18-6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126
〈표 2-2-2-1〉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129
〈표 2-2-2-2〉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개인 비율	130
〈표 2-2-2-3〉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 분포	131
〈표 2-2-2-4〉 노인 가구의 특성	132
〈표 2-2-2-5〉 노인 개인의 특성	133
〈표 2-2-2-6〉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 평균	134
〈표 2-2-2-7〉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	135
〈표 2-2-2-8〉 노인 가구의 특성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136
〈표 2-2-2-9〉 노인 개인의 특성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137
〈표 2-2-2-10〉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141
〈표 2-2-2-11〉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142
〈표 2-2-2-12〉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143
〈표 2-2-2-13〉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기타 공적이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144
〈표 2-2-2-14〉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전체 공적이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145
〈표 2-2-2-15〉 노인 가구의 특성별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147
〈표 2-2-2-16〉 노인 개인의 특성별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148
〈표 2-2-2-17〉 시장소득 분위별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분포	149
〈표 2-2-2-18〉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분포	150
〈표 2-2-2-19〉 개인의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공적연금 가입률,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153
〈표 2-2-2-20〉 55~64세 개인의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공적연금 가입률,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20년 이상 가입률	154
〈표 2-2-2-21〉 노인 가구 가처분소득 빈곤율	155
〈표 2-2-2-22〉 노인 개인 가처분소득 빈곤율	156
〈표 2-2-2-23〉 노인 가구 특성별 소득보장제도의 노인 가구 빈곤율 감소효과	158
〈표 2-2-2-23〉 노인 가구 특성별 소득보장제도의 노인 가구 빈곤율 감소효과(이어서)	159
〈표 2-2-2-24〉 노인 개인 특성별 소득보장제도의 노인 개인 빈곤율 감소효과	161

〈표 2-2-2-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개요	163
〈표 2-2-2-26〉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재산분위별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 분포	165
〈표 2-2-2-27〉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연령별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 분포	165
〈표 2-2-2-28〉 연령 및 재산분위별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 분포	165
〈표 2-2-2-29〉 소득 및 재산분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 수 및 비율	166
〈표 2-2-2-30〉 소득 분위 및 연령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 수	167
〈표 2-2-2-31〉 재산 분위 및 연령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 수	167
〈표 2-2-2-32〉 소득 및 재산분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168
〈표 2-2-2-33〉 소득 분위 및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168
〈표 2-2-2-34〉 재산 분위 및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169
〈표 2-2-2-35〉 소득 및 재산분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현황	170
〈표 2-2-2-36〉 소득 분위 및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현황	170
〈표 2-2-2-37〉 재산 분위 및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현황	170
〈표 2-2-2-38〉 소득 및 재산분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현황	171
〈표 2-2-2-39〉 소득 및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현황	172
〈표 2-2-2-40〉 재산 분위 및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현황	172
〈표 2-2-2-41〉 소득 분위별 장기요양등급 분포	173
〈표 2-2-2-42〉 재산 분위별 장기요양등급 분포	173
〈표 2-2-2-43〉 연령별 장기요양등급분포	174
〈표 2-2-2-44〉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별 재가급여 평균 이용개수	174
〈표 2-2-2-45〉 소득분위 및 연령별 재가급여 이용개수	175
〈표 2-2-2-46〉 재산분위 및 연령별 재가급여 이용개수	175
〈표 2-2-2-47〉 가구 소득(가구보험료)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일수 및 이용액수	176
〈표 2-2-2-48〉 연령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일수 및 이용액수	176
〈표 2-2-2-49〉 가구재산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일수 및 이용액수	176
〈표 2-2-2-50〉 가구 소득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금액	177
〈표 2-2-2-51〉 연령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금액	178
〈표 2-2-2-52〉 재산분위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금액	178
〈표 2-2-2-53〉 소득 및 재산분위별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여부	179
〈표 2-2-2-54〉 소득 및 연령 별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여부	179
〈표 2-2-2-55〉 재산분위 및 연령별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여부	179
〈표 2-2-2-56〉 소득분위별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일수 및 지급액	180
〈표 2-2-2-57〉 연령별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일수 및 지급액	180
〈표 2-2-2-58〉 가구재산별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일수 및 지급액	180
〈표 2-2-2-59〉 소득 및 재산분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 현황	181
〈표 2-2-2-60〉 소득 및 연령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 현황	181
〈표 2-2-2-61〉 연령 및 재산 10분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 수	182
〈표 2-2-2-6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평균 이용시간 및 결제액·본인부담금 비율	182
〈표 2-2-2-63〉 소득분위별 돌봄형태의 변화(15년 기준 17년)	183

〈표 2-2-2-64〉 연령별 돌봄형태의 변화(15년 기준 17년)	183
〈표 2-2-2-65〉 가구재산별 돌봄형태의 변화(15년 기준 17년)	183
〈표 2-2-3-1〉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규모	184
〈표 2-2-3-2〉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특성	185
〈표 2-2-3-3〉 장애인의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분포	185
〈표 2-2-3-4〉 2015-2017년 장애 상태 변화	186
〈표 2-2-3-5〉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비율(2017)	187
〈표 2-2-3-6〉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비율(2017)	188
〈표 2-2-3-7〉 소득 · 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비율(2017)	188
〈표 2-2-3-8〉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개인의 비율(2017)	189
〈표 2-2-3-9〉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개인의 비율(2017)	189
〈표 2-2-3-10〉 소득 · 재산 분위별 장애인 개인의 비율(2017)	190
〈표 2-2-3-11〉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의 소득분위 · 연령대별 분포(2017)	191
〈표 2-2-3-12〉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의 재산분위 · 연령대별 분포(2017)	192
〈표 2-2-3-13〉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의 소득 · 재산 분위별 분포(2017)	192
〈표 2-2-3-14〉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분위 · 연령대별 분포(2017)	193
〈표 2-2-3-15〉 장애인-비장애인의 재산분위 · 연령대별 분포(2017)	194
〈표 2-2-3-16〉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 · 재산 분위 분포(2017)	194
〈표 2-2-3-17〉 장애인 가구 및 개인 특성별 연간 소득(2017)	195
〈표 2-2-3-18〉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연간 소득(2017)	196
〈표 2-2-3-19〉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연간 소득(2017)	197
〈표 2-2-3-20〉 소득 · 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연간 소득(2017)	198
〈표 2-2-3-21〉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의 연간 소득(2017)	199
〈표 2-2-3-22〉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의 연간 소득(2017)	200
〈표 2-2-3-23〉 소득 · 재산 분위별 장애인의 연간 소득(2017)	201
〈표 2-2-3-24〉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분류	202
〈표 2-2-3-25〉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의 연간 공적 이전소득 수급(2017)	203
〈표 2-2-3-26〉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급여 수급(2017)	204
〈표 2-2-3-27〉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급여 수급(2017)	204
〈표 2-2-3-28〉 소득 · 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급여 수급(2017)	205
〈표 2-2-3-29〉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장애급여1 수급(2017)	206
〈표 2-2-3-30〉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장애급여1 수급(2017)	206
〈표 2-2-3-31〉 소득 · 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장애급여1 수급(2017)	207
〈표 2-2-3-32〉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장애급여2 수급(2017)	208
〈표 2-2-3-33〉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장애급여2 수급(2017)	208
〈표 2-2-3-34〉 소득 · 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장애급여2 수급(2017)	209
〈표 2-2-3-35〉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 수급(2017)	210
〈표 2-2-3-36〉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 수급(2017)	210
〈표 2-2-3-37〉 소득 · 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 수급(2017)	211

〈표 2-2-3-38〉 소득분위·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 수급(2017)	212
〈표 2-2-3-39〉 재산분위·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 수급(2017)	212
〈표 2-2-3-40〉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 수급(2017)	213
〈표 2-2-3-41〉 소득분위·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수급(2017)	214
〈표 2-2-3-42〉 재산분위·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수급(2017)	214
〈표 2-2-3-43〉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수급(2017)	215
〈표 2-2-3-44〉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 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18-59세)	216
〈표 2-2-3-45〉 소득분위·연령대별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2017)	217
〈표 2-2-3-46〉 재산분위·연령대별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2017)	218
〈표 2-2-3-47〉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2017)	219
〈표 2-2-3-48〉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빈곤율(2017)	220
〈표 2-2-3-49〉 소득보장 급여의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221
〈표 2-2-3-50〉 소득보장 급여의 소득분위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223
〈표 2-2-3-51〉 소득보장 급여의 재산분위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224
〈표 2-2-3-52〉 소득보장 급여의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225
〈표 2-2-3-53〉 돌봄 서비스의 급여가격	226
〈표 2-2-3-54〉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 및 이용 실태	227
〈표 2-2-3-55〉 소득분위·연령대별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 및 이용 실태(2017)	229
〈표 2-2-3-56〉 재산분위·연령대별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 및 이용 실태(2017)	230
〈표 2-2-3-57〉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 및 이용 실태(2017)	231
〈표 2-2-3-58〉 장애인-비장애인의 보육 서비스 수급률	232
〈표 2-2-3-59〉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분위·연령대별 보육 서비스 수급률(2017)	233
〈표 2-2-3-60〉 장애인-비장애인의 재산분위·연령대별 보육 서비스 수급률(2017)	234
〈표 2-2-3-61〉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재산 분위별 보육 서비스 수급률(2017)	234
〈표 2-2-3-6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구분	235
〈표 2-2-3-63〉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및 이용 실태	236
〈표 2-2-3-64〉 소득분위·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및 이용 실태(2017)	237
〈표 2-2-3-65〉 재산분위·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및 이용 실태(2017)	238
〈표 2-2-3-66〉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및 이용 실태(2017)	239
〈표 2-2-3-67〉 장애인-비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 비율	240
〈표 2-2-3-68〉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분위·연령대별 일자리 사업 참여 비율(2017)	241
〈표 2-2-3-69〉 장애인-비장애인의 재산분위·연령대별 일자리 사업 참여 비율(2017)	242
〈표 2-2-3-70〉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재산 분위별 일자리 사업 참여 비율(2017)	242
〈표 2-2-3-71〉 서비스보장 급여의 구분	243
〈표 2-2-3-72〉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의 연간 서비스보장 급여(2017)	243
〈표 2-2-3-73〉 서비스보장 급여의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244
〈표 2-2-3-74〉 서비스보장 급여의 소득분위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246
〈표 2-2-3-75〉 서비스보장 급여의 재산분위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247
〈표 2-2-3-76〉 서비스보장 급여의 재산분위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248

〈표 2-2-4-1〉 2017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249
〈표 2-2-4-2〉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 비율, 가구당 아동수 평균, 아동 개인 비율	251
〈표 2-2-4-3〉 25~64세 가구주 가구의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 비율, 가구당 아동수 평균, 아동 개인 비율	252
〈표 2-2-4-4〉 아동 가구의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 분포	253
〈표 2-2-4-5〉 아동 가구의 특성	254
〈표 2-2-4-6〉 아동 개인의 특성	254
〈표 2-2-4-7〉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255
〈표 2-2-4-8〉 아동 가구의 특성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256
〈표 2-2-4-9〉 아동 개인의 특성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256
〈표 2-2-4-10〉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257
〈표 2-2-4-11〉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258
〈표 2-2-4-12〉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260
〈표 2-2-4-13〉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의 기타 공적이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261
〈표 2-2-4-14〉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의 전체 공적이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262
〈표 2-2-4-15〉 아동 가구의 특성별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264
〈표 2-2-4-16〉 아동 개인의 특성별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265
〈표 2-2-4-17〉 아동 가구 가처분소득 빈곤율	266
〈표 2-2-4-18〉 아동 개인 가처분소득 빈곤율	266
〈표 2-2-4-19〉 아동 가구 특성별 소득보장제도의 아동 가구 빈곤율 감소효과	269
〈표 2-2-4-19〉 아동 가구 특성별 소득보장제도의 아동 가구 빈곤율 감소효과(이어서)	270
〈표 2-2-4-20〉 아동 개인 특성별 소득보장제도의 아동 개인 빈곤율 감소효과	271
〈표 2-2-4-2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	273
〈표 2-2-4-22〉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	274
〈표 2-2-4-2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비율(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274
〈표 2-2-4-24〉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비율(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275
〈표 2-2-4-2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비율(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275
〈표 2-2-4-26〉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보육료지원과 아동양육수당 수급가구 비율(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276
〈표 2-2-4-2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아동서비스3) 수급 가구비율(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277
〈표 2-2-4-28〉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아동서비스 수급가구 비율(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277
〈표 2-2-4-29〉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아동서비스 수급가구 비율(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278
〈표 2-2-4-30〉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아동서비스3)수급액(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278
〈표 2-2-4-31〉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아동서비스3)수급액(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279
〈표 2-2-4-32〉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평균 아동서비스3)수급액(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279
〈표 2-2-4-33〉 아동서비스 지원의 소득보장효과(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280
〈표 2-2-4-34〉 2017년 아동서비스 지원 수급자(개인)3)의 2015년 서비스 수급여부 비교	280
〈표 2-3-1-1〉 소득 및 재산분위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 수	281
〈표 2-3-1-2〉 소득 및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 수	282
〈표 2-3-1-3〉 재산분위 및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 수	282
〈표 2-3-1-4〉 소득 및 재산분위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액	283

〈표 2-3-1-5〉 소득 및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금액	283
〈표 2-3-1-6〉 재산 및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금액	284
〈표 2-3-1-7〉 가구 소득 분위 및 재산분위별 의료급여 수급	285
〈표 2-3-1-8〉 가구 소득분위 및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	285
〈표 2-3-1-9〉 가구 재산 및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	286
〈표 2-3-1-10〉 소득 및 가구재산별 재난적 의료비 평균 수금액	286
〈표 2-3-1-11〉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재산분위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지원	287
〈표 2-3-1-12〉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재산분위별 본인부담상한 환급금	287
〈표 2-3-1-13〉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재산분위별 암환자 산정특례	288
〈표 2-3-1-14〉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재산분위별 결핵환자 산정특례	289
〈표 2-3-1-15〉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재산분위별 화상환자 산정특례	289
〈표 2-3-2-1〉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291
〈표 2-3-2-2〉 201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91
〈표 2-3-2-3〉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별 임차(전세, 월세) 가구 분포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2017년)	292
〈표 2-3-2-4〉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2017년)	293
〈표 2-3-2-5〉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2017년)	294
〈표 2-3-2-6〉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2017년)	294
〈표 2-3-2-7〉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임차급여액(2017년)	296
〈표 2-3-2-8〉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임차급여액(2017년)	296
〈표 2-3-2-9〉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임차급여액(2017년)	297
〈표 2-3-2-10〉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기간(2017년)	298
〈표 2-3-2-11〉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기간(2017년)	298
〈표 2-3-2-12〉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기간(2017년)	299
〈표 2-3-2-13〉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2015년 주거급여 수급비율(2015, 2017년)	300
〈표 2-3-2-14〉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2015년 주거급여 수급비율(2015, 2017년)	300
〈표 2-3-2-15〉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2015년 주거급여 수급비율(2015, 2017년)	301
〈표 2-3-2-16〉 주거급여 제도의 빈곤율 감소효과 및 불평등(지니계수) 변화 효과	302
〈표 2-3-2-18〉 2017년 적용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03
〈표 2-3-2-19〉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별 임차(전세, 월세) 가구 분포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2017년)	304
〈표 2-3-2-20〉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2017년)	305
〈표 2-3-2-21〉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2017년)	306
〈표 2-3-2-22〉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2017년)	306
〈표 2-3-2-23〉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2017년)	307
〈표 2-3-2-24〉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2017년)	308
〈표 2-3-2-25〉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2017년)	308
〈표 2-3-2-26〉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2017년)	309
〈표 2-3-2-27〉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2017년)	310
〈표 2-3-2-28〉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2017년)	310
〈표 2-3-2-29〉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201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2015, 2017년)	311

〈표 2-3-2-30〉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201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2015, 2017년)	311
〈표 2-3-2-31〉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201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2015, 2017년)	312
〈표 2-3-2-32〉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2017년)	313
〈표 2-3-2-33〉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2017년)	314
〈표 2-3-2-34〉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2017년)	314
〈표 2-3-2-35〉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2017년)	315
〈표 2-3-2-36〉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2017년)	316
〈표 2-3-2-37〉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2017년)	316
〈표 2-3-2-38〉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2015, 2017년)	317
〈표 2-3-2-39〉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2015, 2017년)	317
〈표 2-3-2-40〉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2015, 2017년)	318
〈표 2-3-3-1〉 교육지원별 수급자, 수급가구 규모	320
〈표 2-3-3-2〉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급여, 긴급교육지원 수급가구 비율	320
〈표 2-3-3-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장학금 수급가구 비율	321
〈표 2-3-3-4〉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전체 교육지원 수급가구 비율	321
〈표 2-3-3-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급여·긴급교육지원 수급가구 비율	322
〈표 2-3-3-6〉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장학금 수급가구 비율	322
〈표 2-3-3-7〉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급여·긴급교육지원 장학금 수급가구 비율	322
〈표 2-3-3-8〉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교육급여 수급자 비율	323
〈표 2-3-3-9〉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장학금 수급자 비율	323
〈표 2-3-3-10〉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전체 교육지원 수급자 비율	324
〈표 2-3-3-11〉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급여 수급자 비율	324
〈표 2-3-3-12〉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장학금 수급자 비율	324
〈표 2-3-3-1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급여·긴급교육지원·장학금 수급자 비율	325
〈표 2-3-3-14〉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지원 평균 수급액	325
〈표 2-3-3-15〉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지원 평균수급액	326
〈표 2-3-3-16〉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지원 평균 수급액	326
〈표 2-3-3-17〉 교육지원 소득보장효과	327
〈표 2-3-3-18〉 2017년 교육지원 수급자의 과거 수급이력	328
〈표 2-4-1-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가 있는 가구 분포	330
〈표 2-4-1-2〉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330
〈표 2-4-1-3〉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가 있는 가구 분포	331
〈표 2-4-1-4〉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331
〈표 2-4-1-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가 있는 가구 분포	332
〈표 2-4-1-6〉 2017년 연금 고용보험가입자의 15년 가입여부	332
〈표 2-4-1-7〉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중 1종 이상 수급가구비율	334
〈표 2-4-1-8〉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평균 수급 제도수	334
〈표 2-4-1-9〉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중 1종 이상 수급가구 비율	335
〈표 2-4-1-10〉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평균 수급 제도 수	335

〈표 2-4-1-11〉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중 1종 이상 수급가구 비율	336
〈표 2-4-1-12〉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평균 수급 제도 수	336
〈표 2-4-1-1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가입자 가구비율 및 현금급여 수급가구 비율	337
〈표 2-4-1-14〉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가입자 가구비율 및 현금급여 수급가구 비율	338
〈표 2-4-1-1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연금·고용보험 가입자 가구비율 및 현금급여 수급가구 비율	338
〈표 2-4-1-16〉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 개수	339
〈표 2-4-1-1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 개수	340
〈표 2-4-1-18〉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수급 개수	340
〈표 2-4-1-19〉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보편수당 수급 개수	341
〈표 2-4-1-20〉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 개수	341
〈표 2-4-1-21〉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 개수	342
〈표 2-4-1-22〉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수급 개수	342
〈표 2-4-1-23〉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보편수당 수급 개수	343
〈표 2-4-1-24〉 2017년 소득보장수급자(개인)의 2015년 수급여부 비교	343
〈표 2-4-1-25〉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액	344
〈표 2-4-1-26〉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액	345
〈표 2-4-1-2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수급액	345
〈표 2-4-1-28〉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수급액	346
〈표 2-4-1-29〉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액	346
〈표 2-4-1-30〉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수급액	347
〈표 2-4-1-31〉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액	347
〈표 2-4-1-32〉 2017년 소득보장수급자(개인)의 2015년 수급액 비교	348
〈표 2-4-1-33〉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분배 효과	349
〈표 2-4-2-1〉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1종 이상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건강보장 포함)	350
〈표 2-4-2-2〉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1종 이상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건강보장 포함)	351
〈표 2-4-2-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수급 서비스 수(건강보장 포함)	352
〈표 2-4-2-4〉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수급 서비스 수(건강보장 제외)	352
〈표 2-4-2-5〉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서비스 수(건강보장 포함)	353
〈표 2-4-2-6〉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서비스 수(건강보장 제외)	353
〈표 2-4-2-7〉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1종 이상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건강보장 포함)	354
〈표 2-4-2-8〉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평균 수급 서비스 수(건강보장 포함)	355
〈표 2-4-2-9〉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평균 수급 서비스 수(건강보장 제외)	355
〈표 2-4-2-10〉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서비스 수급액	356
〈표 2-4-2-11〉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서비스 수급액	356
〈표 2-4-2-12〉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수급 일자리 서비스 수	357
〈표 2-4-2-1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일자리 서비스 수급액	358
〈표 2-4-2-14〉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평균 일자리 서비스 수급액	358
〈표 2-4-2-15〉 서비스지원의 소득보장효과	359
〈표 2-4-3-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 비율	360

〈표 2-4-3-2〉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 비율	361
〈표 2-4-3-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 비율	361
〈표 2-4-3-4〉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의 평균 수급액	362
〈표 2-4-3-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의 평균 수급액	363
〈표 2-4-3-6〉 현금지원 및 서비스 지원의 소득분배효과	364
〈표 3-1-1-1〉 주요 설문조사자료의 사회보장제도 정보	368
〈표 3-1-1-2〉 설문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장단점 비교	368
〈표 3-1-2-1〉 행정자료가 존재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예	371
〈표 3-1-2-2〉 행정자료의 종류와 관리기관의 예	372
〈표 3-2-1-1〉 북유럽 국가들에서 등록 자료의 생성과 센서스에 통합	375
〈표 3-3-2-1〉 행정자료 활용 정책분석의 주요 이슈	384

그림 목차

[그림 2-1-1-1] 행정자료의 결합과 분석 내용	69
[그림 2-1-1-2] 행정자료 구축 과정	72
[그림 2-1-1-3] 행정자료 결합과정 개요	73
[그림 2-1-1-4] 적정성 심사의 개요	73
[그림 2-2-1-1] 실업급여 2017년 수급가구의 시장소득+실업급여 중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102
[그림 2-2-1-2]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 비중	115
[그림 2-2-1-3] 빈곤율(중위소득 25% 기준) 변화 - 좌측은 18-64세 가구주, 우측은 전가구 기준	120
[그림 2-2-2-1] 노인 가구 및 개인 가처분소득 빈곤율	156
[그림 2-2-2-2] 노인 가구 빈곤율 감소효과(중위소득 50% 기준)	162
[그림 2-2-2-3] 노인 개인 빈곤율 감소효과(중위소득 50% 기준)	162
[그림 2-2-4-1] 아동 가구 및 개인 가처분소득 빈곤율	267
[그림 2-2-4-2] 아동 가구 빈곤율 감소효과(중위소득 50% 기준)	272
[그림 2-2-4-3] 아동 개인 빈곤율 감소효과(중위소득 50% 기준)	272
[그림 2-3-2-1] 주거복지 보장 비율 분석 종합	319
[그림 2-3-3-1] 교육지원의 소득분배 효과	327
[그림 2-4-1-1]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분배효과	348
[그림 2-4-2-1] 연령별 실업률과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2017년)	357
[그림 3-1-1-1] 자료의 제약과 정책연구의 한계	370
[그림 3-2-1-1] 덴마크의 행정자료 신청과 원격접속 방식의 활용과정	376
[그림 3-2-1-2] 덴마크 통계청의 원격분석 체계도	377
[그림 3-2-1-3] 노르웨이 행정자료 활용 전 절차 개요	378
[그림 3-3-2-1] 사회보장 정보의 단절 사례	389

제1부 연구의 배경과 구성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 연구의 배경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기획의 중요성 부상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갖추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상포괄성이나 급여의 충분성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남기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 평가와 체계화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갖추어 왔음.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이나 급여충분성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남기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존의 평가연구는 설문조사 자료에 의존. 그러나 설문조사는 한정적인 표본과 조사 시간, 높은 비용 등의 한계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평가의 활성화가 긴요

- 과거 10여 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정보가 전산화되면서 행정자료의 크기와 질은 꾸준히 개선되어 옴.
-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행정자료는 정보의 정확성과 표본의 대표성, 기준시점과 분석시점의 일치, 정보·변수 범위 확장의 용이성에서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우위, 횡단면 뿐만 아니라 종단면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조사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부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
- 행정자료를 연계할 경우 개별 제도 및 제도 군의 범위를 넘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가능 또한 개별 제도 수급자가 전 사회구성원 중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수급현황을 중심으로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의 활용과 기여를 기대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 분석틀을 구성하여 향후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한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기대.
 - 한편 향후 행정 자료를 활용한 정책평가 연구에 적지 않은 경험적 정보를 제공할 것
 - 행정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정책기획에 보다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기획의 과정을 보다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책대상 중 제도적 누락의 위험이 있는 집단을 파악하여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확충과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2장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 연구의 구성

- 이 연구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됨.
 - 첫째, 연계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평가
 - 둘째, 행정자료의 추출과 연계, 그리고 이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연구의 기반 강화를 위한 현황 분석과 제안을 담음.
 -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 행정자료 기반 정책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정리.

□ 연구 내용

-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구성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기존의 자료 기반에 대한 검토
 - 선행연구의 분석방법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과 ‘급여충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틀을 구성
 - 가구주의 연령, 개인의 연령,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의 재산수준을 중심으로 집단비교가 되도록 분석틀을 마련.

○ 행정자료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효과 분석

-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8개 기관의 행정자료를 입수, 비식별화, 연계 및 적정성 심사과정 등을 거쳐 자료 구축
 - 행정자료의 추출과 연계과정은 이후 행정자료의 활용기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연구 과정으로 활용됨.
- 대상포괄성과 급여수준의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구성원 중 어느 집단이 사회보장제도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지원에서 배제된 취약인구집단이 있는지 등을 파악
 - 대상포괄성은 수급율을 기준으로 분석하되, 수급여부와 수급하는 제도의 수를 분석
 - 급여충분성은 현금지원이 빈곤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
 - 이와 더불어 급여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
 - 위의 대상포괄성과 급여 충분성은 소득, 자산,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비교방식으로 분석하여 취약집단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해석

○ 사회보장제도 분석에서 행정자료가 갖는 강점과 한계를 규명하고 정리.

-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설문조사자료의 한계를 논하고 대안으로 논의되는 행정자료의 강점을 정리
- 행정자료와 설문조사 자료의 강점을 살리는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정책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춘 선진적인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정리.

○ 정책적 제언 도출

-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보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부분에서는 포괄성이나 충분성에서 취약한 정책영역, 기초육구영역. 또는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향, 개선방안을 제시.
 - 개별 제도의 개선보다는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지형변화, 균형모색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시사점을 정리함.
- 행정자료 기반 사회보장제도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제언도 제시함.
-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이슈와 대안모색을 법적 기반 강화, 거버넌스 구축, 자료의 목록과 정의의 마련과 공유를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책제언을 마련

제3장 연구방법과 분석틀

□ 연구 방법

○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두 가지

- 하나는 행정자료를 연계·구축하여 이를 분석하는 계량적 분석
 - 주민등록 DB에서 세대주 기준으로 전 세대의 7% 표본을 추출하고 사회보장제도 관련 행정자료를 관리하는 18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출, 비식별과정을 거쳐 자료를 연계
 - 연계된 자료는 국세통계센터(16개 기관의 행정자료와 국세청 관련 자료의 연계)와 건강보험공단 분석센터(16개 기관의 행정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자료의 연계)를 이용하여 분석
- 다른 하나는 행정자료 활용 및 이를 활용한 정책기획과 관련 전문가 포럼 운영.
 - 법률전문가, 행정자료 기반 정책분석 유경험 연구자, 사회보장제도 평가 전문가, 행정자료 관리 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에서 관련 발표와 토의를 진행, 관련 이슈들을 점검.

○ 정보를 추출하고 연계하는 과정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적정성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따라 진행

□ 분석틀

○ 사회보장제도 효과 분석 지표

-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는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포괄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급여의 수준이 적절,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분석됨.
- 대상포괄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구성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분석되며, 제도 수급여부와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를 활용하여 분석함.
- 급여충분성은 통상 필요한 수준 대비 급여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분석하여 파악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는 욕구의 수준을 파악할 있는 정보가 없어 급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집단 간 비교하는 방식으로 급여의 적절성 분석을 대체하였음.
-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충분성 평가를 위하여 빈곤율 완화 효과와 불평등 완화효과를 분석
 - 빈곤율 변화는 사적이전이 누락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각 제도의 고려가 반영된 빈곤율의 변화분으로 분석하였으며, 불평등수준은 지니계수를 이용함.
 -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와 더불어 중위 소득 25%를 병행 적용하여 빈곤의 심도별 빈

곤을 완화 효과를 비교

- 서비스 보장의 경우 수급여부에 욕구를 추정할 수 있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분성에 대한 간접적 평가를 수행.
- 예를 들어 아동이 있는 가구 대상 아동서비스 수급율 등을 분석하고 기술함. 또는 자가 가구 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의 비율 등을 비교하여 욕구 기반 사회보장제도 수급의 포괄성이나 충분성을 가늠하도록 분석을 보완

○ 비교집단의 구성

- 비교 집단 구분은 소득, 재산, 가구주(또는 개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음.
-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0분위 나누어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소득은 시장소득, 재산은 자료에 정보가 있는 재산, 즉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10분위로 집단을 구분함.
- 사적이전소득의 누락이나 금융재산의 누락 등 분석에 활용된 행정자료의 제약으로 소득하위 1,2분위 그리고 재산 하위 1,2, 3, 4분위는 구분되지 않음.
- 연령은 기본적으로 아동, 노인, 그리고 근로연령층으로 구분하되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다시 세분하였음.
- 소득 10분위와 재산 10분위, 가구주 연령을 혼합 적용하여 소득분위*가구주연령, 소득분위*수급자 연령, 재산분위*수급자 연령 등 다양한 분석틀을 분석에 활용하였음.

○ 비교시점의 설정

- 본 연구의 분석기준시점은 2017년임.
- 2015년 정보도 추출하였으나 2015년의 표본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아 개인단위 불완전 균형패널자료의 성격을 지님. 이 자료는 수급변화를 분석하는 수준에서만 활용함.

제2부 사회보장제도 수급현황과 소득보장효과 분석

제1장 자료의 구성과 표본 특성

□ 자료의 구성과 구축 과정

- 본 연구에서 활용된 행정자료는 각종 사회보장정보가 담긴 자료에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를 연계한 것으로 구성됨.
- 건강보험 정보를 연계한 자료에는 국세청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소득과 소득세, 근로장려세제 등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며, 국세청 자료를 연계한 자료에는 건강보험, 요양서비스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

- 건강보험 자료에서 누락된 소득 정보는 보험료를 대리변수로 사용함.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는 표본추출과 자료 연결을 위한 정보의 원천임.

□ 자료의 구축 과정

- 행정자료 구축 과정은 아래와 같음.
 - 부처 및 부서 협의- 자료관리 조직과의 협의- 표본추출과 결합키 등의 비식별화- 적정심심의 - 분석센터로 자료 업로드 -자료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료 처리와 공통변수 생성 등- 자료 분석- 분석결과 반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기반으로 표본을 추출함.

□ 표본추출 및 표본의 대표성

- 분석 대상은 2017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에서 150만 세대와 각 세대에 속한 세대원을 표본으로 추출(전 가구의 약 7%)
 - 식별번호는 생년월일, 성, 이름을 활용하였으며 중복식별번호는 표본에서 제외
-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2017년 인구총조사의 시도와 세대주 연령을 조합한 셀별 비율에 맞추어 층화추출하였으며 추출된 표본의 사례 수는 1,499,996가구, 3,603,996명임.

□ 식별정보 중복 사례 처리 및 가중치 조정

- 분석 표본 추출 시 주민등록전산자료와 각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사회보장정보를 개인의 이름-생년월일-성별을 조합한 임시대체키를 활용하여 결합함.
 - 위 정보가 동일한 개인은 자료의 결합 시 수급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례를 제외하는 접근을 채택
 - 본 연구는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가구 단위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 일부 가구원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구 단위 변수에도 결측이 발생
 - 따라서 중복개인이 포함된 가구와 해당 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을 분석에서 제외
- 위의 중복여부가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원표본과 분석표본의 특성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분석결과 또한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분석 결과 중복표본과 분석표본에 뚜렷한 특성 차이가 존재하였으므로 단순히 중복표본을 제외하면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중복표본과 분석표본에 대해 공통적으로 측정된 변수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함. 즉, 분석표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관찰된 몇몇 특성의 분포를 원표본의 분포와 동일

하게 조정함.

- 이것은 일반적인 무응답 조정 가중치 부여과정과 동일한 의미임.

○ 구체적인 가중치 부여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전체 개인을 대상으로 가구주 및 개인 특성과 지역에 따른 하위집단을 구성한 후, 하위집단별 분석표본 포함확률을 추정함
- 둘째, 분석표본에 속한 개인에 대해 분석표본 포함확률의 역수를 개인가중치로 부여한 후, 개인가중치 평균이 1이 되도록 스케일을 조정함.
- 셋째, 가구 내 개인가중치의 평균을 가구가중치로 부여하고, 가구단위 가구가중치 평균이 1이 되도록 스케일을 조정함.

□ 소득 자료의 구성과 한계

○ 기본적인 분석틀은 '시장소득 10분위 단위×가구주 연령', '재산 10분위×가구주 연령', '시장소득 10분위×재산 10분위'를 사용함.

- 시장소득은 1차 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더해야 하지만 분석 자료에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1차 소득을 시장소득으로 사용함
-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금액을 사용함.
- 공적이전소득은 16개 기관에서 추출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와 국세청에서 추출한 근로(자녀)장려금이 포함됨.
- 가처분소득에 사용된 세금 정보는 국세청에서 추출한 소득세와 재산세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사회보장부담금은 차감하지 못함.

○ 대상포괄성 분석에는 시장소득 10분위를 적용하였으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빈곤율 산출에는 가처분소득을 활용

□ 가구 및 개인 표본의 구성과 특성

○ 소득과 재산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미리 밝혀두면, 시장소득 10분위에서는 1~2분위가 구분되지 않으며, 재산 10분위에서는 1~4분위가 구분되지 않음.

- 특히 재산을 10분위로 구분했을 때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주 가구도 대부분 분위가 구분되지 않아서 분석결과의 해석에 주의해야 함.

○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을 보면 50~64세, 40~49세, 26~39세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는 약 20%, 25세 이하인 경우는 3%에 미치지 못함.

○ 소득 분위를 비교하면 30대 이하보다 40~50대 가구주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득 상위 분위

에 분포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음. 이러한 경향은 소득과 재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은 집단이 재산 분위도 높게 나타나지만, 재산 1~4분위에 해당하는 집단만 보면 소득 분위 또한 꽤 높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행정자료에서 재산은 대체로 부동산으로 한정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이 높아도 자가가 아닐 경우 재산은 0이거나 0에 가까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함.
- 가구주 연령별 분석에서는 17세 이하 집단이 매우 적은 비율을 보였으나 개인별 분석에서는 17세 이하가 16.50%의 비율을 보였으며, 18~25세도 10.55%로 나타남.
 - 전체 분석 대상을 개인 수준으로 보면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에 따른 개인 비율은 가구 비율의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남.

제2장 인구집단별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제1절 근로연령층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 이 절의 분석은 근로연령층 가구의 경제활동관련과 관련된 위험을 다루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구주(세대주)가 18-64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일모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일체,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산재보호급여 중 소득 지원 급여, 자녀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장려금의 가구소득, 재산분위별 포괄성 분석
- 위 제도 중 하나라도 수급한 가구는 17.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 3-5분위이면서 재산 1-7분위 가구는 수급률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 6-8분위이면서 재산 8-10분위 가구의 수급률도 10%를 상회
 - 소득 3-5분위 가구 중 재산 1-7분위 가구의 높은 수급률은 근로장려금 때문이며,
 - 소득 6분위 수급률에는 근로장려금의 자녀 장려금과 실업급여가 중요한 영향
 - 소득과 재산 상위 분위로 갈수록 수급의 대부분이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로 구성
- 이들 제도의 빈곤율과 중간층 비율에 대한 영향도 분석해보면, 근로장려금, 실업급여는 뚜렷한 빈곤율 개선과 중간층 비율 증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급여 제도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를 모두 합쳐서 보면 23.6%에서 22.7%로 빈곤율을 0.9%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간층 비중은 29.4%에서 29.9%로 0.5%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장려금은 소득 3-5분위, 재산 중간 이하에서 특히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고, 실업급여는 중하-중상에서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의 반영
- 모성보호급여는 소득 상층부에서 주로 수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빈곤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중간층 비율의 경우 작게나마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모든 근로, 일용근로, 사업 소득 있는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 분석
 - 개인으로 보나 가구로 보나 소득 하위 분위, 재산 하위 분위에서는 사회보험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특히 고용보험보다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률이 낮게 나타남
 - 이는 고용보험의 가입 조건이 국민연금보다 덜 까다롭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임.
 - 반대로 상위 분위에서는 고용보험보다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이는 법인 고용주와 근로자를 고용한 비법인 기업 고용주도 사업장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이들을 미가입처리하는 고용보험의 제도 설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제2절 노인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1. 노인 소득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 분석 개요

-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노인 가구는 65세 이상 가구원이 존재하는 가구로 정의함.
 - 기본적으로 노인 가구를 분석하되, 부분적으로 노인 개인 대상 분석을 추가함.
- 가구형태가 노인의 소득과 빈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 가구를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노인가구주 가구')와 노인이 아닌 가구('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로 구분함.
 -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는 주로 성인 자녀(일부 비노인 배우자)와 노인이 동거하는 가구로 간주할 수 있음.
- 2017년 시점의 노인 소득분배를 분석함.
-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를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타 공적이전소득으로 나누어 분석함.

□ 노인의 규모 및 특성

- 2017년 전체 가구 중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83%, 노인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92%, 전체 개인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3.94%임.
- 비노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노인의 시장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재산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음.
 - 시장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분위가 증가할수록 노인 가구 및 개인 비율이 감소함. 시장소득이 없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가구이고, 그 대부분이 노인가구주 가구임.
 - 재산 분위별로 살펴보면,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1~4분위의 노인 가구 및 개인 비율이 가장 낮았고, 재산 5, 6분위의 노인 가구 비율이 각각 39.35%, 38.88%로 가장 높았음.
- 노인 가구 중에서 각 시장소득-재산 분위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40.78%의 노인 가구에 시장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주 가구보다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이 높았음.
- 노인 가구 및 개인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전체 노인 가구 중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는 80.98%이고, 전체 노인 개인 중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에 속한 노인은 83.54%임.
 - 노인가구주 가구 중에서는 가구주 남성 비율이 59.26%인 반면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중에서는 가구주 남성 비율이 76.6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노인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면, 65~69세가 32.59%, 70~74세가 25.35%, 75~79세가 21.47%, 80세 이상이 20.59%로 나타났음.
 -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농어촌 거주 비율이 14.82%로 비노인가구주 노인가구의 7.70%보다 높았음.
 - 전체 노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7.76%였는데,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에 속한 노인의 여성 비율은 75.17%로 훨씬 높았음.
 - 전체 노인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5~69세가 32.40%, 70~74세가 24.51%, 75~79세가 20.86%, 80세 이상이 22.23%로 나타났고,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보다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에 속한 노인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노인의 소득분포

-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가구의 시장소득 평균이 각각 1,270만원/년, 929만원/년, 2,724만원/년으로 나타났음.

- 노인의 가구형태가 시장소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평균적으로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 수준이 낮은 가운데 노인 가구 내 시장소득의 불평등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과 재산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시장소득 평균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음.

○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을 분석한 결과, 시장소득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노인가구주 가구보다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이 컸고, 가처분소득과 재산의 양의 상관관계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음.

- 전체 노인 가구의 약 96%를 차지하는 시장소득 1~9분위 집단은 세금 지출보다 많은 공적이전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

○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공적연금 수급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전체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50.35%,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은 537만원/년임.
-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모두 대체로 재산이 많을수록 공적연금 수급률과 급여 평균이 증가함.
 - 이는 생애과정에서 안정된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많이 축적한 노인이 소득비례적 성격의 공적연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함.
-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수급률과 급여 평균이 모두 낮게 나타났음.
 - 이는 경제력이 약하고 공적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인, 특히 여성 노인이 성인 자녀와 더 많이 동거할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음.

○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기초연금 수급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전체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68.48%,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은 193만원/년임.
-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대체로 시장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급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하위 70%의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제도 원리를 반영한 결과임.
-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시장소득과 재산이 증가할수록 급여 평균이 감소하였음.
 - 기초연금이 대체로 정액급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영향이 반영되

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은 가구의 가구원수가 많아 균등화에 따라 급여 평균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음.

-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수급률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가 더 높지만 급여 평균은 노인가구주 가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이 자녀와의 동거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됨.
-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보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급여 평균이 큰 것은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거나,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가구원수가 많아 균등화 과정에서 급여 평균이 더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됨.

○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전체 노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7.75%,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은 376만원/년임.
-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모두 시장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수급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급여기준선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증가할수록 급여 평균이 감소하는 경향도 분명하게 관찰되었음.
- 기초연금과 비교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훨씬 작은 규모의 수급가구에게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집중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전체 공적이전 수급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전체 노인 가구의 공적이전 수급률은 92.54%,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은 556만원/년임.
-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조합으로 구성된 공적이전 체계가 거의 대부분의 노인을 포괄함.
- 시장소득 3~6분위, 재산 5~8분위의 중소득-중자산 계층의 공적이전 수급률이 대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빈곤층을 표적화하는 공공부조와 준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 소득비례적 성격의 공적연금 등의 수급 실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조합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전체 노인 가구 중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은 50.35%이지만, 공적연금 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은 90.02%이고,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은 90.66%임.
- 즉, 대상포괄성의 측면에서 일차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거의 절반에 이르지만, 기초연금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약 10%로 크게 축소시킴.
- 기초연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추가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효과는 0.64%에 불과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는 5.73%의 빈곤한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비노인의 공적연금 가입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 가입률은 26~39세 71.71%, 40~49세 72.63%, 50~64세 55.66%로 나타났음.
- 시장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시장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과 가입기간이 증가하는 관계가 관찰되었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장소득에 반영된 중장년기 경제활동의 질이 공적연금의 가입과 수급을 매개로 노년기 소득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줌.
- 노년기로의 이행을 앞둔 5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공적연금 가입 실태를 살펴본 결과, 공적연금 가입률은 46.4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1.43년이며, 특히 20년 이상 공적연금 가입률은 9.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금까지 공적연금이 꾸준히 성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적연금의 대상포괄성과 급여적절성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줌.

□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 노인 가구 및 개인의 빈곤율은 다음과 같음.

- 전체 노인 가구에서 중위소득 50%, 25%를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9.70%, 28.37%였고, 전체 노인 개인 중에서 중위소득 50%, 25%를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은 각각 53.59%, 32.82%로 나타났음.
-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훨씬 낮게 나타나 성인 자녀와의 동거가 빈곤 위험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됨.

- 가구 및 개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 고령 가구주, 농어촌 거주 가구, 여성 노인, 고령 노인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는 다음과 같음.

-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타 공적이전소득, 전체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을 6.87%p, 1.65%p, 0.19%p, 2.68%p, 13.38%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았고 대체로 빈곤율의 절대적 감소량도 더 컸음.
- 여러 소득보장제도 중 공적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이는 수급률(50.35%)과 급여 수준(537만원/년)을 종합할 때 공적연금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기초연금은 수급률이 68.48%로 가장 높지만 급여 수준이 193만원/년으로 높지 않고 준보편적 수당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공적연금보다 낮게 나타났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률이 7.75%에 불과하지만, 급여 수준이 376만원/년으로 낮지 않고 빈곤층을 강하게 표적화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25% 기준 극빈을 2.72%p 감소시켰음.
 - 기초연금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대적인 빈곤감소효과는 작지만, 수급률을 함께 고려하면 기초연금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2. 노인 서비스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 노인의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대표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 중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

- 급여수급권자는 요양욕구 필요도에 따라 1등급~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선정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
- 사회보험 방식으로 제도에서 기준으로 하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양필요도 이상으로 하는 자를 대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년)되기 이전 노인의 돌봄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세를 기반으로 한 바우처 방식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서 가구소득이 160%이하인 자, 건강상태에서 치매 등의 돌봄필요도가 높은 노인을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제도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를 내용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현황

-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1분위와 재산1-4분위에 해당하는 비율은 전체 수급자의 29.35%로 높게 나타남. 소득1분위는 54.98%로 과반수를 넘으며, 자산1-4분위는 48.5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소득분위별 연령별 등급자를 65-74세가 16.77%이며, 75세 이상이 78.67%, 64세 미만은 4.56%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이나 재산보다는 요양필요도를 기준으로 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요양필요도는 건강과 기능상태가 악화되는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 가구에 집중
- 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의 6개의 급여 중 등급내 급여사용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 실제 서비스를 이용자는 평균 2.09개를 이용하고 있어 3개 이상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같은 재가급여 이용경향은 소득분위와 재산분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적으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여 재가에 거주하는 노인이 요양과 간호 등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과 이용은 복지용구를 제외할 경우 단일 또는 일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에 제한적으로 이용
- 재가급여 이용일수는 평균 552.35일이며, 평균 이용금액은 1,468만원으로 나타남.
 - 소득분위별 재가급여 이용일수와 이용금액은 소득 3분위가 가장 낮으며 4분위 이상부터는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또한 1-2분위는 3분위에 비해 이용일수와 이용금액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1-2분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에서 부담이 덜할 수 있는 반면 3분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었을 가능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설급여 이용자 중 소득 1분위의 30.46%, 재산분위 1-4분위의 41.71%가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으며, 소득1분위 및 재산 1-4분위의 18.21%가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 이용자의 소득 및 재산분위별 비율을 고려한다면 장기요양시설급여 분포는 이용자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남
- 장기요양 이용자 분포와 비교할 때 고령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후기 고령자의 경우 1-2등급이 더욱 높고 또한 치매 등의 시설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
-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자의 평균 이용일수와 지급액을 살펴보면, 평균 293.46일을 이용하며, 1,578만원을 이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현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수급가구는 가구소득 1분위가 70.15%이며, 가구 재산 1-4분위가 59.54%로 높게 나타남. 가구소득 1분위 또는 재산1-4분위인 경우가 84.44%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동일 분위에서의 비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74.19%로 나타나 이보다 더욱 소득과 재산1-4분위에 집중되어 있는 결과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가구소득과 연령별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75세 이상 수급자가 80.75%, 65-74세 수급자가 19.25%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기준으로 고연령층 집중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평균 이용시간은 전체 이용자 평균 249.85시간이며, 결제액은 244.88만원이며 소득과 재산분위,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음

□ 2년간 돌봄 형태의 변화

○ 2년간의 돌봄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을 계속 이용하는 비율은 90.66%이며, 노인 돌봄종합서비스를 계속이용하는 비율은 5.25%로 서비스의 변화가 없이 이용하는 비율이 95.91%로 매우 높게 남.

○ 그 외에는 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노인장기요양을 이용하는 비율이 1.89%,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0.44%로 매우 낮으며, 요양보험 또는 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용하지 않게 된 비율은 1.76%

제3절 장애인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1.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규모와 특성

□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규모

- 분석 자료에서 2017년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11.03%, 장애인 개인의 비율은 4.89%로 나타났다으며, 실제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 4.92%와 유사함.
- 장애인은 남성이 58.52%로 여성에 비해 많고,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44.60%로 비장애인 12.37%와 비교해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음.
- 2017년 장애인 중 7.03%는 2015년에 비장애인이었다가 이후 신규 등록한 장애인임.

〈요약표 1〉 장애인의 규모와 인적 특성(2017)

(단위: %)

장애-비장애 구성비			장애인-비장애인의 인적 특성			
구분		구성비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가구	장애	11.03	성별	남성	58.52	49.56
	비장애	88.97		여성	41.48	50.44
개인	장애	4.89	연령	0~17세	2.81	17.20
	비장애	95.11		18~39세	10.04	31.16
				40~64세	42.55	39.28
				65세 이상	44.60	12.37
계		100.00	계	100.00	100.00	

주: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 기준이며, 장애인 가구는 세대원 중 등록 장애인이 1인 이상 존재하는 가구로 정의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국세청 추출결합 원자료.

2. 장애인 소득보장 현황과 소득분배 효과

□ 소득분위, 재산분위,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비율

- 소득분위가 저분위 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비율이 높아짐.
- 반면 재산분위에서는 중간 분위에서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비율이 높음.

□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소득 수준

- 2017년 장애인 가구의 균등화 시장소득은 1589.1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2380.1만 원의 66.77% 수준이며,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장애인 가구가 1928.9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2396.8만 원의 80.48% 수준으로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남.
-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보아도 장애인 가구는 339.8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16.7만 원에 비해 상당히 큼.

- 개인 단위로 볼 때 장애인의 시장소득은 비장애인 대비 58.38%인데 비해 가처분소득은 71.57% 수준으로 상승하며, 이러한 효과는 18~64세의 성인 연령대에서 크게 나타남.

〈요약표 2〉 장애인 가구 및 개인 연간 소득(2017)

(단위: 만 원, %)

구분	장애		비장애		장애/비장애 비율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가구	1,589.1	1,928.9	2,380.1	2,396.8	66.77	80.48
개인	1,576.6	1,925.7	2,700.6	2,690.7	58.38	71.57

주: 가구·개인의 균등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값. 음의 소득은 0으로 전환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국세청 추출결합 원자료.

□ 장애인 가구의 소득보장 급여 수급

- 2017년 장애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의 수급률은 77.51%로 비장애인 가구 44.12%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수급 가구의 급여액도 장애인 가구는 554.8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422.7만 원에 비해 높음.
- 소득보장 급여를 ① 장애급여1, ② 장애급여2, ③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 ④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 ⑤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의 다섯 가지로 구분했을 때, 장애인 가구의 수급률은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가 56.81%로 가장 높고 수급 가구의 급여액은 장애급여2가 775.2만 원으로 가장 높음.
- 장애인 가구의 소득보장 급여 수급률 및 수급가구의 급여액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높으며, 재산분위에서는 중간 분위에서 수급률이 높고 수급 가구의 급여액은 재산 고분위에서 높음.
- 소득보장 급여 유형별로는 장애인 가구의 수급률 패턴에 차이가 나타남.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이 포함되어 공공부조 성격이 강한 장애급여1과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는 소득 및 재산 저분위에서 수급률 및 급여액이 높으며, 장애급여1은 가구주 연령이 18~25세일 때,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는 65세 이후 수급률 및 급여액이 높음.
 - 산재 보상이 중심이 되는 장애급여2는 소득 및 재산 분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고, 65세 이상 가구주의 수급률 및 급여액이 높음.
 - 노령연금이 중심이 되는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는 소득 분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고 재산 고분위와 65세 이상 가구주의 수급률 및 급여액이 높음.
 -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3분위 및 재산 중간분위일 때 수급률 및 급여액이 높음.

〈요약표 3〉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의 연간 공적 이전소득 수급(2017)

(단위: %, 만 원)

구분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수급률	수급가구 급여액	수급률	수급가구 급여액
장애급여1	23.47	138.5	0.01	16.1
장애급여2	9.70	775.2	2.24	615.0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	34.47	450.8	22.27	524.9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	56.81	280.4	29.30	176.6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5.69	134.0	3.29	125.3
전체 공적 이전소득	77.51	554.8	44.12	422.7

주 1) 수급률과 급여액 모두 가구 단위이며 균등화한 값을 제시함.

2) 장애급여1: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양육수당

3) 장애급여2: 공적 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장애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휴업·상병보상·장해·유족), 보훈급여

4)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 일시금 및 장애연금을 제외한 공적 연금 급여,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5)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주거), 긴급복지 급여(생계·주거·기타),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한부모지원 급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6)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노인일자리 활동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액, 일모아 재정일자리 지원금액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국세청 추출결합 원자료.

□ 장애인의 공적 연금 가입

○ 2017년 18~59세 장애인의 공적 연금 가입률은 57.09%로 비장애인 가입률 63.66%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평균 누적 가입기간은 107.2개월로 나타나는데, 비장애인 97.9개월 보다는 김.

○ 공적 연금 수급연령에 근접해 있는 50~59세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웠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50~59세의 장애인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31.7개월로 120개월보다는 길지만 소득 1~5분위, 재산 1~5분위의 장애인은 평균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미치지 못함.

〈요약표 4〉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 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18~59세)

(단위: %, 개월)

구분	2015		2017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가입률	59.80	66.99	57.09	63.66
가입기간	108.4	99.3	107.2	97.9

주: 2015년, 2017년 당시 연령이 18~59세인 사람으로 한정함. 가입기간은 가입자의 누적 가입기간 평균값을 제시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국세청 추출결합 원자료.

□ 소득보장 급여의 장애인 빈곤 감소 효과

○ 시장소득에 중위 50% 빈곤선을 적용하면 장애인의 빈곤율은 56.25%인데, 전체 소득보장 급여를 모두 더한 정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의 빈곤율은 46.36%로 9.89%포인트 감소하며, 비장애인의 빈곤 감소 효과인 4.31%포인트의 두 배 이상임.

-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소득보장 급여 중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가 장애인의 빈곤율은 3.91%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가 2.09%포인트, 장애급여2가 2.02%포인트였고, 장애급여1과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은 각각 0.36%포인트와 0.11%포인트로 빈곤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음.
- 시장소득에 중위 25% 빈곤선을 적용하면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 47.46%는 전체 소득 보장급여를 모두 더한 경상소득에서 절반 수준인 23.77%로 낮아지며, 비장애인의 빈곤 감소 효과 6.18%포인트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남.
- 이러한 소득보장 급여의 장애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남.

〈요약표 5〉 소득보장 급여의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단위: %, %포인트)

구분			시장소득	시장소득 + 장애급여1	시장소득 + 장애급여2	시장소득 + 일반 소득보장 급여 (사회보험)	시장소득 + 일반 소득보장 급여 (일반조세)	시장소득 +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시장소득 + 전체 공적 이전소득 (경상소득)	가처분 소득
중위 소득 50% 기준	가구	장애인	52.68	52.35	50.59	48.72	50.13	52.56	39.14	39.31
			-	(-0.33)	(-2.09)	(-3.96)	(-2.55)	(-0.12)	(-13.54)	(-13.37)
		비장애인	37.82	37.82	37.37	34.99	36.75	37.74	33.12	33.31
			-	(-0.00)	(-0.45)	(-2.83)	(-1.07)	(-0.08)	(-4.70)	(-4.51)
	개인	장애인	56.25	55.89	54.23	52.34	54.16	56.14	46.36	46.54
			-	(-0.36)	(-2.02)	(-3.91)	(-2.09)	(-0.11)	(-9.89)	(-9.71)
		비장애인	32.97	32.95	32.53	30.33	31.93	32.91	28.66	28.89
			-	(-0.02)	(-0.44)	(-2.64)	(-1.04)	(-0.06)	(-4.31)	(-4.08)

주: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함. 가구빈곤선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개인빈곤선은 개인 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름. 괄호 안의 숫자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비교한 빈곤 감소 비율(%포인트)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국세청 추출결합 원자료.

3. 장애인 서비스보장 현황과 소득분배 효과

□ 장애인의 서비스보장 수급 실태

-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보장을 돌봄, 보육, 주거, 고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각 서비스 보장 성격에 따라 개인 혹은 가구 단위, 연령대를 제한하여 살펴봄.

〈요약표 6〉 장애인의 서비스보장 수급률

(단위: %)

구분	기준	2015	2017
돌봄 서비스	개인 단위, 6세 이상	6.66	8.52
보육 서비스	개인 단위, 18세 미만	51.95	56.80
주거 서비스	가구 단위, 전체	7.29	7.95
고용 서비스	개인 단위, 18세 이상	2.81	3.09

주 1)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2) 보육 서비스: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3) 주거 서비스: LH공사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4) 고용 서비스: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일모아 재정일자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결합 원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결합 원자료.

□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

○ 2017년 6세 이상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은 8.52%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수급률이 4.9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률 2.86%,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급률이 0.81%로 나타남.

○ 장애인 중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시간은 연간 727.4시간, 정부지원금은 연간 860.6만 원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수준이 가장 높음.

○ 장애인은 소득분위가 낮은 경우, 연령대에서는 아동과 노인이 돌봄 서비스 수급률이 높음.

□ 장애인의 보육 서비스 수급

○ 2017년 18세 미만 장애인의 보육 서비스 수급률은 56.80%로 나타나는데, 비장애인 수급률 22.83%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임.

○ 장애인의 보육 서비스 중에서 발달재활 서비스의 수급률이 51.05%로 가장 높으며, 보육료 지원도 17.01%로 높음.

○ 장애인은 소득 중간분위에서, 재산 저분위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육 서비스 수급률이 높음.

□ 장애인 가구의 주거 서비스(공공임대주택) 이용

○ 2017년 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7.95%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 가구 3.75%의 두 배 이상임.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가구의 영구임대 거주 비율이 3.01%, 국민임대 거주 비율이 3.04%로 높고, 매입임대 거주 비율이 1.20%, 공공임대 0.68%, 기타임대가 0.03%로 나타남.

- 장애인 가구의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331.8만 원, 국민임대는 2163.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영구임대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월 임대료는 5.7만 원, 국민임대는 17.2만 원으로 나타남.
- 장애인 가구는 소득 및 재산 분위가 낮을 경우, 가구주 연령이 50~64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높음.

□ 장애인의 고용 서비스(일자리 사업) 수급

- 2017년 18세 이상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3.09%로 비장애인 1.89%에 비해 높음.
- 일자리 사업 중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2.74%로 가장 높아 노인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에게도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장애인은 소득 3분위인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일자리 사업 참여율이 높는데, 소득 분위~2분위의 낮은 참여율은 장애인의 낮은 근로능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탈락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령대에서 65세 이상의 높은 참여율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보임.

□ 서비스보장 급여의 장애인 빈곤 감소 효과

- 시장소득에 중위 50% 기준의 빈곤선을 적용하면 장애인의 빈곤율은 56.25%인데, 돌봄, 교육, 고용 서비스를 합산한 총 서비스보장 급여는 장애인의 빈곤율을 1.34%포인트 낮춰 빈곤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음.
-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보장 중에서는 돌봄 서비스 급여가 장애인의 빈곤율을 1.03%포인트 감소시켜 효과가 가장 컸음.
- 서비스보장의 장애인 빈곤 감소는 소득 및 재산 저분위, 아동의 경우 높게 나타남.

〈요약표 7〉 서비스보장 급여의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단위: %, %포인트)

구분			시장소득	시장소득 + 돌봄 서비스	시장소득 + 보육 서비스	시장소득 + 고용 서비스	시장소득 + 전체 서비스보장
중위 소득 50% 기준	가구	장애인	52.68	51.54	52.49	52.56	51.23
			-	(-1.14)	(-0.19)	(-0.12)	(-1.45)
		비장애인	37.82	37.78	37.60	37.74	37.48
			-	(-0.04)	(-0.22)	(-0.08)	(-0.34)
	개인	장애인	56.25	55.22	56.07	56.14	54.91
			-	(-1.03)	(-0.18)	(-0.11)	(-1.34)
		비장애인	32.97	32.88	32.61	32.91	32.46
			-	(-0.09)	(-0.36)	(-0.06)	(-0.51)

주 1)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요양·간병)

2) 보육 서비스: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3) 고용 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일모아 재정일자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직업재활)

4)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함. 가구빈곤선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개인빈곤선은 개인 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름. 괄호 안의 숫자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비교한 빈곤 감소 비율(%포인트)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국세청 추출결합 원자료.

제4절 아동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1. 아동 소득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 분석 개요

○ 아동은 0~17세로, 아동 가구는 0~17세 가구원이 존재하는 가구로 정의함.

- 기본적으로 아동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아동 개인 대상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함.

○ 2017년 시점의 아동 소득분배를 분석함.

○ 아동 대상 소득보장제도를 양육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타 공적이전소득으로 나누어 분석함.

□ 아동의 규모 및 특성

○ 2017년 전체 가구 중 아동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88%, 가구당 아동수 평균은 0.40명, 전체 개인 중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6.50%임.

- 노인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면, 25~64세 가구주 가구 중 아동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73%, 가구당 아동수 평균은 0.49명임.

○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가구 비율, 가구당 아동수 평균, 아동 개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됨.

- 이는 아동이 존재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아동이 존재하는 가구의 경제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함.
-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득과 재산 등의 경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확률이 높은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 아동 가구 및 개인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아동 가구 중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는 79.05%였고,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 40~49세인 가구가 각각 32.03%, 49.88%를 차지하였음.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51.90%였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는 5.24%에 불과하였음.
- 아동 개인 중 남성 아동이 51.87%를 차지하였고, 0~5세, 6~11세, 12~17세 아동의 비율이 각각 30.36%, 33.31%, 36.33%로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였음.

□ 아동의 소득분포

○ 전체 아동 가구의 시장소득 평균은 2,860만원/년, 가처분소득 평균은 2,754만원/년임.

- 시장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아동 가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시장소득 1~7분위는 시장소득 평균보다 가처분소득 평균이 높아 세금 지출보다 많은 공적이전소득을 받았음.
- 아동 가구 내에서 소득과 재산의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됨.

○ 아동 가구 및 개인의 특성별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남성 가구주, 40~49세 가구주, 대도시 거주 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평균이 상대적으로 컸음.
- 남성 아동과 여성 아동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평균은 거의 유사하였음.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장소득이 증가하지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연령과 소득의 정적 관계가 대체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세와 공적이전이 아동 가구 및 개인의 집단 간 소득 격차를 축소함.

□ 아동의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

○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양육수당 수급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전체 아동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률은 22.19%,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은 72만원/년임.
- 소득-재산 분위별로 양육수당의 수급률은 대체로 20%대로, 급여 평균은 대체로 약 70만원/년 전후로 나타나 분위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 이는 대체로 양육수당이 보편적 정책급여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줌.
- 하지만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득 6~7분위 또는 재산 1~4분위의 수급률이 20%대

중후반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원칙적으로 양육수당의 수급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주로 소득-재산에 따른 보육 서비스 이용 패턴과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연령 및 소득-재산 변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임.

- 급여 평균을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과 재산이 증가할수록 급여 평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이는 저소득-저자산 계층의 가구원수가 작아 균등화에 따른 급여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음.

○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전체 아동 가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률은 15.87%,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은 52만원/년임.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작을수록 수급률과 급여 평균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됨.
 - 재산 1~7분위의 수급률은 각각 20%를 넘지만 8, 9, 10분위의 수급률은 각각 7.50%, 1.75%, 0.36%에 불과하였음.
 - 소득 3~6분위의 수급률이 각각 대체로 30%를 넘지만 7, 8, 9, 10분위의 수급률은 각각 5.99%, 1.61%, 0.63%, 0.17%로 낮게 나타났음.
 - 소득이 1~4분위이고 재산이 1~6분위인 가구의 급여 평균이 65~94만원/년으로 전체 수급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 그런데 시장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소득 1~2분위의 경우 수급률이 4.68%로 상당히 낮았는데, 이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전체 아동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2.63%,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은 426만원/년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반적인 수급률은 매우 낮지만 수급집단의 급여 수준이 높고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경향이 강함.
- 빈곤층을 강하게 표적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적 성격이 뚜렷하게 관찰됨.
 - 소득 1~2분위와 3분위의 수급률은 각각 14.36%, 9.54%였고, 재산 1~4분위, 5분위의 수급률은 각각 5.69%, 5.72%로 높게 나타났음.
 - 소득-재산 분위 중 가장 수급률이 높은 집단은 소득이 1~2분위이고 재산이 1~5분위인 집단으로, 이들의 수급률은 20%를 넘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보충급여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수급률뿐만 아니라

급여 평균 역시 소득 및 재산과 부적 관계를 가짐.

-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의 급여 평균이 562만원/년으로 가장 높았고 소득 분위가 증가할수록 급여 평균이 대체로 감소하였음.
- 재산 분위별로 살펴보면, 재산 1~4분위의 급여 평균이 446만원/년으로 가장 높았고 재산 분위가 증가할수록 급여 평균이 대체로 감소하였음.
- 수급률이 가장 높은 소득 1~2분위-재산 1~5분위는 급여 평균 역시 500만원/년 이상으로 가장 높았음.

○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전체 공적이전 수급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전체 아동 가구의 공적이전 수급률은 47.82%,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은 208만원/년임.
-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수급률과 급여 평균이 증가하는 관계가 관찰됨. 이는 한국의 공적이전 체계가 아동 가구의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함.
- 재산 분위별로 살펴보면, 재산 8~10분위의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재산과 급여 평균의 관계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음.

○ 아동 가구 및 개인 특성별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는 다음과 같음.

- 남성 가구주보다 여성 가구주가 공적이전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음.
 - 전체 공적이전의 수급률과 급여 평균은 남성 가구주보다(46.11%, 200만원/년) 여성 가구주가(54.29%, 232만원/년) 높게 나타났음.
 - 여성 가구주의 양육수당 수급률(17.51%)이 남성 가구주보다(23.43%)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가구주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기보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됨.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가구주의 수급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음.
-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낮을 가능성이 큰 39세 이하 가구주의 양육수당 수급률이 49.12%로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전체 공적이전 수급률 역시 65.0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40~49세, 50~64세 가구주의 경우 양육수당 수급률이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전체 공적이전 수급률은 각각 34.15%, 43.30%로 나타났음.
 - 65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기타 공적이전 수급률이 93.31%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주로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남성 아동과 여성 아동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음.
- 아동 연령별로 살펴보면, 8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의 수급률이 0~5세 61.51%, 6~11세 10.32%, 12~17세 1.42%로 연령 집단 간 격차가 상당히 컸음.
- 하지만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집단 간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다만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은 눈에 띈.

□ 아동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 아동 가구 및 개인의 빈곤율은 다음과 같음.

-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와 25%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아동 가구의 빈곤율은 각각 21.01%, 12.93%로 나타났음.
- 집단별로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 중고령 가구주, 농어촌 거주 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구 특성별로 빈곤위험에 작지 않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전체 아동 개인의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 25.52%, 중위소득 25% 기준 14.73%로 나타났음.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남성 아동과 여성 아동의 빈곤율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는 다음과 같음.

- 양육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타 공적이전소득, 전체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을 0.25%p, 0.57%p, 0.40%p, 1.49%p, 2.91%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아동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률이 22.19%로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감소효과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은 양육수당의 급여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고 보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됨.
- 양육수당보다 상대적으로 선별적 성격이 강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아동 가구의 수급률과 급여 평균이(15.87%, 52만원/년) 모두 양육수당보다(22.19%, 72만원/년) 작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가구의 빈곤율을 더 크게 감소시켰음.
- 선별적 성격이 가장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수급률이 2.6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50%, 25% 기준 빈곤율을 각각 0.40%p, 1.17%p 감소시켰음.

-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중위소득 50%, 25% 기준 각각 1.49%p, 1.44%p)가 양육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제도 등과 같이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소득보장제도 역시 아동빈곤 감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시사함.

2. 아동 서비스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 분석대상 제도

- 분석에 포함된 서비스는 보육료지원, 아이돌봄, 한부모지원임.
- 한부모지원은 현금지원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구분할 수 없어 수급여부와 수급액을 서비스수급으로 구분하여 분석

○ 대상포괄성 분석

-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보육료지원을 수급하는 가구는 약 66%였음.
- 26-49세 가구주 가구, 소득 6분위, 5분위, 4분위, 7분위 순으로, 재산분위별로 재산 8분위, 7분위에서 보육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았음.
- 저소득가구에서는 아동양육수당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았음. 소득분위 9분위와 10분위에서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고소득집단에서는 보육료지원과 아동양육수당의 연내 수급 변경이 적은 것으로 추정
- 보육료 지원, 아동돌봄서비스, 한부모지원사업 등 아동대상 서비스를 수급하는 가구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26-39세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8-25세 가구주 가구집단의 수급율이 높았음.
- 소득분위별 수급율을 비교하여 보면 아동서비스 수급율은 주로 중간소득계층에서 높았음.
- 아동서비스는 재산 1-4분위에서 수급률이 높았음. 아이돌봄, 보육료지원, 한부모지원과 같은 아동 서비스의 수급은 낮은 소득과 재산 분위에서 수급율이 높을 수 있음. 재산 중 금융재산이 누락된 자료의 특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 급여의 수준

- 아동서비스 수급액을 보면 중간소득계층의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높은 소득분위, 재산분위에서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서도 확인되는데 높은 소득이나 재산분위에서는 자산조사를 하는 제도의 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또 수급액이 다소 낮을 수 있음.

○ 소득분배효과

- 아동서비스는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약 6.17%p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7년 6-9세 아동 중 2017년 아동서비스 비수급-2015년 수급 아동의 비율은 약 31%. 보육료 지원 외 아동서비스가 그리 포괄성이 높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

제3장 욕구영역별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제1절 건강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 건강보장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소득 계층의 건강 보장 정책을 의료급여, 긴급의료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과 함께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생활 위기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 난치성 환자 산정특례 제도가 운영

□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수

○ 소득 및 재산분위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수는 가구 평균 0.11이며, 소득분위 1-2분 위 가구는 0.17이며, 3분위는 0.19, 4분위는 0.12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비교적 평균수급 서비스수는 감소, 재산분위에서 5~6분위의 건강보장 서비스 이용수가 가장 높지만 소득분 위 만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재산 7분위 이상은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수는 유사

○ 건강보장 평균 수급서비스수는 소득분위와 연령기준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수급서비스 수가 높게 나타남. 65~74세는 0.22개, 75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0.39개를 수급하고 비노인 연령가구주 가구에서는 0.1개 이하로 낮게 나타나 가구주 연령별 편차

□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 수급액

○ 건강보장 서비스에 대한 가구별 평균 수급액을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3분위 미만과 재산분 위 6 미만의 다소 높게 나타나며, 그 이상의 경우는 유사하게 나타나는 수준

○ 건강보장 평균 수급액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재산분위가 5분위이며, 소득분위가 3분위인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장 평균 수급액은 저소득에 의료급여이외의 다양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서비스로 소득과 재산분위 전 연령층에서 일정수준의 수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

○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액은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수급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며, 가구별 소득 및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액은 75세 이상 노인 가구에서는 소득분위별 평

균 수급액의 차이를 보여, 소득 1-3분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4분위 이상에서는 다소 감소하며 분위별 유사한 특성을 보임

- 반면 65-74세 노인가구에서는 소득분위 3분위까지 높은 경향성은 동일하지만 그 이후의 소득분위별 감소 규모는 75세 이상 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장 서비스 유형별 분석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소득 및 가구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1분위에 85.07%가 집중되며, 재산분위를 기준으로 1-4분위에 83.77%가 집중. 특히 소득1분위이며 재산1-4분위에 비율은 71.79%로 집중도가 매우 높음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별 평균 수급액수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2,785천원이며 전체 수급 가구수는 소득분위 1분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급액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일수록 높은 경향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가구 소득 분위와 재산분위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가구는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 2-3분위 비율이 약 63%가 넘게 나타나며, 재산소득은 1-4분위가 65%
 - 본 서비스가 갖는 목적이 의료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소득분위에서 1분위보다는 2-3분위에 집중되어 분포
- 본인부담 상한제도 이용자의 2017년 기준 가구 단위 평균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812천원이며 소득분위별로는 5분위 이하의 경우 약 800천원 이상을 환급받았으며, 6분위 이상에서도 그 보다는 낮게 나타남. 재산분위별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재산 고분위에서 환급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성 환자 산정특례 암환자 특례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결핵 환자, 중증화상환자로 나타남
 - 산정특례는 암환자 산정특례 수급 가구는 분석DB에서 63,671가구로, 결핵환자 산정특례 7,342가구, 화상환자 1,769가구
 - 암환자의 산정특례의 소득 및 재산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분위 1분의 가구의 비중이 23.66%, 재산분위 1-4분위에서는 37.04%로 나타나, 소득과 재산이 낮은 집단에 집중
 - 결핵환자 산정특례는 소득1분위 가구의 비중이 21.11%, 재산분위별로는 1-4분위가 45.01%
 - 화상환자 산정특례는 소득1분위 비율이 13.79%이며 재산분위 1-4분위가 46.18%
 - 암, 결핵, 화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정특례 수급 현황에서 하위 소득과 재산분위 가구

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질환별 건강 형평성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결과

제2절 주거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 분석대상 제도와 분석 방법

-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주거보장 현황을 분석
 - 소득 보장 : 소득보장 측면에서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수급현황과 이를 통한 빈곤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
 - 서비스 보장 : 서비스 보장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 (전환)임대료,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분석
 - 주거 보장 종합 :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을 종합하여 주거보장 수혜율을 분석
- 분석대상을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가구주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
 - 소득분위의 경우 하위 분위인 소득1-2분위의 구분이 되지 않고, 재산분위도 재산 1-4분위가 구분되지 않는 분석상의 한계
 - 가구주 연령이 0-17세인 아동 가구주 및 일부 소득분위와 재산분위의 경우 표본 수가 매우 적으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

□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 주거급여 유형 :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게 주택의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
 - 주거급여 대상 : 2017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때 주거급여 수급권이 부여
 - 임차급여 지급기준 :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주거급여 수급현황 분석 결과 : 소득보장 측면

- 주거급여 수급률 분석결과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의 전체 수급가구 비율은 3.63%
 - 이는 2017년 주거급여 정형통계를 이용한 수급가구 비율인 3.65%와 거의 유사한 결과¹⁾
 -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1-2분위 가구의 수급가구 비율이 11.12%로 가장 높으며, 소득 분

위가 높아질수록 수급가구 비율은 감소

- 가구주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가구에서 수급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25세 이하인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수급가구 비율은 감소
 - 소득 1-2분위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25-39세인 가구의 수급률은 5.65%로 비교적 낮으며, 이는 20-30대 가구의 자가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할 때²⁾,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 재산분위별로는 재산 1-4분위의 수급가구 비율이 6.68%, 재산 5분위 6.22% 수준으로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재산 6분위 부터는 1.73%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재산 5분위의 수급률이 재산1-4분위와 유사한 이유는 소득인정액의 산정방법 중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³⁾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기본재산액의 변화가 있는 경우 재산분위별 수급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수급률이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 가구의 경우 수급률이 18.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거급여 임차급여액 분석결과 전체 수급가구의 연간 평균 임차급여액은 119.1만원

- 임차급여 평균 수급기간이 9.8개월임을 고려할 때 월평균 임차급여액은 12.2만원 수준
- 임차급여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의 차이 및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의 발생으로 인해 가구원 수와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득분위별로는 소득3분위의 연평균 수급액이 132.6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득 4분위 124.1만원, 소득1분위 118.0만원의 순이며, 가구주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 40-49세 131.9만원, 26-39세 128.8만원, 50-64세 119.1만원의 순으로 나타남
 - 이처럼 소득 3·4분위의 수급액이 소득1-2분위 보다 높고, 가구주 연령이 30-40대인 가구의 수급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수준과 자기부담분으로 인한 수급액의 감소 효과보다는 가구규모에 따른 수급액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가능
- 재산분위별로는 재산 1-4분위의 연평균 수급액이 120.5만원으로 가장 높고, 재산 5분위, 6분위에서 점차 연평균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재산 및 자기부담분 증가로 인한 수급액의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는 소득이 낮고 재산이 낮을수록 연평균 수급액이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소득

1) 2017년 12월 기준 임차급여 수급가구 수는 736,830가구이며, 총가구 수는 20,167,922가구이므로 총가구수 대비 임차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3.65%임, 참고로 일반가구 수는 19,673,875가구이며, 일반가구수 대비 임차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3.75%임

2)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가비율은 60.6%, 가구주연령이 '50-60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가 비율은 각각 64.6%, 68.6%로 평균 자가 비율을 넘어서고 있고, '40-50세 미만'의 자가비율은 60.1%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연령이 '30세 미만'인 가구의 자가비율은 14.8%, '30-40세 미만' 가구의 자가비율은 44.3% 수준을 보였다.

3) 2017년 기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임

3분위·재산 1-4분위 가구의 임차급여액이 135만원 정도로 가장 높으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분위와 연계된 가구주 연령 및 가구 규모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

- 주거급여 수급기간 분석결과 전체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수급기간은 연평균 9.8개월
 -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1-2분위의 수급기간이 10.7개월로 가장 길고, 가구주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가구가 10.1개월로 가장 길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거급여 수급기간은 긴 것으로 분석
 - 소득과 동일하게 재산수준도 증가할수록 수급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의 수급기간이 11.0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남
- 2015년 수급 비율 분석결과 전체 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2015년 수급비율은 71.61%
 -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1-2분위의 2015년 수급비율이 78.15%로 가장 높고, 가구주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가구가 77.96%로 가장 높으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2015년 수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이는 대체로 소득분위가 낮거나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급여의 탈수급 비율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재산분위별로도 재산 1-4분위의 2015년 수급비율이 75.38%로 가장 높고, 재산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 주거급여 수급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의 2015년 수급비율이 79.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거급여 수급 전후의 빈곤율 감소효과 및 지니계수 변화 분석결과

- 균등화 중위소득 50% 빈곤선 : 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확인한 결과 주거급여 수급 이전 빈곤율이 39.46%, 수급 이후 빈곤율은 39.42%로 0.04% 감소
 -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사용한 빈곤율의 경우 주거급여를 제외하면 0.26% 증가하는 효과
- 균등화 중위소득 25% 빈곤선 : 균등화 시장소득을 사용한 빈곤율은 주거급여 수급 이후 0.06% 감소,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사용한 빈곤율의 경우 주거급여를 제외하면 0.17% 증가
- 지니계수 : 균등화 시장소득을 이용한 결과 지니계수는 주거급여 수급 이전 0.5912에서 주거급여 수급 이후에 0.5895로 0.0017 만큼 감소하여 불평등도가 개선
 -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경우 지니계수는 주거급여 제외 전 0.5144에서 주거급여 제외 후 0.5157로 0.0013 만큼 증가하여 주거급여로 인해 불평등도가 개선됨을 확인

□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개요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무주택 서

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 공공임대주택 유형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으로 구분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70%, 100%, 120%를 경계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을 설정
- 자산기준 :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2/5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은 소득 3/5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를 요건으로 함⁴⁾

□ 공공임대주택 거주 현황 분석 결과 : 서비스 보장 측면

○ 공공임대주택 거주율 분석결과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4.22% 수준

-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분석에 사용되지 않고, 중앙정부(LH)와 지자체 중 서울(S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재고를 제외한 물량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주가구 비율의 해석시 과소 추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분석에 사용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104.8만호(LH : 85.9만호, SH : 18.8만호)이며,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71.9% 수준
-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5분위 가구까지 5% 대의 유사한 거주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구주 연령별로는 65-74세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소득 1-2분위 중 가구주 연령이 50-64세인 가구의 거주비율이 6.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같은 연령대의 소득 3분위 가구의 거주비율이 6.34%로 높음
- 재산분위별로는 재산 5분위 가구가 7.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산 1-4분위 가구가 7.81%로 높으며, 5분위와 6분위간 격차가 크게 비교적 크게 나타남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분석결과를 대체로 재산 분위가 낮고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높아지나 소득 및 재산 5분위의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특징
-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이 구분되며, 입주자격에서 소득 및 자산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임대의 물량이 많은 것이 소득 및 재산 5분위의 거주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일 것으로 판단

○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 분석결과 전체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는 약 30.1만원 수준

-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규모가 다르고,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수준도 다르므로 소득 및 재산분위에 따른 전환임대료 분석을 통해 차이 확인 필요

4)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를 요건으로 함

-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 산정시 전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2017년 6월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6.5%를 적용
 - 소득분위별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전환임대료가 높아지며, 소득 1-2분위의 전환임대료는 월 18.7만원이고, 소득5분위의 경우 월 32.4만원 수준
 - 가구주 연령별로는 가구주연령 18-25세를 제외하고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환임대료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가구주 연령 26-39세의 전환임대료가 37.2만원으로 가장 높고, 75세 이상의 전환임대료는 20.2만원으로 가장 낮음
 - 재산분위는 소득분위와 마찬가지로 재산분위가 높아질수록 전환임대료가 높아지며, 재산 1-4분위의 전환임대료는 월 29.1만원이고, 재산5분위의 경우 월 30.8만원 수준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전환임대료는 소득 1-2분위에서 재산 1-4분위와 재산 5분위 가구가 각각 18.3만원, 18.9만원으로 20만원 미만 수준이며, 표본수가 불충분한 집단을 제외할 때, 소득 및 재산 분위별 전환임대료는 18.3만원부터 60.3만원 까지 격차가 큼
 - 전환임대료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 대상의 폭이 넓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도 입주자격과 연계되어 매우 다양함을 반영하는 결과
 - 전환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주택상태 등 주거환경의 수준을 반영하기도 하므로, 결과 해석시 이와 같은 양면적 특성 고려 필요
-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분석결과 전체 거주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4.7개월(7.06년) 수준
-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1-2분위의 수급기간이 99.1개월이 넘는 수준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거주기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도 길어졌으며, 소득 1-2분위·75세이상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120.5개월로 10년이 넘게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
 - 재산분위별로는 재산 5분위의 거주기간이 88.1개월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산 6분위의 거주기간이 85.7개월로 나타나 재산분위의 경우 소득분위 만큼 거주기간과의 상관성을 보이지는 않음
 - 소득·재산분위별로는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의 수급기간이 99.8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소득과 재산이 높아질수록 거주기간이 짧아지는 경향
- 2015년 거주 비율 분석결과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2015년 거주비율은 79.22%
- 2015-2017년 동안 10가구 중 약 8가구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인 71.61%보다 7.61%p 높은 수준
 - 소득분위별 2015년 거주비율은 소득 1-2분위 가구의 2015년 거주비율이 80.89% 수준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 87.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주 연령 분위가 높아질수록 2015년 거주비율이 높아졌으나, 소득분위의 경우에는 2015년 거주비율과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남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는 소득 7분위·재산 6분위 가 약 8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및 재산분위는 2015년 거주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퇴거기준이 입주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퇴거율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주거보장 종합 분석 결과 : 주거(임차)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 전체 가구 중 주거(임차)급여를 지급받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복지 보장 가구의 비율은 6.91% 수준

-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1-2분위의 주거복지 보장 비율이 13.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거복지 보장 비율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1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세 이하인 가구를 제외하는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장 비율도 증가
- 재산분위별로는 재산 5분위의 보장비율이 12.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재산 1-4분위가 12.64%으로 높으며, 특히 재산 5분위와 6분위간 격차가 8.95%p로 매우 큼
- 소득 및 재산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복지 보장 비율이 높아지며,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보장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지만, 재산분위는 6분위부터 보장비율이 크게 감소
- 이를 통해 주거복지 보장은 재산수준을 더 엄격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 전체 가구 중 주거(임차)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을 동시에 지원받는 주거복지 중복 보장 가구의 비율은 0.94% 수준

- 이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3.63%)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4.22%)의 합에서 주거급여 또는 공공임대주택 보장 비율(6.91%)을 차감한 결과와 동일
-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1-2분위의 주거복지 보장 비율이 3.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가구의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이 높아짐
- 재산분위의 경우 재산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거복지 보장비율과 마찬가지로 중복 보장 비율도 재산 5분위와 재산 6분위간

격차가 1.29%p로 다른 구간에 비해 매우 높음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의 분석결과 소득 및 재산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 2015년 주거복지 보장비율 분석결과 전체 2017년 주거복지 보장가구 중 2015년 보장 가구의 비율은 76.62% 수준

-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1-2분위의 가구가 80.24%이며, 대체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2015년 주거복지 보장비율은 낮아지는 경향
-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 75세 이상 가구의 2015년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8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이 25세 이하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도 높게 나타남
 - 특히 소득 1-2분위·75세 이상 가구의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은 83.67% 수준
- 재산분위별로는 재산 1-4분위의 보장비율이 78.45%로 가장 높고, 재산 9분위 이상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재산수준이 높아질수록 2015년 보장 비율은 낮아짐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는 소득 및 재산수준이 낮을수록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 가구의 경우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은 81.73% 수준으로 가장 높음
 - 소득 및 재산 분위와 가구주 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2017년 동안 주거복지 보장의 지속성은 가구주 연령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을 확인

○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이 3.63%,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4.22%이며⁵⁾, 둘 중 하나라도 지원받는 주거보장 비율은 6.91%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을 중복으로 수혜받는 가구의 비율은 0.94%임

-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로 한정했을 때, 해당 집단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18.02%,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은 9.08%이며, 주거보장 비율은 22.01%로 임차가구 비율(50.04%)을 고려할 때 해당 분위 임차가구의 43.98%가 주거복지를 지원받고 있음
- 이는 무주택 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거복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필요

5) 분석에 사용된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제외한 LH와 SH의 재고물량이며,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71.9% 수준이므로, 분석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비율이 과소 추정되었음을 고려해야 함

제3절 교육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 대상포괄성 분석

- 교육급여수급가구는 1.33%, 장학금수급가구는 4.77%였음.
 -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교육급여와 긴급교육지원 수급가구를 보면 소득 하위 3,4분위, 4-49세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수급률이 높았음
 - 장학금 수급가구의 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50-64세 40-49세인 집단에서 높았음. 그리고 소득분위로는 4분위 5분위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높았음
- 재산분위별 교육급여와 긴급교육지원 수급가구 비율을 보면 재산이 낮은 집단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높았음.
 - 장학금수급가구는 재산 7분위, 8분위, 9분위, 5분위에 더 많이 분포하였음.

□ 급여의 수준

- 교육지원 수급액을 보면 대학장학금의 영향으로 가구주 연령이 18-25세인 집단과 50-64세인 집단에서 매우 높았음.
 - 재산분위별로 수급액을 비교하여 보면 교육지원 수급액이 높은 집단은 재산 7분위, 6분위임.

□ 소득분배효과

- 교육지원의 소득분배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위 50%를 기준으로 교육급여와 긴급교육지원은 빈곤율을 .02%p를 완화, 장학금은 빈곤율을 .53%p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음.
 - 장학금의 불평등 완화효과도 커서 지니계수를 .004이상 낮추었음. 장학금의 급여수준이 높아 소득분배 효과가 매우 큰 것을 확인.
- 2017년 8-25세인 인구 중 2017년 장학금 비수급자-2015년 교육지원 수급자는 1.47%, 2017년 장학금 수급자-2015년 교육지원 수급자는 1.05%임.

제4장 소득·서비스보장 현황과 소득분배 효과분석

제1절 소득보장 종합분석

□ 사회보험 가입

- 연금이나 고용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 가구 중 75.55%
 - 근로연령층인 26-64세 사이인 가구에서 그 비율이 높음
 -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하위 3분위까지는 가입율이 평균보다 낮고, 연령별로는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도 소득 하위 3분위 이하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높음.
- 2017년 표본의 2015년 공적연금 가입을 확인한 결과 50대는 2017년 비가입-2015년 가입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비 매우 높음.
 - 50대의 고용불안정을 시사하는 한편 40대는 다른 연령층 대비 2015년 비가입-2017년 가입의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냄.

□ 소득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

- 현금지원을 1종이라도 수급받는 가구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이 25세 이하인 집단에서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수급가구 비율이 낮았음.
 -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비노인가구주 가구에서는 현금지원 수급가구 비율이 평균 이하였는데 다만 26-64세 가구주 가구 중 소득하위 3분위, 4분위에서는 수급가구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음.
- 수급을 받는 현금지원제도의 수는 예상한 바와 같이 소득이 낮을수록 많았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음
- 재산분위별 현금지원 수급을 보면 재산분위별 수급율의 차이는 소득분위별 그 차이보다 작음.
 - 재산분위 5-7분위에서 현금지원 1종이상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오히려 재산 1-4분위에서 수급율이 낮았음.
 - 현금지원 수급율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서는 재산기준이 덜 엄격하고 재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근로연령층에서는 현금지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됨.
- 대상포괄성 등 효과를 공공부조, 선별적 수당, 사회보험급여, 보편적 수당로 구분하고 확대하여 가면서 분석한 결과, 공공부조제도 수급 개수는 소득하위분위에서 높았음.
 - 공공부조와 선별수당의 수급제도 수로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는 전소득 분위에서 수급제도 개수가 평균이사잉었고, 젊은 연령층은 대부분 평균 이하로 나타남.
 - 제도를 사회보험급여 수급으로 확대하여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수를 비교하면 낮은 소득분위에서 수급하는 제도의 수가 많고 75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수급제도의 수가 높았음.
 - 보편수당을 추가하여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 보편수당의 수급 개수를 비교

한 결과,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의 수급 평균과 결과가 유사했지만 보편적 양육수당 등의 영향으로 26-39세 가구주 가구의 평균수급제도수가 조금 높아짐.

- 재산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주 가구를 제외하고는 18-64세 가구주 가구는 소득분위를 막론하고 모두 수급하는 제도의 수가 평균 이하였음
 -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의 수급에 연령, 노인여부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7년 표본의 2015년 소득보장수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18세를 기준으로 성인이 되면서 지원이 급격하게 줄고 대학생이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지원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성인이 되면서 생계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집단은 없는지 주의가 필요함을 암시함.

□ 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효과

- 소득분위별*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액을 비교하면 평균액이 다른 제도를 포괄한 분석보다 높았음.
 - 공공부조의 가구수급액 평균이 선별수당에 비하여 높은 현상을 반영함.
- 선별수당을 추가하여 분석하면 65세 이상의 수급액 평균이 매우 높아지는데 공공부조와 선별수당을 수급하는 가구의 평균수급액은 기초연금과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임.
-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까지의 수급액을 비교하여 보면 소득분위를 막론하고 노인가구주 가구 대부분의 수급액이 평균이상임.
 -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득하위분위 가구는 평균수급액이 낮았고 근로연령층은 대부분 평균수급액이 낮았으며 50-64세 가구주 가구는 중간소득분위를 제외하고는 낮은 소득분위와 높은 소득분위 가구의 평균수급액이 높았음.
 - 공공부조와 연금 등 사회보험의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수급액을 비교한 결과 소득과 재산이 낮은 집단에서 평균수급액이 낮았는데 이것은 사회보험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보편적 수당을 추가하여 수급액을 비교하면 소득분위를 막론하고 재산 7분위(7분위는 소득 1-2분위 제외)까지는 평균수급액이 낮음.
- 2017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7년 수급액과 2015년 수급액을 비교한 결과, 연령이 낮은 49세 이하에서 수급액 증가가 작았고 50세 이상에서는 대체로 2015년 대비 2017년 수급액이 높았는데 다만 75세 이상에서는 증가액이 작았음.

- 노인 중 낮은 연령의 집단은 연금수급개시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지만 기존의 수급이 단가가 높아진 것, 또는 일부 제도 개선으로 수급액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분배효과를 보면 사회보험의 빈곤율 완화효과가 매우 크고, 이와 더불어 선별수당의 빈곤완화 효과가 컸는데 양육수당이 주로 선별수당으로 구분되기 때문임.

제2절 서비스보장 종합분석

□ 서비스보장의 대상포괄성

- 보건의료지원과 요양을 포함한 서비스 1종 이상 수급가구 비율을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는 1종이상의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이 전체적으로 평균 수급비율 이상으로 높았음.
 - 근로연령층의 경우 18-25세 가구주가구과 50-64세 가구주 가구 중 저소득가구에서만 수급가구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는데 이것은 학생지원과 근로지원, 그리고 보건의료보장의 영향으로 추정됨.
- 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1종 이상 수급가구 비율을 보면 재산이 작은 낮은 분위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서비스 수급에 재산기준이 영향을 준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수급하는 서비스의 수를 소득분위별*가구주 연령별 기준으로 비교하면 보건의료보장과 요양서비스를 포함한 분석결과와 이 두 제도군을 제외한 분석결과가 매우 상이함.
 - 보건의료보장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경우 평균수급 서비스의 수는 .25개
 - 근로연령층의 평균적인 수급서비스의 수는 작지만 노인의 수급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많음.
- 보건의료보장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제외한 분석결과를 보면 일단 수급하는 평균 서비스의 수가 절반이하로 줄었고 노인가구주 가구 중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서는 수급하는 평균 서비스 개수가 작게 나타났으며 반면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에서도 낮은 소득분위는 수급서비스의 평균이 낮지 않았음.
 - 요양과 건강보장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이 수급여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반면 이 결과는 건강보장이나 요양서비스가 포괄되지 않고는 서비스 보장의 수급현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게 됨을 보여줌.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을 보면 재산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이 높았음.
 - 반면 소득분위가 동일할 때 서비스 수급가구의 비율이 재산분위가 낮을수록 높지 않음.
- 노인은 재산분위와 무관하게 수급하는 서비스의 수가 평균이상임.
 - 재산분위별 수급하는 서비스 수 평균을 보면 재산 5분위에서 제일 높음.

- 젊은 가구주 가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강한데 이 경향은 건강보장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유사하여서 젊은 가구주 가구의 교육서비스와 취업서비스 수급의 영향으로 추정됨.

□ 서비스 보장의 수급액 분석과 한계

-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평균서비스 수급액을 보면 젊은 연령층의 서비스 수급액이 높음.
 - 주로 학비지원과 일자리 지원은 포함되고 노인의 수급율이 높은 제도는 누락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임.
 -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수급액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석의 한계는 매우 크며, 이 두 종의 서비스 수급액을 분석에 포함한다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서비스 수급액이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 일자리 지원의 대상포괄성과 수급수준

-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일자리 지원의 수급 제도 수를 비교한 결과 노인가구주 가구의 수급 서비스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물론 낮은 소득분위의 18-25세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 제도 수가 많지만 해당 연령이 경제활동연령임을 고려하면 노인일자리 제공은 더 큰 규모의 제공이라 해석해볼 수 있음.
 - 50-64세는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율도 낮지 않은 연령층이므로 해당 연령 가구주 가구에서도 일자리 서비스가 보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일자리 서비스의 평균 수급액은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높고 근로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음. 5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 소득이 낮은 분위에서 수급액이 큰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노인가구주 가구에서는 소득 1-2분위, 3분위의 가구가 4분위 노인가구주 가구보다 수급액이 낮음. 이는 근로활동의 역량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일자리 서비스 수급액을 보면 수급액이 재산분위와 관련이 적고 소득분위와 관련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서비스 보장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

- 서비스 보장의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보장에서 돌봄서비스의 빈곤완화 효과가 커서 빈곤율을 중위 50%기준으로 약 0.61%p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의 빈곤완화 효과는 약 0.13%p, 서비스 전체의 빈곤완화 효과는 1.38%였음.
 - 이 분석에서 수급액 정보가 누락된 서비스가 많아서 이 빈곤완화 효과는 상당히 실제 효과와 비교하여 평가절하 되었을 위험이 큼.

제3절 소득서비스보장 종합분석

□ 소득·서비스보장의 대상포괄성

- 분석에 포함된 전 소득·서비스보장 제도를 하나의 틀에서 종합분석 해보면,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6분위 이상에서 두 제도의 수급율이 모두 평균 이하였으나 이 소득구간은 상대적으로 소득안정성이 높은 곳이므로 평균이하의 수급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반면 26-49세 가구주가는 소득 4,5분위에 위치하여도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의 수급율이 모두 평균이하여서 이 집단이 사회보장제도 비수급이 문제를 유발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수급가구의 비율을 보면 26-39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 재산이 5분위 이하여도 두 제도 모두 평균이하의 수급율을 보이고 있으며, 40-64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 재산이 1-4분위인 경우 현금급여수급은 평균보다 낮아도 서비스 지원수급은 평균보다 높았음.
 - 서비스의 경우 수급결정에 재산의 영향이 현금지원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즉, 재산분위와 무관하게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이 모두 평균이하인 집단이 포진하고 있음.

□ 소득·서비스보장의 수급액 분석

- 수급액의 종합분석에서는 건강보장성 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누락되어 있어 분석의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평균수급액은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높음.
 - 현금지원은 50세 미만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에서 거의 대부분 평균이하의 수급액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 수급은 두 종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주거, 산재, 장애인대상 서비스 교육지원 한 부모지원 보육료지원 취업지원 등이므로 주로 근로연령층 가구주에서 평균수급액이 높고 노인이 주로 수급하는 서비스는 노인일자리와 노인돌봄서비스 정도만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노인가구주 가구의 평균수급액이 낮았음.

□ 소득·서비스보장의 소득분배효과

-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빈곤율 변화를 보면 현금지원은 7.39%p, 서비스 지원은 1.39%p 낮추었으며, 전체적으로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은 8.84%p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위 소득 25%를 기준으로 보면 빈곤완화 효과는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남.
 - 분석에 활용된 행정자료 중 소득·서비스보장 정보가 누락된 제도들이 있으므로 이 빈곤

감소 수준은 실제보다 낮은 것이라 보아야 함.

제3부 행정자료 연계·활용 기반과 정책과제

제1장 사회보장정책 연구와 자료 활용 경향

제1절 기존 사회보장정책 연구의 자료 활용 경향과 한계

○ 자료 활용 경향과 한계

-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분석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료는 집계된 행정자료, 설문조사 자료, 연구 맞춤형 행정자료 등임
- 사회보장제도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설문조사자료의 한계는 더 커지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한계는 사회보장 정보의 부족

○ 행정자료의 장점

- 최근 사회보장제도 근거마련에서 행정자료에 대한 관심 증가
- 행정자료의 강점은 아래와 같음.
 - 정보·변수 범위의 확장이 용이. 자료 연계 시 더 확장 가능
 - 큰 규모의 표본
 - 횡단면 자료와 패널자료로 구성 가능
 - 조사의 (시간적·금전적)비용 절감
- 행정자료를 연계할 때 강화되는 장점
 - 분석틀의 정교화. 소득, 재산 등 주요 요인의 고려 가능.
 - 정책 영역을 넘는 심도 깊은 효과 분석 가능. 예를 들어 근로지원과 아동빈곤, 임대주택거주와 건강보장접근성, 이민자 고용과 건강의 관계분석 등 분석 가능
- 자료 추출 및 연계 방식에 따라 상이한 장단점도 존재
 - 표본 대표성과 시차는 표본틀 구성, 모집단 자료 등 표본추출 환경에 따라 다소 상이
 - 연계되는 자료의 범위에 따라 자료의 정확성도 상이할 수 있음. 연계범위가 넓어질수록 자료의 정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행정자료의 단점도 존재

- 자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

- 욕구, 인식과 태도 정보의 부족
-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경험한 공통적 한계
 - 첫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정책의 상보성이나 대체성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분석하기 어려웠음.
 - 둘째 수급집단으로 국한된 사회보장제도 효과 분석. 행정적 문제의 발견, 또는 부적절 수급으로 연구주제를 한정하는 경향을 초래
 -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 배제위험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지 못함.

제2절 행정자료 활용 기반의 최근 변화

- 행정자료 활용 여건변화는 전산화, 정부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 고조, 그리고 정책의 근거기반 강조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2000년부터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어왔음. 이와 더불어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 자료가 구축되어 왔음.
 - 1980-90년대에는 국세 업무의 전산화 추진하였고 2010년 행복e음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2013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범정부 시스템이 개통되면서 사회보장정보 기반이 확충
 - 이와 더불어 정부의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노력이 이어짐. 예를 들어 2010년대 중반 이후 보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준비, 추진 중
 - 2020년 1월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인정보보호 법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가명정보 조항 강화
 - 2020년 8월 5일부터 적용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음
 - 정부의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지향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산업발전과 연관되는 경향을 보임.
 - 최근 근거기반정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 공공행정정보의 중요성도 이와 더불어 강조되기 시작

제2장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과 시사점

제1절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 기반

1. 행정자료 활용 정책 분석의 기반 변화

○ 행정자료 활용 기반과 북유럽 국가의 위상

- 북유럽 국가들은 행정자료 활용 정책기획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음.
- 북유럽 국가들의 행정자료 활용 역사가 길고 그 활용 기반이 여러 국가들의 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
- 북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등록센서스를 구축한 후 2010년대 중반 행정자료의 체계적 활용 모델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축, 운영 중

○ 행정자료에 대한 문화적 특이성

- 행정자료에 대한 태도와 활용 기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소득정보의 공개와 활용
 -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19세기 중반부터 개인과 기업의 과세 정보를 공개하여왔음
 - 소득정보 공개로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납부 세액을 늘이는 효과가 있었음.

2.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 정책연구의 절차와 특성

가. 행정자료 활용 절차

○ 등록행정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절차

-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안내서, 자료 설명서 제공- 연구지원서 제출(자료지원조직 또는 통계청)- 자료 활용 심의 - 민감정보 추가심의 - 자료승인- 원격접속분석 - 분석결과 이메일 전송
- 덴마크의 경우 스웨덴보다 약간 빠른 2000년에 연구자들을 위한 원격 데이터 접근 시스템(Remote Data Access for Researchers; RDAR)을 구축해서 발전시켜왔음.

○ 행정자료 활용 승인기관

- 덴마크 통계청은 승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자, 학생들이 통계청 행정등록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승인 기관 중 공공기관은 약 80-90%.

나. 북유럽 국가의 특성과 이슈

○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의 특징

- 북유럽국가는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방식,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법적 문화적 기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과 행정자료 활용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특성을 지님.
- 북유럽에서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매우 높은 수준. 승인된 기관의 연구자들은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다. 승인된 기관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승인기관의 행정자료 접근성은 매우 높음.
-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해당연구에서 요구한 행정자료의 활용 근거가 연구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함. 신청된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이상 자료가 요청되지 않도록 협의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활용될 수 있다는 문화가 상당 수준으로 수용되어 있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료의 결합과 제공을 주관하고 있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
- 행정자료 활용에는 법적 기반도 중요하게 작용.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공익을 위한 자료 활용근거를 분명하게 두고 있음.

○ 북유럽에서는 근거기반정책에 행정자료가 일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됨.

- 예를 들어 노르웨이 통계청 연구부서는 ‘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수행
- 덴마크의 사회부(Ministry for Social Affairs and the Interior)는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부서를 부내에 별도로 운영. 행정정보를 활용한 사회정책 보고서를 매년 발간. 정부 초기에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정책기획.

제2절 북유럽 국가사례의 함의

- 북유럽의 행정자료 활용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공익.

- 행정자료의 활용에서 공공, 그리고 안정성이 높은 사례부터 활용 경험을 축적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정책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법적 기반을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구현
- 자료접근에 대한 형평성과 과정공식화
 - 행정자료 활용 절차에서 관련 주체들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해당 기관들의 독립성 확보
- 자료 활용과정에 대하여 편의성, 접근성 제고
 - 원격분석기제를 적극 활용

제3장 행정자료 활용 방향과 정책과제

제1절 행정자료의 활용 방향

- 행정자료와 설문조사의 강점을 살리는 자료 기반 개선
 - 행정자료와 설문조사의 결합방식도 추진할 수 있음.
-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기획 근거 강화
 - 정책기획에서 행정자료 기반 정책분석이 지원하는 구조 갖추는 것도 주요
-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는 행정자료 기반의 지표 관리

제2절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행정자료의 연계, 활용과 관련된 정책이슈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크게 행정자료 활용인프라, 자료의 질, 그리고 분석환경과 관련된 이슈들로 구분이 가능
 - 행정자료 활용 인프라는 정보 활용의 안정성과 접근 형평성을 확보와 관련된 이슈
 - 자료의 질은 주로 자료의 포괄성과 정확성을 중심으로 논의
 - 분석환경은 실무적인 이슈로 접근형평성이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슈

행정자료 활용 인프라: 안정성과 접근 형평성	자료의 질: 포괄성과 정확성	분석환경: 안전성과 효율성
법적 기반 마련 합리적 거버넌스의 구축 정책지향의 합의와 준용 절차 공식화	소득·재산 등 정보구성 정보의 시차 지방정부의 행정자료 분석단위: 가구의 정의 자료연계의 결합키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체계 분석환경의 조성(기간과 물리적 분석공간) 자료의 목록과 정보 정의

□ 행정자료 활용 인프라: 안정성과 접근 형평성

○ 법적 기반

-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가 필요.
 - 법적 기반은 일반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공익을 위한 정책평가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근거기반정책을 위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 필요
 - 관련 자료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함
 - 「사회보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통계법」 등 관련 법의 조항에 대한 검토와 관계, 근거의 정당성 등이 검토되어야 함.

○ 합리적 거버넌스의 구축

- 행정자료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거버넌스가 작동하여야 함.
- 법적 근거를 가진 행정자료의 연계·활용을 실제 추진하는 주체와 각 주체들의 역할분담, 협력의 근거와 협력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이 분명해져야 함.
- 거버넌스의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의 근거기반정책위원회(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의 구성과 활동을 눈여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 정책지향의 합의와 준용

- 공공의 이익우선, 공공의 활용 우선은 사회적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기여를 함.
 -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에서 산업분야에 행정자료의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논의는 행정자료 활용이 사적이익과 개인정보의 침해위험으로 연결되면서 자주 반론에 직면
- 행정안전부는 2019년 12월 제3차(2020~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 정부의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주요 과제로 포함
 - 각 조직의 단절적 플랫폼 구축과 이로 인한 행정자료 연결의 장애 등은 합리적 거버넌스로 극복이 되어야 함.

○ 절차 공식화와 형평성 확보

- 자료 신청을 공식화하고 분석환경에 대한 접근성 제고하여 자료 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할 필요
- 신청공식화에서는 신청, 자료 중개조직이 명확해져야 하고 원격분석방식을 도입하여 접근성 제약을 줄여야 함.

□ 행정자료의 질: 포괄성과 정확성 확보

○ 소득과 재산 정보의 취약성과 보완

- 소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 논의 필요
 - 낮은 소득분위와 높은 소득분위에서 국세 통계와 설문조사자료의 소득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알려져있음
 - 각종 소득 정보 중 기준 소득을 검토하여야 하고, 소득의 정확성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
- 금융재산 정보의 보강을 위한 안 마련 필요. 행정자료 중 금융재산 정보는 매우 취약
 - 복유립은 금융재산도 행정정보 범위 안으로 포괄
 -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추출, 연계 범위 확대 필요

○ 정보의 시차

- 정보의 시차를 줄이기 위한 자료 정비 방안. 그리고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평가의 관행을 마련할 필요
 - 행정자료 중 소득 등 정보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약 2년의 시차가 있는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 경향이 존재.
 - 정부가 집권기에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정책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 이 시차는 매우 큰 장애
 - 통상 자료의 정확성과 자료의 최신성은 서로 상충되는데 정책분석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

○ 지방정부의 행정자료 연계

- 현재의 행정 빅데이터는 대체로 중앙정부의 정책 자료에 한정
-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의 사회정책 비중이 높아지면 중앙정부로 한정된 정책평가 연구가 갖는 한계도 커질 것으로 예상
-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분석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자료 협력이 두 정부 모두

에게 긴요한 것이 될 것임

○ 분석단위: 가구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

- 통계청 설문 조사자료의 가구와 주민등록 행정전산망의 세대개념은 다소 상이
- 사회보장제도 분석에서 의미가 있는 가구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
- 한편 가구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
 - 필요하다면 통계청의 센서스 기준 가구 개념을 적용하는 표본추출 방안도 검토될 필요

○ 정확매칭(exact matching)의 매칭기에 대한 숙고

- 행정 빅데이터의 장점인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결합 방법은 정확매칭(exact matching)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르면 정책연구를 위한 결합에서 주민등록번호 활용 불가능
- 생년월일, 성별, 이름으로 비식별조치된 결합기를 구성하는 방안의 한계와 대안 논의 필요
 - 연령, 성, 이름 등으로 구성된 비식별화된 결합기는 중복율이 높음. 따라서 대안모색이 필요
 - 예를 들어 결합기의 구성에서 지역 단위(동단위)의 병용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중복율을 낮추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사전 준비 단계로 각종 행정자료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의 활용이 혼용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화할 필요
 - 복유립은 등록개인식별번호(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를 결합기로 활용 중. 등록 개인식별번호를 활용하는 결합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안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

□ 행정자료의 분석환경: 안전성과 효율성

○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체계

-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연구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신뢰기반을 견고하게 할 필요
-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연구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후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정책평가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일 수 있음.

○ 분석 환경의 조성

- 원격접속방식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면 이용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도 물리적 공간을 마련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자료의 목록과 정보 정의

- 정보의 목록에 대한 안내가 부재. 초보적 수준이라도 목록 마련과 제공은 행정자료의 활용에서 중요한 출발지점
 - 결측 처리, 오류 확인과 보완, 범주화의 타당성 확보 등 정보의 순도 향상은 목록마련의 전제
- 자료의 활용-순도 향상-자료의 활용이라는 선순환을 수용할 필요
- 한편 정보 사용의 오류를 줄이자면 정보의 정의가 정확하게 주어져야 함

제 1 부

연구의 배경과 구성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제2장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제3장 연구방법과 분석틀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성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설계에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갖추어 왔다. 사회보장제가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확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이나 급여의 충분성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남기고 있다. 최근 고용안정성이 낮아지면서 시장소득의 분배가 악화되고, 고령화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득보장과 더불어 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 평가와 체계화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라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판단은 긴요하다.

사회보장제도를 개별 제도 단위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면서 복잡한 여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종합 평가는 향후 어떻게 정책혼합을 추진하여 갈 것인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책평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들부터 배제된 집단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안전망을 확대하여 방향으로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포괄하여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국민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요한 일이다.

- ※ 사회보장법 제 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 제3조(정의):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구성원을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가 필요하다. 국민 중 누가 사회보장제도를 수급하고 누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제도 수급에서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수급이 충분하지 못한 집단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가 자주 실시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로는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데 과거와 비교하여 더 큰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설문조사가 갖는 한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설문조사의 특성상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대부분 설문조사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 속에서 진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어렵고 응답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문항 수도 일정 수 이하로 한정하여야 한다. 결국 설문조사는 대개 한두개 제도만을 초점으로 문항을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파악을 하는 자료를 얻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제도와 수당, 공공부조제도는 상보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여러 제도의 수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설문 구성은 시간과 예산 제약 속에서 쉽지 않다. 과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기 전에는 서너 개의 제도 수급만 제대로 조사하여도 대강의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제도는 사회보험 외에도 각종 수당, 서비스, 공공부조 등 분화되어, 크게 늘었다. 둘째, 설문조사는 예산 제약으로 표본의 규모가 작아 작은 수의 대상을 지원하는 정책평가에는 활용이 쉽지 않다. 반면 예산과 시간 제약으로 특정 정책의 수급자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한 조사 자료는 전 가구 또는 인구 중 해당 집단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을 분석하는 한계를 지녀왔다. 예를 들어 A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게 되면 소득분배에 대한 해당제도의 영향이나 빈곤개선효과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설문조사가 갖는 이러한 한계는 최근 더 문제로 부상 증인데 이유는 설문조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비교하여 응답거부도 늘고 실제 한 명이나 한 가구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금전적 비용이 증가하여 왔다.

근거기반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자료로는 근거기반 사회보장정책을 견고하게 뒷받침하기 어렵고 비용도 적지 않다. 한편 과거 10여 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정보가 전산화되면서 행정자료의 크기와 질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서 행정자료가 갖는 강점은 매우 크다. 행정자료가 갖는 기본적인 강점에 더하여 여러 원천의 행정자료를 연계한 자료는 그 이점이 더 크다. 우선 설문조사자료와 비교하여 행정자료가 갖는 강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보의 정확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에서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수급을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받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수급액은 더욱

그 위험이 크다. 다만 기존의 설문조사 자료와 행정자료의 정보 정확성 차이가 계층별로 상이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시장소득이 그러하다. 상위소득과 하위소득구간에서 설문조사의 소득과 행정자료의 소득은 차이가 크다. 행정자료의 소득이 실제 소득 중 일부 누락된 낮은 소득일 가능성이 큰 소득계층이다. 둘째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수급 등의 정보에서 행정자료는 자료의 기준시점과 분석시점의 시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은 행정자료를 추출하고 분석에 활용되기까지의 공식적인 절차가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한정된다. 셋째, 표본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행정자료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행정자료는 대체로 전 국민, 전 가구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규모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 강점을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특수한 성격의 직업집단,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취약인구집단 중 소수로 구성되는 집단이 적지 않아서 이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설문조사를 한계를 지닌다. 이 집단만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체 인구 중 해당 집단의 위치, 특성을 비교하기 어렵도록 한계를 가지며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는 해당 집단의 규모가 너무 작아 적정 수의 사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하지만 행정자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고 이 자료 중 소수집단의 표본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한 크기의 표본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어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필요한 비용이 작다. 넷째, 행정자료는 정보·변수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설문조사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일정 수 이상의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변수가 한정된다. 하지만 행정자료는 기 구축된 자료 중 정보를 추가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그리 크지 않다. 특히 통계청 설문조사자료 등 정기적으로 배포되는 각종 설문조사 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복지서비스 정보가 풍부하여 서비스 관련 분석에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자료의 경우 태도나 인식과 관련된 정보는 거의 없으므로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정보의 내용에서 한계를 갖기는 한다. 다섯째, 행정자료는 횡단면 자료와 패널자료의 강점을 고루 갖출 수 있다. 행정자료는 대부분의 경우에 횡단면 자료로도 그리고 패널자료로도 자료의 구성이 가능하다.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기존의 패널자료는 표본손실로 제도효과를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역사가 긴 패널자료 분석결과 중 시기별 변화가 제도 변화에서 기인한 것인지 표본 변화에서 기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통시적 분석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정책 확대의 효과 추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행정자료는 조사의 비용(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행정자료는 대부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중 얻어진 자료들이다. 별도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정책운영으로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평가를 할 때 별도의 자료 구축비용이 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료생산비용은 비단 조사비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조사과정에서 응답자의 높은 피로도도 비용 중 하나이다. 행정자료는 응답을 위한 별도의 노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연계된 행정자료는 몇가지 추가적인 강점을 지닌다. 첫째, 개별 제도 및 제도 군의 범위를 넘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자료는 사회보험, 수당 등 전 소득보장의 상보성, 포괄성을 이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책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 중 상당 수는 특정 제도 수급자 정보에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해당 수급자가 전 가구, 전 인구에서 어느 소득분위, 재산분위에 분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러 제도의 정보를 하나의 자료로 연계하여 분석하면 각 제도 수급자가 전 사회구성원 중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자료 안에서 소득과 재산 등 주요 정보를 포괄하면서 각 제도 수급자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급여 수급자와 공공부조 수급자가 전 표본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제도로부터 배제위험이 큰 집단, 하나 이상의 제도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집단, 여러 제도가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집단을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된다. 셋째, 한편 요인들의 상호 관련을 정책 영역을 넘어서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설문조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정보를 행정자료에서 추출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직업과 치매 관계를 분석하는 등 설문조사에서 함께 다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포괄하여 정책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다른 예로는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고용서비스 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서 어떤 비교우위를 가지는지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수급현황을 중심으로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평가는 사회보장제도, 즉 사회보험·공공부조·기타 소득보장제도와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국민 중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포괄하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삶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무엇을 보완하여 나가야 하는지,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하여 여러 자료원천으로부터 각종 행정자료를 추출, 연계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행정자료 활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정리하고 향후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 분석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료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아래와 같은 결과의 활용과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 분석틀을 구성하여 향후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한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였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의 각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보장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해석하는 방식을 개발, 소개하여 종합적 정책 이해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향후 행정 자료를 활용한 정책평가 연구에 적지 않은 경험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식으로 행정 자료를 활용한 정책평가에서 향후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경험이 되기를 희망한다. 셋째, 행정 자료 분석을 통하여 정책기획에 보다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기획의 과정을 보다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이러

한 기여는 보다 발전한 방식의 행정자료 활용 정책연구가 정기적으로 수행될 때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 넷째, 정책대상 중 제도적 누락의 위험이 있는 집단을 파악하여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확충과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이 연구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연계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평가한다. 둘째, 행정자료의 추출과 연계, 그리고 이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연구의 기반 강화를 위한 현황 분석과 제안을 담고 있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 행정자료 기반 정책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정리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평가를 위하여 이 연구는 우선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방식과 분석자료 선택의 경향을 중심으로 분석, 선행 연구의 한계와 함의를 정리해 보았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 종합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왔는지 이러한 연구의 한계와 이를 위한 극복방안을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틀을 마련하고 전 영역의 분석에서 기초적 분석내용을 공유하였다.

앞서 연구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과 ‘급여충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틀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사회보험, 기타 소득보장제도, 서비스 등 어느 제도이든지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을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을 고려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취약성이 높을 수 있는 집단을 그렇지 않은 집단과 구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연령, 소득, 그리고 재산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연령,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비교집단이 구성되도록 하였다. 소득분위*가구주연령, 소득분위*수급자 연령, 재산분위*수급자 연령 등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정책영역별로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가구주의 연령, 개인의 연령,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의 재산수준을 중심으로 집단비교가 되도록 분석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분석에 활용되는 행정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의 소득 불완전성을 추정과정을 적용하여 보완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는 가구의 소득 자료가 없고 건강보험 보험료 자료가 있으므로 이 보험료 정보를 활용하여 10분위를 구분하였다. 또한 소득 자료가 없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분석센터의 결합자료로는 서비스 보장제도의 빈곤율과 불평등의 완화 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요양서비스와 건강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의료지원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만 추출이 가능한데 해당 자료들을 추출 결합할 수 있었던 곳은 건보공단으로 한정되었고 국세청은 국세청 나름대로 소득과 납세 정보를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로 한정하여 자료 연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요양서

비스와 의료지원의 빈곤 및 불평등 완화효과는 분석할 수 없었다. 다만 해당 제도들의 대상포괄성은 분석이 가능하였다.

대상포괄성과 급여수준의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구성원 중 어느 집단이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지원에서 배제된 취약인구집단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대상포괄성은 수급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집단별 수급하는 평균 제도의 수도 비교하였다. 집단별 평균 수급제도수를 비교한 것은 지원의 심도, 보장의 안정성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도의 급여충분성은 각 제도가 목표하는 급여수준이 다르고 각 제도별 급여형태가 다양하여 종합분석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급여충분성은 현금지원이 빈곤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보가 입수된 대부분의 소득보장제도는 이 제도들이 어느 정도 빈곤율과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빈곤선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고 심각한 빈곤의 완화를 이해하고자 중위소득 25%도 병용하였다. 서비스보장의 경우에는 공적 지원액이 입수된 제도에 대해서는 현금지원과 동일하게 해당 지원액을 추가하여 시장소득을 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빈곤율과 불평등의 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빈곤율 변화는 부분적 시장소득⁶⁾을 기준으로 공적이전 후 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각제도의 지원을 단계별 투입하여 빈곤과 불평등 변화를 보던 방식에서 변경,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각제도의 추가 시 빈곤과 불평등 변화분을 기준으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적용 순서가 분명한 경우에는 시장소득에서 각 제도의 적용순서대로 추가하면서 빈곤과 불평등 변화를 분석하였다.

사회보장제도 효과 분석은 2017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2017년 표본의 2015년 정보도 추출하였으므로 가능한 수준에서 개인단위 수급현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5년은 제도적 변화가 컸던 시점이자 불평등과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완화된 시점이다. 2017년 5월이 정부 교체 시점이므로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2017년의 수급과 해당 개인의 2015년의 수급을 비교하여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의 과거와 현재 비교로 개인의 수급변화와 함의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중요한 연구 내용 중 한 부분은 행정자료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평가 및 기획에서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분석에서 행정자료가 갖는 강점과 한계를 규명하고 정리하였으며 행정자료의 특성을 설문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정책분석에서 해당 자료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행정자료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시도를 하고 이를 기초로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행정자료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하고자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정책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춘 선진적인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6) 행정자료의 특성 상 사적이전 정보가 없어 이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중 시장소득은 사적이전, 금융소득일부가 누락된 부분적 시장소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은 대략 1960년대 후반부터 기존 전통적 설문조사 중심의 체계에서 등록기반 전산체제로 자료구축의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계생산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왔다.

이 연구의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자료 기반과 관련하여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보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부분에서는 포괄성이나 충분성에서 취약한 정책영역, 기초육구영역, 또는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안은 각 분석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종합분석에서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 제도의 개선보다는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지형변화, 균형 모색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도 개별제도보다는 중범위의 제도군 단위로 이루어졌고 정책제안도 개별제도차원의 개선방안보다는 제도군,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인 보호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행정자료 기반 사회보장제도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제언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은 행정자료의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변화 뿐 아니라 행정자료가 갖는 한계극복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제3장 연구방법과 분석틀

제1절 연구방법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행정자료를 연계·구축하여 이를 분석하는 계량적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자료 활용 및 이를 활용한 정책기획과 관련된 전문가의 포럼을 운영한 것이다.

행정자료 중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각 정보관리 조직의 정보원으로부터 추출하고 해당 자료를 비식별조치하고 결합하는 등 전 과정은 제2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정보를 추출하고 연계하는 과정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적정성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따라 진행되었으며 반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정보 추출과정 이전에도 행정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은 진행되었다. 우선 분석할 제도를 선정하였다. 제도를 선정하고 난 후 해당 제도들 정보 중 대상포괄성과 급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목록을 마련하였다. 정보목록은 해당 정보들을 추출하기 전 해당 정보를 담당하는 부처와 부서, 그리고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조직을 확인하여 협의대상 조직명단을 작성하여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18개 조직을 대상으로 정보추출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이 정보관리 조직과 협의 전 해당 정보를 담당하는 부처의 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행정자료를 추출하고 각 원천 자료를 연계하여 구축된 행정자료를 계량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 활용 기반이 합리화, 안

정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도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적지 않은 시간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행정자료의 활용기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였다. 자문회의와 포럼의 운영은 이러한 이유로 긴요한 연구방법이 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각 분야 제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석틀 및 자료 분석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연구가 소득 보장과 서비스 보장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여러 정책영역의 전문가로부터 주요제도, 이를 분석하기 위한 주요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자문을 받아야 했다. 전문가의 협력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여러 영역의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 전문가의 공동연구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노인돌봄서비스와 의료지원, 노인소득보장, 장애인 지원정책, 근로연령층 지원제도, 주거정책 등을 해당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공동 연구진 구성에서는 중요한 정보들이 다수 입수된 정책영역의 전문성이 우선 고려되었고 이와 더불어 국세청 국세통계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연구자로 한정하였다.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는 국책연구기관 종사 연구자로 한정하여 접근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와 기획에서 행정자료의 활용을 안전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정책평가 등 여러 영역의 전문가가 숙고하는 기회를 가져야 했다. 행정자료 활용 정책평가와 관련된 각종 이슈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였다. 이 포럼 운영의 목적은 행정자료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과 정책연구에서 행정자료가 갖는 특이성 등 여러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 포럼에서 다루어진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분석 사례와 한계’, ‘행정자료의 입수-관리-서비스 현황’, ‘사회보장정책평가를 위한 행정자료 활용의 의의’, ‘행정자료 활용 기반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행정자료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행정데이터 연결 및 활용의 쟁점’, ‘행정자료 기반 정책평가 자료 구축과 이슈’ 등이었다.

문헌연구는 연구 기간 내내 활용된 연구방법이다. 연구의 초반에는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연구기간 내내 사회보장제도 관련 행정자료에 대한 문헌 입수와 분석이 이루어졌고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 환경에 대한 문헌자료도 검토되었다.

제2절 분석틀

1. 사회보장효과 분석 지표

본 연구는 여러 원천의 자료를 연계·결합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보장과 서비스 보장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는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포괄성

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급여의 수준이 적절,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어느 집단이 사회보장제도의 보장범위에서 배제될 위험이 큰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포괄성을 그리고 어느 집단이 낮은 수준의 보장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급여수준을 분석하였다.

대상포괄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구성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분석된다. 대상포괄성은 제도 수급여부와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비교하는 집단별 수급율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위험이 높은 집단을 발견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이다. 한편 지원의 심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급하는 제도의 평균 개수도 분석하였다. 수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균 제도수가 높으면 보장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급여충분성은 각 제도가 목표하는 급여수준과 급여형태가 다양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급여의 적절성은 통상 필요한 수준 대비 급여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분석하여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는 욕구의 수준을 파악할 있는 정보가 없어 급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집단 간 비교하는 방식으로 급여의 적절성 분석을 대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액 정보가 없는 제도는 해당 제도의 급여충분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급여충분성은 각 정책영역별 기초수준의 욕구수준이나 보장수준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가 개별 정책의 효과성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분석의 수준이 개별정책이라기 보다는 정책군 이상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빈곤율이나 불평등지수 등 특정 지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급여충분성을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빈곤율 변화는 사적이전이 누락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각 제도의 고려가 반영된 빈곤율의 변화분으로 분석하였다. 각 정책영역별 정책 목표가 되는 기초선을 설정하기 어려운 종합적 분석으로 본 연구는 급여충분성의 기준으로 어느 수준의 빈곤선을 활용할 것인가는 관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위 50%를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구분하였고 필요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빈곤율 변화를 보기 위하여 중위소득 25%도 기준으로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불평등수준은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서비스 보장도 각 서비스지원별 표적으로 하는 욕구가 다르고 목표로 하는 욕구충족수준도 다르다. 서비스 형태로 지원되므로 현금화된 형태로 빈곤여부를 구분하기 더욱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욕구의 충족여부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서비스 보장의 경우 수급여부에 욕구를 추정할 수 있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이 있는 가구 대상 아동서비스 수급율, 수학하는 연령집단의 교육서비스 수급율 등을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공적지원액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액을 시장소득에 가산하여 빈곤율과 불평등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급여의 충분성 또는 급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당연 해당 지원은 실제 소득은 아니지만 이러한 분석은 서비스의 지출보전, 실질적 소득향상 효과를 분석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지원이 현금화된 형태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제도 중 주요 제도는 해당 서비스를 단가 개념으로

현금화하고 이를 시장소득에 가산하여 빈곤율과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교육급여는 지원액정보가 입수, 연계되지 않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을 추정하여 가산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비교집단의 구성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포괄성과 보장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전 사회구성원의 대상포괄성과 보장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이 분석은 횡단면 비교나 또는 국가별 비교에서 분석의 의의가 더 커진다. 반면 우리나라의 집단별 대상포괄성과 보장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면 어느 정책이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확충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에서 유념하여야 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간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과 급여수준을 비교하였다.

비교 집단 구분은 소득, 재산, 가구주(또는 개인)의 연령 기준으로 하였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0분위 나누어 집단을 구분하였다. 소득은 시장소득을 활용하여 10분위로 구분하였고 재산은 자료에 정보가 있는 재산, 즉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10분위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연령은 기본적으로 아동, 노인, 그리고 근로연령층으로 구분하되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령구분은 OECD의 연령 구분과 유사하지만 노인구분을 상이하게 처리(<https://stats.oecd.org/index.aspx?r=958519> 참조)하였다. OECD의 연령구분은 18세 미만 / 18-25세 / 26-40세 / 41-50세 / 51~65세 / 66~75세 / 76세 이상(해당 연령구분은 만 연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으로 구분되어있다. 본 연구의 연령구분은 가구주의 경우 18세 미만(17세 이하), 18-25세, 26-40세, 41-50세, 51-64세, 65-74세, 75세 이상, 7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개인단위에서는 상기 구분에서 아동은 5세 이하, 6-11세, 12-14, 15-17세로 재 구분하기도 하였다. 기본적인 연령구분에 더하여 정책영역별로 필요에 따라 연령을 세분분하기도 하였다. 다만 17세 이하 가구주 가구는 표본 수가 작아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라면 결과 제시와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주연령은 집단구분에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소득 10분위와 재산 10분위, 가구주 연령을 혼합 적용하여 소득분위*가구주연령, 소득분위*수급자 연령, 재산분위*수급자 연령 등 다양한 분석틀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집단별 대상포괄성과 급여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에서 시장소득 기준 소득 10분위는 자료의 특성 상 하위 1분위와 2분위가 구분되지 않았다. 시장소득이 0인 가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의 경우에는 더욱 10분위를 구분하기 더욱 어려웠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적지 않아서 1-4분위는 구분이 되지 않았다. 입수된 행정자료에 금융자산(전월세 보증금 포함)이 누락되어 재산의 하위분위가 구분되지 않았다.

3. 비교시점의 설정과 과거시점 분석 한계

본 연구에서 분석기준시점은 2017년이다. 행정자료 중 시차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의 안정성이 확보된 자료는 2017년 자료였다. 2017년 기준 표본은 우리나라 전 가구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2015년 정보도 추출하였는데 2015년 자료는 2015년의 전 가구 대표성이 확보된 자료는 아니고 2017년 자료에 정보가 있는 인구단위 표본의 2015년 정보이다.

2015년은 제도적 변화가 컸던 시점이자 불평등과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완화된 시점이므로 이 시점 전후 비교가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5년과 이후 시점의 상황을 비교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시간제약 등 여건의 제한으로 2015년 자료를 2015년 가구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출하지 못하였다. 2015년 기준 시점의 자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표본의 2015년 정보이므로 2015년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더욱이 2015년 정보는 2017년 개인표본의 2015년 정보이므로 2015년 가구구성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개인단위 불완전 균형패널로 2017년 표본의 개인단위 수급변화를 종단 분석하는 수준으로 2015년 정보를 활용하였다.

제 2 부

사회보장제도 수급현황과 소득보장효과 분석

제1장 자료의 구성과 표본 특성

제2장 인구집단별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제3장 욕구영역별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제4장 소득·서비스보장 현황과 소득분배 효과

2

사회보장제도 수급현황과 << 소득보장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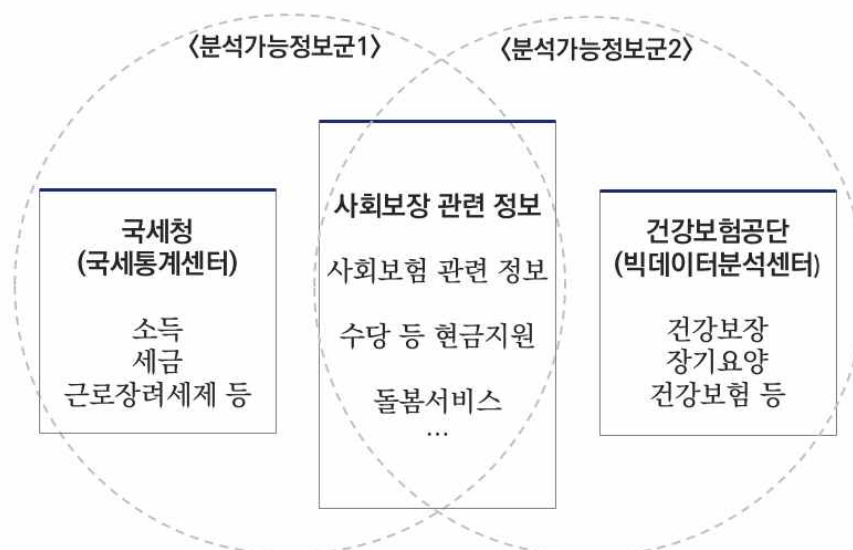
제1장 자료의 구성과 표본 특성

제1절 자료의 구성과 구축 과정

1. 자료의 구성과 한계

분석을 위해 연계된 행정자료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표에 제시된 각종 사회보장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연계한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 사회보장정보와 국세청의 자료를 연계한 자료이다. 사회보장정보와 건강보험 정보를 연계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분석센터에 자료를 구축하고 이 분석센터에서 자료 분석이 가능하였다. 한편 이 연계 자료에 국세청의 자료는 연계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소득과 소득세,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정보는 누락된 자료이다.

[그림 2-1-1-1] 행정자료의 결합과 분석 내용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누락된 소득 정보는 보험료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사용하였다. 산정보험료와 차기년도 소득 여부에 따라 조정된 정산반영보험료를 참고하여 소득 대리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소득10분위 자료를 구성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자료는 국세청의 종합소득금

액과 비교할 때 근로소득공제 및 연금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으로 시장소득에 더 가까운 개념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한 소득분위 구성은 1분위와 2분위가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보장과 노인서비스 분석에서는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구분한 분위 구분을 활용하였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분위는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10분위로 구분된 분위 구성을 갖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와 국세청 정보를 연계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직접 연계자료를 구축하고 국세청 내 국세통계센터에서만 분석이 가능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즉 건강보험관련 정보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각종 건강보장성 지원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반면 소득 자료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소득자료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자료, 일용소득, 거주자사업소득, 일용소득 등 국세청에 신고된 범위에서 비교적 세부적인 소득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공제액 정보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보를 포함하여 분석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적 이전소득에 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아 시장소득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 2-1-1-1〉 사회보장 관련 행정자료의 소관부처와 관리조직

소관부서	대상사업	정보관리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각종 건강보장성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생계/의료/교육급여, 자활근로, 자활장려금(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바우처), 장애아동가족지원(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육서비스	사회보장정보원
	노인일자리 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취업성공패키지 등	한국고용정보원
교육부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임대주택	국토부, LH/SH공사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국세청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출생연도 등), 재산과세표준액, 재산세	행정안전부, 지역정보개발원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군인연금	국군재정관리단
국가보훈처	보훈급여(수당)	보훈처
과기부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는 표본추출과 자료 연결을 위한 정보의 원천이다. 그리고 행정

안정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의 연령과 재산 관련 정보, 국세청의 소득관련 정보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된 분석틀, 즉 소득분위, 재산분위, 가구주(또는 개인)연령 구분의 기초정보로 활용되었다.

각종 사회보장을 집행하면서 얻어진 행정자료가 소관부처의 책임 하에 정보관리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표 2-1-1-1>을 보면 각 행정자료가 어느 부처 소관인지, 그리고 관리조직은 어디인지를 간략하게 볼 수 있다. 열거된 자료를 보면 짐작하듯이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의 기반이 매우 견고하여졌다. 물론 이러한 자료는 개별 기관의 자료로 한정하여서는 분석의 의의를 살리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회정책 효과를 이해하자면 소득과 재산 등 수급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함께 연계한 행정자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행정자료가 구축되었으나 행정자료를 정책평가와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그리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는 행정자료를 연계한 자료를 활용한 정책연구는 쉽지 않았다. 자료기반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근거기반 기획에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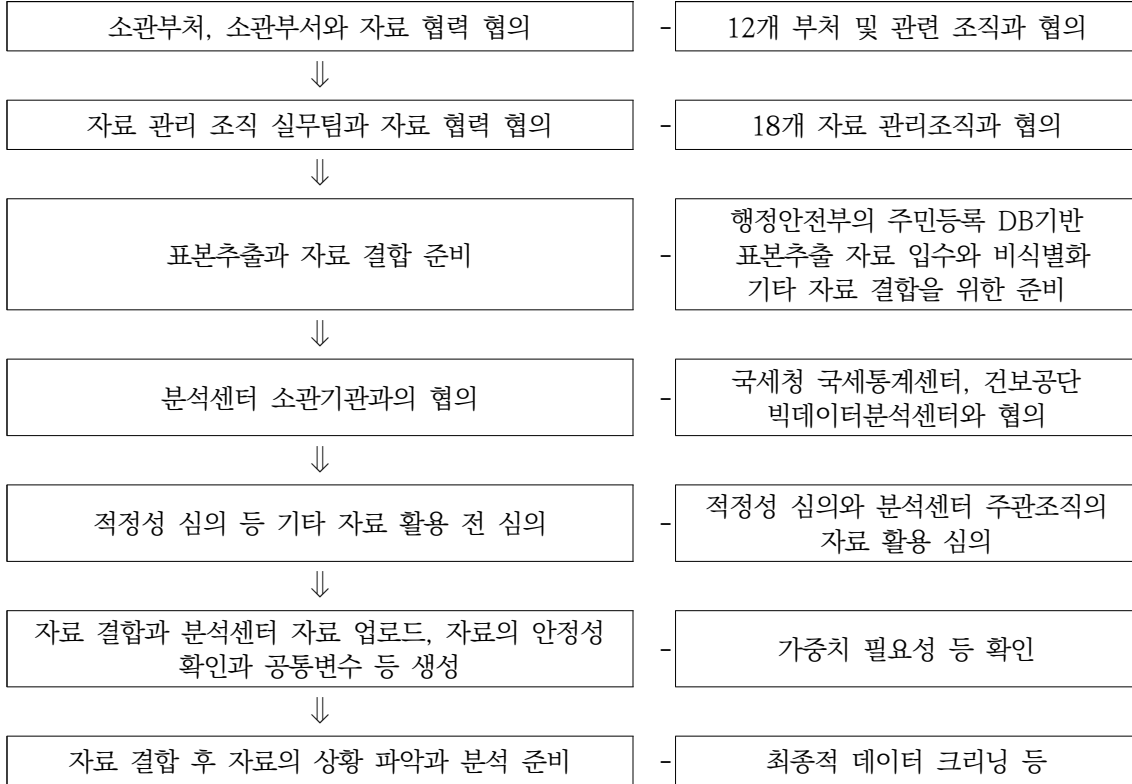
사회보장정보는 아래의 정보 중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국세청의 자료를 제외한 자료들로 크게 사회보험 관련 자료와 그 외 공적이전소득 자료로 구분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제외한 사회보험 자료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연금, 별정우체국),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공적이전소득 자료에는 공공부조와 현금수당 외에 일자리, 돌봄 등 서비스 분야의 급여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2. 자료의 구축 과정

행정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순서와 같다. 먼저 자료를 제공할 소관 부처 및 부서와의 협의, 실제로 자료를 제공할 자료 관리 조직과의 협의를 진행한 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기반으로 표본 추출을 실시한다. 표본추출과 분석자료의 입수가 완료된 후 분석을 진행할 분석센터 소관기관(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를 진행한 후 자료의 결합과 반입을 진행한다. 자료 결합 및 반입 전에는 적정성 심의와 분석센터 주관조직의 자료 활용 심의 과정을 거친다. 주민등록정보로부터 추출된 표본은 약 150만 세대로 전 가구의 7%에 해당하며, 세대원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사회보장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16개 기관으로부터 표본과 매칭되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결합한다. 이렇게 결합된 개인단위 데이터는 다시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으로 반입되어 각각 건강정보 및 국세청 정보와 결합하였다. 개인단위 데이터로 구성되었으나 동 자료는 세대주별로 세대원을 결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세대단위⁷⁾, 세대원 단위로 분석이 가능하다.

7)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세대단위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단위와 다른 단위로 표본이 추출되고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 설명에서는 가구단위로 칭하였다. 세대원도 이하 가구원이라 칭하였다.

[그림 2-1-1-2] 행정자료 구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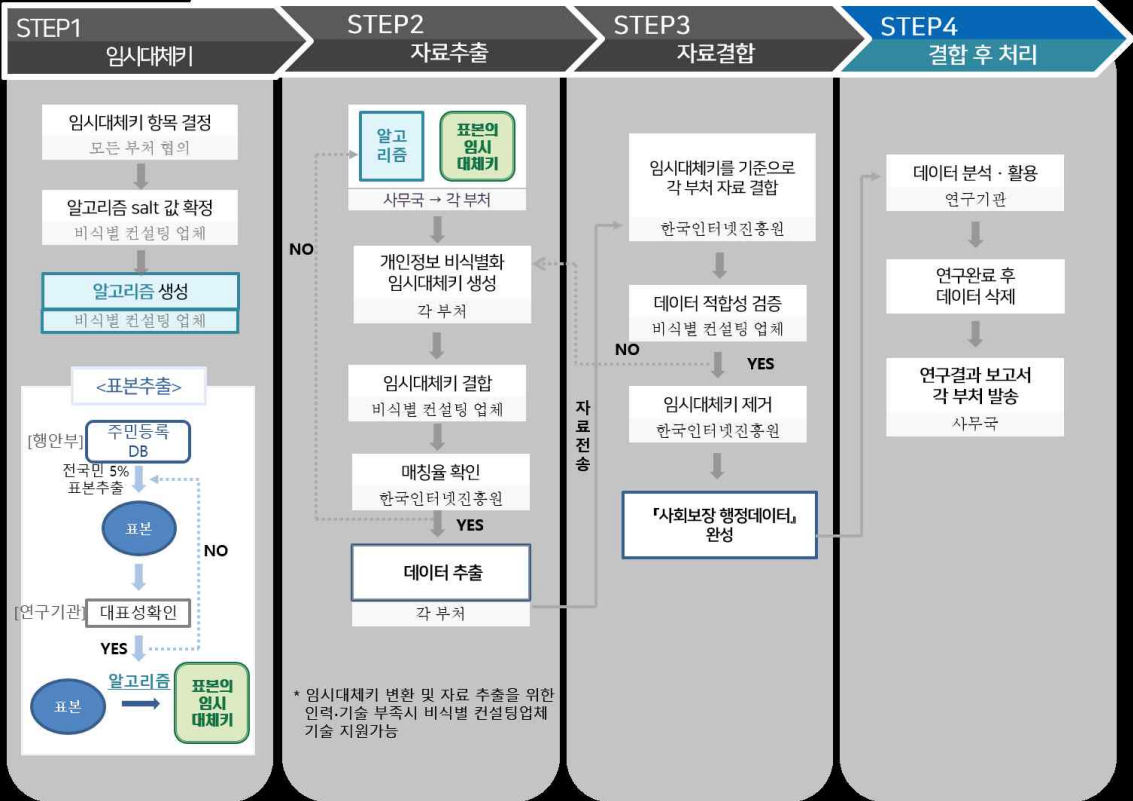
표본 추출과 자료의 결합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자료를 결합하기 전 가장 중요한 작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비식별화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와 이에 따른 자료의 결합은 전문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⁸⁾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데이터를 결합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공된 자료에서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이용하여 임시대체키를 생성하고 생성된 임시대체키의 중복을 제거한 후, 사전에 준비된 행정안전부의 샘플 데이터에 존재하는 데이터만 남긴다. 임시대체키 작업 후 결과 파일에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의 통계 데이터를 추가하고 데이터 결합이 완료되면 다시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데이터를 삭제한다. 비식별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되었다⁹⁾. 첫째, 결측치가 많은 정보의 경우 관련 정보와 합산하여 총계처리하였다. 둘째, 공적이전 소득으로 계산될 급여는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통일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셋째,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범주화하고 가입기간은 월단위에서 연단위로 통일하였다. 넷째, 극단치의 확인을 예방하기 위해 탐코딩 방식을 사용하였다.

8) 비식별조치는 데이터 보안과 관리, 개인정보 비식별화 전문업체인 ㈜파수닷컴에서 수행하였으며, 비식별화 작업에는 파수닷컴의 소프트웨어인 Analytic DID가 활용되었다.

9) 통상 비식별조치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삭제, 데이터범주화, 데이터마스킹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1-1-3] 행정자료 결합과정 개요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19). 관계기관 설명회 자료.

데이터의 비식별조치가 완료된 이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적정성 평가에서는 K-익명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림 2-1-1-4] 적정성 심사의 개요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6. 7. 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백대용(2019). 행정데이터 통합·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서 재인용.

적정성 평가가 완료된 이후 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연구 DB 로 결합하고 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 빅데이터 분석센터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따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세청 데이터의 요청과 적정성심사를 마친 자료를 결합하여 국세청 국세통계센터에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을 따랐다. 이후 결합, 구축된 두 개의 자료에 데이터 크리닝, 소득 변수 생성, 가중치 부여 등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추출과 연계, 매 단계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제2절 가중치 적용

1. 표본추출 및 표본의 대표성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가구 중 일부를 표본으로 자료를 추출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DB에서 전가구의 7% 표본을 추출하였다. 주민등록 DB의 세대주 기준으로 7% 표본을 추출한 것이다. 표본손실을 고려하여 5%가구 표본을 목표로 7%가구를 추출하였다. 추출할 때 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생년월일, 성, 이름을 활용하였다. 식별번호의 특성 상 중복식별번호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규모의 표본이 손실되었다. 중복식별번호의 표본 특성을 고려할 때 비체계적 손실로 보기 어려워 손실된 표본의 특성을 감안한 가중치 적용을 하여야 했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7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에서 150만 세대(전체 세대의 약 7%)와 각 세대에 속한 세대원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인구총조사의 시도와 세대주 연령을 조합한¹⁰⁾ 셀별 비율에 맞추어 층화추출하였다. 동일 세대에 속한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대ID를 부여하였고, 각 세대의 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그밖에 세대원수, 세대원의 성/연령, 시도(17개), 지역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변수를 추출하였다. 이하의 서술에서는 세대를 가구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세대주가 가구주를, 세대원수가 가구원수를 의미한다. 추출된 표본의 사례 수는 1,499,996가구, 3,603,996명이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 2-1-2-1>과 <표 2-1-2-2>에서는 표본의 기본 특성을 2017년 인구총조사 집계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표 2-1-1>을 살펴보면, 표본의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시도 분포가 인구총조사 집계자료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원수 분포에는 작지 않은 차이가 관찰되는데, 표본의 1인 가구 비율이 35.5%로 인구총조사 집계자료의 28.6%보다 6.9%p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가구원수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세대 구분과 인구총조사의 가구 구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주 연령

10) 층화에 활용한 시도와 세대주 연령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시도의 범주는 17개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로 구분하였다. 세대주 연령의 범주는 6개로, 18세 이하/19~34세/35~54세/55~64세/65~74세/7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과 가구원수의 결합분포를 분석한 <표 2-1-2>를 살펴보면, 표본의 1인 가구 비율이 인구총조사 집계자료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주로 인구총조사보다 표본에 30대 이상 1인 가구주 가구가 많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2-1-3>에서는 개인의 성과 연령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표본과 인구총조사 집계자료의 분포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본 연구의 표본은 가구원수 분포를 제외하면 대체로 인구총조사 집계자료와 유사한 가구 및 개인 특성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주민등록전산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본과 인구총조사 집계자료의 가구원수 분포 차이를 수용하고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2-1-2-1> 가구주 특성 및 지역 분포

(단위: %)

구분		표본	2017년 인구총조사
가구주 성	남성	68.5	69.4
	여성	31.5	30.6
가구주 연령	20세 미만	0.2	0.3
	20~29세	6.3	6.9
	30~39세	16.2	16.2
	40~49세	22.6	22.5
	50~59세	24.2	23.9
	60~69세	16.4	16.2
	70세 이상	14.1	13.9
가구원수	1인	35.5	28.6
	2인	21.8	26.7
	3인	18.4	21.2
	4인	18.0	17.7
	5인 이상	6.3	5.8
시도	서울	19.4	19.4
	부산	6.9	6.9
	대구	4.8	4.8
	인천	5.5	5.5
	광주	2.9	2.9
	대전	3.0	3.0
	울산	2.2	2.2
	세종	0.5	0.5
	경기	23.4	23.4
	강원	3.2	3.2
	충북	3.2	3.2
	충남	4.2	4.2
	전북	3.7	3.7
	전남	3.7	3.7
	경북	5.5	5.5
	경남	6.6	6.6
	제주	1.2	1.2
계		100.0	100.0

주: 가구단위 분포이다. 인구총조사는 일반가구 기준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추출 원자료; 인구총조사 집계자료(통계청, 2019a, 2019b).

통계청(2019a). 가구주의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12.26. 인출.

통계청(2019b). 가구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12.26. 인출.

〈표 2-1-2-2〉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수의 결합분포 (단위: %)

구분		가구원수											
		표본						2017년 인구총조사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계
가구주 연령	20세 미만	0.2	0.0	0.0	0.0	0.0	0.2	0.3	0.0	0.0	0.0	0.0	0.3
	20~29세	4.8	0.9	0.4	0.2	0.0	6.3	4.9	1.2	0.5	0.2	0.0	6.9
	30~39세	6.1	2.8	3.4	3.0	0.9	16.2	4.9	3.2	3.7	3.4	1.0	16.2
	40~49세	5.9	2.9	4.5	6.9	2.4	22.6	4.4	3.6	5.2	7.0	2.3	22.5
	50~59세	6.8	4.4	5.2	5.9	1.8	24.2	4.8	6.2	6.4	5.1	1.4	23.9
	60~69세	5.5	5.6	3.2	1.4	0.6	16.4	4.1	6.7	3.5	1.4	0.5	16.2
	70세 이상	6.3	5.1	1.6	0.6	0.5	14.1	5.1	5.8	1.9	0.6	0.5	13.9
계		35.5	21.8	18.4	18.0	6.3	100.0	28.6	26.7	21.2	17.7	5.8	100.0

주: 가구단위 분포이다. 인구총조사는 일반가구 기준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추출 원자료; 인구총조사 집계자료(통계청, 2019b).
통계청(2019b). 가구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12.26. 인출.

〈표 2-1-2-3〉 개인 특성 분포 (단위: %)

구분		표본	2017년 인구총조사
개인 성	남성	50.0	49.3
	여성	50.0	50.7
개인 연령	20세 미만	19.0	18.9
	20~29세	13.3	12.1
	30~39세	14.4	14.6
	40~49세	16.8	17.1
	50~59세	16.3	16.7
	60~69세	10.8	11.2
	70세 이상	9.3	9.5
계		100.0	100.0

주: 개인단위 분포이다. 인구총조사는 일반가구원 기준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추출 원자료; 인구총조사 집계자료(통계청, 2019c).
통계청(2019c). 성, 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12.26. 인출.

2. 식별정보 중복 사례 처리 및 가중치 조정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추출한 주민등록전산자료 표본과 각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수급 정보를 개인의 이름-생년월일-성별을 조합한 임시대체키를 활용하여 결합하였다. 그런데 모집단, 즉 2017년 10월 기준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이름-생년월일-성별이 동일한 개인(이하 ‘중복개인’)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경우 각 기관의 수급 정보가 결합되지 못하거나 결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결합된 수급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제외하는 접근을 채택

한다. 중복개인을 확인하기 위해, 표본의 각 개인에 대해 이름-생년월일-성별이 동일한 다른 개인이 주민등록전산자료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이하 ‘중복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았다.¹¹⁾ 그런데 본 연구는 소득, 재산 등 개인단위로 측정된 변수를 가구 내에서 합산하여 가구단위 측정 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 일부 가구원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가구단위 측정 변수에 결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복개인뿐만 아니라 중복개인이 포함된 가구(이하 ‘중복가구’)와 해당 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을 분석에서 제외한다. 즉, 중복가구를 결측사례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중복가구를 제외하기 전의 표본을 ‘원표본’, 제외한 후의 표본을 ‘분석표본’, 제외하는 중복가구 표본을 ‘중복표본’으로 부른다.

이처럼 중복표본을 분석에서 제외할 때, 가구규모가 큰 가구는 가구 내 중복개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석표본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전체 개인의 중복표본 비율은 33.2%이지만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중복표본 비율은 8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인 표본은 첫째, 주민등록전산자료 상의 세대가 실제 가구구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둘째, 분석표본 포함확률이 낮아 그 역수로 가중치를 부여할 때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전체 가구 중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0.02%이고, 전체 개인 중 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인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은 0.2%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는 선택이 대표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인 이상 가구를 제외한 후 표본은 1,499,739가구, 3,596,715명이다. 이하에서는 10인 이상 가구를 제외한 표본을 원표본으로 정의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원표본에서 중복개인은 3,596,715명의 12.6%이고, 중복가구는 1,499,739가구의 25.7%이며, 중복가구에 속한 개인은 3,596,715명의 33.1%이다. 즉,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되는 중복표본의 비율이 개인단위 분석에서는 33.1%, 가구단위 분석에서는 25.7%인 것이다. 중복여부, 즉 이름-생년월일-성별이 동일한 개인의 존재 여부가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표본과 분석표본의 특성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분석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표 2-1-4>~<표 2-1-5>에서는 중복표본과 분석표본의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중복표본과 분석표본의 가구주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표본에 비해 중복표본이 가구주가 남성이거나 30대~50대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수 분포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분석표본에 비해 중복표본의 1인 가구 비율이 27.3%p나 낮고 4인 가구 비율이 16.3%p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규모가 클수록 가구 내에 중복개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분석표본에 비해 중복표본의 농어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경기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표본보다 중복표본의 남성 비율, 고연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름-생년월일-성별의 중복 패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복가구에 속한 개인과 그링

11) 표본이 아니라 모집단(주민등록전산자료)에서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60만 명의 표본 내에서 이름-생년월일-성별이 고유한 사례라 할지라도, 표본으로 추출되지 않은 주민등록전산자료 상의 나머지 사례 중에서 해당 사례와 이름-생년월일-성별이 동일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

지 않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름-생년월일-성별이 다른 사람과 중복되는 개인(중복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비중복개인에 비해 중복개인의 여성 비율이 23.6%p나 높고 고연령 비율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에 태어난 여성의 이름-생년월일-성별 중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표 2-1-2-4〉 중복표본과 분석표본의 가구주 특성 및 지역 분포

		(단위: %)		
구분		중복표본(A)	분석표본(B)	차이(A-B)
가구주 성	남성	69.9	68.0	+1.9
	여성	30.1	32.0	-1.9
가구주 연령	20세 미만	0.1	0.2	-0.1
	20~29세	4.2	7.1	-2.9
	30~39세	17.4	15.8	+1.6
	40~49세	28.7	20.5	+8.2
	50~59세	27.1	23.2	+4.0
	60~69세	13.9	17.2	-3.3
	70세 이상	8.5	16.0	-7.5
가구원수	1인	15.2	42.5	-27.3
	2인	18.4	22.9	-4.6
	3인	24.2	16.4	+7.8
	4인	30.1	13.9	+16.3
	5인 이상	12.1	4.3	+7.8
지역구분	대도시	45.5	44.5	+1.0
	중소도시	48.2	46.8	+1.4
	농어촌	6.4	8.7	-2.4
시도	서울	19.1	19.5	-0.4
	부산	7.0	6.8	+0.2
	대구	5.1	4.7	+0.4
	인천	5.8	5.4	+0.4
	광주	2.9	2.9	-0.0
	대전	3.1	3.0	+0.0
	울산	2.4	2.1	+0.4
	세종	0.6	0.5	+0.0
	경기	24.8	22.9	+1.9
	강원	2.9	3.3	-0.4
	충북	3.0	3.3	-0.3
	충남	4.0	4.3	-0.4
	전북	3.4	3.8	-0.4
	전남	3.2	3.9	-0.7
	경북	5.2	5.7	-0.5
	경남	6.5	6.6	-0.1
	제주	1.1	1.3	-0.2
계		100.0	100.0	

주: 가구단위 분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추출 원자료.

〈표 2-1-2-5〉 중복표본과 분석표본, 중복개인과 비중복개인의 개인 특성 분포

(단위: %)

구분		중복가구 여부			중복개인 여부		
		중복표본(A)	분석표본(B)	차이(A-B)	중복개인(A)	비중복개인(B)	차이(A-B)
개인 성	남성	47.0	51.5	-4.5	29.4	53.0	-23.6
	여성	53.0	48.5	+4.5	70.6	47.0	+23.6
개인 연령	0~4세	5.2	3.5	+1.6	4.9	4.0	+0.9
	5~9세	6.1	3.8	+2.2	5.3	4.5	+0.8
	10~14세	6.0	3.9	+2.1	4.9	4.5	+0.3
	15~19세	7.3	4.9	+2.4	6.5	5.6	+0.9
	20~24세	7.8	6.3	+1.6	7.6	6.7	+1.0
	25~29세	6.2	6.7	-0.6	6.5	6.5	-0.1
	30~34세	6.0	6.8	-0.8	6.5	6.6	-0.0
	35~39세	8.4	7.6	+0.7	8.8	7.7	+1.1
	40~44세	8.6	7.6	+1.1	8.8	7.8	+0.9
	45~49세	9.7	8.5	+1.2	10.0	8.7	+1.3
	50~54세	8.0	8.0	-0.0	8.1	8.0	+0.1
	55~59세	7.4	8.8	-1.4	8.3	8.3	-0.0
	60~64세	4.8	7.1	-2.3	5.5	6.5	-1.0
	65~69세	3.0	5.2	-2.2	3.2	4.7	-1.5
	70~74세	2.2	4.0	-1.8	2.5	3.5	-1.1
	75~79세	1.8	3.4	-1.6	1.9	3.0	-1.1
	80세 이상	1.5	3.7	-2.2	0.8	3.3	-2.5
계		100.0	100.0		100.0	100.0	

주: 개인단위 분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추출 원자료.

이처럼 중복표본과 분석표본에 뚜렷한 특성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중복표본을 제외하고 분석표본을 분석할 때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복표본과 분석표본에 대해 공통적으로 측정된 변수(가구원수, 지역, 성, 연령 등)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즉, 분석표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관찰된 몇몇 특성의 분포를 원표본의 분포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무응답 조정 가중치 부여과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인 가중치 부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개인을 대상으로 가구주 및 개인 특성과 지역에 따른 하위집단을 구성한 후, 하위집단별 분석표본 포함확률을 추정한다. 이때 하위집단은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지역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개인 성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¹²⁾ 예를 들어, 가구주가 20대 남성이고 가구원수가 3명인 대도시 거주 가구에 속한 남성 집단 중 분석표본에 속할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둘째, 분석표본에 속한 개인에 대해 분석표본 포함확률의 역수를 개인가중치로 부여한 후, 개인가중치 평균이 1이 되도록 스케일을 조정하였다. 셋째, 가구 내

12) 가구원수의 범주는 1인/2인/3인/4인/5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주 연령의 범주는 29세 이하와 80세 이상을 구분한 후, 나머지 30~79세 구간은 5세 간격으로 구분하였다.

개인가중치의 평균을 가구가중치로 부여하고, 가구단위 가구가중치 평균이 1이 되도록 스케일을 조정하였다.

〈표 2-1-6〉과 〈표 2-1-7〉에서는 이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 후 분석표본의 특성이 원표본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2-6〉에서 가구단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구가중치를 적용하기 전에 관찰되었던 원표본과 분석표본의 특성 차이가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후 대체로 사라졌음이 확인된다. 시도 변수는 가중치 부여과정에 활용되지 않았지만, 시도 변수가 중복표본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그나마 존재하는 원표본과 분석표본의 시도 분포 차이도 가중치 조정 후 대체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2-7〉에서 개인단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가중치 적용 전에 관찰되었던 원표본과 분석표본의 개인 특성 차이가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후 거의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적어도 성, 연령, 지역 등 관찰된 몇몇 특성의 분포는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표본이 원표본을 대체로 잘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분석표본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도 가중치 조정에 고려하지 않은 특성(소득, 재산, 각종 수급 관련 정보 등)의 분포가 여전히 원표본의 분포와 상이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표 2-1-2-6〉 원표본과 분석표본의 가구주 특성 및 지역 분포

(단위: %)

구분		원표본(A)	가중치 미적용 분석표본(B)	가중치 적용 분석표본(C)	차이(A-B)	차이(A-C)
가구주 성	남성	68.5	68.0	68.5	+0.5	-0.0
	여성	31.5	32.0	31.5	-0.5	+0.0
가구주 연령	20세 미만	0.2	0.2	0.2	-0.0	+0.0
	20~29세	6.3	7.1	6.3	-0.7	+0.0
	30~39세	16.2	15.8	16.2	+0.4	+0.0
	40~49세	22.6	20.5	22.7	+2.1	-0.0
	50~59세	24.2	23.2	24.2	+1.0	-0.0
	60~69세	16.4	17.2	16.4	-0.8	+0.0
	70세 이상	14.1	16.0	14.1	-1.9	-0.0
가구원수	1인	35.5	42.5	35.5	-7.0	+0.0
	2인	21.8	22.9	21.8	-1.2	+0.0
	3인	18.4	16.4	18.4	+2.0	+0.0
	4인	18.0	13.9	18.0	+4.2	+0.0
	5인 이상	6.3	4.3	6.3	+2.0	-0.0
지역구분	대도시	44.7	44.5	44.7	+0.3	+0.0
	중소도시	47.2	46.8	47.2	+0.4	+0.0
	농어촌	8.1	8.7	8.1	-0.6	-0.0
시도	서울	19.4	19.5	19.5	-0.1	-0.1
	부산	6.9	6.8	6.8	+0.1	+0.1
	대구	4.8	4.7	4.8	+0.1	+0.0
	인천	5.5	5.4	5.5	+0.1	+0.0
	광주	2.9	2.9	3.0	-0.0	-0.1
	대전	3.0	3.0	3.1	+0.0	-0.0
	울산	2.2	2.1	2.1	+0.1	+0.0
	세종	0.5	0.5	0.5	+0.0	-0.0
	경기	23.4	22.9	23.3	+0.5	+0.1

	강원	3.2	3.3	3.2	-0.1	+0.0
	충북	3.2	3.3	3.2	-0.1	-0.0
	충남	4.2	4.3	4.2	-0.1	+0.0
	전북	3.7	3.8	3.7	-0.1	-0.0
	전남	3.7	3.9	3.8	-0.2	-0.0
	경북	5.5	5.7	5.5	-0.1	+0.1
	경남	6.6	6.6	6.6	-0.0	-0.0
	제주	1.2	1.3	1.3	-0.0	-0.0
계		100.0	100.0	100.0		

주: 가구단위 분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추출 원자료.

〈표 2-1-2-7〉 원표본과 분석표본의 개인 특성 분포

(단위: %)

구분		원표본(A)	가중치 미적용 분석표본(B)	가중치 적용 분석표본(C)	차이(A-B)	차이(A-C)
개인 성	남성	50.0	51.5	50.0	-1.5	-0.0
	여성	50.0	48.5	50.0	+1.5	+0.0
개인 연령	0~4세	4.1	3.5	4.1	+0.5	+0.0
	5~9세	4.6	3.8	4.6	+0.7	+0.0
	10~14세	4.6	3.9	4.6	+0.7	-0.0
	15~19세	5.7	4.9	5.7	+0.8	+0.1
	20~24세	6.8	6.3	6.7	+0.5	+0.1
	25~29세	6.5	6.7	6.6	-0.2	-0.0
	30~34세	6.6	6.8	6.6	-0.3	-0.0
	35~39세	7.9	7.6	7.8	+0.2	+0.0
	40~44세	7.9	7.6	7.9	+0.4	+0.0
	45~49세	8.9	8.5	8.9	+0.4	+0.0
	50~54세	8.0	8.0	8.0	-0.0	+0.0
	55~59세	8.3	8.8	8.3	-0.5	+0.0
	60~64세	6.4	7.1	6.4	-0.8	-0.0
	65~69세	4.5	5.2	4.5	-0.7	-0.0
	70~74세	3.4	4.0	3.4	-0.6	-0.0
	75~79세	2.9	3.4	2.9	-0.5	-0.0
	80세 이상	3.0	3.7	3.1	-0.7	-0.1
계		100.0	100.0	100.0		

주: 개인단위 분포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추출 원자료.

제3절 표본 특성

1. 소득 자료의 구성과 한계

본 절에서는 분석결과의 이해를 위하여 분석틀로 사용되는 주요 정보의 현황과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기초분석 결과로 제시한다. 먼저 기본적인 분석틀은 1) 시장소득 10분위 단위×가구주 연령,

2) 재산 10분위×가구주 연령, 3) 시장소득 10분위×재산 10분위를 사용하며, 분석단위가 되는 시장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igcirc \text{시장소득} = 1\text{차 소득}(\text{근로소득} + \text{사업 및 부업소득} + \text{기타소득}) + \text{사적이전소득}(\times)$$

시장소득은 1차 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더해야 하지만 본 연구의 행정자료에는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1차 소득을 시장소득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1차 소득에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소득에는 부동산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시장소득 외에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bigcirc \text{경상소득} = \text{시장소득} + \text{공적이전소득}$$

$$\bigcirc \text{가처분소득} = \text{경상소득} - (\text{사회보장부담금} + \text{세금})$$

경상소득에 사용되는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험 급여액과 16개 기관에서 추출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포함된다. 가처분소득에 사용된 각종 세금 정보는 국세청에서 추출한 소득세와 재산세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사회보장부담금은 차감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상포괄성 분석에는 시장소득 10분위를 적용하였으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빈곤율 산출에는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소득 자료를 만들기 위한 원천별 자료와 기초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소득원천별로 가구의 소득과 분포를 보면 표본 가구 중 68.27%가 근로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은 33.50%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된 시장소득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했을 때 낮고, 본 연구의 행정자료로 산출된 (균등화) 시장소득과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으로 빈곤율과 지니계수를 구해본 결과 역시 2017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와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는데 저소득구간에서 이 소득의 파악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3-1〉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기초분석 결과

(단위: %, 천원/년)

구분	소득가구비율	평균	중위값	빈곤율 (중위25%)	빈곤율 (중위 50%)	지니계수
근로소득	68.27	3066.97	1623.00			
사업소득	33.50	594.93	0.00			
국민연금	16.97	78.34	0.00			
직역연금	2.63	77.70	0.00			
기타소득	11.87	46.27	0.00			
시장소득	79.01	3685.62	2232.00			
균등화 시장소득	79.01	2292.85	1536.00	32.36	39.46	0.59118
경상소득	91.67	3993.49	2581.00			
균등화 경상소득	91.67	2506.18	1787.00			
가처분소득	91.77	3730.67	2550.00			
균등화 가처분소득	91.77	2345.18	1765.5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가구 및 개인 표본의 구성과 특성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틀로 사용되는 시장소득 10분위, 재산 10분위,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각각의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소득과 재산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미리 밝혀두면, 시장소득 10분위에서는 1~2분위가 구분되지 않으며, 재산 10분위에서는 1~4분위가 구분되지 않는다. 특히 재산을 10분위로 구분했을 때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주 가구도 대부분 분위가 구분되지 않아서 분석 결과의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비율로 보면 시장소득 하위 약 21%가 1~2분위에 포함되었으며, 재산 하위 약 48%가 1~4분위로 포함되었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분석 계획 단계에서는 ‘0~5, 6~11, 12~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가구주 연령이 17세 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표본의 0.1%에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연령 구분을 하지 않았다. 즉 가구주 연령에 따른 분석은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로 구분하였다.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외에 개인의 수급 이력을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기 때문에 개인을 기준으로 한 기초분석 결과도 제시한다. 다만 이후 제시되는 인구집단별·육구영역별 분석에서는 분석대상이 전 가구 또는 전 인구가 아닐 수 있으므로 아래의 기초분석 결과와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먼저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을 보면 50~64세, 40~49세, 26~39세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는 약 20%, 25세 이하인 경우는 3%에 미치지 못한다. 소득 분위를 비교하면 30대 이하보다 40~50대 가구주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득 상위 분위에 분포하고 있

는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는 다시 소득 수준이 낮아졌다. 이러한 분포의 경향은 소득과 재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2-1-3-2〉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0.07	0.52	2.01	2.69	5.62	4.66	5.45	20.99
3분위	0.00	0.49	1.11	1.65	2.77	1.72	1.27	9.01
4분위	0.00	0.39	1.68	2.35	3.61	1.38	0.58	10.00
5분위	0.00	0.29	1.76	2.44	3.76	1.32	0.44	10.00
6분위	0.00	0.31	2.24	2.38	3.75	1.01	0.30	10.00
7분위	0.00	0.28	2.87	2.46	3.43	0.74	0.23	10.00
8분위	0.00	0.21	3.05	2.77	3.24	0.55	0.19	10.00
9분위	0.00	0.13	2.96	2.89	3.45	0.39	0.19	10.00
10분위	0.00	0.06	2.30	3.04	4.09	0.36	0.15	10.00
계	0.07	2.68	19.98	22.65	33.71	12.12	8.80	100.0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1-3-2〉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재산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0.06	2.52	12.90	10.26	14.04	4.36	3.41	47.55
5분위	0.00	0.02	0.30	0.42	0.91	0.38	0.42	2.45
6분위	0.00	0.05	1.16	1.84	3.63	1.72	1.60	10.00
7분위	0.00	0.04	1.55	2.28	3.62	1.50	1.00	10.00
8분위	0.00	0.02	1.63	2.62	3.60	1.32	0.81	10.00
9분위	0.00	0.02	1.37	2.66	3.88	1.34	0.77	10.03
10분위	0.00	0.01	1.06	2.56	4.04	1.50	0.80	9.97
계	0.07	2.68	19.98	22.65	33.71	12.12	8.80	100.0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에 따른 가구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은 집단이 재산 분위도 높게 나타나지만, 재산 1~4분위에 해당하는 집단만 보면 소득 분위 또한 꽤 높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의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현주·강희정·류정희·손병돈·이재원…김성아(2018)의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높은 전·월세 보증금 등을 보유한 높은 소득의 가구가 자가가 아니라면 소득은 높으면서 재산은 0이거나 0에 가까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음을 추정하였다(이현주 외, 2018, p.66). 행정자료에서 재산은 대체로 부동산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을 고려하면 40%정도의 가구에서 재산이 0인 것이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위가 전체 표본 가구의 절반 가까이 구분되지 않은 것은 분석에 한계로 작용하므로 재산자료의 보완이나 기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표 2-1-3-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 비율

(단위: %)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1.94	0.76	2.53	1.70	1.43	1.33	1.30	20.99
3분위	4.68	0.28	1.15	0.91	0.75	0.66	0.59	9.01
4분위	5.31	0.26	1.07	1.00	0.88	0.80	0.68	10.00
5분위	4.88	0.24	1.08	1.14	1.01	0.89	0.76	10.00
6분위	4.76	0.23	1.04	1.18	1.10	0.94	0.75	10.00
7분위	4.55	0.21	0.99	1.21	1.18	1.06	0.82	10.00
8분위	4.20	0.19	0.88	1.19	1.28	1.22	1.04	10.00
9분위	3.82	0.16	0.75	1.04	1.34	1.46	1.43	10.00
10분위	3.40	0.13	0.51	0.63	1.05	1.67	2.60	10.00
계	47.55	2.45	10.00	10.00	10.00	10.03	9.97	100.0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 개인의 연령에 따라 기초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50~64세 구간의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가구주 연령별 분석 결과와 동일하지만 26~39세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차이점이다. 가구주 연령별 분석에서는 17세 이하 집단이 매우 적은 비율을 보였으나 개인별 분석에서는 17세 이하가 16.50%의 비율을 보였으며, 18~25세도 10.55%로 나타나 전체 분석 대상을 개인 수준으로 보면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분위기를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20~50대가 상대적으로 상위 분위에 속하고 65세 이상 노인 집단이 하위 분위에 많이 분포해있어 가구주 구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5세 이하 집단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상위 분위에 속한 경우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도 반영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에 따른 개인 비율은 가구 비율의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2-1-3-4〉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개인 비율

(단위: %)

소득 \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1.20	0.52	1.27	1.52	3.09	2.69	2.86	13.15
3분위	1.12	0.89	0.99	1.13	1.82	1.11	0.80	7.86
4분위	1.72	1.19	1.66	1.69	2.40	0.92	0.48	10.07
5분위	1.85	1.34	1.95	1.83	2.62	0.89	0.41	10.89
6분위	1.99	1.30	2.43	1.81	2.61	0.69	0.33	11.17
7분위	2.24	1.24	2.89	1.90	2.44	0.54	0.28	11.53
8분위	2.33	1.24	2.99	2.17	2.33	0.44	0.28	11.78
9분위	2.14	1.40	2.90	2.30	2.48	0.34	0.30	11.87
10분위	1.91	1.42	2.49	2.41	2.88	0.31	0.27	11.69
계	16.50	10.55	19.57	16.76	22.67	7.94	6.01	100.0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1-3-5〉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개인 비율

(단위: %)

연령 재산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6.06	4.33	9.30	6.30	8.17	2.54	2.00	38.70
5분위	0.27	0.21	0.35	0.31	0.59	0.24	0.25	2.22
6분위	1.26	0.95	1.52	1.48	2.50	1.09	0.98	9.79
7분위	1.85	1.14	2.02	1.87	2.62	1.01	0.72	11.23
8분위	2.30	1.23	2.18	2.15	2.68	0.94	0.64	12.12
9분위	2.38	1.33	2.13	2.29	2.94	0.98	0.67	12.71
10분위	2.39	1.36	2.06	2.36	3.18	1.14	0.75	13.23
계	16.50	10.55	19.57	16.76	22.67	7.94	6.01	100.0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1-3-6〉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개인 비율

(단위: %)

소득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6.75	0.44	1.59	1.20	1.05	1.03	1.08	13.15
3분위	3.64	0.24	0.99	0.86	0.77	0.70	0.66	7.86
4분위	4.63	0.26	1.12	1.15	1.06	0.99	0.87	10.07
5분위	4.59	0.25	1.22	1.39	1.28	1.15	1.01	10.89
6분위	4.49	0.25	1.21	1.47	1.45	1.26	1.04	11.17
7분위	4.26	0.23	1.18	1.57	1.61	1.49	1.19	11.53
8분위	3.84	0.22	1.05	1.55	1.79	1.77	1.56	11.78
9분위	3.40	0.18	0.87	1.33	1.83	2.11	2.16	11.87
10분위	3.10	0.14	0.56	0.71	1.29	2.21	3.67	11.69
계	38.70	2.22	9.79	11.23	12.12	12.71	13.23	100.0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본의 가구 규모를 보면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이고, 대체적으로 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가 높을수록 가구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주 연령으로 보면 40~49세, 50~64세, 26~39세 순으로 가구 규모가 컸고 65~74세 가구주의 가구 규모도 2.0명 이상이었다. 소득 분위로 구분해봤을 때는 1~2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2명 대를 유지한 반면, 재산 분위로 구분했을 때는 9분위 이상에서 가구 규모가 3명을 넘어서서 소득 분위보다 재산 분위에서 가구 규모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분위 분석에서는 10분위에서 가구 규모가 가장 큰 것에 비해, 소득 분위 분석에서는 9분위와 8분위 순으로 가구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도 재산 분위 분석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소득 분위별·재산 분위별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과 재산이 낮은 집단에서 가구 규모가 작고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높을수록 가구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2-1-3-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 규모

(단위: 명)

연령 소득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1.29	1.13	1.61	1.81	1.43	1.51	1.41	1.50
3분위	2.00	1.21	2.13	2.60	2.14	1.93	1.85	2.09
4분위	4.39	1.29	2.26	2.82	2.40	2.26	2.48	2.41
5분위	.	1.41	2.41	2.97	2.63	2.36	2.77	2.61
6분위	.	1.33	2.49	3.03	2.71	2.48	3.00	2.68
7분위	2.00	1.26	2.44	3.16	2.85	2.74	3.14	2.76
8분위	.	1.26	2.27	3.26	3.04	2.86	3.31	2.83
9분위	.	1.31	2.11	3.22	3.20	2.95	3.14	2.84
10분위	.	1.36	2.11	3.01	3.06	2.71	2.82	2.80
계	1.31	1.26	2.21	2.89	2.55	2.05	1.81	2.4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1-3-8〉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 규모

(단위: 명)

연령 재산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1.30	1.22	1.86	2.37	2.05	1.70	1.50	1.95
5분위	1.00	1.63	2.37	2.74	2.32	1.84	1.49	2.18
6분위	1.62	1.67	2.44	2.89	2.50	1.97	1.74	2.35
7분위	1.36	1.89	2.72	3.18	2.79	2.15	2.02	2.69
8분위	1.54	2.03	2.94	3.37	2.96	2.29	2.11	2.90
9분위	1.35	2.07	3.06	3.50	3.10	2.38	2.28	3.04
10분위	.	2.35	3.29	3.64	3.23	2.57	2.47	3.18
계	1.31	1.26	2.21	2.89	2.55	2.05	1.81	2.4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1-3-9〉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평균 가구 규모

(단위: 명)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36	1.38	1.51	1.69	1.77	1.85	1.99	1.50
3분위	1.86	2.10	2.05	2.28	2.45	2.54	2.71	2.09
4분위	2.09	2.41	2.52	2.74	2.89	2.97	3.06	2.41
5분위	2.25	2.56	2.69	2.92	3.05	3.10	3.18	2.61
6분위	2.26	2.60	2.79	3.00	3.17	3.24	3.30	2.68
7분위	2.25	2.71	2.86	3.12	3.29	3.38	3.48	2.76
8분위	2.19	2.82	2.87	3.13	3.35	3.47	3.60	2.83
9분위	2.13	2.71	2.79	3.05	3.28	3.45	3.61	2.84
10분위	2.18	2.63	2.63	2.71	2.93	3.17	3.39	2.80
계	1.95	2.18	2.35	2.69	2.90	3.04	3.18	2.4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2장 인구집단별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제1절 근로연령층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1. 분석 대상

이 절의 분석은 근로연령층 가구의 경제활동관련과 관련된 위험을 다루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가구는 가구주(세대주)가 18-64세인 가구이다. 분석대상이 되는 제도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일모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일체,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산재보호급여 중 소득 지원 급여, 자녀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장려금이다. 이들 제도 각각에 대해 가구소득, 재산분위별 포괄성을 분석한다.

모든 분석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연령층 관련 분석은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하나, 실제 가구의 경제활동 결정은 여성 배우자의 경우 남편의 소득수준, 취업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존재한다. 또한, 명시적이든 명시적이지 않든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산재보험은 실직 가구의 소득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원제도가 실제 어떤 소득 수준의 가구에게 지급이 되며, 이로 인해 분배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나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의 사각지대를 채우고자 모든 분석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한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분석한다. 이들 급여가 설계는 개인을 목표로 하나 실제 작동은 가족의 생활을 돕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구와 개인 모두 분석해 보았다.

2. 소득 원천별 소득 구성

먼저 분석에 활용할 “16개 기관 추출결합 원자료”의 몇 가지 기초통계를 확인한다. 18-64세 가구주 가구의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지 않은 소득액을 분위별로 나누어 보면 가장 낮은 1분위는 평균액, 중위액이 152만 원, 154만 원으로 나타난다. 1분위 가구 특성 상 시장에서의 소득활동보다는 이전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장소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 5분위 시장 소득은 평균액 2,899만 원, 중위액 2,894만 원이며, 가장 높은 10분위는 평균 소득은 16,142만원, 중위 소득은 12,930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8-64세 가구주의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사업소득이 있다고 나타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소득 1-2분위 가구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없었으며, 3분위부터 사업소득 가구가 나타난다.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셀은 소득 3-5분위, 재산으로는 8-10분위에 주로 위치하며, 특히 소득 3-5분위의 재산 8-10분위 가구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가

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유추할 때 사업소득 있는 가구는 소득은 그리 높지 않으나, 재산은 있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2-1-1〉 분석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만 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가구시장소득 평균액	152	655	1,381	2,107	2,899	3,803	4,876	6,275	8,364	16,142	4,665
가구시장소득 중위액	154	645	1,385	2,103	2,894	3,797	4,862	6,250	8,290	12,930	3,330

주: 가구원수로 균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자료임.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2〉 18-64세 가구주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사업소득 있는 가구 비중

(단위: %)

구분		재산							
		1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 득	1~2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분위	47.69	50.31	51.32	56.34	59.69	59.61	54.19	50.75
	4분위	52.23	53.43	54.56	61.81	65.29	66.13	64.76	56.17
	5분위	44.51	47.38	45.10	51.69	57.48	59.34	57.75	48.75
	6분위	38.21	44.84	39.80	43.76	50.34	52.75	53.52	42.76
	7분위	33.10	41.66	35.90	38.30	41.52	46.66	47.28	37.58
	8분위	28.87	37.87	33.49	34.45	37.43	40.00	42.23	33.82
	9분위	26.40	33.72	30.92	32.42	33.16	35.83	38.20	31.37
	10분위	30.91	36.37	32.44	31.42	32.01	33.33	36.38	33.02
	전체	30.99	36.23	35.20	38.96	41.15	41.94	41.42	35.33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국세청 자료에서 사업소득은 법인 기업의 고용주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법인 기업 고용주의 소득이 가장 높고, 비법인 기업의 고용주 소득이 그 다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그 다음 순서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인 기업이 아닌 고용주 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만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용주는 약 150만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주의 약 세 배 정도 더 큰 규모를 보이는 특성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더 많이 포착되기 때문에 소득 3-5분위에서 사업소득 있는 가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이 높은 쪽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더 높은 비중을 보였을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 잠재력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이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별 분포이다.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

급으로 받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3개월 미만 계약(건설공사는 1년 미만)한 일자리에
서 얻는 임금 소득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개념상 일용근로소득은 대체로 건설공사나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예상대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소득으로는
3-5분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산으로는 5-7분위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소득 상위 분위
에서는 급격히 일용근로소득 있는 가구 비중이 떨어진다. 이를테면 소득 4분위 가구 중 일용근로소
득 있는 가구는 43.39%나 되지만, 10분위 가구 중 일용근로소득 있는 가구는 18.91%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난다.

〈표 2-2-1-3〉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일용근로소득 있는 가구 비중

(단위: %)

구분		재산							
		1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 득	1분위	0.06	0.13	0.19	0.06	0.08	0.05	0.03	0.07
	3분위	45.34	43.73	43.35	38.72	33.64	31.65	32.24	42.17
	4분위	45.71	49.94	47.57	41.54	37.29	35.08	32.52	43.39
	5분위	41.28	46.61	44.04	40.58	38.13	36.53	32.34	40.32
	6분위	36.03	41.70	41.95	38.70	35.64	34.91	31.40	36.60
	7분위	31.19	42.37	39.54	37.04	33.48	32.71	29.35	33.19
	8분위	26.13	37.68	38.49	36.20	30.97	30.05	27.68	29.82
	9분위	22.23	34.11	34.48	34.49	29.96	27.12	26.01	26.84
	10분위	14.49	22.72	23.94	25.26	23.50	21.22	18.54	18.91
	전체	27.23	33.82	34.72	33.66	30.02	27.66	24.09	28.63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4〉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근로소득 있는 가구 비중(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
는 가구 비중임)

(단위: %)

구분		재산							
		1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 득	1분위	0.01	0.02	0.02	0.04	0.05	0.01	0.02	0.01
	3분위	15.84	16.61	16.49	17.07	17.53	18.64	17.75	16.42
	4분위	43.20	41.89	44.76	45.99	46.05	46.76	49.52	44.43
	5분위	69.01	67.31	73.81	75.15	73.68	73.56	74.01	71.27
	6분위	81.45	80.21	85.45	87.68	86.72	85.30	84.47	83.63
	7분위	86.29	84.21	88.95	91.86	92.39	90.51	90.53	88.62
	8분위	88.58	86.88	90.27	93.53	94.66	94.73	94.35	91.35
	9분위	89.52	89.16	92.21	94.74	95.95	96.13	95.82	92.94
	10분위	88.62	89.21	90.60	93.30	95.39	95.94	95.44	92.74
	전체	56.68	56.76	64.64	72.75	76.76	78.93	80.87	65.46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있는 가구는 3개월 이상 계약 기간을 가진 임금 근로자, 법인 기업 대표자 등이 가구원으로 있는 가구이다. 이와 같은 특성상 소득 3분위에는 근로소득 있는 가구가 16.42% 밖에 되지 않으며, 4분위는 44.4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소득 7분위에서는 재산 7분위 이상, 소득 8분위 이상에서는 재산 6분위 이상에서 근로소득 있는 가구 비중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4분위에서 50%를 넘었던 사업소득이나 소득 4분위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일용근로소득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다.

재산은 1-4분위가 구분되지 않는다. 부동산만 파악 가능한 이번 분석 원자료 특성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이다. 전체 가구주 중 34세 이하인 사람 비중은 13.38%이지만, 재산이 없는 1-4분위에서는 22.16%나 위치한다. 35-54세 가구주는 전체 가구에서는 43.77%이지만 1-4분위에서는 42.82%가 위치한다. 전체 가구 비중에 비해 1-4분위에서의 비중이 낮은 현상은 55-74세에서 더 뚜렷이 관찰되고 75세 이상에서는 다소 약화된다. 재산이 있기 어려운 특성상 34세 이하 가구주 비중은 재산 분위가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각 분위에서 상대적 비중을 볼 때 34세 이상은 1-4분위에서, 35-54세는 9분위에서, 55-64세는 10분위에서, 65-74세는 6분위에서, 75세 이상은 5분위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55-64세는 5분위에서, 65-74세는 10분위에서도 해당 연령대 인구 비중에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자산이 축적된 사람도, 자산이 축소된 사람도 많은 연령 대 특징을 보여준다.

〈표 2-2-1-5〉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 분포

(단위: %)

재산분위	34세 이하	3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계
1분위	22.16	42.82	18.70	9.16	7.16	100.00
5분위	6.99	34.70	25.56	15.52	17.23	100.00
6분위	6.00	35.99	24.83	17.23	15.95	100.00
7분위	6.82	44.20	23.99	15.00	9.99	100.00
8분위	6.27	49.03	23.46	13.17	8.07	100.00
9분위	4.67	49.21	25.08	13.40	7.64	100.00
10분위	2.97	47.16	26.83	15.00	8.04	100.00
전체	13.38	43.77	21.93	12.12	8.80	100.0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근로장려금 수급

이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수급률과 수급액을 분석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와 배당 및 연금 소득을 합쳐 일정액 이하이면 장려금이 지원되는 구조이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

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어야 장려금이 지원되었다. 근로장려금에는 자녀 장려금 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보다 좀 더 소득 상한이 높아서 연간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되었다. 소득 외에도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근거해 올해 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려면 2016년 가구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이 자료는 2017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2017년 가구소득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이하 분석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근로연령대 가구주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은 소득 분위로는 3-5분위, 재산분위로는 1-7분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로는 6분위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가구가 상당히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1-6〉 가구주 18-64세 가구 중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포함) 수급가구 비중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2.20	3.06	4.24	3.39	0.78	0.29	0.07	2.21
	3분위	33.15	38.66	40.73	28.27	8.54	2.26	0.62	28.10
	4분위	36.72	42.60	41.74	29.00	10.78	2.60	0.87	29.97
	5분위	30.75	33.89	34.04	26.29	10.16	3.04	0.68	24.44
	6분위	16.81	18.92	22.02	19.69	8.10	2.98	0.54	14.46
	7분위	6.11	9.05	9.39	6.15	1.78	0.61	0.29	4.99
	8분위	2.85	4.91	4.68	2.69	0.63	0.24	0.11	2.16
	9분위	1.11	2.33	2.44	1.29	0.39	0.21	0.14	0.88
	10분위	0.33	0.28	0.51	0.38	0.16	0.09	0.04	0.21
	전체	14.04	17.20	17.73	12.22	3.83	1.02	0.25	10.59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7〉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포함) 수급가구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0.18	2.48	2.67	2.08	2.21
	3분위	2.69	33.21	34.42	26.80	28.10
	4분위	5.49	33.55	35.12	27.63	29.97
	5분위	7.36	29.79	29.87	19.71	24.44
	6분위	5.63	19.47	18.18	9.82	14.46
	7분위	1.76	4.32	4.93	5.86	4.99
	8분위	0.95	1.54	1.73	3.20	2.16
	9분위	1.01	0.72	0.59	1.26	0.88
	10분위	0.18	0.19	0.22	0.21	0.21
	전체	3.09	10.72	12.43	9.86	10.59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가구주 연령별, 소득 분위별로 보면 26-49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 소득 3-4분위에서 30% 넘는

수급률을 보였으며, 26-49세 소득 5분위, 50-64세 소득 3-4분위는 20% 후반대의 수급률을 보였다. 18-25세는 수급률이 낮게 나타는데, 이 연령대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2017년에는 수급할 수 없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연령별, 재산 분위별로 보면 18-25세와 26-39세는 5-7분위, 40-64세는 1-6분위에서 수급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2-2-1-8〉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포함) 수급가구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2.86	11.96	18.19	14.93	14.04
	5분위	7.77	15.10	19.31	17.14	17.20
	6분위	8.61	16.90	19.71	17.13	17.73
	7분위	8.24	14.65	14.64	9.69	12.22
	8분위	4.48	5.87	5.05	2.01	3.83
	9분위	1.94	2.08	1.19	0.53	1.02
	10분위	0.00	0.46	0.29	0.16	0.25
	전체	3.09	10.72	12.43	9.86	10.59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9〉 16-64세 가구주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별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제외) 수급가구 비중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2.00	2.89	3.90	2.54	0.27	0.12	0.02	1.95
	3분위	31.35	36.78	37.72	21.49	2.54	1.08	0.44	25.61
	4분위	33.10	39.06	36.86	20.13	2.52	1.20	0.56	25.71
	5분위	21.92	25.32	23.01	12.56	1.65	0.90	0.18	15.99
	6분위	5.82	9.59	8.88	4.65	0.76	0.48	0.28	4.69
	7분위	3.52	6.84	6.42	2.95	0.52	0.32	0.21	2.87
	8분위	2.09	4.03	3.82	1.97	0.38	0.15	0.07	1.61
	9분위	0.94	2.17	2.08	1.06	0.24	0.18	0.11	0.74
	10분위	0.29	0.19	0.46	0.34	0.13	0.07	0.04	0.18
	전체	10.87	14.13	13.32	6.60	0.81	0.37	0.14	7.64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근로장려금 제도 설계를 보면 자녀 장려금은 다소 높은 소득까지 지급되는 특성이 있다. 자녀 장려금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만 보면 소득으로는 3-4분위, 재산으로는 1-6분위에 집중되어 자녀 장려금을 포함할 때보다는 좀 더 소득과 재산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 5분위이면서 재산 1-6분위, 재산 7분위이면서 소득 3-4분위도 20%를 넘는 수급 비중이 나타난다. 2017년 근로장려금은 2016년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맨 앞에서 본 소득액 표에 따르면 4분위까지

는 대상이 되며, 맞벌이 가구라면 5분위까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로 보면 소득 5분위 뿐 아니라 6분위 이상에도 일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의 분석은 2016년 소득이 아니라 2017년 소득에 근거하기 때문에, 소득 산정 시점인 2016년에 비해 실제 지원 시점인 2017년에는 소득이 상승한 가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는 의미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과 지급 시점 간 시차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저소득 가구 표적성도 지급 시점 기준으로 보면 일부 어긋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 장려금은 4천 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맨 앞에서 본 표에 따르면 대략 6분위에 해당된다.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는 소득 수준으로 보면 3-6분위 사이에 수급자가 몰려 있어 지급 시점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제도 취지에 부응하게 수급 가구가 표적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1-10〉 16-64세 가구주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별 자녀 장려금 수급가구 비중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0.78	0.90	1.20	1.73	0.59	0.24	0.05	0.81
	3분위	10.99	12.38	13.09	14.84	6.97	1.71	0.32	10.07
	4분위	14.48	15.12	17.27	17.63	9.49	2.00	0.44	12.95
	5분위	15.99	14.26	17.78	18.55	9.20	2.49	0.55	13.63
	6분위	12.13	10.94	14.66	15.86	7.49	2.55	0.30	10.64
	7분위	3.02	3.07	3.76	3.56	1.32	0.31	0.13	2.46
	8분위	0.96	1.11	1.16	0.96	0.33	0.10	0.05	0.71
	9분위	0.22	0.31	0.50	0.30	0.16	0.05	0.07	0.20
	10분위	0.06	0.08	0.07	0.06	0.03	0.03	0.00	0.04
	전체	6.38	6.57	7.95	7.87	3.29	0.77	0.13	5.1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11〉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포함)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94.60	103.14	92.61	75.06	55.30	46.76	73.40	91.81
	3분위	77.47	83.22	80.81	63.50	51.44	60.09	80.31	76.34
	4분위	120.91	121.62	121.91	81.02	54.49	70.48	70.97	115.08
	5분위	83.36	85.74	80.64	52.35	38.95	41.30	37.30	77.16
	6분위	54.06	64.12	53.75	30.60	21.03	23.06	33.30	48.05
	7분위	58.45	67.72	63.27	35.35	28.15	30.86	63.58	54.69
	8분위	62.13	64.55	62.41	45.58	58.18	35.52	83.04	59.47
	9분위	60.92	71.39	61.20	46.31	47.91	64.73	99.48	59.43
	10분위	59.60	17.59	52.42	49.04	45.72	64.92	65.48	56.23
	전체	88.16	91.75	85.76	55.20	39.89	44.04	61.48	82.1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18-64세 가구주 가구 중 자녀 장려금 포함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보면, 소득 4분위이면서 재산 1-6분위에 속하는 가구가 약 120만 원 정도를 수급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3분위와 5분위는 각각 76만 원과 77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8분위 이상과 재산 8분위 이상은 수급률 자체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의미있는 수급액 수치라 볼 수 없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소득 4분위 가구 중 50-64세 가구의 수급액은 100만 원으로 4분위 수급 가구 평균 115만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4분위 이하에서는 50-64세 가구주 가구의 평균 수급액이 대체로 4분위에 속하는 전체 근로연령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6분위 이상에서는 반대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2-2-1-12〉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145.72	103.02	107.20	77.16	91.81
	3분위	106.76	89.59	92.08	57.20	76.34
	4분위	146.14	124.74	125.60	100.24	115.08
	5분위	76.04	74.37	80.34	76.04	77.16
	6분위	49.35	37.16	45.58	63.83	48.05
	7분위	65.67	43.14	46.66	66.36	54.69
	8분위	66.58	56.95	48.49	65.54	59.47
	9분위	47.24	55.02	57.55	62.71	59.43
	10분위	78.00	48.83	65.01	52.68	56.23
	전체	93.05	80.92	89.13	76.63	82.1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로 보면, 재산 5분위 수준에서 수급액이 가장 높고, 1-4분위와 6분위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표 2-2-1-13〉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97.15	88.69	97.83	78.84	88.16
	5분위	115.96	87.52	102.57	87.17	91.75
	6분위	75.07	81.47	93.25	82.81	85.76
	7분위	41.57	50.73	56.69	56.81	55.20
	8분위	37.34	37.63	40.72	41.40	39.89
	9분위	14.10	38.64	45.10	50.29	44.04
	10분위	0.00	42.37	64.80	72.12	61.48
	전체	93.05	80.92	89.13	76.63	82.1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4.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근로연령대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직업능력 증진을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I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장 등이 대상이 된다. II 유형은 18-34세 청년과 중장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는데, 청년은 소득 무관하고,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제한된다. 둘 다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훈련비도 약간의 자부담과 함께 지원된다. 참여 인구집단 규모는 2017년의 경우 35만 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 청년층이 약 20만 명, 저소득층이 약 13만 명을 차지해 청년 참여자 비중이 높다.

청년의 경우는 소득 제한이 없지만, 나머지 인구집단에 대해서는 참여에서 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참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음영은 2%를 초과한 소득×재산 분위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예상에 부합하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가구 비중은 중위 소득 이하인 3-5분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재산 분위로는 소득 3-5분위에서는 큰 차이 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표 2-2-1-14〉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비중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0.95	0.90	0.82	0.75	0.87	0.60	0.46	0.89
	3분위	2.95	3.14	1.89	2.62	2.71	1.84	2.26	2.71
	4분위	2.56	2.68	2.51	2.73	2.70	2.50	2.23	2.56
	5분위	2.20	2.55	2.28	2.27	2.47	2.51	2.73	2.31
	6분위	1.60	2.20	2.03	2.53	2.25	2.39	1.75	1.91
	7분위	1.12	1.47	1.72	1.96	1.90	2.08	1.42	1.50
	8분위	0.85	1.46	1.49	1.65	1.49	1.70	1.50	1.26
	9분위	0.69	1.19	1.30	1.45	1.48	1.55	1.19	1.12
	10분위	0.45	0.56	0.91	1.08	1.18	1.05	0.90	0.81
	전체	1.47	1.79	1.69	1.91	1.82	1.72	1.37	1.59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로 보면 25세 이하와 50-64세 집단에서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18-25세 가구주 가구의 취업성공패키지 수급 비중은 5분위 이하에 몰려 있으며, 청년 참가자가 높은 현상의 반영으로 3-5분위는 4%가 넘는 참가율을 보였다. 소득 수준 중간 이하에서 수급 비중이 높은 현상은 다른 연령대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지만, 소득 3-5분위에 주로 몰려 있는 현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화된다. 일례로, 가구주 50-64세는 소득 2-9분위에서 고르게 2%를 상회하는 지원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 50-64세 가구에 소득수준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는 청년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가구주 연령별 재산수준별로 보면 18-25세 가구주 가구는 재산 5-6분위에서 지원율이 높게 나

타나며, 역시 연령이 상승할수록 상위 재산 분위로 지원받은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0-64세의 경우 재산 7분위 이상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15〉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2.64	1.41	0.87	0.55	0.89
	3분위	4.39	2.82	2.40	2.55	2.71
	4분위	4.38	2.33	2.01	2.84	2.56
	5분위	4.00	1.88	1.77	2.73	2.31
	6분위	1.71	1.35	1.55	2.49	1.91
	7분위	1.01	0.88	1.19	2.27	1.50
	8분위	0.52	0.60	0.74	2.37	1.26
	9분위	0.45	0.30	0.52	2.36	1.12
	10분위	0.83	0.10	0.27	1.61	0.81
전체		2.78	1.09	1.16	2.08	1.59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16〉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2.72	1.17	1.30	1.67	1.47
	5분위	4.31	1.22	1.66	1.99	1.79
	6분위	5.15	1.26	1.27	1.98	1.69
	7분위	2.74	1.10	1.37	2.58	1.91
	8분위	2.67	0.87	1.17	2.72	1.82
	9분위	1.00	0.78	0.87	2.63	1.72
	10분위	3.76	0.58	0.57	2.09	1.37
	전체	2.78	1.09	1.16	2.08	1.59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17〉 18-34세 있는 18-64세 가구주 가구의 소득, 재산별 취업성공패키지 참가 비중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2.09	2.76	2.55	2.01	2.21	1.20	0.89	2.05
	3분위	4.20	5.36	3.17	4.64	4.38	3.37	3.98	4.13
	4분위	3.96	4.30	3.74	4.80	4.44	3.91	3.61	4.04
	5분위	3.45	4.35	3.49	3.49	3.59	3.29	3.99	3.52
	6분위	2.41	3.76	3.41	3.64	3.29	3.33	2.48	2.85
	7분위	1.55	2.23	2.65	3.03	3.11	3.06	2.05	2.19
	8분위	1.31	2.64	2.62	2.71	2.63	2.96	2.56	2.06
	9분위	1.11	2.29	2.24	2.44	2.63	2.80	2.16	1.93
	10분위	0.90	1.19	1.72	2.04	2.28	2.03	1.70	1.57
	전체	2.32	3.24	2.89	3.15	3.04	2.85	2.33	2.59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청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18-34세 청년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참가 비중을 분석해 보았다. 18-64세 가구주 가구주 18-34세 청년이 있는 가구에 한정한 결과이다. 4% 이상 높은 참여를 보이는 소득, 재산 분위는 소득 3-4 분위, 재산 8분위 이하이다. 소득 3-6분위의 대부분의 재산 분위 및 소득 7분위의 재산 7-9분위에서는 3% 이상 참여도를 보였다. 소득 제한이 없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특성상 소득 10분위에서도 재산 7-9분위의 경우 2% 이상 참여도를 보이는 등 전 소득 분위에 고루 퍼져 있긴 하지만, 이상과 같이 소득 3-6분위에서 좀 더 활발한 참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18〉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50.65	47.91	68.17	53.90	56.70	62.47	67.48	53.07
	3분위	51.19	51.60	53.22	59.99	56.72	68.79	44.75	52.87
	4분위	53.44	51.89	57.12	53.69	48.54	49.67	51.05	52.95
	5분위	49.39	57.88	46.51	56.86	58.48	46.34	51.07	50.90
	6분위	51.62	45.33	50.83	54.14	52.37	53.39	51.44	52.04
	7분위	44.99	52.44	50.95	52.06	49.06	60.38	54.60	50.35
	8분위	48.24	37.14	49.40	53.67	42.08	48.44	44.14	47.57
	9분위	49.82	73.75	44.18	50.61	45.45	48.96	51.06	49.07
	10분위	46.84	38.97	49.61	51.86	42.81	42.77	41.76	44.39
	전체	50.49	51.26	51.78	54.15	49.79	51.39	48.47	50.89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19〉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53.63	55.66	54.24	49.54	53.07
	3분위	45.94	59.83	53.18	51.72	52.87
	4분위	47.16	56.20	54.29	52.07	52.95
	5분위	40.78	50.18	52.71	51.51	50.90
	6분위	39.59	52.72	58.44	49.99	52.04
	7분위	33.57	53.27	56.20	47.82	50.35
	8분위	41.47	54.26	45.33	46.67	47.57
	9분위	31.34	62.01	50.75	47.49	49.07
	10분위	33.67	36.06	45.55	44.62	44.39
	전체	45.65	54.76	53.48	49.27	50.89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취업성공패키지 평균 수급액을 보면, 소득이 낮은 쪽에 비해 높은 쪽에서 평균 지원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났던 3-4분위는 가구 당 약 52-53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 8-10분위는 40만 원 중후반대 정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분위별

로는 액수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18-25세의 경우에도 3-4분위 평균 지원액이 소득 상위 분위보다 높게 나타나며, 40-49세나 50-64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경향은 26-39세에서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26-39세 10분위는 지원액이 적지만 참여 가구가 적어 의미있다고 보긴 어렵다.)

연령대별로는 26-39세 가구주 가구와 40-49세 가구주 가구의 평균 지원액이 53-54만원으로 청년이나 중고령층 가구 지원액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아도 18-25세를 제외하면, 재산분위별로는 분위에 따른 지원액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 모습이 나타났다.

〈표 2-2-1-20〉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44.85	53.78	51.90	49.22	50.49
	5분위	46.94	51.70	49.42	52.07	51.26
	6분위	60.74	57.45	55.63	49.02	51.78
	7분위	57.70	57.80	57.77	52.24	54.15
	8분위	52.65	53.42	53.56	48.06	49.79
	9분위	29.23	63.21	56.39	49.05	51.39
	10분위	33.06	54.12	52.42	47.43	48.47
전체		45.65	54.76	53.48	49.27	50.89

표: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5.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수급 비중을 보면, 소득 수준별로는 5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소득 4-7분위에서 7% 이상의 수급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수준으로는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급률이 가장 높다는 의미이다. 재산 분위로는 7분위에서 가장 높은 수급 비중을 보인다. 국세소득에는 근로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낮으면 하위 분위로 위치하게 된다. 시간당 임금이 높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나 노동시장에 간헐적으로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위 분위로 위치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피보험기간을 가져야 하므로, 경미하게 일하는 일자리 종료 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률이 뒤에서 볼 것처럼 소득 하위 분위에서 낮은 점도 3분위 이하 낮은 실업급여 수급률의 원인이 된다.

실업급여 수급 가구 비중은 가구주 연령별로는 50-64세 > 26-39세 > 40-49세 > 18-25세 순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고연령대에서 높고, 저연령대에서 낮은 셈이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소득 5분위에서 높으며, 18-25세는 5-6분위, 26-39세는 4-6분위, 40-49세는 4-7분위, 50-64세는 4-8분위에서 수급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좀 더 수급 비중이 위쪽 소득 분위로 넓게 퍼지는 모습을 보였다.

〈표 2-2-1-21〉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실업급여 수급 비중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0.92	1.35	1.43	1.97	1.88	2.21	1.43	1.16
	3분위	2.75	3.04	3.85	4.37	4.48	5.02	4.07	3.33
	4분위	6.85	7.55	8.95	8.77	9.12	8.95	8.88	7.70
	5분위	8.46	7.79	10.06	10.70	9.69	9.66	9.68	9.15
	6분위	7.66	8.65	8.70	9.46	8.73	9.22	9.25	8.35
	7분위	6.34	8.97	8.31	8.40	8.78	8.27	8.37	7.46
	8분위	5.19	5.90	7.00	7.54	7.77	7.47	7.03	6.42
	9분위	3.60	4.85	5.65	6.10	5.58	5.40	5.36	4.80
	10분위	2.02	2.77	3.48	3.71	3.47	3.27	2.77	2.77
	전체	4.69	5.59	6.61	7.24	6.84	6.37	5.52	5.5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22〉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실업급여 수급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0.51	1.46	0.94	1.22	1.16
	3분위	0.78	3.81	3.25	3.64	3.33
	4분위	2.99	8.00	6.35	8.96	7.70
	5분위	5.75	10.13	7.23	10.19	9.15
	6분위	4.84	7.77	6.98	9.85	8.35
	7분위	2.59	6.07	6.31	9.85	7.46
	8분위	1.71	4.76	5.11	9.39	6.42
	9분위	1.60	3.30	3.59	7.22	4.80
	10분위	0.92	1.79	1.96	3.95	2.77
	전체	2.37	5.09	4.55	6.82	5.5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23〉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실업급여 수급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2.30	4.83	4.12	5.42	4.69
	5분위	3.59	4.99	3.72	6.70	5.59
	6분위	2.49	5.75	5.12	7.70	6.61
	7분위	4.82	6.18	5.65	8.72	7.24
	8분위	3.70	5.72	5.41	8.41	6.84
	9분위	3.12	5.34	4.64	7.93	6.37
	10분위	3.75	4.66	4.00	6.71	5.52
	전체	2.37	5.09	4.55	6.82	5.5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실업급여 수급 비중을 보면, 연령 관계없이 대체로 재산 7분위에서

높은 수급 비중을 보이며, 50-64세는 모든 재산 수준에서 5% 이상의 수급 비중을 보여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넓게 수급자가 퍼져 있는 모습을 보였다.

〈표 2-2-1-24〉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실업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453.72	456.59	538.76	507.69	591.25	626.22	667.44	504.75
	3분위	513.75	532.31	528.47	526.17	557.71	572.52	631.61	534.76
	4분위	491.31	490.10	501.99	507.55	520.33	529.64	554.15	504.34
	5분위	419.52	379.57	422.08	453.08	447.26	475.81	515.25	437.69
	6분위	370.77	403.78	393.94	426.32	415.31	439.36	487.18	401.43
	7분위	356.88	368.77	391.04	404.14	415.36	425.10	444.89	390.21
	8분위	348.97	389.53	378.38	394.43	403.84	405.29	427.15	383.39
	9분위	347.69	384.84	364.30	368.87	385.71	388.79	407.71	374.38
	10분위	346.06	388.42	348.29	364.95	368.00	385.67	403.69	373.99
	전체	404.72	413.23	419.69	429.36	431.26	441.64	463.43	422.54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25〉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실업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269.71	458.56	470.28	546.09	504.75
	3분위	369.20	525.00	506.29	560.19	534.76
	4분위	390.98	505.36	482.46	518.15	504.34
	5분위	341.55	434.00	425.84	448.99	437.69
	6분위	308.02	379.20	376.71	426.88	401.43
	7분위	290.62	379.30	372.40	406.18	390.21
	8분위	274.05	376.17	365.08	396.62	383.39
	9분위	283.10	365.08	352.93	387.74	374.38
	10분위	402.26	356.36	349.56	387.36	373.99
	전체	330.37	411.17	403.24	438.77	422.54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 대체율은 전직장 평균임금의 50%이며, 지급 기간도 최소 3개월 이상인 특성으로 인해 지급액도 비교적 다른 지원금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소득 하위 분위에서 대체로 지급액이 크게 나타나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 3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및 4분위이면서 재산 6분위 이상에서 수급액이 높았다. 300만 원대 수급액은 주로 소득 8-10분위에서 나타났다. 하위분위에서 수급액이 높았다는 것은 보장성이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구란 기본적으로 가구원이 실업을 경험했다는 의미이므로, 다른 소득이 적은 장기 실업 급여 수급가구여서 하위 소득 분위에 위치했을 수 있다. 어느 가능성이 더 높은지는 실업기간과 취업 기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 가능하나 이 자료에는 관련 정보가 없어 판

단하기 어렵다.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로 보면 평균 수급액이 500만 원을 넘는 셀은 26-39세 3-4분위, 40대 3분위, 50-64세 1-4분위이다. 평균 400만 원을 넘는 셀은 26-39세 1-5분위, 40대 1-5분위, 50-64세 1-7분위까지로 제한된다.

재산별로는 소득과 달리 뚜렷이 하위 분위에서 수급액이 높은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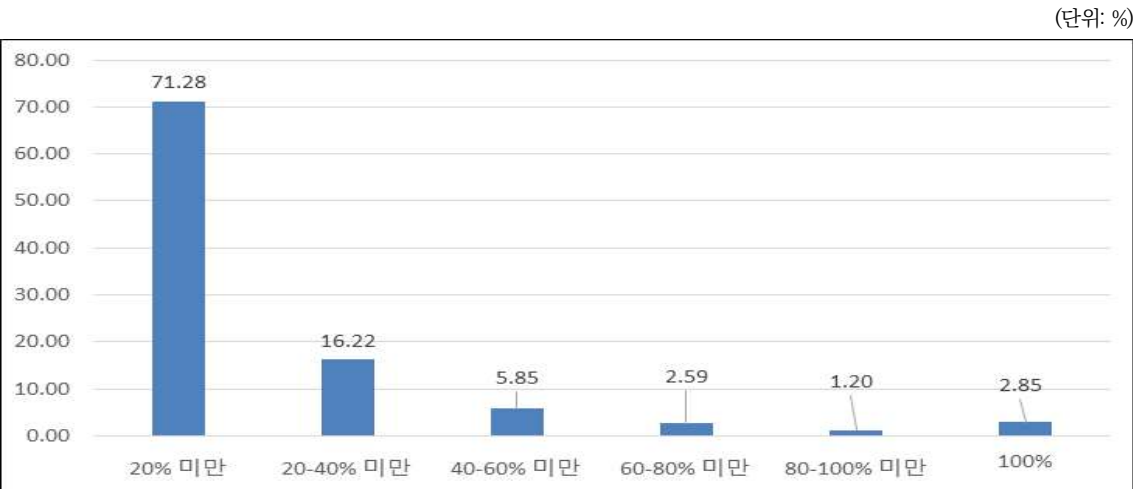
〈표 2-2-1-26〉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실업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328.00	393.36	396.05	424.69	404.72
	5분위	336.77	408.31	373.59	425.40	413.23
	6분위	392.00	417.27	400.41	426.91	419.69
	7분위	365.32	440.52	406.14	435.83	429.36
	8분위	260.82	440.94	400.57	443.17	431.26
	9분위	382.33	439.51	401.90	458.21	441.64
	10분위	397.56	473.28	441.59	469.96	463.43
	전체	330.37	411.17	403.24	438.77	422.54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2-2-1-1〕 실업급여 2017년 수급가구의 시장소득+실업급여 중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17년 수급가구의 시장소득+실업급여에서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절대 다수의 가구인 71%의 가구에서 20% 미만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 미만인 가구는 16%이며,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대략 6-7%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핏 보기엔 실업 경험 가구 소득에서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200만 원을 받으면서 6개월 일하고, 50% 대체율인 100만 원을 받으면서 3개월 실업급여 수급했으며, 3개월은 그냥 미취업 상태로 있었던 가구를 상정해 본다면, 1,200만 원+300만 원 중 실업급여 비중은 1/5인 20%가 된다.

실제 상황은 하한액과 상한액, 수급기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지만, 우리나라의 짧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으로 인해 년 중 일정 기간의 취업기간이 발생하면 시장소득+실업급여 소득 중 실업급여 소득 비중이 20%가 되는 것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6.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DB는 각종 일자리 사업 관련 참여 실적이 입력되는 DB이다. 아래 실적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이 절에서 독립적으로 분석되는 사업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여 비중은 대략 소득 3-5분위이면서 재산 5-7분위인 셀에서 3%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며,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1%대로 낮게 나타난다.

〈표 2-2-1-27〉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수급 비중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0.25	0.38	0.84	0.65	0.64	0.48	0.41	0.36
	3분위	1.65	2.99	3.97	3.60	2.62	2.15	2.24	2.19
	4분위	2.21	3.15	4.13	3.29	2.85	3.23	2.27	2.65
	5분위	2.03	3.38	3.57	2.95	2.69	2.91	2.64	2.49
	6분위	1.59	3.03	2.83	2.52	2.42	2.37	2.45	2.07
	7분위	1.24	2.09	2.76	2.48	2.43	2.35	2.16	1.87
	8분위	0.98	1.68	2.32	2.25	2.11	1.99	2.24	1.64
	9분위	0.79	1.22	1.94	2.50	1.88	1.79	1.82	1.49
	10분위	0.43	1.23	1.16	1.75	1.35	1.39	1.07	0.99
	전체	1.20	2.08	2.62	2.45	2.10	1.99	1.73	1.6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28〉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수급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0.11	0.18	0.26	0.50	0.36
	3분위	0.47	1.03	2.11	3.01	2.19
	4분위	0.78	1.29	2.28	3.73	2.65
	5분위	1.05	1.24	1.98	3.51	2.49
	6분위	0.87	1.00	1.75	3.00	2.07
	7분위	0.52	0.82	1.72	2.97	1.87
	8분위	0.35	0.68	1.67	2.61	1.64
	9분위	0.36	0.46	1.38	2.51	1.49
	10분위	0.52	0.27	0.64	1.66	0.99
	전체	0.55	0.73	1.47	2.47	1.6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가구주 연령대로 보면 50-64세에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 3-6분위에서 3%를 넘는 참여율을 보였다. 가구주 연령대 50-64세면 본인과 자녀가 모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2-2-1-29〉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수급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0.48	0.61	1.13	1.91	1.20
	5분위	1.06	1.27	1.55	2.62	2.08
	6분위	1.24	1.15	2.06	3.40	2.62
	7분위	1.81	0.98	2.26	3.20	2.45
	8분위	1.21	0.85	1.77	2.92	2.10
	9분위	4.03	0.89	1.51	2.71	1.99
	10분위	0.00	0.79	1.32	2.23	1.73
전체		0.55	0.73	1.47	2.47	1.6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수급액은 낮은 소득 및 재산 분위에서 높고, 높은 소득 및 재산 분위에서 낮은 경향이 보인다.

〈표 2-2-1-30〉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766.66	648.45	735.27	744.55	590.47	629.43	576.14	723.40
	3분위	730.96	643.10	681.80	811.41	639.72	583.19	521.14	704.51
	4분위	665.20	462.88	567.50	791.72	783.05	680.90	414.49	651.73
	5분위	624.75	744.64	528.14	591.61	573.43	847.81	667.60	635.36
	6분위	566.86	494.55	480.30	643.49	624.03	511.10	623.25	572.90
	7분위	612.12	320.06	672.66	589.93	794.38	473.39	801.68	643.86
	8분위	480.71	657.45	429.71	648.61	479.73	357.41	628.90	494.57
	9분위	476.53	608.05	493.03	415.48	764.03	495.89	523.14	525.46
	10분위	495.37	436.00	265.29	400.92	465.71	404.41	441.16	434.98
	전체	648.16	559.95	592.78	661.74	634.72	546.03	568.91	620.1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 1-2분위는 수급 가구가 얼마되지 않으므로 수급액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급액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이는 연령을 나누어서 보아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수급액이 낮아지는 현상은 재산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표 2-2-1-31〉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1,088.02	1193.44	713.35	663.40	723.40
	3분위	489.04	923.00	783.32	639.02	704.51
	4분위	848.90	1074.28	673.05	524.79	651.73
	5분위	441.99	924.39	549.79	606.96	635.36
	6분위	231.91	614.90	732.10	524.96	572.90
	7분위	233.57	772.55	668.74	611.17	643.86
	8분위	238.23	533.28	561.31	456.09	494.57
	9분위		522.14	608.29	498.36	525.46
	10분위	330.00	566.40	344.47	439.99	434.98
	전체	490.84	799.05	650.49	567.22	620.1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32〉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536.21	799.06	689.53	569.46	648.16
	5분위	24.00	588.79	430.94	592.07	559.95
	6분위	210.29	1174.23	394.29	573.86	592.78
	7분위	186.52	912.48	737.87	591.94	661.74
	8분위		809.38	650.24	586.84	634.72
	9분위		571.37	664.01	505.86	546.03
	10분위		489.74	653.49	551.27	568.91
	전체	490.84	799.05	650.49	567.22	620.1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33〉 2017년 일모아 재정지원에 참여한 일수가 있는 사람 중 2015년 일모아 재정지원에서도 참여한 일수가 있는 사람

(단위: %)

		2015년		
		없음	있음	계
2017년	없음	99.63	0.37	100.00
		99.62	52.96	99.29
	있음	53.48	46.52	100.00
		0.38	47.04	0.71
	계	99.30	0.7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일모아 재정지원 사업에 2017년 참여한 사람들 중 2015년에도 참여했던 사람은 46%인 것으로 나타난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2년 전에도 일모아 DB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6. 모성보호 제도 수급

여기에 포함되는 모성보호 수급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이다. 18-64세 가구를 대상으로 모성보호 제도 수급률을 보면, 1.5% 이상 수급률 기준으로 볼 때 소득 6-9 분위이면 서 대략 재산 7-10분위 셀에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아무래도 26-39세에서 높게 나타나고, 특히 5분위 이상에서 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출산하고, 모성 보호 제도가 활발한 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인 점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표 2-2-1-34〉 모성보호 수급 가구 비중: 18-64세 가구주 가구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0.09	0.23	0.08	0.25	0.34	0.37	0.22	0.13
	3분위	0.33	0.55	0.20	0.51	0.65	0.55	0.66	0.39
	4분위	0.58	0.41	0.37	0.60	1.11	1.06	1.03	0.66
	5분위	0.84	0.25	0.67	1.05	1.47	1.19	1.30	0.95
	6분위	1.04	0.80	0.83	1.38	1.72	1.57	1.43	1.20
	7분위	1.39	1.05	1.04	1.74	2.15	2.07	2.08	1.60
	8분위	1.57	1.05	1.07	1.59	2.28	1.88	2.06	1.70
	9분위	1.49	0.90	0.83	1.12	1.81	1.65	1.97	1.53
	10분위	1.30	1.69	0.86	0.94	1.03	1.24	1.48	1.27
	전체	0.87	0.70	0.67	1.12	1.56	1.42	1.53	1.06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35〉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모성보호 수급 가구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0.05	0.59	0.08	0.01	0.13
	3분위	0.04	1.65	0.28	0.02	0.39
	4분위	0.13	2.38	0.42	0.06	0.66
	5분위	0.32	3.35	0.61	0.10	0.95
	6분위	0.49	3.75	0.61	0.11	1.20
	7분위	0.54	4.05	0.95	0.10	1.60
	8분위	0.25	4.26	0.79	0.15	1.70
	9분위	0.17	3.95	0.75	0.14	1.53
	10분위	0.35	3.93	0.85	0.09	1.27
	전체	0.22	3.34	0.61	0.08	1.06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도 26-39세의 경우 재산이 있을수록 모성보호 수급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표 2-2-1-36〉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모성보호 수급 가구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0.21	2.29	0.40	0.03	0.87
	5분위	0.53	3.19	0.34	0.04	0.70
	6분위	0.74	2.86	0.43	0.08	0.67
	7분위	0.28	4.43	0.55	0.07	1.12
	8분위	0.49	5.97	0.80	0.12	1.56
	9분위	0.00	5.98	0.95	0.15	1.42
	10분위	0.00	7.56	1.16	0.17	1.53
	전체	0.22	3.34	0.61	0.08	1.06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모성보호 제도 수급 가능성이 있는 0-8세 아동이 있는 가구 비중을 보면 소득으로는 6-9분위이며 재산으로는 7-10분위에 20% 넘는 셀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모성보호제도는 보통 출산 전후 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좀 더 범위를 좁혀서 0-1세 아동이 있는 가구 비중을 보더라도 소득 6-8분위이면서 재산은 7-10분위 셀에서 6%를 넘는 비중을 보였다. 이 셀 분포는 앞서 본 모성보호 제도 수급이 가장 활발한 셀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를 보면 모성보호 제도 수급은 소득 및 재산 모두 중상위 이상에서 특히 활발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아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소득 및 재산 모두 중상위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현상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1-37〉 0-8세 아동이 있는 가구 비중: 18-64세 가구주 가구 대상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6.47	4.82	6.43	10.72	12.37	12.33	11.70	7.46
	3분위	11.36	9.45	10.82	15.23	17.09	15.51	14.31	12.40
	4분위	13.19	12.68	13.03	18.24	20.10	19.16	17.09	14.86
	5분위	14.53	10.72	13.66	19.80	20.92	17.91	17.31	16.00
	6분위	16.21	12.97	16.75	23.12	24.87	23.53	20.96	18.88
	7분위	17.74	13.98	18.12	25.55	30.16	28.70	26.80	21.87
	8분위	16.17	17.13	14.87	21.50	28.24	28.57	28.24	20.91
	9분위	13.43	12.87	10.72	14.05	20.74	23.64	25.66	17.45
	10분위	12.60	12.72	10.25	9.67	13.41	16.17	18.80	14.58
	전체	12.99	11.46	12.97	18.51	21.86	21.49	21.11	16.01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38〉 0-1세 아동이 있는 가구 비중: 18-64세 가구주 대상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1.62	1.39	1.73	2.98	2.68	2.93	2.38	1.85
	3분위	2.93	2.15	2.38	3.49	3.98	3.67	3.23	3.04
	4분위	3.76	3.25	3.06	4.71	4.75	4.39	3.66	3.89
	5분위	4.57	2.88	3.66	5.66	5.28	4.19	4.48	4.59
	6분위	5.56	3.87	4.90	6.69	6.93	6.26	5.50	5.79
	7분위	6.14	4.74	4.79	7.58	8.30	7.70	6.22	6.57
	8분위	5.41	4.56	3.48	5.48	6.84	6.43	6.10	5.61
	9분위	4.20	3.29	2.80	3.42	4.44	4.86	4.76	4.21
	10분위	3.28	3.01	2.55	2.16	2.77	2.64	2.95	2.92
	전체	3.99	3.14	3.35	5.00	5.36	4.83	4.24	4.26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음으로 0-1세 아동이 있는 18-64세 가구주 가구를 기준으로 수급률을 소득, 재산 수준별로 재작성해 보았다. 수급률이 20%를 넘는 셀은 소득으로는 8-10분위에 속하는 재산 전 분위에 주로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1세 아동이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볼 때도 모성보호 제도 수급 가구 비중이 소득 수준이 높은 분위에서 특히 더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이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중상위에 있을 가능성을 통제하고 보더라도 모성보호 제도 수급이 상위에서 좀 더 활발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모성보호 제도는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에서 더 활발히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어 보인다. 0-8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소득 중상위에서 수급이 좀 더 활발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2-2-1-39〉 모성보호 수급 가구 비중: 18-64세 가구주 가구, 0-1세 아동 있는 가구 한정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3.20	12.48	2.59	5.75	8.01	8.41	4.99	4.46
	3분위	8.00	19.98	4.44	9.72	8.76	9.27	12.31	8.57
	4분위	10.93	9.05	8.36	8.38	16.46	14.12	16.92	11.58
	5분위	13.80	5.94	13.24	12.76	18.41	16.42	17.15	14.48
	6분위	14.44	15.68	13.72	16.16	17.17	17.90	15.01	15.36
	7분위	17.50	15.00	17.43	16.67	17.57	17.82	19.38	17.53
	8분위	21.82	16.88	25.00	20.53	22.66	19.42	22.93	21.68
	9분위	26.41	16.00	22.31	24.74	28.43	24.84	25.22	25.78
	10분위	27.37	29.76	22.61	31.06	25.30	24.88	30.11	27.50
	전체	16.19	14.93	14.91	16.14	19.66	19.02	21.77	17.4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40〉 모성보호 수급 가구 비중: 18-64세 가구주 가구, 0-8세 아동 있는 가구 한정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1.10	4.11	0.86	1.62	2.32	2.60	1.50	1.43
	3분위	2.71	5.99	1.43	2.76	3.15	2.99	3.64	2.81
	4분위	3.95	2.74	2.81	2.91	5.22	4.60	4.94	3.98
	5분위	5.40	1.54	4.37	4.91	6.46	6.27	6.44	5.48
	6분위	6.04	5.55	4.50	5.76	6.63	6.35	6.08	5.98
	7분위	7.39	6.88	5.59	6.41	6.72	6.87	7.08	6.90
	8분위	9.21	5.68	6.80	7.11	7.77	6.28	7.01	7.73
	9분위	10.52	6.98	7.14	7.31	8.42	6.69	7.34	8.32
	10분위	9.80	12.52	7.73	9.05	7.23	7.25	7.51	8.23
	전체	6.26	5.54	4.67	5.60	6.70	6.21	6.67	6.17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모성보호 제도 수급액을 보면, 소득 3분위 578.20만 원, 4분위 532.34만 원 등인데 반해 소득 9분위 434.01만원, 8분위 440.09만원으로 나타나 소득 중하위 가구 평균 수급액이 소득 상위 가구 수급액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급액 차이는 모성보호 제도가 소득 차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상한 것이다. 모성보호 제도는 임금의 일정 부분만 보호해 주므로, 이를테면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소득이 낮은 쪽에서 수급액이 더 많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2017년 중 얼마나 오래 수급했는지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가구주 연령별로 나누어 보더라도 대체로 소득 중하위 분위의 수급액이 소득 상위 분위 수급액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은 그대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구주 연령 26-39세 소득 3분위 평균 수급액은 590만원, 4분위는 544만원이지만, 소득 8분위는 447만원, 9분위는 437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2-2-1-41〉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모성보호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484.65	602.98	586.98	456.72	541.58	463.36	544.18	500.58
	3분위	589.79	364.75	485.05	564.55	506.23	632.18	701.19	578.20
	4분위	506.19	570.22	472.16	516.29	554.02	597.52	606.15	532.34
	5분위	468.05	449.48	442.71	438.79	435.19	458.09	472.54	457.18
	6분위	484.66	413.34	475.10	468.17	436.00	489.11	446.27	470.65
	7분위	460.02	386.45	415.24	399.36	432.39	472.92	485.93	448.34
	8분위	443.47	555.75	423.72	433.93	403.22	442.76	480.75	440.09
	9분위	432.93	242.34	437.70	408.02	406.18	427.11	487.30	434.01
	10분위	402.06	401.73	389.91	332.46	394.35	361.46	426.66	398.29
	전체	458.39	429.64	438.44	430.87	429.30	448.63	472.87	450.64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42〉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모성보호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528.39	508.20	470.83	414.20	500.58
	3분위	838.59	590.46	512.05	656.00	578.20
	4분위	452.68	544.38	477.30	577.48	532.34
	5분위	552.50	461.62	438.28	438.82	457.18
	6분위	340.59	482.38	422.41	448.87	470.65
	7분위	406.14	463.23	399.79	299.02	448.34
	8분위	461.19	447.09	402.88	418.59	440.09
	9분위	347.76	437.70	423.79	393.48	434.01
	10분위	415.86	387.81	408.86	573.72	398.29
	전체	438.29	456.85	422.58	444.28	450.64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가장 모성보호 수급이 활발한 26-39세 가구주 가구의 재산 수준별 평균 수급액을 보면, 1-4분위나 5분위의 수급액에 비해 재산 7-8분위의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재산 9-10분위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수급 기간 정보나 일자리 특성 정보가 없는 자료의 한계상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한 추가 분석은 어렵다.

〈표 2-2-1-43〉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모성보호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441.29	464.32	411.31	510.96	458.39
	5분위	58.00	448.19	317.35	491.38	429.64
	6분위	516.94	452.19	381.73	424.65	438.44
	7분위	263.00	435.53	413.68	397.85	430.87
	8분위	536.00	436.35	407.12	373.20	429.30
	9분위		460.81	422.50	391.21	448.63
	10분위		471.41	468.46	508.11	472.87
	전체	438.29	456.85	422.58	444.28	450.64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7. 산재보험급여 및 자활 급여 수급

다음으로 산재보험급여와 자활급여 수급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두 급여는 수급 가구수가 얼마되지 않으므로 분석적 의미보다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산재보험 수급 정보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가중치 부여 전 숫자를 보면 재산 1-4분위와 6-7분위는 1천 가구를 넘고, 소득 1-2분위와 소득 4-6분위도 1천 가구를 넘지만, 교차해서 보면 재산 1-4분위에서 소득 6분위 이하 정도를 빼면 각 셀별 가구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표 2-2-1-44〉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수: 가중치 부여 전

(단위: 개소)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643	51	248	171	149	103	65	1,430
	3분위	381	37	126	109	77	61	41	832
	4분위	491	41	162	131	117	77	72	1,091
	5분위	472	28	183	167	109	90	70	1,119
	6분위	404	34	150	154	114	105	65	1,026
	7분위	291	25	105	116	106	105	60	808
	8분위	211	15	99	93	88	85	59	650
	9분위	149	9	57	76	87	68	63	509
	10분위	56	4	26	36	44	40	45	251
	전체	3,098	244	1,156	1,053	891	734	540	7,716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자활 급여 수급 가구수는 이보다 훨씬 적어 자료 내에서 가중치 부여 전 기준으로 수급 가구수는 전체로 1,705가구에 불과하다. 저소득 가구여야 지급되는 특성상 재산은 1-4분위 내 소득 5분위 이하에 집중된 특성이 있다.

〈표 2-2-1-45〉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자활 수급 가구 비중

(단위: 개소)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117	8	24	2	1			152
	3분위	177	13	21	3				214
	4분위	668	43	80	17	3		1	812
	5분위	356	21	56	2	1			436
	6분위	46	1	11	1	1			60
	7분위	10	3	3					16
	8분위	5	1		1		1	1	9
	9분위	3				1	1		5
	10분위	1							1
	전체	1,383	90	195	26	7	2	2	1,705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산재보험 급여는 소득 수준 3-7분위에서 평균 수급률보다 높게 나타나며, 재산 분위로는 5-8분위에서 평균 수급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산 분위로 보면 6분위에서 가장 높고 6분위에서 위 아래로 멀어질수록 수급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종합해보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중간에서 상대적으로 수급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연령대별로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 가구에서 수급률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수급액은 자료로 대체한다.

〈표 2-2-1-46〉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 비중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0.43	0.66	0.84	1.08	0.85	0.87	0.52	0.56
	3분위	0.70	1.23	0.94	1.27	0.92	0.93	0.67	0.81
	4분위	0.76	1.22	1.35	1.11	1.22	0.71	0.83	0.90
	5분위	0.86	0.92	1.53	1.36	0.84	0.90	0.89	0.98
	6분위	0.74	1.21	1.19	1.29	1.02	1.07	0.83	0.92
	7분위	0.55	1.16	1.03	0.89	0.95	0.96	0.77	0.75
	8분위	0.43	0.61	0.96	0.69	0.75	0.58	0.54	0.58
	9분위	0.34	0.54	0.68	0.71	0.63	0.48	0.44	0.48
	10분위	0.14	0.23	0.51	0.53	0.42	0.23	0.19	0.24
	전체	0.56	0.88	1.03	0.98	0.81	0.65	0.50	0.67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47〉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0.00	0.25	0.48	0.75	0.56
	3분위	0.02	0.39	0.74	1.15	0.81
	4분위	0.00	0.44	0.82	1.27	0.90
	5분위	0.11	0.59	0.76	1.38	0.98
	6분위	0.03	0.44	0.85	1.33	0.92
	7분위	0.04	0.34	0.64	1.23	0.75
	8분위	0.06	0.24	0.48	1.02	0.58
	9분위	0.00	0.17	0.34	0.87	0.48
	10분위	0.00	0.09	0.19	0.37	0.24
	전체	0.03	0.31	0.56	1.02	0.67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48〉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0.01	0.25	0.59	0.91	0.56
	5분위	0.51	0.34	0.63	1.19	0.88
	6분위	0.00	0.47	0.72	1.39	1.03
	7분위	0.53	0.50	0.66	1.39	0.98
	8분위	0.00	0.46	0.64	1.10	0.81
	9분위	0.00	0.37	0.43	0.91	0.65
	10분위	1.39	0.27	0.29	0.69	0.50
	전체	0.03	0.31	0.56	1.02	0.67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50〉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2,106.97	2,076.99	2,315.17	2,201.37	2,943.93	3,624.74	2,891.73	2,345.93
	3분위	1,558.96	1,205.52	1,747.07	2,553.59	2,651.27	3,115.65	2,844.09	1,950.60
	4분위	1,425.30	1,400.54	1,349.67	2,021.57	2,189.61	2,536.90	2,594.29	1,692.57
	5분위	1,354.78	930.13	1,327.61	1,814.73	2,017.31	1,544.97	2,324.97	1,537.29
	6분위	1,203.00	1,062.99	1,329.35	1,465.92	1,614.95	1,845.76	2,227.85	1,433.46
	7분위	1,147.66	1,429.02	1,436.90	1,321.80	1,383.71	1,631.85	2,404.71	1,411.77
	8분위	1,098.63	1,328.71	1,305.86	1,349.73	1,754.56	1,610.39	1,841.58	1,404.86
	9분위	1,338.68	1,342.55	1,387.46	1,278.59	1,381.79	1,737.32	1,622.13	1,437.27
	10분위	1,814.58	860.67	1,644.42	2,184.01	1,974.97	1,878.37	2,124.32	1,938.48
	전체	1,445.62	1,336.69	1,494.56	1,730.17	1,867.92	2,022.70	2,224.40	1,651.5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51〉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1,847.67	2,180.49	2,455.07	2,345.93
	3분위	77.00	1,493.91	2,016.43	1,993.58	1,950.60
	4분위		1,308.53	1,591.13	1,797.77	1,692.57
	5분위	1,873.04	1,295.98	1,518.46	1,590.43	1,537.29
	6분위	2,322.00	1,301.44	1,322.24	1,503.12	1,433.46
	7분위	890.00	978.65	1,392.16	1,521.29	1,411.77
	8분위	399.00	1,167.65	1,398.08	1,464.15	1,404.86
	9분위		1,042.78	1,670.98	1,427.58	1,437.27
	10분위		1,614.39	1,851.72	2,015.55	1,938.48
	전체	1,324.33	1,281.27	1,611.22	1,733.89	1,651.5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52〉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산재보험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1,125.43	1,124.01	1,398.95	1,548.89	1,445.62
	5분위	847.00	924.41	1,622.26	1,310.99	1,336.69
	6분위		1,147.47	1,548.97	1,517.75	1,494.56
	7분위	2,384.49	1,388.97	1,694.89	1,790.39	1,730.17
	8분위		1,425.20	1,841.42	1,962.78	1,867.92
	9분위		1,688.01	2,012.61	2,074.45	2,022.70
	10분위	399.00	2,019.59	2,140.01	2,275.63	2,224.40
	전체	1,324.33	1,281.27	1,611.22	1,733.89	1,651.5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자활 근로 참여가구는 주로 재산 1분위, 소득 5분위 이하에서 주로 참여가 나타난다. 나머지 표는

자료로 대체한다.

〈표 2-2-1-53〉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자활 근로 참여 가구 비중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0.12	0.20	0.20	0.02	0.02	0.00	0.00	0.11
	3분위	0.42	0.67	0.24	0.04	0.00	0.00	0.00	0.30
	4분위	1.20	1.45	0.70	0.17	0.03	0.00	0.02	0.81
	5분위	0.63	0.86	0.49	0.02	0.01	0.00	0.00	0.40
	6분위	0.09	0.06	0.10	0.01	0.01	0.00	0.00	0.06
	7분위	0.02	0.16	0.04	0.00	0.00	0.00	0.00	0.01
	8분위	0.01	0.06	0.00	0.01	0.00	0.01	0.01	0.01
	9분위	0.01	0.00	0.00	0.00	0.01	0.01	0.00	0.01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0.28	0.40	0.20	0.03	0.01	0.00	0.00	0.17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54〉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자활 근로 참여 가구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0.02	0.07	0.12	0.12	0.11
	3분위	0.04	0.23	0.31	0.37	0.30
	4분위	0.21	0.24	0.70	1.21	0.81
	5분위	0.06	0.08	0.32	0.63	0.40
	6분위	0.00	0.01	0.07	0.09	0.06
	7분위	0.00	0.01	0.01	0.02	0.01
	8분위	0.00	0.00	0.00	0.02	0.01
	9분위	0.00	0.00	0.00	0.01	0.01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전체	0.05	0.05	0.15	0.27	0.17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55〉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자활 근로 참여 가구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0.05	0.07	0.29	0.52	0.28
	5분위	0.00	0.08	0.42	0.51	0.40
	6분위	0.00	0.05	0.17	0.27	0.20
	7분위	0.27	0.01	0.01	0.04	0.03
	8분위	0.00	0.01	0.00	0.01	0.01
	9분위	0.00	0.01	0.00	0.00	0.00
	10분위	0.00	0.00	0.00	0.01	0.00
	전체	0.05	0.05	0.15	0.27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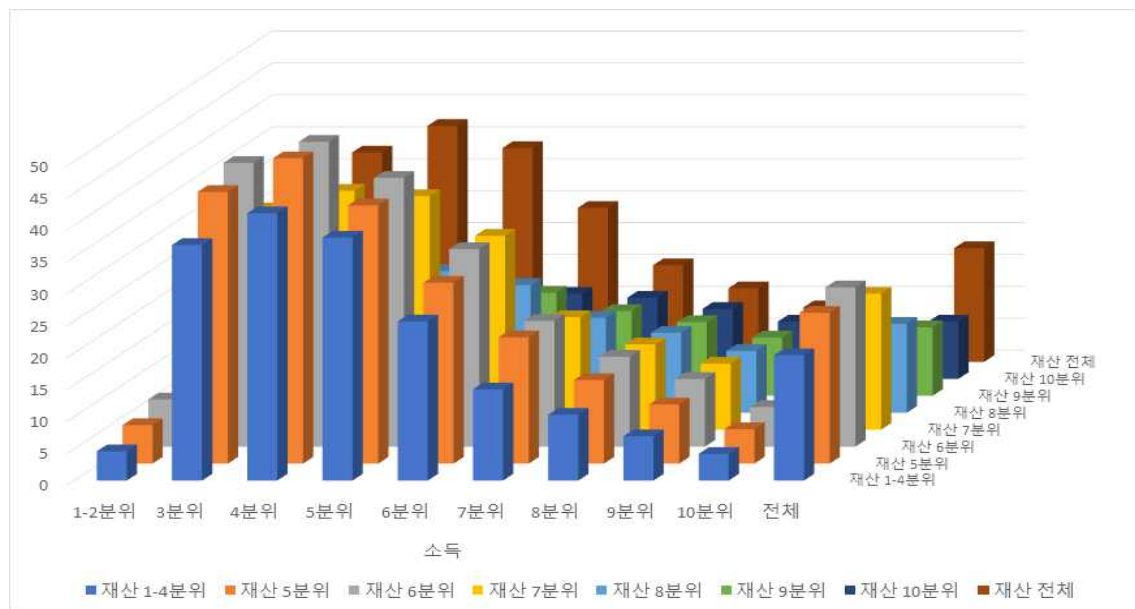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8. 종합

위에서 다룬 모든 급여를 합쳐 소득 재산 분위별 수급률을 보면, 근로장려금의 영향으로 소득 3-5분위 가구 중 재산 1-7분위 가구의 수급률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6분위도 상당히 높은 수급률을 보이는데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3-5분위 가구 중 재산 7-10분위 가구, 소득 7-8분위 가구도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급률을 보이는데, 실업급여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취업성공패키지와 일모아 재정 일자리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9-10분위 수급률에는 실업급여가 중요하게 기여한 가운데, 모성보호 급여와 취업성공패키지, 일모아 재정 일자리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1-2]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 비중

(단위: %)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56〉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 비중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4.59	6.04	7.41	7.34	4.82	4.28	2.76	4.94
	3분위	36.93	42.59	44.47	34.52	15.88	10.34	8.38	32.82
	4분위	41.89	47.85	47.77	37.45	22.42	14.73	13.24	36.98
	5분위	38.08	40.48	42.12	36.61	22.23	16.25	14.70	33.53
	6분위	24.94	28.34	30.96	30.39	20.03	16.17	13.32	24.15
	7분위	14.29	19.80	19.72	17.64	14.87	13.27	12.72	15.16
	8분위	10.31	13.09	14.10	13.38	12.53	11.54	10.98	11.54
	9분위	6.95	9.27	10.61	10.36	9.69	9.12	8.97	8.57
	10분위	4.19	5.40	6.22	6.38	6.34	5.84	5.36	5.26
	전체	19.63	23.63	24.97	21.30	13.95	10.74	8.98	17.83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연령별로 나누어도 26-64세 가구주 가구 소득 3-5분위 수준에서는 30%를 넘는 수급률을 보이는 데, 이 역시 근로장려금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다. 6-8분위에서 각 가구주 연령대별로 10%를 상회하는 수급비중은 실업급여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며, 취업성공패키지와 일모아 재정지원 일자리, 모성보호 급여도 부분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26-39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 모성보호 급여가 8분위 이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26-39세, 10분위 가구의 수급률 중 절반 이상은 모성보호 급여(26-39세 가구주 가구의 10분위 이상 모성보호 수급률 3.93%)가 역할 했다.

재산으로 보아도 각 연령대 가구주 가구의 6분위까지는 근로장려금이 수급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산 7-8분위 이상에서는 대체로 실업급여의 역할이 커진다. 다만, 26-39세의 경우 재산 8분위 이상에서 실업급여보다 모성보호 역할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26-39세 가구주 가구의 재산 10분위에서 모성보호 수급률은 7.56%, 실업급여는 4.66%로 나타난다.

〈표 2-2-1-57〉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3.42	6.06	5.02	4.64	4.94
	3분위	7.62	38.38	38.19	31.88	32.82
	4분위	12.34	40.60	40.16	35.91	36.98
	5분위	16.50	39.43	36.09	30.40	33.53
	6분위	11.57	29.24	25.39	21.37	24.15
	7분위	5.69	14.55	13.24	17.83	15.16
	8분위	3.39	10.85	8.56	15.27	11.54
	9분위	2.96	8.21	5.71	11.48	8.57
	10분위	2.32	6.02	3.49	6.18	5.26
	전체	8.05	18.58	17.76	18.21	17.83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58〉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 비중

(단위: %)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7.72	18.48	22.46	20.75	19.63
	5분위	14.36	22.14	23.44	24.42	23.63
	6분위	15.24	24.32	24.79	25.43	24.97
	7분위	15.50	24.01	20.87	20.47	21.30
	8분위	9.96	17.19	12.26	13.74	13.95
	9분위	6.07	13.68	7.76	11.76	10.74
	10분위	8.90	13.02	6.22	9.67	8.98
	전체	8.05	18.58	17.76	18.21	17.83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평균수급액을 비교해보면 소득 1-2분위의 수급액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 분위의 수급률은 4.94%로 가장 낮아 신빙성이 다소 낮을 수 있다. 1-2분위를 제외하면 전체로 볼 때 소득 수준이 상승할수록 평균 지급액도 커지는 구조가 나타난다. 수급률이 가장 높았던 3-5분위는 대다수가 근로금을 지급받는데, 이 액수가 또 다른 높은 수급률을 보이는 제도인 실업급여에 비해 근로장려금의 급여액 수준이 낮기 때문에 3-5분위의 평균 수급액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급률은 높지 않은 소득 상위 분위의 평균 지급액이 중하위 분위보다 높은 데에는 이들 계층에서 수급률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급여의 평균 수급액이 높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를테면, 실업급여로 소득 8분위에서 383만원, 9분위에서 374만원, 10분위에서 373만 원을 평균적으로 받고 있으며, 모성보호 급여로는 소득 8분위에서 440만 원, 9분위에서 434만 원, 10분위에서 398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어떤 급여제도를 주로 수급하는 소득×재산 분위냐에 따라 평균 수급액이 달라지며, 어떤 위험을 보호하느냐에 따라 각 사회보장 제도의 고유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소득 역진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하면 안 될 것이다.

이를테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데도 소득이 적은 저소득 경제활동인구에게 약간의 소득 보조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성보호제도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휴가, 휴직 제도를 보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후자는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여 부모의 직접 양육을 촉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급여액이 낮게 설정되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간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액수의 지원이 당연하게 된다. 이는 1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이다. 막 실업된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활 보장, 구조조정의 원활화, 대규모 실업 시 거시경제 자동안정화 기능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실업급여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이나 빈곤층 구제를 목적으로하는 다른 제도들보다 급여액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낮은 급여액 설정은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 역할을 축소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실업급여는 실업부조나 여타 생계지원 제도에 비해 훨씬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하고, 사전 기여 조건이나 기여 기간에 따른 급여액 차등 등 다양한 장치를 제도 내 부가하고 있다.

〈표 2-2-1-59〉 가구주 18-64세 가구 소득, 재산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2분위	372.80	438.63	469.06	539.85	841.89	1133.24	974.79	468.41
	3분위	155.58	166.77	177.64	244.36	383.92	639.04	643.23	190.52
	4분위	227.41	234.30	251.85	261.68	397.50	523.02	603.49	258.54
	5분위	207.20	178.94	227.58	258.81	327.45	432.03	546.44	241.53
	6분위	213.09	234.29	219.59	244.75	325.73	437.94	546.45	254.62
	7분위	280.76	311.65	304.73	322.92	417.86	472.42	540.53	339.40
	8분위	316.18	316.55	341.12	365.10	446.89	428.31	474.20	371.67
	9분위	357.15	348.63	348.25	371.49	409.93	419.14	450.51	389.09
	10분위	368.98	372.50	400.42	457.96	416.67	383.71	418.88	399.78
	전체	230.61	239.29	257.42	292.66	395.84	467.08	511.61	281.96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연령별로 보아도 수급률 자체가 매우 낮은 1-2분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하위 소득 분위보다 상위 분위에서 평균 수급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하위 소득 분위에서는 압도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많이 수급하며, 중상위 분위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제도를 주로 수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재산 수준별로 보아도 상위 분위에서 평균 수급액이 높게 나타난다. 이 역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당부분 각 재산 분위 내 주된 급여제도 구성차이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2-2-1-60〉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소득	1-2분위	122.10	302.57	383.70	613.11	468.41
	3분위	113.59	184.11	180.81	203.78	190.52
	4분위	191.98	259.14	229.78	281.63	258.54
	5분위	190.74	232.34	196.38	283.95	241.53
	6분위	183.53	213.12	198.17	334.38	254.62
	7분위	213.02	332.99	301.73	367.17	339.40
	8분위	217.18	383.52	356.11	373.40	371.67
	9분위	194.66	391.00	398.75	385.72	389.09
	10분위	264.91	389.89	409.86	401.70	399.78
	전체	173.86	271.66	240.18	319.36	281.96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61〉 가구주 연령별 재산 수준별 모든 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전체
재산	1-4분위	172.17	241.69	203.45	246.94	230.61
	5분위	193.95	238.18	198.96	257.90	239.29
	6분위	156.15	240.84	213.72	285.06	257.42
	7분위	238.31	262.61	224.08	352.23	292.66
	8분위	154.27	359.04	331.19	460.02	395.84
	9분위	206.28	434.47	426.29	499.49	467.08
	10분위	243.94	494.19	495.91	524.67	511.61
	전체	173.86	271.66	240.18	319.36	281.96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급여제도는 18-64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과 중간층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 데이터에서 계산되는 시장 소득에 가처분 중위 50% 미만 기준을 적용해 빈곤율을 계산하고, 여기에 각 사회보장 제도를 수급한 가구에 관련 제도 수급액을 더해주면 빈곤율이 어떻게 바뀌는 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를 추정하였다.

〈표 2-2-1-62〉 빈곤율 및 중간층 비율 변화

(단위: %)

	시장소득에 가처분 중위 소득 기준 적용 (가)	(가)+ 근로장려금	(가)+ 실업급여	(가)+ 모성보호	(가)+ 일모아	(가)+ 취성패	(가)+ 산재	모든 제도 함께 고려 시
중위 50%								
전가구	0.395	0.391	0.390	0.394	0.394	0.394	0.393	0.384
18-64세 가구주 가구	0.309	0.305	0.304	0.309	0.309	0.309	0.308	0.298
중위 25%								
전가구	0.324	0.320	0.320	0.323	0.323	0.323	0.322	0.314
18-64세 가구주 가구	0.236	0.233	0.233	0.236	0.236	0.236	0.235	0.227
50%-150%								
전가구	0.270	0.274	0.272	0.270	0.271	0.270	0.271	0.276
18-64세 가구주 가구	0.294	0.297	0.296	0.293	0.294	0.294	0.294	0.299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18-64세 가구주 가구의 시장 소득으로 빈곤율을 계산하면 30.9%의 빈곤율이 계산되는데, 근로장려금 수급은 빈곤율을 0.4%p 낮은 30.5%로 떨어뜨리며, 실업급여는 30.9%의 빈곤율을 0.5%p 낮은 30.4%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성보호제도는 빈곤율에 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며, 이는 일모

아 재정지원일자리나 취업패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산재보험급여는 0.1%p 낮은 30.8%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급여를 모두 합치면, 빈곤율은 30.9%에서 29.8%로 1.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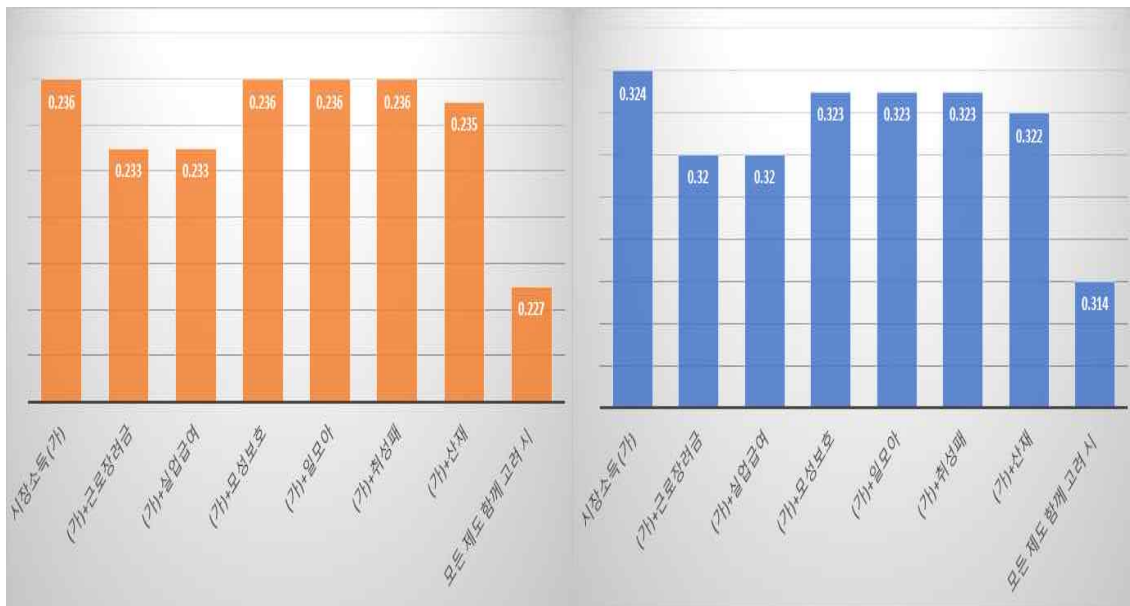
가처분 소득 기준 중위 25%를 기준으로 삼아 빈곤률 변화를 다시 계산해 보아도 모성보호, 일모아 재정지원, 취업성공패키지는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은 0.3%p, 실업급여도 0.3%p 만큼 빈곤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합쳐보면, 23.6%에서 22.7%로 빈곤율을 0.9%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간층 비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해 보았다. 가처분 소득 기준 중위 50% 이상, 150% 미만을 중간층으로 정의하였다. 중간층 비중은 18-64세 가구주 가구 기준 29.4%로 계산되는데, 근로장려금은 중간층 비중을 29.7%로 0.3%p 상승시키며, 실업급여는 0.2%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제도는 앞서 8-10분위에서 특히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간층 비중을 0.1%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모아 재정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산재보험은 중간층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급여 제도를 합쳐서 보면 중간층 비중은 29.4%에서 29.9%로 0.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가구는 연령대 제한을 하지 않고 계산해 본 것이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보더라도 대체적인 영향력은 바뀌지 않는 가운데, 모성보호, 일모아 재정지원, 취업성공패키지도 0.1%p 정도 빈곤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1-3]빈곤율(중위소득 25% 기준) 변화 - 좌측은 18-64세 가구주, 우측은 전가구 기준

(단위: 10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9.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중 어느 한 소득이라도 있던 개인의 소득 분위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직역연금의 가입률을 산정해 보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비자발적 실업 위험 등에 대비할 수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어야 노후 소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 두 보험의 사각 지대는 이 중요한 위험들에 대비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각 소득, 재산 수준별 사각 지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다만, 데이터 한계가 있다. 소득은 2017년 1년간 발생 기준이고, 가입은 2017년 10월 기준이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가입률이 가장 높은 분위인 8분위의 가입률이 95%로 추산되었는데, 실제 98%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시간 차이로 인해 발생한 오차 때문에 95%로 추산되었을 수 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 중에는 소득이 없어 납부유예중인 사람들이 많을 것이나, 납부유예중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들은 사실상 비가입 상태이지만 가입으로 처리했다는 한계도 있다.

고용보험은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 고용주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분위의 가입률이 76.72%로 나타난다. 6-8분위에서 70%를 초과해 가장 높고, 저분위에서 6분위로 올라올수록 가입률이 상승하는 반면, 8분위에서 10분위로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가입률이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표 2-2-1-63〉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개인의 소득분위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평균 소득(2017년 10월 기준)

(단위: %, 만 원)

소득분위	고용보험	직역연금	국민연금 사업장	국민연금 지역	옆 중의 하나라도 가입	각 분위별 평균 소득(만 원)
1분위	6.04	0.14	2.39	27.57	33.61	59
2분위	12.14	0.19	4.36	37.03	48.67	256
3분위	23.80	0.32	13.02	38.66	62.49	559
4분위	40.41	0.82	31.86	32.44	76.11	1,036
5분위	62.38	0.93	57.11	18.79	87.24	1,584
6분위	73.08	1.39	67.66	12.61	91.66	2,135
7분위	76.72	3.96	73.55	9.17	94.34	2,820
8분위	76.39	7.77	75.04	6.62	95.32	3,802
9분위	68.84	15.92	69.86	4.77	94.82	5,388
10분위	61.27	17.74	71.74	2.23	93.90	10,666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옆 중 하나라도 가입」된 사람들을 〈표 2-2-1-65〉의 경찰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직역 연금 가입 비중과 비교해 보면 1분위만 제외하면 각 분위별로 거의 유사한 가입 비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1분위는 각각 행정자료 33.61%와 경찰 18.2%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분위는 48.7%와

49.3%, 3분위는 62.5%와 69.5%, 10분위는 93.9%와 95.9%를 보였다. 물론, 행정자료의 국민연금 지역 가입에는 상당수 실질적 비가입자(=납부예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더라도 사회보험 데이터 베이스 안에 임금근로자 수준으로 가입 정보가 기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것이다.

지역 연금 가입자는 임금이 높은 특성의 반영으로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가입률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개인 소득 기준으로 가장 높은 10분위는 지역 연금 가입자가 17.74%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뜻한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은 고용보험 가입과 비교해 보면 8분위까지는 고용보험 가입률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모두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법인일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근로자 중에서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단,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의무 가입대상이 된다. 또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단, 이들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시간강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이다. 반면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가입대상이 된다.

〈표 2-2-1-6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본 임금 근로자(18-59세)의 사회보험 가입

(단위: %)

	국민+지역 연금 사업장 가입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률	고용보험 가입률	공무원 등 지역연금 가입 비중	고용보험 가입+지역연금 가입
1분위	14.6	11.5	17.8	0.4	18.2
2분위	46.3	11.4	48.4	0.9	49.3
3분위	67.6	8.9	68.0	1.5	69.5
4분위	79.9	6.9	78.0	2.1	80.1
5분위	78.6	8.0	75.9	3.5	79.4
6분위	87.7	5.3	81.8	6.5	88.4
7분위	92.0	4.1	82.6	9.7	92.3
8분위	92.3	3.9	79.3	12.6	91.9
9분위	95.1	3.1	73.0	21.6	94.6
10분위	97.4	2.2	72.4	23.5	95.9
전체	77.6	6.3	69.7	8.6	78.2

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에는 지역연금 가입자 비중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비법인 기업 자영업자가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이 1분위에서 3분위로 갈수록 상승하다가 3분위에서 10분위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

면서는 그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개인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비법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2-3분위에서 가장 많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적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10분위 소득 수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률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비중이 약 10%p 정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제도 차이를 감안해 볼 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또는 법인 기업 대표자가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할 수 있는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로 한정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가입률을 비교해보았다. 국민+지역 연금 사업장 가입률은 분위가 낮을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을 보인다. 1분위에서는 국민+지역 연금 사업장 가입률은 14.6%이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17.8%이며, 이와 같은 패턴은 1-3분위에서 나타나고, 4분위부터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이 고용보험 가입률을 초과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에 공무원 등 지역연금 가입 비중을 더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과 대동소이한 가입비중이 나타난다.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는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자영업자 포함 통계이므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지만, 소득 수준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 패턴 자체는 임금 근로자에 한정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셈이다.

또한, 임금근로자에 한정할 경우 국민+지역 연금 사업장 가입률과 고용보험 가입+지역 연금 가입 비중이 10분위에서도 큰 차이 없는 97.4% 대 95.9% 수준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제대로 조사되고 있다면, 이 차이가 법인 기업 고용주 때문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법인 기업 고용주를 임금근로자로 분류해야 하며, 이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은 되는데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자료 통계는 통계청 정의에 따른 임금근로자에 한정된 통계가 아니다. 행정자료 개인 소득 10분위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은 61.2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률은 71.74%로 나타난 차이는 법인 기업 고용주와 비법인 기업 고용주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임금 근로자에 한해 건강보험 지위도 조사하므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가입지위를 교차해 분석해 보았다. 임금근로자 월 임금 기준으로 분위기를 구분할 때 1분위 17.8%의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라고 응답한 경우는 12.8%p,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미가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1%p를 차지했다. 1분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미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전체의 43.4%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고용보험 미가입-건강보험 지역가입-국민연금은 미가입된 자로 19.2%로 나타났다.

2분위 중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43.5% > 고용보험 미가입-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국민연금 미가입이 19.4% > 고용보험 미가입-건강보험 지역가입-국민연금 미가입이 15.7% > 고용보험 미가입-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이 7.1% 순으로 나타났다. 3분위부터 그 위로는 고용보험 미가입 중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국민연금 지역가입, 건강보험 지역가입-국민연금 미가입 비중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국민연금 미가입보다 높아지며, 가입 지위 비중

순서는 고용보험 가입-건보와 국민연금 직장가입 > 고보 미가입-건보 지역 가입-국민연금 미가입 > 고보 미가입-건보 지역가입-국민연금 지역가입 > 고보 미가입-건보 피부양자 등록-국민연금 미가입 순으로 나타나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자이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사회보험도 직장가입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1분위의 2.1%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연금 미가입이라고 응답했다. 아마도 이들은 가입 조건 차이로 인해 건강,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국민연금도 미가입이거나 지역가입인데 납부는 유예된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건강보험 지위는 이런 경우 피부양자로 되어 있거나 경우에 따라 미가입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으로 되어 있다면 자신을 피부양하는 다른 가족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조건을 조합해 보면 고용보험 미가입-건강보험 지역가입-국민연금 지역가입으로 나타난 1분위 6.1%는 다소 특이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앞서 고용보험 가입-건보 피부양자-국민연금 미가입과 함께 이 두 케이스는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고용보험 미가입인데 건보와 국민+직역연금 직장가입이라는 응답은 고용보험 미가입이 아니라 가입대상이 아님의 오기일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이라고 응답된 것으로 보아 법인 고용주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고용보험 미가입 지위는 대체로 임금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줄어드는데, 이 응답만큼은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각 분위에서 매우 작아 얼마나 신뢰할만한 규모인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3분위 이상부터 10분위까지에 1-2% 정도의 규모를 보였다.

〈표 2-2-1-6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본 18-59세 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지위 교차 분석

(단위: %)

고용보험 지위	건강보험 지위	국민+직역 연금 지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가입대상 아님	직장가입	직장가입	0.3	0.6	1.5	2.1	3.5	6.5	9.6	12.5	21.6	23.4
고용보험 가입	직장가입	직장가입	12.8	43.5	63.9	75.0	73.2	79.9	80.8	78.3	72.1	71.9
	지역가입	지역가입	0.8	0.3	0.6	0.6	0.7	0.5	0.7	0.4	0.5	0.2
	지역가입	미가입	0.7	1.2	0.5	0.4	0.6	0.4	0.3	0.1	0.0	0.0
	피부양자	미가입	2.1	1.2	0.9	0.4	0.2	0.2	0.2	0.1	0.1	0.0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가입	직장가입	0.6	0.9	1.5	2.2	1.5	1.1	1.1	1.2	1.2	1.9
	지역가입	지역가입	6.1	7.1	6.2	4.6	5.3	3.9	3.0	2.9	1.9	1.8
	지역가입	미가입	19.2	15.7	10.2	6.5	6.6	3.0	1.7	2.3	0.9	0.1
	의료수급권자	미가입	2.5	1.1	0.3	0.3	0.2	0.0	0.1	0.0	0.0	0.0
	피부양자	지역가입	4.1	3.1	1.3	1.2	1.7	0.7	0.5	0.5	0.5	0.2
	피부양자	미가입	43.4	19.4	9.2	3.9	4.0	1.8	0.9	0.6	0.4	0.2
	미가입	미가입	5.3	2.4	1.3	0.8	0.8	0.8	0.5	0.4	0.3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다시 초점을 개인에서 가구로 돌려 가구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별로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및 직역연금, 국민연금 지역 가입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중은 소득 및 재산 5분위 이상에서는 90%를 넘는 가입률을 보이며, 특히 소득 7분위 이상이면서 재산 5분위 이상인 가구들의 경우 97%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입률을 보인다. 반면 소득 3분위 이하는 80% 중반에 못 미치는 가입률을 보인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별로 직역연금 가입 가구원이 있는 비중을 보면, 소득 6분위 이하에서는 거의 직역 연금 가입자가 분포하고 있지 않으나, 8분위부터는 거의 모든 소득 수준, 재산 수준에서 10%를 넘어서고, 특히 소득 10분위이면서 재산 6분위 이상은 20%를 상회하는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무원인 직역 연금 가입자는 대체로 상위 가구 소득 분위에 위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위 가구 소득 분위에 있다면, 재산 분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소득 10분위의 경우 재산 6분위 이상은 재산이 높을수록 직역연금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2-2-1-66〉 18-6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 가입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	1-2분위	53.10	57.92	69.47	76.97	76.35	75.73	75.03
	3분위	62.63	74.45	78.81	83.47	84.16	85.41	84.87
	4분위	79.40	84.37	89.11	90.55	91.62	93.02	93.64
	5분위	89.14	92.28	94.46	95.54	95.73	96.04	96.58
	6분위	93.48	94.74	96.58	97.35	97.67	97.54	97.51
	7분위	95.85	96.87	97.84	98.29	98.53	98.26	98.25
	8분위	96.77	97.80	98.31	98.50	98.50	98.35	98.17
	9분위	96.24	97.94	98.10	98.60	98.08	98.27	97.66
	10분위	96.30	97.64	97.24	97.23	97.76	97.69	97.13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67〉 18-6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직역연금 가입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	1-2분위	0.12	0.08	0.07	0.26	0.49	0.90	0.68
	3분위	0.18	0.17	0.21	0.30	0.39	0.61	0.90
	4분위	0.41	0.05	0.37	0.35	0.72	0.92	0.89
	5분위	0.81	0.49	0.59	0.61	0.90	1.32	1.49
	6분위	1.86	2.03	1.57	1.67	2.26	2.44	2.96
	7분위	6.07	4.69	4.89	4.78	5.87	6.59	7.77
	8분위	11.22	10.26	10.09	10.40	12.57	14.03	15.22
	9분위	14.79	16.65	17.41	16.85	18.78	19.38	20.37
	10분위	12.82	17.84	20.06	20.99	22.33	22.10	20.44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 및 재산 수준별 고용보험 가입자가 있는 가구 비중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셀에서 80%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소득 6분위의 재산 6-7분위, 소득 7분위의 6-9분위, 소득 8분위의 재산 5-8분위, 소득 9분위의 재산 6-8분위에서 80%를 상회했다. 이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 가구는 최상위 재산은 아닌 가구에서, 가구 소득은 중상위 수준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소득 5분위에서는 대체로 60% 정도의 가입 비중을 보이며, 4분위 이하에서는 30%대 이하의 가입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1-68〉 18-6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고용보험 가입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	1-2분위	7.95	8.48	10.90	14.74	15.48	15.94	17.09
	3분위	11.37	13.89	15.75	16.80	16.37	20.44	21.30
	4분위	33.02	37.92	37.95	37.38	36.36	35.91	38.04
	5분위	59.47	60.84	67.18	66.50	63.31	61.40	60.25
	6분위	74.57	75.73	81.68	81.75	78.43	75.55	70.74
	7분위	79.16	79.20	85.04	86.77	84.70	80.61	76.03
	8분위	78.77	81.33	84.90	86.34	82.99	79.86	75.80
	9분위	77.63	78.81	83.08	85.11	82.60	79.95	76.40
	10분위	72.94	73.40	74.64	76.88	77.27	76.76	74.19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1-69〉 18-6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	1-2분위	6.60	7.12	9.92	13.87	15.85	16.92	19.95
	3분위	6.35	9.88	10.15	12.29	13.21	19.00	20.15
	4분위	23.04	26.24	27.90	30.82	31.10	35.63	37.98
	5분위	50.84	52.07	58.64	61.80	61.31	61.66	63.14
	6분위	67.26	67.69	75.35	78.24	78.48	77.44	76.25
	7분위	73.37	74.92	80.24	84.30	84.79	82.92	80.96
	8분위	74.87	76.28	81.03	83.91	82.97	82.09	80.57
	9분위	74.86	75.53	79.54	83.45	82.34	82.28	81.07
	10분위	81.41	79.82	79.42	80.32	81.96	83.29	84.81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있는 가구 비중은 80% 이상 기준으로 볼 때 소득 7분위 이상, 재산도 7분위 이상에 몰려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앞서 본 고용보험이 소득 수준은 중상, 재산 수준도 중상 정도에서 가입자 있는 가구 비중이 80%를 넘었던 점과 대비된다. 고임금자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과 고용보험 가입이 거의 차이 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층 중 고용보험에는 가입

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가능한 법인 자영업자 및 법인 고용주와 비법인 고용주가 만들어진 차이일 것으로 추측된다. 소득 하위 분위이면서 재산 하위 분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비중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일용직 가입 등 고용보험의 가입조건이 국민연금보다 덜 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모든 근로, 일용근로, 사업 소득 있는 사람들 및 가구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분석해 보았다. 개인으로 보나 가구로 보나 소득 하위 분위, 재산 하위 분위에서는 사회보험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특히 고용보험보다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용보험의 가입 조건이 국민연금보다 덜 까다롭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상위 분위에서는 고용보험보다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법인 고용주와 근로자를 고용한 비법인 기업 고용주도 사업장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이들을 미가입처리하는 고용보험의 제도 설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추론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 분석을 위한 행정 데이터는 소득 발생시점과 피보험자 식별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는데 각 소득의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정보가 없어 종사상 지위를 유추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을 모두 고려한 개인의 국민연금 지역+고용보험+지역연금+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수준의 가입자 정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절 노인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1. 노인 소득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다음으로는 노인 소득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은 65세 이상 개인으로, 노인 가구는 65세 이상 가구원이 존재하는 가구로 정의한다. 이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지만, 부분적으로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추가한다. 그런데 노인의 소득과 빈곤은 성인 자녀와 동거하면서 경제적 부양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결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가구를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노인가구주 가구')와 노인이 아닌 가구('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로 구분한다. 이때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는 주로 성인 자녀(일부 비노인 배우자)와 노인이 동거하는 가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분석의 표본에서 전체 노인 가구는 305,818가구이고, 노인가구주 가구는 260,468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는 45,350가구이다. 또한 전체 노인 개인은 392,400명이고,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은 342,426명,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에 속한 노인은 49,974명이다. 주요 변수로는 시장소득 분위, 재산 분위, 지역, 가구주의 성과 연령, 노인 개인의 성과 연령을 활용한다. 시장소득 분위는 균등화한 가구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재산 분위는 균등화하지 않은 가구재산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가구단위로 10등분하여 구성하였다. 이때 노인이 존재하는 가구와 존재하지 않는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10등분하여 분위기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의 기준 시점은 2017년이다.

가.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타 공적이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방식 연금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1952년생 이전 60세에서 1969년생 이후 65세로 점차 인상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3,706,516명이고, 노령연금 월평균지급액은 386,380원, 특례를 제외하면 500,220원이다(국민연금공단, 2018, p. 5, 9).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정기적인 성격의 일시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본 분석의 공적연금 항목에는 일시금을 제외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44.6%였다(통계청, 2017, p. 32).

둘째,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약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2017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20만 6,050원인데,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일부 감액이 이루어지고, 부부의 경우 20%가 감액된다(보건복지부, 2017c, pp.

5-7; 보건복지부, 2018a, p. 5).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여 빈곤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본 분석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항목은 현금급여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을 포함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 43% 이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다(〈표 2-2-2-1〉). 2017년 전체 인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3.1%, 65세 이상 노인의 수급률은 5.9%이다(보건복지부, 2018b, p. 19, 22).

〈표 2-2-2-1〉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51.

넷째,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 나머지 소득보장제도를 모두 기타 공적이전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은 엄격한 의미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가 실질적으로 공적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여 기타 공적이전에 포함하였다.

나. 노인의 규모 및 특성

우선 〈표 2-2-2-2〉에서는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로 노인이 얼마나 많이 분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의 수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10분위-재산 10분위 셀의 첫 번째 수치는 해당 분위에 속한 전체 가구 중 노인이 존재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56%임을, 두 번째 수치는 해당 분위에 속한 전체 가구 중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32%임을, 세 번째 수치는 해당 분위에 속한 전체 개인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54%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를 살펴보면, 우선 전체 가구 중 노인 가구 비율이 25.83%,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13.94%임이 확인된다. 그런데 시장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의 노인 가구 비율과 노인가구주 가구 비율이 각각 50.17%, 48.13%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소득이 없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가구이고, 그 대부분이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임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 분위가 증가할수록 노인 가구 및 개인 비율이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는 노인의 시장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재산 분위별로 살펴보면,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1~4분위의 노인 가구 및 개인 비율이 가장 낮았고, 재산 5, 6분위의 노인 가구 비율이 각각 39.35%, 38.88%로 가장 높았으며, 재산 10분위의 노인 가구 비율도 31.69%로 전체 가구의 노인 가구 비율(25.8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노인에 비해 생애과정에서 일정하게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주어진 노인의 재산 수준이 대체로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요컨대, 비노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노인의 시장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재산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것이다. 모든 소득-재산 분위 중에서는 소득이 1~2분위이고 재산이 5~10분위인 집단의 노인 가구 및 개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시장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존재하는 집단에 노인이 많이 분포하는 것이다.

〈표 2-2-2-2〉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 개인 비율

(단위: %)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노인 가구	37.79	64.49	68.08	64.95	65.03	66.26	68.63	50.17
	노인가구주 가구	36.41	62.48	65.52	62.17	62.06	62.79	64.95	48.13
	노인 개인	31.84	54.29	56.55	51.87	51.19	51.58	52.12	42.17
3분위	노인 가구	23.82	49.43	57.00	51.60	48.27	48.56	51.52	37.29
	노인가구주 가구	21.05	43.03	52.36	46.61	42.35	42.41	43.84	33.12
	노인 개인	16.05	30.60	37.71	32.06	28.57	28.41	28.89	24.38
4분위	노인 가구	16.21	30.55	35.15	31.69	30.76	34.73	42.18	24.68
	노인가구주 가구	13.05	23.45	28.68	25.09	23.90	27.20	33.35	19.66
	노인 개인	9.99	16.71	18.69	15.87	15.05	16.86	20.62	13.92
5분위	노인 가구	15.11	31.85	30.70	28.74	28.66	32.10	37.90	23.36
	노인가구주 가구	11.38	21.47	23.51	21.75	21.30	24.32	28.17	17.54
	노인 개인	8.48	15.81	14.87	13.22	12.96	14.53	17.10	11.93
6분위	노인 가구	11.99	26.05	25.17	22.79	22.16	26.45	32.41	18.96
	노인가구주 가구	8.42	16.60	17.96	15.67	14.77	18.51	22.56	13.16
	노인 개인	6.51	12.39	11.34	9.72	9.24	10.97	13.67	9.11
7분위	노인 가구	9.24	21.46	20.32	18.22	17.87	21.05	28.31	15.49
	노인가구주 가구	6.08	12.19	13.00	11.31	10.26	12.35	18.11	9.66
	노인 개인	5.07	9.54	8.75	7.44	6.91	8.21	11.33	7.16
8분위	노인 가구	7.49	18.14	18.70	15.55	15.39	17.73	23.93	13.61
	노인가구주 가구	4.42	8.23	10.82	8.36	7.78	8.57	13.34	7.39
	노인 개인	4.20	7.88	7.86	6.10	5.91	6.54	9.13	6.11
9분위	노인 가구	6.69	16.83	15.17	14.15	13.31	15.45	20.03	12.34
	노인가구주 가구	3.61	6.83	7.80	6.70	5.71	6.07	9.31	5.75
	노인 개인	3.86	7.18	6.62	5.63	5.02	5.62	7.42	5.45
10분위	노인 가구	8.06	12.50	11.87	11.13	10.07	11.03	14.56	10.90
	노인가구주 가구	5.31	4.71	5.41	4.50	3.71	3.85	6.32	5.11
	노인 개인	4.77	5.71	5.41	5.05	4.07	4.27	5.54	4.90
전체	노인 가구	19.06	39.35	38.88	31.10	27.81	28.53	31.69	25.83
	노인가구주 가구	16.33	32.75	33.18	25.00	21.24	21.04	23.04	20.92
	노인 개인	11.72	21.95	21.18	15.41	13.03	13.00	14.26	13.94

주: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로, 첫 번째 행은 해당 셀의 전체 가구 중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두 번째 행은 해당 셀의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세 번째 행은 해당 셀의 전체 개인 중 노인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2-3〉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 분포

(단위: %)

구분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전체 노인 가구	1-2분위	17.47	1.90	6.67	4.28	3.59	3.41	3.46	40.78
	3분위	4.32	0.53	2.54	1.81	1.40	1.24	1.17	13.01
	4분위	3.34	0.31	1.45	1.23	1.04	1.07	1.11	9.55
	5분위	2.86	0.29	1.29	1.27	1.12	1.11	1.12	9.05
	6분위	2.21	0.24	1.01	1.04	0.94	0.96	0.94	7.34
	7분위	1.63	0.17	0.78	0.85	0.81	0.86	0.90	6.00
	8분위	1.22	0.13	0.64	0.71	0.76	0.84	0.96	5.27
	9분위	0.99	0.10	0.44	0.57	0.69	0.88	1.11	4.78
	10분위	1.06	0.06	0.24	0.27	0.41	0.71	1.46	4.22
	계	35.09	3.73	15.06	12.04	10.77	11.08	12.23	100.00
노인가구주 가구	1-2분위	20.79	2.27	7.93	5.06	4.23	3.99	4.04	48.31
	3분위	4.71	0.57	2.89	2.02	1.52	1.34	1.23	14.26
	4분위	3.32	0.29	1.46	1.20	1.00	1.04	1.08	9.40
	5분위	2.66	0.24	1.22	1.19	1.02	1.04	1.02	8.39
	6분위	1.92	0.19	0.89	0.88	0.77	0.83	0.81	6.29
	7분위	1.32	0.12	0.61	0.65	0.58	0.62	0.71	4.62
	8분위	0.89	0.07	0.45	0.47	0.48	0.50	0.66	3.53
	9분위	0.66	0.05	0.28	0.33	0.36	0.42	0.64	2.75
	10분위	0.86	0.03	0.13	0.14	0.19	0.31	0.78	2.44
	계	37.13	3.83	15.87	11.95	10.15	10.09	10.99	100.00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1-2분위	3.34	0.31	1.32	0.96	0.86	0.94	0.97	8.71
	3분위	2.64	0.36	1.09	0.92	0.90	0.83	0.92	7.66
	4분위	3.42	0.38	1.41	1.35	1.23	1.23	1.22	10.22
	5분위	3.71	0.50	1.59	1.62	1.51	1.41	1.51	11.84
	6분위	3.46	0.45	1.53	1.71	1.65	1.51	1.51	11.81
	7분위	2.92	0.39	1.48	1.70	1.83	1.87	1.70	11.88
	8분위	2.62	0.38	1.41	1.74	1.99	2.28	2.24	12.66
	9분위	2.40	0.32	1.12	1.58	2.07	2.80	3.13	13.41
	10분위	1.90	0.20	0.68	0.85	1.36	2.44	4.36	11.81
	계	26.41	3.29	11.61	12.43	13.39	15.31	17.56	100.00

주: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중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2-2〉에서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로 노인 가구 비율을 살펴본 것과 달리, 〈표 2-2-2-3〉에서는 노인 가구 중에서 각 시장소득-재산 분위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노인 가구를 살펴보면 소득 1~2분위 비율이 40.7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절반에 가까운 노인 가구가 시장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 4, 5, 6, 7, 8, 9, 10분위 비율이 각각 10%에 미치지 못하고 소득 분위가 증가할수록 각 분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

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전체 노인 가구의 재산 분포를 살펴보면, 재산 6분위 비율이 15.06%로 상당히 높았고 7, 8, 9, 10분위의 비율도 각각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가구의 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 및 재산 분포는 가구주가 노인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구주가 노인인 노인 가구는 전체 노인 가구보다 시장소득과 재산 수준이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시장소득 및 재산 분포를 나타낸다. 하지만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는 소득 1~2분위, 3분위 비율이 각각 8.71%, 7.66%에 불과하고, 소득 5, 6, 7, 8, 9, 10분위 비율이 각각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성인 자녀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시장소득 수준이 노인가구주 가구는 물론 전체 가구보다도 높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재산 8, 9, 10분위 비율이 각각 13.39%, 15.31%, 17.56%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재산 수준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노인 가구 중에서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는 확연히 구분되는 경제적 특성을 갖는 것이다.

〈표 2-2-2-4〉 노인 가구의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가구주 노인 여부	노인가구주	80.98	-	-
	비노인가구주	19.02	-	-
	계	100.00	-	-
가구주 성	남성	62.56	59.26	76.61
	여성	37.44	40.74	23.39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주 연령	64세 이하	19.02	-	100.00
	65~69세	26.40	32.59	-
	70~74세	20.53	25.35	-
	75~79세	17.39	21.47	-
	80세 이상	16.67	20.59	-
	계	100.00	100.00	100.00
지역	대도시	42.53	42.06	44.57
	중소도시	44.00	43.12	47.73
	농어촌	13.47	14.82	7.70
	계	100.00	100.00	100.00

주: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중 각 범주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음으로 〈표 2-2-2-4〉와 〈표 2-2-2-5〉에서는 노인 가구 및 개인의 몇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체 노인 가구 중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는 80.98%이고, 전체 노인 개인 중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에 속한 노인은 83.54%이다. 가구주 성 분포를 살펴보면, 노인가구주 가구 중에서는 가구주가 남성인 비율이 59.26%인 반면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중에서는 가구주가 남성인 비율이 76.6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이 성인 자녀 중 딸보다 아들과 동거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노인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면, 65~69세가 32.59%, 70~74세가 25.35%, 75~79세가 21.47%, 80세 이상이 20.59%로 나타났다.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농어촌 거주 비율이 14.82%로 비노인가구주 노인가구의 7.70%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노인 개인의 성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7.76%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명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런데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에 속한 노인의 여성 비율은 75.17%로 훨씬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여성 노인이 성인 자녀와 동거하면서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 노인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5~69세가 32.40%, 70~74세가 24.51%, 75~79세가 20.86%, 80세 이상이 22.23%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보다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에 속한 노인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경제적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연령 노인이 성인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2-5〉 노인 개인의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가구주 노인 여부	노인가구주	83.54	-	-
	비노인가구주	16.46	-	-
	계	100.00	-	-
개인 성	남성	42.24	45.67	24.83
	여성	57.76	54.33	75.17
	계	100.00	100.00	100.00
개인 연령	65~69세	32.40	34.60	21.21
	70~74세	24.51	25.87	17.61
	75~79세	20.86	20.70	21.67
	80세 이상	22.23	18.83	39.50
	계	100.00	100.00	100.00

주: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에 속한 노인 개인 중 각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 노인의 소득분포

다음으로는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평균을 살펴보았다. 우선 〈표 2-2-2-6〉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가구의 시장소득 평균이 각각 1,270만원/년, 929만원/년, 2,724만원/년으로 나타나 노인의 가구형태가 시장소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체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 평균을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는 시장

소득이 존재하지 않았고, 3, 4분위의 시장소득 평균은 각각 140만원/년, 597만원/년으로, 9, 10분위의 시장소득 평균은 각각 4,499만원/년, 9,602만원/년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으로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 수준이 낮은 가운데 노인 가구 내 시장소득의 불평등도 상당한 수준임이 확인된다. 한편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시장소득 평균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단,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재산 5~10분위 구간에서는 재산이 증가할수록 시장소득 평균이 단조증가하는 관계가 나타났지만,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1~4분위의 시장소득 평균은 814만원/년으로 재산 5, 6분위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음을 언급해둔다.

〈표 2-2-2-6〉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 평균

(단위: 만원/년)

구분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전체 노인 가구	1-2분위	0	0	0	0	0	0	0	0
	3분위	145	142	148	143	137	131	117	140
	4분위	593	586	592	594	603	601	612	597
	5분위	1216	1226	1220	1218	1224	1225	1222	1220
	6분위	1846	1852	1844	1851	1852	1853	1854	1849
	7분위	2526	2507	2531	2534	2538	2541	2548	2534
	8분위	3339	3347	3337	3336	3353	3355	3363	3347
	9분위	4499	4497	4471	4476	4493	4495	4528	4499
	10분위	11848	7880	8135	7499	7393	7977	10088	9602
	전체	1008	771	840	1130	1363	1676	2392	1270
노인가구주 가구	1-2분위	0	0	0	0	0	0	0	0
	3분위	146	144	149	143	136	131	115	141
	4분위	587	582	587	588	600	599	608	592
	5분위	1216	1221	1217	1217	1220	1224	1219	1218
	6분위	1844	1849	1842	1844	1842	1847	1843	1844
	7분위	2520	2503	2526	2527	2533	2533	2537	2527
	8분위	3334	3339	3325	3328	3341	3322	3356	3335
	9분위	4509	4433	4450	4485	4459	4467	4491	4481
	10분위	13352	8088	8521	7641	7810	9110	12106	11349
	전체	814	496	621	823	947	1144	1814	929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1-2분위	0	0	0	0	0	0	0	0
	3분위	136	133	139	143	145	129	129	136
	4분위	617	599	616	617	612	608	629	616
	5분위	1216	1236	1232	1223	1235	1228	1230	1226
	6분위	1851	1859	1848	1866	1871	1866	1880	1862
	7분위	2536	2512	2540	2544	2545	2552	2567	2545
	8분위	3346	3354	3353	3345	3365	3386	3372	3362
	9분위	4488	4541	4495	4468	4519	4512	4559	4514
	10분위	8938	7754	7812	7403	7149	7368	8542	8064
	전체	2170	2130	2117	2386	2707	3170	3931	2724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균등화한 후 가구단위 평균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2-7〉에는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을 보고하였다. 시장소득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노인가구주 가구보다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이 컸고, 가처분소득과 재산의 양의 상관관계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표 2-2-2-6〉과 〈표 2-2-2-7〉을 함께 살펴보면, 조세와 공적이전이 반영된 후 소득이 감소하는 집단과 증가하는 집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노인 가구 중 소득 1~9분위에 해당하는 집단은 시장소득 평균보다 가처분소득 평균이 높아 세금 지출보다 많은 공적이전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 가구에서 소득 1~9분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96%임을 고려하면(〈표 2-2-2-3〉), 조세와 공적이전 체계가 거의 대부분의 노인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2-2-7〉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

(단위: 만원/년)

구분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전체 노인 가구	1-2분위	475	460	480	561	641	712	778	544
	3분위	674	666	696	708	741	782	929	723
	4분위	1064	1055	1102	1112	1135	1198	1264	1122
	5분위	1630	1636	1666	1694	1735	1768	1805	1696
	6분위	2207	2252	2236	2265	2314	2367	2426	2283
	7분위	2857	2818	2851	2893	2914	2928	3036	2905
	8분위	3585	3576	3600	3612	3655	3673	3748	3644
	9분위	4578	4575	4612	4607	4621	4644	4713	4634
	10분위	9636	7129	7355	6958	6893	7334	8677	8310
	전체	1370	1187	1279	1589	1840	2150	2760	1683
노인가구주 가구	1-2분위	475	460	481	567	646	719	785	546
	3분위	692	687	710	729	764	806	979	744
	4분위	1088	1094	1129	1147	1176	1246	1313	1155
	5분위	1666	1685	1700	1733	1785	1826	1875	1741
	6분위	2245	2298	2279	2304	2377	2421	2483	2329
	7분위	2903	2899	2878	2941	2984	3002	3126	2963
	8분위	3641	3641	3639	3671	3730	3763	3861	3715
	9분위	4635	4584	4650	4677	4683	4752	4807	4705
	10분위	10603	7324	7652	7019	7286	8216	10012	9459
	전체	1206	954	1094	1338	1507	1729	2315	1399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1-2분위	473	458	459	439	526	592	653	505
	3분위	538	524	538	514	578	615	640	560
	4분위	963	926	985	981	994	1025	1081	992
	5분위	1520	1535	1554	1573	1590	1587	1605	1560
	6분위	2116	2172	2130	2179	2187	2244	2296	2178
	7분위	2767	2712	2803	2815	2820	2824	2877	2809
	8분위	3504	3521	3546	3543	3579	3589	3605	3559
	9분위	4511	4569	4571	4544	4574	4575	4632	4573
	10분위	7766	7012	7106	6916	6663	6860	7654	7298
	전체	2351	2342	2356	2616	2912	3331	3945	2889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균등화한 후 가구단위 평균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2-8〉과 〈표 2-2-2-9〉에서는 노인 가구와 개인의 특성별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가구주 성별로 살펴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모두 남성 가구주보다 여성 가구주의 소득 수준이 낮게 나타나 성별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남성 노인가구주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은 각각 1,190만원/년, 1,721만원/년이지만, 여성 노인가구주는 각각 548만원/년, 931만원/년에 불과하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평균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중에서도 고령 노인의 소득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65~69세 가구주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은 각각 1,361만원/년, 1,861만원/년이지만, 80세 이상 가구주는 각각 499만원/년, 906만원/년으로 훨씬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모두 대도시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고 농어촌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8〉 노인 가구의 특성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단위: 만원/년)

구분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가구주 성	남성	1582	2021	1190	1721	2871	3008
	여성	749	1117	548	931	2240	2499
가구주 연령	64세 이하	2724	2889	-	-	2724	2889
	65~69세	1361	1861	1361	1861	-	-
	70~74세	924	1444	924	1444	-	-
	75~79세	692	1120	692	1120	-	-
	80세 이상	499	906	499	906	-	-
지역	대도시	1473	1858	1121	1570	2888	3016
	중소도시	1246	1676	870	1365	2690	2873
	농어촌	710	1151	555	1016	1980	2256
전체		1270	1683	929	1399	2724	2889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균등화한 후 가구단위 평균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음으로 노인 개인의 특성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의 경우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이 높게 나타나 성별 소득 격차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에 속한 노인의 경우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시장소득 평균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이 주로 노인이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성인 자녀의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경우에도 가처분소득 평균은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애과정에서 경제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남성 노인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공적연금을 받기 때문일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노인 연령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노인가구주 가구

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이 낮아지는 양상이 분명하게 관찰되지만,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이 주로 가구주인 성인 자녀의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가구 시장소득과 노인 개인 특성의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생애과정에서 노년기로의 이행, 그리고 저령 노인에서 고령 노인으로의 이행은 소득의 감소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지만, 성인 자녀와의 동거는 이와 같은 연령의 영향을 크게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2-9〉 노인 개인의 특성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단위: 만원/년)

구분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개인 성	남성	1330	1839	1179	1714	2734	3011
	여성	1208	1601	792	1251	2737	2881
개인 연령	65~69세	1485	1991	1348	1883	2620	2885
	70~74세	1162	1647	942	1469	2799	2971
	75~79세	1081	1463	724	1162	2808	2925
	80세 이상	1208	1563	577	1011	2732	2897
전체		1260	1701	969	1463	2736	2914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 평균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라.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

다음으로는 노인 가구의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표 2-2-2-10〉에는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로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수급률과 급여 평균을 보고하였다. 이때 급여 평균은 비수급집단을 제외한 수급집단만의 평균으로, 대략적인 급여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노인 가구의 급여 평균인 537만원/년은 공적연금으로부터의 소득이 존재하는 50.35%의 노인 가구가 받은 공적연금의 평균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모두 대체로 재산이 많을수록 공적연금 수급률과 급여 평균이 증가한다. 이는 생애과정에서 안정된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많이 축적한 노인이 소득비례적 성격의 공적연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산 10분위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률이 74.41%, 급여 평균이 873만원/년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시장소득과 공적연금 수급률 및 급여 평균의 관계는 그다지 분명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 인구는 시장소득이 없거나 작은 은퇴자를 포함하므로, 현재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과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반드시 뚜렷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경우 시장소득이 주로 가구주인 성인 자녀의 경제활동으로부터

터 크게 결정될 것이므로, 노인 개인의 공적연금 수급과 가구 시장소득의 관계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시장소득 1~5분위 구간에서 소득 분위가 증가할수록 공적연금 수급률이 41.36%에서 67.57%까지 크게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되었음을 언급해 둔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애과정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적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노인이 노년기에도 일정한 수준의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수급률과 급여 평균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력이 약하고 공적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인, 특히 여성 노인이 성인 자녀와 더 많이 동거할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2-2-2-11〉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체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68.48%, 급여 평균은 193만원/년이다. 둘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대체로 시장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급률이 감소한다. 소득이 10분위이고 재산이 10분위인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률이 15.45%에 불과하였다. 이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하위 70%의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제도 원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한편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경우에도 시장소득 및 재산과 수급률의 부적 관계가 어느 정도 관찰되기는 하지만, 그 관계의 강도는 노인가구주 가구보다 훨씬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증가할수록 급여 평균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기초연금이 대체로 정액급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은 가구의 가구원수가 많아 균등화에 따라 급여 평균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넷째,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수급률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가 더 높지만(80.27% 대 65.71%) 급여 평균은 노인가구주 가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10만원/년 대 135만원/년).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이 자녀와의 동거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표 2-2-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가구주 가구보다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지만, 동거 가구원이 아니라 노인 본인의 시장소득과 재산만을 살펴보면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에 속한 노인의 경제력 수준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보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급여 평균이 큰 것은 노인가구주 가구에 속한 노인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거나,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가구원수가 많아 균등화 과정에서 급여 평균이 더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표 2-2-2-12〉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실태를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노인 가

구의 7.75%가 평균 376만원/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모두 시장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수급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인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수급가구를 선정하므로,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경우에도 시장소득 및 재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의 부적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노인 가구 중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 즉 시장소득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28.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소득이 없고 재산이 5분위인 가구의 수급률도 22.91%로 상당히 높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급여기준선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증가할수록 급여 평균이 감소하는 경향도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전체 노인 가구 중 시장소득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급여 평균은 411만원/년으로 전체 노인 수급가구의 급여 평균인 376만원/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초연금과 비교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률이 훨씬 낮지만 수급집단의 급여 수준은 훨씬 높다는 사실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전체 노인 가구 중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급여 평균은 193만원/년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급여 평균은 376만원/년이다. 시장소득과 재산이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급여 평균은 229만원/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급여 평균은 411만원/년이다. 즉, 기초연금과 비교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훨씬 작은 규모의 수급가구에게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집중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표 2-2-2-13〉에는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분포를 보고하였다. 전체 노인 가구의 기타 공적이전소득 수급률과 급여 평균은 각각 29.89%, 277만원/년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및 재산과 수급률 및 급여 평균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뚜렷한 패턴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표 2-2-2-14〉에서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타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전체 공적이전소득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우선 전체 노인 가구의 92.54%가 평균 556만원/년의 공적이전소득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즉,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조합으로 구성된 공적이전 체계가 거의 대부분의 노인을 포괄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소득 3~6분위, 재산 5~8분위의 중소득-중자산 계층의 공적이전 수급률이 대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빈곤층을 표적화하는 공공부조와 준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 소득비례적 성격의 공적연금 등의 수급 실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 노인 가구 중 전체 공적이전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소득 3분위-재산 6분위로, 이들의 수급률은 99.02%였다. 전체 노인 가구 중 공적이전 수급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소득 1~2분위-재산 10분위로, 이들의 수급률은 79.18%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시장소득이 없고 재산이 가장 많은 집단의 경우 공적이전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급여 평균은 1,016만원/년으로 가장 컸는데, 이는 주로 해당 분위에 속한 공적연금 수급가구의 급여 평균이 1,057만원/년으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편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공적이전 수급률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공적이전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은 노인가구주 가구 600만원/년,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372만원/년으로 상당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는 주로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주 가구가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은 공적연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2-10〉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구분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수급률								
전체 노인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26.89 457	28.93 368	41.57 409	53.88 560	57.29 716	61.93 866	65.84 1057	41.13 625
	3분위	수급률 평균	43.19 437	44.01 333	51.93 328	59.67 400	64.92 513	68.67 630	73.20 965	54.69 504
	4분위	수급률 평균	49.23 465	45.47 366	57.23 363	62.33 403	66.17 462	69.26 594	72.78 749	58.85 497
	5분위	수급률 평균	51.24 427	48.40 352	56.92 371	63.69 413	66.75 484	68.99 562	70.43 712	60.16 484
	6분위	수급률 평균	49.67 448	50.11 414	55.06 378	60.73 395	64.84 478	68.83 550	72.69 704	59.40 490
	7분위	수급률 평균	50.81 480	48.45 382	53.19 339	57.01 388	60.94 438	63.03 476	69.36 675	57.83 476
	8분위	수급률 평균	49.39 469	43.82 344	50.45 334	54.24 367	55.69 408	57.31 466	64.55 641	54.98 465
	9분위	수급률 평균	50.10 447	48.47 304	45.78 364	48.25 334	48.89 378	50.74 442	56.59 603	50.90 454
	10분위	수급률 평균	61.48 595	47.62 473	45.96 424	45.02 352	43.13 415	47.76 516	55.31 662	53.10 570
	전체	수급률 평균	38.03 460	37.57 364	48.22 374	57.01 449	59.87 543	62.64 642	66.18 817	50.35 537
노인가구주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26.97 459	28.94 370	41.88 407	54.47 562	57.88 719	62.71 867	66.59 1061	41.36 626
	3분위	수급률 평균	45.03 442	44.80 330	53.06 324	62.08 405	67.52 516	71.56 630	77.30 988	56.72 506
	4분위	수급률 평균	54.53 480	49.39 375	62.02 370	67.82 412	73.02 474	75.75 614	79.59 766	64.44 509
	5분위	수급률 평균	57.32 452	55.78 372	63.80 378	71.47 421	74.81 507	77.79 580	79.28 748	67.57 503
	6분위	수급률 평균	58.48 471	58.95 416	62.05 397	70.18 412	75.55 511	77.98 571	81.42 740	68.27 513
	7분위	수급률 평균	60.68 519	62.42 405	62.42 346	67.69 407	74.81 472	76.75 519	81.13 731	69.02 512
	8분위	수급률 평균	63.25 519	55.48 379	59.87 359	67.73 384	70.67 457	76.01 507	78.45 718	68.91 513
	9분위	수급률 평균	65.75 502	62.95 308	57.33 377	63.28 344	69.94 393	71.71 492	75.56 662	68.30 495
	10분위	수급률 평균	75.66 642	65.86 515	60.69 502	61.03 397	67.73 481	70.21 598	79.04 762	73.70 648
	전체	수급률 평균	39.41 474	38.31 370	50.33 379	61.51 465	66.04 573	70.17 680	74.41 873	53.40 557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24.89 424	28.44 305	33.58 459	40.85 477	44.87 637	47.87 857	52.59 960	35.65 610
	3분위	수급률 평균	29.20 379	38.68 357	39.11 387	37.19 327	46.37 480	48.77 630	49.79 756	38.62 480
	4분위	수급률 평균	27.31 340	32.54 325	36.03 312	41.43 345	42.32 395	45.83 475	47.06 641	36.94 410
	5분위	수급률 평균	32.70 297	33.12 285	34.44 328	39.45 367	43.40 369	41.47 460	44.79 527	37.82 377
	6분위	수급률 평균	28.84 338	34.57 409	37.67 301	39.94 330	43.45 364	47.52 469	52.69 575	39.28 400
	7분위	수급률 평균	31.81 339	30.09 318	36.81 318	39.50 332	42.25 357	43.55 370	48.46 510	39.31 373
	8분위	수급률 평균	29.36 315	34.12 297	37.51 280	38.56 332	40.39 320	39.83 394	47.01 480	38.42 365
	9분위	수급률 평균	31.75 313	38.58 300	33.54 339	34.73 318	33.11 354	37.18 380	40.10 507	35.70 387
	10분위	수급률 평균	34.04 394	36.61 427	33.62 305	34.17 297	28.77 324	35.69 430	37.13 500	34.95 425
	전체	수급률 평균	29.74 345	33.92 333	35.94 335	38.59 346	39.92 385	41.51 463	44.22 565	37.40 415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급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2-11〉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구분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수급률								
전체 노인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75.06 229	88.66 233	87.75 230	80.21 224	69.93 222	53.76 216	21.21 195	71.51 227
	3분위	수급률 평균	80.18 210	90.57 213	91.48 219	87.00 211	78.41 205	64.43 198	30.83 172	77.63 210
	4분위	수급률 평균	65.77 181	83.80 182	84.90 183	81.20 178	73.46 172	57.73 166	32.95 153	67.37 177
	5분위	수급률 평균	68.18 171	82.63 169	82.23 168	78.53 166	69.39 162	56.16 155	33.23 142	66.46 165
	6분위	수급률 평균	64.39 160	78.91 154	78.12 154	76.40 151	67.00 146	55.02 145	32.86 136	63.51 152
	7분위	수급률 평균	59.15 148	77.22 144	77.47 147	75.94 145	67.76 137	59.07 137	34.98 132	61.97 143
	8분위	수급률 평균	56.70 142	76.96 141	76.25 143	75.98 138	72.37 139	62.87 134	41.09 130	62.58 138
	9분위	수급률 평균	52.01 139	70.78 139	75.88 142	76.84 139	73.61 136	67.90 133	48.84 131	62.86 136
	10분위	수급률 평균	31.12 136	56.66 135	68.23 136	70.64 140	67.56 133	62.44 131	44.06 125	49.45 131
	전체	수급률 평균	70.22 205	85.48 207	85.32 203	79.89 189	71.22 181	58.47 171	33.01 149	68.48 193
노인가구주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74.69 232	88.68 235	87.69 233	79.89 228	69.45 226	52.72 221	19.48 202	71.13 230
	3분위	수급률 평균	79.37 219	90.77 224	91.69 225	86.78 218	77.50 214	62.31 209	25.08 188	76.88 219
	4분위	수급률 평균	60.96 195	81.95 195	83.36 193	79.62 189	69.55 184	51.87 179	25.38 166	63.30 190
	5분위	수급률 평균	62.37 185	80.44 187	80.08 178	75.90 176	63.78 174	48.89 168	22.35 157	60.99 178
	6분위	수급률 평균	56.19 174	73.15 166	73.59 165	70.72 159	58.29 156	44.33 159	20.27 148	55.26 164
	7분위	수급률 평균	47.17 161	68.41 156	71.16 155	68.71 154	56.37 150	45.09 152	20.88 141	50.80 155
	8분위	수급률 평균	40.29 157	64.26 155	68.50 154	68.52 150	59.17 152	45.69 154	21.97 147	48.09 153
	9분위	수급률 평균	31.00 160	53.99 166	65.01 152	67.00 150	58.61 153	47.56 152	27.60 159	44.67 155
	10분위	수급률 평균	10.93 155	41.08 152	49.59 151	52.78 160	43.66 152	37.92 151	15.45 149	23.09 153
	전체	수급률 평균	68.15 218	85.27 221	84.73 215	78.22 204	67.15 200	51.34 194	21.44 175	65.71 210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85.01 159	88.12 158	89.46 160	87.46 156	80.05 155	72.69 154	51.71 148	80.53 157
	3분위	수급률 평균	86.31 148	89.23 143	89.11 148	89.02 144	84.95 143	79.05 140	63.63 137	83.51 145
	4분위	수급률 평균	85.64 140	89.91 143	91.75 142	87.21 139	87.06 139	78.89 137	61.54 132	83.33 139
	5분위	수급률 평균	85.90 140	87.17 136	89.26 139	86.70 136	85.64 134	78.89 129	64.71 126	82.95 136
	6분위	수급률 평균	83.77 138	89.03 136	89.41 134	88.90 136	84.42 131	79.94 128	61.73 127	82.23 134
	7분위	수급률 평균	82.26 134	88.81 131	88.67 135	87.80 134	83.09 126	78.91 125	60.03 126	80.48 130
	8분위	수급률 평균	80.40 132	87.51 133	86.92 132	84.64 127	85.87 129	78.92 124	65.19 122	79.82 128
	9분위	수급률 평균	76.65 129	82.25 127	87.39 134	85.69 131	84.85 126	81.04 126	67.31 121	78.75 127
	10분위	수급률 평균	70.17 130	66.07 129	83.85 128	82.75 131	81.51 127	75.62 125	65.96 121	72.68 125
	전체	수급률 평균	82.59 140	86.51 138	88.74 140	86.75 136	84.36 132	78.50 129	63.84 125	80.27 135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급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음영으로 표시한 셀은 수급가구가 30개 미만인 셀로, 수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2-12〉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구분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수급률								
전체 노인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28.22 411	22.91 352	11.11 332	2.32 318	1.00 336	0.54 316	0.33 274	15.38 395
	3분위	수급률 평균	10.33 373	9.98 318	4.13 329	1.96 322	1.30 326	0.63 291	0.60 249	5.17 356
	4분위	수급률 평균	5.65 267	8.05 269	3.58 265	2.68 280	1.50 232	1.09 284	0.64 267	3.48 267
	5분위	수급률 평균	3.46 261	3.88 240	2.66 237	1.68 256	1.27 257	0.54 209	0.38 190	2.10 251
	6분위	수급률 평균	2.43 235	3.17 242	1.89 220	1.66 239	1.11 265	0.68 234	0.55 316	1.63 240
	7분위	수급률 평균	1.59 201	1.44 178	1.64 170	1.02 213	0.74 229	0.64 210	0.30 208	1.07 199
	8분위	수급률 평균	1.41 206	0.44 221	1.11 243	0.91 208	0.90 173	0.78 223	0.40 245	0.92 213
	9분위	수급률 평균	0.74 216	0.69 350	1.05 227	1.02 204	0.88 211	0.82 204	0.52 171	0.79 208
	10분위	수급률 평균	0.42 238	0.73 189	0.57 213	1.07 132	0.20 317	0.58 256	0.26 233	0.42 224
	전체	수급률 평균	16.45 397	14.34 340	6.49 319	1.91 289	1.06 282	0.67 262	0.42 247	7.75 376
노인가구주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28.05 408	22.64 348	10.74 326	2.16 320	0.85 340	0.46 320	0.30 208	15.26 392
	3분위	수급률 평균	9.17 373	9.21 309	3.91 332	1.59 358	1.05 347	0.57 278	0.53 244	4.62 357
	4분위	수급률 평균	4.80 270	8.20 262	3.22 274	1.83 286	1.28 257	0.86 347	0.43 259	2.96 273
	5분위	수급률 평균	2.85 266	3.45 268	2.02 282	0.90 292	0.90 241	0.48 239	0.34 181	1.63 266
	6분위	수급률 평균	1.54 264	2.93 274	1.26 236	1.30 252	0.84 309	0.78 250	0.47 389	1.18 268
	7분위	수급률 평균	1.07 196	2.09 176	0.81 212	0.70 236	0.37 233	0.28 181	0.07 117	0.66 204
	8분위	수급률 평균	0.52 249	0.98 221	0.92 228	0.75 204	0.68 187	0.61 149	0.00 -	0.55 209
	9분위	수급률 평균	0.37 251	0.90 389	0.27 221	0.39 228	0.12 356	0.60 190	0.30 156	0.36 222
	10분위	수급률 평균	0.28 353	0.00 -	0.43 114	0.00 -	0.00 -	0.63 134	0.21 247	0.27 240
	전체	수급률 평균	17.65 399	15.85 339	6.67 322	1.63 312	0.85 308	0.55 277	0.31 237	8.59 381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32.62 474	31.24 453	20.60 403	5.91 302	4.15 321	1.98 300	0.98 627	18.14 450
	3분위	수급률 평균	19.11 373	15.13 353	6.65 311	5.47 226	3.05 276	1.04 340	0.97 265	9.49 349
	4분위	수급률 평균	9.20 260	7.52 295	5.20 241	5.92 272	2.30 185	1.91 180	1.42 276	5.53 254
	5분위	수급률 평균	5.34 252	4.78 199	4.77 175	4.11 231	2.36 275	0.74 147	0.48 207	3.52 230
	6분위	수급률 평균	4.54 211	3.60 198	3.44 205	2.47 223	1.65 221	0.45 170	0.72 207	2.65 211
	7분위	수급률 평균	2.60 205	0.59 185	3.11 151	1.55 196	1.24 228	1.15 220	0.72 225	1.74 197
	8분위	수급률 평균	2.70 194	0.00 -	1.39 257	1.09 211	1.14 164	0.93 268	0.90 245	1.37 214
	9분위	수급률 평균	1.17 203	0.54 306	1.86 228	1.59 199	1.45 201	0.97 209	0.71 177	1.16 204
	10분위	수급률 평균	0.69 149	1.17 189	0.68 265	1.79 132	0.31 317	0.55 331	0.29 225	0.56 217
	전체	수급률 평균	9.28 370	6.88 358	5.48 301	3.07 239	1.74 241	0.99 238	0.69 259	4.20 332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급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음영으로 표시한 셀은 수급가구가 30개 미만인 셀로, 수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2-13〉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기타 공적이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구분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수급률 평균								
전체 노인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19.00 338	20.61 320	18.32 400	15.91 481	14.81 527	14.60 470	14.79 452	17.55 393
	3분위	수급률 평균	63.31 211	72.90 209	76.28 217	63.27 223	44.96 252	37.50 267	26.10 315	58.44 225
	4분위	수급률 평균	48.89 236	61.92 214	61.35 233	50.04 246	33.60 318	29.42 343	25.40 360	44.77 259
	5분위	수급률 평균	40.96 211	49.09 206	49.19 204	40.44 224	30.84 287	28.54 311	24.92 314	37.57 237
	6분위	수급률 평균	29.78 217	39.16 220	37.63 218	33.32 234	27.89 280	29.66 304	24.50 303	30.73 247
	7분위	수급률 평균	27.33 236	33.62 194	35.38 206	32.30 229	28.35 230	26.21 258	25.16 274	28.91 236
	8분위	수급률 평균	26.22 237	31.72 215	33.08 234	28.91 223	25.64 288	27.70 279	24.62 273	27.41 254
	9분위	수급률 평균	21.92 257	27.38 215	28.41 259	30.62 214	25.70 259	25.74 270	23.79 256	25.35 252
	10분위	수급률 평균	14.45 298	23.07 240	22.94 213	24.06 299	20.86 308	19.75 253	19.98 250	19.11 267
	전체	수급률 평균	30.34 259	36.05 242	38.07 258	33.41 272	26.07 322	24.41 322	21.48 325	29.89 277
노인가구주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18.38 347	20.04 325	17.86 409	15.53 488	14.38 534	14.47 475	14.66 451	17.09 400
	3분위	수급률 평균	63.88 218	76.07 216	77.84 220	64.62 223	46.81 250	39.02 267	26.33 325	59.91 229
	4분위	수급률 평균	47.23 246	62.64 239	62.81 237	50.48 260	32.43 336	27.67 366	24.50 376	44.19 269
	5분위	수급률 평균	38.13 227	48.68 219	47.51 219	38.78 234	28.53 310	26.32 342	22.97 325	35.40 253
	6분위	수급률 평균	26.29 242	36.56 268	36.44 244	30.65 255	27.54 302	27.54 336	22.30 325	28.45 273
	7분위	수급률 평균	25.25 267	35.44 241	34.80 221	30.26 263	25.63 258	24.03 280	22.50 321	26.95 265
	8분위	수급률 평균	22.74 288	34.48 275	34.65 246	29.84 248	23.10 325	28.03 348	23.38 314	26.39 292
	9분위	수급률 평균	19.57 311	32.43 259	29.79 292	31.03 227	24.36 291	26.59 314	21.25 312	24.34 292
	10분위	수급률 평균	12.14 391	20.04 232	19.34 286	22.14 432	21.40 389	20.72 319	19.33 283	17.28 335
	전체	수급률 평균	28.78 276	35.14 261	37.59 271	32.64 290	24.97 348	23.35 355	20.02 360	28.98 295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35.42 219	38.16 236	30.15 264	24.34 380	23.71 447	17.09 401	17.16 455	28.32 289
	3분위	수급률 평균	59.00 159	51.51 141	58.78 165	50.59 222	31.77 267	26.95 266	24.84 254	46.84 189
	4분위	수급률 평균	55.75 205	59.56 127	54.92 213	48.39 190	37.67 262	35.73 276	28.79 308	47.02 220
	5분위	수급률 평균	49.60 172	49.95 180	54.65 162	45.61 198	37.52 235	35.50 238	30.57 290	44.10 198
	6분위	수급률 평균	38.03 176	43.73 150	40.58 160	39.18 198	28.58 238	34.59 243	29.55 267	35.90 201
	7분위	수급률 평균	31.32 187	31.24 123	36.40 180	35.66 183	32.03 201	29.29 233	29.89 211	32.15 195
	8분위	수급률 평균	31.25 184	29.43 156	30.92 216	27.83 192	28.23 258	27.40 212	26.19 227	28.62 211
	9분위	수급률 평균	24.67 207	23.92 174	26.95 221	30.26 201	26.70 237	25.19 240	25.99 215	26.23 220
	10분위	수급률 평균	18.92 181	24.90 245	25.95 168	25.36 220	20.54 259	19.23 214	20.48 227	20.72 217
	전체	수급률 평균	39.71 187	40.59 161	40.89 190	36.56 207	29.63 252	27.39 244	25.37 250	33.73 212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급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음영으로 표시한 셀은 수급가구가 30개 미만인 셀로, 수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2-14〉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전체 공적이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구분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수급률								
전체 노인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87.49 543	96.04 479	97.03 497	96.32 587	94.05 688	89.53 807	79.18 1016	90.42 607
	3분위	수급률 평균	95.89 552	98.50 532	99.02 555	98.65 577	97.31 628	95.46 694	89.09 946	96.49 610
	4분위	수급률 평균	91.47 523	96.34 491	98.20 525	97.74 538	96.70 561	94.54 647	89.56 769	94.15 570
	5분위	수급률 평균	92.69 465	97.11 433	97.34 469	97.51 501	96.69 545	95.04 594	89.11 704	94.51 523
	6분위	수급률 평균	91.84 431	96.92 437	97.16 427	97.14 450	96.75 505	95.23 578	89.65 705	94.28 496
	7분위	수급률 평균	90.09 443	95.76 380	96.21 384	97.26 419	95.68 446	94.07 479	89.89 650	93.36 465
	8분위	수급률 평균	89.59 422	94.65 347	95.99 373	96.62 383	95.90 420	94.64 455	89.73 597	93.19 444
	9분위	수급률 평균	87.49 405	92.17 333	93.63 374	95.51 351	95.12 371	94.27 409	89.18 524	91.85 416
	10분위	수급률 평균	84.99 532	90.18 398	93.50 361	91.38 362	91.95 363	91.38 415	88.10 536	88.79 473
	전체	수급률 평균	89.72 515	96.28 467	97.27 486	96.94 520	95.48 567	92.96 627	86.37 765	92.54 556
노인가구주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87.26 544	96.09 478	97.06 497	96.31 593	94.05 694	89.38 817	78.88 1030	90.30 610
	3분위	수급률 평균	95.94 569	98.73 550	99.11 568	98.77 598	97.40 652	95.47 719	89.38 1005	96.64 630
	4분위	수급률 평균	90.42 564	96.03 537	98.13 558	97.90 578	96.34 608	94.50 701	89.98 828	93.78 613
	5분위	수급률 평균	92.00 509	97.38 486	97.33 507	97.58 542	96.58 602	95.45 654	89.52 786	94.40 575
	6분위	수급률 평균	90.58 487	96.91 488	96.81 475	97.07 498	96.85 581	94.38 647	89.70 788	93.72 557
	7분위	수급률 평균	88.20 522	96.03 468	95.80 423	97.17 476	95.94 526	93.65 571	90.60 767	92.75 544
	8분위	수급률 평균	87.45 524	93.68 434	94.91 430	97.47 449	95.25 514	95.00 583	89.83 745	92.46 547
	9분위	수급률 평균	85.16 518	90.07 412	92.55 435	95.78 407	95.10 459	94.96 537	89.88 680	91.22 525
	10분위	수급률 평균	83.64 659	90.65 494	90.33 482	88.51 477	91.76 518	90.45 602	89.22 763	87.63 652
	전체	수급률 평균	89.07 545	96.43 493	97.29 510	97.06 562	95.41 631	92.56 714	85.73 887	92.24 600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1-2분위	수급률 평균	93.64 505	94.27 486	96.46 477	96.57 457	93.94 563	92.20 647	84.48 788	93.27 544
	3분위	수급률 평균	95.56 422	96.92 404	97.99 409	97.45 384	96.61 453	95.42 517	87.43 605	95.33 449
	4분위	수급률 평균	95.82 366	97.39 341	98.49 378	97.15 383	97.96 399	94.72 452	87.97 541	95.61 403
	5분위	수급률 평균	94.81 333	96.56 323	97.39 343	97.27 373	97.03 381	93.75 404	87.95 463	94.85 370
	6분위	수급률 평균	94.81 306	96.93 346	98.04 311	97.30 345	96.55 353	97.21 421	89.53 516	95.54 361
	7분위	수급률 평균	93.72 301	95.40 264	96.94 316	97.39 325	95.34 339	94.68 349	88.61 437	94.37 337
	8분위	수급률 평균	92.68 282	95.45 276	97.47 297	95.62 304	96.56 326	94.31 334	89.60 410	94.06 325
	9분위	수급률 평균	90.22 279	93.62 281	94.78 310	95.26 301	95.14 306	93.82 326	88.57 386	92.40 323
	10분위	수급률 평균	87.59 298	89.90 339	96.15 266	93.33 287	92.06 272	91.88 317	87.24 358	89.81 318
	전체	수급률 평균	93.60 349	95.57 337	97.19 348	96.48 347	95.73 359	94.08 385	88.08 449	93.83 372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급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음으로 <표 2-2-2-15>과 <표 2-2-2-16>에서는 노인 가구 및 개인의 특성별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표 2-2-2-15>를 살펴보면, 가구주 성별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의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생애과정에서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인 가능성이 큰 남성 노인가구주는 여성 노인가구주보다 공적연금 수급률(67.12% 대 33.43%)과 급여 평균(608만원/년 대 405만원/년)이 훨씬 크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노년기 빈곤위험이 큰 여성 노인가구주는 남성 노인가구주보다 기초연금 수급률(76.56% 대 58.26%)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12.88% 대 5.64%)이 높다. 전체 공적이전소득을 종합하면, 남성 노인가구주의 수급률과 급여 평균이(94.00%, 688만원/년) 여성 노인가구주보다(89.68%, 467만원/년) 컸다. 즉, 여성 노인가구주보다 시장소득 수준이 높은 남성 노인가구주가 더 많은 공적이전을 받으므로, 전체 공적이전 체계가 가구주 성별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노인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65~69세 노인가구주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68.52%이지만, 80세 이상 노인가구주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21.20%에 불과하다. 이는 시간에 따른 공적연금의 제도적 성숙을 반영한 결과로, 현재 고령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조세방식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이 높아진다. 65~69세 노인가구주의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각각 54.66%, 6.51%이지만, 80세 이상 노인가구주의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각각 76.65%, 11.63%이다. 이는 고령노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 위험 수준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저령 노인가구주가 전체 공적이전 체계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65~69세 노인가구주의 93.42%가 평균 668만원/년의 공적이전을 받지만, 80세 이상 노인가구주는 88.30%가 평균 513만원/년의 공적이전을 받는다. <표 2-2-2-8>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노인가구주 연령에 따른 시장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노인가구주 내에서 연령에 따른 빈곤 위험 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노인 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차이를 살펴보면, 공적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은 노인가구주 가구가 더 높지만(53.40% 대 37.40%, 8.59% 대 4.20%) 기초연금의 수급률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80.27% 대 65.7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에 속한 노인 개인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개인단위 급여인 공적연금을 적게 받고 기초연금을 많이 받지만, 성인 자녀와의 동거 덕분에 가구의 경제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구 빈곤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2-15〉 노인 가구의 특성별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구분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수급률	평균	수급률	평균	수급률	평균
가구주 성	남성	공적연금	59.85	579	67.12	608	35.90	399
		기초연금	63.69	183	58.26	205	81.59	1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21	375	5.64	383	3.81	336
		기타 공적이전	32.32	281	31.92	304	33.63	211
		전체 공적이전	93.97	611	94.00	688	93.89	357
	여성	공적연금	34.48	413	33.43	405	42.32	461
		기초연금	76.49	207	76.56	216	75.96	1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2.00	377	12.88	380	5.50	322
기타 공적이전		25.82	269	24.71	279	34.07	214	
	전체 공적이전	90.15	461	89.68	467	93.63	419	
가구주 연령	64세 이하	공적연금	37.40	415	-	-	37.40	415
		기초연금	80.27	135	-	-	80.27	1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20	332	-	-	4.20	332
		기타 공적이전	33.73	212	-	-	33.73	212
		전체 공적이전	93.83	372	-	-	93.83	372
	65~69세	공적연금	68.52	613	68.52	613	-	-
		기초연금	54.66	175	54.66	175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51	424	6.51	424	-	-
		기타 공적이전	26.65	303	26.65	303	-	-
		전체 공적이전	93.42	668	93.42	668	-	-
	70~74세	공적연금	65.61	506	65.61	506	-	-
		기초연금	64.35	213	64.35	213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01	377	8.01	377	-	-
		기타 공적이전	32.00	306	32.00	306	-	-
		전체 공적이전	94.30	633	94.30	633	-	-
	75~79세	공적연금	46.88	468	46.88	468	-	-
		기초연금	73.60	226	73.60	226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9.50	361	9.50	361	-	-
		기타 공적이전	28.84	247	28.84	247	-	-
		전체 공적이전	91.79	535	91.79	535	-	-
	80세 이상	공적연금	21.20	666	21.20	666	-	-
		기초연금	76.65	230	76.65	230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63	364	11.63	364	-	-
		기타 공적이전	29.12	320	29.12	320	-	-
		전체 공적이전	88.30	513	88.30	513	-	-
지역	대도시	공적연금	50.98	567	54.37	591	37.36	425
		기초연금	64.29	189	60.83	206	78.20	1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43	394	9.36	400	4.67	349
		기타 공적이전	29.35	280	28.35	301	33.36	210
		전체 공적이전	91.08	577	90.58	629	93.12	376
	중소도시	공적연금	50.08	543	53.50	567	36.89	409
		기초연금	68.69	191	65.48	210	81.02	1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29	371	8.19	378	3.84	315
		기타 공적이전	29.85	280	28.80	300	33.87	215
		전체 공적이전	92.94	553	92.65	602	94.02	366
	농어촌	공적연금	49.29	415	50.32	417	40.85	395
		기초연금	81.05	210	80.25	219	87.58	14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15	324	7.57	325	3.74	310
		기타 공적이전	31.71	260	31.32	268	34.99	207
		전체 공적이전	95.86	502	95.75	517	96.75	380
전체		공적연금	50.35	537	53.40	557	37.40	415
		기초연금	68.48	193	65.71	210	80.27	1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75	376	8.59	381	4.20	332
		기타 공적이전	29.89	277	28.98	295	33.73	212
		전체 공적이전	92.54	556	92.24	600	93.83	372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급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2-16〉 노인 개인의 특성별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구분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수급률	평균	수급률	평균	수급률	평균
개인 성	남성	공적연금	65.70	596	67.01	607	53.45	459
		기초연금	60.01	199	58.80	206	71.35	1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49	377	5.74	381	3.15	312
		기타 공적이전	33.19	295	32.21	303	42.37	234
		전체 공적이전	94.18	668	94.06	689	95.24	479
	여성	공적연금	46.32	502	49.63	522	34.19	396
		기초연금	72.62	201	69.79	222	83.02	13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86	368	8.79	373	4.47	332
		기타 공적이전	29.63	264	29.02	282	31.87	201
		전체 공적이전	92.37	526	92.02	574	93.68	351
개인 연령	65~69세	공적연금	71.17	601	72.87	616	57.09	446
		기초연금	55.70	181	54.48	188	65.84	1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16	407	5.38	412	3.32	343
		기타 공적이전	29.26	296	28.51	308	35.43	214
		전체 공적이전	94.43	674	94.57	699	93.28	459
	70~74세	공적연금	65.54	493	67.39	512	51.69	304
		기초연금	65.30	209	63.69	220	77.29	1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52	369	6.93	371	3.46	329
		기타 공적이전	33.02	282	32.53	295	36.68	200
		전체 공적이전	94.47	611	94.51	642	94.15	374
	75~79세	공적연금	45.77	465	48.15	490	34.24	295
		기초연금	74.39	213	72.45	230	83.79	1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79	356	8.47	359	4.48	331
		기타 공적이전	30.82	233	30.19	243	33.90	189
		전체 공적이전	91.96	512	91.66	553	93.43	320
	80세 이상	공적연금	26.27	642	26.31	671	26.18	572
		기초연금	79.73	201	76.71	230	87.04	14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85	355	10.57	361	4.71	320
		기타 공적이전	32.08	289	31.58	316	33.31	227
		전체 공적이전	90.88	498	89.26	550	94.80	382
전체		공적연금	54.51	550	57.57	567	38.97	418
		기초연금	67.29	200	64.77	215	80.12	13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86	371	7.40	376	4.15	328
		기타 공적이전	31.13	278	30.48	293	34.48	211
		전체 공적이전	93.14	587	92.95	627	94.07	383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개인이 속한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개인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급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2-16〉에서 노인 개인 특성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모두 남성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 노인의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이는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생애과정에서 공적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는 노동경력을 갖기가 어렵고 노년기 빈곤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노인의 연령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

가할수록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아지고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공적연금 수급률을 기초연금 수급률의 증가가 일정하게 상쇄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적이전 체계의 대상포괄성은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특히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적이전 급여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65~69세 노인은 94.43%가 평균 674만원/년의 공적이전소득을 받지만, 80세 이상 노인은 90.88%가 평균 498만원/년의 공적이전소득을 받는다.

〈표 2-2-2-17〉 시장소득 분위별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분포

(단위: %)

구분	수급 여부			시장소득 분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초 보장	1-2분 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전체 노인 가구	×	×	×	11.32	5.03	7.97	7.58	7.71	8.59	8.94	10.51	13.57	9.34
	○	×	×	15.68	16.89	24.37	25.72	28.61	29.34	28.40	26.52	36.93	21.43
	×	○	×	34.52	36.47	30.74	30.82	31.73	32.87	35.48	38.06	33.08	33.93
	×	×	○	1.33	0.37	0.20	0.13	0.08	0.05	0.07	0.04	0.01	0.64
	○	○	×	23.10	36.45	33.43	33.78	30.31	28.13	26.26	24.12	16.00	27.54
	○	×	○	0.16	0.09	0.08	0.11	0.08	0.05	0.01	0.06	0.04	0.11
	×	○	○	11.69	3.44	2.23	1.31	1.07	0.66	0.53	0.49	0.24	5.73
	○	○	○	2.19	1.27	0.97	0.55	0.39	0.31	0.31	0.19	0.13	1.28
	계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노인가구주 가구	×	×	×	11.43	4.73	8.08	7.44	7.99	8.88	9.63	11.02	14.71	9.49
	○	×	×	15.94	17.96	28.36	31.32	36.59	40.28	42.23	44.20	62.14	23.94
	×	○	×	34.28	35.21	25.52	23.92	23.05	21.79	21.10	20.52	11.46	30.03
	×	×	○	1.34	0.34	0.17	0.12	0.04	0.00	0.04	0.01	0.00	0.73
	○	○	×	23.09	37.49	35.08	35.69	31.19	28.38	26.49	23.90	11.43	27.94
	○	×	○	0.16	0.09	0.09	0.12	0.12	0.04	0.01	0.10	0.06	0.12
	×	○	○	11.59	3.00	1.79	0.95	0.65	0.31	0.32	0.15	0.13	6.35
	○	○	○	2.17	1.18	0.91	0.44	0.37	0.31	0.18	0.10	0.07	1.39
	계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	×	×	8.72	7.45	7.55	7.99	7.08	8.11	8.11	10.07	12.56	8.71
	○	×	×	9.41	8.40	8.77	8.83	10.52	11.22	11.95	11.08	14.73	10.72
	×	○	×	40.34	46.46	51.21	51.64	51.44	51.21	52.58	53.38	52.13	50.55
	×	×	○	1.23	0.56	0.32	0.15	0.17	0.13	0.10	0.07	0.02	0.26
	○	○	×	23.39	28.20	26.95	28.02	28.32	27.72	25.99	24.32	20.02	25.82
	○	×	○	0.11	0.09	0.04	0.08	0.00	0.06	0.01	0.03	0.02	0.05
	×	○	○	14.06	6.91	3.98	2.40	2.03	1.24	0.79	0.78	0.34	3.08
	○	○	○	2.74	1.93	1.19	0.89	0.44	0.31	0.46	0.27	0.18	0.82
	계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조합별 비율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2-18〉 재산 분위별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분포

(단위: %)

구분	수급 여부			재산 분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초 보장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전체 노인 가구	×	×	×	12.21	5.18	4.25	4.57	6.12	9.03	16.50	9.34
	○	×	×	15.87	8.36	10.05	15.38	22.57	32.39	50.38	21.43
	×	○	×	35.76	45.78	42.58	37.17	33.33	28.00	17.16	33.93
	×	×	○	1.53	0.87	0.32	0.08	0.03	0.04	0.03	0.64
	○	○	×	19.71	26.33	36.63	40.97	36.91	29.91	15.54	27.54
	○	×	○	0.18	0.11	0.06	0.08	0.06	0.07	0.08	0.11
	×	○	○	12.47	10.59	4.64	1.17	0.65	0.29	0.14	5.73
	○	○	○	2.27	2.77	1.47	0.59	0.32	0.27	0.18	1.28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노인가구주 가구	×	×	×	12.73	5.00	4.12	4.26	6.04	9.29	16.96	9.49
	○	×	×	17.24	8.65	10.75	17.38	26.71	39.26	61.49	23.94
	×	○	×	32.83	43.91	40.46	33.21	27.46	20.32	8.53	30.03
	×	×	○	1.68	0.95	0.33	0.06	0.02	0.03	0.02	0.73
	○	○	×	19.55	26.58	38.00	43.51	38.94	30.59	12.71	27.94
	○	×	○	0.19	0.13	0.07	0.08	0.08	0.09	0.09	0.12
	×	○	○	13.35	11.83	4.76	0.96	0.43	0.20	0.08	6.35
	○	○	○	2.43	2.94	1.51	0.54	0.32	0.24	0.12	1.39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	×	×	9.06	6.07	4.97	5.85	6.39	8.30	15.29	8.71
	○	×	×	7.63	6.94	5.99	7.16	9.19	13.14	20.78	10.72
	×	○	×	53.35	55.05	54.89	53.35	52.30	49.59	40.16	50.55
	×	×	○	0.64	0.48	0.26	0.19	0.05	0.05	0.05	0.26
	○	○	×	20.68	25.07	28.66	30.58	30.38	27.99	23.08	25.82
	○	×	○	0.08	0.00	0.05	0.05	0.02	0.01	0.04	0.05
	×	○	○	7.22	4.48	3.95	2.02	1.34	0.56	0.28	3.08
	○	○	○	1.34	1.91	1.24	0.80	0.34	0.37	0.32	0.82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조합별 비율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조합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2-2-2-17〉과 〈표 2-2-2-18〉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어느 하나도 수급하지 않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이하 ‘완전 비수급’)가 전체 노인 가구의 9.34%임을 알 수 있다. 즉, 노인이 존재하는 10 가구 중 1가구는 세 가지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소득과 재산 분위별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완전 비수급 집단의 비율이 시장소득과 재산이 아예 없거나 많은 계층에게 높게, 시장소득과 재산이 중간 수준인 계층에게 낮게 나타나는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전체 노인 가구를 시장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시장소득이 없는 1~2분위의 완전 비수급 비율은 11.32%이고, 소득 3~10분위 구간에서는 완전 비수급 비율이 5.03%에서 13.5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 가구는 소득조사를 실시하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공적연금의 수급률도 특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완전 비수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시장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노인 가구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가능성은 비교적 크지만 공적연금의 수급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완전 비수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유사하게, 재산이 없는 노인 가구는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고 재산이 많은 노인 가구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낮기 때문에 완전 비수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공적연금만 받는 집단의 비율은 전체 노인 가구의 21.43%인데, 대체로 소득과 재산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장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 노인 가구주 가구와 재산이 가장 많은 10분위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 공적연금만 받는 집단의 비율이 각각 60%를 넘는다. 즉, 공적연금만 받는 노인 가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 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세 가지 제도의 수급 조합별 집단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이다. 전체 노인 가구 중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의 비율은 33.93%이고, 노인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시장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만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시장소득과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소득이 없는 1~2분위 노인가구주 가구보다는 소득 3분위의 노인가구주 가구가, 재산이 없는 1~4분위 노인가구주 가구보다는 재산 5분위의 노인가구주 가구가 기초연금만 받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노인 가구 중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받지 않는 집단의 비율은 27.54%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적연금을 받을 만큼의 안정된 노동경력을 갖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만큼 현재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는 않다. 따라서 대체로 시장소득 3~5분위, 재산 6~8분위의 중간 계층에서 공적연금·기초연금 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 가구의 비율은 5.73%인데, 특히 시장소득이 없는 집단과 재산이 없는 집단의 공적연금 비수급-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이 각각 11.69%, 12.4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 하에서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보여준다. 전체 노인 가구 중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은 50.35%이지만, 공적연금 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은 90.02%이고,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은 90.66%이다. 즉, 대상포괄성의 측면에

서 일차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거의 절반에 이르지만, 기초연금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약 10%로 크게 축소시킨다. 기초연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추가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효과는 0.64%에 불과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는 5.73%의 빈곤한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를 살펴보았다면, <표 2-2-2-19>에서는 비노인의 공적연금 가입 실태를 살펴보았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 가입률은 26~39세 71.71%, 40~49세 72.63%, 50~64세 55.66%로 나타났다. 즉, 40대 이하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70%를 넘지만 50~64세의 가입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이다. 게다가 40~49세 공적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0.03년으로 26~39세의 4.80년보다 상당히 길지만, 50~64세의 평균 가입기간은 11.49년으로 40~49세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편으로는 중장년층의 공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당분간은 안정적인 공적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방식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시장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시장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과 가입기간이 증가하는 관계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전체 50~64세 인구의 공적연금 가입률과 평균 가입기간은 각각 55.66%, 11.49년이지만, 시장소득이 10분위인 50~64세 인구의 공적연금 가입률과 평균 가입기간은 각각 71.19%, 18.73년으로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장소득에 반영된 중장년기 경제활동의 질이 공적연금의 가입과 수급을 매개로 노년기 소득 수준에 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재산과 공적연금 가입률의 관계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는데, 다만 재산이 많을수록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증가하는 패턴은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표 2-2-2-20>에서는 노년기로의 이행을 앞둔 5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공적연금 가입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때 일정한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확보되어야 적절한 수준의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순 가입률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가입률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5~64세 인구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46.4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1.43년이며, 특히 20년 이상 공적연금 가입률은 9.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금까지 공적연금이 꾸준히 성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적연금의 대상포괄성과 급여적절성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장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과 평균 가입기간, 20년 이상 가입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시장소득이 없는 55~64세 인구의 가입률과 가입기간은 각각 29.55%, 6.10년이었지만, 시장소득 10분위의 가입률과 가입기간은 각각 63.20%, 19.51년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20년 이상 가입률의 경우, 시장소득 1~8분위 구간에서는 그 값이 1.96%에서 10.86%로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시장소득 9분위와 10분위는 각각 19.76%, 32.9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중장년기 일자리의 질에 따른 공적연금 수급의 불평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

성이 있는 것이다. 소득과 공적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의 관계에 비하면 재산과 공적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여전히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19〉 개인의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공적연금 가입률,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단위: %, 년)

구분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26~39세	1-2분위	가입률	55.40	56.74	60.66	62.60	61.02	61.24	63.92	57.31
		평균 가입기간	2.41	2.64	2.89	3.34	3.71	3.59	3.35	2.71
	3분위	가입률	53.79	58.59	57.08	58.83	58.34	61.30	59.59	55.98
		평균 가입기간	2.56	2.45	2.84	3.04	3.37	3.39	2.93	2.79
	4분위	가입률	58.91	64.12	62.68	61.07	61.09	61.60	64.65	60.41
		평균 가입기간	3.01	3.03	3.25	3.52	3.84	3.63	3.42	3.25
	5분위	가입률	65.16	65.93	66.98	66.62	66.21	65.83	67.75	65.89
		평균 가입기간	3.51	3.28	3.75	4.19	4.32	4.01	3.61	3.75
	6분위	가입률	69.39	71.71	70.36	68.67	68.19	69.26	70.69	69.39
		평균 가입기간	4.08	3.78	4.32	4.86	4.97	4.67	4.24	4.36
	7분위	가입률	74.45	73.88	74.00	71.00	70.50	70.69	71.59	72.85
		평균 가입기간	4.63	4.43	5.15	5.58	5.79	5.60	5.26	5.08
	8분위	가입률	79.81	76.90	78.42	76.58	73.49	73.61	73.59	77.11
		평균 가입기간	4.98	5.22	5.37	5.85	6.14	6.00	5.80	5.45
40~49세	9분위	가입률	83.36	83.60	83.02	82.05	78.87	76.90	75.51	80.75
		평균 가입기간	5.39	5.31	5.57	5.79	6.32	6.15	6.16	5.75
	10분위	가입률	84.23	81.33	83.42	84.02	82.29	79.44	76.21	81.37
		평균 가입기간	5.58	5.73	5.61	5.99	6.13	6.13	5.85	5.81
	전체	가입률	71.28	71.90	72.33	72.01	71.69	72.13	72.48	71.71
		평균 가입기간	4.36	4.29	4.64	5.13	5.52	5.44	5.27	4.80
	1-2분위	가입률	51.85	51.54	61.84	66.22	65.57	66.51	63.14	56.32
		평균 가입기간	4.12	4.73	5.34	5.98	6.76	7.65	7.93	5.16
	3분위	가입률	55.85	58.75	62.09	62.40	63.27	62.91	62.33	59.04
		평균 가입기간	4.71	5.18	5.43	6.21	6.88	7.34	7.93	5.68
	4분위	가입률	64.99	64.45	66.48	66.36	65.65	67.76	67.74	65.85
		평균 가입기간	5.41	5.72	6.57	7.06	7.47	8.04	8.26	6.46
	5분위	가입률	70.84	72.75	71.81	72.15	71.40	72.71	71.74	71.49
		평균 가입기간	6.47	6.48	7.46	7.83	8.30	8.57	8.92	7.40
50~64세	6분위	가입률	74.29	70.50	74.38	73.35	73.37	73.90	74.26	73.92
		평균 가입기간	7.62	7.84	8.47	9.20	9.84	9.54	9.84	8.64
	7분위	가입률	76.35	74.78	76.76	75.62	76.02	75.14	75.19	75.93
		평균 가입기간	8.72	8.82	9.75	10.37	11.00	11.08	11.31	9.99
	8분위	가입률	78.39	78.64	78.50	78.23	76.72	75.47	74.38	77.07
		평균 가입기간	10.24	10.48	11.04	11.58	12.48	12.68	12.83	11.61
	9분위	가입률	80.30	78.91	80.96	80.00	78.26	77.38	76.03	78.56
		평균 가입기간	11.66	12.01	12.54	12.80	13.46	13.63	13.63	12.89
	10분위	가입률	83.61	81.36	82.28	84.20	81.77	81.10	79.93	81.64
		평균 가입기간	13.19	13.92	14.19	14.22	14.87	14.95	14.94	14.41
	전체	가입률	69.67	70.02	73.22	74.19	74.46	75.17	75.12	72.63
		평균 가입기간	8.08	8.53	9.22	10.03	11.23	11.93	12.61	10.03
50~64세	1-2분위	가입률	35.07	33.93	38.16	39.30	37.30	35.45	34.05	35.83
		평균 가입기간	4.74	5.26	6.24	7.00	7.82	8.09	9.37	5.93
	3분위	가입률	45.91	43.37	44.26	46.63	45.20	44.20	41.24	45.01
		평균 가입기간	5.86	6.46	7.31	8.01	8.61	9.62	10.56	7.36
	4분위	가입률	52.67	46.81	50.22	49.65	51.01	49.01	48.50	50.88
		평균 가입기간	6.66	6.68	7.85	8.49	9.46	10.27	10.84	8.04
	5분위	가입률	55.78	52.27	53.00	53.38	52.89	52.63	51.77	53.89
		평균 가입기간	7.36	7.59	8.41	9.24	10.09	10.84	11.08	8.82
	6분위	가입률	58.35	53.47	55.14	56.15	56.16	54.97	52.32	56.19
		평균 가입기간	8.05	8.20	9.11	9.97	10.66	11.19	11.73	9.51
	7분위	가입률	60.33	59.08	58.82	59.35	58.13	58.06	54.89	58.75
		평균 가입기간	8.83	9.04	10.32	10.95	11.58	11.92	12.52	10.49
	8분위	가입률	63.17	62.21	62.21	62.86	62.28	61.27	59.88	62.12
		평균 가입기간	10.00	9.63	11.49	12.15	13.41	14.01	14.27	12.13
	9분위	가입률	66.26	63.04	67.19	69.01	67.60	67.96	65.34	66.99
		평균 가입기간	12.49	13.00	14.08	14.81	16.32	16.81	17.24	15.19
50~64세	10분위	가입률	70.41	67.76	72.65	72.58	74.29	73.16	69.00	71.19
		평균 가입기간	16.71	17.34	18.02	18.31	19.30	19.78	19.58	18.73
50~64세	전체	가입률	53.37	50.89	54.35	56.91	57.93	58.63	57.79	55.66
		평균 가입기간	8.74	8.87	10.26	11.44	13.06	14.33	15.44	11.49

주: 26~39세, 40~49세, 50~64세 개인의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로, 첫 번째 행은 해당 셀의 전체 개인 중 공적연금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두 번째 행은 해당 셀의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을 의미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2-20〉 55~64세 개인의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공적연금 가입률,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20년 이상 가입률

(단위: %, 년)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가입률	28.98	28.85	32.22	31.82	30.07	28.78	27.42	29.55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4.91	5.40	6.42	7.08	7.69	7.82	9.14	6.10
	20년 이상 가입률	1.27	1.29	2.34	2.43	2.70	2.66	4.15	1.96
3분위	가입률	39.06	36.43	37.33	38.81	37.03	36.05	33.50	37.60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6.18	6.72	7.64	8.23	8.62	9.57	10.47	7.63
	20년 이상 가입률	2.15	2.40	3.11	3.61	3.41	4.62	6.23	3.27
4분위	가입률	44.44	38.76	42.20	41.31	42.72	40.09	40.13	42.50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6.82	6.46	8.13	8.65	9.67	10.37	11.01	8.26
	20년 이상 가입률	2.46	1.95	3.60	3.38	4.50	5.95	7.13	3.77
5분위	가입률	47.60	44.33	44.84	44.61	43.78	43.00	43.20	45.24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7.52	7.78	8.45	9.52	10.19	11.16	11.31	9.04
	20년 이상 가입률	3.09	3.07	4.21	4.88	5.22	6.69	7.60	4.67
6분위	가입률	49.58	46.14	47.18	46.72	46.86	45.51	43.82	47.25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8.29	8.19	9.22	10.09	10.59	11.28	11.93	9.70
	20년 이상 가입률	3.98	3.78	4.32	5.34	6.46	7.39	8.99	5.54
7분위	가입률	50.96	50.15	50.62	50.63	48.32	48.71	45.76	49.54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8.79	9.04	10.27	11.12	11.69	11.98	12.64	10.57
	20년 이상 가입률	4.63	5.21	6.33	8.16	8.47	9.66	10.51	7.28
8분위	가입률	53.91	52.41	52.91	54.03	53.18	51.89	50.21	52.82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10.12	8.67	11.19	11.83	13.28	14.01	14.00	12.04
	20년 이상 가입률	7.34	5.20	8.53	9.88	12.94	15.02	14.81	10.86
9분위	가입률	57.82	55.67	58.88	60.75	59.20	59.05	56.25	58.38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12.24	12.76	14.16	14.86	16.38	16.96	17.57	15.21
	20년 이상 가입률	12.50	13.59	16.94	19.31	23.14	23.97	25.00	19.76
10분위	가입률	61.42	56.90	66.26	66.24	68.62	66.12	60.06	63.20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17.09	18.00	18.89	19.29	20.43	20.70	20.47	19.51
	20년 이상 가입률	24.75	26.79	32.57	33.59	38.60	38.11	34.33	32.96
전체	가입률	44.74	42.55	45.72	47.55	48.16	48.49	47.68	46.42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	8.75	8.62	10.16	11.39	12.91	14.21	15.37	11.43
	20년 이상 가입률	5.26	4.87	6.94	8.84	11.73	14.56	17.07	9.49

주: 55~64세 개인의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로, 첫 번째 행은 해당 셀의 전체 개인 중 공적연금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두 번째 행은 해당 셀의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을, 세 번째 행은 해당 셀의 전체 개인 중 공적연금 20년 이상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마.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다음으로는 노인 가구 및 개인의 빈곤 실태를 분석하였다. 전체 노인 가구에서 중위소득 50%,

25%를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9.70%, 28.37%였고, 전체 노인 개인 중에서 중위소득 50%, 25%를 기준으로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은 각각 53.59%, 32.82%로 나타났다(〈표 2-2-2-21〉, 〈표 2-2-2-22〉). 즉, 일반적인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절반의 노인 가구와 개인이 빈곤한 것이다.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훨씬 낮게 나타나 성인 자녀와의 동거가 빈곤 위험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노인가구주 가구의 중위소득 50%, 25% 기준 빈곤율은 각각 56.94%, 32.71%인 반면,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각각 18.86%, 9.90%로 상당히 낮았다. 한편 가구 및 개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 고령 가구주, 농어촌 거주 가구, 여성 노인, 고령 노인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여성 노인가구주, 80세 이상 노인가구주의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은 각각 72.45%, 75.2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2-2-2-21〉 노인 가구 가처분소득 빈곤율

(단위: %)

구분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가구주 성	남성	39.43	20.02	46.28	23.44	16.86	8.75
	여성	66.86	42.33	72.45	46.20	25.42	13.66
가구주 연령	64세 이하	18.86	9.90	-	-	18.86	9.90
	65~69세	41.63	19.81	41.63	19.81	-	-
	70~74세	53.33	26.99	53.33	26.99	-	-
	75~79세	66.91	40.47	66.91	40.47	-	-
	80세 이상	75.23	52.08	75.23	52.08	-	-
지역	대도시	45.62	24.98	52.47	28.92	18.11	9.18
	중소도시	48.81	28.33	56.85	33.22	17.88	9.50
	농어촌	65.47	39.22	69.88	41.98	29.29	16.60
전체		49.70	28.37	56.94	32.71	18.86	9.90

주: 노인 가구 빈곤율은 노인이 존재하는 가구 중 빈곤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구단위 중위값의 50%/25%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가처분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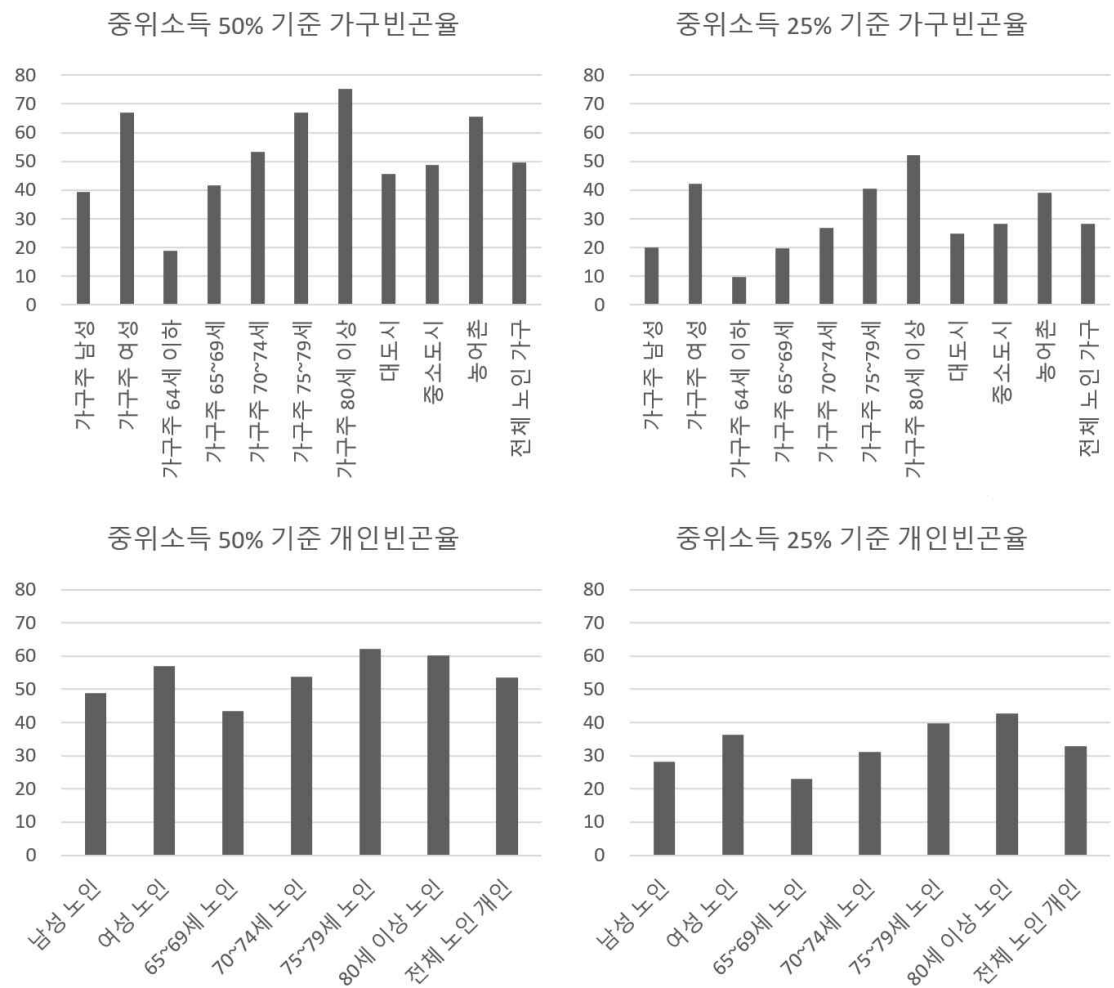
〈표 2-2-2-22〉 노인 개인 가처분소득 빈곤율

(단위: %)

구분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개인 성	남성	48.86	28.05	51.97	30.02	19.79	9.63
	여성	57.05	36.30	66.29	42.83	23.18	12.37
개인 연령	65~69세	43.35	22.88	46.12	24.45	20.39	9.93
	70~74세	53.85	31.05	58.36	33.83	20.19	10.29
	75~79세	62.19	39.79	70.30	45.56	22.92	11.83
	80세 이상	60.16	42.70	75.11	54.91	24.03	13.18
전체		53.59	32.82	59.75	36.98	22.34	11.69

주: 노인 개인 빈곤율은 노인 개인 중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개인의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25%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가처분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2-2-2-1] 노인 가구 및 개인 가처분소득 빈곤율



주: 〈표 2-2-2-21〉과 〈표 2-2-2-22〉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노인 가구 빈곤율은 노인이 존재하는 가구 중 빈곤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구단위 중위값의 50%/25%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노인 개인 빈곤율은 노인

개인 중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개인의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25%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가처분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2-23〉에서는 노인 가구 특성별로 각 소득보장제도의 빈곤율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표의 수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전체 노인 가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시장소득 빈곤율은 62.86%이고 시장소득에 공적연금을 합산한 소득의 빈곤율은 55.99%이므로, 공적연금이 노인 가구의 빈곤율을 6.87%p 감소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타 공적이전소득은 각각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을 1.65%p, 0.19%p, 2.68%p 감소시켰고, 전체 공적이전소득은 13.38%p를 감소시켰다. 소득보장제도가 중위소득 25% 기준의 극빈을 완화하는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전체 공적이전소득이 빈곤율을 56.24%에서 28.08%로 28.16%p나 감소시켰다. 노인가구주 가구와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았고 대체로 빈곤율의 절대적 감소량도 더 컸다.

〈표 2-2-2-23〉 노인 가구 특성별 소득보장제도의 노인 가구 빈곤율 감소효과

(단위: %, %p)

구분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가구주 성	남성	시장소득	54.75	47.26	64.28	56.61	23.37	16.45				
		시장소득+공적연금	45.88 -8.87	35.55 -11.71	53.44 -10.84	42.12 -14.49	20.99 -2.38	13.91 -2.55				
		시장소득+기초연금	52.92 -1.83	43.84 -3.42	62.46 -1.81	52.76 -3.85	21.47 -1.89	14.46 -2.00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54.59 -0.16	45.30 -1.96	64.14 -0.14	54.45 -2.16	23.13 -0.23	15.17 -1.28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51.82 -2.93	43.04 -4.22	60.96 -3.32	51.60 -5.01	21.71 -1.66	14.84 -1.62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39.18 -15.57	19.70 -27.56	46.02 -18.26	23.06 -33.55	16.67 -6.70	8.64 -7.81				
	여성	시장소득	76.41	71.25	82.05	77.39	34.54	25.74				
		시장소득+공적연금	72.89 -3.52	65.67 -5.58	78.59 -3.46	71.66 -5.73	30.57 -3.97	21.21 -4.53				
		시장소득+기초연금	75.06 -1.35	65.71 -5.54	80.82 -1.23	71.44 -5.94	32.26 -2.28	23.18 -2.57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76.18 -0.23	67.26 -3.99	81.85 -0.20	73.07 -4.32	34.11 -0.43	24.21 -1.53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74.13 -2.28	65.49 -5.76	79.78 -2.27	71.15 -6.23	32.20 -2.34	23.53 -2.21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66.69 -9.72	42.08 -29.17	72.27 -9.78	45.93 -31.46	25.24 -9.30	13.52 -12.22				
가구주 연령	64세 이하	시장소득	25.98	18.63		-	25.98	18.63				
		시장소득+공적연금	23.23 -2.75	15.61 -3.01		-	23.23 -2.75	15.61 -3.01				
		시장소득+기초연금	24.00 -1.98	16.49 -2.13		-	24.00 -1.98	16.49 -2.13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25.70 -0.28	17.28 -1.34		-	25.70 -0.28	17.28 -1.34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24.16 -1.82	16.87 -1.76		-	24.16 -1.82	16.87 -1.76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18.68 -7.31	9.78 -8.84		-	18.68 -7.31	9.78 -8.84				
	65~69세	시장소득	58.14	49.82	58.14	49.82		-				
		시장소득+공적연금	47.94 -10.20	35.33 -14.49	47.94 -10.20	35.33 -14.49		-				
		시장소득+기초연금	56.37 -1.77	46.63 -3.19	56.37 -1.77	46.63 -3.19		-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57.92 -0.22	46.69 -3.13	57.92 -0.22	46.69 -3.13		-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55.07 -3.07	46.12 -3.70	55.07 -3.07	46.12 -3.70		-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41.35 -16.79	19.54 -30.28	41.35 -16.79	19.54 -30.28		-				
	70~74세	시장소득	70.22	62.84	70.22	62.84		-				
		시장소득+공적연금	61.68 -8.54	50.03 -12.80	61.68 -8.54	50.03 -12.80		-				
		시장소득+기초연금	68.26 -1.96	57.82 -5.02	68.26 -1.96	57.82 -5.02		-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70.06 -0.16	59.96 -2.88	70.06 -0.16	59.96 -2.88		-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66.80 -3.42	56.60 -6.23	66.80 -3.42	56.60 -6.23		-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53.06 -17.16	26.51 -36.32	53.06 -17.16	26.51 -36.32		-				
	75~79세	시장소득	79.52	74.04	79.52	74.04		-				
		시장소득+공적연금	73.30 -6.22	65.32 -8.72	73.30 -6.22	65.32 -8.72		-				
		시장소득+기초연금	77.99 -1.53	67.17 -6.87	77.99 -1.53	67.17 -6.87		-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79.37 -0.15	71.13 -2.91	79.37 -0.15	71.13 -2.91		-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77.42 -2.10	67.59 -6.44	77.42 -2.10	67.59 -6.44		-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66.69 -12.83	40.11 -33.92	66.69 -12.83	40.11 -33.92		-				
	80세 이상	시장소득	85.95	82.63	85.95	82.63		-				
		시장소득+공적연금	81.04 -4.92	77.38 -5.26	81.04 -4.92	77.38 -5.26		-				
		시장소득+기초연금	85.12 -0.84	78.19 -4.44	85.12 -0.84	78.19 -4.44		-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85.85 -0.10	79.41 -3.23	85.85 -0.10	79.41 -3.23		-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83.18 -2.77	76.12 -6.52	83.18 -2.77	76.12 -6.52		-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75.13 -10.82	51.85 -30.79	75.13 -10.82	51.85 -30.79		-				

〈표 2-2-2-23〉 노인 가구 특성별 소득보장제도의 노인 가구 빈곤율 감소효과(이어서)

(단위: %, %p)

구분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지역	대도시	시장소득	59.08	52.11	67.56	60.62	24.99	17.87
		시장소득+공적연금	51.92 -7.15	42.44 -9.67	59.26 -8.30	49.26 -11.36	22.45 -2.54	15.02 -2.85
		시장소득+기초연금	57.35 -1.73	48.26 -3.84	65.88 -1.68	56.30 -4.33	23.07 -1.92	15.98 -1.89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58.85 -0.22	48.78 -3.33	67.36 -0.19	56.87 -3.76	24.65 -0.34	16.27 -1.60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56.43 -2.65	47.68 -4.43	64.66 -2.89	55.48 -5.14	23.34 -1.65	16.31 -1.56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45.36 -13.72	24.69 -27.42	52.18 -15.38	28.58 -32.05	17.95 -7.05	9.05 -8.82
	중소도시	시장소득	62.04	55.34	71.71	65.18	24.82	17.48
		시장소득+공적연금	54.98 -7.06	45.84 -9.49	63.52 -8.19	53.95 -11.23	22.11 -2.71	14.66 -2.82
		시장소득+기초연금	60.38 -1.66	51.28 -4.05	70.15 -1.56	60.64 -4.54	22.79 -2.03	15.28 -2.20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61.87 -0.17	52.85 -2.49	71.56 -0.15	62.34 -2.83	24.57 -0.25	16.32 -1.16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59.27 -2.77	50.60 -4.73	68.72 -2.99	59.68 -5.49	22.91 -1.90	15.66 -1.82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48.61 -13.43	28.05 -27.29	56.65 -15.06	32.89 -32.28	17.68 -7.14	9.40 -8.08
	농어촌	시장소득	77.48	72.27	82.18	77.41	38.92	30.11
		시장소득+공적연금	72.15 -5.33	63.88 -8.38	76.72 -5.47	68.63 -8.78	34.69 -4.23	24.99 -5.12
		시장소득+기초연금	76.08 -1.39	66.37 -5.90	80.87 -1.31	71.17 -6.24	36.86 -2.06	26.98 -3.13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77.36 -0.12	70.74 -1.53	82.06 -0.12	75.82 -1.59	38.79 -0.13	29.13 -0.98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74.95 -2.53	66.10 -6.17	79.61 -2.57	70.79 -6.62	36.69 -2.23	27.61 -2.50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65.33 -12.14	38.91 -33.36	69.76 -12.43	41.65 -35.76	29.08 -9.84	16.43 -13.68
전체		시장소득	62.86	56.24	71.52	65.07	25.98	18.63
		시장소득+공적연금	55.99 -6.87	46.82 -9.42	63.68 -7.83	54.15 -10.92	23.23 -2.75	15.61 -3.01
		시장소득+기초연금	61.21 -1.65	52.03 -4.21	69.94 -1.57	60.37 -4.70	24.00 -1.98	16.49 -2.13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62.67 -0.19	53.53 -2.72	71.35 -0.16	62.04 -3.04	25.70 -0.28	17.28 -1.34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60.17 -2.68	51.44 -4.80	68.63 -2.89	59.56 -5.51	24.16 -1.82	16.87 -1.76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49.48 -13.38	28.08 -28.16	56.71 -14.80	32.38 -32.70	18.68 -7.31	9.78 -8.84

주: 시장소득에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타 공적이전소득, 전체 공적이전소득을 각각 합산한 후 빈곤율을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의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25%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노인 가구 빈곤율은 노인이 존재하는 가구 중 빈곤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구단위 중위값의 50%/25%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우측의 수치는 시장소득 빈곤율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도별로 살펴보면, 〈표 2-2-2-23〉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여러 소득보장제도 중 공적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수급률(50.35%)과 급여 수준(537만원/년)을 종합할 때 공적연금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2-2-2-15〉). 둘째, 기초연금은 수급률이 68.48%로 가장 높지만 급여 수준이 193만원/년으로 높지 않고 준보편적 수당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표 2-2-2-15〉),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공적연금보다 낮게 나타났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률이 7.75%에 불과하지만, 급여 수준이 376만원/년으로 낮지 않고 빈곤층을 강하게 표적화하기 때문에(〈표 2-2-2-15〉) 중위소득 25% 기준 극빈율 2.72%p 감소시켰다. 기초연금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대적인 빈곤감소효과는 작지만, 수급률을 함께 고려하면 기초연금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우선 대체로 공적연금 수급률이 높은 집단의 공적연금 빈곤감소효과가 상대

적으로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공적연금은 남성 노인 가구주의 빈곤율을 10.84%p, 65~69세 노인가구주의 빈곤율을 10.20%p 감소시키는 반면, 여성 노인 가구주의 빈곤율은 3.46%p, 80세 이상 노인가구주의 빈곤율은 4.92%p밖에 감소시키지 못한다. 남성 노인가구주와 저령 노인가구주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공적연금은 노인가구주 성과 연령에 따른 빈곤 격차를 확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 노인가구주와 여성 노인가구주의 중위소득 50% 기준 시장소득 빈곤율 차이는 17.78%p였지만 시장소득에 공적연금을 더한 소득의 빈곤율 차이는 25.16%p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65~69세 노인가구주와 80세 이상 노인가구주의 중위소득 50% 기준 시장소득 빈곤율 차이는 27.82%p였지만 공적연금을 합산한 후 빈곤율 차이는 33.10%p로 증가하였다. 한편 공적연금과 비교하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의 집단 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표 2-2-2-24>에서는 노인 개인 특성별로 빈곤율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노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66.27%인데,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타 공적이전소득은 각각 빈곤율을 7.70%p, 1.83%p, 0.12%p, 2.56%p, 12.93%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2-2-2-23>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순으로 빈곤감소효과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이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남성 노인, 저령 노인의 빈곤율이 공적연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는 집단별로 그다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2-2-24〉 노인 개인 특성별 소득보장제도의 노인 개인 빈곤율 감소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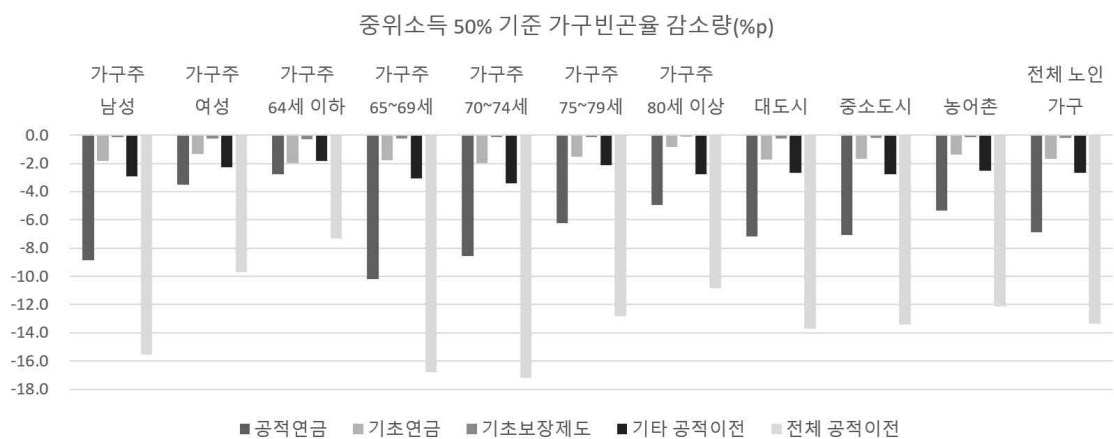
(단위: %, %p)

구분			전체 노인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노인 가구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개인 성	남성	시장소득	64.18	54.76	68.09	58.66	27.76	18.36
		시장소득+공적연금	54.23 -9.96	42.67 -12.10	57.47 -10.61	45.67 -12.99	23.94 -3.82	14.62 -3.74
		시장소득+기초연금	62.28 -1.91	52.14 -2.62	66.18 -1.90	55.96 -2.70	25.81 -1.95	16.47 -1.89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64.08 -0.11	53.66 -1.11	67.98 -0.10	57.50 -1.16	27.61 -0.15	17.75 -0.61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61.29 -2.89	50.70 -4.06	65.12 -2.97	54.38 -4.28	25.60 -2.16	16.34 -2.02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48.59 -15.60	27.76 -27.00	51.68 -16.40	29.71 -28.95	19.65 -8.11	9.57 -8.79
	여성	시장소득	67.80	60.08	78.13	70.90	29.95	20.40
		시장소득+공적연금	61.75 -6.06	52.76 -7.32	71.12 -7.00	62.29 -8.61	27.36 -2.58	17.83 -2.58
		시장소득+기초연금	66.03 -1.77	57.55 -2.53	76.49 -1.64	68.21 -2.69	27.68 -2.27	18.43 -1.97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67.67 -0.13	58.79 -1.30	78.03 -0.10	69.52 -1.38	29.70 -0.24	19.42 -0.98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65.48 -2.32	56.53 -3.55	75.65 -2.48	66.84 -4.06	28.21 -1.74	18.72 -1.68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56.83 -10.98	36.05 -24.03	66.05 -12.08	42.53 -28.37	23.01 -6.94	12.27 -8.13
개인 연령	65~69세	시장소득	58.83	48.35	62.51	51.96	28.38	18.52
		시장소득+공적연금	48.70 -10.13	35.42 -12.94	51.68 -10.83	37.99 -13.97	24.04 -4.34	14.11 -4.42
		시장소득+기초연금	56.90 -1.93	45.85 -2.50	60.54 -1.97	49.32 -2.64	26.80 -1.58	17.15 -1.37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58.71 -0.12	46.82 -1.54	62.39 -0.12	50.33 -1.63	28.21 -0.17	17.74 -0.78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55.88 -2.95	44.79 -3.57	59.42 -3.09	48.15 -3.81	26.54 -1.84	16.97 -1.55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43.02 -15.81	22.57 -25.78	45.78 -16.73	24.11 -27.85	20.22 -8.16	9.80 -8.72
	70~74세	시장소득	67.98	58.75	73.51	64.29	26.79	17.46
		시장소득+공적연금	59.69 -8.29	48.42 -10.33	64.44 -9.07	52.87 -11.41	24.30 -2.48	15.21 -2.25
		시장소득+기초연금	65.79 -2.19	55.84 -2.91	71.33 -2.18	61.23 -3.06	24.53 -2.25	15.66 -1.80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67.86 -0.13	57.56 -1.19	73.40 -0.11	63.05 -1.24	26.52 -0.27	16.65 -0.81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65.17 -2.81	54.48 -4.27	70.56 -2.94	59.65 -4.64	24.96 -1.83	15.88 -1.58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53.60 -14.39	30.70 -28.05	58.10 -15.41	33.45 -30.83	20.05 -6.73	10.19 -7.27
	75~79세	시장소득	72.34	65.17	81.36	74.69	28.63	19.08
		시장소득+공적연금	66.34 -6.00	58.24 -6.93	74.41 -6.95	66.63 -8.06	27.22 -1.41	17.57 -1.50
		시장소득+기초연금	70.62 -1.71	62.35 -2.82	79.77 -1.58	71.73 -2.95	26.28 -2.35	16.88 -2.19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72.21 -0.12	64.19 -0.98	81.26 -0.09	73.71 -0.97	28.35 -0.27	18.05 -1.02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70.59 -1.75	61.73 -3.45	79.59 -1.77	70.88 -3.81	26.96 -1.66	17.38 -1.69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61.99 -10.35	39.54 -25.63	70.09 -11.27	45.27 -29.41	22.72 -5.90	11.76 -7.31
	80세 이상	시장소득	69.55	63.75	85.27	80.95	31.55	22.17
		시장소득+공적연금	64.43 -5.12	58.50 -5.25	79.31 -5.96	74.79 -6.16	28.44 -3.11	19.11 -3.06
		시장소득+기초연금	68.15 -1.41	61.69 -2.06	84.27 -0.99	78.94 -2.00	29.15 -2.40	19.97 -2.20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69.45 -0.11	62.75 -1.00	85.20 -0.07	79.91 -1.03	31.35 -0.20	21.26 -0.92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67.08 -2.47	59.96 -3.80	82.58 -2.69	76.41 -4.54	29.60 -1.95	20.17 -2.00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60.00 -9.55	42.57 -21.18	74.95 -10.32	54.75 -26.20	23.86 -7.68	13.11 -9.07
전체		시장소득	66.27	57.83	73.54	65.31	29.40	19.90
		시장소득+공적연금	58.57 -7.70	48.50 -9.34	64.89 -8.65	54.70 -10.61	26.51 -2.89	17.03 -2.87
		시장소득+기초연금	64.44 -1.83	55.26 -2.57	71.78 -1.76	62.62 -2.69	27.22 -2.19	17.94 -1.95
		시장소득+기초보장제도	66.15 -0.12	56.62 -1.22	73.44 -0.10	64.03 -1.28	29.18 -0.22	19.00 -0.89
		시장소득+기타공적이전	63.71 -2.56	54.07 -3.77	70.84 -2.70	61.15 -4.16	27.56 -1.84	18.13 -1.76
		시장소득+전체공적이전	53.35 -12.93	32.55 -25.28	59.49 -14.05	36.68 -28.63	22.17 -7.23	11.60 -8.30

주: 시장소득에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타 공적이전소득, 전체 공적이전소득을 각각 합산한 후 빈곤율을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의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25%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노인 개인 빈곤율은 노인 개인 중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개인의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25%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우측의 수치는 시장소득 빈곤율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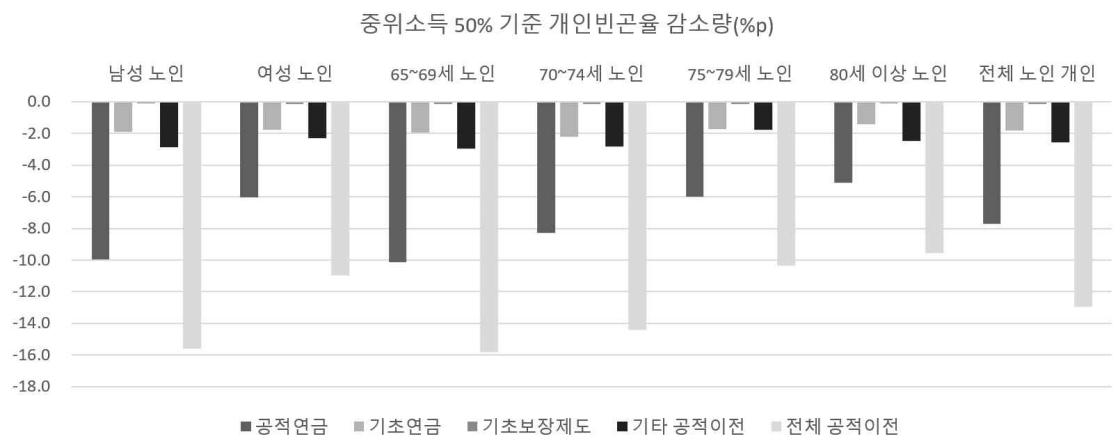
[그림 2-2-2-2] 노인 가구 빈곤율 감소효과(중위소득 50% 기준)



주: <표 2-2-2-23>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시장소득 빈곤율과 시장소득에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타 공적이전소득, 전체 공적이전소득을 각각 합산한 소득의 빈곤율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모든 분석의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 위값의 50%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노인 가구 빈곤율은 노인이 존재하는 가구 중 빈곤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구단위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2-2-2-3] 노인 개인 빈곤율 감소효과(중위소득 50% 기준)



주: <표 2-2-2-24>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시장소득 빈곤율과 시장소득에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타 공적이전소득, 전체 공적이전소득을 각각 합산한 소득의 빈곤율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모든 분석의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 위값의 50%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노인 개인 빈곤율은 노인 개인 중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개인의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노인 서비스보장 현황과 소득분배 효과

노인의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 중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급권자는 요양욕구 필요도에 따라 1등급~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선정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하도록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과 같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제도에서 기준으로 하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양필요도 이상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년)되기 이전 노인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세를 기반으로 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서 가구소득이 160%이하인 자, 건강상태에서 치매 등의 돌봄필요도가 높은 노인을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제도이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를 내용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재원과 운영주체를 달리하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 선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에서 '등급외자'로 선정된 자 중 소득수준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급여 내용과 급여량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다 중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시설급여를 포함하여 선택권을 다양하게 구성하며, 급여량 또한 보다 높게 설정되어있다.

〈표 2-2-2-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개요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input type="radio"/>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input type="radio"/> 서비스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input type="radio"/> 서비스 내용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input type="radio"/> 재원 : 장기요양보험금 중심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서비스 <input type="radio"/>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input type="radio"/> 서비스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중위소득 160% 미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서비스 내용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신변 · 활동지원, 가사 · 일상생활지원
-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재원 : 조세 중심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책 설명 자료 재구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요양필요도가 해당 수준 이상일 경우 모두 이용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는 요양필요도와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권이 부여되도록 설계되어있다. 두 서비스의 소득분위와 재산분위, 연령에 따라 수급권 현황과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가구단위에서의 두 제도의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노인 개인단위에서의 보다 세밀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가구단위 분석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분위별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1분위와 재산1-4분위에 해당하는 비율은 전체 수급자의 29.35%로 높게 나타난다. 소득1분위는 54.98%로 과반수를 넘으며, 자산1-4분위는 48.56%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자의 가구 소득은 소득 1분위이거나 자산1-4분위인 경우가 74.19%로 등급자 가구 중 약 3/4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소득 수준이 전체 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인해 소득 1분위와 자산 1-4분위에 집중되어 있다.

소득분위별 연령별 등급자를 살펴보면 <표 2-2-2-3>과 같다. 우선 연령별 장기요양수급자 분포는 65-74세가 16.77%이며, 75세 이상이 78.67%로 높게 나타났다. 64세 미만은 4.56%로 나타났다. 제도 설계상 64세 미만 자 중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일정수준 요양필요도가 있을 경우로 한정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함에 따라 전체 수급자 중 5%에 못미치는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 수급자 중 가구소득 1분위이며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비율이 44.02%로 가장 높으며, 가구소득 2분위이며 가구주 연령이 65-74세인 경우가 10.84%, 가구소득 1분위이며 가구주 연령이 65-74세인 경우가 8.65%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재산분위 및 연령별 장기요양수급자 분포를 살펴보면, 재산분위는 1-4분위에 약 50%가 집중되며, 그 외 재산분위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인다. 재산분위1-4이면서 75세 이상 연령군이 전 수급자 중 37.76%으로 높게 나타나며, 75세 이상에서는 가구소득분위에 비해 재산분위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이나 재산보다는 요양필요

도를 기준으로 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요양필요도는 건강과 기능상태가 악화되는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 가구주에서 수급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볼수 있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수준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음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낮은 분위에서 수급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2-2-2-26〉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재산분위별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 분포

(단위: %)

재산분위 소득분위	1-4	5	6	7	8	9	10	전체
1	29.35	3.53	9.30	4.40	3.35	2.71	2.33	54.98
2	8.79	1.74	1.10	0.28	0.17	0.16	0.11	12.35
3	3.63	0.69	2.95	0.22	0.11	0.10	0.08	7.78
4	1.34	0.20	1.27	1.56	0.66	0.35	0.23	5.60
5	1.76	0.10	0.41	0.53	0.81	0.96	1.04	5.62
6	1.82	0.10	0.59	0.56	0.52	0.51	0.80	4.89
7-10	1.85	0.19	1.22	1.14	1.3	1.37	1.7	8.78
전체	48.56	6.56	16.83	8.68	6.91	6.16	6.29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27〉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연령별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 분포

(단위: %)

연령 소득분위	65세 미만	65-74세	75세 이상	전체
1	2.31	8.65	44.02	54.97
2	0.29	1.22	10.84	12.36
3	0.37	1.28	6.14	7.78
4	0.28	1.08	4.23	5.59
5	0.27	1.26	4.08	5.60
6	0.36	1.26	3.29	4.90
7	0.36	0.80	1.97	3.13
8	0.17	0.61	1.46	2.23
9	0.12	0.34	1.37	1.83
10	0.06	0.28	1.27	1.61
전체	4.56	16.77	78.67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28〉 연령 및 재산분위별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 분포

(단위: %)

연령 재산분위	1-4	5	6	7	8	9	10	전체
65세 미만	2.83	0.24	0.42	0.29	0.27	0.27	0.24	4.56
65-74세	7.95	0.83	2.45	1.53	1.45	1.16	1.41	16.78
75세 이상	37.76	5.51	13.97	6.86	5.20	4.73	4.64	78.66
전체	48.54	6.57	16.83	8.68	6.92	6.17	6.28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현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수급가구는 가구소득 1분위가 70.15%이며, 가구 재산 1-4분위가 59.54%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가구소득 1분위 또는 재산1-4분위인 경우가 84.44%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동일 비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74.19%로 나타나 이보다 더욱 소득과 재산 1-4분위에 집중되어 있는 결과이다. 가구소득과 재산소득 1-4분위인 경우는 45.25%로 전체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의 약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이며, 해당 비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9.35%와 비교할때도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가구소득과 연령별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75세 이상 수급자가 80.75%, 65-74세 수급자가 19.25%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기준으로 고연령층의 가구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1분위의 75세 이상 비율은 54.75%로 전체 수급가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구 재산과 연령을 기준으로 한 수급현황에서도 여전히 재산분위가 낮은 수급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이면서 가구소득 160%이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가구소득과 재산소득 1분위이면서 비교적 요양욕구가 높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의 가구 수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같은 경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과 비교할때도 더욱 1분위에 집중되어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수급권을 갖고 있으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소득수준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또한 시군구별로 재정상태에 따른 지원규모가 선정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함에 따라 중산층 이상의 소득 가구의 경우 공공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며 가구별로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개인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서비스(간병인 또는 파출부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2-29〉 소득 및 재산분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 수 및 비율

(단위: %)

재산분위 소득분위	1-4	5	6	7	8	9	10	전체
1	45.25	5.66	12.57	3.14	1.89	0.79	0.86	70.15
2	7.86	1.96	0.79	0.31	0.08	0.08	0.00	11.08
3-10	6.46	1.11	7.08	2.12	0.79	0.88	0.4	18.77
전체	59.54	8.72	20.42	5.58	2.75	1.73	1.26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30〉 소득 분위 및 연령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 수

(단위: %)

연령 소득분위	65-74세	75세 이상	전체
1	15.48	54.75	70.23
2	1.57	9.51	11.08
3-10	2.20	16.49	18.69
전체	19.25	80.75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31〉 재산 분위 및 연령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 수

(단위: %)

연령 재산분위	1-4	5-10	전체
65-74세	13.74	5.49	19.23
75세 이상	45.76	35.01	80.77
전체	59.50	40.5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나. 노인 개인단위 분석

1) 장기요양보험

노인개인단위 분석에서는 앞서 가구단위 분석보다 세부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신청자, 등급자,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고, 등급자의 등급분포와 이용자의 급여유형별 이용특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2-〉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조사 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소득 1분위 신청자는 38.28%, 재산1-4분위는 37.97%로 유사하게 나타나며, 소득1분위 또는 재산 1-4분위인 경우는 58.06%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와 재산분위 1-4분위인 경우는 18.19%로 나타난다. 소득 1분위 또는 재산 1-4분위에 집중되어있으나, 그 외 소득분위별로는 장기요양신청자의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노인의 소득과 재산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2-2-2-32〉 소득 및 재산분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단위: %)

재산분위 소득분위	1-4	5	6	7	8	9	10	전체
1	18.19	2.28	6.83	3.57	2.79	2.40	2.21	38.28
2	5.71	1.15	0.92	0.38	0.28	0.33	0.28	9.04
3	3.38	0.60	2.49	0.31	0.21	0.16	0.17	7.32
4	1.86	0.20	1.45	1.88	1.07	0.73	0.49	7.67
5	2.19	0.24	0.78	0.72	1.03	1.29	1.76	8.02
6	2.43	0.27	1.06	0.96	1.05	1.05	1.28	8.10
7	1.59	0.18	0.79	0.86	0.81	0.96	0.96	6.15
8	1.15	0.16	0.63	0.65	0.76	0.96	0.84	5.15
9	0.74	0.09	0.49	0.66	0.84	1.13	1.24	5.20
10	0.74	0.10	0.36	0.40	0.57	1.01	1.91	5.07
전체	37.97	5.26	15.81	10.40	9.41	10.03	11.13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33〉 소득 분위 및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단위: %)

소득분위	연령	65세미만	65-74세	75세이상	전체
1		1.42	6.49	30.37	38.28
2		0.24	0.99	7.81	9.04
3		0.30	1.19	5.82	7.32
4		0.29	1.27	6.12	7.67
5		0.24	1.34	6.45	8.02
6		0.37	1.23	6.51	8.10
7		0.36	0.91	4.89	6.15
8		0.25	0.80	4.09	5.14
9		0.17	0.69	4.35	5.20
10		0.10	0.46	4.51	5.07
전체		3.73	15.35	80.92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소득분위와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자 중 75세 이상이 80.92%로 나타나며 65-74세는 15.35%, 65세 미만은 3.73%로 나타난다. 장기요양신청자 중 75세 이상이며 소득1분위자는 전체 신청자 중 30.37%로 나타나며, 75세 이상 신청자 중 2분위이상자의 분포는 5%내외로 고르게 나타난다.

재산분위와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재산1-4분위의 75세 이상자의 비율이 29.74%로 높게 나타나며, 75세 이상의 신청자는 재산분위별로 5분위 이상에서는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

〈표 2-2-2-34〉 재산 분위 및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단위: %)

재산분위 \ 연령	65세미만	65-74세	75세이상	전체
1-4	1.95	6.28	29.74	37.97
5	0.13	0.71	4.41	5.25
6	0.41	2.28	13.11	15.81
7	0.37	1.63	8.40	10.40
8	0.25	1.63	7.56	9.41
9	0.32	1.33	8.38	10.03
10	0.29	1.52	9.32	11.13
전체	3.72	15.36	80.93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여 인정조사를 통해 등급을 받은 자의 현황은 〈표 2-2-2-11〉~〈표 2-2-2-13〉과 같다. 장기요양 신청자 중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자는 82.09%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급자의 소득 및 재산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1분위자는 전체의 36.2%이며, 재산1-4분위는 전체의 37.4%로 나타나며, 소득1분위 또는 재산 1-4분위자는 56.5%이며, 소득1분위와 재산 1-4분위인 경우는 17.1%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장기요양 신청자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선정에서 요양욕구 기준만이 적용된 결과이다.

연령별 등급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비율은 81.9%로 신청자 비율이 80.9%와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자의 분포는 65-74세는 14.2%이며, 65세 미만은 4.0%로 나타났다. 소득분위와 연령별 등급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75세 이상자이며 소득 1분위인 경우는 전체 등급자의 29.0%로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재산분위와 연령별 등급자의 비율 또한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이며 재산1-4분위인 비율이 전체에 29.7%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분위에 비해 재산분위의 경우 9분위 이상의 비율이 22.3%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2-2-2-35〉 소득 및 재산분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현황

(단위: %)

재산분위 소득분위	1-4	5	6	7	8	9	10	전체
1	17.1	2.1	6.2	3.5	2.6	2.4	2.2	36.2
2	5.8	1.1	0.9	0.4	0.3	0.3	0.3	9.1
3	3.3	0.6	2.4	0.3	0.2	0.2	0.2	7.2
4	1.9	0.2	1.4	1.9	1.0	0.8	0.5	7.8
5	2.3	0.2	0.8	0.8	1.1	1.3	1.9	8.3
6	2.6	0.3	1.1	1.0	1.1	1.1	1.4	8.4
7	1.7	0.2	0.8	0.9	0.9	1.1	1.0	6.6
8	1.2	0.2	0.6	0.6	0.9	1.0	0.9	5.4
9	0.8	0.1	0.5	0.7	0.9	1.2	1.3	5.4
10	0.7	0.1	0.4	0.4	0.6	1.1	2.2	5.5
전체	37.4	5.1	15.1	10.5	9.6	10.4	11.9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36〉 소득 분위 및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현황

(단위: %)

소득분위 연령	65세미만	65-74세	75세이상	전체
1	1.5	5.6	29.0	36.2
2	0.2	0.9	8.0	9.1
3	0.3	1.1	5.8	7.2
4	0.3	1.2	6.2	7.8
5	0.3	1.2	6.8	8.3
6	0.4	1.2	6.9	8.4
7	0.4	0.9	5.3	6.6
8	0.2	0.8	4.3	5.4
9	0.1	0.7	4.6	5.4
10	0.1	0.5	4.9	5.5
전체	4.0	14.2	81.9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37〉 재산 분위 및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현황

(단위: %)

재산분위 연령	65세미만	65-74세	75세이상	전체
1-4	2.1	5.6	29.7	37.4
5	0.1	0.6	4.3	5.1
6	0.5	2.0	12.7	15.1
7	0.4	1.5	8.6	10.5
8	0.3	1.6	7.7	9.6
9	0.3	1.3	8.7	10.4
10	0.3	1.6	10.0	11.9
전체	4.0	14.2	81.9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인 등급을 받은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선택하여 이용가능하다. 다만, 시설급여의 경우 1~2등급의 중증자 또는 치매 등의 재가에서 돌봄이 어렵다는 인정되는 경우 이용가능하다.

소득과 재산분위별 장기요양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 중 소득1분위는 37.0%, 재산 1-4분위는 37.8%로 나타나며, 소득 1분위와 재산 1-4 분위인 경우는 17.8%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소득과 연령별 장기요양이용자의 분포에서도 75세 이상 비율이 81.4%이며, 소득 1분위이며 75세 이상자의 경우 전체 이용자의 29.4%로 나타나며, 재산소득과 연령분포에서 또한 고연령 재산1-4분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장기요양신청자 - 등급자 -이용자의 현황이 소득1분위, 재산1분위, 75세 이상 고연령에서 집중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 도입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이 장기요양을 신청하고 등급을 판정받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다만, 소득과 재산의 하위 분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은 노인의 경제상태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표 2-2-2-38〉 소득 및 재산분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현황

(단위: 명, %)

재산분위 소득분위	1-4	5	6	7	8	9	10	전체
1	17.8	2.2	6.5	3.3	2.7	2.3	2.2	37.0
2	5.9	1.1	0.9	0.4	0.3	0.3	0.3	9.3
3	3.3	0.6	2.3	0.3	0.2	0.2	0.2	7.0
4	1.9	0.2	1.4	1.8	1.1	0.7	0.5	7.6
5	2.1	0.3	0.8	0.8	1.1	1.4	1.9	8.3
6	2.5	0.3	1.1	1.0	1.1	1.1	1.4	8.4
7	1.6	0.2	0.8	0.9	0.9	1.0	1.0	6.5
8	1.1	0.2	0.7	0.6	0.8	1.0	0.9	5.2
9	0.8	0.1	0.5	0.7	0.8	1.1	1.3	5.3
10	0.7	0.1	0.3	0.4	0.6	1.1	2.0	5.3
전체	37.8	5.2	15.3	10.2	9.7	10.1	11.6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39〉 소득 및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현황

(단위: 명, %)

소득분위 \ 연령	65세미만	65-74세	75세 이상	전체
1	1.6	6.0	29.4	37.0
2	0.2	1.0	8.1	9.3
3	0.3	1.1	5.7	7.0
4	0.3	1.2	6.2	7.6
5	0.3	1.3	6.7	8.3
6	0.4	1.2	6.8	8.4
7	0.4	0.9	5.2	6.5
8	0.2	0.8	4.2	5.2
9	0.1	0.7	4.5	5.3
10	0.1	0.5	4.7	5.3
전체	3.9	14.7	81.4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40〉 재산 분위 및 연령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현황

(단위: 명, %)

재산분위 \ 연령	65세미만	65-74세	75세이상	전체
1-4	2.0	5.8	29.9	37.8
5	0.2	0.7	4.4	5.2
6	0.4	2.1	12.7	15.3
7	0.4	1.6	8.3	10.2
8	0.3	1.6	7.8	9.7
9	0.3	1.3	8.5	10.1
10	84	416	2,628	3,128
전체	0.3	1.5	9.8	11.6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필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서 요양필요도가 낮은 5등급으로 구성된다.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이 6.0%, 2등급 11.6%, 3등급 27.0%, 4등급 31.9%, 5등급이 7.3%이며 등급외자가 16.3%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등급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소득에서 3~4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소득분위별 등급의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작은 차이지만 1등급에서는 등급외자의 비중이 타 소득구간에 비해 다소 높은 20.8%로 나타나며, 이에 반해 10분위에서는 9.0%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중증 대상자인 1~2등급자의 비중인 소득분위 1에서는 4.6%와 9.3%이지만, 10분위에서는 8.5%와 14.1%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1분위 소득자의 경우 혼자서 거주하거나 노부부 거주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므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구소득이 높은 노인의 경우 자녀와 동거 또는 자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은 경우만 서비스를 신청하기 때문에 등급외자의 비중은 적고 1-2등급의 중증자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재산분위별 장기요양등급을 살펴보면, 소득분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재산이 낮은 경우 등급외자의 비중이 높으며, 1-2등급의 중증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재산분위에서는 약 6분위까지 평균대비 등급외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중증 비중은 7분위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연령별 장기요양등급을 살펴보면, 65세 미만의 경우는 전체 등급분포와 비교할 때 1-2등급의 중증의 비중이 24.8%로 평균 17.6%에 비해서 높으며, 등급외자의 비중 또한 10.4%로 낮다. 65-74세의 경우 등급외자 비중이 22.3%이며, 75세 이상에서는 1-2등급의 비중이 17.3%로 나타났다. 65세 미만의 경우 연령 기준 상 노인은 아니지만 요양필요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요양을 신청한 자로서 중증이 신청한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2-2-2-41〉 소득 분위별 장기요양등급 분포

(단위: %)

장기요양등급 소득분위	등급외자	1	2	3	4	5	전체
1	20.8	4.6	9.3	23.8	33.6	7.8	100.0
2	16.0	5.4	12.6	25.6	33.5	6.9	100.0
3	18.2	5.2	10.0	26.1	32.7	7.8	100.0
4	14.2	6.8	13.5	28.2	30.1	7.2	100.0
5	13.5	6.5	13.1	30.8	30.1	6.0	100.0
6	12.5	7.7	13.3	31.9	28.9	5.8	100.0
7	10.9	8.2	13.7	31.3	28.6	7.3	100.0
8	11.2	7.0	14.2	31.4	29.2	7.0	100.0
9	12.0	7.6	13.2	29.6	29.7	7.9	100.0
10	9.0	8.5	14.1	26.8	33.5	8.0	100.0
전체	16.3	6.0	11.6	27.0	31.9	7.3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42〉 재산 분위별 장기요양등급 분포

(단위: %)

장기요양등급 재산분위	등급외자	1	2	3	4	5	전체
1-4	17.8	5.8	11.1	26.4	31.6	7.3	100.0
5	19.6	4.2	10.5	24.5	34.4	6.8	100.0
6	19.2	4.6	9.6	25.8	33.0	7.8	100.0
7	15.0	6.3	12.0	27.1	32.0	7.5	100.0
8	14.7	6.7	11.7	29.2	31.7	6.0	100.0
9	13.4	6.5	13.6	28.9	30.6	7.0	100.0
10	10.3	8.2	14.3	28.3	31.0	7.9	100.0
전체	16.3	6.0	11.6	27.0	31.9	7.3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43〉 연령별 장기요양등급분포

(단위: %)

연령 \ 등급	등급외자	1	2	3	4	5	전체
64세 이하	10.4	11.9	12.9	32.1	27.9	4.8	100.0
65~74세	22.3	6.4	10.3	25.2	29.7	6.1	100.0
75세 이상	15.4	5.6	11.7	27.1	32.5	7.7	100.0
전체	16.3	6.0	11.6	27.0	31.9	7.3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의 6개의 급여 중 등급내 급여사용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평균 2.09개를 이용하고 있어 3개 이상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재가급여 이용경향은 소득분위와 재산분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거의 매일 방문하는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이용하거나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단기보호의 경우 이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여 재가에 거주하는 노인이 요양과 간호 등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과 이용은 복지용구를 제외할 경우 단일 또는 일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에 제한적으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표 2-2-2-44〉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별 재가급여 평균 이용개수

(단위: 개)

소득분위 \ 재산분위	1-4	5	6	7	8	9	10	전체	(N)
1	2.09	2.17	2.17	2.09	2.08	2.03	2.04	2.01	5,288
2	2.13	2.23	2.22	2.15	2.15	2.09	1.89	2.15	1,150
3	2.04	2.17	2.15	2.09	1.98	2.07	2.03	2.09	902
4	2.10	2.15	2.12	2.10	2.04	2.11	1.95	2.09	1,055
5	2.09	2.06	2.19	2.06	2.12	2.12	2.05	2.10	1,207
6	2.06	2.17	2.13	2.05	2.07	2.09	2.04	2.07	1,192
7	2.05	2.15	2.06	2.06	1.98	2.04	1.99	2.03	904
8	2.06	2.03	2.14	2.05	2.16	2.12	1.93	2.07	643
9	2.05	2.04	2.14	2.05	2.08	2.05	1.97	2.05	676
10	2.00	2.00	2.14	2.18	2.04	2.13	2.01	2.06	745
전체	2.08	2.17	2.16	2.08	2.08	2.08	2.01	2.09	13,76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45〉 소득분위 및 연령별 재가급여 이용개수

(단위: 개)

연령 소득분위	64세 이하	65-74세	75세 이상	전체	(N)
1	2.07	2.08	2.11	2.10	5,288
2	1.95	2.12	2.16	2.15	1,150
3	2.00	2.06	2.10	2.09	902
4	2.01	2.08	2.10	2.09	1,055
5	2.00	2.07	2.11	2.10	1,207
6	2.13	2.03	2.08	2.07	1,192
7	1.96	2.13	2.02	2.03	904
8	1.99	2.03	2.09	2.07	643
9	1.83	2.08	2.05	2.05	676
10	2.03	2.01	2.06	2.06	745
전체	2.03	2.07	2.10	2.09	13,76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46〉 재산분위 및 연령별 재가급여 이용개수

(단위: 개)

연령 재산분위	64세 이하	65-74세	75세 이상	전체
1-4	2.04	2.08	2.09	2.08
5	2.03	2.08	2.19	2.17
6	2.06	2.10	2.17	2.16
7	2.14	2.08	2.08	2.08
8	1.95	2.04	2.09	2.08
9	1.95	2.09	2.08	2.08
10	2.00	2.03	2.01	2.01
전체	2.03	2.07	2.10	2.0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재가급여 이용일수는 평균 552.35일이며, 평균 이용금액은 1,468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재가급여 이용일수와 이용금액은 소득 3분위가 가장 낮으며 4분위 이상부터는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1-2분위는 3분위에 비해 이용일수와 이용금액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1-2분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서 부담이 덜할 수 있는 반면 3분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을 갖는다. 소득분위별로 볼 때 10분위의 경우 재가급여 이용일수는 595.38일로 가장 높으며, 이용금액 또한 1,57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재가급여 이용일수와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65세 미만의 경우 평균 550.37일을 이용, 65-74세는 546.97일, 75세 이상은 553.49일을 이용하였으며 이용금액은 연령별로 1,428만원, 1,441만원, 1,476만원으로 나타나 연령별 이용일수와 이용금액에 큰 차이는 없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다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분위별 재가급여 이용일수와 이용액수를 살펴보면, 재산1분위 재가급여 이용일수와 이용액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산분위 6분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분위별 재가급여 이용 형태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 고분위에서의 급여이용량과 이용액수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2-2-2-47〉 가구 소득(가구보험료)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일수 및 이용액수

(단위: 일, 원)

가구소득 \ 연령	재가급여 이용일수	재가급여 이용액수
1	536.31	14,659,989.89
2	541.24	14,825,824.30
3	518.79	13,901,324.12
4	551.85	14,419,214.82
5	563.60	14,749,318.70
6	579.21	14,947,489.20
7	594.22	14,972,083.03
8	564.46	14,435,820.89
9	564.10	14,303,255.51
10	595.38	15,724,114.63
전체	552.35	14,683,251.7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48〉 연령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일수 및 이용액수

(단위: 일, 원)

연령 \ 재가급여	재가급여 이용일수	재가급여 이용액수
65세 미만	550.37	14,279,249.75
65-75세 미만	546.97	14,409,378.22
75세 이상	553.49	14,757,818.82
전체	552.35	14,683,251.7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49〉 가구재산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일수 및 이용액수

(단위: 일, 원)

재산분위 \ 재가급여	재가급여 이용일수	재가급여 이용액수
1-4	563.57	15169646.89
5	532.75	14723546.97
6	521.26	14220402.03
7	539.61	14179691.35
8	557.44	14479358.64
9	575.28	14776224.20
10	553.79	14313995.56
전체	552.35	14683251.7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소득분위별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금액의 차이를 보인다. 재가급여 유형별 평균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년평균 방문요양은 700만원, 방문목욕 150만원, 방문간호 148만원, 주간보호 800만원, 단기보호 287만원, 기타 재가급여 751만원으로 방문요양과 주간보호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특성을 살펴보면 방문요양의 경우 소득분위별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나 소득이 높은 10분위에서의 이용금액이 723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3분위가 가장 낮은 668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차이를 크게 나타낸 것은 방문간호와 주간보호이다. 방문간호와 주간보호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이용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5분위 이상부터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같은 특성은 방문간호의 경우 의료적 서비스로 시간당 단가가 높음으로 인해 방문간호를 이용할 경우 방문요양 이용시간이 감소하게 되어 혼자 거주하는 노인이 많은 저소득 노인의 경우 돌봄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간호보다는 방문요양을 이용할 유인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방문요양에 비해 식비 등이 추가되어 본인부담금이 높고 방문요양에 비해 비도시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높지 않음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연령별 재가급여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65세 미만의 경우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높은 이용금액을 나타내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65-74세의 경우 방문간호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해당자수가 적은 관계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제한적이다.

재산분위별로는 방문요양의 경우 재산분위가 1분위의 경우 이용금액이 높으며 그 외 소득분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방문간호의 경우 9-10 분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소득분위별 재가급여 이용금액의 경향을 뚜렷히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50〉 가구 소득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금액

(단위: 원)

재가급여 가구소득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1	7,025,926	1,472,423	1,239,086	7,651,994	2,882,980	7,505,527
2	6,927,831	1,552,545	1,725,008	7,510,693	3,512,644	7,576,580
3	6,675,947	1,439,977	1,310,922	7,379,440	1,687,225	7,118,886
4	6,975,555	1,503,485	1,025,754	7,978,430	3,361,411	7,364,343
5	7,063,870	1,519,661	1,570,566	8,064,418	2,650,983	7,547,236
6	7,107,244	1,488,780	1,862,893	8,323,405	2,963,180	7,640,916
7	7,302,225	1,572,603	1,730,203	8,303,922	4,280,605	7,664,790
8	6,818,344	1,565,234	1,727,467	8,220,796	2,660,593	7,359,088
9	6,767,213	1,430,468	2,659,817	8,473,077	1,276,970	7,295,453
10	7,228,663	1,663,492	1,827,474	9,200,671	2,285,224	8,043,416
전체	7,004,195	1,501,744	1,479,442	8,001,621	2,874,957	7,510,28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51〉 연령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금액

(단위: 원)

연령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65세 미만	7,667,556.20	1,810,770.14	2,314,042.44	8,222,215.65	4,430,732.82	7,339,774.03
65-75세 미만	7,050,422.77	1,598,819.67	1,812,146.33	7,976,781.62	3,053,775.99	7,380,438.46
75세 이상	6,958,873.35	1,471,812.42	1,365,831.79	7,999,534.57	2,809,642.51	7,544,490.80
전체	7,004,195.13	1,501,743.89	1,479,442.00	8,001,620.76	2,874,956.78	7,510,280.4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52〉 재산분위별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금액

(단위: 원)

재산분위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1-4	7,283,533.82	1,499,861.60	1,379,073.49	8,006,964.84	2,965,450.90	7,765,135.00
5	6,960,442.97	1,521,002.65	1,761,710.20	7,498,406.88	2,369,216.94	7,528,755.30
6	6,520,835.94	1,578,827.24	1,523,077.34	8,040,062.42	3,593,040.55	7,261,135.83
7	6,662,817.55	1,525,223.37	1,428,412.52	8,163,909.43	2,317,033.95	7,252,406.69
8	6,969,193.91	1,421,722.75	1,359,900.20	7,891,250.49	2,749,220.97	7,410,456.31
9	6,923,298.99	1,426,394.78	1,834,127.72	8,401,023.62	2,799,253.16	7,545,115.04
10	7,159,639.43	1,444,057.33	1,601,781.08	7,679,197.91	2,685,666.95	7,327,057.92
전체	7,004,195.13	1,501,743.89	1,479,442.00	8,001,620.76	2,874,956.78	7,510,280.4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설급여 이용자 중 소득 1분위의 30.46%, 재산분위 1-4분위의 41.71%가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으며, 소득1분위 및 재산 1-4분위의 18.21%가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장기요양 이용자의 소득 및 재산분위별 비율을 고려한다면 장기요양시설급여 분포는 이용자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소득 및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비율이 87.30%이며, 65-74세가 9.48%, 65세 미만이 3.22%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 이용자 분포와 비교할 때 고령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후기 고령자의 경우 1-2등급이 더욱 높고 또한 치매 등의 시설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2-2-2-53〉 소득 및 재산분위별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여부

(단위: %)

재산분위 소득분위	1-4	5	6	7	8	9	10	전체
1	18.21	1.77	4.60	1.86	1.36	1.19	1.47	30.46
2	8.11	1.25	1.05	0.64	0.23	0.33	0.48	12.10
3	3.63	0.61	2.00	0.34	0.23	0.20	0.16	7.18
4	2.19	0.19	1.34	1.41	1.09	0.75	0.56	7.54
5	1.95	0.23	0.92	0.77	0.92	1.19	1.69	7.68
6	2.49	0.47	1.08	1.39	1.25	1.34	1.27	9.29
7	1.89	0.27	0.92	0.98	1.14	1.09	1.02	7.32
8	1.17	0.27	0.84	0.88	1.03	1.22	0.89	6.30
9	1.20	0.09	0.50	0.80	0.95	1.30	1.49	6.33
10	0.86	0.09	0.33	0.45	0.70	1.20	2.17	5.82
전체	41.71	5.24	13.59	9.52	8.93	9.82	11.19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54〉 소득 및 연령 별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여부

(단위: %)

소득분위 연령	65세미만	65-74세	75세이상	전체
1	1.69	3.60	25.18	30.47
2	0.30	0.88	10.92	12.09
3	0.19	0.70	6.27	7.16
4	0.22	0.89	6.43	7.54
5	0.06	0.70	6.93	7.70
6	0.27	0.61	8.38	9.26
7	0.23	0.56	6.52	7.32
8	0.13	0.75	5.44	6.32
9	0.09	0.44	5.79	6.32
10	0.05	0.34	5.43	5.82
전체	3.22	9.48	87.30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55〉 재산분위 및 연령별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여부

(단위: %)

재산분위 연령	65세 미만	65-74세	75세이상	전체
1-4	2.27	4.44	35.00	41.70
5	0.17	0.39	4.69	5.25
6	0.25	1.17	12.17	13.59
7	0.20	0.95	8.37	9.52
8	0.22	1.08	7.65	8.94
9	0.08	0.64	9.10	9.82
10	0.05	0.80	10.32	11.16
전체	3.20	9.50	87.30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자의 평균 이용일수와 지급액을 살펴보면, 평균 293.46일을 이용하며, 1,578만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분위별로 편차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의 경우 294.07일로 65-74세의 288.33일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분위별로도 시설급여 이용일수와 지급금액에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표 2-2-2-56〉 소득분위별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일수 및 지급액

(단위: 일수, 원)

소득분위	시설급여	시설급여 이용일수	시설급여 이용지급액
1		291.24	15,647,794.29
2		02.43	16,212,652.93
3		288.34	15,393,228.67
4		286.19	15,432,111.43
5		286.59	15,442,318.43
6		298.77	16,076,697.79
7		306.24	16,573,532.94
8		293.86	15,753,097.58
9		290.70	15,712,574.98
10		290.01	15,679,207.67
전체		293.46	15,783,867.57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57〉 연령별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일수 및 지급액

(단위: 일,만원)

연령	시설급여	시설급여 이용일수	시설급여 이용지급액
65세 미만		292.46	15,909,860.68
65-75세 미만		288.33	15,573,343.55
75세 이상		294.07	15,802,306.88
전체		293.46	15,783,867.57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58〉 가구재산별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일수 및 지급액

(단위: 일수,만원)

재산분위	시설급여	시설급여 이용일수	시설급여 이용지급액
1-4		298.88	16,068,349.80
5		294.79	15,630,410.10
6		282.31	15,117,432.01
7		282.69	15,219,761.68
8		292.26	15,833,520.87
9		295.91	15,902,276.29
10		294.77	15,974,437.75
전체		293.46	15,783,867.57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세부 분석은 수급자수, 평균 이용시간, 평균급여량과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율에 대해 소득분위와 재산분위, 연령별로 특성을 살펴보았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전체 수급자 중 소득1분위 수급자가 65.17%이며, 재산 1-4분위가 55.79%로 소득1분위 또는 재산 1-4분위 수급자가 전체의 80.64%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소득 1분위와 재산 1-4분위인 경우 또한 40.32%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60%미만)과 지역별 공급 제한으로 인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표 2-2-2-59〉 소득 및 재산분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 현황

(단위: %)

소득분위 \ 재산분위	1-4	5-10	전체
1	40.32	24.84	65.17
2	7.50	3.35	10.85
3-10	7.96	15.97	23.99
전체	55.79	44.20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자의 비중이 80.99%, 65-74세가 19.01%로 후기 고령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소득 1분위이면서 75세 이상의 비중이 50.67%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 소득 1-4분위이면서 75세 이상의 비중은 약 72.02%로 높게 나타난다. 재산분위별로는 1분위이며 75세 이상인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수급자의 비율은 42.81%이며, 재산분위가 높을수록 비율은 감소하지만 소득분위보다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2-60〉 소득 및 연령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 현황

(단위: %)

소득분위 \ 연령	65-74세	75세 이상	전체
1	14.39	50.67	65.06
2	1.47	9.30	10.78
3-10	3.14	21.01	24.15
전체	19.01	80.99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61〉 연령 및 재산 10분위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자 수

(단위: %)

연령 \ 재산분위	1-4	5-10	전체
65-74세	12.98	6.01	18.99
75세 이상	42.81	38.20	81.01
전체	55.79	44.22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평균 이용시간은 전체 이용자 평균 249.85시간이며, 결제액은 244.88만원이며 연령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총 결제액 중 본인부담금 비율은 전체 평균은 6.82%이며, 65-74세는 4.61%, 75세 이상은 7.31%로 고연령층에서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에 대해 무료 또는 경감대상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2-2-2-6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평균 이용시간 및 결제액·본인부담금 비율

(단위: 시간, 만원, %, 명)

특성 \ 연령	전체	65-74세	75세이상
이용일수	249.85	249.77	249.87
결제액	244.88	244.81	244.90
본인부담금 비율	6.82	4.61	7.3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3) 2년간 돌봄 형태의 변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요양필요도 수준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자는 장기요양을 이용하며, 등급외자의 경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의 노인돌봄서비스 상태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년간의 돌봄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을 계속 이용하는 비율은 90.66%이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계속이용하는 비율은 5.25%로 서비스의 변화가 없이 이용하는 비율이 95.91%로 매우 높게 나며, 그 외에는 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노인장기요양을 이용하는 비율이 1.89%,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0.4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요양보험 또는 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용하지 않게 된 비율은 1.76%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돌봄서비스 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1분위의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비율이 9.68%이며, 2분위는 5.94%이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계속 이용은 감소하고, 장기요양계속 이용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경우 장기요양계속이용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계속이용의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다만 75세 이상에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장기요양으로 변화한 비율이 2.04%로 65-74세의 1.45%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증가로 인한 기능상태 악화가 원인으로 보여진다.

재산분위별로는 소득분위에 따른 경향성과 같이 재산분위가 높을수록 장기요양계속 이용의 비중이 높으며, 노인돌봄종합계속 이용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표 2-2-2-63〉 소득분위별 돌봄형태의 변화(15년 기준 17년)

(단위: %)

돌봄형태 변화		요양계속	돌봄→요양	요양→돌봄	돌봄계속	요양→미이용	돌봄→미이용	전체
가구소득								
1	분위별 비율	83.84	2.76	0.72	9.68	0.29	2.70	100.00
	전체 비율	30.73	1.01	0.27	3.55	0.11	0.99	36.65
2	가구소득별 비율	88.27	3.00	0.43	5.94	0.29	2.07	100.00
	전체 비율	8.85	0.30	0.04	0.60	0.03	0.21	10.02
3-10	가구소득별 비율	89.08	2.21	0.55	6.17	0.11	1.87	100.00
	전체 비율	51.08	0.57	0.12	1.09	0.01	0.42	53.32
전체	가구소득별 비율	90.66	1.89	0.44	5.25	0.14	1.62	100.00
	전체 비율	90.66	1.89	0.44	5.25	0.14	1.62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64〉 연령별 돌봄형태의 변화(15년 기준 17년)

(단위: %)

돌봄형태 변화		요양계속	돌봄→요양	요양→돌봄	돌봄계속	요양→미이용	돌봄→미이용	전체
연령								
65세 미만	연령별 비율	10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전체 비율	0.47	0.00	0.00	0.00	0.00	0.00	0.47
65-74세	연령별 비율	89.82	1.45	0.70	6.27	0.16	1.61	100.00
	전체 비율	12.02	0.19	0.09	0.84	0.02	0.22	13.39
75세 이상	연령별 비율	90.32	2.04	0.43	5.35	0.16	1.70	100.00
	전체 비율	74.43	1.68	0.36	4.41	0.13	1.40	82.41
전체	연령별 비율	90.66	1.88	0.45	5.25	0.15	1.61	100.00
	전체 비율	90.66	1.88	0.45	5.25	0.15	1.61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2-2-65〉 가구재산별 돌봄형태의 변화(15년 기준 17년)

(단위: 명, %)

돌봄형태 변화		요양계속	돌봄→요양	요양→돌봄	돌봄계속	요양→미이용	돌봄→미이용	전체
재산분위								
1-4	가구재산별 비율	87.11	2.36	0.64	7.73	0.18	1.97	100.00
	전체 비율	35.13	0.95	0.26	3.12	0.07	0.80	40.32
5-10	가구재산별 비율	85.53	2.63	0.66	8.16	0.13	2.89	100.00
	전체 비율	55.51	0.93	0.21	2.13	0.08	0.81	59.68
전체	가구재산별 비율	90.63	1.89	0.46	5.25	0.16	1.61	100.00
	전체 비율	90.63	1.89	0.46	5.25	0.16	1.61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제3절 장애인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이 절에서는 장애인의 사회보장 현황과 소득분배 효과를 제시한다. 우선 분석 자료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본다. 이후 장애인의 사회보장 현황은 크게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으로 구분하여 수급 현황과 소득분배 효과를 제시한다.

1.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규모와 특성

이 연구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실제 자료 분석에서는 장애유형 혹은 장애등급 둘 중 하나만 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서 하나라도 값이 있는 경우 장애인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장애인 가구는 세대원 중 등록 장애인이 1인 이상 존재하는 가구로 정의한다. 따라서 비장애인 가구는 세대원 전원이 비장애인인 경우로 정의된다.

2017년 자료에서 장애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03%로 나타나며, 장애인은 전체 개인의 4.89%로 나타난다. 실제 2017년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수의 비율이 4.92%였는데(행정안전부, 2018; 보건복지부, 2018),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5년 장애인 개인의 비율은 4.55%로 나타나 2017년 장애인 중에서 2015년 이후에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3-1〉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규모

(단위: %, 가구, 명)

구분	가구	개인	
	2017	2015	2017
장애	11.03	4.55	4.89
비장애	88.97	95.45	95.11
전체	100.00	100.00	100.00
사례수	1,115,052	2,405,622	2,405,622

주: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 기준이며, 장애인 가구는 세대원 중 등록 장애인이 1인 이상 존재하는 가구로 정의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17년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보면, 장애인 중 세대주의 비율이 61.96%로 비장애인 40.49%에 비해 상당히 높다. 또한 남성의 비율이 58.52%로 비장애인 49.56%에 비해 높다.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장애인 중 0~17세의 아동은 2.81%로 비장애인의 아동 비율 17.20%에 비해 상당히 낮고,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4.60%로 비장애인의 노인 비율 12.37%에 비해 상당히 높다. 장애인의 고령화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은 12.20%로 비장애인 6.79%에 비해 높다. 2017년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보면 가구주가 여성인 비율이 26.21%로 비장애인 가구 32.14%에 비해 낮으며,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가 40.44%로 비장애인 가구 18.50%에 비해 매우 높다.

〈표 2-2-3-2〉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특성

(단위: %)

구분		가구		개인			
		2017		2015		2017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세대주 여부	세대주	-	-	62.42	40.54	61.96	40.49
	세대원	-	-	37.58	59.46	38.04	59.51
	계	-	-	100.00	100.00	100.00	100.00
성	남성	73.79	67.86	58.69	49.58	58.52	49.56
	여성	26.21	32.14	41.31	50.42	41.48	50.44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연령	0~17세	0.02	0.07	2.36	17.17	2.81	17.20
	18~39세	7.02	24.60	10.21	31.07	10.04	31.16
	40~64세	52.53	56.84	43.40	39.25	42.55	39.28
	65세 이상	40.44	18.50	44.02	12.51	44.60	12.37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거주지역	대도시	40.60	45.23	40.28	44.94	40.42	44.95
	중소도시	47.38	47.12	47.50	48.26	47.38	48.27
	농어촌	12.02	7.64	12.22	6.81	12.20	6.79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가구의 성, 연령은 세대주의 성,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3〉 장애인의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분포

(단위: %)

구분	2015				2017			
	등급	비율	등급	비율	등급	비율	등급	비율
장애등급	1급	7.03	5급	20.99	1급	7.25	5급	21.27
	2급	12.94	6급	26.20	2급	13.08	6급	25.63
	3급	17.71	미확인	0.27	3급	17.59	미확인	0.24
	4급	14.86	전체	100.00	4급	14.93	전체	100.00
장애유형	유형	비율	유형	비율	유형	비율	유형	비율
	지체	52.45	호흡기	0.41	지체	49.70	호흡기	0.46
	뇌병변	9.36	장루·요루	0.54	뇌병변	9.91	장루·요루	0.61
	시각	10.20	뇌전증	0.44	시각	9.95	뇌전증	0.42
	청각	9.65	지적	7.42	청각	11.42	지적	7.41
	언어	0.74	자폐성	0.91	언어	0.80	자폐성	1.01
	안면	0.12	정신	4.23	안면	0.11	정신	4.17
	신장	2.66	미확인	0.00	신장	3.14	미확인	0.00
	심장	0.43	-	-	심장	0.42	-	-
	간	0.43	전체	100.00	간	0.48	전체	100.00

주: '미확인'은 장애등급 혹은 장애유형 중 하나의 정보가 없는 경우임.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17년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보면 1급이 7.25%로 가장 적고 이후 대체로 낮은 등급으로 갈수록

장애인의 수가 많다. 장애유형에서는 지체장애인이 49.70%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신장, 심장,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인과 같은 신체 내부기관의 장애인은 그 수가 적다.

이 연구에서 분석 자료는 2017년을 기준으로 표본설계를 하였고, 해당 표본의 2015년 상태를 결합하여 구축하였다. 따라서 2017년의 장애 상태는 2015년과 불일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장애인이지만 2015년에는 비장애인인 경우가 있으며, 2017년에 비장애인이지만, 2015년에는 장애인이었던 경우도 있다. 전자는 장애가 발생하여 새롭게 장애 등록을 한 경우이며, 후자는 과거에 등록했던 장애 상태가 변하여 재판정 과정에서 장애등록이 취소된 경우이다. 이를 확인한 결과 2017년에 장애인으로 확인된 사람 중 7.03%는 2015년 당시 비장애인이었다. 하지만 2017년 비장애인으로 확인된 사람 중 2015년에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없었다.

〈표 2-2-3-4〉 2015-2017년 장애 상태 변화

(단위: %)

구분		2017년		
		장애	비장애	전체
2015년	장애	92.97	0.00	4.55
	비장애	7.03	100.00	95.45
	전체	100.00	100.00	100.0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장애인 소득보장 현황과 소득분배 효과

가. 장애인의 소득 분포

장애인의 소득 분포를 살펴볼 때 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의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균등화하였으며, 균등화 지수는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였다. 가구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 모두 균등화된 가구 소득을 제시하였다. 소득(시장소득)과 재산은 10분위로 구분하였는데, 소득의 경우 1~2분위, 재산의 경우 1~4분위가 구분되지 않아 통합하여 제시한다. 연령대는 9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의 연령대별 분포를 제시할 경우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미성년 세대주의 수가 매우 적어 0~17세를 통합하여 7개 연령대 구간으로 제시하였다.

1) 소득분위·재산분위·연령대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비율

다음 표들은 소득분위, 재산분위, 연령대에 따른 전체 가구 중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표이다. 우선 소득분위 및 연령대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소득분위를 보면 1~2분위 가구 중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16.85%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낮아 소득 10분위에서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6.24%

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연령대에서는 0~17세 가구주 가구 중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3.21%였으며,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 중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24.43%로 나타난다. 소득분위와 가구주 연령대를 교차해 보면 사례수가 적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0~17세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득 8~9분위에서 가구주가 7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30% 이상으로 나타난다.

〈표 2-2-3-5〉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비율(2017)

(단위: %)

연령 소득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2분위	2.75	3.07	5.86	11.16	16.91	19.35	22.98	16.85
3분위	33.64	1.34	4.56	8.48	13.42	19.48	24.01	13.41
4분위	70.05	1.91	4.15	7.71	12.05	19.63	27.03	11.23
5분위	n.a.	2.26	4.51	7.41	12.20	19.15	26.95	10.95
6분위	n.a.	1.40	4.00	7.76	11.62	17.79	28.68	9.82
7분위	0.00	1.15	3.58	7.48	10.87	18.96	26.66	8.63
8분위	n.a.	1.20	3.00	7.15	11.03	19.75	32.78	8.20
9분위	n.a.	1.55	2.54	6.63	10.81	18.95	33.05	7.77
10분위	n.a.	2.10	2.08	4.91	8.09	13.91	29.34	6.24
전체	3.21	1.86	3.63	7.54	12.12	19.07	24.43	11.03

주: 해당 셀의 전체 가구 중 장애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와 연령대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비율을 보면, 앞서 소득과 달리 재산분위가 높을수록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산 1~4분위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9.40%로 그 이상의 분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재산 5분위에서 16.31%로 가장 높은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이후 재산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하지만 사례수가 적은 0~17세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면 모든 재산분위에서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게 관찰된다.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재산분위에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소득이 가장 낮은 1~2분위, 재산은 중간보다 다소 낮은 5분위에서 23.42%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을 종합하면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낮은 소득분위와 높은 가구주 연령대에서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며, 재산은 중간 수준에서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2-2-3-6〉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비율(2017)

(단위: %)

연령 재산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4분위	3.14	1.62	3.06	7.30	12.29	18.53	21.96	9.40
5분위	0.00	5.58	6.57	10.32	15.34	23.46	25.32	16.31
6분위	13.87	5.19	5.81	8.83	13.66	21.55	25.76	15.10
7분위	0.00	6.31	4.03	8.09	12.22	19.65	26.18	12.49
8분위	0.00	3.96	4.43	7.23	11.86	18.92	26.06	11.49
9분위	0.00	5.43	4.26	7.44	11.48	18.37	26.49	11.48
10분위	n.a.	9.20	4.62	7.06	10.16	16.85	26.00	11.05
전체	3.21	1.86	3.63	7.54	12.12	19.07	24.43	11.03

주: 해당 셀의 전체 가구 중 장애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7〉 소득 · 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비율(2017)

(단위: %)

소득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15.98	23.42	20.94	17.00	15.92	15.53	15.25	16.85
3분위	10.78	19.10	18.07	16.14	15.28	14.65	14.48	13.41
4분위	8.67	15.66	15.14	13.99	12.95	13.63	14.28	11.23
5분위	8.43	14.81	13.91	13.24	12.68	13.25	13.32	10.95
6분위	7.23	11.94	13.27	11.80	11.15	12.59	12.24	9.82
7분위	6.10	10.65	11.31	10.08	10.12	10.93	11.68	8.63
8분위	5.45	9.93	11.26	9.64	9.74	10.20	10.55	8.20
9분위	4.82	9.74	9.61	9.60	9.25	9.66	9.79	7.77
10분위	4.34	6.80	7.68	7.45	7.25	7.31	7.02	6.24
전체	9.40	16.31	15.10	12.49	11.49	11.48	11.05	11.03

주: 해당 셀의 전체 가구 중 장애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음 표들은 소득분위, 재산분위, 연령대에 따른 전체 개인 중 장애인의 비율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표이다. 우선 소득분위 및 연령대에 따라 장애인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소득분위를 보면 1~2분위 개인 중 장애인의 비율이 11.94%로 가장 높고,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장애인의 비율이 낮아 소득 10분위에서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2.32%로 나타난다. 연령대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0~5세 개인 중에서 장애인의 비율은 0.31%이며, 75세 이상 개인 중에서 장애인의 비율은 18.91%까지 높아진다. 개인의 소득분위와 연령대를 교차해 보면 대체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75세 이상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른 장애인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높은 소득분위에서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낮은 소득분위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 때 점진적으로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특히 소득 고분위에서는 65세 이후 장애인의 비율이 현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른 장애인의 비율에 차이가 줄어들고 오히려 소득 고분위에서 높은 장애인 비율이 나타나기도 한다.

〈표 2-2-3-8〉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개인의 비율(2017)

(단위: %)

연령 소득	0-5	6-11	12-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2분위	0.47	1.29	2.25	3.38	5.39	9.08	13.42	14.55	18.28	11.94
3분위	0.34	1.17	1.60	1.53	2.97	4.95	8.17	12.88	17.38	6.91
4분위	0.30	1.13	1.34	1.58	2.32	3.70	6.75	12.38	17.93	4.96
5분위	0.35	0.99	1.18	1.30	2.18	3.24	6.52	11.90	18.54	4.48
6분위	0.35	1.09	1.08	1.21	1.62	3.02	6.19	12.07	19.72	3.91
7분위	0.23	0.85	1.06	1.26	1.40	2.68	5.68	12.46	19.39	3.32
8분위	0.27	0.82	1.09	1.04	1.26	2.31	5.31	13.64	21.78	3.08
9분위	0.29	0.71	0.92	1.10	1.06	1.98	4.73	14.01	23.40	2.89
10분위	0.34	0.65	0.72	1.03	0.89	1.47	3.21	11.07	22.97	2.32
전체	0.31	0.93	1.18	1.35	1.79	3.30	6.75	13.20	18.91	4.89

주: 해당 셀의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음은 재산분위와 연령대별 장애인의 비율을 보여주는 표이다. 재산분위에 따른 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소득분위와 달리 특별한 경향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재산 5분위에서 장애인의 비율이 8.10%로 가장 높고 재산 10분위에서 3.70%로 가장 낮아 대체로 중간 재산 분위에서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재산분위와 연령대를 교차해 보면 대부분의 재산분위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령대 내에서 재산분위에 따른 장애인의 비율은 연령대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는다.

〈표 2-2-3-9〉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개인의 비율(2017)

(단위: %)

연령 재산	0-5	6-11	12-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4분위	0.34	1.09	1.47	1.50	1.86	4.27	8.36	14.05	18.09	5.08
5분위	0.16	1.48	1.54	1.99	2.65	4.74	9.34	16.85	21.20	8.10
6분위	0.33	1.20	1.40	1.51	2.54	4.10	7.88	15.01	19.76	6.96
7분위	0.28	0.91	1.20	1.26	1.65	3.22	6.48	13.05	18.33	4.96
8분위	0.29	0.87	0.92	1.17	1.56	2.47	5.56	12.71	19.40	4.21
9분위	0.29	0.77	0.94	1.19	1.51	2.28	5.01	11.84	19.41	4.02
10분위	0.32	0.64	0.83	1.02	1.38	1.80	4.05	10.50	18.88	3.70
전체	0.31	0.93	1.18	1.35	1.79	3.30	6.75	13.20	18.91	4.89

주: 해당 셀의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와 재산분위에 따른 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재산분위 내에서는 일관되게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장애인의 비율이 높으나, 소득분위 내에서는 재산 5~6분위에서의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재산분위는 중간 분위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2-2-3-10〉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 개인의 비율(2017)

(단위: %)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12.43	18.24	15.06	10.77	9.52	8.91	8.22	11.94
3분위	6.20	10.14	9.69	7.55	6.67	6.19	5.66	6.91
4분위	4.39	7.14	6.54	5.44	4.73	4.88	5.02	4.96
5분위	3.96	6.13	5.64	4.83	4.49	4.55	4.49	4.48
6분위	3.38	4.89	5.08	4.22	3.74	4.20	4.00	3.91
7분위	2.86	4.25	4.19	3.48	3.31	3.44	3.59	3.32
8분위	2.60	3.76	4.19	3.26	3.13	3.11	3.11	3.08
9분위	2.35	3.82	3.67	3.38	2.98	2.98	2.86	2.89
10분위	2.03	2.73	3.11	2.87	2.61	2.39	2.18	2.32
전체	5.08	8.10	6.96	4.96	4.21	4.02	3.70	4.89

주: 해당 셀의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소득분위·재산분위·연령대별 분포

다음 표들은 장애인 가구가 소득분위, 재산분위,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이다. 앞서 제시한 표와 달리 장애인 가구 전체를 100%로 봤을 때 각 범주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이다. 비교를 위해 비장애인 가구의 분포를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소득분위 및 가구주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장애인 가구를 100%로 보았을 때 소득 1~2분위에 32.08%가 분포되어 있고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는 장애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50~64세인 경우가 37.04%로 가장 많고 90% 이상이 가구주 연령이 40대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분위와 가구주 연령대를 교차해 보면 장애인 가구는 소득분위가 1~2분위이면서 가구주 연령대가 50대 이후인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 비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10분위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가구 중 비장애인 가구가 대부분인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대에서는 26~39세, 40~49세, 50~64세에 집중되어 가구주 연령이 중고령층에 몰려 있는 장애인 가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비장애인 가구 중에서도 소득 1~2분위이면서 가구주 연령대가 50대 이후인 경우에 타 범주보다 많은 가구가 분포되어 있지만 장애인 가구에 비해 편중된 정도가 약하다.

〈표 2-2-3-11〉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의 소득분위 · 연령대별 분포(2017)

(단위: %)

구분	연령 소득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장애인 가구	1-2분위	0.02	0.14	1.07	2.72	8.61	8.17	11.35	32.08
	3분위	0.00	0.06	0.46	1.27	3.37	3.03	2.76	10.95
	4분위	0.00	0.07	0.63	1.64	3.94	2.46	1.43	10.18
	5분위	0.00	0.06	0.72	1.64	4.16	2.29	1.07	9.93
	6분위	0.00	0.04	0.81	1.67	3.95	1.63	0.79	8.90
	7분위	0.00	0.03	0.93	1.67	3.38	1.27	0.55	7.83
	8분위	0.00	0.02	0.83	1.80	3.24	0.98	0.57	7.44
	9분위	0.00	0.02	0.68	1.74	3.38	0.67	0.55	7.04
	10분위	0.00	0.01	0.43	1.35	3.00	0.45	0.41	5.66
	전체	0.02	0.45	6.57	15.49	37.04	20.95	19.48	100.00
비장애인 가구	1-2분위	0.07	0.56	2.12	2.68	5.24	4.22	4.71	19.62
	3분위	0.00	0.55	1.20	1.69	2.70	1.55	1.08	8.77
	4분위	0.00	0.43	1.81	2.43	3.57	1.25	0.48	9.98
	5분위	0.00	0.32	1.89	2.54	3.71	1.20	0.36	10.01
	6분위	0.00	0.35	2.42	2.47	3.72	0.94	0.24	10.14
	7분위	0.00	0.31	3.11	2.56	3.43	0.67	0.19	10.27
	8분위	0.00	0.23	3.32	2.89	3.24	0.49	0.15	10.32
	9분위	0.00	0.14	3.25	3.03	3.45	0.36	0.14	10.37
	10분위	0.00	0.07	2.53	3.25	4.22	0.35	0.12	10.54
	전체	0.07	2.96	21.64	23.54	33.30	11.02	7.47	100.00

주: 전체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를 소득분위 및 세대주 연령대에 따라 구분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 및 연령대별로 장애인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재산분위에서 장애인 가구는 대체로 10분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특히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중이 적는데, 이는 비장애인 가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장애인 가구 중 40.51%가 재산 1~4분위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비장애인 가구는 48.43%가 분포되어 상대적으로 장애인 가구 중 재산 저분위 비중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재산분위와 가구주 연령대를 교차해 보면 모든 재산분위에서 가구주 연령이 50~64세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는 비장애인 가구도 마찬가지이다.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 장애인 가구의 분포를 보면 낮은 재산분위에서는 소득분위가 낮은 경우에 장애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는 반면, 높은 재산분위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은 경우에 장애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분위와 재산분위가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례성은 비장애인 가구에서도 확인된다.

〈표 2-2-3-12〉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의 재산분위 · 연령대별 분포(2017)

(단위: %)

구분	연령 재산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장애인 가구	1-4분위	0.02	0.37	3.58	6.80	15.64	7.32	6.78	40.51
	5분위	0.00	0.01	0.18	0.39	1.26	0.81	0.97	3.62
	6분위	0.00	0.03	0.61	1.47	4.49	3.37	3.73	13.70
	7분위	0.00	0.02	0.57	1.68	4.02	2.67	2.37	11.32
	8분위	0.00	0.01	0.66	1.72	3.87	2.26	1.91	10.42
	9분위	0.00	0.01	0.53	1.80	4.03	2.24	1.84	10.45
	10분위	0.00	0.01	0.45	1.64	3.72	2.28	1.89	9.99
	전체	0.02	0.45	6.57	15.49	37.04	20.95	19.48	100.00
비장애인 가구	1-4분위	0.07	2.78	14.06	10.69	13.84	3.99	2.99	48.43
	5분위	0.00	0.02	0.32	0.42	0.86	0.33	0.35	2.30
	6분위	0.00	0.06	1.23	1.89	3.52	1.52	1.33	9.54
	7분위	0.00	0.04	1.67	2.36	3.58	1.35	0.83	9.83
	8분위	0.00	0.03	1.75	2.74	3.56	1.20	0.67	9.95
	9분위	0.00	0.02	1.47	2.77	3.86	1.23	0.63	9.98
	10분위	0.00	0.01	1.14	2.67	4.08	1.40	0.67	9.97
	전체	0.07	2.96	21.64	23.54	33.30	11.02	7.47	100.00

주: 전체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를 재산분위 및 세대주 연령대에 따라 구분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13〉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의 소득 · 재산 분위별 분포(2017)

(단위: %)

구분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장애인 가구	1-2분위	17.30	1.61	4.81	2.63	2.06	1.87	1.80	32.08
	3분위	4.58	0.48	1.89	1.32	1.04	0.88	0.77	10.95
	4분위	4.18	0.37	1.46	1.27	1.03	0.99	0.88	10.18
	5분위	3.73	0.32	1.37	1.37	1.16	1.07	0.92	9.93
	6분위	3.12	0.25	1.25	1.26	1.11	1.07	0.83	8.90
	7분위	2.52	0.20	1.01	1.10	1.08	1.05	0.87	7.83
	8분위	2.08	0.17	0.90	1.04	1.13	1.13	1.00	7.44
	9분위	1.67	0.14	0.65	0.91	1.12	1.28	1.27	7.04
	10분위	1.34	0.08	0.36	0.43	0.69	1.11	1.65	5.66
	전체	40.51	3.62	13.70	11.32	10.42	10.45	9.99	100.00
비장애인 가구	1-2분위	11.28	0.65	2.25	1.59	1.35	1.26	1.24	19.62
	3분위	4.69	0.25	1.06	0.85	0.71	0.63	0.56	8.77
	4분위	5.46	0.25	1.02	0.97	0.86	0.78	0.65	9.98
	5분위	5.03	0.23	1.05	1.11	0.99	0.87	0.74	10.01
	6분위	4.97	0.23	1.01	1.17	1.10	0.92	0.74	10.14
	7분위	4.80	0.21	0.99	1.22	1.19	1.06	0.81	10.27
	8분위	4.46	0.19	0.88	1.21	1.30	1.23	1.05	10.32
	9분위	4.09	0.16	0.76	1.06	1.36	1.49	1.45	10.37
	10분위	3.66	0.13	0.53	0.66	1.10	1.74	2.71	10.54
	전체	48.43	2.30	9.54	9.83	9.95	9.98	9.97	100.00

주: 전체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를 소득 및 재산 분위에 따라 구분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음은 장애인 개인이 소득분위, 재산분위,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장애인의 소득분위 및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인은 높은 연령대에 많이 분포하지만 소득분위별 분포는 비교적 고르다. 이와는 달리 비장애인은 26~64세에 많이 분포하고 높은 소득분위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분위에 따른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장애인 가구는 소득분위에 따라 가구원 중 장애인의 수에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비장애인 가구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전체 가구원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3-14〉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분위·연령대별 분포(2017)

(단위: %)

구분	연령 소득	0-5	6-11	12-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장애인	1-2분위	0.18	0.34	0.50	0.46	1.02	1.75	4.82	4.86	6.06	19.97
	3분위	0.18	0.29	0.43	0.81	0.80	1.17	2.45	2.07	1.83	10.03
	4분위	0.27	0.44	0.60	1.05	1.30	1.55	2.93	1.72	1.16	11.01
	5분위	0.30	0.43	0.59	1.15	1.62	1.60	3.18	1.59	1.05	11.52
	6분위	0.34	0.48	0.54	1.05	1.80	1.58	2.99	1.19	0.86	10.82
	7분위	0.34	0.49	0.51	1.01	1.78	1.55	2.60	0.98	0.69	9.96
	8분위	0.29	0.45	0.57	1.05	1.66	1.68	2.46	0.86	0.77	9.79
	9분위	0.21	0.38	0.56	1.14	1.51	1.64	2.53	0.66	0.85	9.49
	10분위	0.15	0.26	0.41	0.94	1.05	1.27	2.18	0.46	0.68	7.41
	전체	2.26	3.57	4.71	8.65	12.55	13.77	26.14	14.38	13.96	100.00
비장애인	1-2분위	0.34	0.42	0.47	0.53	1.30	1.49	2.85	2.39	2.42	12.22
	3분위	0.31	0.38	0.45	0.90	1.02	1.12	1.73	0.98	0.66	7.56
	4분위	0.50	0.60	0.68	1.21	1.70	1.71	2.33	0.82	0.38	9.94
	5분위	0.57	0.61	0.73	1.37	2.00	1.86	2.54	0.79	0.33	10.80
	6분위	0.75	0.67	0.66	1.33	2.52	1.85	2.56	0.62	0.25	11.22
	7분위	0.90	0.79	0.67	1.27	3.04	1.95	2.42	0.48	0.23	11.75
	8분위	0.82	0.85	0.80	1.27	3.17	2.23	2.32	0.39	0.21	12.05
	9분위	0.66	0.75	0.86	1.44	3.09	2.40	2.47	0.30	0.23	12.19
	10분위	0.53	0.68	0.85	1.49	2.68	2.56	2.98	0.29	0.21	12.27
	전체	5.38	5.76	6.17	10.81	20.52	17.17	22.20	7.06	4.93	100.00

주: 전체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소득분위 및 연령대에 따라 구분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 및 연령대에 따른 장애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재산 6분위 이상에 많이 분포하는 경향은 유사하지만 재산 1~4분위 비율은 장애인이 33.09%로 비장애인 39.4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가장 많은 연령대인 50~64세를 보면 특히 비중이 낮은 재산 5분위를 제외하면 재산분위에 따른 분포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장애인의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별 분포를 보면 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 저분위에서는 소득분위가 낮은 경우 장애인이 다수 분포하고, 재산 고분위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은 경우 장애인이 다수 분포하는 비례성을 보여준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비례성이 확인된다.

〈표 2-2-3-15〉 장애인-비장애인의 재산분위 · 연령대별 분포(2017)

(단위: %)

구분	연령 재산	0-5	6-11	12-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장애인	1-4분위	0.80	1.14	1.55	2.89	4.30	4.63	9.26	4.37	4.15	33.09
	5분위	0.05	0.09	0.13	0.24	0.33	0.35	0.85	0.51	0.59	3.14
	6분위	0.22	0.36	0.51	1.01	1.48	1.57	3.36	2.23	2.38	13.11
	7분위	0.27	0.42	0.58	1.09	1.56	1.73	3.19	1.93	1.73	12.49
	8분위	0.31	0.49	0.63	1.08	1.62	1.73	3.06	1.74	1.60	12.24
	9분위	0.30	0.54	0.66	1.22	1.65	1.89	3.28	1.74	1.68	12.95
	10분위	0.31	0.53	0.65	1.13	1.62	1.88	3.14	1.87	1.84	12.97
	전체	2.26	3.57	4.71	8.65	12.55	13.77	26.14	14.38	13.96	100.00
비장애인	1-4분위	2.28	2.02	2.10	4.53	9.98	6.53	8.02	2.29	1.70	39.46
	5분위	0.08	0.08	0.11	0.20	0.36	0.31	0.56	0.20	0.21	2.10
	6분위	0.36	0.42	0.51	0.94	1.53	1.47	2.38	0.94	0.79	9.34
	7분위	0.59	0.64	0.70	1.15	2.08	1.89	2.55	0.89	0.58	11.06
	8분위	0.73	0.82	0.87	1.25	2.26	2.21	2.62	0.83	0.51	12.10
	9분위	0.69	0.88	0.93	1.34	2.19	2.35	2.89	0.88	0.54	12.68
	10분위	0.65	0.91	0.95	1.40	2.12	2.42	3.18	1.04	0.60	13.27
	전체	5.38	5.76	6.17	10.81	20.52	17.17	22.20	7.06	4.93	100.00

주: 전체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소득분위 및 연령대에 따라 구분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16〉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 · 재산 분위 분포(2017)

(단위: %)

구분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장애인	1-2분위	9.50	0.92	3.13	1.92	1.53	1.45	1.51	19.97
	3분위	3.90	0.45	1.65	1.25	1.03	0.90	0.86	10.03
	4분위	4.04	0.41	1.58	1.43	1.22	1.21	1.12	11.01
	5분위	3.89	0.36	1.55	1.68	1.44	1.38	1.22	11.52
	6분위	3.33	0.30	1.55	1.60	1.44	1.45	1.16	10.82
	7분위	2.78	0.24	1.25	1.46	1.48	1.48	1.27	9.96
	8분위	2.31	0.21	1.14	1.39	1.60	1.65	1.50	9.79
	9분위	1.89	0.17	0.82	1.22	1.58	1.89	1.92	9.49
	10분위	1.44	0.10	0.44	0.55	0.91	1.54	2.42	7.41
	전체	33.09	3.14	13.11	12.49	12.24	12.95	12.97	100.00
비장애인	1-2분위	6.38	0.37	1.38	1.10	0.99	0.97	1.02	12.22
	3분위	3.60	0.21	0.90	0.81	0.73	0.67	0.63	7.56
	4분위	4.71	0.24	1.06	1.11	1.04	0.96	0.83	9.94
	5분위	4.68	0.24	1.17	1.35	1.26	1.12	0.98	10.80
	6분위	4.64	0.25	1.16	1.45	1.45	1.24	1.02	11.22
	7분위	4.46	0.23	1.17	1.58	1.63	1.49	1.17	11.75
	8분위	4.05	0.23	1.04	1.57	1.81	1.78	1.57	12.05
	9분위	3.60	0.18	0.87	1.34	1.86	2.14	2.19	12.19
	10분위	3.32	0.15	0.58	0.74	1.34	2.30	3.84	12.27
	전체	39.46	2.10	9.34	11.06	12.10	12.68	13.27	100.00

주: 전체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소득 및 재산 분위에 따라 구분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소득 수준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소득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비교하였다. 모든 소득은 가구 단위로 측정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균등화한 것이다. 이를 가구 혹은 개인 단위로 제시하였다. 우선 가구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 가구의 2017년 균등화 시장소득은 1589.1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2380.1만 원의 66.77% 수준이다. 반면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장애인 가구가 1928.9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2396.8만 원의 80.48% 수준으로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에서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된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보아도 장애인 가구는 339.8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16.7만 원에 비해 상당히 크다.

이는 개인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의 시장소득은 비장애인 대비 58.38%인데 비해 가처분소득은 71.57% 수준으로 상승한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을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는 크지 않은데, 연령대에서는 18~64세의 성인 연령대에서 그 효과가 크고 0~17세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다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시장소득이 비장애인의 97.23%, 장애인의 가처분소득은 비장애인의 98.60% 수준일 정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았다.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일 뿐,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이 가장 낮은 연령층이다.

〈표 2-2-3-17〉 장애인 가구 및 개인 특성별 연간 소득(2017)

(단위: 만 원, %)

구분		가구						개인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장애/비장애 비율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비장애 비율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성	남성	1,792.1	2,122.7	2,763.2	2,745.5	64.86	77.32	1,660.1	2,020.1	2,820.9	2,794.2	58.85	72.30
	여성	1,017.3	1,383.3	1,571.3	1,660.4	64.74	83.31	1,458.9	1,792.6	2,582.5	2,589.0	56.49	69.24
연령	0~17세	98.2	371.8	5.5	133.8	1785.45	277.88	2,289.2	2,331.1	2,820.4	2,713.0	81.17	85.92
	18~39세	2,128.1	2,304.9	2,660.8	2,593.3	79.98	88.88	2,122.9	2,314.5	2,989.1	2,917.2	71.02	79.34
	40~64세	2,082.1	2,301.8	2,727.4	2,637.4	76.34	87.28	1,763.9	2,063.5	2,871.2	2,811.5	61.43	73.39
	65세 이상	855.8	1,380.1	948.7	1,404.7	90.21	98.25	1,230.2	1,681.3	1,265.2	1,705.2	97.23	98.60
거주지역	대도시	1,711.0	2,042.5	2,512.4	2,494.1	68.10	81.89	1,696.3	2,036.6	2,876.4	2,824.1	58.97	72.12
	중소도시	1,649.7	1,978.9	2,401.6	2,424.8	68.69	81.61	1,637.4	1,976.2	2,682.3	2,685.2	61.04	73.60
	농어촌	938.3	1,348.3	1,464.9	1,647.7	64.05	81.83	944.4	1,362.7	1,667.0	1,846.3	56.65	73.81
전체		1,589.1	1,928.9	2,380.1	2,396.8	66.77	80.48	1,576.6	1,925.7	2,700.6	2,690.7	58.38	71.57

주 1) 가구의 성, 연령은 세대주의 성, 연령을 의미함.

2) 해당 셀에 해당하는 가구·개인의 균등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값. 음의 소득은 0으로 전환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 재산분위, 연령대별로 장애인 가구의 균등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비교하였다. 우선 소득분위와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면, 소득 1~2분위의 장애인 가구는 시장소득이 전

혀 없고 가처분소득이 595.9만 원이다. 이후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시장소득은 증가하고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는 줄어들어 소득 10분위로 가면 가처분소득이 시장소득보다 낮아진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장애인 가구의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소득분위 내에서 가구주의 연령대로 볼 때 대체로 65~74세 장애인 가구의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재분배에 의해 시장소득보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대체로 소득 10분위에서 나타나지만 가구주가 40대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소득 9분위부터, 가구주가 18~25세인 장애인 가구는 소득 8분위부터 나타난다.

〈표 2-2-3-18〉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연간 소득(2017)

(단위: 만 원)

연령 소득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2분위	시장소득	0.0	0.0	0.0	0.0	0.0	0.0	0.0	0.0
	가처분소득	233.3	430.9	516.5	565.5	609.2	692.6	533.5	595.9
	차이	233.3	430.9	516.5	565.5	609.2	692.6	533.5	595.9
3분위	시장소득	86.3	130.4	138.4	127.7	129.7	130.7	143.7	133.6
	가처분소득	766.5	459.9	488.7	512.0	593.1	798.5	688.9	659.6
	차이	680.2	329.5	350.3	384.3	463.4	667.8	545.2	526.0
4분위	시장소득	841.9	607.3	617.7	615.1	607.9	591.8	579.3	601.8
	가처분소득	1,272.8	878.3	864.5	877.9	975.0	1,228.2	1,049.1	1,023.5
	차이	430.9	271.0	246.8	262.8	367.1	636.4	469.8	421.7
5분위	시장소득	n.a.	1,216.2	1,233.4	1,218.6	1,226.7	1,216.2	1,205.0	1,221.0
	가처분소득	n.a.	1,462.7	1,456.2	1,413.0	1,541.9	1,785.6	1,605.7	1,577.0
	차이	n.a.	246.5	222.8	194.4	315.2	569.4	400.7	356.0
6분위	시장소득	n.a.	1,824.6	1,863.2	1,859.2	1,853.1	1,846.2	1,847.2	1,853.2
	가처분소득	n.a.	1,964.1	2,067.5	2,003.8	2,119.5	2,387.4	2,234.7	2,151.7
	차이	n.a.	139.5	204.3	144.6	266.4	541.2	387.5	298.5
7분위	시장소득	n.a.	2,544.2	2,545.7	2,544.0	2,539.9	2,528.4	2,538.8	2,539.5
	가처분소득	n.a.	2,626.6	2,703.5	2,668.5	2,761.3	2,978.2	2,856.6	2,776.0
	차이	n.a.	82.4	157.8	124.5	221.4	449.8	317.8	236.5
8분위	시장소득	n.a.	3,326.3	3,344.0	3,361.1	3,354.0	3,338.0	3,351.7	3,352.2
	가처분소득	n.a.	3,321.5	3,445.7	3,426.1	3,500.6	3,748.6	3,647.2	3,519.9
	차이	n.a.	-4.8	101.7	65.0	146.6	410.6	295.5	167.7
9분위	시장소득	n.a.	4,379.2	4,459.5	4,474.5	4,496.9	4,458.5	4,491.2	4,483.3
	가처분소득	n.a.	4,346.7	4,458.1	4,408.9	4,512.9	4,757.0	4,640.4	4,514.8
	차이	n.a.	-32.5	-1.4	-65.6	16.0	298.5	149.2	31.5
10분위	시장소득	n.a.	7,723.7	7,815.1	7,915.0	8,140.5	9,231.6	8,690.7	8,187.4
	가처분소득	n.a.	7,143.5	7,124.9	7,094.4	7,315.5	8,392.2	7,664.7	7,358.6
	차이	n.a.	-580.2	-690.2	-820.6	-825.0	-839.4	-1,026.0	-828.8
전체	시장소득	98.2	1,128.7	2,196.8	2,262.3	2,006.7	1,015.1	684.4	1,589.1
	가처분소득	371.8	1,383.9	2,368.2	2,398.8	2,261.2	1,598.9	1,144.9	1,928.9
	차이	273.6	255.2	171.4	136.5	254.5	583.8	460.5	339.8

주: 해당 셀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의 균등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값. 음의 소득은 0으로 전환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와 가구주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살펴보았다. 재산 5분위 장애인 가구의 시장소득이 재산 1~4분위보다 낮은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재산분위가 높을수록 시장소득이 높다. 또한 모든 재산분위에서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가 나타나며, 그 폭은 재산 5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각 재산분위에서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가장 큰 가구주 연령대는 대체로 65~74세로 나타난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18~49세인 경우에는 재산 고분위에서 재분배에 의한 소득 감소가 나타난다.

〈표 2-2-3-19〉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연간 소득(2017)

(단위: 만 원)

재산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4분위	시장소득	103.1	879.9	1,727.7	1,458.2	1,339.1	814.7	477.3	1,149.6
	가처분소득	358.8	1,167.7	1,946.6	1,718.0	1,669.9	1,367.1	940.2	1,520.4
	차이	255.7	287.8	218.9	259.8	330.8	552.4	462.9	370.8
5분위	시장소득	n.a.	1,227.4	2,145.7	1,634.3	1,311.0	594.2	300.5	956.5
	가처분소득	n.a.	1,422.5	2,325.6	1,896.9	1,635.9	1,195.6	764.3	1,366.0
	차이	n.a.	195.1	179.9	262.6	324.9	601.4	463.8	409.5
6분위	시장소득	0.0	1,699.0	2,293.6	2,027.7	1,733.4	742.0	459.7	1,199.5
	가처분소득	631.0	1,907.8	2,436.6	2,202.0	1,998.0	1,328.8	932.4	1,584.7
	차이	631.0	208.8	143.0	174.3	264.6	586.8	472.7	385.2
7분위	시장소득	n.a.	2,676.0	2,254.0	2,362.1	2,155.9	1,012.3	688.1	1,615.2
	가처분소득	n.a.	2,819.3	2,431.7	2,469.4	2,376.5	1,593.2	1,151.1	1,952.5
	차이	n.a.	143.3	177.7	107.3	220.6	580.9	463.0	337.3
8분위	시장소득	n.a.	2,238.0	2,737.3	2,776.7	2,580.0	1,160.5	855.3	1,998.6
	가처분소득	n.a.	2,323.9	2,859.0	2,858.9	2,784.5	1,784.6	1,341.6	2,320.2
	차이	n.a.	85.9	121.7	82.2	204.5	624.1	486.3	321.6
9분위	시장소득	n.a.	3,616.2	3,212.4	3,344.7	2,917.7	1,298.2	1,130.8	2,344.7
	가처분소득	n.a.	3,380.4	3,298.2	3,325.0	3,103.1	1,952.6	1,562.4	2,633.4
	차이	n.a.	-235.8	85.8	-19.7	185.4	654.4	431.6	288.7
10분위	시장소득	n.a.	3,192.8	3,785.0	4,130.4	3,633.2	1,790.7	1,456.0	2,887.8
	가처분소득	n.a.	3,060.4	3,776.7	3,949.8	3,693.9	2,358.5	1,880.9	3,090.6
	차이	n.a.	-132.4	-8.3	-180.6	60.7	567.8	424.9	202.8
전체	시장소득	98.2	1,128.7	2,196.8	2,262.3	2,006.7	1,015.1	684.4	1,589.1
	가처분소득	371.8	1,383.9	2,368.2	2,398.8	2,261.2	1,598.9	1,144.9	1,928.9
	차이	273.6	255.2	171.4	136.5	254.5	583.8	460.5	339.8

주: 해당 셀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의 균등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값. 음의 소득은 0으로 전환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와 재산분위에 따른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면 대체로 모든 재산분위에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재산분위에서 소득 10분위의 장애인 가구는 재분배에 의해 소득이 감소하는데, 재산 1~4분위의 경우에는 소득 9분위부터 재분배에 의해 소득이 감소하였다. 전체 재산분위에서 재산 5분위의 장애인 가구가 재분

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일 소득분위 내에서 보면 재산 10분위에서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는 재산 5분위에서는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큰 소득 저분위에 장애인 가구가 집중되어 있고, 재산 10분위는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적거나 감소하는 소득 고분위에 상대적으로 장애인 가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3-20〉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연간 소득(2017)

(단위: 만 원)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시장소득	0.0	0.0	0.0	0.0	0.0	0.0	0.0	0.0
	가처분소득	602.2	552.5	545.5	552.3	629.6	643.8	683.5	595.9
	차이	602.2	552.5	545.5	552.3	629.6	643.8	683.5	595.9
3분위	시장소득	130.7	133.9	141.6	137.8	138.5	130.1	122.0	133.6
	가처분소득	629.9	659.5	669.3	638.9	705.6	714.0	723.5	659.6
	차이	499.2	525.6	527.7	501.1	567.1	583.9	601.5	526.0
4분위	시장소득	597.3	600.9	599.1	607.4	603.5	612.2	606.4	601.8
	가처분소득	977.0	991.8	1,029.1	998.5	1,050.9	1,098.6	1,168.6	1,023.5
	차이	379.7	390.9	430.0	391.1	447.4	486.4	562.2	421.7
5분위	시장소득	1,217.4	1,216.8	1,219.9	1,220.5	1,227.8	1,229.1	1,221.6	1,221.0
	가처분소득	1,502.6	1,559.7	1,596.1	1,609.3	1,627.8	1,651.2	1,658.4	1,577.0
	차이	285.2	342.9	376.2	388.8	400.0	422.1	436.8	356.0
6분위	시장소득	1,848.1	1,875.1	1,845.4	1,861.5	1,855.8	1,852.6	1,862.7	1,853.2
	가처분소득	2,064.5	2,174.5	2,141.0	2,166.4	2,188.9	2,242.4	2,299.2	2,151.7
	차이	216.4	299.4	295.6	304.9	333.1	389.8	436.5	298.5
7분위	시장소득	2,533.4	2,536.9	2,530.4	2,549.2	2,544.7	2,542.1	2,546.9	2,539.5
	가처분소득	2,716.6	2,756.2	2,744.8	2,789.7	2,800.9	2,815.2	2,894.2	2,776.0
	차이	183.2	219.3	214.4	240.5	256.2	273.1	347.3	236.5
8분위	시장소득	3,339.8	3,341.8	3,359.0	3,339.2	3,366.2	3,356.7	3,366.4	3,352.2
	가처분소득	3,442.2	3,485.6	3,517.9	3,511.4	3,542.2	3,566.0	3,620.5	3,519.9
	차이	102.4	143.8	158.9	172.2	176.0	209.3	254.1	167.7
9분위	시장소득	4,461.4	4,515.6	4,453.8	4,440.5	4,482.4	4,514.6	4,523.6	4,483.3
	가처분소득	4,453.0	4,552.1	4,510.9	4,470.5	4,514.5	4,551.9	4,588.4	4,514.8
	차이	-8.4	36.5	57.1	30.0	32.1	37.3	64.8	31.5
10분위	시장소득	9,268.9	7,769.1	7,900.7	7,047.8	7,218.0	7,419.2	8,610.7	8,187.4
	가처분소득	8,019.9	6,972.1	7,196.9	6,631.2	6,727.1	6,859.2	7,664.7	7,358.6
	차이	-1,249.0	-797.0	-703.8	-416.6	-490.9	-560.0	-946.0	-828.8
전체	시장소득	1,149.6	956.5	1,199.5	1,615.2	1,998.6	2,344.7	2,887.8	1,589.1
	가처분소득	1,520.4	1,366.0	1,584.7	1,952.5	2,320.2	2,633.4	3,090.6	1,928.9
	차이	370.8	409.5	385.2	337.3	321.6	288.7	202.8	339.8

주: 해당 셀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의 균등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값. 음의 소득은 0으로 전환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 재산분위, 연령대에 따른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그리고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감을 장애인 개인 단위로 살펴보았다. 우선 소득분위와 연령대별 장애인의 소득을 보면 모든 소득 10분

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65~74세 장애인의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10분위는 모든 연령대에서 재분배에 의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며, 6~25세, 40~49세의 경우에는 소득 9분위에서도 재분배에 의한 소득 감소가 나타난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다.

〈표 2-2-3-21〉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의 연간 소득(2017)

(단위: 만 원)

연령		0-5	6-11	12-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소득	시장소득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처분소득	457.8	502.5	536.9	482.5	544.3	576.9	623.4	704.5	555.8	605.6
1~2분위		차이	457.8	502.5	536.9	482.5	544.3	576.9	623.4	704.5	555.8
3분위	시장소득	137.0	133.9	123.7	136.6	140.5	130.1	131.6	131.0	141.5	134.0
	가처분소득	478.2	480.1	504.0	549.2	577.4	531.3	634.6	798.6	687.6	641.7
	차이	341.2	346.2	380.3	412.6	436.9	401.2	503.0	667.6	546.1	507.7
4분위	시장소득	623.1	619.3	621.2	616.6	617.4	617.8	609.4	596.2	589.4	609.4
	가처분소득	909.2	892.7	870.8	899.1	982.8	923.3	1,019.5	1,210.2	1,068.1	1,009.2
	차이	286.1	273.4	249.6	282.5	365.4	305.5	410.1	614.0	478.7	399.8
5분위	시장소득	1,224.3	1,228.8	1,206.6	1,226.0	1,232.0	1,222.8	1,225.5	1,214.7	1,213.9	1,222.7
	가처분소득	1,456.5	1,436.9	1,400.6	1,459.5	1,559.7	1,481.9	1,582.6	1,766.0	1,628.1	1,564.5
	차이	232.2	208.1	194.0	233.5	327.7	259.1	357.1	551.3	414.2	341.8
6분위	시장소득	1,866.6	1,871.0	1,859.8	1,858.2	1,866.1	1,861.0	1,853.2	1,848.8	1,849.8	1,857.8
	가처분소득	2,100.1	2,025.4	1,995.6	2,037.0	2,165.8	2,063.3	2,165.4	2,360.3	2,242.1	2,148.9
	차이	233.5	154.4	135.8	178.8	299.7	202.3	312.2	511.5	392.3	291.1
7분위	시장소득	2,532.8	2,547.1	2,544.2	2,544.8	2,545.4	2,545.2	2,540.3	2,530.0	2,540.5	2,541.7
	가처분소득	2,708.4	2,666.1	2,638.4	2,682.5	2,796.6	2,710.7	2,796.9	2,960.9	2,852.5	2,774.3
	차이	175.6	119.0	94.2	137.7	251.2	165.5	256.6	430.9	312.0	232.6
8분위	시장소득	3,318.7	3,358.3	3,364.7	3,364.0	3,350.5	3,358.8	3,352.6	3,344.2	3,351.2	3,353.7
	가처분소득	3,424.4	3,414.2	3,394.3	3,445.6	3,538.4	3,470.1	3,531.3	3,722.5	3,595.0	3,518.1
	차이	105.7	55.9	29.6	81.6	187.9	111.3	178.7	378.3	243.8	164.4
9분위	시장소득	4,493.6	4,465.5	4,468.1	4,479.3	4,476.7	4,476.3	4,488.6	4,462.8	4,510.3	4,481.6
	가처분소득	4,501.7	4,405.3	4,359.6	4,423.7	4,543.7	4,452.1	4,532.5	4,698.6	4,621.9	4,510.7
	차이	8.1	-60.2	-108.5	-55.6	67.0	-24.2	43.9	235.8	111.6	29.1
10분위	시장소득	7,660.7	8,121.2	8,076.5	7,994.9	7,859.2	7,868.7	8,196.3	8,486.3	8,081.0	8,054.2
	가처분소득	6,960.8	7,158.4	7,083.8	7,104.8	7,191.8	7,095.4	7,394.1	7,764.6	7,299.6	7,257.5
	차이	-699.9	-962.8	-992.7	-890.1	-667.4	-773.3	-802.2	-721.7	-781.4	-796.7
전체	시장소득	2,253.4	2,343.8	2,374.6	2,640.1	2,503.6	2,390.3	2,128.6	1,225.0	1,254.2	2,026.1
	가처분소득	2,412.9	2,445.0	2,452.0	2,713.0	2,711.4	2,542.8	2,395.4	1,775.3	1,659.8	2,295.8
	차이	159.5	101.2	77.4	72.9	207.8	152.5	266.8	550.3	405.6	269.7

주: 해당 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균등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값. 음의 소득은 0으로 전환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와 연령대별 장애인의 소득을 보면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은 재산 5분위에서 가장 큰데, 연령대별로도 대체로 재산 5분위의 소득 증가폭이 가장 크며 일부 연령층(26~39세, 75세 이

상)은 재산 6분위에서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가장 컸다. 소득분위에서는 일관되게 65~74세 장애인의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또한 연령대 혹은 재산분위를 따로 봤을 때 재분배에 의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둘을 교차해 보면 재산 9~10분위의 일부 연령대에서 재분배에 의한 소득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3-22〉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의 연간 소득(2017)

(단위: 만 원)

재산	연령	0-5	6-11	12-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4분위	시장소득	1,856.0	1,711.6	1,621.1	1,966.6	2,072.2	1,688.3	1,530.5	1,004.3	855.0	1,525.2
	가처분소득	2,015.8	1,873.8	1,798.5	2,113.0	2,262.8	1,913.0	1,838.1	1,527.0	1,273.1	1,819.5
	차이	159.8	162.2	177.4	146.4	190.6	224.7	307.6	522.7	418.1	294.3
5분위	시장소득	1,573.6	1,607.2	1,507.6	1,765.1	2,028.4	1,678.5	1,409.9	747.5	684.7	1,300.3
	가처분소득	1,810.8	1,839.0	1,781.4	1,975.3	2,257.8	1,952.6	1,740.9	1,326.0	1,120.0	1,657.9
	차이	237.2	231.8	273.8	210.2	229.4	274.1	331.0	578.5	435.3	357.6
6분위	시장소득	1,936.3	1,889.4	1,804.6	2,220.3	2,133.0	1,957.9	1,746.4	849.7	766.8	1,531.1
	가처분소득	2,173.3	2,042.2	1,969.8	2,366.1	2,384.0	2,187.7	2,044.5	1,422.0	1,215.5	1,867.7
	차이	237.0	152.8	165.2	145.8	251.0	229.8	298.1	572.3	448.7	336.6
7분위	시장소득	1,957.6	1,954.3	2,113.8	2,493.9	2,364.7	2,233.6	2,100.1	1,117.1	1,137.0	1,893.6
	가처분소득	2,135.1	2,092.8	2,206.8	2,582.9	2,587.9	2,410.4	2,368.5	1,678.0	1,558.0	2,179.8
	차이	177.5	138.5	93.0	89.0	223.2	176.8	268.4	560.9	421.0	286.2
8분위	시장소득	2,342.0	2,604.2	2,612.1	2,888.3	2,724.2	2,662.2	2,497.3	1,339.7	1,458.3	2,291.7
	가처분소득	2,508.4	2,686.3	2,700.5	2,968.3	2,950.5	2,811.2	2,749.6	1,918.7	1,886.9	2,562.7
	차이	166.4	82.1	88.4	80.0	226.3	149.0	252.3	579.0	428.6	271.0
9분위	시장소득	2,859.2	2,893.0	3,221.6	3,353.4	2,973.5	3,151.1	2,798.6	1,530.3	1,885.1	2,662.1
	가처분소득	2,973.7	2,943.8	3,190.3	3,347.4	3,197.4	3,215.3	3,041.3	2,120.4	2,254.2	2,891.3
	차이	114.5	50.8	-31.3	-6.0	223.9	64.2	242.7	590.1	369.1	229.2
10분위	시장소득	3,205.0	3,636.9	3,940.4	4,067.0	3,516.0	3,741.8	3,467.6	2,035.7	2,328.4	3,221.7
	가처분소득	3,316.2	3,590.3	3,756.9	3,919.3	3,676.2	3,699.2	3,600.4	2,542.3	2,638.4	3,363.5
	차이	111.2	-46.6	-183.5	-147.7	160.2	-42.6	132.8	506.6	310.0	141.8
전체	시장소득	2,253.4	2,343.8	2,374.6	2,640.1	2,503.6	2,390.3	2,128.6	1,225.0	1,254.2	2,026.1
	가처분소득	2,412.9	2,445.0	2,452.0	2,713.0	2,711.4	2,542.8	2,395.4	1,775.3	1,659.8	2,295.8
	차이	159.5	101.2	77.4	72.9	207.8	152.5	266.8	550.3	405.6	269.7

주: 해당 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균등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값. 음의 소득은 0으로 전환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와 재산분위별 장애인의 소득을 살펴보았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큰데, 이는 재산분위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전체 재산분위에서는 재산 5분위의 경우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가장 컸던 반면 소득분위 내에서는 대체로 재산 10분위에서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는 가구와 마찬가지로 재산 5분위에서는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큰 소득 저분위에 장애인이 집중되어 있고, 재산 10분위에서는 재분배에 의한 소득 증가폭이 작거나 감소하는 소득 고분위에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득 10분위

의 장애인은 모든 재산분위에서 재분배에 의해 소득이 감소하는데, 재산 1~4분위의 경우에는 소득 9분위도 재분배로 소득이 감소한다.

〈표 2-2-3-23〉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의 연간 소득(2017)

(단위: 만 원)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시장소득	0.0	0.0	0.0	0.0	0.0	0.0	0.0	0.0
	가처분소득	603.5	569.2	564.5	546.8	650.5	664.1	699.7	605.6
	차이	603.5	569.2	564.5	546.8	650.5	664.1	699.7	605.6
3분위	시장소득	130.8	135.8	140.1	138.6	140.3	132.0	124.5	134.0
	가처분소득	618.7	641.4	646.6	610.7	683.7	679.5	692.8	641.7
	차이	487.9	505.6	506.5	472.1	543.4	547.5	568.3	507.7
4분위	시장소득	606.1	604.0	607.6	613.4	607.3	617.9	614.0	609.4
	가처분소득	968.8	964.6	1,020.1	967.8	1,022.4	1,068.0	1,130.9	1,009.2
	차이	362.7	360.6	412.5	354.4	415.1	450.1	516.9	399.8
5분위	시장소득	1,219.0	1,214.1	1,222.5	1,222.7	1,230.1	1,227.7	1,222.6	1,222.7
	가처분소득	1,496.8	1,540.1	1,576.3	1,584.1	1,610.8	1,619.5	1,629.1	1,564.5
	차이	277.8	326.0	353.8	361.4	380.7	391.8	406.5	341.8
6분위	시장소득	1,851.1	1,886.3	1,848.2	1,868.7	1,859.3	1,858.7	1,864.2	1,857.8
	가처분소득	2,064.0	2,190.8	2,132.4	2,154.4	2,177.8	2,218.9	2,273.1	2,148.9
	차이	212.9	304.5	284.2	285.7	318.5	360.2	408.9	291.1
7분위	시장소득	2,535.2	2,540.4	2,529.1	2,549.0	2,543.1	2,547.2	2,552.2	2,541.7
	가처분소득	2,716.7	2,782.1	2,733.8	2,778.6	2,787.8	2,805.0	2,882.7	2,774.3
	차이	181.5	241.7	204.7	229.6	244.7	257.8	330.5	232.6
8분위	시장소득	3,343.1	3,326.0	3,364.9	3,336.9	3,368.0	3,354.3	3,364.6	3,353.7
	가처분소득	3,448.5	3,458.7	3,522.8	3,497.5	3,535.5	3,549.4	3,596.0	3,518.1
	차이	105.4	132.7	157.9	160.6	167.5	195.1	231.4	164.4
9분위	시장소득	4,463.4	4,526.4	4,450.0	4,423.5	4,474.4	4,508.4	4,525.2	4,481.6
	가처분소득	4,452.5	4,559.7	4,511.0	4,447.2	4,498.4	4,541.7	4,583.7	4,510.7
	차이	-10.9	33.3	61.0	23.7	24.0	33.3	58.5	29.1
10분위	시장소득	9,267.5	7,398.7	7,910.6	6,966.9	7,115.4	7,371.7	8,418.1	8,054.2
	가처분소득	7,965.0	6,666.6	7,193.6	6,562.8	6,651.0	6,815.7	7,538.5	7,257.5
	차이	-1,302.5	-732.1	-717.0	-404.1	-464.4	-556.0	-879.6	-796.7
전체	시장소득	1,525.2	1,300.3	1,531.1	1,893.6	2,291.7	2,662.1	3,221.7	2,026.1
	가처분소득	1,819.5	1,657.9	1,867.7	2,179.8	2,562.7	2,891.3	3,363.5	2,295.8
	차이	294.3	357.6	336.6	286.2	271.0	229.2	141.8	269.7

주: 해당 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균등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값. 음의 소득은 0으로 전환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나. 장애인 가구의 소득보장 급여 수급

장애인의 소득보장 급여 수급 실태는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을 제시하였다. 분석 자료에서 2015년은 세대의 구성이 확인되지 않아 가구 단위 분석을 할 수 없어 2017년만 제시하였다. 이 때 공적 이전소득은 장애의 맥락에서 유의미하게 재분류하였다.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① 장애급여1, ② 장애급여2, ③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 ④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 ⑤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장애급여1은 등록 장애인에게 한정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양육수당 네 가지 급여가 해당한다. 장애급여2는 장애와 관련된 급여이지만 등록 장애인에게 한정하여 지급하지는 않는 급여로, 공적 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휴업·상병보상·장해·유족), 보훈급여가 해당한다. 일반 소득보장급여는 재원에 따라 사회보험과 일반조세로 구분하였다. 사회보험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에는 공적 연금 급여(일시금 및 장애연금 제외),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가 해당하며, 일반조세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에는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주거), 긴급복지 급여(생계·주거·기타),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한부모지원 급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에는 노인일자리 활동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액, 일모아 재정일자리 지원금액의 세 가지 급여가 해당한다.

〈표 2-2-3-24〉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분류

구분	해당 급여
장애급여1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양육수당
장애급여2	공적 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휴업·상병보상·장해·유족), 보훈급여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	공적 연금 급여(일시금 및 장애연금 제외),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주거), 긴급복지 급여(생계·주거·기타),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한부모지원 급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노인일자리 활동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액, 일모아 재정일자리 지원금액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우선 소득보장 급여의 수급률을 보면 장애인 가구 중 장애급여1을 수급하는 비율은 23.47%로 나타나며 장애급여2는 상대적으로 낮은 9.70%였다. 일반 소득보장급여 중에서는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급여의 수급률이 34.47%, 일반조세에 의한 소득보장급여의 수급률이 56.81%로 매우 높다.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수급률은 5.69%이다. 장애인 가구는 모든 소득보장 급여에서 비장애인 가구보다 수급률이 높으며, 전체 공적 이전소득의 수급률은 77.51%로 비장애인 가구 44.12%에 비해 상당히 높다. 수급가구의 급여액을 보아도 공적 이전소득을 받는 장애인 가구의 평균 급여액은 연간 554.8만 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422.7만 원에 비해 높다. 급여 유형별로는 사회보험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는 장애인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비장애인 가구보다 낮고, 나머지 급여 유형은 모두 장애

인 수급가구가 더 높게 나타난다. 급여 유형 중에서 장애급여2의 수급가구 평균 급여액이 775.2만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표 2-2-3-25〉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의 연간 공적 이전소득 수급(2017)

(단위: %, 만 원)

구분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수급률	수급가구 급여액	수급률	수급가구 급여액
장애급여1	23.47	138.5	0.01	16.1
장애급여2	9.70	775.2	2.24	615.0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	34.47	450.8	22.27	524.9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	56.81	280.4	29.30	176.6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5.69	134.0	3.29	125.3
전체 공적 이전소득	77.51	554.8	44.12	422.7

주 1) 수급률과 급여액 모두 가구 단위이며 균등화한 값을 제시함.

2) 장애급여1: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양육수당

3) 장애급여2: 공적 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휴업·상병보상·장해·유족), 보훈급여

4)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 일시금 및 장애연금을 제외한 공적 연금 급여,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5)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주거), 긴급복지 급여(생계·주거·기타),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한부모지원 급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6)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노인일자리 활동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액, 일모아 재정일자리 지원금액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장애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급여 수급률 및 수급가구의 급여액을 소득분위 및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소득분위에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수급률이 높고 수급가구의 급여액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대에서는 65~74세인 가구의 수급률과 급여액이 가장 높다. 가구주의 연령대 내에서 보면 대체로 소득 1~3분위 가구의 수급률과 급여액이 높으며, 소득분위 내에서 보면 일관되게 가구주가 65~74세인 장애인 가구의 수급률 및 급여액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수급률이 90% 이상으로 60%대에 머무는 65세 미만과 크게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재산분위 및 가구주의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급여를 살펴보았다. 재산분위에서는 재산 5분위 장애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급여 수급률이 가장 높았으나, 수급가구의 급여액은 재산 10분위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가구주의 연령대 내에서 보면 공적 이전소득 급여 수급률은 재산 5~6분위에서 가장 높았으나, 수급가구의 급여액은 가구주가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재산 10분위, 가구주가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 1~4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에 따른 장애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급여를 보면 재산분위 내에서는 소득 저분위에서 높은 수급률과 급여액이 나타난다. 반면 소득분위 내에서는 소득 1~7분위의 경우 재산 1~6분위에서 수급률이 가장 높은 반면, 소득 8~10분위의 경우에는 재산 10분위에서 수급률이 가장 높았다. 수급가구의 급여액은 일관되게 모든 소득분위에서 재산 10분위의 급여액이 가장 높았다.

〈표 2-2-3-26〉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급여 수급(2017)

(단위: %, 만 원)

소득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2분위	수급률		55.17	81.05	75.40	77.58	79.39	96.54	94.78	88.92
	급여액		423.1	531.7	685.4	729.4	768.6	721.5	566.8	673.1
3분위	수급률		100.00	68.07	76.33	77.02	77.96	97.58	96.45	87.82
	급여액		680.2	486.2	460.8	500.9	598.8	689.9	569.9	603.3
4분위	수급률		100.00	69.25	75.22	70.96	73.86	97.08	90.58	81.42
	급여액		431.2	395.8	336.1	377.6	508.0	665.3	529.0	527.8
5분위	수급률		n.a.	73.34	74.15	68.12	71.21	96.51	91.54	78.94
	급여액		n.a.	347.1	319.2	303.5	462.7	607.3	458.3	469.8
6분위	수급률		n.a.	62.60	69.81	59.85	64.22	96.90	91.35	72.31
	급여액		n.a.	234.3	315.3	277.9	454.3	589.6	468.3	448.5
7분위	수급률		n.a.	37.06	61.01	53.74	58.23	95.54	89.31	65.76
	급여액		n.a.	281.8	316.1	314.8	453.4	533.7	434.9	431.0
8분위	수급률		n.a.	38.74	52.91	50.15	55.03	95.45	91.55	61.70
	급여액		n.a.	146.0	330.8	316.1	417.8	545.9	459.2	419.8
9분위	수급률		n.a.	48.91	50.48	47.60	53.03	94.63	91.68	58.44
	급여액		n.a.	157.9	335.3	315.4	399.4	560.2	435.2	405.9
10분위	수급률		n.a.	14.59	47.16	47.03	45.60	92.90	81.13	52.33
	급여액		n.a.	385.2	357.8	324.8	400.8	628.2	458.4	420.1
전체	수급률		62.03	66.98	65.29	62.14	66.93	96.53	93.77	77.51
	급여액		441.3	421.9	404.7	427.8	554.0	661.1	542.6	554.8

주: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27〉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급여 수급(2017)

(단위: %, 만 원)

재산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4분위	수급률		60.11	66.68	63.91	66.17	70.31	96.15	93.05	77.49
	급여액		425.3	449.5	435.6	506.3	581.7	630.8	550.8	564.0
5분위	수급률		n.a.	72.54	73.27	73.96	72.92	98.18	98.66	85.57
	급여액		n.a.	302.9	380.3	435.4	513.0	629.8	487.1	521.6
6분위	수급률		100.00	75.37	67.79	65.76	68.90	98.28	98.31	83.75
	급여액		632.2	347.7	352.0	386.0	480.2	617.3	497.2	512.4
7분위	수급률		n.a.	67.86	70.02	59.34	63.13	98.04	97.96	78.45
	급여액		n.a.	299.9	342.7	318.7	468.8	621.7	500.3	499.4
8분위	수급률		n.a.	58.94	63.69	56.58	61.71	97.04	96.21	74.96
	급여액		n.a.	212.4	362.6	366.4	519.1	685.5	548.6	545.2
9분위	수급률		n.a.	46.39	63.99	55.70	61.61	96.70	91.63	73.51
	급여액		n.a.	187.9	368.5	342.0	572.7	734.3	547.1	573.4
10분위	수급률		n.a.	73.77	67.65	55.12	63.64	92.12	79.26	71.90
	급여액		n.a.	261.5	433.1	360.5	644.3	790.9	707.5	655.7
전체	수급률		62.03	66.98	65.29	62.14	66.93	96.53	93.77	77.51
	급여액		441.3	421.9	404.7	427.8	554.0	661.1	542.6	554.8

주: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28〉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급여 수급(2017)

(단위: %, 만 원)

소득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수급률	88.25	92.81	92.95	90.72	89.47	87.40	79.39	88.92
	급여액	682.4	595.4	588.5	612.6	710.1	747.1	888.2	673.1
3분위	수급률	86.63	92.13	92.97	89.70	87.65	84.81	80.04	87.82
	급여액	576.8	571.6	569.5	562.4	653.9	699.7	780.7	603.3
4분위	수급률	80.37	86.45	88.50	82.21	79.24	77.91	77.79	81.42
	급여액	477.5	456.5	491.2	483.4	575.3	639.8	762.2	527.8
5분위	수급률	75.86	84.75	83.37	83.24	79.78	77.82	76.73	78.94
	급여액	392.0	416.4	464.5	480.1	520.0	566.1	614.8	469.8
6분위	수급률	65.76	77.43	78.42	77.44	72.78	74.55	74.86	72.31
	급여액	364.9	412.6	401.3	419.7	490.8	565.5	650.5	448.5
7분위	수급률	57.88	73.61	68.16	67.35	69.07	69.88	72.91	65.76
	급여액	390.7	354.2	370.2	420.8	429.5	469.0	577.7	431.0
8분위	수급률	51.60	61.31	63.47	62.90	64.74	66.58	70.99	61.70
	급여액	366.2	365.4	374.3	396.0	413.6	460.3	531.2	419.8
9분위	수급률	45.93	63.16	58.93	59.31	60.68	63.20	66.68	58.44
	급여액	399.6	351.0	390.5	351.1	372.9	403.8	487.3	405.9
10분위	수급률	46.44	45.41	52.57	51.82	50.89	54.48	56.68	52.33
	급여액	430.2	350.9	378.1	398.6	373.4	378.5	473.8	420.1
전체	수급률	77.49	85.57	83.75	78.45	74.96	73.51	71.90	77.51
	급여액	564.0	521.6	512.4	499.4	545.2	573.4	655.7	554.8

주: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등록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는 장애급여1의 수급 상태를 보면 소득 1~2분위에서 수급률과 급여액이 가장 높고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수급률과 급여액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등 장애급여1에 해당하는 급여가 대부분 공공부조 성격의 급여인 탓이다. 가구주 연령대에서는 18~25세 가구주의 수급률과 급여액이 가장 높다. 소득 1~2분위, 가구주 연령대 18~25에서 수급률과 급여액이 높은 것은 소득분위와 연령대를 교차해 보아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장애급여1의 수급 상태를 재산분위와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재산분위의 경우 재산 1~4분위에서 수급률과 급여액이 가장 높으며 가구주 연령대별로도 대체로 재산 저분위에서 수급률과 급여액이 높다. 장애급여1의 수급률은 대부분의 재산분위에서 18~25세 가구주 가주가 높으나, 수급가구의 급여액은 일부 재산분위에서 26~39세, 50~6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소득분위와 재산분위를 교차해 보면 소득 저분위와 재산분위가 저분위인 경우, 재산 저분위에서는 소득분위가 저분위인 경우 장애인 가구의 장애급여1 수급률과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소득 고분위와 재산 고분위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장애급여1이 대부분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2-2-3-29〉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장애급여1 수급(2017)

(단위: %, 만 원)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소득	수급률	44.26	76.81	60.89	62.90	58.73	34.83	28.59	42.48
	급여액	149.7	226.1	217.6	190.2	184.6	137.3	115.9	160.9
1-2분위	수급률	100.00	48.73	35.01	38.34	32.26	17.01	14.03	24.36
	급여액	72.1	126.7	159.3	128.5	139.6	98.9	90.0	123.6
3분위	수급률	100.00	43.75	23.54	23.30	21.45	13.75	13.93	19.12
	급여액	115.4	178.9	149.3	107.2	126.8	89.6	75.7	113.7
4분위	수급률	n.a.	43.62	17.05	17.12	15.89	11.94	12.83	15.10
	급여액	n.a.	164.1	133.6	99.7	123.3	92.7	62.5	109.3
5분위	수급률	n.a.	31.83	15.26	11.54	12.35	9.55	16.11	12.37
	급여액	n.a.	147.8	122.0	97.5	122.6	73.1	54.4	103.5
6분위	수급률	n.a.	15.79	11.17	7.88	11.42	9.92	10.60	10.35
	급여액	n.a.	162.6	95.1	81.6	114.7	68.0	44.2	94.8
7분위	수급률	n.a.	12.95	8.48	9.03	9.07	9.21	12.25	9.27
	급여액	n.a.	113.5	84.9	61.9	117.3	57.2	53.0	86.6
8분위	수급률	n.a.	16.77	7.33	9.19	9.68	9.84	9.71	9.37
	급여액	n.a.	107.6	89.2	59.2	98.7	59.2	43.1	80.0
9분위	수급률	n.a.	14.59	7.50	6.85	8.97	5.99	10.77	8.26
	급여액	n.a.	84.0	89.7	57.5	96.3	57.2	60.2	82.5
10분위	수급률	52.79	48.70	22.27	23.22	25.42	21.18	22.18	23.47
	급여액	136.4	189.3	166.7	142.1	156.2	119.0	104.7	138.5

주: 장애급여1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양육수당이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30〉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장애급여1 수급(2017)

(단위: %, 만 원)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재산	수급률	55.45	51.81	29.31	36.16	39.46	33.64	35.04	36.34
	급여액	136.4	196.9	185.9	163.7	167.6	133.6	117.4	154.8
1-4분위	수급률	n.a.	40.33	22.49	33.22	35.91	36.38	31.17	33.80
	급여액	n.a.	129.8	168.8	132.1	160.6	132.6	115.5	139.9
5분위	수급률	0.00	43.96	17.86	20.90	21.94	21.34	20.39	21.11
	급여액	n.a.	164.7	136.8	127.1	155.9	115.3	104.2	128.5
6분위	수급률	n.a.	38.22	14.95	11.80	12.69	13.62	14.49	13.32
	급여액	n.a.	100.9	119.0	83.6	134.5	82.7	70.1	99.6
7분위	수급률	n.a.	24.03	10.45	10.10	12.14	10.81	12.38	11.46
	급여액	n.a.	135.5	103.9	83.2	120.5	76.5	62.6	93.7
8분위	수급률	n.a.	0.00	12.09	10.37	11.07	9.37	9.79	10.41
	급여액	n.a.	n.a.	102.5	72.5	108.4	82.6	60.1	88.9
9분위	수급률	n.a.	29.36	10.45	8.80	10.20	6.34	6.59	8.43
	급여액	n.a.	145.6	70.1	55.1	95.8	76.6	81.1	82.1
10분위	수급률	52.79	48.70	22.27	23.22	25.42	21.18	22.18	23.47
	급여액	136.4	189.3	166.7	142.1	156.2	119.0	104.7	138.5

주: 장애급여1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양육수당이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31〉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장애급여1 수급(2017)

(단위: %, 만 원)

소득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수급률	59.28	49.37	32.87	16.94	13.26	9.44	5.49	42.48
	급여액	169.2	156.1	147.1	105.5	100.2	94.9	99.9	160.9
3분위	수급률	35.81	34.23	19.22	14.77	13.58	11.09	8.95	24.36
	급여액	131.9	122.9	117.9	102.8	104.2	99.3	88.7	123.6
4분위	수급률	25.24	26.91	18.83	15.67	12.39	11.16	9.12	19.12
	급여액	122.1	102.7	113.5	99.4	99.5	93.4	104.8	113.7
5분위	수급률	18.46	18.39	15.45	12.88	13.06	11.97	9.33	15.10
	급여액	118.6	114.8	115.2	94.8	92.7	103.3	85.2	109.3
6분위	수급률	14.11	13.12	12.57	12.48	11.33	10.62	8.80	12.37
	급여액	119.1	75.4	96.1	105.6	93.2	81.2	86.3	103.5
7분위	수급률	10.49	18.31	11.50	10.41	10.05	9.09	8.58	10.35
	급여액	104.9	116.9	91.8	97.7	89.3	87.3	65.8	94.8
8분위	수급률	8.71	10.26	10.55	8.68	8.51	10.72	8.94	9.27
	급여액	102.4	85.7	82.0	93.1	79.3	74.1	77.5	86.6
9분위	수급률	6.58	10.54	9.11	10.51	10.39	11.09	9.59	9.37
	급여액	100.0	85.3	75.3	88.7	76.8	75.6	64.8	80.0
10분위	수급률	6.54	4.84	9.62	8.18	7.86	9.22	9.05	8.26
	급여액	86.2	74.0	79.0	59.3	94.4	91.6	76.1	82.5
전체	수급률	36.34	33.80	21.11	13.32	11.46	10.41	8.43	23.47
	급여액	154.8	139.9	128.5	99.6	93.7	88.9	82.1	138.5

주: 장애급여1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양육수당이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장애급여2의 수급 상태를 소득분위, 재산분위,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았다. 우선 소득분위 및 가구주 연령대에 따른 수급 상태를 보면 소득분위에서는 소득 5분위에서 수급률이 가장 높았지만 소득 분위별 수급률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 연령대에서는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이 뚜렷하게 높다. 소득분위 내에서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경우 일관되게 수급률이 높지만,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소득분위에 따른 수급률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높은 경우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경우보다는 대체로 26~64세인 경우에 나타난다. 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장애급여1과 달리 장애급여2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분위와 가구주 연령대에 따른 장애급여2의 수급 상태를 보았을 때에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경우 수급률이 높고 재산분위에 따라서는 수급률 차이가 크지 않은 결과가 확인된다. 재산분위 내에서는 급여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다양하지만 50~64인 경우가 많다.

소득분위와 재산분위에 따른 장애급여2의 수급 상태를 보면 재산분위 내에서는 소득이 1~2분위인 경우, 소득분위 내에서는 재산이 10분위인 경우 수급률이 높다. 하지만 소득분위와 재산분위에 따른 수급률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가장 높은 경우도 일정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는다.

〈표 2-2-3-32〉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장애급여2 수급(2017)

(단위: %, 만 원)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소득	수급률	0.00	0.51	5.03	6.54	6.93	12.34	11.20	9.69
	급여액	n.a.	635.0	1,117.5	1,096.4	1,215.3	917.2	607.0	861.2
1-2분위	수급률	0.00	1.26	6.69	6.90	8.94	13.12	9.66	9.90
	급여액	n.a.	247.5	763.0	1,054.7	961.1	747.0	528.0	777.6
3분위	수급률	0.00	1.10	5.65	7.95	8.47	15.45	12.31	10.39
	급여액	n.a.	186.7	781.3	893.4	1032.9	693.4	482.9	793.0
4분위	수급률	n.a.	3.33	7.14	8.36	8.95	15.49	13.78	10.71
	급여액	n.a.	930.2	938.5	741.0	916.9	624.1	533.9	744.9
5분위	수급률	n.a.	2.35	8.67	6.94	8.73	15.50	11.91	9.88
	급여액	n.a.	1,477.4	824.1	661.2	832.0	628.1	527.5	718.3
6분위	수급률	n.a.	0.00	8.34	8.08	8.49	12.24	11.70	9.18
	급여액	n.a.	n.a.	605.6	713.2	856.7	653.4	559.4	732.2
7분위	수급률	n.a.	0.00	6.77	7.97	8.42	15.74	14.22	9.51
	급여액	n.a.	n.a.	740.6	559.4	722.5	697.1	556.8	666.3
8분위	수급률	n.a.	0.00	7.95	7.18	8.21	17.07	13.04	9.13
	급여액	n.a.	n.a.	725.4	679.7	670.0	669.5	527.5	660.4
9분위	수급률	n.a.	0.00	8.08	6.51	6.39	15.25	13.69	7.77
	급여액	n.a.	n.a.	746.2	768.7	776.5	646.0	513.1	718.5
10분위	수급률	0.00	1.14	7.08	7.35	8.04	13.77	11.44	9.70
	급여액	n.a.	778.7	799.3	799.2	928.7	760.7	571.5	775.2
전체	수급률	0.00	1.14	7.08	7.35	8.04	13.77	11.44	9.70
	급여액	n.a.	778.7	799.3	799.2	928.7	760.7	571.5	775.2

주: 장애급여2에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휴업 · 상병보상 · 장해 · 유족), 보훈급여가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33〉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장애급여2 수급(2017)

(단위: %, 만 원)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재산	수급률	0.00	0.86	5.15	6.06	6.15	11.01	9.39	7.42
	급여액	n.a.	685.0	817.9	816.4	906.0	777.5	577.5	784.0
1-4분위	수급률	n.a.	0.00	5.04	6.41	7.32	13.58	10.01	9.21
	급여액	n.a.	n.a.	646.6	694.5	673.7	696.5	571.8	652.4
5분위	수급률	0.00	0.00	8.45	7.58	8.36	14.12	11.54	10.55
	급여액	n.a.	n.a.	717.9	909.4	906.7	745.7	566.2	745.8
6분위	수급률	n.a.	4.15	10.58	8.84	9.60	14.69	12.36	11.30
	급여액	n.a.	1,740.7	715.8	685.9	928.6	772.5	563.2	759.6
7분위	수급률	n.a.	0.00	8.15	9.54	9.78	15.52	12.63	11.39
	급여액	n.a.	n.a.	952.9	914.7	1,020.7	785.3	643.7	857.0
8분위	수급률	n.a.	0.00	9.24	8.00	9.80	16.50	13.01	11.46
	급여액	n.a.	n.a.	746.5	784.0	992.4	764.1	519.4	792.2
9분위	수급률	n.a.	15.27	12.96	8.21	10.44	16.73	15.47	12.58
	급여액	n.a.	226.0	825.5	674.4	912.6	724.3	557.3	742.6
10분위	수급률	0.00	1.14	7.08	7.35	8.04	13.77	11.44	9.70
	급여액	n.a.	778.7	799.3	799.2	928.7	760.7	571.5	775.2
전체	수급률	0.00	1.14	7.08	7.35	8.04	13.77	11.44	9.70
	급여액	n.a.	778.7	799.3	799.2	928.7	760.7	571.5	775.2

주: 장애급여2에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휴업 · 상병보상 · 장해 · 유족), 보훈급여가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34〉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장애급여2 수급(2017)

(단위: %, 만 원)

소득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수급률	6.84	8.43	11.52	14.69	14.60	14.53	15.37	9.69
	급여액	862.5	669.4	814.0	869.8	1018.1	913.5	810.2	861.2
3분위	수급률	8.16	11.66	10.84	10.52	11.05	10.89	13.16	9.90
	급여액	738.0	598.7	642.1	762.1	993.9	1,045.4	819.0	777.6
4분위	수급률	8.19	10.22	11.39	10.53	13.56	11.68	13.85	10.39
	급여액	777.4	657.2	625.8	708.2	949.7	871.3	947.2	793.0
5분위	수급률	8.42	10.04	10.75	12.83	12.38	11.41	14.19	10.71
	급여액	737.4	659.0	806.7	772.3	727.7	715.9	723.6	744.9
6분위	수급률	7.42	12.41	10.18	10.64	10.90	12.92	11.51	9.88
	급여액	700.4	642.5	770.3	704.1	753.6	690.2	732.8	718.3
7분위	수급률	7.62	8.22	7.91	9.53	10.60	10.87	11.21	9.18
	급여액	734.2	666.0	730.2	673.3	682.3	719.9	878.0	732.2
8분위	수급률	7.64	7.07	10.05	9.21	9.04	9.93	13.74	9.51
	급여액	667.9	690.7	652.7	614.4	739.0	777.5	561.9	666.3
9분위	수급률	7.30	5.86	7.68	8.59	8.74	10.77	11.73	9.13
	급여액	741.3	697.6	733.8	558.7	703.9	643.7	607.9	660.4
10분위	수급률	6.55	4.82	6.95	7.75	7.68	8.07	8.92	7.77
	급여액	711.1	530.4	813.1	996.5	875.7	652.8	632.5	718.5
전체	수급률	7.42	9.21	10.55	11.30	11.39	11.46	12.58	9.70
	급여액	784.0	652.4	745.8	759.6	857.0	792.2	742.6	775.2

주: 장애급여2에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휴업·상병보상·장해·유족), 보훈급여가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사회보험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의 소득분위, 재산분위, 연령대별 수급 실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소득분위와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분위에서는 소득 5분위의 수급률이 가장 높은데 가구주 연령대 내에서도 수급률이 가장 높은 소득분위는 저, 중, 고분위로 다양했다. 반면 가구주 연령대에서는 65~74세의 높은 수급률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는 사회보험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에 공적 연금 급여가 포함되며, 특히 노령연금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소득분위에서 가구주가 65~74세인 경우 수급률이 가장 높았다. 다만 수급가구의 급여액은 가구주의 연령이 65~74세인 경우가 아니라 50~64세인 경우 가장 높았다. 최근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 이 연령대의 경우 그 이전 수급권자보다 기여 기간이 길어 급여액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분위와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대에서는 가구주가 65~74세인 경우 높은 수급률, 가구주가 50~64세인 수급가구의 높은 급여액이 확인된다. 재산분위는 소득분위와 달리 대체로 재산 10분위에서 높은 수급률과 급여액이 확인된다. 소득분위와 재산분위를 교차해 보았을 때에도 소득분위에 따라서는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재산분위는 일관되게 재산 10분위에서 높은 수급률과 급여액이 확인된다. 이는 재산이 사회보험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에 영향을 준다고 보다는 노령연금과 같은 이러한 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표 2-2-3-35〉 소득분위·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 수급(2017)

(단위: %, 만 원)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소득	수급률	0.00	1.51	4.78	5.62	15.29	51.79	30.66	28.79
	급여액	n.a.	893.3	345.2	391.5	552.1	503.8	512.6	511.4
1-2분위	수급률	0.00	8.19	15.90	13.24	27.11	67.54	43.92	40.35
	급여액	n.a.	301.4	404.0	228.2	587.7	464.7	329.0	442.8
3분위	수급률	49.56	5.90	19.24	17.29	32.71	73.01	47.22	40.99
	급여액	11.4	171.6	321.3	292.2	499.3	482.5	412.7	458.3
4분위	수급률	n.a.	14.96	24.05	19.60	34.30	73.57	48.15	41.55
	급여액	n.a.	214.8	269.0	257.3	482.6	460.7	350.0	430.1
5분위	수급률	n.a.	13.72	24.10	19.53	33.60	75.61	50.03	39.16
	급여액	n.a.	188.3	299.6	269.8	483.1	471.4	399.6	438.7
6분위	수급률	n.a.	14.19	24.84	20.18	32.28	76.16	44.58	36.74
	급여액	n.a.	378.2	322.0	263.5	448.9	431.2	412.2	407.8
7분위	수급률	n.a.	13.53	23.93	20.61	29.37	76.93	47.70	34.27
	급여액	n.a.	175.4	307.6	269.4	427.8	414.1	416.7	389.9
8분위	수급률	n.a.	10.94	22.25	18.97	26.16	78.10	49.34	30.74
	급여액	n.a.	159.3	314.8	244.6	427.1	419.4	379.6	383.3
9분위	수급률	n.a.	0.00	22.09	18.31	18.80	80.13	43.83	25.58
	급여액	n.a.	n.a.	325.7	293.6	483.4	537.4	438.7	448.4
10분위	수급률	5.57	7.64	19.68	16.37	26.37	64.89	37.20	34.47
	급여액	11.4	273.8	314.2	273.5	490.0	474.3	441.0	450.8

주: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에는 일시금 및 장애연금을 제외한 공적 연금 급여,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가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36〉 재산분위·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 수급(2017)

(단위: %, 만 원)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재산	수급률	5.85	5.45	12.17	9.64	17.27	49.39	25.03	22.53
	급여액	11.4	317.4	318.3	256.6	414.2	407.6	389.5	390.8
1-4분위	수급률	n.a.	7.42	28.63	17.59	22.37	50.02	26.49	29.40
	급여액	n.a.	90.5	304.2	248.1	379.7	362.1	249.9	329.4
5분위	수급률	0.00	7.11	23.00	17.61	28.45	64.22	37.41	38.23
	급여액	n.a.	577.9	271.7	248.3	405.9	376.5	294.0	352.6
6분위	수급률	n.a.	22.19	27.61	19.86	32.67	73.87	44.97	42.80
	급여액	n.a.	176.5	274.5	273.3	442.4	413.1	374.3	398.2
7분위	수급률	n.a.	24.03	26.86	22.04	34.14	77.24	46.50	43.28
	급여액	n.a.	99.8	307.4	246.3	483.3	510.9	499.3	470.1
8분위	수급률	n.a.	23.17	31.95	22.96	35.92	81.39	50.91	45.87
	급여액	n.a.	217.9	339.4	278.3	574.8	574.6	511.4	528.4
9분위	수급률	n.a.	44.26	36.63	26.12	38.20	81.96	53.50	49.06
	급여액	n.a.	154.9	362.5	338.1	695.3	673.2	732.9	652.1
10분위	수급률	5.57	7.64	19.68	16.37	26.37	64.89	37.20	34.47
	급여액	11.4	273.8	314.2	273.5	490.0	474.3	441.0	450.8

주: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에는 일시금 및 장애연금을 제외한 공적 연금 급여,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가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37〉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 수급(2017)

(단위: %, 만 원)

소득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수급률	15.68	22.74	35.90	47.23	51.01	56.19	60.43	28.79
	급여액	382.2	327.4	374.2	485.2	623.3	690.7	861.1	511.4
3분위	수급률	26.10	34.77	45.62	51.84	52.86	58.75	58.03	40.35
	급여액	393.7	312.2	326.5	364.4	504.1	558.5	757.9	442.8
4분위	수급률	30.22	33.34	44.35	45.40	48.07	55.63	58.74	40.99
	급여액	423.4	334.3	367.8	383.7	450.8	555.0	675.4	458.3
5분위	수급률	30.46	38.25	42.03	47.32	49.78	52.91	54.89	41.55
	급여액	367.1	361.5	380.0	390.0	452.2	521.3	569.7	430.1
6분위	수급률	27.66	37.47	40.09	41.32	44.54	49.66	57.54	39.16
	급여액	383.2	358.6	340.6	385.7	452.9	522.1	607.8	438.7
7분위	수급률	27.73	35.53	35.62	38.02	40.22	43.87	49.91	36.74
	급여액	401.4	306.9	307.5	384.9	387.1	423.7	544.8	407.8
8분위	수급률	25.16	31.98	30.71	36.93	35.91	39.76	45.98	34.27
	급여액	358.2	300.0	309.3	337.4	368.4	407.9	530.9	389.9
9분위	수급률	23.41	38.03	30.61	29.71	31.99	31.25	38.74	30.74
	급여액	388.5	274.4	336.2	305.4	320.8	383.2	498.0	383.3
10분위	수급률	25.89	16.78	24.66	24.16	21.09	24.13	29.18	25.58
	급여액	456.8	515.5	319.8	295.9	331.7	404.6	556.3	448.4
전체	수급률	22.53	29.40	38.23	42.80	43.28	45.87	49.06	34.47
	급여액	390.8	329.4	352.6	398.2	470.1	528.4	652.1	450.8

주: 일반 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에는 일시금 및 장애연금을 제외한 공적 연금 급여,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가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
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일반조세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의 수급 실태를 소득분위, 재산분위,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 보았다. 우선 소득분위와 가구주 연령대별 수급 실태를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수급률이 높아지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후에 수급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심각한 노인 빈곤의 상황과 함께 일반조세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산분위와 가구주 연령대에 따른 수급 실태에서는 재산 5분위에서 가장 높은 수급률이 관찰되고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재산 1~4분위이다.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률과 급여액이 높아지고 65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일관되게 확인된다.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에 따른 수급률에서는 소득 1~3분위와 재산 5~6분위에서 높은 수급률과 급여액이 일관되게 관찰된다.

〈표 2-2-3-38〉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 수급(2017)

(단위: %, 만 원)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소득	수급률								
	급여액								
1-2분위	수급률	37.61	41.63	57.42	65.18	60.60	78.14	83.07	73.21
	급여액	444.4	576.1	540.2	540.3	548.1	350.0	334.5	407.7
3분위	수급률	100.00	56.26	66.08	68.87	55.73	77.73	88.00	71.91
	급여액	608.1	394.1	262.0	325.3	304.2	258.5	279.3	284.0
4분위	수급률	50.44	56.41	64.86	59.54	48.68	70.42	72.87	60.14
	급여액	615.0	314.3	167.1	198.2	192.7	226.5	251.3	212.2
5분위	수급률	n.a.	55.32	61.65	56.51	42.04	65.77	74.05	54.83
	급여액	n.a.	191.3	127.5	130.4	139.0	202.2	208.7	164.5
6분위	수급률	n.a.	35.31	52.12	46.86	31.78	60.58	73.40	45.47
	급여액	n.a.	110.5	108.4	115.4	124.9	172.1	191.7	142.4
7분위	수급률	n.a.	20.39	45.34	38.48	25.32	56.84	66.91	38.52
	급여액	n.a.	123.1	110.0	126.9	122.5	156.3	181.3	136.9
8분위	수급률	n.a.	21.61	36.50	37.36	24.50	54.42	69.64	36.35
	급여액	n.a.	83.9	113.9	130.5	124.3	151.7	179.4	138.1
9분위	수급률	n.a.	38.18	32.99	36.00	25.77	49.32	68.38	34.62
	급여액	n.a.	109.4	99.1	129.2	127.3	153.8	181.2	137.1
10분위	수급률	n.a.	14.59	28.33	34.66	23.78	33.49	53.89	29.67
	급여액	n.a.	301.2	102.2	122.2	132.7	139.8	174.9	133.9
전체	수급률	41.58	43.81	49.74	49.95	41.19	70.17	80.25	56.81
	급여액	483.6	353.8	213.4	252.4	302.2	270.4	295.2	280.4

주: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에는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주거), 긴급복지 급여(생계·주거·기타),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한부모지원 급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연령은 세대 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39〉 재산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 수급(2017)

(단위: %, 만 원)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재산	수급률								
	급여액								
1-4분위	수급률	38.64	44.09	50.30	55.89	52.22	76.60	83.54	62.24
	급여액	464.2	380.5	280.5	356.1	408.8	348.3	364.8	368.2
5분위	수급률	n.a.	56.06	58.27	65.64	55.03	87.43	94.65	74.17
	급여액	n.a.	286.5	200.2	283.1	324.3	324.0	317.8	313.2
6분위	수급률	100.00	49.89	53.47	56.11	45.56	85.03	92.33	69.49
	급여액	632.2	297.8	161.0	197.5	221.9	254.5	284.9	250.4
7분위	수급률	n.a.	36.45	53.94	47.38	31.84	79.25	88.68	58.34
	급여액	n.a.	145.6	121.1	126.6	131.9	207.1	242.7	190.1
8분위	수급률	n.a.	46.76	47.69	41.74	26.54	67.55	80.40	49.15
	급여액	n.a.	146.8	122.2	127.7	143.2	193.4	231.1	181.0
9분위	수급률	n.a.	23.22	43.10	40.60	25.56	54.36	70.02	43.04
	급여액	n.a.	158.0	102.8	131.6	136.2	185.0	218.1	170.4
10분위	수급률	n.a.	30.70	42.26	37.53	27.14	29.05	36.53	31.74
	급여액	n.a.	153.5	103.8	124.0	134.4	160.6	191.7	148.5
전체	수급률	41.58	43.81	49.74	49.95	41.19	70.17	80.25	56.81
	급여액	483.6	353.8	213.4	252.4	302.2	270.4	295.2	280.4

주: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에는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주거), 긴급복지 급여(생계·주거·기타),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한부모지원 급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연령은 세대 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40〉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 수급(2017)

(단위: %, 만 원)

소득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수급률	77.80	85.95	82.01	71.95	64.47	53.76	26.17	73.21
	급여액	491.5	399.6	327.7	249.9	239.2	226.3	202.4	407.7
3분위	수급률	75.41	83.95	84.81	75.88	65.81	54.43	33.34	71.91
	급여액	344.0	309.9	257.8	221.7	215.3	206.8	170.2	284.0
4분위	수급률	64.51	73.27	74.84	64.51	51.33	42.65	32.98	60.14
	급여액	238.3	239.2	215.5	181.6	172.3	167.4	156.9	212.2
5분위	수급률	56.99	71.08	66.72	62.27	50.61	40.87	33.32	54.83
	급여액	170.3	170.3	173.1	154.5	163.2	155.4	137.6	164.5
6분위	수급률	43.63	60.33	57.42	53.02	42.23	39.94	29.88	45.47
	급여액	143.9	149.5	141.5	136.7	140.1	149.2	140.6	142.4
7분위	수급률	33.92	47.83	48.23	42.37	39.79	37.53	33.09	38.52
	급여액	133.4	148.1	143.6	136.3	138.3	139.3	128.4	136.9
8분위	수급률	28.53	40.62	42.12	40.13	41.97	39.56	32.78	36.35
	급여액	129.9	152.9	150.8	135.0	138.6	141.1	134.5	138.1
9분위	수급률	23.91	42.39	39.32	37.87	36.36	39.84	36.33	34.62
	급여액	128.1	144.1	147.0	141.3	137.3	137.2	135.0	137.1
10분위	수급률	20.28	30.07	35.18	34.11	31.00	33.80	31.56	29.67
	급여액	137.4	134.6	146.6	144.8	134.8	132.3	126.6	133.9
전체	수급률	62.24	74.17	69.49	58.34	49.15	43.04	31.74	56.81
	급여액	368.2	313.2	250.4	190.1	181.0	170.4	148.5	280.4

주: 일반 소득보장급여(일반조세)에는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주거), 긴급복지 급여(생계·주거·기타),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한부모지원 급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마지막으로 장애인 가구의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을 소득분위, 재산분위,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살펴 보았다. 우선 소득분위 및 연령대에 따른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을 보면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급률이 높아지고 수급가구의 급여액도 대체로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크다. 이는 일자리 사업에 포함된 사업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소득 분위에서는 소득 1~2분위는 수급률이 극히 낮으며, 소득 3분위에서 가장 높고 이후 소득분위가 높아지면서 수급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1~2분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현 자료에 자활근로가 포함되지 않은 탓이 크다.

재산분위와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급률과 급여액이 높은 패턴은 동일하며, 재산의 경우 5~7분위의 중간 분위에서 높은 수급률과 급여액이 관찰된다. 소득분위와 재산분위를 교차해 보았을 때에도 소득 3분위에서 가장 높은 수급률과 급여액이 확인되고 이후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수급률과 급여액이 낮아지는 패턴은 동일하며, 재산은 중간 분위에서 높은 수급률과 급여액이 확인된다.

〈표 2-2-3-41〉 소득분위·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수급(2017)

(단위: %, 만 원)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소득	수급률								
	급여액								
1-2분위	수급률	0.00	0.58	0.80	0.67	0.69	1.16	1.34	1.04
	급여액	n.a.	130.8	177.5	48.6	147.6	95.3	73.1	94.2
3분위	수급률	0.00	7.88	4.51	6.88	5.25	26.14	56.24	24.05
	급여액	n.a.	249.9	166.9	138.2	132.7	166.9	170.2	165.7
4분위	수급률	0.00	3.62	3.83	4.24	4.28	8.38	17.52	7.09
	급여액	n.a.	175.3	86.3	80.7	79.1	175.0	178.4	141.7
5분위	수급률	n.a.	4.25	3.14	3.87	4.31	5.33	12.60	5.28
	급여액	n.a.	328.9	114.2	93.3	87.6	119.6	118.2	105.9
6분위	수급률	n.a.	0.00	2.03	3.58	3.43	5.68	12.46	4.53
	급여액	n.a.	n.a.	65.0	67.6	55.9	111.4	125.1	87.7
7분위	수급률	n.a.	0.00	1.87	3.33	3.08	5.31	11.90	3.96
	급여액	n.a.	n.a.	97.1	92.7	74.5	113.3	111.1	95.2
8분위	수급률	n.a.	0.00	1.67	3.86	3.59	4.30	9.46	3.98
	급여액	n.a.	n.a.	150.6	107.1	64.7	113.6	116.1	95.0
9분위	수급률	n.a.	0.00	1.62	3.16	3.49	4.96	10.95	3.94
	급여액	n.a.	n.a.	145.9	93.5	77.8	132.8	135.9	102.9
10분위	수급률	n.a.	0.00	1.15	2.80	3.44	4.03	7.05	3.41
	급여액	n.a.	n.a.	67.3	97.0	61.5	104.5	123.0	81.9
전체	수급률	0.00	2.33	2.13	3.33	3.14	7.01	12.30	5.69
	급여액	n.a.	241.8	117.6	96.7	85.8	150.4	155.9	134.0

주: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에는 노인일자리 활동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액, 일모아 재정일자리 지원금액이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
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42〉 재산분위·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수급(2017)

(단위: %, 만 원)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재산	수급률								
	급여액								
1-4분위	수급률	0.00	2.61	1.78	2.61	2.34	5.01	8.94	3.92
	급여액	n.a.	262.1	107.4	96.4	87.3	158.1	167.7	137.1
5분위	수급률	n.a.	0.00	4.54	3.74	2.98	7.08	11.66	6.37
	급여액	n.a.	n.a.	95.6	110.1	123.1	156.9	174.0	154.6
6분위	수급률	0.00	0.00	2.82	3.84	3.61	11.27	17.54	9.27
	급여액	n.a.	n.a.	174.9	100.2	116.6	165.6	166.3	156.9
7분위	수급률	n.a.	3.87	2.77	3.95	4.19	9.24	17.82	8.13
	급여액	n.a.	10.6	192.6	109.7	76.6	167.6	150.2	139.1
8분위	수급률	n.a.	0.00	2.14	3.69	4.10	7.19	13.91	6.37
	급여액	n.a.	n.a.	72.5	110.0	71.3	138.0	149.4	122.5
9분위	수급률	n.a.	0.00	2.52	4.05	3.56	6.61	11.43	5.63
	급여액	n.a.	n.a.	66.4	73.5	65.4	121.2	129.0	103.2
10분위	수급률	n.a.	0.00	1.77	3.97	3.35	4.73	6.69	4.33
	급여액	n.a.	n.a.	114.1	91.1	84.7	87.2	106.4	93.2
전체	수급률	0.00	2.33	2.13	3.33	3.14	7.01	12.30	5.69
	급여액	n.a.	241.8	117.6	96.7	85.8	150.4	155.9	134.0

주: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에는 노인일자리 활동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액, 일모아 재정일자리 지원금액이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
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43〉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수급(2017)

(단위: %, 만 원)

소득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수급률	0.65	0.56	1.09	1.29	1.61	2.57	2.56	1.04
	급여액	84.7	214.8	163.0	82.3	78.0	61.2	69.9	94.2
3분위	수급률	17.30	28.64	39.86	31.25	25.71	20.59	11.93	24.05
	급여액	173.8	160.6	174.6	166.4	159.5	135.7	105.8	165.7
4분위	수급률	5.64	6.83	10.95	10.20	7.33	6.18	3.90	7.09
	급여액	136.0	192.9	161.4	156.6	131.2	98.2	94.9	141.7
5분위	수급률	4.11	6.09	6.77	6.13	6.52	5.50	4.41	5.28
	급여액	110.6	104.3	110.6	125.3	76.1	130.2	57.9	105.9
6분위	수급률	3.19	4.36	6.16	5.55	4.69	5.40	4.26	4.53
	급여액	75.5	121.4	103.0	92.3	78.6	90.0	78.8	87.7
7분위	수급률	3.01	4.60	4.75	5.35	4.39	3.82	3.49	3.96
	급여액	87.3	101.5	111.2	93.8	105.6	90.4	80.2	95.2
8분위	수급률	2.77	6.26	4.56	5.33	3.42	4.57	4.14	3.98
	급여액	64.7	133.8	104.8	106.5	110.3	72.4	116.1	95.0
9분위	수급률	1.92	4.99	5.25	6.02	4.15	3.78	4.32	3.94
	급여액	67.0	127.4	118.0	111.6	100.7	80.5	124.3	102.9
10분위	수급률	2.41	2.85	3.13	4.71	4.12	3.73	3.48	3.41
	급여액	61.1	113.8	136.2	76.1	89.0	74.7	85.3	81.9
전체	수급률	3.92	6.37	9.27	8.13	6.37	5.63	4.33	5.69
	급여액	137.1	154.6	156.9	139.1	122.5	103.2	93.2	134.0

주: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에는 노인일자리 활동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액, 일모아 재정일자리 지원금액이 포함됨. 급여액은 수급가
구로 한정하였으며, 균등화하여 제시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 장애인의 공적 연금 가입

장애인의 공적 연금 가입 상태를 분석하였다. 공적 연금 가입 상태는 장애인의 노후 소득보장 준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공적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4대 특수 직역 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포함된다. 가입 상태를 제시할 때에는 연령대를 18~59세로 제한하였다. 또한 가입률과 함께 해당 시점에서 가입자의 평균 누적 가입기간을 함께 제시하였다.

2017년 현재 18~59세 장애인의 공적 연금 가입률은 57.09%로 나타나는데, 비장애인 가입률 63.66%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이는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가입자의 평균 누적 가입기간은 107.2개월로 나타나는데, 비장애인 97.9개월보다는 길다. 2015년에는 가입률과 가입기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2017년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3-44〉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 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18-59세)

(단위: %, 개월)

구분	2015		2017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가입률	59.80	66.99	57.09	63.66
가입기간	108.4	99.3	107.2	97.9

주: 2015년, 2017년 당시 연령이 18~59세인 사람으로 한정함. 가입기간은 가입자의 누적 가입기간 평균값을 제시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공적 연금 가입률과 가입기간을 소득분위, 재산분위,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소득분위와 연령대별로 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연령대는 26~49세의 중간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 역시 고용률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적 연금 수급연령에 근접해 있는 50~59세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웠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50~59세의 장애인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31.7개월로 120개월보다는 높은데, 비장애인 140.1시간보다는 낮다. 또한 소득분위에서 1~5분위의 장애인은 평균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미치지 못한다. 40~49세의 경우에도 소득 7~10분위는 평균 가입기간이 120개월을 넘지만 1~6분위는 이에 못 미친다.

재산분위와 연령대에 따른 공적 연금 가입 상태도 소득분위와 연령대의 교차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재산분위가 높을수록, 연령대는 26~49세의 중간 연령층에서 가입률이 높다. 또한 50~59세 장애인 중에서 재산 1~5분위 장애인은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소득분위와 재산분위를 함께 보면 소득 저분위에서는 재산분위가 높을수록, 재산 저분위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공적 연금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고분위에서는 재산분위에 따른 가입률에 큰 차이가 없고, 재산 고분위에서도 소득분위에 따른 가입률 차이가 크지 않다.

장애인의 공적 연금 가입 상태는 비장애인에 비해 겉으로 보기에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입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만 가입률이 낮아 향후 노후 소득보장 체계에 편입되는 비중이 적을 수 있다. 특히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가까운 50~59세 장애인은 가입기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짧으며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많다.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중고령기에 경제활동을 이어갈 확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나타난 수치가 노후 소득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장애인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표 2-2-3-45〉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2017)

(단위: %, 개월)

구분	연령대		18-25	26-39	40-49	50-59	전체
	소득						
장애인	1-2분위	가입률	2.68	33.39	30.40	28.46	28.78
		가입기간	9.1	24.9	51.7	70.0	56.6
	3분위	가입률	8.05	45.53	46.08	49.20	44.76
		가입기간	9.2	28.0	67.5	92.8	73.8
	4분위	가입률	15.70	62.96	63.83	61.03	58.28
		가입기간	11.3	35.3	80.2	99.2	79.1
	5분위	가입률	21.23	68.47	68.01	66.88	63.96
		가입기간	14.9	43.5	91.7	111.4	89.7
	6분위	가입률	22.91	74.62	73.82	69.95	68.32
		가입기간	17.5	51.1	107.4	122.1	100.9
	7분위	가입률	22.80	78.92	80.53	70.36	70.96
		가입기간	18.1	65.0	122.0	133.2	111.3
	8분위	가입률	25.23	80.68	78.65	74.89	73.60
		가입기간	13.2	68.0	139.0	150.2	125.3
	9분위	가입률	19.50	82.80	81.88	78.38	74.89
		가입기간	14.9	70.8	158.1	180.9	149.3
	10분위	가입률	20.47	82.06	85.71	80.78	76.02
		가입기간	14.7	65.6	173.8	230.7	181.6
	전체	가입률	17.40	64.40	60.89	58.09	57.09
		가입기간	14.7	52.0	109.4	131.7	107.2
비장애인	1-2분위	가입률	11.35	58.67	58.91	58.18	53.46
		가입기간	8.7	32.8	62.5	70.8	55.9
	3분위	가입률	11.48	56.30	59.72	64.32	49.52
		가입기간	7.0	33.6	68.2	88.2	62.6
	4분위	가입률	16.31	60.35	65.93	68.35	55.27
		가입기간	8.2	39.0	77.4	96.6	68.1
	5분위	가입률	20.40	65.83	71.60	71.83	59.89
		가입기간	9.4	45.0	88.7	106.6	75.1
	6분위	가입률	25.33	69.30	73.92	73.56	63.62
		가입기간	11.4	52.4	103.5	114.8	81.6
	7분위	가입률	27.34	72.77	75.80	75.14	66.73
		가입기간	12.7	60.9	119.8	126.9	90.5
	8분위	가입률	26.31	77.06	77.04	76.73	69.17
		가입기간	13.7	65.4	139.3	147.0	103.4
	9분위	가입률	21.68	80.72	78.49	78.14	69.86
		가입기간	12.5	69.0	154.7	183.8	121.3
	10분위	가입률	16.79	81.36	81.58	80.31	70.57
		가입기간	12.6	69.7	172.9	224.5	148.7
	전체	가입률	20.56	71.85	73.03	72.77	63.66
		가입기간	11.4	57.8	120.7	140.1	97.9

주: 가입기간은 가입자의 누적 가입기간 평균값을 제시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46〉 재산분위·연령대별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2017)

(단위: %, 개월)

구분	연령대		18-25	26-39	40-49	50-59	전체
	재산						
장애인	1-4분위	가입률	18.39	57.51	49.60	46.49	47.44
		가입기간	15.3	49.7	89.0	98.3	82.8
	5분위	가입률	21.12	58.55	50.25	46.19	47.36
		가입기간	14.9	51.2	91.7	102.1	87.5
	6분위	가입률	15.53	61.66	58.90	61.12	57.87
		가입기간	15.7	50.9	102.2	123.4	103.3
	7분위	가입률	17.63	68.37	71.66	70.03	66.70
		가입기간	14.7	50.5	116.2	141.9	117.2
	8분위	가입률	16.38	77.58	75.01	73.06	70.19
		가입기간	12.8	58.7	128.4	159.0	128.2
	9분위	가입률	16.75	75.25	79.71	73.31	70.69
		가입기간	16.0	54.6	134.8	176.0	138.0
	10분위	가입률	15.12	79.37	82.93	75.17	72.77
		가입기간	10.9	54.7	137.4	177.7	139.2
	전체	가입률	17.40	64.40	60.89	58.09	57.09
		가입기간	14.7	52.0	109.4	131.7	107.2
비장애인	1-4분위	가입률	23.90	71.54	70.56	70.07	62.83
		가입기간	12.4	52.4	97.2	105.9	75.2
	5분위	가입률	21.32	72.27	71.00	70.08	62.86
		가입기간	11.1	51.4	102.7	107.7	82.7
	6분위	가입률	22.42	72.61	73.83	73.02	64.46
		가입기간	11.3	55.8	110.9	125.1	92.8
	7분위	가입률	21.34	72.07	74.28	74.10	64.66
		가입기간	11.4	61.8	120.5	139.1	100.6
	8분위	가입률	18.26	71.59	74.44	74.53	64.26
		가입기간	10.6	66.3	134.9	159.6	113.7
	9분위	가입률	16.76	72.08	75.07	75.20	64.33
		가입기간	10.1	65.4	143.4	174.4	123.3
	10분위	가입률	13.69	72.38	74.98	75.01	63.81
		가입기간	8.9	63.4	151.6	189.1	132.8
	전체	가입률	20.56	71.85	73.03	72.77	63.66
		가입기간	11.4	57.8	120.7	140.1	97.9

주: 가입기간은 가입자의 누적 가입기간 평균값을 제시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47〉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비장애인의 공적연금 가입률 및 가입기간(2017)

(단위: %, 개월)

전체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장애인	1~2분위	가입률	22.20	22.09	33.92	59.00	67.99	65.41	70.05	28.78
		가입기간	48.9	58.3	63.1	73.1	63.4	68.9	69.2	56.6
	3분위	가입률	36.32	38.70	47.60	54.75	62.21	64.94	73.54	44.76
		가입기간	58.2	78.6	83.9	82.5	86.3	91.4	97.8	73.8
	4분위	가입률	54.31	52.18	55.59	64.22	65.26	66.08	67.69	58.28
		가입기간	65.8	74.9	81.3	85.1	92.7	104.5	99.0	79.1
	5분위	가입률	61.59	58.17	61.12	66.30	67.50	68.13	71.47	63.96
		가입기간	77.7	74.8	87.7	96.7	103.2	110.2	105.6	89.7
	6분위	가입률	67.13	62.63	64.74	70.06	68.49	70.88	76.06	68.32
		가입기간	83.7	93.8	102.6	118.5	119.5	110.3	113.0	100.9
	7분위	가입률	71.89	72.83	69.50	66.57	72.61	71.88	72.15	70.96
		가입기간	91.7	89.4	111.4	124.8	125.4	137.2	123.0	111.3
	8분위	가입률	74.79	71.59	73.06	70.35	73.44	73.65	75.87	73.60
		가입기간	100.1	86.0	126.6	133.8	147.7	145.8	149.1	125.3
	9분위	가입률	78.41	78.97	78.55	72.17	72.34	72.43	73.08	74.89
		가입기간	120.1	124.3	140.3	161.3	163.9	170.4	170.3	149.3
	10분위	가입률	80.06	72.89	75.71	76.05	77.26	74.46	73.01	76.02
		가입기간	157.1	182.9	172.1	177.3	195.2	199.8	189.0	181.6
	전체	가입률	47.44	47.36	57.87	66.70	70.19	70.69	72.77	57.09
		가입기간	82.8	87.5	103.3	117.2	128.2	138.0	139.2	107.2
비장애인	1~2분위	가입률	50.24	53.86	60.26	61.53	59.15	59.14	57.11	53.46
		가입기간	44.1	53.3	62.1	68.3	78.2	83.2	90.4	55.9
	3분위	가입률	46.25	51.28	52.73	54.18	54.15	53.85	52.17	49.52
		가입기간	49.6	57.7	64.2	70.9	77.3	85.3	90.4	62.6
	4분위	가입률	53.85	55.65	56.97	56.32	56.29	56.92	57.34	55.27
		가입기간	56.0	59.8	70.4	74.6	82.1	87.6	91.5	68.1
	5분위	가입률	59.32	60.62	60.89	60.51	59.93	60.13	60.29	59.89
		가입기간	62.7	67.8	76.2	81.3	87.5	92.3	94.8	75.1
	6분위	가입률	63.99	63.50	64.15	63.48	62.75	63.06	63.35	63.62
		가입기간	69.0	72.7	81.6	88.8	95.5	95.8	98.9	81.6
	7분위	가입률	68.44	67.36	67.32	65.74	65.22	64.81	64.78	66.73
		가입기간	74.3	82.4	92.7	98.7	104.4	106.4	110.0	90.5
	8분위	가입률	72.79	69.71	69.15	68.36	66.95	66.33	65.43	69.17
		가입기간	82.7	92.4	102.5	108.9	118.5	122.4	125.7	103.4
	9분위	가입률	74.84	71.13	71.41	70.04	67.61	66.52	65.17	69.86
		가입기간	96.0	109.2	119.0	122.6	135.0	140.0	143.9	121.3
	10분위	가입률	75.84	70.53	72.73	72.86	70.33	68.45	66.35	70.57
		가입기간	121.8	138.3	146.3	146.6	156.8	163.5	165.4	148.7
	전체	가입률	62.83	62.86	64.46	64.66	64.26	64.33	63.81	63.66
		가입기간	75.2	82.7	92.8	100.6	113.7	123.3	132.8	97.9

주: 18~59세로 한정함. 가입기간은 가입자의 누적 가입기간 평균값을 제시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라. 소득보장 급여의 장애인 빈곤 감소 효과

소득보장 급여가 장애인의 빈곤 상태를 얼마 경감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때 소득보장 급여는 공적 이전소득이며, 앞서 장애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 분석에서와 같이 성격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급여 유형에 따라 빈곤 감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2015년은 가구 소득을 측정할 수 없어 2017년만 분석하였다. 빈곤을 측정할 때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중위값의 50%와 25%를 빈곤선으로 설정한 두 가지 빈곤율을 제시한다. 이 때 가구의 빈곤선은 가구 단위의 중위소득, 개인의 빈곤율은 개인 단위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르다. 이러한 빈곤선은 빈곤 감소 효과의 비교를 위하여 가처분소득은 물론 시장소득과 시장소득에 일부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소득에 모두 고정하여 적용하였다.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살펴본다. 2017년 중위소득 50% 기준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은 39.31%로 나타나 비장애인 가구 33.31%에 비해 높다. 장애인 개인의 빈곤율은 46.54%, 비장애인 28.89%로 가구보다 개인 빈곤율의 격차가 크다. 중위소득 25% 기준으로는 장애인 가구 빈곤율이 20.16%로 비장애인 가구 22.25%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장애인 개인 빈곤율은 23.89%로 비장애인 17.71%보다 높게 나타난다. 장애인은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율이 높고,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높으며, 농어촌 장애인의 빈곤율이 높는데, 이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중위 가처분소득 50%를 기준으로 2017년 전체 인구의 빈곤율이 17.3%였고, 장애인의 빈곤율은 40.3%였던 것을 고려하면(이현주, 박형준, 이정운, 2019), 본 자료에서 나타난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 격차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2-2-3-48〉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빈곤율(2017)

(단위: %)

구분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가구		개인		가구		개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성	남성	34.09	26.07	43.20	26.81	16.59	16.58	20.97	16.18
	여성	54.00	48.61	51.26	30.93	30.21	34.22	28.02	19.21
연령	0~17세	77.44	96.69	32.61	25.46	64.20	85.15	15.58	14.72
	18~39세	25.24	25.24	32.88	22.05	14.37	18.51	14.91	13.21
	40~64세	29.43	28.83	41.76	28.12	14.42	20.02	18.52	17.77
	65세 이상	54.56	57.59	55.05	53.32	28.61	33.82	31.57	33.05
거주지역	대도시	36.16	32.33	44.04	27.93	17.42	21.49	20.64	16.91
	중소도시	37.73	31.54	44.47	27.46	19.75	21.06	23.33	16.70
	농어촌	56.16	50.05	62.85	45.41	31.06	34.08	36.88	30.19
전체		39.31	33.31	46.54	28.89	20.16	22.25	23.89	17.71

주: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함. 가구빈곤선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개인빈곤선은 개인 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름. 가구의 성, 연령은 세대주의 성,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49〉 소득보장 급여의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단위: %, %포인트)

구분			시장소득	시장소득 + 장애급여1	시장소득 + 장애급여2	시장소득 + 일반 소득보장 급여 (사회보험)	시장소득 + 일반 소득보장 급여 (일반조세)	시장소득 +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시장소득 + 전체 공적 이전소득 (경상소득)	가처분 소득
중위 소득 50% 기준	가구	장애인	52.68	52.35	50.59	48.72	50.13	52.56	39.14	39.31
			-	(-0.33)	(-2.09)	(-3.96)	(-2.55)	(-0.12)	(-13.54)	(-13.37)
	비장애인		37.82	37.82	37.37	34.99	36.75	37.74	33.12	33.31
			-	(-0.00)	(-0.45)	(-2.83)	(-1.07)	(-0.08)	(-4.70)	(-4.51)
	개인	장애인	56.25	55.89	54.23	52.34	54.16	56.14	46.36	46.54
			-	(-0.36)	(-2.02)	(-3.91)	(-2.09)	(-0.11)	(-9.89)	(-9.71)
중위 소득 25% 기준	가구	장애인	45.49	44.90	43.01	40.40	31.71	44.80	19.99	20.16
			-	(-0.59)	(-2.48)	(-5.09)	(-13.78)	(-0.69)	(-25.50)	(-25.33)
	비장애인		30.73	30.73	30.20	27.29	27.34	30.33	22.11	22.25
			-	(-0.00)	(-0.53)	(-3.44)	(-3.39)	(-0.40)	(-8.62)	(-8.48)
	개인	장애인	47.46	46.96	45.15	42.89	35.52	47.08	23.76	23.89
			-	(-0.50)	(-2.31)	(-4.57)	(-11.94)	(-0.38)	(-23.70)	(-23.57)
	비장애인		23.77	23.74	23.29	21.05	21.62	23.61	17.59	17.71
			-	(-0.03)	(-0.48)	(-2.72)	(-2.15)	(-0.16)	(-6.18)	(-6.06)

주: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함. 가구빈곤선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개인빈곤선은 개인 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름. 괄호 안의 숫자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비교한 빈곤 감소 비율(%포인트)임.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보장 급여가 장애인의 빈곤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시장소득에 중위 50% 빈곤선을 적용하면 장애인의 빈곤율은 56.25%로 비장애인 32.97%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다.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소득보장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를 보면 사회보험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가 장애인의 빈곤율은 3.91%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일반조세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가 2.09%포인트, 장애급여가 2.02%포인트였고, 장애급여1과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은 각각 0.36%포인트와 0.11%포인트로 빈곤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모든 급여 유형이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의 크기가 컸다. 시장소득에 다섯 가지 유형의 소득보장 급여를 모두 더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의 빈곤율은 46.36%로 시장소득에 비해 빈곤율이 9.89%포인트 감소한다. 비장애인 빈곤 감소 효과인 4.31%포인트에 비하면 두 배를 넘는다. 조세까지 고려한 가처분소득에 의한 장애인의 빈곤율은 46.54%로 시장소득 대비 9.71%포인트 감소하며, 역시 비장애인의 빈곤 감소 효과 4.08%포인트의 두 배 이상이다. 빈곤율 감소를 절대값이 아닌 상대적 비율로 보아도 장애인은 시장소득 빈곤율 대비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이 17.26%(9.71/56.25*100) 낮아져 비장애인 12.37%(4.08/32.97*100)보다 높다.

중위소득의 25%를 기준으로 한 빈곤은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준을 고려하면 절대빈

곤의 개념에 가깝다. 시장소득에 중위 25% 기준을 적용한 장애인 빈곤율은 47.46%이며, 비장애인은 23.77%이다. 다섯 가지 소득보장 급여 유형 중 일반조세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가 장애인의 빈곤율을 11.94%포인트 감소시켜 그 효과가 가장 크다. 이는 이 유형의 급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시장소득에 다섯 가지 급여를 모두 합한 경상소득 기준 장애인의 빈곤율은 23.76%로 시장소득 빈곤율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동일한 기준에서 비장애인의 빈곤 감소 효과가 6.18%포인트로 나타나 소득보장 급여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는 장애인이 4배 가까이 크다. 가처분소득에 의한 빈곤율 또한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보다는 다소 높고 빈곤 감소 효과도 다소 낮아지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중위소득 25% 기준의 빈곤율 감소도 상대적 비율로 보면 장애인은 시장소득 빈곤율 대비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49.66\%(23.57/47.46 \times 100)$ 감소하여 비장애인 $25.49\%(6.06/23.77 \times 100)$ 보다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득보장 급여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았다. 시장소득에 중위 50% 기준의 빈곤선을 적용하면 소득 1~4분위 장애인이 100% 빈곤 상태인데, 전체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경상소득에서는 소득 1~2분위가 90.18%, 소득 3분위가 87.48%, 소득 4분위는 67.86%까지 낮아진다. 소득 5분위 또한 시장소득 빈곤율이 29.18%인데, 경상소득 빈곤율은 8.39%,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9.29%까지 낮아진다. 급여 유형별 빈곤 감소 효과를 보면 소득 1~4분위에서는 사회보험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가, 소득 5분위에서는 일반조세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급여1은 소득 1~3분위의 장애인에 대해,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은 소득 1~2분위의 장애인에 대해 빈곤 감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산분위에 따른 빈곤 감소 효과를 살펴보았다. 시장소득에 중위 50% 기준의 장애인 빈곤율은 재산 5분위가 70.83%로 가장 높고 재산분위가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낮아진다. 다섯 가지 유형의 소득보장 급여 중 재산 1~4분위 장애인에게는 일반조세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가, 나머지 재산분위에서는 모두 사회보험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컸다. 또한 전체 공적 이전소득과 조세를 고려한 가처분소득 빈곤율과 비교하면 소득분위와 달리 모든 재산분위에서 빈곤 감소의 크기가 10%포인트 내외로 고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시장소득에 의한 빈곤율의 크기는 재산분위가 높을수록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감소율은 재산분위가 높을수록 크다.

마지막으로 연령대별 빈곤 감소 효과를 살펴보았다. 시장소득에 중위 50% 기준의 장애인 빈곤율은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올라가는데, 0~5세 장애인의 빈곤율이 27.96%인데 비해 75세 이상 장애인의 빈곤율은 67.77%에 달한다. 다섯 가지 유형의 소득보장 급여 중에서 대체로 40대 이전에는 일반조세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가, 40대 이후에는 사회보험에 의한 일반 소득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컸지만 둘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전체 공적 이전소득과 조세를 고려한 가처분소득 빈곤율과 비교하면 빈곤 감소의 크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크며 65~74세 장애인은 13.73%로 가장 컸다. 빈곤율의 상대적인 감소 비율을 보면 26~39세와 65~74세 장애인이 20% 이상 감소하여 가장 효과가 컸다.

〈표 2-2-3-50〉 소득보장 급여의 소득분위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단위: %, %포인트)

구분		소득 분위	시장소득	시장소득 + 장애급여 1	시장소득 + 장애급여 2	시장소득 + 일반 소득보장 급여 (사회 보험)	시장소득 + 일반 소득보장 급여 (일반 조세)	시장소득 +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시장소득 + 전체 공적 이전소득 (경상 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시장소득 대비 감소량	시장소득 대비 감소율
중위 소득 50% 기준	가구	1-2분위	100.00	100.00	96.77	95.87	99.06	99.99	80.14	80.20	19.80	19.80
		3분위	100.00	100.00	96.41	94.86	97.38	99.86	78.44	78.55	21.45	21.45
		4분위	94.80	91.58	88.36	74.54	75.56	93.87	47.57	48.75	46.05	48.58
		5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6	-0.16	n.a.
		6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2	n.a.
		7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2	n.a.
		8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9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전체	52.68	52.35	50.59	48.72	50.13	52.56	39.14	39.31	13.37	25.38
	개인	1-2분위	100.00	100.00	97.26	96.38	99.76	100.00	90.18	90.22	9.78	9.78
		3분위	100.00	100.00	97.12	96.04	99.54	99.92	87.48	87.60	12.40	12.40
		4분위	100.00	99.59	94.85	87.94	93.22	99.75	67.86	68.40	31.60	31.60
		5분위	29.18	26.00	26.16	18.37	16.49	28.43	8.39	9.29	19.89	68.16
		6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7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3	-0.03	n.a.
		8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9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전체	56.25	55.89	54.23	52.34	54.16	56.14	46.36	46.54	9.71	17.26
중위 소득 25% 기준	가구	1-2분위	100.00	99.77	95.17	92.73	70.99	99.96	47.60	47.87	52.13	52.13
		3분위	100.00	98.52	93.83	83.57	71.53	95.46	38.25	38.63	61.37	61.37
		4분위	24.22	20.71	21.71	14.72	10.84	22.44	5.21	5.59	18.63	76.92
		5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6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7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2	n.a.
		8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9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a.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전체	45.49	44.90	43.01	40.40	31.71	44.80	19.99	20.16	25.33	55.68
	개인	1-2분위	100.00	99.95	95.83	94.16	74.18	99.96	54.05	54.24	45.76	45.76
		3분위	100.00	99.53	94.88	88.95	84.33	98.61	47.18	47.45	52.55	52.55
		4분위	42.33	38.07	38.31	27.90	23.42	40.27	11.76	12.19	30.14	71.20
		5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6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7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2	n.a.
		8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9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a.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1	n.a.
		전체	47.46	46.96	45.15	42.89	35.52	47.08	23.76	23.89	23.57	49.66

주: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함. 가구빈곤선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개인빈곤선은 개인 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름.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51〉 소득보장 급여의 재산분위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단위: %, %포인트)

구분		재산 분위	시장소득	시장소득 + 장애급여 1	시장소득 + 장애급여 2	시장소득 + 일반 소득보장 급여 (사회 보험)	시장소득 + 일반 소득보장 급여 (일반 조세)	시장소득 +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시장소득 + 전체 공적 이전소득 (경상 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시장소득 대비 감소량	시장소득 대비 감소율
중위 소득 50% 기준	가구	1-4분위	63.78	63.34	62.04	61.47	60.07	63.69	47.07	47.20	16.58	26.00
		5분위	67.57	67.25	65.42	65.09	64.52	67.44	52.03	52.16	15.41	22.81
		6분위	59.03	58.67	56.43	55.39	56.19	58.75	45.19	45.32	13.71	23.23
		7분위	45.49	45.15	43.08	41.06	43.46	45.32	34.77	34.89	10.60	23.30
		8분위	39.14	38.93	36.70	33.63	37.74	39.06	28.67	28.86	10.28	26.26
		9분위	35.15	35.00	33.10	29.10	34.16	35.10	25.60	25.79	9.36	26.63
		10분위	34.14	34.01	32.05	26.92	33.46	34.11	24.03	24.45	9.69	28.38
		전체	52.68	52.35	50.59	48.72	50.13	52.56	39.14	39.31	13.37	25.38
	개인	1-4분위	67.29	66.81	65.60	65.08	64.76	67.20	57.67	57.80	9.49	14.10
		5분위	70.83	70.43	68.93	68.36	68.42	70.77	61.50	61.58	9.25	13.06
		6분위	62.75	62.42	60.33	59.39	60.16	62.58	51.92	52.02	10.73	17.10
		7분위	49.59	49.28	47.35	45.06	47.39	49.42	39.83	40.02	9.57	19.30
		8분위	42.75	42.43	40.23	37.11	41.16	42.63	32.61	32.83	9.92	23.20
		9분위	38.69	38.47	36.67	32.66	37.51	38.56	29.16	29.38	9.31	24.06
		10분위	37.48	37.33	35.34	30.18	36.65	37.43	27.36	27.77	9.71	25.91
		전체	56.25	55.89	54.23	52.34	54.16	56.14	46.36	46.54	9.71	17.26
중위 소득 25% 기준	가구	1-4분위	56.56	55.67	54.34	53.40	31.91	55.99	22.15	22.17	34.39	60.80
		5분위	60.29	59.10	57.36	56.82	38.64	59.24	25.73	25.75	34.54	57.29
		6분위	51.48	50.85	48.29	46.14	38.24	50.04	23.30	23.41	28.07	54.53
		7분위	37.56	37.23	34.74	31.43	32.42	36.52	18.95	19.13	18.43	49.07
		8분위	32.08	31.80	29.44	25.25	28.99	31.48	15.96	16.18	15.90	49.56
		9분위	28.59	28.34	26.42	21.51	26.64	28.29	14.53	14.92	13.67	47.81
		10분위	27.69	27.60	25.50	19.55	26.75	27.54	15.67	16.32	11.37	41.06
		전체	45.49	44.90	43.01	40.40	31.71	44.80	19.99	20.16	25.33	55.68
	개인	1-4분위	58.66	57.90	56.68	55.91	36.48	58.36	25.75	25.78	32.88	56.05
		5분위	62.36	61.70	59.88	59.32	43.53	61.88	30.03	30.08	32.28	51.76
		6분위	53.77	53.18	50.81	49.27	43.46	53.05	28.01	28.06	25.71	47.81
		7분위	39.52	39.23	36.90	34.14	35.71	38.93	23.23	23.39	16.13	40.81
		8분위	33.78	33.58	31.17	27.53	31.61	33.41	19.72	19.93	13.85	41.00
		9분위	30.31	30.09	28.14	23.87	28.87	30.15	18.12	18.41	11.90	39.26
		10분위	29.40	29.25	27.20	21.47	28.43	29.23	18.19	18.68	10.72	36.46
		전체	47.46	46.96	45.15	42.89	35.52	47.08	23.76	23.89	23.57	49.66

주: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함. 가구빈곤선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개인빈곤선은 개인 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름.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52〉 소득보장 급여의 연령대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단위: %, %포인트)

구분		연령대	시장소득	시장소득 + 장애급여 1	시장소득 + 장애급여 2	시장소득 + 일반 소득보장 급여 (사회 보험)	시장소득 + 일반 소득보장 급여 (일반 조세)	시장소득 +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시장소득 + 전체 공적 이전소득 (경상 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	시장소득 대비 감소량
중위 소득 50% 기준	가구	0-17	100.00	88.76	100.00	94.43	94.33	100.00	77.44	77.44	22.56	22.56
		18-25	58.47	57.71	58.47	57.78	53.25	58.11	45.66	45.83	12.64	21.62
		26-39	32.36	31.77	31.49	31.32	29.98	32.30	23.68	23.83	8.53	26.36
		40-49	35.69	35.30	34.40	34.82	32.72	35.64	25.96	26.15	9.54	26.73
		50-64	42.48	42.04	40.83	39.47	40.19	42.41	30.66	30.81	11.67	27.47
		65-74	64.59	64.39	60.97	56.66	61.55	64.42	44.55	44.76	19.83	30.70
		75-	79.42	79.33	77.06	74.45	77.25	79.23	64.92	65.10	14.32	18.03
		전체	52.68	52.35	50.59	48.72	50.13	52.56	39.14	39.31	13.37	25.38
	개인	0-5	27.96	27.38	27.62	26.78	26.10	27.62	23.48	23.51	4.45	15.92
		6-11	35.04	34.76	34.67	34.48	33.12	34.84	30.14	30.45	4.59	13.10
		12-17	42.68	41.88	42.33	41.57	40.07	42.54	36.00	36.18	6.50	15.23
		18-25	38.70	37.19	38.56	37.78	36.11	38.52	30.95	31.00	7.70	19.90
		26-39	42.68	41.60	41.72	39.63	40.46	42.57	33.49	33.64	9.04	21.18
		40-49	49.65	49.10	47.66	48.25	47.27	49.57	41.21	41.40	8.25	16.62
		50-64	50.54	50.18	48.53	47.12	48.96	50.48	41.71	41.90	8.64	17.10
		65-74	64.86	64.75	61.80	58.34	62.18	64.69	50.93	51.13	13.73	21.17
		75-	67.77	67.67	65.90	63.39	65.82	67.65	58.50	58.66	9.11	13.44
		전체	56.25	55.89	54.23	52.34	54.16	56.14	46.36	46.54	9.71	17.26
중위 소득 25% 기준	가구	0-17	88.76	88.76	88.76	88.76	64.20	88.76	64.20	64.20	24.56	27.67
		18-25	48.73	46.27	48.57	47.74	33.63	48.58	28.67	28.67	20.06	41.17
		26-39	25.28	24.51	24.26	24.31	16.54	25.21	13.34	13.39	11.89	47.03
		40-49	27.98	27.28	26.61	27.11	16.53	27.91	13.02	13.13	14.85	53.07
		50-64	34.80	34.03	33.02	31.49	21.81	34.66	14.86	14.96	19.84	57.01
		65-74	56.51	56.07	52.11	44.78	41.77	55.47	18.44	18.78	37.73	66.77
		75-	74.59	74.36	71.41	68.36	56.81	72.51	38.94	39.17	35.42	47.49
		전체	45.49	44.90	43.01	40.40	31.71	44.80	19.99	20.16	25.33	55.68
	개인	0-5	19.18	19.18	19.18	18.26	14.45	19.18	13.86	14.18	5.00	26.07
		6-11	22.88	22.51	22.69	22.18	16.90	22.77	15.09	15.19	7.69	33.61
		12-17	30.17	29.18	29.92	28.94	19.25	30.05	16.09	16.18	13.99	46.37
		18-25	27.07	25.17	26.79	26.16	17.27	26.94	13.74	13.77	13.30	49.13
		26-39	32.33	30.97	31.16	30.05	21.09	32.24	15.30	15.37	16.96	52.46
		40-49	39.72	39.06	37.79	38.23	23.96	39.59	17.41	17.47	22.25	56.02
		50-64	41.24	40.65	39.21	37.51	27.58	41.11	18.79	18.89	22.35	54.19
		65-74	55.79	55.57	52.02	46.83	44.97	55.22	24.81	25.08	30.71	55.05
		75-	61.70	61.57	59.31	56.96	51.97	60.90	37.41	37.55	24.15	39.14
		전체	47.46	46.96	45.15	42.89	35.52	47.08	23.76	23.89	23.57	49.66

주: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함. 가구빈곤선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개인빈곤선은 개인 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름. 가구의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장애인 서비스보장 현황과 소득분배 효과

장애인의 서비스보장은 급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돌봄, 보육, 주거, 고용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돌봄, 보육, 고용 서비스는 개인을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주거는 가구를 단위로 분석하였다. 이후 이러한 서비스보장의 소득분배 효과를 제시한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한정하지 않고 분석 가능한 모든 서비스보장 실태를 다루었다.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국세청 연계자료를 사용하였다.

가.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 분석에 포함된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세 가지이다.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 수급 여부, 이용시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수급이 가능한 6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수급 여부는 연간 지원금액(혹은 이용시간)이 존재하는 경우 수급자로 간주하였다. 이용시간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실제 이용시간 값을 직접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의 경우 이용시간 값이 없어 급여비용을 이용시간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당 방문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는 1회 120분 방문을 가정(2017년 기준 1회 30,690원)하여 시간당 급여비용을 15,345원으로 적용하여 이용시간을 산출하였다. 이 때 이용시간은 연간 이용시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은 본인부담금 정보가 없어 사용하지 못했다.

〈표 2-2-3-53〉 돌봄 서비스의 급여가격

구분	2015	2017	비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8,810원/시간	9,240원/시간	일반 활동보조 급여비용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9,800원/시간	9,800원/시간	평일 방문서비스 기준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29,610원/2시간 =14,805원	30,690원/2시간 =15,345원/시간	1회 120분 방문 기준 급여비용

자료: 보건복지부. (2015a). 2015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5b). 2015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5c).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26호, 2015.7.1. 시행.

보건복지부. (2017a). 2017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7c).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2017.1.1. 시행.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 및 이용 실태를 2015년과 2017년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017년 기준으로 6세 이상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은 8.52%로 나타난다. 이 때 돌봄 서비스 수급률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중 하나라도 이용한 사

람의 비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수급률이 4.9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률 2.86%,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급률이 0.81%로 나타났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시간은 연간 727.4시간으로 나타났다. 각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로 제한했을 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은 1,244.9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487.1시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264.1시간으로 나타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돌봄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연간 860.6만 원으로 나타나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연간 1,193.3만 원으로 가장 높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연간 평균 본인부담금은 17.0만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제외된 수치이다.

2015년과 비교하면 2017년 6세 이상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전체 돌봄 서비스 수급률은 6.66%에서 8.52%로 상승했고, 개별 돌봄 서비스의 수급률 또한 모두 상승하였다. 이용시간과 정부지원금에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은 증가가 확인된다.

〈표 2-2-3-54〉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 및 이용 실태

(단위: %, 시간/연, 만 원/연)

구분	2015				2017			
	수급률	이용시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수급률	이용시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2.48	1,155.3	1,044.3	41.4	2.86	1,244.9	1,193.3	46.8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0.69	264.5	243.9	15.4	0.81	264.1	244.4	14.5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3.56	427.1	655.3	-	4.99	487.1	747.4	-
전체 돌봄 서비스	6.66	686.7	765.2	17.0	8.52	727.4	860.6	17.0

주: 수급률은 6세 이상 장애인의 수급률임. 이용시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로 한정함. 전체 돌봄 서비스의 수급 여부는 세 가지 돌봄 서비스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경우로 정의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 실태를 소득분위, 재산분위,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았다. 우선 소득분위와 연령대별 실태를 보면, 소득 1분위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이 11.61%로 가장 높는데, 이후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수급률이 6~7%대로 낮아지다가 소득 10분위에서 8.65%로 상승한다. 소득 1분위에서 수급률이 높은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효과로 보이며, 중위 소득 구간에서 수급률이 가장 낮은 것도 본인부담금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 최상위 분위에서 수급률이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여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6~11세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이 가장 높으며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급률이 낮아지다가 65세 이후 다시 증가한다. 65세 이후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이용자의 이용 시간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40~49세에 연간 1488.9시간으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대에서는 다시 감소한다.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에 의해 수급률이 높아짐에도 급여 수준이 낮아 이용시간은 줄어드

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대체로 이용시간과 비례하며, 본인부담금은 26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의 본인부담금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재산분위와 연령대에 따른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이용을 보면, 재산분위에 따라서는 수급률에 특별한 경향이 보이지는 않는다. 재산 5분위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이 가장 높지만 나머지 분위와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이용시간과 정부지원금은 재산 1~4분위 이후 재산분위가 높아질수록 이용시간이 줄어들다가 다시 재산 7분위 이후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분위와 마찬가지로 재산분위 내에서도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수급률이 낮아지다가 65세 이후 다시 수급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확인된다.

소득분위와 재산분위에 따른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이용에서는 돌봄 서비스가 소득과 재산에 따라 특별히 수급률에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1분위이면서 재산 1~4분위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이 13.06%인데, 소득 10분위이면서 재산 10분위인 장애인의 수급률도 11.10%로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저분위인 경우와 소득 및 재산이 모두 고분위인 경우에 대체로 수급률이 높다.

〈표 2-2-3-55〉 소득분위 · 연령대별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 및 이용 실태(2017)

(단위: %, 시간/연, 만 원/연)

연령		6-11	12-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소득										
1분위	수급률	35.09	32.35	23.06	12.97	8.92	6.78	9.32	16.49	11.61
	이용시간	880.2	1,093.3	1,282.5	1,578.4	1,567.8	1,131.6	537.6	453.2	718.6
	정부지원금	840.8	1,067.3	1,283.2	1,590.0	1,586.4	1,208.8	718.3	661.9	871.3
	본인부담금	9.4	14.0	16.2	9.6	2.8	5.0	2.5	2.6	3.8
2분위	수급률	33.33	21.43	19.75	7.50	2.98	3.08	8.24	18.14	8.81
	이용시간	960.8	1,040.1	1,064.6	1,382.2	1,583.7	1,082.1	516.9	442.1	674.7
	정부지원금	895.5	999.7	1,047.2	1,347.2	1,676.7	1,152.6	700.4	645.6	824.1
	본인부담금	33.5	20.7	32.8	30.1	26.4	13.8	5.0	3.9	9.6
3분위	수급률	31.91	19.85	16.23	5.08	2.73	2.88	5.77	15.02	7.00
	이용시간	757.0	1,145.3	1,022.1	1,179.7	1,748.6	905.8	499.4	450.2	699.3
	정부지원금	697.2	1,085.7	968.1	1,133.6	1,785.5	988.7	715.9	658.7	833.7
	본인부담금	34.2	38.2	46.0	34.3	50.1	22.6	3.0	4.0	15.3
4분위	수급률	26.81	25.56	17.34	5.43	2.60	2.52	5.43	12.78	6.64
	이용시간	901.4	1,028.3	1,081.0	983.0	1,472.0	1,144.0	532.4	463.8	729.2
	정부지원금	809.9	963.6	990.7	954.9	1,480.3	1,182.9	746.8	693.4	854.4
	본인부담금	61.5	60.5	67.3	51.3	48.6	47.1	8.5	3.0	24.6
5분위	수급률	45.98	36.29	23.37	7.67	3.55	2.58	5.74	14.96	7.58
	이용시간	1,045.2	966.3	1,088.2	1,166.1	1,175.3	923.2	552.4	485.7	720.9
	정부지원금	946.4	884.6	1,004.1	1,095.0	1,164.0	971.3	785.6	739.6	855.0
	본인부담금	69.7	60.4	82.6	73.2	55.5	42.5	6.9	0.9	26.4
6분위	수급률	41.67	35.71	21.62	7.20	2.16	2.59	5.33	14.07	7.05
	이용시간	928.2	1,141.5	1,030.9	1,269.4	1,115.5	748.1	578.5	479.1	740.6
	정부지원금	840.5	1,067.7	965.1	1,188.6	1,107.8	819.5	812.0	725.5	856.2
	본인부담금	45.3	59.4	54.2	58.1	41.5	30.8	7.4	1.4	23.8
7분위	수급률	29.66	25.20	16.49	6.19	2.03	2.26	4.62	13.29	5.65
	이용시간	865.0	1,083.4	1,042.1	1,093.6	1,505.2	945.7	574.6	521.0	791.1
	정부지원금	787.9	996.3	994.6	1,060.3	1,470.6	986.7	798.1	792.8	907.1
	본인부담금	57.9	58.0	69.1	64.6	68.7	40.9	9.7	1.1	30.5
8분위	수급률	29.20	27.78	18.50	4.60	1.52	2.27	5.58	13.75	6.16
	이용시간	879.3	977.4	1,036.1	1,237.7	1,147.4	1,010.0	515.0	460.4	758.7
	정부지원금	769.0	905.1	954.5	1,166.0	1,110.1	1,043.1	752.2	692.1	850.6
	본인부담금	70.4	77.6	74.7	80.0	61.4	53.4	4.9	2.0	36.0
9분위	수급률	47.06	29.88	26.82	3.11	1.50	1.39	5.53	13.96	7.14
	이용시간	986.8	1,112.7	1,132.0	1,018.8	1,338.0	1,078.2	528.4	444.5	772.1
	정부지원금	851.2	994.6	1,048.6	964.2	1,228.7	1,101.9	762.1	670.5	844.7
	본인부담금	91.4	98.7	101.1	84.3	74.9	67.4	6.2	2.1	46.4
10분위	수급률	41.46	36.30	22.66	7.92	1.80	1.46	6.04	16.42	8.65
	이용시간	1,065.1	1,126.6	1,077.1	1,061.7	1,226.0	1,102.5	515.6	473.8	759.2
	정부지원금	919.1	1,002.4	947.4	1,022.1	1,139.3	1,231.4	757.7	717.4	855.3
	본인부담금	103.1	112.5	106.5	94.9	106.3	63.2	5.8	2.0	46.7
전체	수급률	35.90	29.61	20.86	7.10	3.86	3.54	7.07	15.55	8.52
	이용시간	931.6	1,076.1	1,105.0	1,291.1	1,488.9	1,049.1	538.1	460.4	727.4
	정부지원금	835.7	1,001.4	1,041.8	1,257.5	1,498.6	1,116.6	739.5	681.5	860.6
	본인부담금	61.2	60.9	64.0	46.6	26.9	21.5	4.5	2.5	17.0

주: 돌봄 서비스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이 포함됨. 이용시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로 한정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56〉 재산분위·연령대별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 및 이용 실태(2017)

(단위: %, 시간/연, 만 원/연)

재산		연령	6-11	12-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4분위	수급률		33.95	28.20	18.50	6.97	4.99	4.43	9.04	18.33	9.22
	이용시간		895.8	1,088.2	1,166.8	1,447.8	1,594.8	1,143.4	561.0	463.1	814.6
	정부지원금		817.4	1,031.7	1,122.7	1,435.7	1,618.5	1,205.3	745.1	676.2	936.1
	본인부담금		43.0	40.5	44.9	27.5	18.1	15.0	3.8	2.5	12.5
5분위	수급률		28.00	22.86	22.83	6.38	4.86	4.80	9.45	18.86	10.92
	이용시간		904.1	1,032.3	1,007.0	1,340.9	903.0	1,032.6	540.9	425.8	607.9
	정부지원금		787.9	981.1	937.5	1,256.7	928.6	1,087.6	744.0	614.3	751.2
	본인부담금		52.3	44.5	48.7	42.9	11.6	12.6	4.4	3.8	9.4
6분위	수급률		30.77	26.85	19.11	6.35	2.50	2.95	6.05	14.55	8.03
	이용시간		862.8	973.1	992.4	976.0	1,334.8	902.6	484.1	421.6	575.8
	정부지원금		800.5	923.7	957.1	932.0	1,351.9	985.9	662.3	618.6	721.7
	본인부담금		54.2	61.2	48.3	40.7	22.7	23.2	4.6	3.4	12.1
7분위	수급률		41.96	28.57	19.35	5.99	2.14	2.30	5.84	12.24	6.88
	이용시간		877.0	1,098.1	966.7	1,117.8	1,286.4	832.6	508.1	463.8	648.0
	정부지원금		798.1	1,013.8	893.8	1,053.0	1,282.7	914.5	730.3	695.0	792.3
	본인부담금		57.9	61.0	65.5	63.1	46.4	33.1	4.6	2.8	19.7
8분위	수급률		38.41	29.49	24.76	6.02	2.37	2.19	5.93	13.26	7.49
	이용시간		983.6	1,051.2	1,095.5	1,243.0	1,289.7	877.0	512.7	458.9	677.1
	정부지원금		865.1	972.3	1,019.7	1,251.3	1,224.2	946.1	754.5	690.0	817.9
	본인부담금		76.6	73.5	87.3	76.0	63.7	35.4	3.6	2.7	25.3
9분위	수급률		40.46	38.24	25.15	9.84	2.46	2.28	4.97	13.76	7.94
	이용시간		1,036.0	1,099.0	1,047.5	1,147.2	1,283.4	935.0	516.6	504.7	724.3
	정부지원금		905.6	983.7	957.5	1,071.0	1,207.0	1,000.8	747.2	766.8	855.7
	본인부담금		85.7	87.9	88.2	82.0	58.1	43.5	5.8	1.2	30.4
10분위	수급률		35.45	31.58	27.36	8.93	3.13	3.18	5.73	14.35	8.73
	이용시간		981.4	1,093.4	1,163.3	1,093.0	1,368.3	921.3	581.0	492.1	705.4
	정부지원금		852.4	992.3	1,059.2	1,006.7	1,357.1	1,008.6	817.9	748.9	856.7
	본인부담금		86.8	93.4	100.0	79.0	63.0	40.3	8.3	1.2	27.4
전체	수급률		35.90	29.61	20.86	7.10	3.86	3.54	7.07	15.55	8.52
	이용시간		931.6	1,076.1	1,105.0	1,291.1	1,488.9	1,049.1	538.1	460.4	727.4
	정부지원금		835.7	1,001.4	1,041.8	1,257.5	1,498.6	1,116.6	739.5	681.5	860.6
	본인부담금		61.2	60.9	64.0	46.6	26.9	21.5	4.5	2.5	17.0

주: 돌봄 서비스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이 포함됨. 이용시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로 한정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57〉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수급률 및 이용 실태(2017)

(단위: %, 시간/연, 만 원/연)

소득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분위	수급률		13.06	14.99	10.80	8.40	9.69	7.48	8.84	11.61
	이용시간		832.8	604.9	535.6	532.0	550.3	538.5	543.2	718.6
	정부지원금		963.4	750.4	701.8	731.9	749.2	761.8	779.0	871.3
	본인부담금		2.9	4.4	3.7	6.0	8.1	6.3	5.6	3.8
2분위	수급률		8.52	12.27	8.43	8.43	8.20	8.33	8.77	8.81
	이용시간		733.8	499.3	464.6	632.1	597.9	583.0	796.0	674.7
	정부지원금		880.9	676.6	617.0	730.1	679.0	757.5	1,021.0	824.1
	본인부담금		9.4	5.9	4.5	13.7	23.7	13.0	20.3	9.6
3분위	수급률		6.37	7.24	7.74	9.81	6.33	7.51	9.16	7.00
	이용시간		793.5	494.3	572.4	730.2	655.7	771.8	753.5	699.3
	정부지원금		920.2	686.4	709.7	840.7	688.1	1,065.3	883.4	833.7
	본인부담금		17.4	6.7	11.3	17.6	39.4	1.8	33.3	15.3
4분위	수급률		6.50	6.48	6.86	6.46	5.99	8.39	6.25	6.64
	이용시간		835.3	778.2	627.8	612.0	792.5	792.1	688.5	729.2
	정부지원금		939.4	910.0	761.2	765.3	904.1	923.7	792.1	854.4
	본인부담금		27.7	23.6	19.9	17.1	30.8	30.9	28.0	24.6
5분위	수급률		7.00	7.35	6.77	7.07	7.28	7.73	9.77	7.58
	이용시간		751.5	814.4	653.7	708.6	705.9	706.4	722.0	720.9
	정부지원금		849.9	960.3	776.0	837.3	862.6	861.6	885.0	855.0
	본인부담금		29.6	27.0	23.6	25.1	23.8	30.2	22.3	26.4
6분위	수급률		6.53	8.16	6.23	6.44	7.15	8.20	8.67	7.05
	이용시간		791.7	769.7	639.2	738.9	730.7	732.7	715.3	740.6
	정부지원금		900.1	824.9	756.2	864.4	844.7	851.1	849.0	856.2
	본인부담금		23.2	26.8	18.0	22.5	27.0	25.4	26.4	23.8
7분위	수급률		5.67	5.08	4.40	5.17	5.25	7.05	6.89	5.65
	이용시간		895.5	705.5	686.5	691.0	703.4	778.0	834.7	791.1
	정부지원금		964.9	819.2	815.7	797.1	866.0	896.2	1,021.2	907.1
	본인부담금		37.3	17.5	23.8	26.3	26.2	31.9	28.3	30.5
8분위	수급률		5.57	8.58	5.48	4.77	7.38	6.90	7.02	6.16
	이용시간		843.5	711.6	584.1	833.4	702.6	787.6	737.6	758.7
	정부지원금		908.6	742.7	695.5	887.8	834.8	882.2	854.6	850.6
	본인부담금		43.0	26.3	24.4	47.7	29.8	36.4	33.0	36.0
9분위	수급률		5.42	6.62	5.72	7.12	8.04	8.58	8.12	7.14
	이용시간		862.8	651.6	709.9	749.6	730.6	802.5	744.1	772.1
	정부지원금		909.2	737.9	841.5	859.4	791.0	850.3	828.5	844.7
	본인부담금		55.5	32.8	40.2	38.6	43.3	52.5	43.0	46.4
10분위	수급률		6.22	4.12	9.18	6.20	7.40	9.76	11.10	8.65
	이용시간		761.5	759.9	611.7	638.6	783.9	837.0	749.2	759.2
	정부지원금		845.1	828.0	714.0	780.1	898.0	903.7	855.2	855.3
	본인부담금		50.4	43.5	37.6	31.9	52.3	53.0	43.7	46.7
전체	수급률		9.22	10.92	8.03	6.88	7.49	7.94	8.73	8.52
	이용시간		814.6	607.9	575.8	648.0	677.1	724.3	705.4	727.4
	정부지원금		936.1	751.2	721.7	792.3	817.9	855.7	856.7	860.6
	본인부담금		12.5	9.4	12.1	19.7	25.3	30.4	27.4	17.0

주: 돌봄 서비스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이 포함됨. 이용시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로 한정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나. 보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은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네 가지이며, 양육수당(장애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포함)은 현금급여로 보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보육 서비스는 18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과 발달재활 서비스의 경우 일부 18세 이상 수급자가 존재하였지만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는 수급률만 제시하였는데, 이 때 수급자는 연중 지원기간 혹은 결재 건수(발달재활 서비스의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2017년 18세 미만 장애인의 보육 서비스 수급률은 56.80%로 나타나는데, 비장애인 수급률 22.83%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 보육 서비스 중에서 발달재활 서비스의 수급률이 51.05%로 가장 높으며, 보육료 지원도 17.01%로 높았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일부 미등록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지만 주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수급률이 비장애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것이 전체 돌봄 서비스 수급률의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보육료 지원의 경우 장애인의 수급률이 비장애인보다 낮았다. 2015년 장애인의 보육 서비스 수급률은 51.95%로 2017년에 비해 낮았다. 또한 수급률이 미미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 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수급률은 2015년보다 2017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장애인의 보육 서비스 수급률은 2015년과 2017년에 거의 차이가 없다.

〈표 2-2-3-58〉 장애인-비장애인의 보육 서비스 수급률

(단위: %)

구분	2015		2017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보육료 지원	14.88	21.52	17.01	22.31
아이돌봄 서비스	0.26	0.89	0.22	0.9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60	0.00	3.49	0.00
발달재활 서비스	46.61	0.26	51.05	0.25
전체 보육 서비스	51.95	22.00	56.80	22.83

주: 0~17세의 수급률임. 전체 보육 서비스의 수급 여부는 네 가지 보육 서비스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경우로 정의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보육 서비스의 수급률을 소득분위 및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는 3~7분위의 중간 분위에서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 내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수급률 차이, 그리고 소득분위 내에서 연령대에 따른 수급률의 차이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비장애인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지만 비장애인의 수급률은 연령대가 올라갈 때 급격히 낮아진다는 차이가 있다. 0~5세의 보육 서비스 수급률은 장애인이 80.74%, 비장애인이 61.02%이지만 12~17세의 보육 서비스 수급률은 장애인이 41.63%인데 비해 비장애인은 0.04%로 거의 없다. 12~17세 비장애인의 보육 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장애인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과 발달

재활 서비스와 같이 연령대에서도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표 2-2-3-59〉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분위·연령대별 보육 서비스 수급률(2017)

(단위: %)

구분	연령 소득	0-5	6-11	12-17	전체
장애인	1-2분위	73.89	71.38	43.14	54.46
	3분위	79.61	73.43	52.29	61.81
	4분위	87.24	76.16	48.44	62.39
	5분위	87.77	72.66	45.11	60.00
	6분위	81.86	73.68	49.31	64.67
	7분위	82.57	78.39	40.98	61.93
	8분위	83.44	71.50	41.02	58.00
	9분위	84.99	65.42	31.52	49.85
	10분위	62.33	40.06	15.51	31.00
	전체	80.74	70.43	41.63	56.80
비장애인	1-2분위	51.12	12.15	0.04	17.93
	3분위	60.87	13.58	0.13	20.82
	4분위	61.98	14.11	0.10	21.89
	5분위	62.00	14.79	0.05	22.98
	6분위	61.55	14.72	0.05	26.56
	7분위	61.94	14.26	0.01	27.92
	8분위	62.52	11.84	0.02	24.42
	9분위	62.42	10.51	0.02	21.26
	10분위	59.19	8.02	0.02	17.75
	전체	61.02	12.60	0.04	22.80

주: 보육 서비스에는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발달재활 서비스가 포함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보육 서비스의 수급률을 재산분위와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재산 1~4분위의 보육 서비스 수급률이 나머지 재산분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연령대 내에서 보면 0~5세는 재산 7~9분위, 6~11세는 재산 1~4분위, 12~17세는 재산 5분위에서 수급률이 가장 높아 연령대에 따라 경향이 다르다.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에 따른 보육 서비스의 수급률을 보면 전체 장애인 물론 재산분위 내에서도 대체로 중간 소득분위에서 보육 서비스의 수급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분위 내에서 재산분위에 따른 수급률을 보면 특별한 경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표 2-2-3-60〉 장애인-비장애인의 재산분위·연령대별 보육 서비스 수급률(2017)

(단위: %)

구분	연령 재산	0-5	6-11	12-17	전체
장애인	1-4분위	81.50	74.48	45.13	60.11
	5분위	63.48	67.39	48.96	57.01
	6분위	74.97	63.27	44.73	54.20
	7분위	88.10	69.15	46.17	58.73
	8분위	81.18	70.29	40.22	57.53
	9분위	82.89	68.60	33.58	52.58
	10분위	74.27	65.88	28.82	48.35
	전체	80.74	70.43	41.63	56.80
비장애인	1-4분위	59.80	14.87	0.07	25.64
	5분위	59.54	13.32	0.04	21.47
	6분위	62.71	14.93	0.05	22.00
	7분위	63.40	13.91	0.03	23.68
	8분위	63.22	11.78	0.02	22.70
	9분위	62.10	10.03	0.03	20.41
	10분위	58.75	8.73	0.02	18.20
	전체	61.02	12.60	0.04	22.83

주: 보육 서비스에는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발달재활 서비스가 포함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61〉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재산 분위별 보육 서비스 수급률(2017)

(단위: %)

구분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장애인	1-2분위	57.98	41.53	44.75	41.94	55.90	44.69	53.99	54.46
	3분위	66.10	56.19	50.64	55.09	74.59	54.03	31.50	61.81
	4분위	66.44	70.84	66.30	52.22	49.07	56.02	58.08	62.39
	5분위	57.25	65.25	69.00	62.69	63.28	68.40	47.87	60.00
	6분위	62.83	85.49	54.97	73.73	61.39	73.84	64.43	64.67
	7분위	64.52	53.49	53.04	65.58	63.89	51.99	69.65	61.93
	8분위	57.66	0.00	46.05	64.93	58.10	57.40	60.38	58.00
	9분위	48.30	38.46	49.30	44.13	54.78	52.01	48.22	49.85
	10분위	39.79	33.64	40.35	29.09	28.40	25.04	30.45	31.00
	전체	60.11	57.01	54.20	58.73	57.53	52.58	48.35	56.80
비장애인	1-2분위	18.85	13.69	16.12	19.40	19.88	15.37	13.00	17.93
	3분위	22.93	19.47	19.03	21.35	19.13	16.91	15.24	20.82
	4분위	23.84	22.98	21.03	21.98	19.80	19.24	17.12	21.89
	5분위	25.21	20.35	21.80	22.92	22.40	20.12	17.66	22.98
	6분위	29.19	21.82	25.35	26.74	25.73	23.66	21.71	26.56
	7분위	31.44	24.60	26.22	27.11	27.67	25.83	22.88	27.92
	8분위	29.00	25.73	22.17	23.72	23.81	22.04	20.87	24.42
	9분위	26.59	21.28	19.55	21.07	20.19	18.81	19.12	21.26
	10분위	21.42	19.55	19.41	20.78	18.14	16.95	15.21	17.75
	전체	25.64	21.47	22.00	23.68	22.70	20.41	18.20	22.83

주: 보육 서비스에는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발달재활 서비스가 포함됨. 0~17세로 한정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 주거 서비스

주거 서비스는 LH공사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LH공사와 SH공사의 공급 형태 중 공공임대주택이라 볼 수 없는 공공분양과 임대상가는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기타임대, 세부적으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 기타임대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과 함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제시하였다. 2015년과 2017년도의 연간 상태 값을 취하였기 때문에 한 해에 LH공사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모두 거주한 소수의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어느 것이 시기적으로 최근 값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LH공사의 값을 취하였다.

〈표 2-2-3-6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구분

	구분	LH	SH
건설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국민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임대(50년, 10년, 5년, 분납) -장기전세 -행복주택	-공공임대(50년) -장기전세 -행복주택 -분양조건부 전세
매입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다가구원룸매입임대 -재개발임대 -희망하우징
기타임대		-집주인건설개량 -집주인매입	-장기안심주택 -주거임대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2017년 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7.95%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 가구 3.75%의 두 배 이상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가구의 영구임대 거주 비율이 3.01%, 국민임대 거주 비율이 3.04%로 높고, 매입임대 거주 비율이 1.20%, 공공임대 0.68%, 기타임대가 0.03%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영구임대 거주 비율로 비장애인 가구가 0.47%인 것에 비하면 장애인 가구의 3.01%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2015년에는 7.29%로 2017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도 모든 유형에서 장애인 가구의 거주 비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은 비장애인 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임대보증금을 보면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에서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임대보증금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영구임대와 매입임대는 장애인 가구의 임대보증금이 비장애인 가구보다 낮다. 장애인 가구의 거주 비율이 높았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331.8만원, 국민임대는 2163.0만 원으로 나타난다. 임대료의 경우 영구임대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월 임대료는 5.7만 원, 국민임대는 17.2만 원으로 나타난다.

〈표 2-2-3-63〉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및 이용 실태

(단위: %, 만 원, 만 원/월)

구분		2015		2017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7.29	3.23	7.95	3.7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 비율	영구임대	2.82	0.45	3.01	0.47
	국민임대	2.78	1.83	3.04	2.10
	공공임대	0.57	0.49	0.68	0.64
	매입임대	1.07	0.43	1.20	0.53
	기타임대	0.04	0.02	0.03	0.0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평균 임대보증금	영구임대	317.6	491.1	331.8	528.0
	국민임대	2,088.6	2,126.5	2,163.0	2,178.6
	공공임대	6,944.5	7,209.8	7,344.1	7,289.7
	매입임대	979.9	1,359.2	1,020.9	1,381.3
	기타임대	2,462.0	2,660.1	2,251.1	2,647.9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평균 임대료	영구임대	5.5	7.1	5.7	7.5
	국민임대	16.2	16.4	17.2	17.4
	공공임대	19.8	24.0	23.7	28.3
	매입임대	12.0	12.4	12.7	13.2
	기타임대	4.5	4.1	8.1	8.2

주 1) LH공사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됨.

2) 공공임대: 50년, 10년, 5년, 분납 공공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분양조건부 전세

3) 매입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신축다세대 매입임대, 다가구원룸매입임대, 재개발임대, 희망하우징

4) 기타임대: 집주인건설개량임대, 집주인매입임대, 장기안심주택, 주거임대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로 한정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소득분위와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소득분위에서는 낮은 소득분위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소득 10분위 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1.11%인데 비해 소득 1~2분위 장애인 가구는 11.99%로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대에서는 사례수가 적은 0~17세를 제외하면 가구주 연령이 50~64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9.23%로 가장 높다. 소득분위 및 연령대에 따른 집단에서 소득 1~2분위이면서 가구주 연령이 40~64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16% 이상으로 가장 높다. 임대보증금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주 연령대는 26~49세인 경우 가장 높은데, 임대보증금이 높다는 것은 영구임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분위 및 연령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도 유사하다. 재산분위가 높아질수록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낮아져, 재산 1~4분위에서는 17.11%, 재산 10분위에서는 0.20%에 그친다. 재산 7분위 이후로는 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1% 미만으로 낮아진다. 재산 1~4분위이면서 가구주의 연령이 50~74세인 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19%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에서는 소득 1~6분위이면서 재산 1~4분위인 장애인 가구의 거주 비율이 15% 이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소득 1~2분위이면서 재산 1~4분위의 장애인 가구는 20.40%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평균 임대보증금은 853.6만 원, 월 임대료는 평균 9.2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표 2-2-3-64〉 소득분위·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및 이용 실태(2017)

(단위: %, 만 원)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소득									
1-2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4.79	5.74	13.19	16.56	17.63	11.20	7.17	11.99
	임대보증금	233.0	771.5	882.2	999.7	768.8	989.4	966.5	894.2
	임대료	5.0	8.7	9.8	10.5	8.6	9.6	9.7	9.3
3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0.00	7.42	12.34	12.92	12.54	7.28	5.34	9.28
	임대보증금	n.a.	1,415.9	2,034.0	1,652.2	1,552.8	2,262.7	2,077.2	1,825.4
	임대료	n.a.	14.0	13.8	14.3	12.5	13.0	13.0	13.1
4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100.00	7.37	9.88	9.02	9.34	7.06	4.08	8.04
	임대보증금	1,412.9	1,253.5	2,459.9	2,437.7	1,815.5	2,202.4	2,592.2	2,110.4
	임대료	9.0	10.6	18.0	16.1	14.3	15.9	14.5	15.2
5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n.a.	5.00	8.12	8.00	8.56	6.59	3.98	7.47
	임대보증금	n.a.	218.8	3,348.0	3,232.4	2,178.4	2,143.3	3,354.7	2,509.1
	임대료	n.a.	4.3	17.4	16.6	16.4	15.8	16.1	16.3
6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n.a.	7.59	6.81	7.03	7.52	6.07	4.99	6.87
	임대보증금	n.a.	2,382.9	3,877.4	3,226.1	2,670.2	2,440.6	2,351.8	2,827.3
	임대료	n.a.	16.7	18.2	16.5	15.6	17.0	17.1	16.3
7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n.a.	6.38	4.82	6.08	5.98	4.66	3.02	5.44
	임대보증금	n.a.	573.3	2,683.6	3,656.9	2,566.3	2,517.8	2,566.4	2,822.5
	임대료	n.a.	14.4	21.3	19.1	16.5	18.1	14.1	17.8
8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n.a.	0.00	4.52	2.83	4.43	3.65	2.44	3.78
	임대보증금	n.a.	n.a.	2,753.4	4,795.2	3,954.3	2,594.7	2,402.0	3,696.5
	임대료	n.a.	n.a.	22.5	22.2	16.3	14.3	18.9	18.1
9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n.a.	7.46	3.42	1.85	2.20	2.03	1.01	2.14
	임대보증금	n.a.	2,626.3	5,208.5	3,949.1	3,887.6	4,727.5	6,839.4	4,280.4
	임대료	n.a.	18.0	24.9	21.5	21.0	17.4	11.2	21.0
10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n.a.	0.00	1.44	1.06	1.18	0.97	0.63	1.11
	임대보증금	n.a.	n.a.	5,531.3	5,304.3	5,263.8	1,366.5	11,343.9	5,279.2
	임대료	n.a.	n.a.	42.3	28.0	25.0	14.3	6.8	25.9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15.30	5.95	7.39	7.80	9.23	7.98	5.85	7.95
	임대보증금	1,100.0	1,165.3	2,436.9	2,234.0	1,645.5	1,593.2	1,423.2	1,738.6
	임대료	7.9	11.2	16.4	14.7	12.3	12.2	11.0	12.7

주: LH공사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65〉 재산분위·연령대별 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및 이용 실태(2017)

(단위: %, 만 원)

재산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1-4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16.07	6.29	11.99	15.81	19.08	19.34	14.73	17.11
	임대보증금		1,100.0	1,051.3	2,284.9	2,097.0	1,420.0	1,427.0	1,281.9	1,558.8
	임대료		7.9	10.9	16.1	14.1	11.9	11.6	10.8	12.3
5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n.a.	22.30	7.28	11.32	14.88	15.27	7.24	12.19
	임대보증금		n.a.	482.5	3,457.4	3,098.0	2,104.5	1,961.0	2,482.8	2,255.3
	임대료		n.a.	7.3	13.1	13.8	12.9	14.3	13.1	13.4
6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0.00	5.04	4.94	4.15	4.12	3.06	1.47	3.18
	임대보증금		n.a.	4,415.0	3,182.6	3,226.0	3,229.1	3,083.5	1,983.7	3,037.8
	임대료		n.a.	24.0	20.1	18.6	16.0	15.3	12.0	16.0
7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n.a.	0.00	0.84	0.71	0.67	0.59	0.33	0.59
	임대보증금		n.a.	n.a.	7,890.0	3,123.9	5,219.9	1,972.8	2,916.5	4,005.8
	임대료		n.a.	n.a.	14.9	16.6	18.4	16.0	15.4	16.9
8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n.a.	0.00	0.15	0.38	0.47	0.22	0.20	0.33
	임대보증금		n.a.	n.a.	2,799.0	3,105.7	5,362.0	4,349.9	6,929.0	4,883.3
	임대료		n.a.	n.a.	22.0	28.0	22.7	34.5	9.8	24.0
9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n.a.	0.00	0.70	0.23	0.24	0.26	0.24	0.27
	임대보증금		n.a.	n.a.	2,500.8	4,211.8	10,176.2	3,431.6	2,108.4	5,600.7
	임대료		n.a.	n.a.	24.9	43.6	17.8	17.0	16.6	22.3
10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n.a.	0.00	0.75	0.39	0.16	0.14	0.04	0.20
	임대보증금		n.a.	n.a.	3,336.8	5,976.8	9,512.9	3,513.8	1,750.0	6,043.2
	임대료		n.a.	n.a.	29.9	42.5	35.3	32.8	14.0	35.5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15.30	5.95	7.39	7.80	9.23	7.98	5.85	7.95
	임대보증금		1,100.0	1,165.3	2,436.9	2,234.0	1,645.5	1,593.2	1,423.2	1,738.6
	임대료		7.9	11.2	16.4	14.7	12.3	12.2	11.0	12.7

주: LH공사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됨.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66〉 소득·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및 이용 실태(2017)

(단위: %, 만 원)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20.40	10.76	2.46	0.42	0.35	0.31	0.04	11.99
	임대보증금	853.6	1,242.6	1,280.0	2,256.1	2,699.8	2,469.7	1,643.0	894.2
	임대료	9.2	9.2	10.4	13.1	22.7	20.2	14.0	9.3
3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19.00	15.22	3.05	0.68	0.29	0.47	0.00	9.28
	임대보증금	1,644.4	2,555.1	3,214.2	1,814.2	10,899.3	1,198.5	n.a.	1,825.4
	임대료	12.8	14.1	14.7	15.0	24.8	10.0	n.a.	13.1
4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16.29	14.75	4.34	0.97	0.27	0.19	0.30	8.04
	임대보증금	2,024.6	2,000.9	2,312.5	5,184.0	2,125.5	827.6	8,234.3	2,110.4
	임대료	14.8	16.8	17.5	14.5	23.3	8.6	23.4	15.2
5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16.30	15.95	4.79	0.60	0.57	0.13	0.10	7.47
	임대보증금	2,341.4	3,298.1	2,739.4	4,239.0	5,888.0	8,962.0	4,410.0	2,509.1
	임대료	16.2	14.5	17.4	20.2	21.4	35.2	42.0	16.3
6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16.01	17.30	3.90	0.83	0.08	0.42	0.37	6.87
	임대보증금	2,499.2	3,179.8	4,499.8	5,346.5	2,175.0	10,380.8	5,324.9	2,827.3
	임대료	15.7	17.8	18.3	21.7	22.0	26.7	32.1	16.3
7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14.18	9.39	2.90	0.60	0.65	0.60	0.13	5.44
	임대보증금	2,682.5	2,457.8	3,632.7	6,075.1	3,939.4	3,618.8	1,615.0	2,822.5
	임대료	17.3	21.2	17.2	12.9	29.5	29.6	22.0	17.8
8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10.78	10.37	3.10	0.37	0.27	0.28	0.21	3.78
	임대보증금	3,002.8	2,956.7	7,790.1	2,056.1	9,808.5	16,137.6	4,916.7	3,696.5
	임대료	17.5	18.8	19.9	16.1	16.3	25.8	38.2	18.1
9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6.91	5.53	2.93	0.35	0.07	0.00	0.34	2.14
	임대보증금	3,866.0	10,252.6	4,844.0	1,115.7	1,330.0	n.a.	5,230.6	4,280.4
	임대료	20.4	15.9	24.3	10.3	19.0	n.a.	37.8	21.0
10분위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3.34	1.78	1.52	0.57	0.49	0.07	0.28	1.11
	임대보증금	5,154.7	295.0	4,471.5	8,737.5	3,545.4	3,798.0	8,593.8	5,279.2
	임대료	21.4	6.6	42.6	42.6	28.7	15.0	46.3	25.9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	17.11	12.19	3.18	0.59	0.33	0.27	0.20	7.95
	임대보증금	1,558.8	2,255.3	3,037.8	4,005.8	4,883.3	5,600.7	6,043.2	1,738.6
	임대료	12.3	13.4	16.0	16.9	24.0	22.3	35.5	12.7

주: LH공사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라. 고용 서비스

고용 서비스는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일모아 재정일자리의 네 가지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다. 일모아 재정일자리의 경우 다수의 일자리 사업이 결합되어 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은 제거하였다. 각 일자리 사업의 참여 여부는 연간 참여기간 값이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 18세 이상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3.09%로 나타나 비장애인 1.89%에 비해 높다. 각 일자리 사업 중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2.74%로 가장 높아, 노인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에게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2015년 2.81%로 2017년에 다소 높아졌으며, 비장애인의 참여율도 소폭 상승하였다. 일자리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과 일모아 재정일자리 참여는 증가하였으나, 자활근로와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율이 감소하였다.

〈표 2-2-3-67〉 장애인-비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 비율

(단위: %)

구분	2015		2017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자활근로	0.17	0.10	0.12	0.07
노인일자리	2.20	0.80	2.74	0.99
취업성공패키지	0.31	0.59	0.07	0.72
일모아 재정일자리	0.23	0.21	0.28	0.15
전체 일자리 사업	2.81	1.66	3.09	1.89

주: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함. 전체 일자리 사업의 참여 여부는 네 가지 일자리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한 경우로 정의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 및 연령대에 따른 일자리 사업 참여율을 살펴보았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 3분위에서 일자리 사업 참여율이 15.06%로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65세 이후 참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1분위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0.54%로 미미하고, 소득 3분위 이후에는 일자리 사업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득 3분위의 65~74세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20.51%, 소득 3분위의 75세 이상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34.15%로 나타난다. 이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소득 3분위이면서 65~74세인 비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19.44%, 75세 이상은 40.97%로 나타난다. 소득분위에 따른 일자리 사업 참여율의 차이는 소득 1~2분위 장애인의 낮은 근로능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탈락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령대에서 65세 이상의 높은 참여율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2-2-3-68〉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분위·연령대별 일자리 사업 참여 비율(2017)

(단위: %)

구분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장애인	1-2분위	0.00	0.20	0.23	0.33	0.76	0.70	0.54
	3분위	2.05	1.57	1.02	1.07	20.51	34.15	15.06
	4분위	1.12	0.78	1.26	1.59	7.01	8.40	3.96
	5분위	0.86	0.71	0.60	0.99	3.60	6.07	2.32
	6분위	0.82	0.33	0.22	0.15	3.51	5.17	1.64
	7분위	0.31	0.26	0.14	0.20	4.40	5.39	1.75
	8분위	1.12	0.61	0.10	0.07	3.35	5.01	1.61
	9분위	0.00	0.16	0.11	0.07	4.25	5.16	1.79
	10분위	0.34	0.00	0.00	0.00	3.58	4.09	1.45
	전체	0.71	0.49	0.42	0.52	5.29	6.91	3.09
비장애인	1-2분위	2.14	1.40	0.78	0.57	1.17	1.02	1.00
	3분위	3.49	2.65	1.48	1.48	19.44	40.97	8.96
	4분위	3.47	2.23	1.26	1.56	6.31	12.84	2.97
	5분위	3.15	1.59	0.78	0.87	3.50	7.04	1.85
	6분위	2.80	1.20	0.48	0.46	3.03	7.59	1.40
	7분위	2.36	0.89	0.31	0.31	2.97	7.42	1.10
	8분위	2.37	0.67	0.16	0.22	3.48	6.42	0.93
	9분위	2.28	0.53	0.09	0.14	3.46	6.28	0.82
	10분위	1.66	0.44	0.03	0.05	1.79	4.41	0.53
	전체	2.62	1.09	0.50	0.59	5.15	9.10	1.89

주: 일자리 사업에는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일모아 재정일자리가 포함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 및 연령대에 따른 일자리 사업 참여율을 보면, 소득분위와 달리 재산분위별로는 일자리 사업 참여율에 일정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장애인 중 일자리 사업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재산 6분위로 5.64%로 나타난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재산 중간 분위에서 일자리 사업 참여율이 높고 재산 저분위와 고분위에서 낮다. 재산분위 내에서 연령대에 따른 일자리 사업 참여율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65세 이후에 참여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위와 재산분위를 교차해 보면 소득분위는 3분위에서, 재산분위는 6분위에서 가장 높은 일자리 사업 참여율이 관찰된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 3분위이면서 재산 6분위인 경우 일자리 사업 참여율이 26.19%로 가장 높고, 비장애인도 17.15%로 가장 높다.

〈표 2-2-3-69〉 장애인-비장애인의 재산분위·연령대별 일자리 사업 참여 비율(2017)

(단위: %)

구분	연령 재산	18-25	26-39	40-49	50-64	65-74	75-	전체
장애인	1-4분위	1.03	0.46	0.57	0.69	4.03	5.94	2.28
	5분위	0.00	0.50	0.60	0.88	6.08	7.60	4.01
	6분위	1.05	0.53	0.53	0.85	8.74	10.84	5.64
	7분위	0.00	0.68	0.32	0.17	7.28	9.23	4.15
	8분위	0.62	0.66	0.17	0.21	5.41	6.78	3.16
	9분위	0.61	0.16	0.00	0.24	4.16	5.09	2.42
	10분위	0.00	0.54	0.20	0.10	2.84	3.38	1.80
	전체	0.71	0.49	0.42	0.52	5.29	6.91	3.09
비장애인	1-4분위	2.70	1.12	0.77	0.88	4.37	8.30	1.82
	5분위	3.56	1.14	0.77	0.90	5.89	10.19	2.81
	6분위	2.77	1.21	0.57	0.70	8.85	13.53	3.27
	7분위	3.06	1.11	0.40	0.44	7.33	12.02	2.37
	8분위	2.69	1.07	0.36	0.35	5.20	9.00	1.73
	9분위	2.48	1.04	0.26	0.35	3.90	7.05	1.44
	10분위	1.83	0.87	0.18	0.27	2.46	4.23	1.02
	전체	2.62	1.09	0.50	0.59	5.15	9.10	1.89

주: 일자리 사업에는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일모아 재정일자리가 포함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70〉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재산 분위별 일자리 사업 참여 비율(2017)

(단위: %)

구분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장애인	1-2분위	0.36	0.27	0.61	0.55	0.84	1.27	1.23	0.54
	3분위	11.51	17.76	26.19	18.39	15.27	11.11	4.41	15.06
	4분위	3.70	5.35	6.18	5.34	3.50	1.69	1.89	3.96
	5분위	2.18	3.04	3.44	2.38	2.13	1.95	1.51	2.32
	6분위	1.11	2.62	2.72	1.70	1.53	1.99	1.31	1.64
	7분위	1.05	1.41	2.37	2.99	1.87	1.67	1.44	1.75
	8분위	0.85	4.91	2.05	2.34	1.41	1.38	1.91	1.61
	9분위	0.74	4.22	2.92	2.60	1.93	1.54	1.85	1.79
	10분위	0.44	1.49	1.98	1.60	2.23	1.60	1.67	1.45
	전체	2.28	4.01	5.64	4.15	3.16	2.42	1.80	3.09
비장애인	1-2분위	0.94	0.87	1.03	1.10	1.08	1.01	1.16	1.00
	3분위	7.26	12.89	17.15	12.47	8.58	6.30	3.33	8.96
	4분위	3.09	3.68	4.05	3.38	2.52	2.19	1.61	2.97
	5분위	1.95	2.40	2.24	1.75	1.65	1.62	1.41	1.85
	6분위	1.28	1.79	1.63	1.70	1.41	1.45	1.07	1.40
	7분위	0.87	1.22	1.55	1.27	1.23	1.23	0.91	1.10
	8분위	0.70	1.05	1.26	1.12	1.00	1.03	0.89	0.93
	9분위	0.57	1.08	1.01	1.12	0.91	0.92	0.76	0.82
	10분위	0.36	0.50	0.67	0.76	0.72	0.58	0.51	0.53
	전체	1.82	2.81	3.27	2.37	1.73	1.44	1.02	1.89

주: 일자리 사업에는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일모아 재정일자리가 포함됨. 18세 이상으로 한정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마. 서비스보장 급여의 장애인 빈곤 감소 효과

서비스보장 급여가 장애인의 빈곤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보장 급여는 사용이 자유로운 현금 소득은 아니지만 급여가 없을 경우 발생할 지출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서비스보장 급여를 시장소득에 가산할 경우 발생하는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비스보장 급여는 크게 돌봄, 보육, 고용 서비스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앞서 보육 서비스에 포함되었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과 고용 서비스에 포함되었던 자활근로 참여소득은 급여액 정보가 없어 제외되었으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와 연계되지 못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제외되었다.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현금급여가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 중에서 요양·간병 급여는 돌봄 서비스에, 직업재활 급여는 고용 서비스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서비스보장 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정부지원금만을 포함하였다. 빈곤 감소 효과에 사용된 서비스보장 급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2-3-71〉 서비스보장 급여의 구분

구분	해당 급여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요양·간병)
보육 서비스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고용 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일모아 재정일자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직업재활)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표 2-2-3-72〉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의 연간 서비스보장 급여(2017)

(단위: %, 만 원)

구분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수급률	수급가구 급여액	수급률	수급가구 급여액
돌봄 서비스	5.56	664.6	0.75	227.1
보육 서비스	5.18	152.2	7.56	166.2
고용 서비스	5.72	134.4	3.30	126.0
전체 서비스보장	15.33	342.6	11.42	161.5

주 1) 수급률과 급여액 모두 가구 단위이며 균등화한 값을 제시함.

2)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요양·간병)

3) 보육 서비스: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4) 고용 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일모아 재정일자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직업재활)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우선 2017년 서비스보장 수급률과 수급가구의 급여액을 살펴보았다. 장애인 가구는 전체 서비스보장 수급률이 15.33%로 비장애인 가구 11.42%에 비해 높다. 수급 가구의 급여액도 342.6만 원으로 비장애인 수급가구 161.5만 원의 두 배 이상이다. 장애인 가구의 세 가지 서비스보장 유형의 수급률은 5%대로 유사했지만 수급가구의 급여액은 돌봄 서비스가 664.6만원으로 나머지 서비스에 비해 네 배 이상 높았다. 비장애인 가구의 경우 보육 서비스의 수급률이 7.56%, 고용 서비스

3.30%, 돌봄 서비스 0.75%로 차이가 컸으며, 수급 가구의 급여액은 장애인 가구와 같이 돌봄 서비스가 227.1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보장 급여에 의해 장애인의 빈곤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분석하였다. 시장소득에 중위 50% 기준의 빈곤선을 적용하면 장애인의 빈곤율은 56.25%인데,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보장 급여는 장애인의 빈곤율을 1.34%포인트 감소시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다만 비장애인의 빈곤 감소 효과 0.51%포인트보다는 컸다.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보장 중에서는 돌봄 서비스 급여가 장애인의 빈곤율을 1.03%포인트 감소시켜 효과가 가장 컸으며, 보육 서비스는 0.18%포인트, 고용 서비스는 0.11%포인트로 빈곤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보육 서비스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가 0.36%포인트로 가장 컸다.

중위소득 25%의 기준의 빈곤선을 적용할 경우 서비스보장에 의한 장애인의 빈곤 감소 효과는 2.09%포인트로 다소 커진다. 돌봄 서비스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가 1.55%포인트로 가장 컸다. 비장애인은 전체 서비스보장의 빈곤 감소 효과가 0.56%포인트로 중위소득 50% 기준의 빈곤율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2-2-3-73〉 서비스보장 급여의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단위: %, %포인트)

구분			시장소득	시장소득 + 돌봄 서비스	시장소득 + 보육 서비스	시장소득 + 고용 서비스	시장소득 + 전체 서비스보장
중위 소득 50% 기준	가구	장애인	52.68	51.54	52.49	52.56	51.23
			-	(-1.14)	(-0.19)	(-0.12)	(-1.45)
		비장애인	37.82	37.78	37.60	37.74	37.48
			-	(-0.04)	(-0.22)	(-0.08)	(-0.34)
	개인	장애인	56.25	55.22	56.07	56.14	54.91
			-	(-1.03)	(-0.18)	(-0.11)	(-1.34)
		비장애인	32.97	32.88	32.61	32.91	32.46
			-	(-0.09)	(-0.36)	(-0.06)	(-0.51)
중위 소득 25% 기준	가구	장애인	45.49	44.01	45.32	44.80	43.16
			-	(-1.48)	(-0.17)	(-0.69)	(-2.33)
		비장애인	30.73	30.69	30.53	30.33	30.08
			-	(-0.04)	(-0.20)	(-0.40)	(-0.65)
	개인	장애인	47.46	45.91	47.29	47.08	45.37
			-	(-1.55)	(-0.17)	(-0.38)	(-2.09)
		비장애인	23.77	23.67	23.46	23.61	23.21
			-	(-0.10)	(-0.31)	(-0.16)	(-0.56)

주: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함. 가구빈곤선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개인빈곤선은 개인 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름. 괄호 안의 숫자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비교한 빈곤 감소 비율(%포인트)임.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서비스보장에 의한 장애인의 빈곤 감소 효과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소득분위에서는 시장소득에 중위 50% 빈곤선을 적용할 경우 소득 1~5분위에서만 빈곤이 나타나며, 소득 1~4분위

는 빈곤율이 100%이다. 전체 서비스보장 급여를 가산하면 빈곤율은 소득 1~3분위에서는 감소폭이 1%포인트 대, 소득 4~5분위에서는 감소폭이 3%포인트 대로 나타난다. 상대적인 감소율에서는 소득 5분위가 11.69%로 가장 높다.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보장 중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크며, 보육 서비스는 소득 1~3분위, 고용 서비스는 소득 1~2분위에서는 빈곤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재산분위에서는 재산분위가 낮을수록 서비스보장의 빈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할 경우 재산 10분위 장애인의 서비스보장 빈곤 감소 효과는 0.69%포인트인데, 재산 1~4분위는 1.89%포인트로 나타난다. 하지만 상대적인 감소 비율로 보면 재산 1~4분위뿐만 아니라 재산 7~9분위에서 타 재산분위에 비해 높은 빈곤 감소가 나타난다. 재산분위에서도 모든 재산분위에서 세 가지 서비스보장 중 돌봄 서비스 급여에 의한 장애인의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다.

서비스보장의 빈곤 감소 효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 감소량은 물론 상대적인 감소율에서도 효과는 작아진다. 6~11세 장애인에게는 서비스보장이 빈곤율을 7.37%포인트 감소시키는데 비해, 75세 이상 장애인은 0.35%포인트만이 감소한다.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보장 중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크지만, 0~5세 장애인에게는 돌봄 서비스보다 보육 서비스의 빈곤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3-74〉 서비스보장 급여의 소득분위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단위: %, %포인트)

구분		소득 분위	시장소득	시장소득 + 돌봄 서비스	시장소득 + 보육 서비스	시장소득 + 고용 서비스	시장소득 + 전체 서비스보장		
							빈곤율	시장소득 대비 감소량	시장소득 대비 감소율
중위 소득 50% 기준	가구	1-2분위	100.00	98.03	100.00	99.99	97.97	2.03	2.03
		3분위	100.00	98.67	99.99	99.86	98.36	1.64	1.64
		4분위	94.80	91.30	92.97	93.86	88.74	6.06	6.39
		5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6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7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8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9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전체	52.68	51.54	52.49	52.56	51.23	1.45	2.75
	개인	1-2분위	100.00	98.51	100.00	100.00	98.46	1.54	1.54
		3분위	100.00	98.99	100.00	99.92	98.81	1.19	1.19
		4분위	100.00	97.11	99.65	99.75	96.30	3.70	3.70
		5분위	29.18	27.71	27.77	28.40	25.77	3.41	11.69
		6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7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8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9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전체	56.25	55.22	56.07	56.14	54.91	1.34	2.38
중위 소득 25% 기준	가구	1-2분위	100.00	96.83	99.96	99.96	96.71	3.29	3.29
		3분위	100.00	96.77	99.45	95.46	91.66	8.34	8.34
		4분위	24.22	23.11	23.26	22.44	20.60	3.62	14.95
		5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6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7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8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9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전체	45.49	44.01	45.32	44.80	43.16	2.33	5.12
	개인	1-2분위	100.00	96.86	99.97	99.96	96.75	3.25	3.25
		3분위	100.00	96.86	99.75	98.61	95.12	4.88	4.88
		4분위	42.33	40.44	41.01	40.27	37.34	4.99	11.79
		5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6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7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8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9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n.a.
		전체	47.46	45.91	47.29	47.08	45.37	2.09	4.40

주: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함. 가구빈곤선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개인빈곤선은 개인 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름.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75〉 서비스보장 급여의 재산분위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단위: %, %포인트)

구분		재산 분위	시장소득	시장소득 + 돌봄 서비스	시장소득 + 보육 서비스	시장소득 + 고용 서비스	시장소득 + 전체 서비스보장		
							빈곤율	시장소득 대비 감소량	시장소득 대비 감소율
중위 소득 50% 기준	가구	1-4분위	63.78	61.99	63.54	63.69	61.62	2.16	3.39
		5분위	67.57	66.45	67.51	67.44	66.28	1.29	1.91
		6분위	59.03	58.24	58.89	58.75	57.84	1.19	2.02
		7분위	45.49	44.84	45.25	45.32	44.42	1.07	2.35
		8분위	39.14	38.50	39.02	39.05	38.26	0.88	2.25
		9분위	35.15	34.54	34.97	35.10	34.35	0.80	2.28
		10분위	34.14	33.58	34.02	34.11	33.45	0.69	2.02
		전체	52.68	51.54	52.49	52.56	51.23	1.45	2.75
	개인	1-4분위	67.29	65.75	67.08	67.20	65.40	1.89	2.81
		5분위	70.83	69.83	70.69	70.77	69.64	1.19	1.68
		6분위	62.75	62.03	62.63	62.57	61.72	1.03	1.64
		7분위	49.59	48.86	49.35	49.42	48.47	1.12	2.26
		8분위	42.75	42.05	42.53	42.63	41.71	1.04	2.43
		9분위	38.69	38.08	38.53	38.56	37.80	0.89	2.30
		10분위	37.48	36.90	37.42	37.43	36.79	0.69	1.84
		전체	56.25	55.22	56.07	56.14	54.91	1.34	2.38
중위 소득 25% 기준	가구	1-4분위	56.56	54.21	56.32	55.99	53.42	3.14	5.55
		5분위	60.29	58.60	60.05	59.24	57.35	2.94	4.88
		6분위	51.48	50.40	51.36	50.04	48.87	2.61	5.07
		7분위	37.56	36.77	37.36	36.52	35.53	2.03	5.40
		8분위	32.08	31.14	31.98	31.48	30.45	1.63	5.08
		9분위	28.59	27.84	28.45	28.29	27.39	1.20	4.20
		10분위	27.69	27.14	27.66	27.54	26.95	0.74	2.67
		전체	45.49	44.01	45.32	44.80	43.16	2.33	5.12
	개인	1-4분위	58.66	56.20	58.43	58.36	55.69	2.97	5.06
		5분위	62.36	60.40	62.12	61.88	59.84	2.52	4.04
		6분위	53.77	52.67	53.62	53.05	51.73	2.04	3.79
		7분위	39.52	38.66	39.36	38.93	37.92	1.60	4.05
		8분위	33.78	32.87	33.68	33.41	32.38	1.40	4.14
		9분위	30.31	29.51	30.15	30.15	29.19	1.12	3.70
		10분위	29.40	28.81	29.34	29.23	28.59	0.81	2.76
		전체	47.46	45.91	47.29	47.08	45.37	2.09	4.40

주: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함. 가구빈곤선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개인빈곤선은 개인 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름.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3-76〉 서비스보장 급여의 재산분위별 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빈곤 감소 효과(2017)

(단위: %, %포인트)

구분	연령대	시장소득	시장소득 + 돌봄 서비스	시장소득 + 보육 서비스	시장소득 + 고용 서비스	시장소득 + 전체 서비스보장		
						빈곤율	시장소득 대비 감소량	시장소득 대비 감소율
중위 소득 50% 기준	가구	0-17	100.00	96.17	100.00	100.00	96.17	3.83
		18-25	58.47	52.54	58.10	58.11	51.81	6.66
		26-39	32.36	30.56	31.28	32.30	29.35	3.01
		40-49	35.69	33.82	35.26	35.64	33.32	2.37
		50-64	42.48	41.14	42.40	42.41	40.99	1.49
		65-74	64.59	63.88	64.54	64.41	63.64	0.95
		75-	79.42	79.14	79.38	79.23	78.91	0.51
		전체	52.68	51.54	52.49	52.56	51.23	1.45
	개인	0-5	27.96	27.96	23.89	27.62	23.89	4.07
		6-11	35.04	30.98	32.54	34.84	27.67	7.37
		12-17	42.68	37.72	41.36	42.54	35.96	6.72
		18-25	38.70	35.53	38.57	38.52	35.03	3.67
		26-39	42.68	40.76	42.28	42.56	40.20	2.48
		40-49	49.65	47.93	49.42	49.57	47.61	2.04
		50-64	50.54	49.42	50.44	50.47	49.25	1.29
		65-74	64.86	64.37	64.78	64.69	64.11	0.75
		75-	67.77	67.60	67.73	67.65	67.42	0.35
		전체	56.25	55.22	56.07	56.14	54.91	1.34
중위 소득 25% 기준	가구	0-17	88.76	76.49	88.76	88.76	76.49	12.27
		18-25	48.73	42.10	48.30	48.58	41.53	7.20
		26-39	25.28	23.16	24.27	25.21	22.13	3.15
		40-49	27.98	25.79	27.57	27.91	25.31	2.67
		50-64	34.80	33.02	34.72	34.66	32.82	1.98
		65-74	56.51	55.47	56.47	55.47	54.39	2.12
		75-	74.59	74.11	74.57	72.51	72.00	2.59
		전체	45.49	44.01	45.32	44.80	43.16	2.33
	개인	0-5	19.18	19.18	14.17	19.18	14.17	5.01
		6-11	22.88	17.67	20.56	22.77	15.03	7.85
		12-17	30.17	23.88	28.29	30.05	22.28	7.89
		18-25	27.07	22.46	26.69	26.94	22.09	4.98
		26-39	32.33	29.48	31.99	32.24	29.00	3.33
		40-49	39.72	37.19	39.47	39.59	36.81	2.91
		50-64	41.24	39.49	41.18	41.11	39.30	1.94
		65-74	55.79	54.99	55.74	55.22	54.38	1.41
		75-	61.70	61.44	61.65	60.90	60.57	1.13
		전체	47.46	45.91	47.29	47.08	45.37	2.09

주: 빈곤선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함. 가구빈곤선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개인빈곤선은 개인 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다름. 가구의 연령은 세대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4절 아동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1. 아동소득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다음으로는 아동 소득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를 분석한다. 이하의 분석에서 아동은 0~17세로, 아동 가구는 0~17세 가구원이 존재하는 가구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아동 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아동 개인 대상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변수로는 시장소득 분위, 재산 분위, 지역, 가구주의 성과 연령, 아동 개인의 성과 연령을 활용한다. 시장소득 분위는 가구원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가구단위로 10등분하여 구성하였고, 재산 분위는 균등화하지 않은 가구재산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가구단위로 10등분하여 구성하였다. 이때 아동이 존재하는 가구와 존재하지 않는 가구를 모두 포함한 전체 가구를 10등분하여 분위기를 구성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의 아동 소득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분석 결과는 모두 2017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본 분석의 표본에서 아동 가구는 218,966가구, 아동 개인은 338,621명이다.

가. 아동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요

본 연구는 아동 대상 소득보장제도를 양육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타 공적이전소득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각 제도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보건복지부, 2017a, p. 327)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으로, <표 2-2-4-1>과 같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10~20만원을 지급한다(2017년 기준). 장애 아동 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구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원액을 달리하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양육수당은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보육료 지원은 서비스이므로 소득보장현황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표 2-2-4-1> 2017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100천원		
	100천원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p. 327.

둘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아동만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제도는 아니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 아동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빈곤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요 소득보장제도로 논의되어 왔다(여유진 외, 2017, pp. 122-125; 정은희·백승호·김성아, 2018, pp. 57-87).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국세청, 2017a, p. 3). 2017년 기준 지원 금액은 총급여액 등과 가구형태에 따라 상이한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77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1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23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다(국세청, 2017b, pp. 24-29).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금급여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을 포함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 43%으로, 2017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1,340,214원, 1,920,973원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17b, p. 51).

넷째, 기타 공적이전소득은 양육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 모든 소득보장제도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기타 공적이전소득에는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아동수당 등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소득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과 같이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 소득보장제도가 모두 포함된다. 가구 내에서 소득이 공유된다는 가정 하에, 예를 들어, 노인에게 지급된 공적연금이 노인과 동거하는 아동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 소득보장제도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아동의 규모 및 특성

우선 <표 2-2-4-2>에서는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로 아동 가구 비율, 가구당 아동수 평균, 아동 개인 비율을 보고하였다. 표의 수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10분위-재산 10분위의 경우, 해당 셀에 속한 전체 가구 중 아동이 존재하는 가구의 비율은 42.23%이고, 해당 셀에 속한 전체 가구의 평균 아동수는 0.65명이며, 해당 셀에 속한 전체 개인 중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9.21%이다. 표에서 보듯이, 2017년 전체 가구 중 아동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88%, 가구당 아동수는 0.40명, 전체 개인 중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6.50%이므로, 이를 소득-재산 분위별

수치와 비교하면 대략적으로 아동이 존재하는 가구의 상대적인 경제력을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10분위-재산 10분위 집단의 아동 가구 비율은 42.23%로 전체 가구의 24.88%보다 훨씬 높으므로, 높은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아동의 존재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가구 비율, 가구당 아동수 평균, 아동 개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이는 아동이 존재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아동이 존재하는 가구의 경제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표 2-2-4-2〉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 비율, 가구당 아동수 평균, 아동 개인 비율

(단위: %, 명)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아동 가구 비율	9.03	4.97	5.68	9.06	10.20	10.57	10.58	8.76
	가구당 아동수	0.14	0.08	0.09	0.15	0.16	0.17	0.17	0.14
	아동 개인 비율	10.28	5.62	5.97	8.69	9.22	9.20	8.55	9.14
3분위	아동 가구 비율	18.82	14.81	13.83	18.52	22.28	22.01	20.96	18.69
	가구당 아동수	0.29	0.24	0.22	0.30	0.37	0.36	0.34	0.30
	아동 개인 비율	15.77	11.59	10.73	12.95	15.01	14.09	12.53	14.20
4분위	아동 가구 비율	23.00	20.99	22.46	29.28	33.64	31.62	28.02	25.48
	가구당 아동수	0.37	0.34	0.37	0.48	0.56	0.53	0.45	0.41
	아동 개인 비율	17.58	14.27	14.59	17.62	19.22	17.88	14.72	17.12
5분위	아동 가구 비율	25.39	20.63	24.75	32.09	34.77	31.30	29.34	27.74
	가구당 아동수	0.40	0.33	0.39	0.53	0.57	0.51	0.48	0.44
	아동 개인 비율	17.64	12.68	14.50	17.96	18.56	16.47	15.10	16.96
6분위	아동 가구 비율	25.06	21.51	26.87	35.02	38.58	35.65	32.42	29.37
	가구당 아동수	0.40	0.34	0.44	0.57	0.64	0.59	0.54	0.48
	아동 개인 비율	17.66	12.97	15.64	19.06	20.32	18.34	16.40	17.82
7분위	아동 가구 비율	25.38	23.64	29.91	39.07	44.50	43.72	40.43	32.86
	가구당 아동수	0.40	0.37	0.48	0.64	0.75	0.73	0.69	0.54
	아동 개인 비율	17.73	13.77	16.86	20.65	22.80	21.64	19.91	19.40
8분위	아동 가구 비율	24.17	28.14	27.97	38.03	47.97	48.84	47.26	34.69
	가구당 아동수	0.37	0.46	0.43	0.60	0.78	0.81	0.80	0.56
	아동 개인 비율	16.99	16.21	15.10	19.26	23.42	23.36	22.27	19.74
9분위	아동 가구 비율	21.81	24.89	23.20	29.94	42.25	46.70	48.58	33.03
	가구당 아동수	0.32	0.37	0.34	0.45	0.66	0.74	0.79	0.51
	아동 개인 비율	15.16	13.69	12.32	14.80	20.23	21.56	21.90	18.03
10분위	아동 가구 비율	21.46	25.42	21.34	21.03	30.10	37.06	42.23	30.39
	가구당 아동수	0.32	0.37	0.31	0.30	0.45	0.57	0.65	0.46
	아동 개인 비율	14.48	13.96	11.90	11.02	15.39	17.90	19.21	16.37
전체	아동 가구 비율	19.66	16.60	19.14	27.62	33.99	35.02	35.44	24.88
	가구당 아동수	0.31	0.26	0.30	0.44	0.55	0.57	0.57	0.40
	아동 개인 비율	15.65	12.02	12.89	16.43	18.99	18.71	18.04	16.50

주: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로, 첫 번째 행은 해당 셀의 전체 가구 중 아동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두 번째 행은 해당 셀의 아동이 없는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아동수 평균을, 세 번째 행은 해당 셀의 전체 개인 중 아동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3〉 25~64세 가구주 가구의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 비율, 가구당 아동수 평균, 아동 개인 비율
(단위: %, 명)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아동 가구 비율	13.13	11.25	13.54	20.29	22.79	24.05	24.09	15.05
	가구당 아동수	0.21	0.18	0.22	0.34	0.37	0.39	0.40	0.24
	아동 개인 비율	14.60	11.96	13.33	17.97	19.02	19.12	18.00	15.44
3분위	아동 가구 비율	25.02	23.50	24.59	31.16	34.63	34.09	31.42	27.18
	가구당 아동수	0.40	0.39	0.40	0.50	0.58	0.56	0.52	0.44
	아동 개인 비율	19.67	16.55	16.95	19.55	21.13	20.12	17.58	19.31
4분위	아동 가구 비율	27.00	25.19	28.74	36.68	41.13	39.72	36.10	30.76
	가구당 아동수	0.43	0.42	0.47	0.61	0.68	0.67	0.58	0.50
	아동 개인 비율	20.09	16.96	18.13	21.25	22.75	21.61	18.14	20.21
5분위	아동 가구 비율	28.88	24.22	30.21	38.89	41.60	38.14	36.67	32.57
	가구당 아동수	0.45	0.38	0.48	0.64	0.68	0.63	0.61	0.52
	아동 개인 비율	19.64	14.60	17.24	21.01	21.57	19.51	18.17	19.53
6분위	아동 가구 비율	27.79	24.74	30.75	39.93	43.52	41.34	38.21	33.10
	가구당 아동수	0.44	0.39	0.50	0.65	0.73	0.69	0.64	0.54
	아동 개인 비율	19.23	14.61	17.74	21.40	22.47	20.90	18.92	19.83
7분위	아동 가구 비율	27.51	26.07	32.83	42.77	48.28	48.07	46.07	35.85
	가구당 아동수	0.43	0.41	0.53	0.71	0.81	0.81	0.79	0.59
	아동 개인 비율	19.00	15.14	18.56	22.49	24.53	23.55	22.38	21.05
8분위	아동 가구 비율	25.54	30.20	30.45	40.63	51.12	52.17	52.19	37.01
	가구당 아동수	0.39	0.49	0.47	0.65	0.84	0.87	0.89	0.60
	아동 개인 비율	17.88	17.38	16.51	20.59	24.82	24.85	24.39	21.05
9분위	아동 가구 비율	22.75	26.38	24.61	31.41	44.29	48.99	52.17	34.68
	가구당 아동수	0.34	0.39	0.37	0.47	0.70	0.78	0.85	0.54
	아동 개인 비율	15.79	14.54	13.15	15.58	21.16	22.59	23.38	18.96
10분위	아동 가구 비율	22.53	26.09	22.05	21.64	30.91	38.11	44.13	31.59
	가구당 아동수	0.33	0.37	0.32	0.31	0.46	0.58	0.68	0.48
	아동 개인 비율	15.17	14.25	12.32	11.34	15.83	18.40	19.98	16.98
전체	아동 가구 비율	23.63	23.26	26.67	35.15	41.50	42.51	43.42	30.73
	가구당 아동수	0.37	0.37	0.42	0.57	0.68	0.69	0.71	0.49
	아동 개인 비율	17.94	15.16	16.35	19.53	21.84	21.48	20.90	19.25

주: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로, 첫 번째 행은 해당 셀의 전체 가구 중 아동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두 번째 행은 해당 셀의 아동이 없는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아동수 평균을, 세 번째 행은 해당 셀의 전체 개인 중 아동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런데 〈표 2-2-4-2〉의 분석에는 아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동시에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 가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존재와 소득 및 재산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표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1~2분위의 아동 가구 비율이 8.76%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부분적으로 아동이 존재하지 않는 노인 가구가 소득 1~2분위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표 2-2-4-3〉에서는 25~64세 가구주 가구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하였다. 분석 결과, <표 2-2-4-2>에 비해 <표 2-2-4-3>에서 소득 수준과 아동의 존재 간 양의 상관관계가 다소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아동 가구 비율, 가구당 아동수, 아동 개인 비율이 높은 관계가 관찰되었다. 또한 재산과 아동의 존재 간 상관관계도 대체로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과 재산 등의 경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확률이 높은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 가구 비율, 가구당 아동수, 아동 개인 비율이 단조증가하지는 않았는데, 대체로 소득 8분위에 아동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득-재산 분위 중 아동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집단은 소득 8분위-재산 10분위로, 해당 분위에 속한 가구의 52.19%에 아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소득 1~2분위-재산 5분위였다(11.25%).

<표 2-2-4-4> 아동 가구의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 분포

(단위: %)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4.34	0.15	0.58	0.62	0.59	0.56	0.55	7.39
3분위	3.54	0.16	0.64	0.67	0.67	0.59	0.49	6.77
4분위	4.91	0.22	0.96	1.18	1.19	1.02	0.76	10.24
5분위	4.98	0.20	1.08	1.47	1.41	1.12	0.90	11.15
6분위	4.80	0.20	1.12	1.66	1.70	1.34	0.98	11.80
7분위	4.64	0.20	1.19	1.89	2.11	1.86	1.33	13.21
8분위	4.08	0.22	0.99	1.81	2.47	2.40	1.98	13.94
9분위	3.35	0.16	0.70	1.26	2.27	2.75	2.80	13.28
10분위	2.93	0.13	0.44	0.54	1.27	2.49	4.41	12.22
계	37.58	1.63	7.70	11.10	13.67	14.12	14.20	100.00

주: 아동 가구 중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2>와 <표 2-2-4-3>에서 소득-재산 분위별로 아동 가구 비율을 살펴보았다면, <표 2-2-4-4>에서는 아동 가구 중에서 각 소득-재산 분위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아동 가구를 100%로 할 때 각 소득-재산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재산 7, 8, 9, 10분위 비율이 각각 11.10%, 13.67%, 14.12%, 14.20%로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가구에 비해 아동 가구의 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 4, 5, 6, 7, 8, 9, 10분위 비율이 각각 10%를 넘고, 특히 7, 8, 9분위의 비율이 각각 13%대로 높게 나타나 아동 가구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 10분위-재산 10분위 집단의 비율이 4.41%로 상당히 높다는 사실도 언급해둘만 하다.

<표 2-2-4-5>와 <표 2-2-4-6>에는 아동 가구 및 개인의 몇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보고하였다. 아동이 존재하는 가구 중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는 79.05%였고,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 40~49세인 가구가 각각 32.03%, 49.88%를 차지하였다.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51.90%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는 5.24%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아동 개인 중에서는 남성 아동이 51.87%를 차지하였고, 0~5세, 6~11세, 12~17세 아동의 비율이 각각 30.36%, 33.31%, 36.33%로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5〉 아동 가구의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가구주 성	남성	79.05
	여성	20.95
	계	100.00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32.03
	40~49세	49.88
	50~64세	13.96
	65세 이상	4.13
	계	100.00
지역	대도시	42.87
	중소도시	51.90
	농어촌	5.24
	계	100.00

주: 아동 가구 중 각 범주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6〉 아동 개인의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개인 성	남성	51.87
	여성	48.13
	계	100.00
개인 연령	0~5세	30.36
	6~11세	33.31
	12~17세	36.33
	계	100.00

주: 아동 개인 중 각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 아동의 소득분포

다음으로는 아동 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평균을 살펴보았다. 〈표 2-2-4-7〉에서 보듯이, 전체 아동 가구의 시장소득 평균은 2,860만원/년, 가처분소득 평균은 2,754만원/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 가구가 평균적으로 공적이전으로부터의 소득보다 세금 지출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1~7분위는 시장소득 평균보다 가처분소득 평균이 높아 세금 지출보다 많은 공적이전소득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즉, 아동 가구 중 시장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 약 40%이므로(〈표 2-2-4-4〉), 아동 가구의 약 60%는 조세와 공적이

전을 통해 소득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표 2-2-4-7>에서는 소득과 재산의 양의 상관관계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 1~7분위의 시장소득 평균은 2,224~2,358만원/년으로 대체로 비슷하지만, 재산 8, 9, 10분위의 시장소득 평균은 각각 2,830만원/년, 3,451만원/년, 4,660만원/년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4-7>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단위: 만원/년)

구분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시장소득 평균	1-2분위	0	0	0	0	0	0	0	0
	3분위	133	133	143	143	138	136	125	135
	4분위	618	614	628	634	626	632	633	624
	5분위	1216	1204	1226	1225	1228	1227	1222	1221
	6분위	1862	1865	1860	1876	1881	1873	1876	1869
	7분위	2540	2549	2542	2543	2550	2568	2565	2549
	8분위	3346	3343	3341	3341	3363	3374	3383	3358
	9분위	4476	4482	4448	4433	4461	4511	4548	4490
	10분위	8987	8737	8145	7437	7158	7570	9043	8426
	전체	2270	2346	2224	2358	2830	3451	4660	2860
가처분소득 평균	1-2분위	193	220	188	135	160	168	202	185
	3분위	318	346	311	280	265	267	302	303
	4분위	762	789	795	752	731	751	785	762
	5분위	1314	1315	1334	1319	1321	1319	1338	1320
	6분위	1926	1961	1942	1947	1953	1947	1974	1941
	7분위	2570	2606	2580	2579	2590	2608	2634	2587
	8분위	3309	3313	3320	3315	3327	3334	3352	3324
	9분위	4303	4314	4298	4278	4287	4323	4349	4311
	10분위	7610	7515	7084	6672	6425	6732	7676	7270
	전체	2226	2326	2229	2357	2773	3300	4234	2754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균등화한 후 가구단위 평균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8>에서 아동 가구의 특성별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평균을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 40~49세 가구주, 대도시 거주 가구의 시장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집단 간 소득 격차는 조세와 공적이전이 반영된 후 다소 축소되는데, 예를 들어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시장소득 기준 1,183만원/년에서 가처분소득 기준 1,045만원/년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표 2-2-4-9>를 살펴보면, 아동 개인의 성과 연령에 따른 소득 격차는 가구주 특성과 지역에 따른 소득 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아동과 여성 아동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평균은 거의 유사하였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장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지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연령과 소득의 정적 관계가 대체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와 공적이전이 반영된 후 아동 연령에 따른 소득 격차가 축소되

는 이유는 주로 0~5세 아동이 양육수당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2-2-4-8>과 <표 2-2-4-9>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조세와 공적이전이 아동 가구 및 개인의 집단 간 소득 격차를 축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4-8> 아동 가구의 특성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단위: 만원/년)

구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가구주 성	남성	3108	2973
	여성	1925	1928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2670	2632
	40~49세	3072	2894
	50~64세	2881	2748
	65세 이상	1707	2036
지역	대도시	3082	2925
	중소도시	2780	2699
	농어촌	1840	1905
전체		2860	2754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균등화한 후 가구단위 평균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9> 아동 개인의 특성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평균

(단위: 만원/년)

구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개인 성	남성	2830	2721
	여성	2801	2697
개인 연령	0~5세	2728	2697
	6~11세	2816	2690
	12~17세	2889	2738
전체		2816	2710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 평균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라. 아동의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

다음으로는 아동 가구의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표 2-2-4-10>에서는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로 아동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 실태를 보고하였다. 표에 보고한 수치 중 수급률은 각 소득·재산 분위에 속한 가구 중 양육수당을 받은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고, 급여 평균은 양육수당을 받은 가구의 양육수당 평균을 의미한다. 즉, 표에 보고한 급여 평균은 양육수당의 대략적인 급여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고, 수급률과 급여 평균의 곱은 양육수당을 받지 않은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양육수당 평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 급여 평균은 가구원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이므로, 실제 양육수당의 아동 1인당 급여와는 차이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2-2-4-10〉의 분석결과는 양육수당이 보편적 정액급여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득-재산 분위별로 양육수당의 수급률은 대체로 20%대로, 급여 평균은 대체로 약 70만원/년 전후로 나타나 분위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득 6~7분위 또는 재산 1~4분위의 수급률이 20%대 중후반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된다. 원칙적으로 양육수당의 수급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주로 소득-재산에 따른 보육 서비스 이용 패턴과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연령 및 소득-재산 변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급여 평균을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과 재산이 증가할수록 급여 평균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특히 소득이 1~2분위이고 재산이 1~5분위인 저소득-저자산 계층의 양육수당 급여 평균이 80만원/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집단의 가구원수가 작아 균등화에 따른 급여 감소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양육수당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균등화 급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저소득-저자산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되는 경향이 관찰되는 것이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수당의 수급률은 소득 6~7분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반드시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수급률과 평균을 곱한 통계량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수당은 소득 6~8분위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10〉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수급률	21.15	19.05	21.37	22.05	21.07	23.75	21.35	21.41
	평균	80	85	74	76	73	75	71	77
3분위	수급률	19.60	13.65	16.40	17.88	19.12	17.46	20.84	18.84
	평균	75	68	71	71	73	69	65	73
4분위	수급률	21.41	20.94	17.32	19.07	18.56	18.18	19.28	19.94
	평균	73	68	68	71	69	68	70	71
5분위	수급률	22.48	20.50	17.00	21.08	19.47	19.53	22.03	21.02
	평균	75	67	71	73	70	66	68	72
6분위	수급률	29.49	24.97	22.79	24.71	24.68	23.68	22.98	26.21
	평균	75	72	74	72	73	72	69	73
7분위	수급률	32.65	25.29	21.71	25.83	26.50	25.54	24.63	27.79
	평균	76	75	71	73	72	71	67	73
8분위	수급률	31.31	23.73	19.29	19.74	21.19	20.47	22.00	23.86
	평균	74	67	70	71	70	68	65	71
9분위	수급률	28.32	17.27	16.03	16.16	16.35	16.64	17.35	19.62
	평균	72	70	71	67	65	65	65	68
10분위	수급률	26.70	24.98	20.08	18.08	14.46	14.34	16.00	18.40
	평균	70	63	74	65	67	63	64	67
전체	수급률	25.88	21.34	19.27	21.16	20.50	19.38	19.32	22.19
	평균	75	71	71	72	70	68	66	72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곱

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11〉에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수급률과 급여 평균을 살펴보았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공공부조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표에서 보듯이 소득과 재산이 작을수록 수급률과 급여 평균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산 1~7분위의 수급률은 각각 20%를 넘지만 8, 9, 10분위의 수급률은 각각 7.50%, 1.75%, 0.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 3~6분위의 수급률이 각각 대체로 30%를 넘지만 7, 8, 9, 10분위의 수급률은 각각 5.99%, 1.61%, 0.63%, 0.17%로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시장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소득 1~2분위의 경우 수급률이 4.68%로 상당히 낮았는데, 이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급률뿐만 아니라 급여 평균 역시 저소득·저자산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패턴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전체 아동 가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급여 평균은 52만원/년인데, 소득이 1~4분위이고 재산이 1~6분위인 가구의 급여 평균은 65~94만원/년으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2-2-4-11〉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수급률	5.36	6.39	7.38	6.96	2.14	0.84	0.17	4.68
	평균	85	86	72	45	28	26	13	75
3분위	수급률	48.48	50.03	50.86	43.00	17.77	4.43	0.93	37.88
	평균	74	72	65	42	29	32	52	67
4분위	수급률	53.02	54.82	54.17	44.85	21.47	4.66	1.32	39.92
	평균	94	89	83	47	27	35	31	82
5분위	수급률	51.70	50.65	52.98	44.19	20.02	6.10	1.45	38.19
	평균	52	50	45	27	20	21	19	45
6분위	수급률	41.03	38.48	43.22	36.36	16.14	5.81	0.78	29.61
	평균	24	27	23	13	10	9	19	21
7분위	수급률	9.02	12.57	10.52	7.93	2.63	0.67	0.35	5.99
	평균	24	27	26	13	10	10	27	21
8분위	수급률	2.57	4.05	4.01	2.63	0.68	0.15	0.15	1.61
	평균	32	32	29	23	31	11	40	29
9분위	수급률	0.81	2.15	2.23	1.51	0.40	0.15	0.20	0.63
	평균	26	19	32	23	11	30	45	26
10분위	수급률	0.18	1.05	0.69	0.67	0.15	0.12	0.05	0.17
	평균	39	10	33	23	23	40	25	31
전체	수급률	25.69	26.21	27.67	21.03	7.50	1.75	0.36	15.87
	평균	61	60	51	29	20	21	29	52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급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음영으로 표시한 셀은 수급가구가 30개 미만인 셀로, 수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12〉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실태를 보고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빈곤층을 강하게 표적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적 성격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전체 아동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2.63%에 불과하지만, 소득 1~2분위와 3분위의 수급률은 각각 14.36%, 9.54%였고, 재산 1~4분위, 5분위의 수급률은 각각 5.69%, 5.72%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소득 및 재산과 수급률의 부적 관계가 나타나는데, 특히 시장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을 상당히 강하게 설명한다. 소득-재산 분위 중 가장 수급률이 높은 집단은 소득이 1~2분위이고 재산이 1~5분위인 집단으로, 이들의 수급률은 20%를 넘는다. 한편, 보충급여방식을 따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으로 구성된 소득인정액과 급여기준선의 차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률뿐만 아니라 급여 평균 역시 소득 및 재산과 부적 관계를 갖는다.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의 급여 평균이 562만원/년으로 가장 높았고 소득 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산 1~4분위의 급여 평균이 446만원/년으로 가장 높았고 재산 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감소하였다. 수급률이 가장 높은 소득 1~2분위-재산 1~5분위는 급여 평균 역시 500만원/년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양육수당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비교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반적인 수급률은 매우 낮지만 수급집단의 급여 수준이 높고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 2-2-4-12〉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수급률	21.00	23.48	13.04	3.72	1.86	0.77	0.22	14.36
	평균	578	504	487	401	390	284	663	562
3분위	수급률	15.53	15.47	6.55	2.34	1.27	0.42	0.40	9.54
	평균	457	398	371	381	395	335	253	446
4분위	수급률	7.86	8.06	3.23	1.47	0.43	0.51	0.46	4.55
	평균	292	301	254	250	228	380	219	288
5분위	수급률	3.64	5.11	2.07	0.78	0.63	0.17	0.34	2.14
	평균	208	222	236	182	375	328	210	217
6분위	수급률	1.37	1.77	1.10	0.54	0.49	0.42	0.33	0.91
	평균	218	217	246	289	224	303	376	237
7분위	수급률	0.48	0.52	0.57	0.36	0.23	0.22	0.16	0.36
	평균	223	202	249	222	299	287	177	237
8분위	수급률	0.36	0.00	0.40	0.34	0.21	0.21	0.02	0.25
	평균	214	-	234	230	160	188	359	209
9분위	수급률	0.16	0.00	0.28	0.23	0.18	0.23	0.11	0.18
	평균	324	-	267	243	241	195	148	237
10분위	수급률	0.06	0.00	0.11	0.00	0.00	0.04	0.09	0.06
	평균	81	-	114	-	-	392	233	211
전체	수급률	5.69	5.72	2.55	0.83	0.41	0.25	0.16	2.63
	평균	446	392	365	302	309	281	259	426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급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음영으로 표시한 셀은 수급가구가 30개 미만인 셀로, 수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13〉에는 양육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한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수급 실태를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아동 가구의 기타 공적이전 수급률은 22.04%, 급여 평균은 291만원/년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률을 나타내지만, 재산과 수급률의 관계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한편 재산 분위가 증가할수록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이 증가하는 관계가 관찰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재산 수준이 높은 중고령자가 공적연금과 같은 소득비례적 성격의 급여를 많이 받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표 2-2-4-13〉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의 기타 공적이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수급률	23.67	34.77	33.47	28.06	26.70	26.13	28.02	25.79
	평균	213	230	311	359	516	572	679	327
3분위	수급률	27.12	40.38	33.33	28.11	27.43	28.48	32.37	28.66
	평균	231	263	298	349	385	427	548	309
4분위	수급률	25.65	32.92	31.90	27.37	26.82	28.63	35.58	27.77
	평균	227	275	329	303	340	391	441	298
5분위	수급률	23.92	32.92	28.45	26.14	26.99	28.90	33.46	26.47
	평균	232	211	270	295	323	335	387	282
6분위	수급률	20.01	27.76	27.13	24.34	24.29	27.22	31.17	23.79
	평균	240	297	256	265	300	309	403	282
7분위	수급률	17.72	29.78	22.97	20.76	22.53	23.80	28.09	21.47
	평균	244	245	254	255	271	306	414	283
8분위	수급률	17.19	23.47	22.02	20.48	18.78	20.39	22.58	19.65
	평균	238	235	259	249	262	273	373	273
9분위	수급률	15.53	21.84	19.61	16.10	15.58	16.87	19.88	17.07
	평균	265	209	266	255	261	270	356	286
10분위	수급률	12.48	20.09	16.17	17.11	13.01	13.64	15.54	14.29
	평균	278	257	263	250	239	268	345	296
전체	수급률	20.78	29.49	26.30	22.82	21.28	21.44	22.91	22.04
	평균	236	249	280	282	305	322	402	291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급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14〉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을 모두 합산한 전체 공적이전소득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 가구의 공적이전 수급률은 47.82%, 급여 평균은 208만원/년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 가구의 절반은 연간 약 200만원의 공적이전소득을 받는 것이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시장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소득 1~2분위의 수급률이 51.81%였고, 3~5분위의 수급률은 각각 60%대 초중반이었으며, 6~10분위 구간에서는 소득 분위가 증가할수록 수급률이 낮아져 10분위의 수급률이 28.31%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공적이전소득의 급여 평균 역시 소득 1~2분위와 3분위가 각각 358만원/년, 264만원/년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수급률과 급여 평균이 증가하는 관계가 관찰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공적이전 체계가 아동 가구의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산 8~10분위의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재산과 급여 평균의 관계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다.

〈표 2-2-4-14〉 시장소득 및 재산 분위별 아동 가구의 전체 공적이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수급률	54.11	58.32	57.11	50.75	45.21	44.77	41.88	51.81
	평균	357	377	331	268	356	379	494	358
3분위	수급률	70.64	75.56	71.80	66.56	52.57	42.43	45.38	64.39
	평균	261	282	235	207	247	322	424	264
4분위	수급률	71.02	74.55	73.04	65.83	51.57	43.28	46.24	63.84
	평균	207	238	232	184	215	296	371	223
5분위	수급률	69.70	74.35	70.19	65.48	50.80	44.74	46.83	62.54
	평균	154	161	167	161	211	249	311	179
6분위	수급률	65.20	65.38	67.23	62.83	50.85	46.13	46.01	59.24
	평균	127	175	147	141	184	223	310	160
7분위	수급률	49.04	53.47	44.67	44.73	43.91	43.03	44.64	45.99
	평균	146	181	174	165	184	213	298	181
8분위	수급률	42.77	42.27	37.55	36.67	35.22	35.96	38.63	38.51
	평균	153	171	193	181	183	194	255	186
9분위	수급률	37.42	35.88	31.63	28.36	27.74	29.43	32.29	31.85
	평균	166	162	205	186	187	194	255	197
10분위	수급률	33.34	37.96	31.81	30.94	24.27	24.68	27.24	28.31
	평균	161	178	182	177	168	185	235	193
전체	수급률	56.40	58.57	55.45	50.25	40.54	36.44	36.20	47.82
	평균	194	216	200	175	202	229	291	208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급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음으로 〈표 2-2-4-15〉에는 아동 가구의 특성별로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가구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의 양육수당 수급률(17.51%)이 남성 가구주보다(23.43%)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가구주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기보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가구주의 수급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은 남성 가구주가 1.47%에 불과한 반면 여성 가구주는 7.0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 공적이전의 수급률과 급여 평균은 남성 가구주보다(46.11%, 200만원/년) 여성 가구주가(54.29%, 232만원/년) 높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여성 가구주가 공적이전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낮을 가능성이 큰 39세 이하 가구주의 양육수당 수급률이 49.12%로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전체 공적이전 수급률 역시 65.0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40~49세, 50~64세 가구주의 경우 양육수당 수급률이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전체 공적이전 수급률은 각각 34.15%, 43.30%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기타 공적이전 수급률이 93.31%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주로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4-16〉에는 아동 개인의 특성별로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를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남성 아동과 여성 아동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8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의 수급률이 0~5세 61.51%, 6~11세 10.32%, 12~17세 1.42%로 연령 집단 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소득보장제도의 집단 간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다만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은 눈에 띈다.

〈표 2-2-4-15〉 아동 가구의 특성별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구분			수급률	평균
가구주 성	남성	양육수당	23.43	7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4.17	4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47	392
		기타 공적이전	20.49	309
		전체 공적이전	46.11	200
	여성	양육수당	17.51	7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2.28	6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01	452
		기타 공적이전	27.89	240
		전체 공적이전	54.29	232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양육수당	49.12	7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8.20	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82	470
		기타 공적이전	19.35	256
		전체 공적이전	65.03	160
	40~49세	양육수당	9.15	6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4.12	5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32	398
		기타 공적이전	16.45	239
		전체 공적이전	34.15	182
	50~64세	양육수당	7.96	6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7.19	5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82	444
		기타 공적이전	27.10	310
		전체 공적이전	43.30	275
	65세 이상	양육수당	18.98	6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4.46	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41	400
		기타 공적이전	93.31	438
		전체 공적이전	94.76	473
지역	대도시	양육수당	23.13	7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4.63	5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86	439
		기타 공적이전	22.32	299
		전체 공적이전	47.86	216
	중소도시	양육수당	21.60	7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6.14	5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29	418
		기타 공적이전	21.13	284
		전체 공적이전	46.89	199
	농어촌	양육수당	20.31	7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3.46	5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24	399
		기타 공적이전	28.73	288
		전체 공적이전	56.80	225
전체		양육수당	22.19	7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5.87	5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63	426
		기타 공적이전	22.04	291
		전체 공적이전	47.82	208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가구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급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16〉 아동 개인의 특성별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및 수급집단의 급여 평균

(단위: %, 만원/년)

구분			수급률	평균
개인 성	남성	양육수당	22.20	7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5.46	5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58	431
		기타 공적이전	21.25	283
		전체 공적이전	47.04	202
	여성	양육수당	23.09	7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5.58	5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61	432
		기타 공적이전	21.29	282
		전체 공적이전	47.65	201
개인 연령	0~5세	양육수당	61.51	7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6.52	4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39	458
		기타 공적이전	22.94	300
		전체 공적이전	73.65	174
	6~11세	양육수당	10.32	5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4.69	5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34	427
		기타 공적이전	20.46	285
		전체 공적이전	38.49	213
	12~17세	양육수당	1.42	47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5.44	5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83	426
		기타 공적이전	20.61	264
		전체 공적이전	33.45	240
전체		양육수당	22.63	7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5.52	5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59	432
		기타 공적이전	21.27	282
		전체 공적이전	47.33	201

주: 각 셀에 해당하는 개인이 속한 가구의 급여가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과 균등화한 급여의 평균을 개인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급여 평균은 급여가 0원인 사례를 제외한 평균을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마. 아동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다음으로는 아동 가구 및 개인의 빈곤율과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표 2-2-4-17〉에는 아동 가구의 특성별로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을 보고하였다.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와 25%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아동 가구의 빈곤율은 각각 21.01%, 12.93%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 중고령 가구주, 농어촌 거주 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구 특성별로 빈곤위험에 작지 않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앞서 〈표 2-2-4-8〉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고령자인 아동 가구,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빈곤위험도 상대적으로 크다. 한편 〈표 2-2-4-17〉에서 아동

가구 중 빈곤한 가구의 비율을 보고한 것과 달리, <표 2-2-4-18>에서는 아동 개인 중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을 보고하였다. 전체 아동의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 25.52%, 중위소득 25% 기준 14.73%로 나타났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남성 아동과 여성 아동의 빈곤율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17> 아동 가구 가처분소득 빈곤율

(단위: %)

구분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가구주 성	남성	16.41	9.55
	여성	38.38	25.65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19.58	12.51
	40~49세	20.32	12.62
	50~64세	23.38	13.53
	65세 이상	32.41	17.73
지역	대도시	20.62	12.75
	중소도시	20.17	12.22
	농어촌	32.55	21.30
전체		21.01	12.93

주: 아동 가구 빈곤율은 아동이 존재하는 가구 중 빈곤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구단위 중위값의 50%/25%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가처분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18> 아동 개인 가처분소득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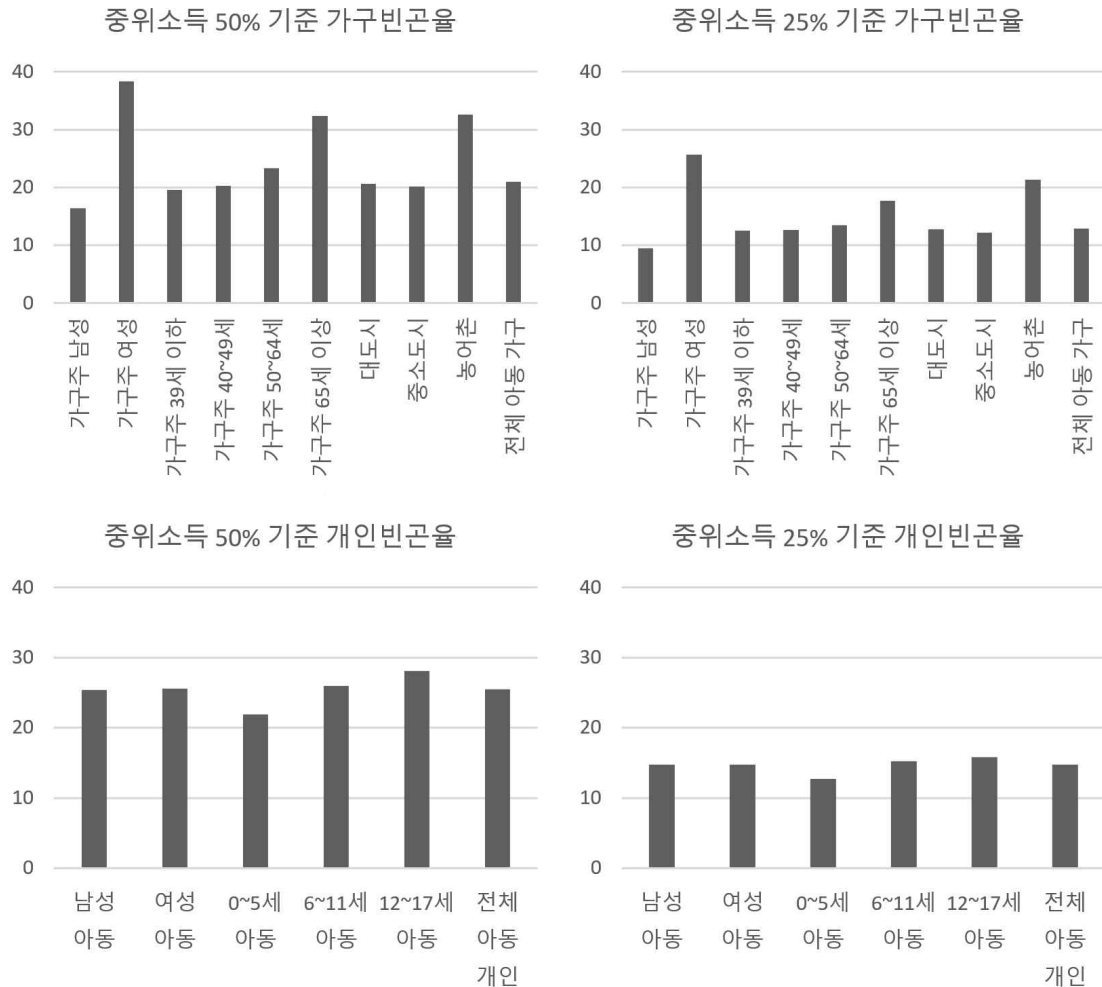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개인 성	남성	25.44	14.73
	여성	25.61	14.72
개인 연령	0~5세	21.94	12.77
	6~11세	25.97	15.26
	12~17세	28.10	15.87
전체		25.52	14.73

주: 아동 개인 빈곤율은 아동 개인 중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개인의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25%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가처분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2-2-4-1] 아동 가구 및 개인 가처분소득 빈곤율



주: <표 2-2-4-17>과 <표 2-2-4-18>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아동 가구 빈곤율은 아동이 존재하는 가구 중 빈곤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구단위 중위값의 50%/25%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아동 개인 빈곤율은 아동 개인 중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개인의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25%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가처분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음으로 <표 2-2-4-19>에는 소득보장제도가 아동 가구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표의 수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전체 아동 가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장소득의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은 23.77%이고, 시장소득에 양육수당을 합산한 소득의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은 23.52%이다. 따라서 양육수당이 아동 가구의 빈곤율을 23.77%에서 23.52%로 0.25%p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아동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률이 22.19%로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표 2-2-4-10>) 빈곤감소효과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은 양육수당의 급여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고 보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나머지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타

공적이전소득, 전체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을 0.57%p, 0.40%p, 1.49%p, 2.91%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보다 상대적으로 선별적 성격이 강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아동 가구의 수급률과 급여 평균이(15.87%, 52만원/년, <표 2-2-4-11>) 모두 양육수당보다(22.19%, 72만원/년, <표 2-2-4-10>) 작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가구의 빈곤율을 더 크게 감소시켰다. 선별적 성격이 가장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수급률이 2.6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표 2-2-4-12>) 중위소득 50%, 25% 기준 빈곤율을 각각 0.40%p, 1.17%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극빈을 완화하는 효과가 비교적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중위소득 50%, 25% 기준 각각 1.49%p, 1.44%p)가 양육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제도 등과 같이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소득보장제도 역시 아동빈곤 감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2-2-4-19>에는 가구 특성별 빈곤감소효과를 함께 보고하였다. 우선 가구주 성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여성 가구주의 빈곤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공적이전소득이 아동 가구의 가구주 성별 빈곤 격차를 축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감소효과가 남성 가구주는 각각 0.46%p, 0.21%p인 반면, 여성 가구주는 각각 1.01%p, 1.12%p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는 <표 2-2-4-1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남성 가구주보다 여성 가구주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공적이전소득은 남성 가구주의 빈곤율을 2.39~2.40%p 감소시킨 반면, 여성 가구주의 중위소득 50%와 25% 기준 빈곤율을 각각 4.86%p, 7.03%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양육수당의 빈곤감소효과는 양육수당 수급률이 가장 높은 39세 이하 가구주에게(<표 2-2-4-15>) 가장 크게 나타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높은 50~64세와 65세 이상 가구주에게(<표 2-2-4-15>)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기타 공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중위소득 50%, 25% 기준 각각 11.63%p, 13.55%p 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소득보장제도별 빈곤감소효과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농어촌의 경우 대도시/중소도시에 비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기타 공적이전소득 수급률이 대도시/중소도시보다 높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표 2-2-4-15>).

〈표 2-2-4-19〉 아동 가구 특성별 소득보장제도의 아동 가구 빈곤율 감소효과

(단위: %, %p)

구분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가구주 성	남성	시장소득	18.66		11.91	
		시장소득+양육수당	18.42	-0.24	11.69	-0.22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18.20	-0.46	11.52	-0.39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18.45	-0.21	11.35	-0.56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17.30	-1.36	10.68	-1.23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16.27	-2.39	9.51	-2.40
	여성	시장소득	43.07		32.59	
		시장소득+양육수당	42.77	-0.30	32.34	-0.26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42.06	-1.01	31.61	-0.98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41.94	-1.12	29.15	-3.45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41.08	-1.99	30.36	-2.23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38.21	-4.86	25.56	-7.03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시장소득	22.03		15.27	
		시장소득+양육수당	21.47	-0.56	14.80	-0.47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21.42	-0.61	14.67	-0.60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21.70	-0.33	14.35	-0.92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21.07	-0.97	14.50	-0.77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19.49	-2.55	12.48	-2.79
	40~49세	시장소득	22.17		14.82	
		시장소득+양육수당	22.08	-0.09	14.73	-0.10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21.62	-0.54	14.35	-0.48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21.81	-0.36	13.89	-0.94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21.31	-0.86	14.08	-0.75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20.16	-2.00	12.58	-2.25
	50~64세	시장소득	27.11		18.14	
		시장소득+양육수당	27.01	-0.10	18.04	-0.10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26.44	-0.66	17.60	-0.54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26.40	-0.71	15.96	-2.18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25.12	-1.99	16.27	-1.87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23.20	-3.90	13.45	-4.69
	65세 이상	시장소득	45.44		34.54	
		시장소득+양육수당	45.08	-0.36	34.23	-0.31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45.10	-0.35	34.19	-0.35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44.98	-0.46	32.18	-2.37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33.81	-11.63	20.99	-13.55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32.16	-13.28	17.57	-16.97

〈표 2-2-4-19〉 아동 가구 특성별 소득보장제도의 아동 가구 빈곤율 감소효과(이어서)

(단위: %, %p)

구분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지역	대도시	시장소득	23.43		16.15	
		시장소득+양육수당	23.15	-0.28	15.92	-0.23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22.89	-0.55	15.68	-0.47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22.97	-0.46	14.85	-1.30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21.94	-1.49	14.71	-1.44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20.47	-2.97	12.68	-3.47
	중소도시	시장소득	22.74		15.24	
		시장소득+양육수당	22.50	-0.24	15.02	-0.22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22.17	-0.56	14.72	-0.52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22.39	-0.35	14.25	-0.99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21.32	-1.42	13.92	-1.32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20.03	-2.71	12.19	-3.05
	농어촌	시장소득	36.84		26.98	
		시장소득+양육수당	36.64	-0.20	26.68	-0.30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35.92	-0.93	26.08	-0.90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36.37	-0.48	25.17	-1.81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34.57	-2.27	24.29	-2.69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32.44	-4.40	21.27	-5.71
전체		시장소득	23.77		16.24	
		시장소득+양육수당	23.52	-0.25	16.02	-0.23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23.20	-0.57	15.73	-0.52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23.37	-0.40	15.08	-1.17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22.28	-1.49	14.80	-1.44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20.87	-2.91	12.88	-3.37

주: 시장소득에 양육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타 공적이전소득, 전체 공적이전소득을 각각 합산한 후 빈곤율을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의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25%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아동 가구 빈곤율은 아동이 존재하는 가구 중 빈곤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구단위 중위값의 50%/25%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우측의 수치는 시장소득 빈곤율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마지막으로 〈표 2-2-4-20〉에는 아동 개인 특성별로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보고하였다. 우선 전체 아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양육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타 공적이전소득, 전체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을 0.25%p, 0.40%p, 0.20%p, 1.41%p, 2.46%p 감소시켰고, 중위소득 25%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가 1.05%p로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표 2-2-4-19〉에서 살펴본 아동 가구의 빈곤감소효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아동 성별 빈곤감소효과는 거의 유사하였고, 양육수당 수급률이 높은 0~5세의(〈표 2-2-4-16〉) 양육수당 빈곤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12~17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2-2-4-20〉 아동 개인 특성별 소득보장제도의 아동 개인 빈곤율 감소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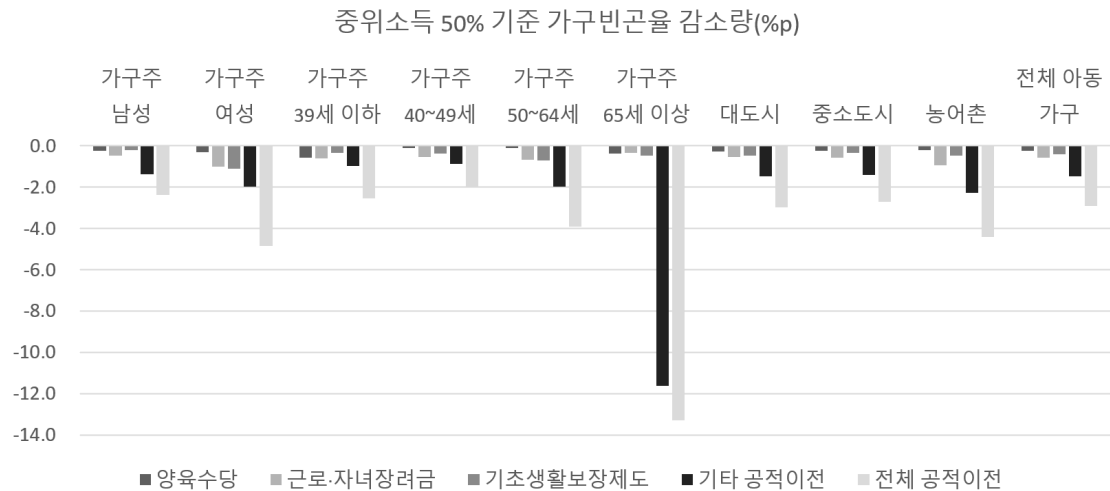
(단위: %, %p)

구분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25% 기준	
개인 성	남성	시장소득	27.66		17.83	
		시장소득+양육수당	27.43	-0.23	17.60	-0.23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27.25	-0.41	17.30	-0.52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27.46	-0.20	16.78	-1.04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26.28	-1.38	16.49	-1.34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25.24	-2.42	14.68	-3.14
	여성	시장소득	27.93		17.85	
		시장소득+양육수당	27.66	-0.27	17.61	-0.24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27.53	-0.40	17.27	-0.58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27.72	-0.21	16.79	-1.06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26.49	-1.44	16.54	-1.31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25.43	-2.50	14.64	-3.20
개인 연령	0~5세	시장소득	24.63		15.67	
		+양육수당	23.93	-0.70	15.04	-0.6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4.29	-0.34	15.18	-0.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4.49	-0.14	15.10	-0.58
		+기타 공적이전	23.18	-1.45	14.47	-1.21
		+전체 공적이전	21.80	-2.83	12.73	-2.94
	6~11세	시장소득	27.99		18.12	
		시장소득+양육수당	27.90	-0.09	18.03	-0.10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27.63	-0.36	17.58	-0.54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27.80	-0.19	17.21	-0.91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26.56	-1.43	16.74	-1.39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25.74	-2.24	15.19	-2.94
	12~17세	시장소득	30.24		19.38	
		시장소득+양육수당	30.23	-0.02	19.36	-0.02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29.75	-0.50	18.78	-0.60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29.98	-0.27	17.81	-1.58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28.90	-1.35	18.02	-1.36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27.90	-2.34	15.80	-3.58
전체		시장소득	27.79		17.84	
		시장소득+양육수당	27.54	-0.25	17.61	-0.23
		시장소득+근로·자녀장려금	27.38	-0.40	17.29	-0.55
		시장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27.59	-0.20	16.79	-1.05
		시장소득+기타 공적이전	26.38	-1.41	16.51	-1.32
		시장소득+전체 공적이전	25.33	-2.46	14.66	-3.17

주: 시장소득에 양육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타 공적이전소득, 전체 공적이전소득을 각각 합산한 후 빈곤율을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의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25%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아동 개인 빈곤율은 아동 개인 중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개인의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25%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우측의 수치는 시장소득 빈곤율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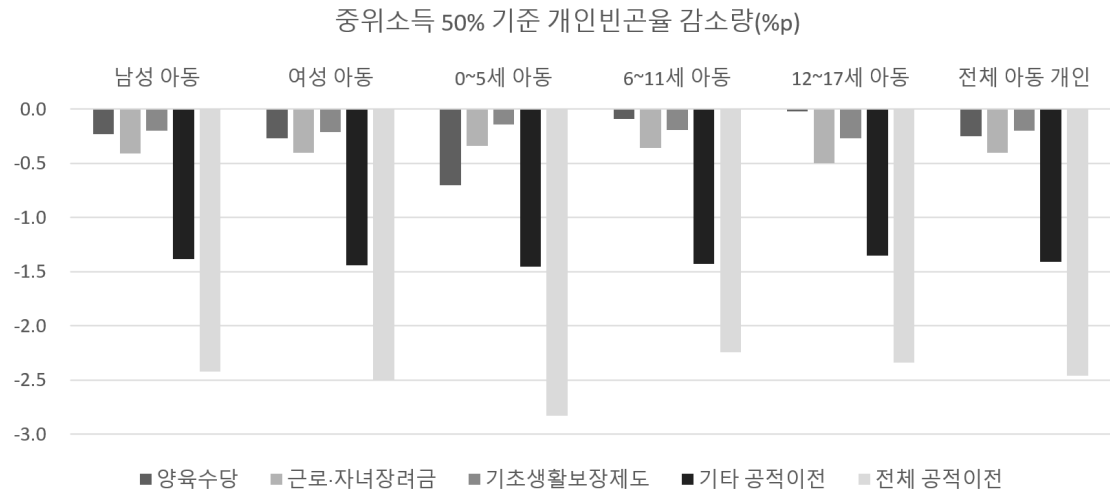
[그림 2-2-4-2] 아동 가구 빈곤율 감소효과(중위소득 50% 기준)



주: <표 2-2-4-19>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시장소득 빈곤율과 시장소득에 양육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타 공적이전소득, 전체 공적이전소득을 각각 합산한 소득의 빈곤율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모든 분석의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아동 가구 빈곤율은 아동이 존재하는 가구 중 빈곤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구단위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2-2-4-3] 아동 개인 빈곤율 감소효과(중위소득 50% 기준)



주: <표 2-2-4-20>의 수치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시장소득 빈곤율과 시장소득에 양육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타 공적이전소득, 전체 공적이전소득을 각각 합산한 소득의 빈곤율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모든 분석의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아동 개인 빈곤율은 아동 개인 중 빈곤한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을 의미하고, 전체 개인의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소득은 균등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아동 서비스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수급포괄성과 급여수준을 분석하였다. 급여수준은 급여액의 수준 분석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급여액은 정부지원액으로 한정하였다. 이유는 해당 서비스의 욕구 수준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욕구충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도군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으로 개별 정책이 표적으로 하는 개별 욕구를 모두 고려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분석에 포함된 서비스는 보육료지원, 아이돌봄, 한부모지원이다. 한부모지원은 해당 지원 안에 현금지원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없어 한부모 지원 수급여부와 수급액을 서비스수급으로 분석하였다.

아동대상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집단은 5세 이하 아동이다. 가구주 연령 및 소득분위별 아동서비스 욕구의 수준을 개략적으로 가늠하기 위하여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우선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상할 수 있듯이 26-39세의 가구주 가구에서 해당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아 30.39%에 이른다. 소득분위별로는 중상층 소득분위에서 해당 가구의 비율이 높다. 재산에서도 중상 분위에서 해당 가구의 비율이 높다. 이하 분석서 17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결과를 표본수의 규모를 고려하여 제거하고 제시하였다.

〈표 2-2-4-2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2.61	17.37	5.81	0.69	0.65	0.20	2.88
3분위	2.76	28.39	9.14	1.39	1.49	0.61	6.13
4분위	3.98	30.25	10.15	1.66	2.72	1.61	8.70
5분위	5.82	34.30	10.55	1.72	2.67	2.19	9.87
6분위	4.68	37.69	12.77	1.60	3.29	3.24	12.67
7분위	2.72	37.57	14.25	1.58	4.23	2.35	15.25
8분위	1.38	32.38	13.08	1.57	3.94	2.64	14.29
9분위	0.95	26.82	11.07	1.31	4.24	1.59	11.80
10분위	1.02	25.76	10.28	0.91	5.12	1.16	9.63
계	3.23	30.39	10.82	1.33	2.06	0.71	9.38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22〉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3.08	21.62	8.53	0.93	1.20	0.47	8.30
5분위	2.44	28.13	9.45	1.37	1.60	0.14	5.86
6분위	6.36	31.99	9.63	1.46	1.63	0.58	6.43
7분위	7.05	42.83	12.04	1.46	1.90	0.70	10.31
8분위	4.95	50.50	12.88	1.54	2.45	1.09	12.60
9분위	6.08	53.15	13.85	1.69	2.76	1.15	12.04
10분위	2.52	57.54	14.71	1.95	4.36	1.50	11.48
계	3.23	30.39	10.82	1.33	2.06	0.71	9.38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보육료지원을 수급하는 가구는 약 66%였다. 가구주 연령이 26-49세인 가구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높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6분위, 5분위, 4분위, 7분위 순으로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보육료는 비교적 중간소득분위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분위별로 보면 재산 8분위, 7분위에서 보육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았는데 가구주 연령이 26-39세인 집단에서는 재산 8분위, 7분위에서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인 집단에서는 재산분위 6분위, 7분위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높았다. 보육료는 소득과 재산이 다소 높은 집단에서 수급비율이 높았다.

〈표 2-2-4-2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비율(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단위: %)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53.78	58.11	59.77	52.12	33.42	39.59	56.53
3분위	57.60	67.72	70.80	50.89	38.84	46.71	65.50
4분위	55.58	68.64	71.92	56.82	48.26	66.33	67.58
5분위	50.77	68.46	72.46	54.79	55.48	57.84	67.74
6분위	53.10	67.83	71.58	62.66	57.46	64.77	68.01
7분위	54.92	67.09	72.56	58.83	55.53	59.84	67.73
8분위	46.70	66.26	71.62	60.37	65.89	69.12	67.37
9분위	37.68	65.47	69.72	55.29	61.46	48.73	66.10
10분위	49.87	63.39	64.71	46.79	37.51	45.07	62.65
계	53.63	66.27	69.93	56.06	50.26	56.00	66.12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24〉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비율(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단위: %)

연령 재산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53.57	63.68	69.75	58.83	46.85	46.57	64.37
5분위	79.26	64.75	70.18	58.92	45.92	29.45	64.83
6분위	63.96	66.99	73.07	57.38	55.45	65.78	67.34
7분위	39.27	69.43	72.04	59.19	50.12	67.11	68.97
8분위	48.38	69.97	71.59	58.25	51.86	65.22	69.37
9분위	55.81	68.39	70.30	52.71	56.48	59.22	67.68
10분위	49.51	66.90	65.44	49.28	46.89	46.84	63.85
계	53.63	66.27	69.93	56.06	50.26	56.00	66.12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2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비율(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단위: %)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57.31	50.18	54.64	61.03	60.55	52.62	47.65	56.53
3분위	66.53	73.10	65.45	66.69	66.63	63.28	54.91	65.50
4분위	67.31	69.84	70.46	70.50	68.18	68.18	58.71	67.58
5분위	67.65	61.07	72.19	68.28	70.22	66.90	60.68	67.74
6분위	67.46	62.08	67.63	69.23	70.38	68.37	65.75	68.01
7분위	65.00	68.13	71.43	70.83	70.75	68.49	65.57	67.73
8분위	63.80	67.74	66.80	69.24	70.89	70.01	68.06	67.37
9분위	62.24	66.14	64.61	70.21	68.76	67.55	67.77	66.10
10분위	57.85	60.07	59.21	66.40	67.71	68.90	62.33	62.65
계	64.37	64.83	67.34	68.97	69.37	67.68	63.85	66.12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인 낮은 소득하위 1-2분위 집단, 또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높은 집단에서는 보육료 수급가구 비율이 낮았다. 보육료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는 아동양육수당을 수급할 가능성이 크므로 두 제도의 수급비율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소득가구에서는 아동양육수당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소득분위 9분위와 10분위에서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비율도 중간소득집단과 비교하여 더 높지는 않았다. 고소득집단에서는 오히려 보육료지원과 아동양육수당의 선택변경이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수이지만 17세 이하 가구주 가구에서는 보육료 수급가구 비율이 높았다.

〈표 2-2-4-26〉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보육료지원과 아동양육수당 수급가구 비율(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단위: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소득	보육료 지원	53.78	58.11	59.77	52.12	33.42	39.59	56.53
	아동양육수당	65.35	67.82	52.01	57.71	61.92	58.80	62.15
1-2분위	보육료 지원	57.60	67.72	70.80	50.89	38.84	46.71	65.50
	아동양육수당	69.92	59.68	44.66	60.41	59.48	59.59	55.88
3분위	보육료 지원	55.58	68.64	71.92	56.82	48.26	66.33	67.58
	아동양육수당	69.20	62.71	42.84	57.97	64.86	47.59	56.98
4분위	보육료 지원	50.77	68.46	72.46	54.79	55.48	57.84	67.74
	아동양육수당	73.14	63.57	44.00	58.58	60.92	54.62	58.12
5분위	보육료 지원	53.10	67.83	71.58	62.66	57.46	64.77	68.01
	아동양육수당	75.64	65.64	44.66	57.57	57.39	54.84	60.04
6분위	보육료 지원	54.92	67.09	72.56	58.83	55.53	59.84	67.73
	아동양육수당	73.01	64.22	44.41	55.52	56.86	58.22	59.23
7분위	보육료 지원	46.70	66.26	71.62	60.37	65.89	69.12	67.37
	아동양육수당	73.22	62.75	40.65	60.70	56.09	53.12	56.96
8분위	보육료 지원	37.68	65.47	69.72	55.29	61.46	48.73	66.10
	아동양육수당	81.72	58.71	39.41	56.53	57.48	52.41	53.39
9분위	보육료 지원	49.87	63.39	64.71	46.79	37.51	45.07	62.65
	아동양육수당	67.37	58.62	44.69	69.70	62.50	37.23	54.56
10분위	보육료 지원	53.63	66.27	69.93	56.06	50.26	56.00	66.12
	아동양육수당	71.20	62.69	43.57	59.03	59.98	54.51	57.45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보육료 지원, 아동돌봄서비스, 한부모지원사업 등 아동대상 서비스를 수급하는 가구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26-39세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18-25세 가구주 가구집단의 수급율이 높았다. 소득분위별 수급율을 비교하여 보면 아동 서비스 수급율은 주로 중간소득계층에서 높았다.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이나 한부모지원이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가구원 가구에서 수급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아주 낮은 1-2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수급율이 더 낮을 수 있을 것이다.

〈표 2-2-4-2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아동서비스3) 수급 가구비율(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단위: %)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30.77	49.04	19.24	13.52	15.74	10.86	26.01
3분위	36.03	56.98	21.73	11.90	18.45	12.29	29.26
4분위	41.85	57.11	21.75	13.04	25.87	18.59	30.43
5분위	43.03	58.20	20.52	12.36	30.39	17.87	30.66
6분위	41.78	58.64	21.51	12.74	29.78	22.58	34.02
7분위	46.52	58.80	22.30	11.39	30.10	16.51	35.89
8분위	37.61	57.60	18.94	9.76	31.08	16.80	31.71
9분위	29.11	56.37	15.88	6.78	30.07	12.76	26.83
10분위	36.80	54.05	13.79	4.46	18.62	8.34	22.10
계	38.76	56.88	19.08	10.38	25.04	15.41	29.88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3)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지원 포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아동서비스 수급가구 비율은 다소 상이하다. 재산이 낮은 1-4분위에서 아동서비스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재산 5분위나 6분위와 비교하여 재산 1-4분위의 수급률이 더 높았다. 아이돌봄, 보육료지원, 한부모지원과 같은 아동 서비스의 수급은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므로 소득은 아주 낮지 않은 가구이지만 고소득가구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 가구들의 자가 등 부동산보유 수준은 낮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서비스의 규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보육료 수급가구가 높은 비율로 분포된 소득 7분위 8분위의 아동서비스 수급가구의 비율은 높은 수준이었다.

〈표 2-2-4-28〉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아동서비스 수급가구 비율(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단위: %)

연령 재산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39.42	55.71	21.94	10.97	22.70	15.46	33.67
5분위	30.49	56.23	20.65	12.98	22.04	8.03	28.25
6분위	49.16	56.08	19.87	12.59	25.73	16.65	28.13
7분위	26.16	59.11	19.45	11.66	27.34	15.99	30.82
8분위	28.15	59.23	17.42	9.96	24.33	18.59	29.48
9분위	23.83	57.67	16.94	8.79	26.08	15.99	26.72
10분위	17.41	56.38	15.81	8.29	25.90	12.01	23.78
계	38.76	56.88	19.08	10.38	25.04	15.41	29.88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29〉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아동서비스 수급가구 비율(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단위: %)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28.21	19.58	23.13	26.10	26.27	21.23	18.09	26.01
3분위	33.46	27.81	25.16	27.83	25.69	22.19	20.10	29.26
4분위	33.86	31.31	28.60	30.05	27.02	26.03	22.11	30.43
5분위	33.93	28.60	28.59	30.60	29.02	26.32	23.56	30.66
6분위	36.71	29.33	31.89	34.87	33.29	30.81	28.46	34.02
7분위	38.80	30.72	33.50	35.92	36.67	33.85	30.15	35.89
8분위	36.18	32.52	26.86	30.78	31.24	29.61	28.81	31.71
9분위	32.06	26.44	23.84	25.49	25.45	24.78	25.09	26.83
10분위	26.43	22.93	22.46	24.43	22.53	21.33	19.19	22.10
계	33.67	28.25	28.13	30.82	29.48	26.72	23.78	29.88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아동서비스 수급액을 보면 중간소득계층의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별 아동 수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가구보다 중간소득가구의 가구당 아동수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서비스 수급률이 높은 가구주 연령대의 경우 낮은 소득구간의 가구 평균 수급액이 높아서 아동서비스의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높은 소득 분위, 재산분위에서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서도 확인되는데 높은 소득이나 재산분위에서는 자산조사를 하는 제도의 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또 수급액이 다소 낮을 수 있다.

〈표 2-2-4-30〉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아동서비스³⁾수급액(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단위: 만 원)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388.86	316.08	245.72	251.88	225.70	233.80	283.33
3분위	430.27	328.16	263.39	255.87	228.56	241.51	298.23
4분위	431.20	343.95	260.68	273.96	278.76	261.26	307.87
5분위	411.79	353.41	268.78	269.05	272.38	291.91	317.43
6분위	355.13	355.26	288.25	292.21	323.52	316.65	331.56
7분위	348.25	347.69	282.84	300.27	277.29	225.91	325.96
8분위	274.61	335.48	274.84	312.73	311.71	300.11	315.57
9분위	320.78	343.19	268.54	302.18	298.00	232.39	316.47
10분위	495.41	329.95	274.96	279.44	276.76	219.33	307.54
계	396.17	342.02	271.78	281.80	278.10	266.73	314.94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31〉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아동서비스³⁾수급액(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단위: 만 원)

연령 재산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401.78	345.18	268.39	268.73	268.51	258.59	318.86
5분위	477.32	361.89	273.88	229.17	300.65	142.07	316.21
6분위	350.89	351.17	280.99	292.17	279.42	287.11	318.49
7분위	229.74	343.58	275.81	293.96	267.21	292.82	316.75
8분위	368.68	340.42	274.59	281.86	282.92	257.00	315.50
9분위	434.02	332.47	269.86	294.89	293.43	286.60	307.41
10분위	338.00	331.11	271.89	294.18	277.53	233.24	303.69
계	396.17	342.02	271.78	281.80	278.10	266.73	314.94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2-4-32〉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평균 아동서비스³⁾수급액(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단위: 만 원)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282.90	261.51	270.15	295.10	301.06	290.97	257.29	283.33
3분위	295.64	285.35	307.85	302.58	290.38	320.94	295.12	298.23
4분위	310.00	288.24	309.04	319.43	300.58	304.45	288.01	307.87
5분위	317.43	324.56	320.94	316.91	322.75	315.03	304.66	317.43
6분위	338.45	318.66	338.56	320.65	333.23	325.21	310.44	331.56
7분위	336.56	347.24	318.59	322.21	315.89	315.40	324.85	325.96
8분위	325.50	348.69	329.97	313.16	309.89	304.61	302.73	315.57
9분위	329.14	315.54	311.35	327.42	320.18	300.65	305.66	316.47
10분위	320.72	324.07	327.92	299.69	314.29	294.15	299.85	307.54
계	318.86	316.21	318.49	316.75	315.50	307.41	303.69	314.94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아동서비스는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약 6.17%p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25%를 기준으로 약 8.2%p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생활이 매우 어려운 집단도 대상으로 포괄하면서 극빈의 빈곤완화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4-33〉 아동서비스 지원의 소득보장효과(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단위: %)

구분			시장소득	시장소득+아동서비스
빈곤율	전가구	중위25	32.36	31.93
		중위50	39.46	39.05
	전인구	중위25	32.47	24.27
		중위50	39.57	33.4
	아동가구(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중위25	16.24	14.5
		중위50	23.77	22.14
지니	전가구		0.59118	0.58773
	전인구		0.53196	0.52628
	아동가구		0.47867	0.4645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17년 아동서비스를 비수급하는 6-9세 아동이 2015년에는 수급이었던 아동의 비율은 6-9세 아동 중 약 31%에 이른다. 보육료 지원 외 아동서비스가 그리 포괄성이 높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 2-5세 아동 중 2015년에는 비수급이었던 2017년 수급아동은 약 26%에 이른다. 아동 서비스에서 보육료 지원의 영향이 매우 크고 여타 아동서비스의 포괄성은 아직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6-12세 아동 중 2015년 이후 수급을 유지하는 아동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가정하면 방과 후 돌봄서비스 필요아동 중 적지 않은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돌봄을 대체하는 방식의 시간소비생활(학원 이용 등)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물론 실제 취업하지 않은 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보육료 이용가구가 분포를 고려한 분석을 하여야 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4-34〉 2017년 아동서비스 지원 수급자(개인)³⁾의 2015년 서비스 수급여부 비교

(단위: %)

소득 \ 17년연령	2-5	6-9	10-12	계
17수급- 15수급	55.60	35.05	10.77	11.27
17수급-15비수급	26.29	3.22	2.66	35.68
17비수급-15수급	8.34	30.68	12.00	17.6
17비수급-15비수급	9.78	31.05	74.56	35.46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액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3장 욕구영역별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제1절 건강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1. 건강보장 총괄현황

건강보장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소득 계층의 건강 보장 정책을 의료급여, 재난성 긴급의료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과 함께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생활 위기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 난치성 환자 산정특례 제도가 운영된다. 본 절에서는 총 6개 종류의 건강보장서비스 이용 현황을 소득과 재산, 연령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및 재산분위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수는 가구 평균 0.11이며, 소득분위 1-2분위 가구는 0.17이며, 3분위는 0.19, 4분위는 0.12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비교적 평균수급 서비스수는 감소하며, 재산분위에서 5~6분위의 건강보장 서비스 이용수가 가장 높지만 소득분위 만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재산 7분위 이상은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수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소득분위 1-2분위이면서 재산분위 1-4분위인 경우 0.13으로 전체 평균 0.11과 비교하여 크게 높지는 않게 나타난다. 건강보험 이외의 건강보장 서비스의 경우 빈곤층을 주요 타겟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급 서비스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1〉 소득 및 재산분위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 수

(단위: 개, %)

소득분위 \ 재산분위	1-4	5	6	7	8	9	10	Total
1-2	0.13	0.24	0.24	0.22	0.21	0.21	0.21	0.17
3	0.18	0.37	0.26	0.15	0.14	0.14	0.16	0.19
4	0.10	0.15	0.18	0.13	0.12	0.13	0.14	0.12
5	0.08	0.10	0.14	0.11	0.10	0.10	0.12	0.10
6	0.06	0.09	0.11	0.10	0.08	0.09	0.10	0.08
7	0.05	0.09	0.09	0.09	0.08	0.08	0.09	0.07
8	0.05	0.09	0.08	0.07	0.08	0.08	0.08	0.07
9	0.06	0.08	0.08	0.07	0.07	0.08	0.09	0.07
10	0.09	0.08	0.09	0.08	0.07	0.08	0.09	0.09
전체	0.10	0.18	0.16	0.12	0.11	0.11	0.11	0.1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3-1-2〉 소득 및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 수

(단위: 명, %)

연령 소득분위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Total
1-2	0.01	0.01	0.02	0.05	0.12	0.20	0.35	0.17
3	0.08	0.02	0.04	0.07	0.14	0.33	0.65	0.19
4	0.07	0.01	0.03	0.06	0.12	0.25	0.43	0.12
5	0.00	0.02	0.02	0.05	0.11	0.22	0.41	0.10
6	0.09	0.01	0.02	0.04	0.10	0.22	0.39	0.08
7	0.00	0.01	0.02	0.04	0.09	0.21	0.38	0.07
8	0.00	0.02	0.02	0.04	0.08	0.21	0.37	0.07
9	0.00	0.01	0.02	0.04	0.08	0.19	0.35	0.07
10	0.00	0.01	0.03	0.04	0.09	0.19	0.35	0.09
Total	0.03	0.01	0.03	0.05	0.10	0.22	0.39	0.1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건강보장 평균 수급서비스수는 소득분위와 연령기준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수급서비스 수가 높게 나타났다. 65~74세는 0.22개, 75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0.39개를 수급하고 비 노인 연령가구주 가구에서는 0.1개 이하로 낮게 나타나 가구주 연령별 편차가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 대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수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는 반면, 소득분위별 차이는 안 나타났다.

〈표 2-3-1-3〉 재산분위 및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 수

(단위: 명, %)

연령 재산분위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Total
1-4	0.02	0.01	0.03	0.05	0.11	0.22	0.40	0.10
5	0.00	0.01	0.02	0.05	0.12	0.26	0.49	0.18
6	0.34	0.01	0.02	0.05	0.11	0.23	0.40	0.16
7	0.00	0.03	0.02	0.04	0.10	0.22	0.36	0.12
8	0.00	0.01	0.03	0.04	0.10	0.21	0.36	0.11
9	0.00	0.04	0.02	0.04	0.09	0.21	0.36	0.11
10	.	0.01	0.03	0.04	0.09	0.21	0.36	0.11
전체	0.03	0.01	0.03	0.05	0.10	0.22	0.39	0.1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재산분위 및 가구주의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수를 살펴보면, 소득분위 및 연령별 서비스수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 서비스 수의 차이는 나타나는 반면, 재산분위별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4〉 소득 및 재산분위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재산분위 소득분위	1-4	5	6	7	8	9	10	Total
1-2	498,838	1,022,088	758,627	565,191	503,916	487,666	556,852	556,072
3	387,851	1,093,811	796,907	480,126	467,579	453,337	531,109	464,433
4	158,738	353,638	457,026	356,422	316,980	395,538	436,445	256,279
5	126,298	313,539	309,898	279,791	309,943	303,023	399,402	217,847
6	123,443	396,404	266,569	279,433	245,759	267,586	333,884	209,854
7	101,509	289,915	219,616	224,062	248,636	312,146	294,649	196,157
8	103,481	306,137	199,209	187,144	221,235	290,469	318,959	195,883
9	116,710	412,443	264,013	179,003	222,554	252,802	341,886	213,653
10	145,425	230,295	226,954	172,414	146,971	202,944	236,726	186,008
Total	252,391	642,065	441,607	313,963	291,602	314,344	349,907	306,86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이상의 건강보장 서비스에 대한 가구별 평균 수급액을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3분위 미만과 재산분위 6 미만의 다소 높게 나타나며, 그 이상의 경우는 유사하게 나타나는 수준이다. 건강보장 평균 수급액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재산분위가 5분위이며, 소득분위가 3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건강보장 평균 수급액은 저소득에 의료급여이외의 다양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서비스로 소득과 재산분위 전 연령층에서 일정수준의 수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액은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수급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며, 가구별 소득 및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액은 75세 이상 노인 가구에서는 소득분위별 평균 수급액의 차이를 보여, 소득 1-3분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4분위 이상에서는 다소 감소하며 분위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반면 65-74세 노인가구에서는 소득분위 3분위까지 높은 경향성은 동일하지만 그 이후의 소득분위별 감소 규모는 75세 이상 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5〉 소득 및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연령 소득분위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Total
1-2	-	10,764	23,409	93,100	238,284	413,176	1,589,592	556,072
3	120,539	44,369	62,697	128,588	258,565	540,185	2,461,998	464,433
4	-	63,982	59,421	138,814	276,548	394,454	1,178,742	256,279
5	-	13,851	70,744	146,797	234,239	332,782	1,200,036	217,847
6	-	39,576	52,501	139,935	265,414	344,640	1,259,074	209,854
7	-	26,112	35,464	122,494	282,375	350,720	1,151,151	196,157
8	-	17,327	29,022	113,144	286,145	300,471	1,252,592	195,883
9	-	6,995	22,193	105,943	312,491	368,218	1,031,924	213,653
10	-	86,687	23,412	73,650	215,575	300,846	980,142	186,008
Total	23,905	21,501	40,421	118,156	261,255	389,509	1,547,834	306,86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3-1-6〉 재산 및 연령별 건강보장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재산분위 \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Total
1-4	24,558	16,166	25,881	80,089	182,018	404,498	1,903,964	252,391
5	-	31,349	91,452	238,542	376,207	508,518	2,155,533	642,065
6	-	94,147	76,798	167,358	279,095	363,915	1,488,638	441,607
7	-	58,390	62,974	119,001	270,914	367,049	1,235,903	313,963
8	-	113,744	47,247	148,144	288,401	375,851	1,134,963	291,602
9	-	43,372	62,098	150,395	350,392	365,869	1,067,180	314,344
10		664,768	91,506	150,840	376,348	400,910	1,096,358	349,907
Total	23,905	21,501	40,421	118,156	261,255	389,509	1,547,834	306,86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재산 분위 및 연령별 건강보장 가구 평균 수급액을 살펴보면 75세 이상 노인가구의 재산분위 5분위 이하의 경우 건강보장 평균 수급액이 높으며 그 이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와같은 경향은 65-74세 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평균수급액의 감소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건강보장 서비스 유형별¹³⁾ 분석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저소득층의 대표적 건강보장 제도이다. 의료급여의 대상자는 1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무능력가구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또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이다.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소득 및 가구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1분위에 85.07%가 집중되며, 재산분위를 기준으로 1-4분위에 83.77%가 집중되게 나타난다. 특히 소득1분위이며 재산1-4분위에 비율은 71.79%로 집중도가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외의 소득 및 재산분위에서는 분포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3분위 미만, 재산 6분위까지는 전체 수급 가구 중 약 5%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13) 건강보장 서비스 유형별 분석은 수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의료급여 수급은 소득분위와 재산분위, 연령군별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급가구의 규모가 크지 않아 소득분위와 재산분위 분석결과만을 분석결과로서 제시하였다.

〈표 2-3-1-7〉 가구 소득 분위 및 재산분위별 의료급여 수급

(단위: %)

소득분위 \ 재산분위	1-4	5	6	7	8-10	전체
1	71.79	4.55	7.24	0.93	0.57	85.07
2	5.35	0.36	0.41	0.07	0.06	6.25
3	4.19	0.27	0.59	0.04	0.02	5.12
4	0.87	0.04	0.18	0.10	0.05	1.24
5	0.54	0.03	0.08	0.05	0.06	0.76
6	0.66	0.06	0.11	0.04	0.03	0.91
7-10	0.36	0.03	0.11	0.03	0.07	0.64
전체	83.77	5.34	8.73	1.27	0.89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3-1-8〉 가구 소득분위 및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

(단위: %)

소득분위 \ 연령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전체
1	0.28	1.81	3.84	11.33	27.99	17.85	21.99	85.07
2	0.03	0.15	0.38	1.10	2.49	1.17	0.93	6.26
3	0.01	0.15	0.44	1.03	2.16	0.79	0.53	5.12
4	0	0.04	0.10	0.25	0.49	0.20	0.16	1.24
5	0	0.01	0.06	0.21	0.28	0.10	0.10	0.77
6	0	0.02	0.06	0.19	0.41	0.11	0.12	0.91
7-10	0	0.01	0.03	0.11	0.25	0.06	0.16	0.63
전체	0.32	2.19	4.91	14.22	34.07	20.29	24.00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소득분위와 연령별 가구의 의료급여 수급은 소득분위 1-2분위 이면서, 50세 이상 가구주에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소득 1분위이며 50-64세 연령 가구에서의 비율은 전체 의료급여의 27.9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소득 1분위의 65-74세는 17.85%, 1분위의 75세 이상이 21.99%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의료급여 가구 중 소득1분위의 50세 이상 가구의 비중은 67.80%로 집중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2-3-1-9〉 가구 재산 및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

(단위: %)

연령 \ 재산분위	1-4	5	6	7	8-10	전체
0-17세	0.32	0	0	0	0	0.33
18-25세	2.10	0.03	0.03	0.01	0.01	2.19
26-39세	4.54	0.12	0.17	0.04	0.02	4.90
40-49세	12.83	0.43	0.73	0.14	0.08	14.22
50-64세	29.24	1.65	2.49	0.37	0.33	34.06
65-74세	16.40	1.29	2.12	0.30	0.17	20.29
75세 이상	18.34	1.82	3.18	0.40	0.25	24.00
전체	83.77	5.34	8.73	1.27	0.89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이와같은 경향은 재산분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며, 재산분위 1-4분위에 83.77%가 집중되며, 재산 소득 1-4분위 중 50-64세 이상 연령 가구의 의료급여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 기준 2분위 이하, 재산분위 기준 4분위 이하이면서 50대 이상 가구의 의료급여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급여 이외의 추가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가구별 평균 수급액수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2,785천원이며 전체 수급 가구수는 소득분위 1분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급액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10〉 소득 및 가구재산별 재난적 의료비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소득 \ 재산	1	2	3	4	5	6	7	8	9-10	전체
1-4	2,635,725	2,264,419	2,798,618	2,455,234	4,480,343	3,933,189	2,849,862	1,539,255	5,571,640	2,762,000
5	1,658,128	1,683,531	2,374,650	5,790,790	1,552,070	2,573,770	-	-	-	1,948,428
6	2,229,263	1,281,413	1,970,736	3,362,495	1,616,260	2,835,957	1,648,425	3,961,843	-	2,294,969
7	2,594,584	1,755,867	1,393,073	4,655,108	4,360,159	3,901,757	5,083,371	3,254,399	1,055,0500	3,833,872
8	3,170,618	1,787,900	5,229,30	4,671,665	1,640,329	2,670,882	1,972,356	-	-	2,701,219
9	1,752,634	-	2,032,308	1,642,081	1,734,290	4,013,302	6,090,063	2,884,890	-	3,332,762
10	-	1,517,139	-	-	3,583,838	-	1,987,232	-	-	2,381,711
전체 평균	2,547,553	2,098,444	2,598,350	3,491,379	3,492,854	3,535,909	3,124,256	3,078,986	7,536,043	2,784,965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차상위 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 비용을 경감하는 제도로써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나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 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의료이용에 따른 본인부담 비용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가구 소득 분위와 재산분위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가구는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 2-3분위 비율이 약 63%가 넘게 나타나며, 재산소득은 1-4분위가 65%로 나타났다. 본 서비스가 갖는 목적이 의료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써 소득분위에서 1분위보다는 2-3분위에 집중되어 분포함을 볼 수 있다.

〈표 2-3-1-11〉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재산분위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지원

(단위: 명, %)

가구소득 \ 가구재산	1-4	5	6	7-10	전체
1	6.58	1.02	3.46	1.12	12.17
2	24.76	3.91	1.66	0.24	30.57
3	21.18	2.60	8.53	0.55	32.86
4	4.38	0.29	3.58	3.66	11.92
5	2.49	0.22	0.63	0.72	4.05
6-10	5.62	0.61	1.42	0.79	8.42
전체	65.00	8.65	19.28	6.98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건강보험 이용에서의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의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7년 기준 가구 단위 평균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812천원이며 소득분위별로는 5분위 이하의 경우 약 800천원 이상을 환급받았으며, 6분위 이상에서도 그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재산분위별 차이도 크지 않으나 재산 고분위에서 환급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3-1-12〉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재산분위별 본인부담상한 환급금

(단위: 원)

재산분위 \ 소득분위	1-4	5	6	7	8	9	10	전체
1	820,850	841,064	770,762	749,068	855,663	729,613	817,113	796,582
2	857,034	928,036	971,245	999,761	613,305	710,712	1,020,975	875,244
3	890,074	1,019,002	977,830	878,291	826,042	672,443	776,620	917,668
4	853,281	804,476	864,453	828,030	760,581	749,583	766,855	831,218
5	816,345	898,181	832,674	920,751	791,747	711,706	699,073	801,234
6	762,453	754,337	737,698	685,648	771,679	747,424	682,259	738,653
7	755,016	620,157	677,453	788,461	782,948	773,619	776,336	750,126
8	769,927	586,199	826,343	817,826	768,876	805,400	776,457	785,242
9	674,839	956,089	756,132	665,115	880,081	755,120	640,082	721,592
10	695,768	692,895	598,096	783,259	572,248	707,423	727,281	689,202
전체	829,527	879,450	832,502	788,301	793,274	744,281	746,996	812,517
(N)	5,924	665	2,323	1,518	1,172	1,081	895	13,577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성 환자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진환 및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지원 제도이다.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환자,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¹⁴⁾가 대상이다.

〈표 2-3-1-13〉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재산분위별 암환자 산정특례

(단위: %)

재산분위 소득분위	1-4	5	6	7	8	9	10	전체
1	7.95	0.73	3.83	3.06	2.87	2.73	2.49	23.66
2	2.86	0.32	0.39%	0.23	0.23	0.21	0.22	4.48
3	5.42	0.43%	1.45	0.25	0.17	0.14	0.13	8.00
4	3.35	0.21	1.73	1.97	1.13	0.63	0.41	9.44
5	3.82	0.20	0.96	1.17	1.54	1.82	2.00	11.51
6	4.28	0.24	1.18	1.33	1.20	1.40	1.82	11.44
7	3.21	0.22	1.11	1.25	1.21	1.25	1.22	9.47
8	2.30	0.15	0.83	1.01	1.06	1.08	1.09	7.52
9	1.77	0.12	0.54	0.76	1.07	1.15	1.32	6.72
10	2.08	0.08	0.39	0.53	0.84	1.45	2.39	7.76
전체	37.04	2.71	12.42	11.56	11.34	11.85	13.08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산정특례는 암환자 산정특례 수급 가구는 분석DB에서 63,671가구로, 결핵환자 산정특례 7,342가구, 화상환자 1,769가구로 나타났다. 암환자에 대한 산정특례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계속적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있다. 암환자의 산정특례의 소득 및 재산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분위 1분의 가구의 비중이 23.66%, 재산분위 1-4분위에서는 37.04%로 나타나, 소득과 재산이 낮은 집단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은 결과는 암 질환이 연령과의 상관성이 높은 질환으로 노인 비중이 높은 결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결핵환자 산정특례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소득1분위 가구의 비중이 21.11%로 높게 나타나며 재산분위별로는 1-4분위가 45.01%로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하위 소득 및 재산분위에 결핵 산정특례 수급이 집중되며 그 이상의 분위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14) 2017년에는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본 분석에서는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2-3-1-14〉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재산분위별 결핵환자 산정특례

(단위: %, 명)

재산분위 소득분위	1-4	5	6	7	8	9	10	전체
1	8.16	0.93	4.05	2.85	2.07	1.68	1.39	21.11
2	3.83	0.50	0.54	0.19	0.25	0.11	0.19	5.61
3	9.51	0.67	2.02	0.22	0.14	0.08	0.07	12.69
4	4.40	0.30	1.95	1.85	1.02	0.68	0.31	10.51
5	3.50	0.23	0.79	1.02	1.38	1.40	1.33	9.66
6	3.79	0.25	1.06	0.99	0.89	1.06	1.28	9.32
7	3.70	0.22	0.97	1.24	1.16	0.87	0.72	8.88
8	3.12	0.23	0.90	0.99	0.98	0.89	0.69	7.80
9	2.82	0.05	0.69	0.91	1.04	0.95	0.86	7.33
10	2.19	0.14	0.44	0.48	0.74	1.01	2.10	7.08
전체	45.01	3.51	13.40	10.75	9.64	8.73	8.95	100.00
(N)	3305	258	984	789	708	641	657	7,34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표 2-3-1-15〉 가구 소득(가구보험료) 및 재산분위별 화상환자 산정특례

(단위: %)

재산분위 소득분위	1	5	6	7	8	9	10	전체
1	5.82	0.51	2.20	1.47	1.64	1.07	1.07	13.79
2	3.73	0.23	0.23	0.06	0.23	0.17	0.11	4.75
3	8.59	0.90	1.07	0.28	0.17	0.11	0.17	11.31
4	5.03	0.11	1.98	1.87	1.36	0.51	0.11	10.97
5	4.13	0.23	1.58	1.47	1.58	1.24	1.64	11.87
6	4.69	0.17	1.24	1.19	1.41	1.30	1.13	11.14
7	4.41	0.34	0.90	1.70	1.02	0.85	0.28	9.50
8	4.07	0.11	1.02	1.92	1.58	1.02	0.96	10.68
9	3.73	0.11	0.79	1.30	1.24	1.36	0.85	9.38
10	1.98	0.11	0.34	0.51	0.79	1.02	1.87	6.61
전체	46.18	2.83	11.36	11.76	11.02	8.65	8.20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16개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결합 원자료.

화상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1분위 비율이 13.79%이며 재산분위 1-4분위가 46.18%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소득 및 재산분위에서의 화상환자 산정특례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암, 결핵, 화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정특례 수급 현황에서 하위 소득과 재산분위 가구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질환별 건강 형평성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제2절 주거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본 절에서는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주거보장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첫째 소득보장 측면에서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수급 현황과 이를 통한 빈곤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주거급여 수급현황은 주거급여 수급률과 평균 임차수급액, 수급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둘째 서비스 보장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 (전환)임대료,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을 종합하여 주거보장 수혜율을 분석한다. 분석시점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1.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분석에 앞서 본 절의 분석대상이 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수급 자격 및 급여 종류, 임차급여액 결정방식, 그리고, 현재(2017년 기준) 수급자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다. 맞춤형 급여체계에서의 주거급여는 기존의 생계비 보전 목적으로 지원되는 주거급여에 비하여 수급 대상 계층을 확대하고, 지원금 수준을 지역별 임차료 수준과 거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보장을 지원하는 제도¹⁵⁾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게 주택의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임차수급자에게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한다.

2017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때 주거급여 수급권이 부여된다. 즉,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92.0만원 이하(2017년 기준)인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가 지급대상이 된다.

15)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주거급여사업안내. p.5

〈표 2-3-2-1〉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선정기준	기준액(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자료 : 국토교통부(2017).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임차급여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준임대료는 실질적으로 임차급여의 지급상한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급지인 서울의 경우 4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1만 5천원 수준이다.

〈표 2-3-2-2〉 201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20.0	17.8	14.7	13.6
2인 가구	23.1	20.0	15.8	14.7
3인 가구	27.3	24.2	18.9	17.8
4인 가구	31.5	28.3	22.0	20.0
5인 가구	32.5	29.4	23.1	21.0
6인 가구	37.8	34.7	26.2	24.2

자료 : 국토교통부(2017).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 주거급여 수급 현황

주거보장에서 주거급여 수급현황은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분석하므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는 임차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임차가구의 분포를 분석하여 참고하였다. 분석결과 월세 가구의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구간은 소득 3분위 이하, 재산 3분위 이하로 나타나며, 해당 구간의 경우 임차급여의 지급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3-2-3〉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별 임차(전세, 월세) 가구 분포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2017년)

(단위: %)

소득\재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분위	58.4	54.9	32.8	15.5	9.6	16.1	17.9	14.0	3.8	6.5	43.0
2분위	68.9	69.1	36.6	13.8	10.3	14.3	10.8	13.4	10.3	19.5	40.4
3분위	76.3	79.9	52.5	29.3	11.4	11.9	9.0	9.4	7.3	14.1	42.1
4분위	75.4	80.4	60.9	35.4	18.1	17.8	8.4	14.0	10.1	12.7	39.4
5분위	83.8	84.2	62.0	50.5	28.6	22.0	16.3	9.4	11.6	17.4	39.0
6분위	71.7	74.9	75.2	44.2	27.7	20.6	12.5	11.0	10.1	13.4	32.5
7분위	54.9	79.5	73.4	50.0	22.6	23.8	18.0	12.9	15.7	12.8	29.6
8분위	74.2	87.5	64.0	42.2	29.9	21.2	13.2	16.1	12.6	14.7	24.8
9분위	21.9	72.6	60.9	44.4	30.1	24.8	19.1	17.3	15.7	18.1	22.4
10분위	100.0	78.0	86.8	30.2	40.3	19.5	23.6	15.0	14.8	19.4	19.4
계	67.2	72.6	54.9	35.5	22.6	20.1	15.3	13.9	13.4	17.0	33.3

자료 :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적접근 원자료.

가. 주거급여 수급률 분석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의 수급률을 ①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②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③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단 가구주 연령이 0-17세인 아동가구주 및 일부 소득분위와 재산분위의 경우 표본 수가 매우 적으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1-2분위의 구분이 되지 않고, 재산분위의 경우 재산 1-4분위가 구분되지 않아 분석의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분석결과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의 전체 수급가구 비율은 3.63%이다. 이는 2017년 주거급여 정형통계를 이용한 수급가구 비율인 3.65%¹⁶⁾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¹⁷⁾.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비율은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1-2분위 가구가 11.12%로 가장 높으며,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수급가구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가구에서 수급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가구주 연령이 25세 이하인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수급가구 비율은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1-2분위·50-64세 가구가 14.42%로 가장 높았고, 반면 소득 1-2분위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25-39세인 가구의 수급률은 5.65%로 비교적 낮았다. 우리나라 자가 비율이 60.6% 수준이고 20-30대 가구의 자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할 때¹⁸⁾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순히 점유형태와 같은 주거 조건보다는 주거급여 수급자

16) 김혜승 외, 2019.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효과 및 정책방향 연구. 국토교통부

17) 2017년 12월 기준 임차급여 수급가구 수는 736,830가구이며, 총가구 수는 20,167,922가구이므로 총가구수 대비 임차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3.65%임, 참고로 일반가구 수는 19,673,875가구이며, 일반가구수 대비 임차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3.75%임

18)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가비율은 60.6%, 가구주연령이 '50-60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가 비율은 각각 64.6%, 68.6%로 평균 자가 비율을 넘어서고 있고, '40-50세 미만'의 자가비율은 60.1%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연령이 '30세 미만'인 가구의 자가비율은 14.8%, '30-40세 미만' 가구의 자가비율은 44.3% 수준을 보였다.

의 선정기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이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2-4〉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2017년)

(단위: %)

연령 소득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6.53	6.28	5.65	10.71	14.42	11.54	10.05	11.12
3분위	100.00	6.03	3.75	8.12	7.39	4.73	4.79	6.27
4분위	28.21	5.46	1.90	4.10	3.93	2.38	2.93	3.42
5분위	.	4.34	1.02	1.91	1.84	1.15	1.82	1.69
6분위	.	2.73	0.41	0.87	0.83	0.75	1.46	0.81
7분위	100.00	1.53	0.20	0.44	0.54	0.45	0.77	0.45
8분위	.	0.95	0.13	0.25	0.34	0.32	0.67	0.27
9분위	.	0.50	0.06	0.15	0.19	0.26	0.09	0.14
10분위	.	0.77	0.03	0.05	0.09	0.13	0.30	0.07
계	16.94	4.18	1.13	2.68	3.85	5.80	7.68	3.63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수급가구 비율은 1-4분위의 수급가구 비율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5분위 역시 6.22% 수준으로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6분위 수급률은 1.73%, 7분위 이후 수급률은 1% 미만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산 5분위의 수급률이 재산1-4분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산정방법과 관련이 있다. 즉,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¹⁹⁾이 있으므로, 이러한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재산5분위와 재산 1-4분위의 수급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기본재산액의 적용금액의 변화가 있는 경우 재산분위별 수급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다.

19) 2017년 기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임

〈표 2-3-2-5〉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2017년)

(단위: %)

재산 \ 연령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4분위	17.13	4.27	1.59	5.29	8.07	13.75	16.95	6.68
5분위	0.00	7.24	1.60	4.00	6.03	9.81	8.78	6.22
6분위	23.85	2.95	0.58	1.32	1.69	2.27	2.50	1.73
7분위	0.00	1.40	0.28	0.45	0.58	0.89	1.01	0.59
8분위	0.00	2.04	0.18	0.24	0.33	0.48	0.81	0.34
9분위	0.00	0.00	0.07	0.15	0.22	0.41	0.38	0.22
10분위	.	2.29	0.07	0.10	0.15	0.15	0.28	0.14
계	16.94	4.18	1.13	2.68	3.85	5.80	7.68	3.63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수급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 가구의 경우 수급률이 18.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 1-2분위·재산 5분위 12.69%, 소득 3분위·재산 1-4분위 10.10%, 소득 3분위·재산 5분위 9.94% 순이었다.

분석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가장 낮은 분위인 소득1-2분위·재산 1-4분위의 수급률이 18.02%라는 것은 자가가구 비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은 아니므로, 향후 선정기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가구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2-3-2-6〉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2017년)

(단위: %)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8.02	12.69	3.46	0.97	0.55	0.32	0.21	11.12
3분위	10.10	9.94	2.92	1.11	0.74	0.42	0.24	6.27
4분위	5.41	5.64	1.91	0.92	0.43	0.45	0.34	3.42
5분위	2.72	2.52	1.22	0.61	0.64	0.27	0.17	1.69
6분위	1.21	1.27	0.65	0.58	0.33	0.23	0.19	0.81
7분위	0.58	0.88	0.59	0.37	0.23	0.19	0.20	0.45
8분위	0.37	0.40	0.28	0.26	0.18	0.12	0.13	0.27
9분위	0.16	0.29	0.14	0.20	0.13	0.15	0.05	0.14
10분위	0.08	0.09	0.08	0.11	0.05	0.07	0.06	0.07
계	6.68	6.22	1.73	0.59	0.34	0.22	0.14	3.63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나. 주거급여 임차급여액 분석

주거(임차)급여 수급가구의 임차급여액을 ①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②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③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주거급여 임차급여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므로,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할수록 임차급여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한편 분석시 가구주 연령이 0-17세인 아동가구주 및 소득·재산분위가 높은 경우 표본 수가 매우 적으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임차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주거급여 임차급여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전체 임차급여액은 연간 평균 119.1만원이다. 이를 월평균 임차급여액으로 환산하면 임차급여 평균 수급기간이 9.8개월임을 고려할 때 월평균 임차급여액은 12.2만원이다. 이를 정형통계 자료와 비교하면 2017년 12월 기준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월평균 임차급여액은 12.4만원²⁰⁾이므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결과를 보이고 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3분위의 연평균 수급액이 132.6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득4분위 124.1만원, 소득1분위 118.0만원의 순이었다. 또한 가구주 연령별로는 40-49세 131.9만원, 26-39세 128.8만원, 50-64세 119.1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 3분위와 소득4분위의 연평균 수급액이 소득1-2분위 보다 높고, 가구주연령이 30-40대인 가구의 연평균 수급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수준과 자기부담분으로 인한 수급액의 감소 효과보다는 가구규모에 따른 수급액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가구 보다 30-40대 가구주의 경우에 배우자 및 자녀의 존재로 인해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이와 같은 가구 규모가 연평균 수급액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 김혜승 외, 2019.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효과 및 정책방향 연구. 국토교통부

〈표 2-3-2-7〉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임차급여액(2017년)

(단위: 만원)

소득 \ 연령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12.6	125.0	137.7	130.2	118.1	116.8	109.3	118.0
3분위	107.0	121.4	140.9	145.9	131.6	118.7	113.5	132.6
4분위	53.0	112.0	126.9	137.6	121.6	108.9	106.1	124.1
5분위	.	93.9	96.6	119.8	111.4	107.0	105.7	110.2
6분위	.	67.9	93.6	107.4	99.2	107.1	120.7	99.2
7분위	114.0	60.2	86.8	99.9	96.9	90.7	97.6	92.3
8분위	.	49.9	80.1	90.7	96.8	90.7	99.5	89.1
9분위	.	77.5	80.5	93.1	92.4	87.0	97.0	90.2
10분위	.	39.3	88.3	84.4	92.9	105.9	134.8	90.8
계	111.8	109.2	128.8	131.9	119.1	116.1	109.5	119.1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임차급여액을 보면 재산 1-4분위의 연평균 수급액이 120.5만원으로 가장 높고, 재산 5분위, 6분위에서 점차 연평균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재산 및 자기부담분 증가로 인한 수급액의 감소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특히가구주연령 40-49세의 재산1-4분위 및 재산5분위, 가구의 소득이 각각 133.5만원, 135.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 26-39세의 재산 1-4분위 가구 역시 130.7만원 수준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임차급여액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2-3-2-8〉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임차급여액(2017년)

(단위: 만원)

재산 \ 연령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4분위	112.3	109.4	130.7	133.5	120.5	117.3	110.4	120.5
5분위	.	117.3	122.5	135.5	113.9	109.4	103.8	113.0
6분위	83.0	104.0	114.3	116.5	107.7	109.4	102.9	108.4
7분위	.	118.0	87.1	97.1	106.1	107.2	106.9	103.6
8분위	.	96.1	118.7	109.2	103.1	109.4	109.1	107.7
9분위	.	.	101.8	117.5	109.5	111.0	105.2	110.4
10분위	.	27.7	81.7	118.3	109.5	97.8	105.3	105.8
계	111.8	109.2	128.8	131.9	119.1	116.1	109.5	119.1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연평균 수급액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소득이 낮고 재산이 낮을수록 연평균 수급액이 높지만, 소득 3분위·재산 1-4분위 가구의 임차급여액이 135만원 정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분위와 연계된 가구주 연령 및 가구규모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 2-3-2-9〉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임차급여액(2017년)

(단위: 만원)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18.8	112.4	109.3	106.3	118.4	104.4	102.3	118.0
3분위	134.8	120.8	117.0	113.3	124.0	108.5	109.2	132.6
4분위	125.9	118.7	113.2	112.9	108.3	113.7	110.0	124.1
5분위	112.6	105.3	96.2	102.4	98.1	125.4	99.5	110.2
6분위	98.8	90.7	98.6	98.2	101.4	111.2	120.7	99.2
7분위	91.8	70.4	86.6	91.7	109.0	114.2	93.0	92.3
8분위	85.4	97.2	94.7	88.9	86.4	107.3	100.8	89.1
9분위	80.7	121.2	94.0	78.5	100.7	105.1	111.4	90.2
10분위	82.1	106.0	105.5	77.2	61.5	102.2	110.1	90.8
계	120.5	113.0	108.4	103.6	107.7	110.4	105.8	119.1

주: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 주거급여 수급기간 분석

주거(임차)급여 수급가구의 수급기간을 ①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②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③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가 지급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거급여 수급비율 분석결과 소득1-2분위 및 재산 1-4분위가 아닌 다른 소득 및 재산분위의 구간에서 일부 가구가 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주거급여 수급기간(2017년 1년간 주거급여 수급개월 수)을 분석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거급여 수급기간 분석시에도 가구주연령이 0-17세인 아동가구주 및 소득·재산분위가 높은 경우 표본수가 매우 작으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임차급여 수급기간은 연평균 9.8개월이다. 소득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기간의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 1-2분위의 수급기간이 10.7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소득 3분위 9.5개월, 소득 4분위 8.2개월의 순이었다. 즉,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주거급여 수급기간은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체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75세 이상 가구가 10.1개월, 65-74세 가구 10.0개월, 50-64세 9.8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거급여 수급기간은 더 길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2-10〉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기간(2017년)

(단위: 개월)

연령 소득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0.3	10.0	10.5	10.7	10.9	10.8	10.5	10.7
3분위	12.0	9.6	9.4	10.2	9.8	8.3	7.5	9.5
4분위	12.0	8.4	8.0	9.0	8.4	5.7	5.9	8.2
5분위	.	6.4	5.0	7.8	6.5	4.8	5.6	6.5
6분위	.	4.6	3.5	4.9	4.9	3.6	3.5	4.5
7분위	12.0	3.5	2.4	3.3	3.2	2.3	5.4	3.2
8분위	.	4.6	2.2	1.5	2.6	2.0	2.8	2.4
9분위	.	3.0	0.4	1.2	1.0	1.5	2.9	1.1
10분위	.	3.6	3.8	1.6	0.7	1.8	4.0	1.7
계	10.3	8.3	8.8	9.6	9.8	10.0	10.1	9.8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기간을 보면, 재산 1-4분위의 수급기간이 10.4개월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과 동일하게 재산수준도 증가할수록 수급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재산 1-4분위의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0-17세를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수급기간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3-2-11〉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기간(2017년)

(단위: 개월)

연령 재산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4분위	10.3	8.4	9.1	10.1	10.3	10.7	10.8	10.3
5분위	.	9.7	8.7	9.6	9.4	9.6	9.7	9.5
6분위	12.0	6.6	5.8	6.5	7.0	6.3	6.2	6.5
7분위	.	7.1	3.3	2.2	2.2	1.9	1.1	2.1
8분위	.	3.1	2.4	1.5	1.2	0.8	2.6	1.6
9분위	.	.	2.3	1.6	0.7	0.8	1.8	1.1
10분위	.	3.2	2.1	0.6	1.2	1.1	2.4	1.4
계	10.3	8.3	8.8	9.6	9.8	10.0	10.1	9.8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재산분위별 수급기간으로는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의 수급기간이 11.0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앞선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수준이 높을수록 주거급여 수급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2-3-2-12〉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급여 수급기간(2017년)

(단위: 개월)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1.0	10.5	8.3	3.4	3.4	2.5	2.9	10.7
3분위	10.0	9.2	5.9	2.2	2.1	2.8	0.0	9.5
4분위	8.9	7.1	5.1	1.6	0.3	0.3	1.7	8.2
5분위	7.5	6.3	2.9	1.5	1.4	0.5	1.1	6.5
6분위	5.6	4.9	2.3	1.3	0.6	0.0	1.0	4.5
7분위	4.3	2.5	1.5	2.1	0.4	0.7	1.8	3.2
8분위	3.2	5.6	2.2	0.6	0.7	0.8	0.0	2.4
9분위	2.5	0.9	0.1	0.0	0.0	0.1	0.0	1.1
10분위	3.6	0.0	1.7	0.0	0.0	0.0	1.0	1.7
계	10.3	9.5	6.5	2.1	1.6	1.1	1.4	9.8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라.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2015년 수급 비율 분석

2017년 주거(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2015년 수급가구의 비율을 ①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②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③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주거(임차)급여 수급가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며, 소득이나 재산, 가구주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주거급여 수급기간 분석시에도 가구주 연령이 0-17세인 아동가구주 및 소득재산분위가 높은 경우 표본수가 매우 작으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2015년 수급비율은 71.61%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분위별 2015년 수급비율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1-2분위 가구의 2015년 수급비율이 7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 수급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가구의 2015년 수급비율이 77.96%로 가장 높고, 25세 이하 가구를 제외하고는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 수급비율도 증가하였다. 이는 분석방법상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소득분위가 낮거나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급여의 탈수급 비율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소득과 연령을 동시에 고려하면 가구주연령이 75세 이상인 소득1-2분위의 가구의 경우 2015년 수급비율은 81.09%로 가장 높으며, 이는 2015-2017년 동안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3-2-13〉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2015년 주거급여 수급비율(2015, 2017년)

(단위: %)

연령 소득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74.06	72.25	69.24	77.33	77.78	78.10	81.09	78.15
3분위	100.00	69.58	58.33	71.48	68.60	53.11	55.88	65.69
4분위	100.00	67.52	53.25	68.19	61.55	36.28	42.94	59.78
5분위	.	71.44	43.61	62.36	55.40	40.15	45.72	55.43
6분위	.	74.69	32.17	44.93	45.13	27.85	25.98	44.10
7분위	100.00	76.76	26.05	35.66	32.07	20.52	45.42	36.28
8분위	.	85.42	15.62	17.03	25.44	12.99	26.35	25.44
9분위	.	51.59	13.38	22.78	16.42	0.00	0.00	18.15
10분위	.	100.00	32.71	13.15	10.10	15.32	33.45	20.85
계	74.95	71.13	58.83	70.41	70.99	71.84	77.96	71.61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2015년 주거급여 수급비율은 재산 1-4분위의 수급비율이 75.38%로 10가구 중 7.5가구 정도가 2015-2017년 동안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재산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 주거급여 수급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과 연령을 동시에 고려하면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재산1-4분위의 가구의 경우 2015년 수급비율은 8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2-14〉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2015년 주거급여 수급비율(2015, 2017년)

(단위: %)

연령 재산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4분위	74.55	71.54	61.02	73.60	74.63	76.73	82.93	75.38
5분위	.	69.12	62.88	67.80	66.36	68.83	72.02	68.42
6분위	100.00	55.42	39.14	50.63	51.67	43.37	46.35	48.02
7분위	.	64.18	21.78	21.44	19.94	13.02	10.18	17.54
8분위	.	34.89	22.36	15.59	10.96	7.01	20.60	14.19
9분위	.	.	25.04	15.83	7.18	7.09	7.51	9.49
10분위	.	100.00	15.14	9.44	13.41	6.39	18.63	13.67
계	74.95	71.13	58.83	70.41	70.99	71.84	77.96	71.61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는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의 2015년 수급비율이 79.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질수록 2015년 주거급여 수급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3-2-15〉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2015년 주거급여 수급비율(2015, 2017년)

(단위: %)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79.88	74.68	60.95	25.43	27.11	17.25	19.83	78.15
3분위	69.30	64.10	40.07	15.56	15.07	15.62	0.00	65.69
4분위	65.08	51.36	34.98	17.08	2.71	7.99	10.04	59.78
5분위	63.72	46.33	26.83	18.10	15.16	9.56	20.74	55.43
6분위	55.17	51.06	16.87	12.37	7.61	0.00	19.26	44.10
7분위	50.57	32.39	19.07	15.53	4.31	5.99	17.97	36.28
8분위	34.69	55.12	18.60	7.06	7.56	6.96	9.21	25.44
9분위	37.27	0.00	0.00	0.00	6.83	8.27	0.00	18.15
10분위	39.83	0.00	19.37	0.00	22.93	0.00	13.88	20.85
계	75.38	68.42	48.02	17.54	14.19	9.49	13.67	71.61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마. 주거급여 제도의 소득분배 효과

주거(임차)급여 제도의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 전후의 빈곤율 감소효과 및 지니계수 변화를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방법은 가처분 중위 25% 빈곤선과 가처분 중위 50% 빈곤선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전후 균등화 시장소득을 사용한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본다. 즉, 균등화 시장소득에 균등화한 주거급여 수급액을 더하여 빈곤율의 감소효과를 분석하고, 주거급여 수급 전후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사용한 빈곤율의 변화 분석도 병행한다. 이 경우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 균등화한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빈곤율을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지니계수의 변화를 분석한다.

균등화 중위소득 50% 빈곤선 기준으로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확인한 결과, 주거급여 수급 이전 빈곤율이 39.46%, 수급 이후 빈곤율은 39.42%로 0.04% 감소하였으며,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사용한 빈곤율의 경우 주거급여를 제외하면 0.26%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균등화 중위소득 25% 빈곤선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균등화 시장소득을 사용한 빈곤율은 주거급여 수급 이후 0.06% 낮아지고,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사용한 빈곤율의 경우 주거급여를 제외하면 0.17%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지니계수를 이용한 주거급여 제도의 불평등 변화 효과를 확인한 결과, 균등화시장소득을 이용한 지니계수는 주거급여 수급 이전 0.5912에서 주거급여 수급 이후에 0.5895로 0.0017 만큼 감소하여 불평등도가 개선된 효과를 보였으며,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경우 지니계수는 주거급여 제외 전 0.5144에서 주거급여 제외 후 0.5157로 0.0013 만큼 증가하여 주거급여로 인해 불평등도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2-3-2-16〉 주거급여 제도의 빈곤율 감소효과 및 불평등(지니계수) 변화 효과

(단위: %)

구 분		시장소득	시장소득+주거급여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주거급여
빈곤율	중위소득 50% 기준	39.46	39.42	33.97	34.23
	중위소득 25% 기준	32.36	32.30	22.02	22.19
지니계수		0.5912	0.5895	0.5144	0.5157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개요

분석에 앞서 본 절의 분석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개념과 유형, 유형별 소득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²¹⁾하며,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²²⁾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유형으로 구분²³⁾할 수 있다.

21) 공공주택특별법. 2019. 법률 제16417호(4월 30일 일부개정). 제2조

22) 주택법 제2조 제1호 : “주택”이란 세대(世帯)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019. 대통령령 제30179호(10월 29일 일부개정). 제2조

〈표 2-3-2-17〉 공공주택 유형 및 주요 내용

구분		사업 개요
공공분양주택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공공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자료: 이길제 외. 2019.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국토연구원(재인용)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70%, 100%, 120%를 경계로 유형별 입주자격을 설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가 일반적인 소득기준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입주자격에 차이가 있으며, 전용면적 50㎡와 60㎡를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 70%, 100%로 구분된다. 참고로 전용면적 50㎡이하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에 우선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대학생·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소득기준의 상한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를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인 이하 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월소득 244.2만원 이하이다.

〈표 2-3-2-18〉 2017년 적용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월)

구분	가구당 소득(100%)	가구당 소득(50%)	가구당 소득(70%)
3인 이하 가구	4,884,448원	2,442,220원	3,419,110원
4인 가구	5,630,275원	2,815,130원	3,941,190원
5인 가구	5,630,275원	2,815,130원	3,941,190원
6인 가구	5,952,668원	2,976,330원	4,166,860원

자료: 국토교통부(2017). 2017년 주택업무편람

자산기준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2/5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은 소득 3/5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분양전환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공공임대주택 거주 현황

주거보장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현황은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LH)와 지자체 중 서울(SH)의 공공임대주택만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별 재고 비중은 중앙정부(LH) 103.2만호(70.8%), 지자체 26.5만호(18.2%), 민간건설 16.0만호(11.0%)이다. 중앙정부(LH)의 재고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지자체 중 서울(SH)의 비중($75.1\% = 19.9\text{만호} / 26.5\text{만호}$)이 높기는 하지만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사용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낮게 분석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도 기본적으로 무주택 임차가구를 공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는 임차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임차가구의 분포를 분석하여 참고하였다. 분석결과 월세 가구의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구간은 소득 3분위 이하, 재산 3분위 이하로 나타나며, 해당 구간의 경우 임차급여의 지급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3-2-19〉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별 임차(전세, 월세) 가구 분포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2017년)

(단위: %)

소득 \ 재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분위	58.4	54.9	32.8	15.5	9.6	16.1	17.9	14.0	3.8	6.5	43.0
2분위	68.9	69.1	36.6	13.8	10.3	14.3	10.8	13.4	10.3	19.5	40.4
3분위	76.3	79.9	52.5	29.3	11.4	11.9	9.0	9.4	7.3	14.1	42.1
4분위	75.4	80.4	60.9	35.4	18.1	17.8	8.4	14.0	10.1	12.7	39.4
5분위	83.8	84.2	62.0	50.5	28.6	22.0	16.3	9.4	11.6	17.4	39.0
6분위	71.7	74.9	75.2	44.2	27.7	20.6	12.5	11.0	10.1	13.4	32.5
7분위	54.9	79.5	73.4	50.0	22.6	23.8	18.0	12.9	15.7	12.8	29.6
8분위	74.2	87.5	64.0	42.2	29.9	21.2	13.2	16.1	12.6	14.7	24.8
9분위	21.9	72.6	60.9	44.4	30.1	24.8	19.1	17.3	15.7	18.1	22.4
10분위	100.0	78.0	86.8	30.2	40.3	19.5	23.6	15.0	14.8	19.4	19.4
계	67.2	72.6	54.9	35.5	22.6	20.1	15.3	13.9	13.4	17.0	33.3

자료 :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적접근 원자료

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율 분석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비율을 ①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②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③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분석에 사용되지 않고, 중앙정부(LH)와 지자체 중 서울(SH)의 재고만이 사용되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재고를 제외한 물량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주가구 비율의 해석시 과소 추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분석에 사용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104.8만호(LH : 85.9만호, SH : 18.8만호)이며,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71.9%이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율 분석에 있어서도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1-2분위의 구분이 되지 않고, 재산분위의 경우 재산 1-4분위가 구분되지 않아 분석의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4.22%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⁴⁾.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5분위 가구까지 5% 대의 유사한 거주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구주 연령별로는 65-74세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5.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1-2분위 중 가구주 연령이 50-64세인 가구의 거주비율이 6.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같은 연령대의 소득 3분위 가구의 거주비율이 6.34%로 높았다.

〈표 2-3-2-20〉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2017년)

(단위: %)

연령 소득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76	1.22	3.77	5.27	6.68	6.23	5.09	5.56
3분위	0.00	1.70	5.02	6.16	6.34	5.12	4.47	5.47
4분위	55.93	1.39	4.80	6.17	5.84	5.11	4.19	5.38
5분위	.	1.50	4.84	6.13	5.91	5.54	4.45	5.54
6분위	.	2.00	4.74	5.47	5.13	4.51	4.00	4.93
7분위	100.00	1.28	3.95	4.58	4.52	3.85	3.17	4.20
8분위	.	1.81	2.83	3.06	3.21	3.04	2.21	2.99
9분위	.	1.65	2.06	1.56	1.86	1.72	1.30	1.82
10분위	.	0.96	0.85	0.79	0.61	0.73	0.59	0.72
계	2.24	1.52	3.42	4.12	4.52	5.16	4.65	4.22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재산 5분위 가구가 7.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산 1-4분위 가구가 7.8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연령이 65-74세인 재산 1-4분위 가구의 거주비율이 12.2%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재산분위는 5분위와 6분위간 격차가 크게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7분위 이상 가구의 경우는 거주가구 비율이 매우 낮았다.

24) 이는 2017년 총 가구수(20,167,922가구) 대비 LH 및 SH 공공임대주택 재고(104.8만 가구) 비율인 5.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표 2-3-2-21〉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2017년)

(단위: %)

연령 재산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4분위	2.19	1.56	4.91	8.12	9.32	12.19	10.69	7.81
5분위	0.00	2.07	5.49	7.53	9.15	11.17	5.11	7.98
6분위	9.98	1.14	2.00	2.59	2.62	2.17	1.18	2.23
7분위	0.00	0.26	0.34	0.37	0.45	0.42	0.19	0.39
8분위	0.00	0.77	0.16	0.19	0.25	0.26	0.14	0.21
9분위	0.00	0.54	0.15	0.14	0.15	0.18	0.09	0.15
10분위	.	0.00	0.10	0.12	0.14	0.12	0.04	0.12
계	2.24	1.52	3.42	4.12	4.52	5.16	4.65	4.22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분석결과를 대체로 재산 분위가 낮고 소득 분위가 낮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및 재산 5분위의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나타났다. 특히, 소득 5분위·재산 5분위의 거주비율이 10.82%로 가장 높고, 소득 6분위·재산 5분위 10.73%, 소득 3분위·재산 5분위 10.54%의 순으로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서 자산기준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2/5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은 소득 3/5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자산기준이 구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기준 유형별 재고는 영구임대 21.7만호, 국민임대 52.4만호 수준이다. 이처럼 입주자격에서 소득 및 자산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임대의 물량이 많은 것이 재산 5분위의 거주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2-22〉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2017년)

(단위: %)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9.08	6.37	1.55	0.30	0.19	0.13	0.08	5.56
3분위	8.84	10.54	2.61	0.51	0.29	0.28	0.21	5.47
4분위	8.88	9.69	2.74	0.42	0.32	0.23	0.15	5.38
5분위	9.90	10.82	3.07	0.55	0.35	0.12	0.10	5.54
6분위	9.02	10.73	2.49	0.55	0.16	0.19	0.24	4.93
7분위	8.01	9.52	2.70	0.31	0.23	0.21	0.07	4.20
8분위	6.08	7.97	2.30	0.33	0.17	0.14	0.10	2.99
9분위	3.98	4.44	2.06	0.24	0.13	0.08	0.12	1.82
10분위	1.65	1.80	1.10	0.34	0.17	0.11	0.10	0.72
계	7.81	7.98	2.23	0.39	0.21	0.15	0.12	4.22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나.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 분석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전환임대료로 환산하여 ①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②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③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고, 유형별로 임대유기기간과 주택규모, 임대조건,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이 각각 다르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주로 임대료 부담능력이 취약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은 자가 구입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분양전환공공임대, 장기전세 등은 정부지원시 자가구입이 가능한 중산화 가능계층을 주요 공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규모가 다르고, 입주가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수준도 다르다. 그러므로 소득 및 재산분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전환임대료를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단, 분석시 가구주 연령이 0-17세인 아동가구주의 경우 및 소득 및 재산분위가 높은 경우 표본수가 매우 작아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 산정시 전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2017년 6월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6.5%를 적용하였다.

전체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는 약 30.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각 계층별 전환임대료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전환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국민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높은 곳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소득 1-2분위의 전환임대료는 월 18.7만원인 것에 비해 소득 10분위의 전환임대료는 64.6만원에 달하며, 소득5분위의 경우 월 32.4만원 수준이다. 가구주 연령별 전환임대료는 가구주연령 18-25세를 제외하고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환임대료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가구주 연령 26-39세의 전환임대료가 37.2만원으로 가장 높고, 75세 이상의 전환임대료는 20.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 2-3-2-23〉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2017년)

(단위: 만원)

연령 소득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2.8	21.6	26.4	22.9	17.0	18.2	17.3	18.7
3분위	.	21.5	31.1	29.1	26.0	28.1	25.6	27.6
4분위	16.6	18.8	33.6	32.3	27.8	29.8	28.7	30.1
5분위	.	23.9	35.4	35.1	30.2	30.8	31.5	32.4
6분위	.	26.3	38.1	36.8	33.2	32.0	29.3	34.9
7분위	16.2	24.7	38.6	41.7	33.5	33.2	31.8	36.9
8분위	.	25.9	42.1	45.2	36.9	38.0	32.6	40.6
9분위	.	33.4	44.7	55.4	44.8	37.0	44.4	47.0
10분위	.	30.2	59.5	68.6	68.7	39.9	50.3	64.6
계	13.6	23.6	37.2	35.9	28.6	24.6	20.2	30.1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분위와 마찬가지로 재산분위가 높아질수록 전환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재산 1-4분위의 전환임대료는 월 29.1만원인 것에 비해 재산 10분위의 전환임대료는 93.7만원에 달하며, 재산5분위의 경우 월 30.8만원 수준이다.

〈표 2-3-2-24〉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2017년)

(단위: 만원)

연령 재산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4분위	14.0	23.2	36.6	35.1	27.0	23.4	19.6	29.1
5분위	.	19.3	40.5	36.6	31.0	27.0	21.8	30.8
6분위	5.1	37.8	42.3	40.7	36.6	31.3	26.9	36.3
7분위	.	105.3	47.0	50.7	44.7	33.1	45.4	44.6
8분위	.	9.8	50.5	51.1	50.0	44.7	35.3	48.3
9분위	.	27.1	57.7	55.2	77.9	57.9	26.5	63.5
10분위	.	.	80.0	102.8	94.7	95.3	28.2	93.7
계	13.6	23.6	37.2	35.9	28.6	24.6	20.2	30.1

주: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의 경우 소득 1-2분위에서 재산 1-4분위와 재산 5분위 가구가 각각 18.3만원, 18.9만원이었으며, 해당 분위의 전환임대료는 20만원 미만 수준이었다. 표본수가 불충분한 집단을 제외하였을 때, 소득 및 재산 분위별 전환임대료는 18.3만원부터 60.3만원 까지 격차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환임대료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 대상의 폭이 넓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도 입주자격과 연계되어 매우 다양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전환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주택상태 등 주거환경의 수준을 반영하기도 하므로, 결과해석시 이와 같은 양면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3-2-25〉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전환임대료(2017년)

(단위: 만원)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8.3	18.9	23.6	30.6	38.5	31.9	76.7	18.7
3분위	26.7	29.0	31.4	36.9	53.0	47.7	99.1	27.6
4분위	29.7	31.6	32.4	35.5	40.0	44.0	44.6	30.1
5분위	31.8	33.8	35.6	35.4	46.3	75.9	50.9	32.4
6분위	34.1	34.0	38.6	46.9	38.3	75.8	99.0	34.9
7분위	36.4	36.7	39.3	46.5	42.9	52.3	110.2	36.9
8분위	39.2	40.4	47.1	58.7	56.0	94.9	82.0	40.6
9분위	44.7	50.7	54.8	61.4	68.2	101.3	85.2	47.0
10분위	60.3	66.5	65.9	83.9	66.7	71.0	133.3	64.6
계	29.1	30.8	36.3	44.6	48.3	63.5	93.7	30.1

주: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분석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거주기간을 ①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②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③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유형에 따라 거주가능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임대료 부담수준이나 주거환경 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이와 같은 혜택을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구의 편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공공임대 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이동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해당 공공임대주택 전체 거주 개월 수)을 분석함으로써 거주 지속성과 주거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분석시에도 가구주 연령이 0-17세인 아동가구주의 경우 및 소득 및 재산분위가 높은 경우 표본수가 매우 작으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84.7개월이며, 이를 연 기준으로 환산하면 7.06년이다. 소득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의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 1-2분위의 수급기간이 99.1개월이 넘는 수준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거주기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1-2분위·75세이상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120.5개월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었다.

〈표 2-3-2-26〉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2017년)

(단위: 개월)

연령 소득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52.8	36.5	51.2	67.5	94.7	110.8	120.5	99.1
3분위	.	45.3	47.0	66.8	88.9	107.2	107.0	82.1
4분위	139.5	43.3	46.3	65.3	88.0	113.2	121.2	79.8
5분위	.	30.4	47.5	65.9	90.3	113.2	120.2	80.7
6분위	.	34.5	45.9	66.3	93.9	114.9	137.2	78.5
7분위	105.5	33.9	45.1	68.7	96.9	123.9	133.8	77.3
8분위	.	20.7	41.5	68.9	100.8	124.9	147.4	75.7
9분위	.	25.0	39.6	71.2	102.1	139.8	117.3	74.1
10분위	.	7.4	46.6	70.3	90.6	152.2	111.8	73.9
계	70.1	35.6	45.6	67.2	93.2	112.7	120.5	84.7

주: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을 보면, 재산 5분위의 거주기간이 88.1개월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산 6분위의 거주기간이 85.7개월로 나타나 재산분위의 경우 소득분위 만큼 거주기간과의 상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재산 1-4분위의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 거주기간이 122.5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표 2-3-2-27〉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2017년)

(단위: 개월)

연령 재산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4분위	72.7	34.7	45.3	67.2	93.9	114.5	122.5	84.7
5분위	.	115.5	48.2	62.5	94.7	100.5	105.7	88.1
6분위	20.5	23.9	53.9	70.8	87.3	110.6	107.3	85.7
7분위	.	3.0	39.2	71.7	87.0	90.5	76.9	76.9
8분위	.	121.0	50.0	63.5	79.1	94.9	108.3	76.4
9분위	.	1.1	45.1	59.3	79.2	74.4	51.2	67.0
10분위	.	.	42.3	56.8	77.6	72.9	43.2	67.5
계	70.1	35.6	45.6	67.2	93.2	112.7	120.5	84.7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재산분위별 거주기간으로는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의 수급기간이 99.8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소득과 재산이 높아질수록 거주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2-3-2-28〉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2017년)

(단위: 개월)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99.8	93.7	92.5	88.4	76.0	60.8	81.6	99.1
3분위	82.0	86.8	82.4	81.3	85.8	64.1	49.0	82.1
4분위	79.7	76.1	81.5	94.6	93.8	68.8	77.4	79.8
5분위	79.9	89.8	86.5	72.2	85.2	60.9	83.1	80.7
6분위	78.1	85.2	83.1	63.9	71.0	75.8	77.0	78.5
7분위	75.6	93.0	88.4	71.0	75.9	81.3	88.9	77.3
8분위	74.8	88.1	79.1	68.1	84.4	63.8	65.4	75.7
9분위	72.5	83.3	89.2	89.2	47.8	71.6	45.9	74.1
10분위	74.9	95.1	76.4	70.4	46.0	52.9	64.9	73.9
계	84.7	88.1	85.7	76.9	76.4	67.0	67.5	84.7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2015년 거주 비율 분석

2017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2015년 거주가구의 비율을 ①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②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③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며, 소득이나 재산, 가구주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01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 분석시에도 가구주 연령이 0-17세 인 아동가구의 경우 및 소득 및 재산분위가 높은 경우 표본수가 매우 작으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

요하다.

2017년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2015년 거주비율은 79.22%로 2015-2017년 동안 10가구 중 약 8가구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인 71.61%보다 7.61%p 높았다. 소득분위별 2015년 거주비율은 소득 1-2분위 가구의 2015년 거주비율이 80.89%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 87.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 분위가 높아질수록 2015년 거주비율이 높아졌으나, 소득분위의 경우에는 2015년 거주비율과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표 2-3-2-29〉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201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2015, 2017년)

(단위: %)

연령 소득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70.78	43.14	63.84	75.01	81.33	82.10	86.79	80.89
3분위	.	44.51	63.68	77.95	81.70	83.36	88.08	78.60
4분위	100.00	41.14	65.42	78.57	83.25	84.75	87.53	79.24
5분위	.	37.55	66.52	79.58	84.24	89.34	92.09	80.84
6분위	.	38.01	65.84	81.64	86.38	85.93	91.21	80.16
7분위	100.00	34.34	60.40	81.35	85.14	87.88	96.61	77.40
8분위	.	20.88	55.08	83.03	85.68	87.80	89.16	75.47
9분위	.	19.45	51.98	82.51	87.17	87.71	85.74	73.39
10분위	.	14.41	59.56	83.07	82.91	91.27	91.69	76.56
계	77.35	37.32	61.80	79.60	83.66	84.18	87.51	79.22

주: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201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은 재산 6분위의 2015년 거주비율이 83.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재산 5분위 81.25%, 재산 1-4분위 78.96%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 1-4분위·75세 이상 가구의 2015년 거주비율이 88.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재산 6분위·65-74세 가구가 87.43%로 높았다.

〈표 2-3-2-30〉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201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2015, 2017년)

(단위: %)

연령 재산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4분위	81.37	36.52	61.56	79.53	83.60	84.26	88.07	78.96
5분위	.	100.00	61.70	79.40	84.56	83.60	81.10	81.25
6분위	0.00	38.82	68.52	82.53	84.92	87.43	86.32	83.08
7분위	.	0.00	61.91	80.03	82.61	75.62	75.89	77.52
8분위	.	100.00	55.48	63.90	77.60	78.87	93.06	72.94
9분위	.	0.00	68.88	86.11	77.86	64.21	66.16	75.55
10분위	.	.	64.10	71.88	80.60	74.06	46.04	74.95
계	77.35	37.32	61.80	79.60	83.66	84.18	87.51	79.22

주: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201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은 소득 7분위·재산 6분위 가 약 8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및 재산분위는 2015년 거주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의 차이²⁵⁾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0년 이상으로 임대기간이 길고, 퇴거기준이 입주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퇴거율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2-31〉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201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2015, 2017년)

(단위: %)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81.15	77.74	79.61	80.75	74.35	60.01	66.14	80.89
3분위	78.31	81.49	81.62	77.86	74.30	73.62	71.46	78.60
4분위	78.91	81.86	81.33	84.44	80.00	83.83	72.46	79.24
5분위	80.49	83.65	85.38	81.01	68.48	66.90	86.10	80.84
6분위	79.86	83.36	83.10	78.80	63.74	82.38	82.72	80.16
7분위	76.60	82.21	86.11	69.81	73.07	79.42	79.92	77.40
8분위	74.45	81.48	85.71	65.04	90.55	66.06	61.68	75.47
9분위	71.86	82.79	83.19	80.94	64.05	85.20	73.74	73.39
10분위	75.42	86.68	87.41	73.28	63.15	80.82	77.24	76.56
계	78.96	81.25	83.08	77.52	72.94	75.55	74.95	79.22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5. 주거보장 종합

일반적으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금융지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득보장 측면에서 주거급여와 서비스보장 측면에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다. 즉, 주거보장은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종합하여 두 지원 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지원을 받는 가구에 대해 주거보장 비율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현행 제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거주유형은 공공임대 29.3만 가구(39.7%), 민간임대 26.0만 가구(35.3%), 사용대차 17.7만 가구(24.0%), 시설 0.7만 가구(0.9%)의 순이며,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비율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지원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가구주 연령에 따라 보장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도록 한다.

2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기간은 영구임대(영구), 50년 임대(50년), 국민임대(30년), 행복주택(30년), 10년 공공임대(10년), 장기전세(20년), 매입임대(20년)임

가. 주거복지 보장비율 분석

주거(임차)급여를 지급받거나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①소득분위별·가구주 연령별, ②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③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주거복지 보장 비율의 경우에도 분석시 가구주 연령이 0-17세인 아동가구주 및 소득·재산분위가 높은 경우 표본수가 매우 작아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 가구 중 주거급여를 지급받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6.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이 3.63%,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4.22%이고, 합산한 값이 7.85%임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을 중복으로 수혜받는 가구가 0.94%임을 예상할 수 있다. 소득분위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의 분석결과, 소득 1-2분위의 주거복지 보장 비율이 13.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거복지 보장 비율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1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이 25세 이하인 가구를 제외하는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복지 보장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1-2분위·50-64세 가구의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1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2-32〉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2017년)

(단위: %)

연령 소득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6.65	6.85	8.13	13.16	17.05	14.43	12.47	13.66
3분위	100.00	6.80	7.81	12.35	11.66	8.50	8.06	10.11
4분위	55.93	6.33	6.28	9.20	8.69	6.99	6.52	7.96
5분위	.	5.54	5.68	7.51	7.23	6.41	5.90	6.81
6분위	.	4.56	5.08	6.17	5.81	5.15	5.26	5.61
7분위	100.00	2.75	4.13	4.96	4.98	4.20	3.81	4.58
8분위	.	2.67	2.96	3.29	3.50	3.36	2.83	3.24
9분위	.	2.09	2.12	1.70	2.05	1.98	1.39	1.96
10분위	.	1.73	0.87	0.83	0.69	0.86	0.89	0.79
계	17.24	5.26	4.31	6.13	7.32	9.33	10.33	6.91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주거복지 보장비율 분석결과를 보면 재산 5분위의 보장비율이 12.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재산 1-4분위가 12.64%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재산 1-4분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재산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거복지 보장 비율로 낮아졌으며, 특히 재산 5분위와 6분위간 격차가 8.95%p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표 2-3-2-33〉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2017년)

(단위: %)

연령 재산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4분위	17.44	5.38	6.13	12.02	15.06	21.75	22.79	12.64
5분위	0.00	8.90	6.87	10.55	13.47	18.44	12.27	12.69
6분위	23.85	3.94	2.50	3.76	4.04	4.17	3.45	3.74
7분위	0.00	1.66	0.62	0.81	1.02	1.30	1.19	0.97
8분위	0.00	2.43	0.33	0.42	0.58	0.73	0.94	0.55
9분위	0.00	0.54	0.21	0.28	0.38	0.59	0.45	0.36
10분위	.	2.29	0.17	0.20	0.29	0.27	0.31	0.26
계	17.24	5.26	4.31	6.13	7.32	9.33	10.33	6.91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의 분석결과 소득 및 재산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복지 보장 비율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주거복지 보장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지만, 재산분위는 6분위부터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의 주거복지 보장은 재산수준을 더 엄격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 1-2분위·재산1-4분위의 경우 주거복지 보장비율은 22.01%로 구분이 가능한 최저소득 재산계층의 경우 10가구 중 2가구 이상이 주거급여 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34〉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복지 보장 비율(2017년)

(단위: %)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22.01	16.11	4.52	1.24	0.73	0.43	0.29	13.66
3분위	16.19	17.61	5.13	1.56	1.03	0.65	0.45	10.11
4분위	12.84	13.86	4.40	1.32	0.76	0.68	0.47	7.96
5분위	11.83	12.70	4.17	1.15	0.97	0.39	0.26	6.81
6분위	9.98	11.74	3.12	1.11	0.49	0.42	0.41	5.61
7분위	8.47	10.18	3.25	0.68	0.45	0.40	0.27	4.58
8분위	6.39	8.33	2.59	0.59	0.34	0.26	0.23	3.24
9분위	4.14	4.73	2.20	0.43	0.27	0.22	0.16	1.96
10분위	1.72	1.80	1.19	0.45	0.22	0.18	0.15	0.79
계	12.64	12.69	3.74	0.97	0.55	0.36	0.26	6.91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나.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

주거(임차)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①소득분위별·가구주연

령별, ②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③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시 가구주 연령이 0-17세인 아동가구주 및 소득·재산분위가 높은 경우 표본수가 매우 작아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전체 가구의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은 0.94%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3.63%)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4.22%)의 합에서 주거급여 또는 공공임대주택 보장 비율(6.91%)을 차감한 결과와 동일하다. 소득분위별 주거복지 중복비율 분석결과, 소득 1-2분위의 주거복지 보장 비율이 3.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가구의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이 25세 이하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1-2분위·50-64세 가구의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2-35〉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2017년)

(단위: %)

연령 소득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63	0.65	1.30	2.82	4.06	3.33	2.66	3.02
3분위	0.00	0.93	0.96	1.94	2.07	1.35	1.19	1.62
4분위	28.21	0.51	0.42	1.07	1.08	0.51	0.60	0.84
5분위	.	0.30	0.18	0.53	0.52	0.28	0.38	0.42
6분위	.	0.17	0.07	0.17	0.15	0.10	0.20	0.13
7분위	100.00	0.05	0.02	0.06	0.08	0.10	0.14	0.06
8분위	.	0.08	0.01	0.01	0.04	0.00	0.05	0.02
9분위	.	0.06	0.00	0.01	0.00	0.00	0.00	0.00
10분위	.	0.00	0.01	0.00	0.01	0.00	0.00	0.01
계	1.94	0.44	0.25	0.67	1.05	1.63	2.00	0.94

주: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비율 분석결과를 보면 재산 1-4분위의 보장비율이 1.85%로 가장 높고, 재산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복지 보장비율과 마찬가지로 중복 보장 비율도 재산 5분위와 재산 6분위간 격차가 1.29%p로 다른 구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재산 1-4분위·75세 이상 가구의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2-36〉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2017년)

(단위: %)

연령 재산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4분위	1.88	0.46	0.37	1.40	2.33	4.19	4.85	1.85
5분위	0.00	0.42	0.22	0.98	1.71	2.55	1.63	1.51
6분위	9.98	0.16	0.08	0.15	0.27	0.28	0.23	0.22
7분위	0.00	0.00	0.01	0.02	0.01	0.01	0.01	0.01
8분위	0.00	0.38	0.00	0.01	0.00	0.01	0.01	0.01
9분위	0.00	0.00	0.01	0.01	0.00	0.01	0.02	0.01
10분위	.	0.00	0.00	0.01	0.00	0.00	0.01	0.00
계	1.94	0.44	0.25	0.67	1.05	1.63	2.00	0.94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의 분석결과 소득 및 재산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 가구의 경우 중복 보장 비율은 5.09% 수준으로, 해당 집단의 20가구 중 1가구는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37〉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주거복지 중복 보장 비율(2017년)

(단위: %)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5.09	2.95	0.50	0.02	0.01	0.02	0.00	3.02
3분위	2.75	2.87	0.41	0.05	0.00	0.05	0.00	1.62
4분위	1.45	1.46	0.25	0.02	0.00	0.00	0.02	0.84
5분위	0.79	0.63	0.12	0.01	0.02	0.00	0.01	0.42
6분위	0.25	0.26	0.03	0.02	0.00	0.00	0.02	0.13
7분위	0.12	0.22	0.03	0.00	0.01	0.00	0.00	0.06
8분위	0.05	0.04	0.00	0.00	0.01	0.00	0.00	0.02
9분위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분위	0.01	0.09	0.00	0.00	0.00	0.00	0.00	0.01
계	1.85	1.51	0.22	0.01	0.01	0.01	0.00	0.94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다. 주거복지 보장가구 중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 분석

2017년 주거복지 보장가구 중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을 ①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②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③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주거복지 보장가구 가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며, 소득이나 재산, 가구주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단, 다른 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석시 가구주 연령이 0-17세인 아동가구주

의 경우 및 소득 및 재산분위가 높은 경우 표본수가 매우 작으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 전체 주거복지 보장가구 중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은 76.62%이다. 소득분위별 2015년 주거복지 보장비율 분석결과, 소득 1-2분위의 가구가 80.24%이며, 대체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2015년 주거복지 보장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 75세 이상 가구의 2015년 주거복지 보장비율이 8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이 25세 이하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 1-2분위·75세 이상 가구의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은 83.67%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표 2-3-2-38〉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2015, 2017년)

(단위: %)

연령 소득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74.25	70.03	69.16	78.77	79.96	80.81	83.67	80.24
3분위	100.00	66.24	63.58	76.28	75.91	70.83	72.71	73.34
4분위	100.00	64.09	63.48	76.11	75.42	71.00	70.57	72.92
5분위	.	65.04	63.35	76.81	78.76	81.68	78.29	76.00
6분위	.	59.77	63.97	77.23	81.14	79.04	75.17	75.72
7분위	100.00	60.86	59.26	78.13	79.86	83.26	87.12	74.12
8분위	.	42.69	53.98	78.77	80.53	80.67	75.80	71.93
9분위	.	27.68	51.90	77.67	80.70	76.25	80.43	69.80
10분위	.	52.46	59.68	79.18	75.11	80.08	72.19	72.34
계	75.39	63.97	62.11	77.49	78.81	78.94	82.16	76.62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2017년 대비 2015년 주거복지 보장비율 분석결과를 보면 재산 1-4분위의 보장비율이 78.45%로 가장 높고, 재산 9분위 이상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재산수준이 높아질수록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재산 1-4분위·75세 이상 가구의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이 8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2-39〉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2015, 2017년)

(단위: %)

연령 재산	0-17세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65-74세	75세-	계
1-4분위	75.00	64.12	62.50	78.89	80.66	82.03	86.13	78.45
5분위	.	79.54	62.56	77.74	78.71	78.99	76.62	77.22
6분위	100.00	48.82	62.85	72.39	72.53	65.35	58.61	68.20
7분위	.	54.05	45.66	47.24	47.90	32.90	20.05	41.17
8분위	.	45.25	39.27	35.97	39.38	31.21	30.66	36.12
9분위	.	0.00	53.88	49.27	37.25	24.68	17.89	36.41
10분위	.	100.00	42.96	45.65	45.18	35.36	19.59	41.44
계	75.39	63.97	62.11	77.49	78.81	78.94	82.16	76.62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2017년 주거복지 보장가구 중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의 분석결과, 소득 및 재산수준이 낮을수록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 가구의 경우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은 81.73%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즉, 해당 집단의 경우 2017년 주거복지 보장을 받는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2015년에도 주거복지 보장을 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 및 재산 분위와 가구주 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2017년 동안 주거복지 보장의 지속성은 가구주 연령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2-40〉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2015년 주거복지 보장 비율(2015, 2017년)

(단위: %)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81.73	77.25	66.65	37.83	38.45	30.97	34.82	80.24
3분위	75.53	74.77	60.16	34.60	31.54	34.17	33.62	73.34
4분위	75.11	72.90	63.31	39.02	35.70	33.50	26.39	72.92
5분위	78.11	78.32	69.74	48.24	32.71	30.21	42.73	76.00
6분위	77.74	80.25	69.42	43.91	27.53	36.84	57.19	75.72
7분위	75.59	79.18	74.50	40.44	37.56	44.47	34.93	74.12
8분위	72.84	80.84	78.32	40.87	46.04	38.25	32.44	71.93
9분위	71.07	77.69	78.02	44.01	35.13	34.36	52.86	69.80
10분위	74.37	89.75	82.61	58.88	53.20	50.65	54.23	72.34
계	78.45	77.22	68.20	41.17	36.12	36.41	41.44	76.62

주 : 표의 음영표시 부분은 표본 수가 100개 이하로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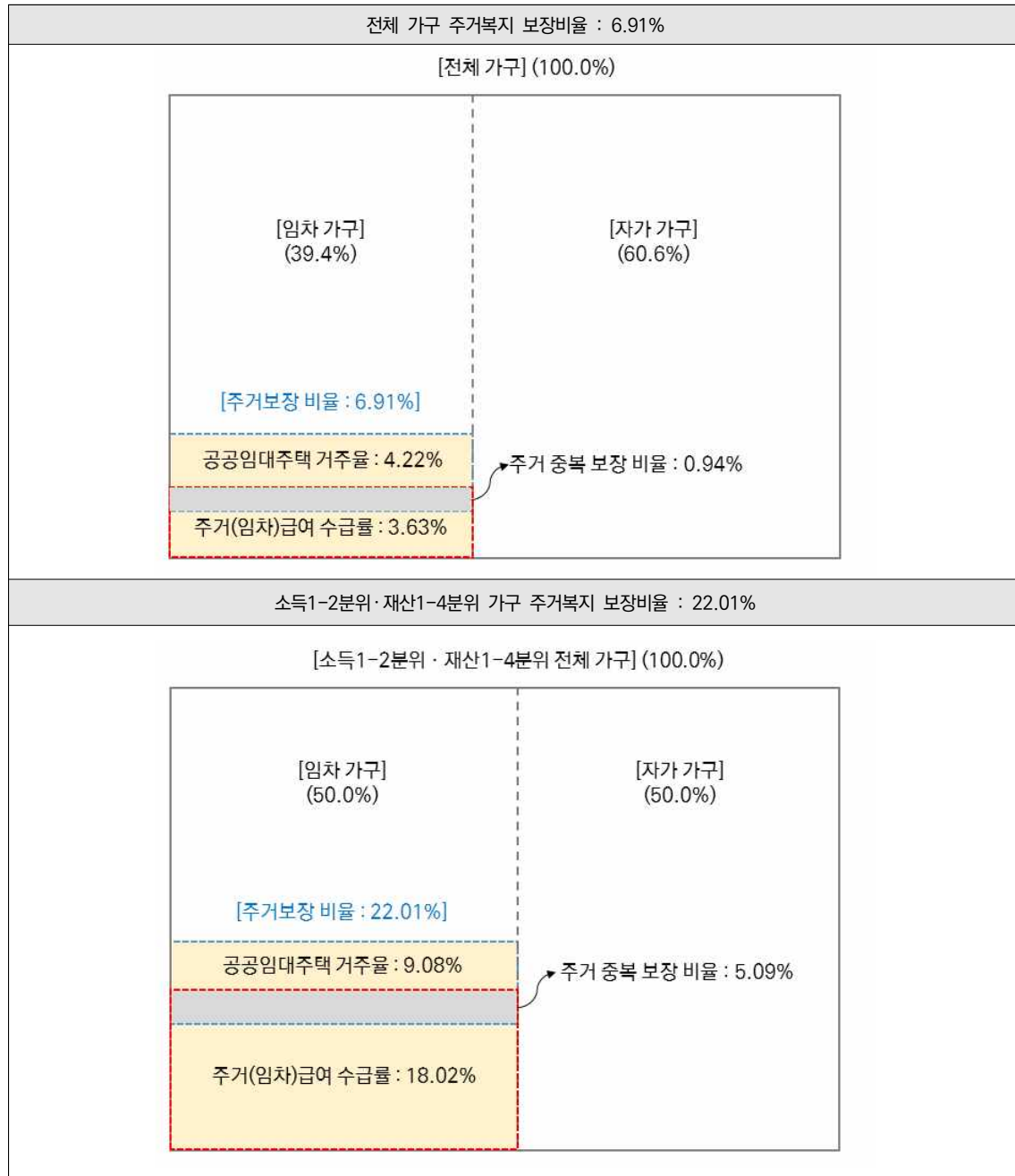
라. 분석 종합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종합하여 주거급여를 지급받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보장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이 3.63%,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4.22%이며²⁶⁾, 둘 중 하나라도 지원받는 주거보장 비율은 6.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을 중복으로 수혜받는 가구의 비율은 0.94%였다. 이를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로 한정했을 때, 해당 집단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은 18.02%,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은 9.08%이며, 주거보장 비율은 22.01%, 주거복지 중복보장 비율은 5.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급여(임차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의 임차가구 비율인 50.04%임을 고려하면 소득 1-2분위·재산 1-4분위 임차가구의 43.98%가 주거복지를 지원받고 있다. 이는 무주택 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거복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2018년 10월에 폐지된 부양

26) 분석에 사용된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제외한 LH와 SH의 재고물량이며,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71.9% 수준이므로, 분석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비율이 과소 추정되었음을 고려해야 함

의무자 기준과 함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늘려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복지 보장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2-3-2-1] 주거복지 보장 비율 분석 종합



제3절 교육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교육급여수급자는 표본가구 중 1.33%였다. 수급자는 표본 중 .83%였다. 장학금수급가구는 4.77%, 수급자는 2.2%였다. 긴급지원 수급가구는 표본 중 그 수가 너무 작아 별도의 분석을 할 수 없었다.

〈표 2-3-3-1〉 교육지원별 수급자, 수급가구 규모

(단위: 명, 가구, %)

구분	수급자 수	수급자 비율 (전 인구 중)	수급가구 수	수급가구 비율 (전 가구 중)
교육급여	19,864.56	0.83	14842.002	1.33
장학금수급	52991.38	2.20	53154.37	4.77
긴급지원 중 교육지원	-	-	30.39	0.00

주 1) 가구의 소득은 연 단위임.
2) 긴급교육지원은 가구 단위 지급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교육급여와 긴급교육지원수급가구를 보면 소득 하위 3,4분위, 4-49세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수급률이 높았다. 학생이 있는 가구를 별도로 확인할 수 없어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므로 소득 1-2분위에 학생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높을 것을 고려하면 소득이 낮을 수록 교육급여와 긴급교육지원 수급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장학금 수급가구의 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50-64세 40-49세인 집단에서 높았다. 그리고 소득분위로는 4분위 5분위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높았다. 대학생이 자녀인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면 쉽게 해석이 가능한 결과이다. 중년의 부모와 함께 사는 대학생이 많고 그리고 이 가구들은 소득이 그리 낮지 않은 가구일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수급가구 비율도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3-3-2〉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급여, 긴급교육지원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1.78	2.59	5.72	1.56	0.38	0.28	1.66
3분위	2.19	3.65	9.56	3.15	0.78	0.76	3.54
4분위	1.67	2.43	7.09	2.27	0.90	1.22	3.16
5분위	1.54	1.47	5.04	1.47	0.48	0.63	2.17
6분위	0.96	0.32	1.63	0.61	0.39	0.46	0.77
7분위	0.56	0.09	0.60	0.28	0.28	0.15	0.31
8분위	0.51	0.03	0.19	0.16	0.15	0.31	0.14
9분위	0.16	0.03	0.12	0.08	0.19	0.12	0.08
10분위	0.00	0.01	0.02	0.02	0.07	0.16	0.02
계	1.37	0.86	2.93	1.05	0.47	0.43	1.33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3-3-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장학금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17.70	0.93	1.88	1.20	0.15	0.14	1.16
3분위	29.31	1.99	9.80	9.06	0.99	1.49	6.82
4분위	20.74	1.27	9.59	10.50	1.02	2.99	7.39
5분위	8.95	1.16	9.96	11.47	1.05	3.43	7.49
6분위	5.62	1.20	8.35	10.65	0.98	3.24	6.62
7분위	3.99	1.08	7.11	10.73	1.08	3.72	6.01
8분위	3.64	0.83	6.00	10.21	0.99	4.11	5.43
9분위	4.35	0.63	4.67	8.09	0.89	2.38	4.46
10분위	2.48	0.25	1.50	2.79	0.41	0.78	1.69
계	14.43	0.95	6.18	7.77	0.66	1.03	4.77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3-3-4〉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전체 교육지원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18.87	3.46	7.18	2.62	0.50	0.41	2.69
3분위	30.63	5.46	17.21	11.22	1.62	2.10	9.55
4분위	22.07	3.64	15.25	12.10	1.80	4.04	9.92
5분위	10.22	2.59	13.98	12.54	1.47	3.98	9.24
6분위	6.49	1.51	9.67	11.13	1.31	3.63	7.26
7분위	4.55	1.17	7.60	10.96	1.33	3.87	6.28
8분위	4.11	0.87	6.16	10.31	1.11	4.30	5.54
9분위	4.50	0.65	4.78	8.15	1.08	2.50	4.53
10분위	2.48	0.26	1.52	2.80	0.48	0.94	1.71
계	15.43	1.78	8.59	8.57	1.08	1.41	5.87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교육급여와 긴급교육지원 수급가구 비율을 보면 재산이 낮은 집단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높았다. 대학이전 연령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소득은 낮지 않아도 자가 등 부동산을 가진 가구가 많지 않을 것이고 교육급여와 긴급교육지원을 수급받는 가구 중 자가보유 가구는 매우 적을 것이므로 이 결과도 쉽게 이해가 된다. 장학금수급가구는 조금 상이하여서 재산 7분위, 8분위, 9분위, 5분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급가구가 분포하고 있다. 대학생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재산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을 수급받은 가구의 비율은 재산 7분위, 8분위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장학금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아 그 영향으로 전체 교육지원수급가구의 분포가 높은 재산분위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3-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급여·긴급교육지원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2.45	1.55	1.00	0.63	0.34	0.16	0.07	1.66
3분위	5.56	4.76	2.36	1.16	0.70	0.35	0.15	3.54
4분위	4.73	3.70	2.78	1.44	0.64	0.45	0.19	3.16
5분위	3.49	2.85	1.80	1.09	0.53	0.26	0.14	2.17
6분위	1.15	0.93	0.84	0.51	0.30	0.14	0.10	0.77
7분위	0.47	0.48	0.31	0.20	0.13	0.09	0.08	0.31
8분위	0.20	0.34	0.22	0.11	0.03	0.07	0.02	0.14
9분위	0.12	0.19	0.06	0.14	0.05	0.05	0.01	0.08
10분위	0.03	0.21	0.02	0.03	0.00	0.01	0.02	0.02
계	2.24	1.86	1.16	0.59	0.27	0.14	0.06	1.33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3-3-6〉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장학금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52	0.72	0.68	0.82	0.82	0.62	0.34	1.16
3분위	8.36	6.65	4.90	5.59	5.75	4.94	3.82	6.82
4분위	7.19	7.85	7.33	8.10	8.73	7.84	5.62	7.39
5분위	6.60	7.53	8.43	9.24	9.12	8.45	5.95	7.49
6분위	5.35	6.66	8.00	8.18	8.49	8.19	5.60	6.62
7분위	4.57	6.80	6.95	8.00	8.32	6.90	5.29	6.01
8분위	3.55	6.62	6.95	8.19	7.71	6.30	4.53	5.43
9분위	2.84	4.86	6.14	7.28	6.11	5.15	3.56	4.46
10분위	1.13	2.21	2.40	2.92	2.80	2.12	1.25	1.69
계	4.28	4.69	5.14	6.36	6.24	5.14	3.27	4.77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3-3-7〉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급여·긴급교육지원 장학금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3.79	2.13	1.60	1.38	1.15	0.78	0.40	2.69
3분위	12.66	10.21	6.63	6.42	6.38	5.23	3.95	9.55
4분위	10.97	10.70	9.64	9.25	9.20	8.20	5.79	9.92
5분위	9.41	9.91	9.95	10.01	9.50	8.69	6.07	9.24
6분위	6.29	7.44	8.73	8.58	8.77	8.31	5.71	7.26
7분위	4.96	7.28	7.22	8.19	8.44	6.98	5.37	6.28
8분위	3.71	6.86	7.13	8.27	7.74	6.35	4.55	5.54
9분위	2.94	5.04	6.20	7.41	6.15	5.19	3.57	4.53
10분위	1.16	2.43	2.43	2.95	2.80	2.13	1.26	1.71
계	6.14	6.22	6.11	6.83	6.46	5.27	3.33	5.87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수급자 개인단위 수급자 분포를 보면 가구단위의 분석결과와 상이하다. 이유는 수급자는 대부분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0-17세 연령집단에서 교육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소득 1-2분위, 3분위에서 수급자비율이 높다. 장학금은 18-25세 집단에서 가장 수급율이 높고 이 집단의 18.56%가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3분위, 4분위에서 수급자의 비율이 높다. 교육지원 전체 수급자의 비율을 보면 역시 대학장학금지원규모의 영향으로 18-25세 집단 중 수급자 비율이 매우 높다. 재산분위를 고려한 분석결과에서도 교육급여 수급자는 재산 1-5분위에서, 장학금은 재산 7분위, 6분위에서 수급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2-3-3-8〉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교육급여 수급자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15.33	4.90	0.04	0.02	0.02	0.01	0.00	1.61
3분위	13.05	5.99	0.01	0.01	0.02	0.00	0.00	2.54
4분위	8.87	4.03	0.00	0.00	0.01	0.00	0.00	2.00
5분위	5.48	2.64	0.01	0.00	0.00	0.00	0.00	1.26
6분위	1.65	0.99	0.00	0.00	0.00	0.00	0.00	0.41
7분위	0.51	0.50	0.00	0.00	0.00	0.00	0.00	0.15
8분위	0.21	0.22	0.00	0.00	0.00	0.00	0.00	0.06
9분위	0.12	0.11	0.00	0.00	0.00	0.00	0.00	0.04
10분위	0.04	0.03	0.00	0.00	0.00	0.00	0.00	0.01
계	3.86	1.76	0.00	0.00	0.01	0.00	0.00	0.83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3-3-9〉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장학금 수급자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0.00	16.43	0.84	0.31	0.11	0.02	0.00	0.80
3분위	0.00	28.81	1.53	0.64	0.26	0.02	0.00	3.61
4분위	0.00	26.05	1.12	0.58	0.22	0.03	0.00	3.42
5분위	0.00	23.57	1.01	0.55	0.22	0.03	0.01	3.24
6분위	0.00	21.19	0.82	0.45	0.18	0.01	0.00	2.76
7분위	0.00	19.78	0.71	0.46	0.18	0.04	0.00	2.42
8분위	0.00	17.82	0.60	0.35	0.15	0.01	0.00	2.13
9분위	0.00	12.96	0.46	0.27	0.12	0.00	0.01	1.72
10분위	0.00	4.62	0.24	0.08	0.06	0.00	0.00	0.64
계	0.00	18.56	0.72	0.38	0.16	0.02	0.00	2.2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3-3-10〉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전체 교육지원 수급자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15.33	20.22	0.87	0.33	0.13	0.03	0.00	2.36
3분위	13.06	32.96	1.54	0.66	0.28	0.02	0.00	5.94
4분위	8.87	29.01	1.12	0.58	0.23	0.03	0.00	5.29
5분위	5.48	25.56	1.02	0.55	0.22	0.03	0.01	4.42
6분위	1.65	21.93	0.82	0.45	0.19	0.01	0.00	3.14
7분위	0.51	20.21	0.71	0.46	0.18	0.04	0.00	2.56
8분위	0.21	17.98	0.60	0.35	0.15	0.01	0.00	2.19
9분위	0.12	13.05	0.46	0.27	0.12	0.00	0.01	1.75
10분위	0.04	4.64	0.24	0.08	0.06	0.00	0.00	0.65
계	3.86	19.86	0.73	0.39	0.17	0.02	0.00	2.9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3-3-11〉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급여 수급자 비율

(단위: %)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2.61	1.71	1.03	0.60	0.26	0.12	0.04	1.61
3분위	4.44	3.64	1.75	0.75	0.46	0.20	0.08	2.54
4분위	3.47	2.34	1.67	0.85	0.30	0.23	0.09	2.00
5분위	2.31	1.75	1.04	0.61	0.27	0.12	0.05	1.26
6분위	0.70	0.65	0.45	0.25	0.13	0.08	0.06	0.41
7분위	0.29	0.22	0.15	0.10	0.05	0.03	0.03	0.15
8분위	0.12	0.14	0.11	0.05	0.01	0.03	0.01	0.06
9분위	0.07	0.07	0.02	0.05	0.02	0.02	0.01	0.04
10분위	0.02	0.12	0.01	0.01	0.00	0.00	0.01	0.01
계	1.69	1.33	0.75	0.34	0.13	0.07	0.03	0.83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3-3-12〉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장학금 수급자 비율

(단위: %)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15	0.52	0.49	0.51	0.50	0.37	0.18	0.80
3분위	4.92	3.66	2.66	2.73	2.62	2.17	1.59	3.61
4분위	3.78	3.64	3.33	3.41	3.40	2.98	2.11	3.42
5분위	3.28	3.38	3.49	3.61	3.40	3.16	2.11	3.24
6분위	2.61	2.80	3.26	3.03	3.00	2.91	1.91	2.76
7분위	2.25	2.80	2.64	2.86	2.83	2.33	1.68	2.42
8분위	1.77	2.61	2.70	2.96	2.55	2.01	1.40	2.13
9분위	1.44	1.99	2.44	2.65	2.04	1.63	1.08	1.72
10분위	0.55	0.88	0.99	1.15	1.01	0.73	0.39	0.64
계	2.40	2.40	2.45	2.65	2.39	1.91	1.14	2.2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3-3-1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급여·간접교육지원·장학금 수급자 비율

(단위: %)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3.69	2.17	1.49	1.08	0.75	0.49	0.22	2.36
3분위	9.00	6.95	4.26	3.40	3.06	2.35	1.67	5.94
4분위	7.03	5.74	4.93	4.18	3.69	3.18	2.19	5.29
5분위	5.43	5.04	4.49	4.17	3.63	3.28	2.16	4.42
6분위	3.25	3.43	3.69	3.27	3.12	2.98	1.97	3.14
7분위	2.52	3.02	2.80	2.95	2.88	2.36	1.72	2.56
8분위	1.88	2.72	2.80	3.00	2.56	2.03	1.41	2.19
9분위	1.51	2.06	2.46	2.70	2.05	1.65	1.09	1.75
10분위	0.57	1.00	1.00	1.16	1.01	0.73	0.39	0.65
계	4.00	3.64	3.16	2.97	2.52	1.97	1.17	2.9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교육지원 수급액을 보면 대학장학금의 영향으로 가구주 연령이 18-25세인 집단과 50-64세인 집단에서 매우 높았다. 이 두 집단은 모두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이다. 소득분위별 수급액을 보아도 소득 6분위, 5분위에서 평균 수급액이 높다. 이 결과도 대학생의 분포와 무관하지 않다.

〈표 2-3-3-14〉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지원 평균 수급액

(단위: 만원)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355.47	126.47	152.63	224.86	129.76	168.26	200.23
3분위	360.46	158.66	296.42	406.30	269.20	328.95	337.70
4분위	372.18	149.37	320.04	406.52	262.51	339.43	351.16
5분위	352.60	176.59	331.95	406.24	295.57	381.19	363.03
6분위	329.86	242.32	358.35	387.87	299.18	382.70	368.40
7분위	300.03	245.03	320.50	355.97	314.58	350.35	337.55
8분위	235.63	223.10	252.50	301.23	280.04	261.77	280.66
9분위	282.66	223.71	206.76	241.55	253.13	281.36	231.21
10분위	202.20	182.06	241.79	250.27	167.68	373.68	245.40
계	353.59	177.89	290.87	353.53	252.02	310.03	318.22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3-3-15〉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지원 평균수급액

(단위: 만 원)

재산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352.71	166.87	275.09	375.88	241.89	297.22	311.61
5분위	378.02	199.60	287.47	386.56	242.79	292.14	339.16
6분위	407.66	222.07	328.16	375.86	260.23	291.09	347.00
7분위	331.20	216.54	342.72	374.54	242.26	326.41	355.20
8분위	328.28	206.33	296.35	326.85	258.91	298.75	312.43
9분위	348.68	228.14	284.04	305.74	256.05	350.41	298.43
10분위	431.66	238.21	265.09	282.81	292.14	345.19	280.54
계	353.59	177.89	290.87	353.53	252.02	310.03	318.22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로 수급액을 비교하여 보면 교육지원수급액이 높은 집단은 재산 7분위, 6분위로 역시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과 관련된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교육지원에서 장학금은 수급가구의 분포와 수급액에 큰 영향을 주어 장학금의 소득분배 효과가 크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3-3-16〉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지원 평균 수급액

(단위: 만 원)

재산 \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91.23	173.22	219.59	277.48	256.30	252.58	285.76	200.23
3분위	320.89	380.05	367.35	406.79	375.36	362.80	330.16	337.70
4분위	327.81	379.33	370.32	427.22	401.47	363.48	324.03	351.16
5분위	341.77	343.38	387.28	428.05	380.96	367.13	323.38	363.03
6분위	380.79	411.47	399.77	376.59	346.01	332.46	294.01	368.40
7분위	365.73	353.17	368.62	353.20	304.53	286.90	261.44	337.55
8분위	319.47	336.61	294.88	286.65	242.89	244.69	244.05	280.66
9분위	263.54	262.91	243.96	240.70	203.72	197.81	223.37	231.21
10분위	234.09	171.36	233.00	219.79	229.53	261.49	282.15	245.40
계	311.61	339.16	347.00	355.20	312.43	298.43	280.54	318.22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아래는 교육지원의 소득분배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것이다. 중위 50%를 기준으로 교육급여와 긴급교육지원은 빈곤율을 .02%p를 완화하였지만 장학금은 빈곤율을 .53%p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장학금의 불평등완화효과도 커서 지니계수를 .004이상 낮추었다.

〈표 2-3-3-17〉 교육지원 소득보장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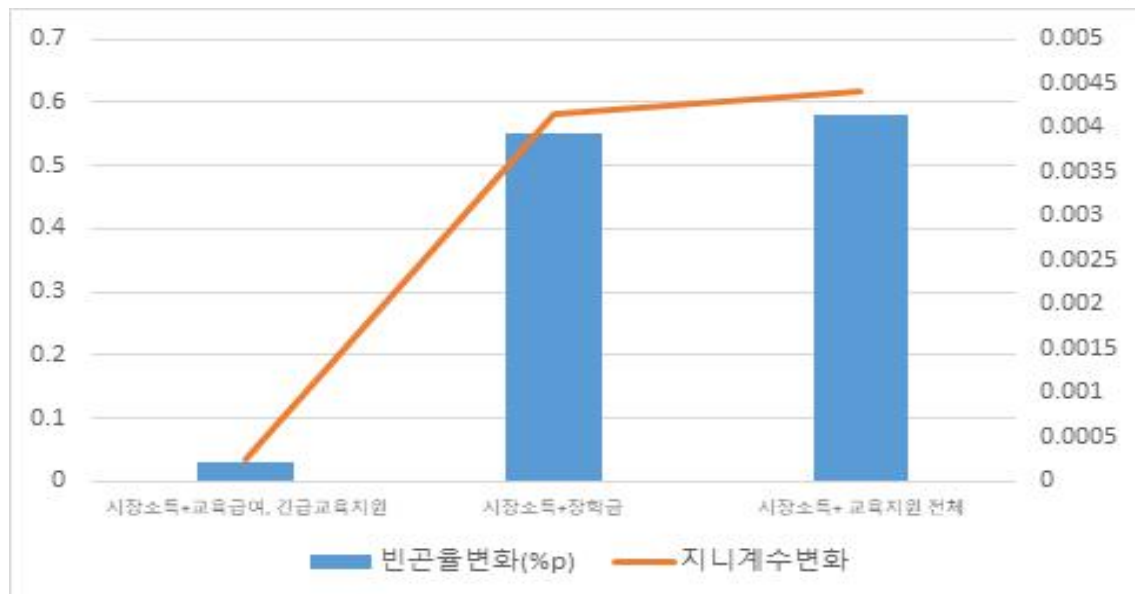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시장소득	시장소득+교육급여, 긴급교육지원	시장소득+장학금	시장소득+ 교육지원 전체
빈곤율	전가구	중위25	32.36	32.34	31.68	31.66
		중위50	39.46	39.43	38.91	38.88
	전인구	중위25	32.47	32.44	31.79	31.76
		중위50	39.57	39.55	39.02	38.99
	아동가구	중위25	16.24	16.16	15.62	15.54
		중위50	23.77	23.69	23.2	23.11
지니	전가구		0.59118	0.59093	0.58702	0.58677
	전인구		0.53196	0.53159	0.52621	0.52586
	아동가구		0.47867	0.47779	0.47461	0.47375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2-3-3-1] 교육지원의 소득분배 효과

(단위: %p)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교육지원은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세대간 계층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지원에서 중
단분석이 중요한 이유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개인단위의 균형패널과 유사하다. 2017년 교
육지원을 받은 수급자의 2015년 수급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는 2017년 수급자의 2015년 교
육지원 수급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2017년 8-25세인 인구 중 2017년 장학금을
비수급자이지만 2015년 교육지원을 받은 사람은 그 연령 중 1.47%이다. 그리고 2017년 장학금을
수급하며 2015년 교육지원을 수급한 학생은 그 연령 중 1.05%이다. 이 분석결과로 단언하기 어렵

지만 고등학생으로 교육급여 등 교육지원을 수급한 학생 중 적지 않은 수의 학생이 대학진학을 하지 않았고 반면 고등학생 시절 교육급여를 받지 않았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장학금을 받게 된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에 교육급여 외 저소득층 학비지원 정보가 없어 대학이전의 학비지원을 일부 누락한 자료이므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표 2-3-3-18〉 2017년 교육지원 수급자의 과거 수급이력

(단위: %)

구분	만12-14	만15-17	만18-25	계(만 12-25)	계(전인구)
17 장학-15교육			1.05	0.67	0.11
17장학-15장학			5.61	3.58	0.66
17장학-15비수급		0.01	12.04	7.68	1.44
17교육-15교육	1.79	2.07	0.34	0.92	0.27
17교육-15비수급	1.79	2.07	0.34	0.92	0.27
17비수급-15교육	0.66	0.89	1.47	1.22	0.23
17비수급-15비수급	93.09	91.24	67.93	76.68	95.23
기타	2.68	3.73	11.22	8.33	1.79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4장 소득·서비스보장 현황과 소득분배효과

이 장에서는 사회보장의 대상 집단이나 보장하는 욕구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의 소득 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급여형태인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포괄하여 소득분배효과를 분석한다. 앞서 영역별 분석에서 준용한 분석틀을 준용하여 대상포괄성과 급여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대상포괄성과 급여수준에 재산과 소득 그리고 연령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어느 집단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위험이 큰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분배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제도의 원리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수당, 공공부조의 영향을 구분하고 종합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하였다. 상기 제도는 소득보장제도에서 적용 순서가 상이하고 제도들 사이의 상보성 등의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고려한 효과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1절 소득보장 종합분석

1.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이나 연금은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를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개인단위로 소득상실위험에 대비하는 건전한 제도이자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연대로 대응하는 제도로 그 의미가 크다. 사회보험은 해당 급여를 수급하는지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가입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를 지닌다. 현재 소득단절이 없다면 사회보험가입이 제도적 보장범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득보장의 제도적 배제 위험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수급도 받지 못하는 집단에서 높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연금이나 고용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 가구 중 75.55%였다. 가구주 연령이 근로연령층인 26-64세 사이인 가구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하위 3분위까지는 가입율이 평균보다 낮다. 가구주가 노인이 아닌 가구에서도 유사하다.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도 소득 하위 3분위 이하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가구원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높다. 50-64세의 가구주 가구는 1분위에서는 절반이상의 가구에, 2분위에서는 30%이상의 가구에 고용보험이나 연금가입자가 한명도 없었다.

〈표 2-4-1-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가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20.54	65.50	63.44	45.69	10.91	5.28	30.89
3분위	24.84	70.12	74.74	67.31	27.35	20.13	52.44
4분위	51.21	81.04	87.24	82.10	55.66	55.78	76.72
5분위	74.58	88.96	93.54	91.60	80.80	79.95	89.19
6분위	86.67	94.04	96.01	95.14	87.15	83.99	93.69
7분위	93.25	96.72	97.24	96.61	88.37	85.51	95.84
8분위	93.92	97.70	97.66	96.98	88.28	86.72	96.65
9분위	87.83	97.14	97.89	96.95	85.47	86.30	96.52
10분위	94.50	97.24	97.33	95.11	66.23	69.66	94.85
계	57.55	90.07	90.18	83.33	44.55	23.88	75.55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개인연령별 사회보험가입을 보면 여전히 소득하위분위에서 가입율이 낮다. 근로하는 비율이 낮은 탓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을 통한 위험대비 안전장치를 갖지 못한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표 2-4-1-2〉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단위: %)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12.96	58.42	57.29	37.75	2.27	0.33	22.19
3분위	17.82	57.98	60.63	48.13	5.95	2.85	30.30
4분위	29.37	64.31	69.05	58.73	18.12	6.51	41.64
5분위	35.81	70.78	74.87	65.64	33.12	8.73	48.49
6분위	42.10	73.76	77.63	69.14	34.51	6.07	52.07
7분위	44.18	76.97	79.63	71.88	30.66	4.86	53.92
8분위	41.75	80.91	80.65	74.83	27.86	3.31	55.73
9분위	35.51	84.18	81.50	77.59	25.17	2.90	57.58
10분위	28.61	85.22	83.40	77.02	17.62	2.61	58.33
계	33.89	75.44	75.45	64.48	15.83	2.63	47.02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사회보험가입자가 있는 가구분포를 보면 재산이 낮은 1-4분위에서 사회보험가입자 가구비율이 5분위, 6분위보다 높다. 하위 재산분위에서 가입자가구 비율이 높다기보다는 재산 중 금융자산의 정보 누락으로 부동산위 재산이 없는 그러나 근로활동을 하는 소득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작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개인단위 분석에서도 유사하다.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사회보험가입자 가구비율을 보면 사회보험가입 중 소득보장기능을 하는 연금과 고용보

험은 주로 소득활동을 전제로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재산분위보다 소득분위별 가입자 가구 비율의 차이가 확연하다.

〈표 2-4-1-3〉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가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56.73	87.44	84.35	75.10	33.86	14.81	71.27
5분위	61.60	91.31	88.33	78.14	38.33	14.61	64.22
6분위	66.19	92.72	92.24	85.22	44.21	21.82	70.09
7분위	75.47	94.55	94.77	89.84	50.94	30.69	79.89
8분위	78.67	95.50	95.68	91.01	53.12	32.67	83.24
9분위	73.23	95.84	96.26	91.34	54.22	37.55	84.14
10분위	66.95	96.51	96.33	91.04	55.02	40.98	83.53
계	57.55	90.07	90.18	83.33	44.55	23.88	75.55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4-1-4〉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단위: %)

연령 재산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38.39	75.36	73.07	61.89	14.68	2.47	48.47
5분위	34.54	75.50	73.25	61.09	15.76	1.96	43.78
6분위	35.97	76.02	76.59	64.81	16.37	2.46	45.53
7분위	34.87	75.47	77.37	67.11	18.14	2.87	47.50
8분위	31.08	74.76	76.97	67.15	17.21	3.04	46.59
9분위	28.79	75.45	77.28	66.87	16.72	2.81	46.44
10분위	24.74	76.02	76.71	64.88	13.96	2.77	44.98
계	33.89	75.44	75.45	64.48	15.83	2.63	47.02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4-1-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연금·고용보험 1종 이상 가입자가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32.52	21.53	25.28	31.04	31.69	31.29	30.83	30.89
3분위	52.00	48.03	45.31	53.11	57.39	57.82	58.68	52.44
4분위	73.57	75.28	78.10	81.02	82.13	82.14	80.09	76.72
5분위	86.36	88.61	91.31	92.70	92.76	92.46	90.67	89.19
6분위	91.72	92.45	95.01	96.35	96.42	95.69	94.04	93.69
7분위	94.35	95.40	97.03	97.58	97.70	97.26	95.72	95.84
8분위	95.44	96.44	97.62	98.22	97.99	97.54	96.28	96.65
9분위	94.91	96.77	97.50	98.14	97.76	97.79	96.63	96.52
10분위	92.68	95.40	95.91	96.08	97.08	96.58	95.13	94.85
계	71.27	64.22	70.09	79.89	83.24	84.14	83.53	75.55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017년 표본의 2015년 공적연금 가입을 확인한 결과 50대는 2017년 비가입-2015년 가입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비 매우 높다. 50대의 고용불안정을 시사한다. 한편 40대는 다른 연령층 대비 2015년 비가입-2017년 가입의 비율이 높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공적연금과 그 결과가 상이하다. 동일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은 26-39세의 경우 2017년 가입-2015년 비가입의 비율이 높다. 청년층의 신규가입이 공적연금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50대의 경우 비가입으로 변화된 사례비율은 고용보험에서 더 낮아서 사회보험들 상이의 가입여부가 상이한 이유를 규명하고 사회보험의 포괄성을 높이는 방안을 교환, 강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표 2-4-1-6〉 2017년 연금 고용보험가입자의 15년 가입여부

구분		18-25세	26-39세	40-49세	50-64세	계
공적연금	17가입-15가입	18.2	66.41	66.18	51.91	54.31
	가입-비가입	2.32	5.3	6.45	3.75	4.62
	비가입-가입	2.53	7.47	5.67	11.27	7.53
	비가입-비가입	76.95	20.81	21.7	33.07	33.54
고용보험	가입-가입	7.6	36.93	34.62	25.34	28.14
	가입-비가입	15.9	10.99	7.64	7.07	9.65
	비가입-가입	6.28	9.43	6.73	6.51	7.35
	비가입-비가입	70.23	42.65	51.01	61.08	54.86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소득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

각종 소득보장제도 전체의 대상포괄성을 분석하였다.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의 경우 수급자의 가구의 가구원에게도 수급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제도의 목적이 실업이나 아동의 건강한 양육인 경우에도 현금지원은 전체적으로 수급가구의 가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금지원을 가능한 선에서 모두 포괄하여 수급자 분포와 급여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하 분석은 아래의 현금지원을 포괄하여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 사회보험: 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산재급여(현금지원 중심)
- 보편수당: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보훈급여
- 선별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
- 공공부조: 생계, 주거, 자활장려금,
- 기타: 긴급생계 등

가. 소득보장제도 전체의 대상포괄성

어떠한 지원이든지 현금지원을 1종이라도 수급받는 가구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이 25세 이하인 집단에서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수급가구 비율이 낮았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비노인가구주 가구에서는 현금지원수급가구 비율이 평균 이하였는데 다만 26-64세 가구주 가구 중 소득하위 3분위, 4분위에서는 수급가구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젊은 연령층은 소득이 낮아도 현금지원을 받는 수급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되며 한편 소득 1-2분위의 경우 소득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도 수급가구의 비율이 낮는데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수준과 무관한 소득보장수급 가능성이 낮고 반면 공공부조 제도의 포괄성은 낮은 상황, 그리고 최근 소득 3-4분위에 영향을 준 큰 규모의 제도 확대 등의 영향을 추정된다. 젊은 청년 집단 생계위험과 소득 하위 1-2분위의 현금지원 배제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표 2-4-1-7〉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중 1종 이상 수급가구비율
(단위: %)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10.31	23.73	24.47	41.50	91.19	89.31	60.24
3분위	10.20	49.35	48.58	55.96	96.65	96.00	64.68
4분위	14.66	51.15	47.94	54.33	95.64	88.76	58.45
5분위	18.60	51.01	44.43	51.19	95.92	89.21	56.13
6분위	14.34	44.48	35.69	43.34	95.16	88.25	47.48
7분위	7.76	35.65	25.67	38.78	94.51	86.63	38.99
8분위	5.15	29.42	21.25	34.86	94.00	87.90	33.07
9분위	4.68	22.64	17.25	29.48	92.77	87.57	27.15
10분위	3.41	19.97	13.86	20.00	91.73	77.60	21.48
계	11.20	34.18	29.37	40.60	93.71	89.85	46.75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수급을 받는 현금지원제도의 수는 예상한 바와 같이 소득이 낮을수록 많았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다. 노인가구주 가구는 미만 연령의 가구주 가구와 확연히 다르게 수급받는 평균 지원제도 수가 많았다. 다만 75세이상 가구주 가구의 수급제도수와 비교하여 65-74세 가구주 가구의 수급제도 수가 더 많았다. 75세 이상의 소득보장 수급의 상대적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2-4-1-8〉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평균 수급 제도수
(단위: 개)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0.10	0.15	0.24	0.48	1.47	1.31	0.84
3분위	0.10	0.38	0.45	0.58	1.73	1.65	0.87
4분위	0.12	0.38	0.42	0.53	1.60	1.29	0.66
5분위	0.15	0.35	0.35	0.45	1.51	1.22	0.57
6분위	0.10	0.23	0.23	0.35	1.37	1.19	0.42
7분위	0.04	0.07	0.09	0.30	1.33	1.13	0.27
8분위	0.02	0.03	0.05	0.25	1.29	1.18	0.20
9분위	0.01	0.02	0.03	0.17	1.23	1.13	0.14
10분위	0.01	0.01	0.01	0.10	1.05	0.94	0.10
계	0.09	0.14	0.19	0.36	1.48	1.33	0.49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현금지원 수급을 보면 재산분위별 수급율의 차이는 소득분위별 그 차이보다 작다. 재산분위 5-7분위에서 현금지원 1종이상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오히려 재산 1-4분위에서 수급율이 낮았다. 현금지원수급율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서는 재산기준이 덜 엄격하고 재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근로연령층에서는 현금지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근로연령층의 사회보험 급여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추정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재산의 누락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요는 재산도 소득도 낮은 젊은 연령 집단의 경우 현금지원제도에서 배제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수급하는 현금지원제도의 수를 보면 역시 재산 5-6분위에서 수급율이 높다. 사회보험은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을 고려하기보다 소득활동을 전제로 하고 현금지원의 경우 재산보다는 소득에 대한 고려가 더 높은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1-9〉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중 1종 이상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재산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10.59	29.15	32.10	40.12	91.04	86.25	41.80
5분위	23.06	40.51	38.00	47.47	96.23	96.52	60.82
6분위	20.09	40.78	36.11	47.02	96.94	97.55	60.80
7분위	23.66	44.30	31.90	42.84	97.09	96.78	54.02
8분위	19.89	42.61	24.61	38.53	95.96	94.26	47.56
9분위	16.14	43.16	21.93	37.75	94.38	88.60	45.73
10분위	19.20	47.08	22.58	37.53	91.17	74.47	45.71
계	11.20	34.18	29.37	40.60	93.71	89.85	46.75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4-1-10〉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평균 수급 제도 수
(단위: 개)

연령 재산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0.09	0.16	0.28	0.41	1.49	1.36	0.46
5분위	0.13	0.17	0.26	0.45	1.72	1.52	0.76
6분위	0.10	0.18	0.23	0.42	1.73	1.52	0.76
7분위	0.10	0.16	0.17	0.34	1.64	1.40	0.57
8분위	0.07	0.09	0.09	0.29	1.47	1.29	0.44
9분위	0.03	0.05	0.05	0.27	1.34	1.17	0.39
10분위	0.04	0.03	0.04	0.27	1.07	0.86	0.35
계	0.09	0.14	0.19	0.36	1.48	1.33	0.49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4-1-11〉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중 1종 이상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50.57	74.59	77.13	74.11	72.53	70.99	65.09	60.24
3분위	58.05	76.84	80.77	74.74	66.11	63.78	63.85	64.68
4분위	55.18	68.45	71.59	64.39	55.70	54.83	58.58	58.45
5분위	52.13	65.74	66.33	63.28	54.97	54.51	57.01	56.13
6분위	39.99	54.71	57.09	56.51	51.14	51.81	54.52	47.48
7분위	30.51	46.81	45.23	44.98	44.03	46.13	51.32	38.99
8분위	24.31	37.55	38.36	36.86	38.04	39.74	44.92	33.07
9분위	19.10	31.63	29.86	29.94	30.22	32.28	36.60	27.15
10분위	17.60	23.95	22.32	21.75	20.43	22.00	26.27	21.48
계	41.80	60.82	60.80	54.02	47.56	45.73	45.71	46.75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지원의 경우 소득인 낮지만 연령이나 재산기준으로 제도에서 배제되는 위험이 얼마나 큰가가 이슈 중 하나이다. 재산 중 일부 재산은 자료에서 누락되었고 한편 재산 중 일부는 소득으로 전환하여 생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재산보다는 소득이 낮음에도 연령 등 다른 요인으로 제도 포괄성이 낮은 것은 더 위험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4분위를 제외하고는 낮은 소득분위에서는 재산이 작을 수록 더 많은 제도수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소득이 낮아도 연령으로 제도에서 배제될 위험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표 2-4-1-12〉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사회보험(연금·고용·산재),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평균 수급 제도 수
(단위: 개)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0.74	1.14	1.13	1.01	0.94	0.87	0.70	0.84
3분위	0.77	1.18	1.31	1.06	0.81	0.75	0.64	0.87
4분위	0.62	0.84	0.91	0.74	0.58	0.55	0.55	0.66
5분위	0.53	0.71	0.75	0.67	0.54	0.52	0.49	0.57
6분위	0.34	0.53	0.56	0.52	0.42	0.43	0.44	0.42
7분위	0.20	0.38	0.38	0.33	0.29	0.31	0.36	0.27
8분위	0.13	0.22	0.28	0.24	0.21	0.23	0.27	0.20
9분위	0.09	0.17	0.20	0.18	0.15	0.15	0.19	0.14
10분위	0.09	0.11	0.11	0.11	0.09	0.09	0.12	0.10
계	0.46	0.76	0.76	0.57	0.44	0.39	0.35	0.49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중단으로 인한 생계위험에 대한 대비는 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으로 한다. 그리고 사회보험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원으로 대응한다. 사회보험가입이나 현

급급여가 함께 소득단절에 대응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젊은 청년은 소득 5분위까지 50대까지는 소득 1-2분위에서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가입도 현금지원 수급하는 비율이 낮아서 이집단의 소득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생계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는 대상포괄성에서 소득보다 연령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이며 비노인의 경우 연령으로 인한 제도의 배제위험이 작지 않다.

〈표 2-4-1-1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가입자 가구비율 및 현금급여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소득	사회보험가입	20.54	65.50	63.44	45.69	10.91	5.28	30.89
	현금급여수급	10.69	24.00	24.90	41.94	91.20	89.31	60.45
1-2분위	사회보험가입	24.84	70.12	74.74	67.31	27.35	20.13	52.44
	현금급여수급	10.69	49.63	48.97	56.21	96.65	96.00	64.89
3분위	사회보험가입	51.21	81.04	87.24	82.10	55.66	55.78	76.72
	현금급여수급	15.43	51.44	48.25	54.48	95.64	88.76	58.66
4분위	사회보험가입	74.58	88.96	93.54	91.60	80.80	79.95	89.19
	현금급여수급	19.13	51.37	44.71	51.31	95.93	89.22	56.32
5분위	사회보험가입	86.67	94.04	96.01	95.14	87.15	83.99	93.69
	현금급여수급	14.85	44.90	35.91	43.42	95.16	88.25	47.67
6분위	사회보험가입	93.25	96.72	97.24	96.61	88.37	85.51	95.84
	현금급여수급	8.13	36.21	26.06	38.84	94.51	86.63	39.27
7분위	사회보험가입	93.92	97.70	97.66	96.98	88.28	86.72	96.65
	현금급여수급	5.35	30.11	21.51	34.89	94.00	87.90	33.37
8분위	사회보험가입	87.83	97.14	97.89	96.95	85.47	86.30	96.52
	현금급여수급	4.74	23.20	17.56	29.51	92.77	87.57	27.42
9분위	사회보험가입	94.50	97.24	97.33	95.11	66.23	69.66	94.85
	현금급여수급	3.41	20.58	14.29	20.02	91.76	77.60	21.75
10분위	사회보험가입	57.55	90.07	90.18	83.33	44.55	23.88	75.55
	현금급여수급	11.65	34.67	29.71	40.75	93.72	89.85	46.98
계	사회보험가입							
	현금급여수급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 수급가구의 비율을 보아도 여전히 젊은 청년집단은 소득이 재산이 낮아도 두 제도의 가입과 수급비율이 낮다. 재산이 낮은 집단에서 재산을 활용한 위기대응도 어려울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이 집단은 소득단절에 대한 위기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면 50-64세 가구주 가구도 소득단절에 대한 대응에서 제도적 안전망에서 배제위험이 컸다.

〈표 2-4-1-14〉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연금·고용보험 가입자 가구비율 및 현금급여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재산								
1-4분위	사회보험가입	56.73	87.44	84.35	75.10	33.86	14.81	71.27
	현금급여수급	11.06	29.47	32.47	40.42	91.04	86.25	42.08
5분위	사회보험가입	61.60	91.31	88.33	78.14	38.33	14.61	64.22
	현금급여수급	23.06	41.04	38.26	47.69	96.25	96.52	61.01
6분위	사회보험가입	66.19	92.72	92.24	85.22	44.21	21.82	70.09
	현금급여수급	20.44	41.09	36.25	47.06	96.94	97.55	60.88
7분위	사회보험가입	75.47	94.55	94.77	89.84	50.94	30.69	79.89
	현금급여수급	23.66	44.94	32.04	42.89	97.10	96.79	54.17
8분위	사회보험가입	78.67	95.50	95.68	91.01	53.12	32.67	83.24
	현금급여수급	19.89	43.52	24.91	38.55	95.96	94.26	47.79
9분위	사회보험가입	73.23	95.84	96.26	91.34	54.22	37.55	84.14
	현금급여수급	16.14	44.11	22.33	37.77	94.40	88.60	45.97
10분위	사회보험가입	66.95	96.51	96.33	91.04	55.02	40.98	83.53
	현금급여수급	19.20	48.19	23.04	37.55	91.17	74.47	45.96
계	사회보험가입	57.55	90.07	90.18	83.33	44.55	23.88	75.55
	현금급여수급	11.65	34.67	29.71	40.75	93.72	89.85	46.98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사회보험가입과 현금급여 수급에서 두 제도 모두 평균이하인 집단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높은 소득분위에서 재산이 많을수록 현금급여 수급율이 높았다.

〈표 2-4-1-1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연금·고용보험 가입자 가구비율 및 현금급여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소득									
1-2분위	사회보험가입	32.52	21.53	25.28	31.04	31.69	31.29	30.83	30.89
	현금급여수급	50.91	74.77	77.17	74.14	72.54	71.00	65.11	60.45
3분위	사회보험가입	52.00	48.03	45.31	53.11	57.39	57.82	58.68	52.44
	현금급여수급	58.39	76.96	80.80	74.84	66.20	63.87	63.93	64.89
4분위	사회보험가입	73.57	75.28	78.10	81.02	82.13	82.14	80.09	76.72
	현금급여수급	55.46	68.74	71.65	64.49	55.84	55.06	58.65	58.66
5분위	사회보험가입	86.36	88.61	91.31	92.70	92.76	92.46	90.67	89.19
	현금급여수급	52.37	65.79	66.39	63.39	55.20	54.71	57.14	56.32
6분위	사회보험가입	91.72	92.45	95.01	96.35	96.42	95.69	94.04	93.69
	현금급여수급	40.22	54.84	57.18	56.67	51.34	52.01	54.65	47.67
7분위	사회보험가입	94.35	95.40	97.03	97.58	97.70	97.26	95.72	95.84
	현금급여수급	30.77	47.03	45.41	45.28	44.41	46.43	51.72	39.27
8분위	사회보험가입	95.44	96.44	97.62	98.22	97.99	97.54	96.28	96.65
	현금급여수급	24.58	37.74	38.45	37.13	38.46	40.15	45.28	33.37
9분위	사회보험가입	94.91	96.77	97.50	98.14	97.76	97.79	96.63	96.52
	현금급여수급	19.33	31.90	29.96	30.10	30.54	32.56	37.03	27.42
10분위	사회보험가입	92.68	95.40	95.91	96.08	97.08	96.58	95.13	94.85
	현금급여수급	17.85	24.36	22.49	21.92	20.67	22.37	26.58	21.75
계	사회보험가입	71.27	64.22	70.09	79.89	83.24	84.14	83.53	75.55
	현금급여수급	42.08	61.01	60.88	54.17	47.79	45.97	45.96	46.9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나. 사회보험수당·공공부조 제도별 대상포괄성 등 효과

소득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 등 효과를 공공부조, 선별적 수당, 사회보험급여, 보편적 수당으로 구분하고 확대하여 가면서 분석하였다. 공공부조제도 수급 개수는 소득하위분위에서 높았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부조제도 수급개수가 높았으나 18-25세가구주 가구에서도 수급제도의 평균 개수가 높았고 소득 5분위까지 수급제도 개수가 평균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노인의 경우 소득하위집단에 한정하여 수급제도의 개수가 평균이상이었는데 주거급여와 자활장려금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표 2-4-1-16〉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0.13	0.12	0.22	0.31	0.27	0.26	0.26
3분위	0.12	0.08	0.16	0.15	0.09	0.07	0.12
4분위	0.11	0.04	0.08	0.08	0.05	0.06	0.07
5분위	0.09	0.02	0.03	0.04	0.03	0.04	0.03
6분위	0.05	0.01	0.02	0.02	0.02	0.03	0.02
7분위	0.03	0.00	0.01	0.01	0.01	0.01	0.01
8분위	0.02	0.00	0.01	0.01	0.01	0.02	0.01
9분위	0.01	0.00	0.00	0.00	0.01	0.00	0.00
10분위	0.02	0.00	0.00	0.00	0.00	0.01	0.00
계	0.08	0.02	0.05	0.08	0.13	0.18	0.08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공공부조와 선별수당의 수급제도 수를 보면 연령의 영향이 나타난다. 노인가구주 가구는 전소득 분위에서 수급제도 개수가 평균이상이었다. 다만 65-74세 가구주 가구는 소득 10분위의 경우 수급 제도수가 평균 이하였다. 젊은 연령층은 대부분 수급제도의 수가 평균이하였고 다만 40-64세의 낮은 소득분위에서는 수급제도 수가 평균이상이었다. 기초연금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4-1-1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0.16	0.19	0.33	0.43	0.97	1.08	0.68
3분위	0.16	0.39	0.50	0.41	1.03	1.27	0.65
4분위	0.16	0.34	0.40	0.32	0.82	0.87	0.44
5분위	0.15	0.28	0.29	0.20	0.70	0.79	0.32
6분위	0.09	0.17	0.17	0.09	0.56	0.77	0.19
7분위	0.04	0.03	0.05	0.05	0.51	0.69	0.09
8분위	0.02	0.01	0.01	0.03	0.45	0.70	0.05
9분위	0.01	0.00	0.01	0.01	0.38	0.65	0.03
10분위	0.02	0.00	0.00	0.00	0.15	0.42	0.01
계	0.12	0.12	0.17	0.18	0.80	1.03	0.32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도를 사회보험급여 수급으로 확대하여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수를 비교하면 낮은 소득분위에서 수급하는 제도의 수가 많고 75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수급제도의 수가 높았다. 사회보험 가입과 달리 사회보험급여수급은 소득상실 시기에 수령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더 많이 수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금급여는 높은 소득집단에서 수급율이 높을 것이지만 연금의 역사를 고려하여 보면 75세 이상은 수급율이 이하 연령의 노인과 비교하여 낮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소득이 낮으나 근로활동연령집단은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를 지원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표 2-4-1-18〉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0.17	0.21	0.36	0.63	1.52	1.35	0.93
3분위	0.16	0.43	0.55	0.66	1.70	1.63	0.92
4분위	0.18	0.42	0.47	0.58	1.55	1.25	0.68
5분위	0.20	0.38	0.37	0.48	1.45	1.16	0.58
6분위	0.13	0.24	0.24	0.36	1.31	1.14	0.42
7분위	0.06	0.08	0.10	0.30	1.27	1.06	0.27
8분위	0.03	0.04	0.05	0.25	1.22	1.10	0.19
9분위	0.02	0.02	0.03	0.17	1.15	1.05	0.14
10분위	0.02	0.02	0.01	0.09	0.98	0.84	0.09
계	0.14	0.16	0.22	0.40	1.47	1.34	0.52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보편수당을 추가하여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 보편수당의 수급 개수를 비교한 결과,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의 수급 평균과 결과가 유사하다. 단지 보편적 양육수당 등의 영향으로 26-39세 가구주 가구의 평균수급제도수가 조금 높아졌다.

〈표 2-4-1-19〉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보편수당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0.17	0.22	0.36	0.63	1.59	1.42	0.96
3분위	0.16	0.43	0.55	0.66	1.77	1.69	0.94
4분위	0.18	0.42	0.47	0.59	1.63	1.32	0.70
5분위	0.20	0.38	0.37	0.48	1.53	1.24	0.60
6분위	0.13	0.25	0.24	0.36	1.38	1.21	0.43
7분위	0.06	0.08	0.10	0.31	1.34	1.13	0.28
8분위	0.03	0.04	0.05	0.25	1.30	1.18	0.20
9분위	0.02	0.03	0.03	0.17	1.23	1.13	0.15
10분위	0.02	0.02	0.02	0.10	1.05	0.95	0.10
계	0.14	0.17	0.22	0.40	1.54	1.41	0.53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의 수급 개수를 비교하여 보면 재산 6분위 이상에서는 공공부조 수급제도의 수가 평균 이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이 상이하여도 이 경향은 유사하였다. 다만 26-39세 가구주 가구는 재산이 낮은 집단에서도 공공부조 수급개수가 평균이하였다. 이 연령의 가구주 가구는 소득이 낮아도 공공부조 수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 집단의 경우 근로능력이 좋아 수급확률이 낮을 것이라 추정되면 한편 공공부조의 부양의무자 조항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표 2-4-1-20〉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재산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0.09	0.03	0.10	0.17	0.29	0.37	0.14
5분위	0.14	0.03	0.09	0.14	0.23	0.25	0.15
6분위	0.08	0.01	0.03	0.05	0.08	0.10	0.06
7분위	0.04	0.01	0.01	0.01	0.02	0.03	0.02
8분위	0.05	0.00	0.01	0.01	0.01	0.02	0.01
9분위	0.00	0.00	0.00	0.01	0.01	0.01	0.01
10분위	0.05	0.00	0.00	0.00	0.00	0.01	0.00
계	0.08	0.02	0.05	0.08	0.13	0.18	0.08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의 수급제도 수를 보면 근로연령층의 경우 50-64세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고는 재산이 낮아도 수급하는 제도 수는 평균 이하였다. 반면 노인가구주 가구는 재산분위가 높아도 수급하는 제도의 수가 평균이상이었다. 다만 노인가구주 가구 중 재산 10분위는 수급하는 제도의 수가 평균 이하였는데 기초연금의 자산조사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수급에서 소득보다 재산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표 2-4-1-21〉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재산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0.12	0.14	0.30	0.33	1.05	1.26	0.39
5분위	0.19	0.15	0.26	0.31	1.23	1.33	0.60
6분위	0.12	0.15	0.20	0.19	1.04	1.17	0.49
7분위	0.09	0.12	0.13	0.08	0.84	0.97	0.30
8분위	0.07	0.05	0.04	0.02	0.62	0.81	0.18
9분위	0.02	0.02	0.01	0.01	0.44	0.65	0.12
10분위	0.06	0.00	0.00	0.01	0.15	0.29	0.05
계	0.12	0.12	0.17	0.18	0.80	1.03	0.32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도를 사회보험급여 수급으로 확대하여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수를 비교하면 노인가구주 가구를 제외하고는 18-64세 가구주 가구는 소득분위를 막론하고 모두 수급하는 제도의 수가 평균 이하였다.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의 수급에 연령, 노인여부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1-22〉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재산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0.14	0.19	0.34	0.50	1.57	1.47	0.53
5분위	0.21	0.20	0.31	0.51	1.75	1.55	0.81
6분위	0.14	0.19	0.25	0.43	1.69	1.47	0.75
7분위	0.11	0.18	0.17	0.35	1.57	1.34	0.56
8분위	0.09	0.10	0.09	0.29	1.39	1.21	0.42
9분위	0.03	0.06	0.05	0.27	1.26	1.08	0.38
10분위	0.06	0.05	0.04	0.27	0.99	0.76	0.33
계	0.14	0.16	0.22	0.40	1.47	1.34	0.52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도를 사회보험급여 수급으로 확대하여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수를 비교하면 노인가구주 가구를 제외하고는 18-64세 가구주 가구는 소득분위를 막론하고 모두 수급하는 제도의 수가 평균 이하였다.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의 수급에 연령, 노인여부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보편수당으로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 보편수당의 수급제도 수를 비교하여도 유사하다.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에서 재산의 영향은 작고 연령의 영향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재산분위가 높은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는 다른 노인집단과 비교하여 수급제도의 수가 다소 낮다.

〈표 2-4-1-23〉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보편수당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재산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0.45	0.14	0.19	0.34	0.50	1.64	1.53	0.54
5분위	0.00	0.21	0.21	0.31	0.52	1.83	1.62	0.83
6분위	0.48	0.14	0.20	0.25	0.44	1.75	1.55	0.78
7분위	0.36	0.11	0.18	0.18	0.35	1.65	1.42	0.58
8분위	0.00	0.09	0.10	0.09	0.29	1.48	1.29	0.44
9분위	0.00	0.03	0.07	0.05	0.27	1.34	1.17	0.40
10분위	.	0.06	0.05	0.04	0.27	1.07	0.86	0.36
계	0.44	0.14	0.17	0.22	0.40	1.54	1.41	0.53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이하는 2017년 표본의 2017년, 2015년 소득보장수급 상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2017년 0~17세 수급자 중 2015년에도 수급이었던 사람은 해당 연령 중 11.2%에 이른다. 18-25세의 경우에는 오히려 2017년 수급이지만 2015년 비수급의 비율이 높다. 근로 관련 지원, 양육관련 지원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18세를 기준으로 성인이 되면서 지원이 급격하게 줄고 대학생이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지원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인이 되면서 생계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집단은 없는지 주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높은 연령에서는 2017년 수급-2015년 비수급의 비율이 높고 2017년 비수급-2015년 수급의 비율이 낮다.

〈표 2-4-1-24〉 2017년 소득보장수급자(개인)의 2015년 수급여부 비교

(단위: %)

17년 연령 소득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7수급-15수급	6.38	0.53	3.05	4.95	12.98	76.48	85.18	16.66
17수급-15비수급	9.64	1.54	7.46	6.76	10.11	8.3	1.87	7.41
17비수급-15수급	11.2	0.74	5.41	4.98	4.61	0.54	0.41	4.93
17비수급-15비수급	72.79	97.2	84.08	83.31	72.3	14.68	12.54	70.99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효과

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급여액은 수급을 받는 가구로 한정된 평균액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방법으로 인하여 제도를 추가하면 수급가구가 증가하여 평균수급액은 감소할 수 있다. 소득분위별*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액을 비교하면 평균액이 다른 제도를 포괄한 분석보다 높았다. 공공부조의 가구수급액 평균이 선별수당에 비하여 높은 현상을 반영한다. 26-39세 가구주 가구에서 평균수급액이 가장 높았다. 가구규모, 아동가구원이나 월세거주가구 비율이 영향을 준 현상으로 추정된다. 젊은 가구주 가구의 가구규모가 커서 생계급여액이 크고 월세에 사는 가구비율이 높아 주거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40-49세 가구주가구, 50-64세 가구주 가구의 수급액 평균도 높았다.

〈표 2-4-1-25〉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액

(단위: 만원/연)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699.02	795.34	728.22	649.30	460.11	411.12	554.94
3분위	668.91	719.79	711.99	674.80	490.32	512.69	645.82
4분위	531.14	481.76	479.76	472.17	404.64	457.98	471.55
5분위	386.02	356.39	360.77	464.15	470.27	381.93	416.53
6분위	303.28	361.57	402.66	439.66	446.73	496.62	412.92
7분위	262.49	388.37	419.27	433.43	334.29	407.78	399.04
8분위	176.88	342.65	374.99	463.62	373.48	393.57	396.28
9분위	231.96	310.53	464.73	431.01	426.12	334.79	420.71
10분위	245.90	392.24	486.70	444.30	404.42	460.67	435.20
계	561.00	661.31	635.22	613.02	459.77	417.99	546.68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선별수당을 추가하여 분석하면 수급액의 차이는 매우 상이해진다. 65세 이상의 수급액 평균이 매우 높아진다. 공공부조와 선별수당을 수급하는 가구의 평균수급액은 기초연금과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소득 1-2분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급액 평균이 평균보다 낮다.

〈표 2-4-1-26〉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액

(단위: 천원/연)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628.80	574.60	607.16	611.69	359.86	368.44	420.03
3분위	548.52	196.19	277.54	267.06	315.42	344.40	297.07
4분위	396.41	172.94	213.53	205.23	315.66	372.04	244.15
5분위	237.04	113.27	146.97	173.01	282.00	338.35	195.79
6분위	156.69	76.28	130.64	178.49	254.39	324.81	174.76
7분위	183.08	139.12	196.61	195.48	257.09	306.69	213.96
8분위	157.27	186.46	236.92	221.77	255.64	316.75	239.70
9분위	193.54	196.79	254.98	246.84	252.18	304.92	252.99
10분위	252.38	220.34	249.95	256.55	255.43	295.52	256.85
계	399.12	179.55	248.95	293.84	319.90	357.94	298.36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급여 수급액을 비교하여 보면 소득분위를 막론하고 노인가구주 가구 대부분의 수급액이 평균이상이었다. 하지만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득하위분위 가구는 평균수급액이 낮았다. 근로연령층은 대부분 평균수급액이 낮았으며 50-64세 가구주 가구는 중간소득분위를 제외하고는 낮은소득분위와 높은 소득분위가구의 평균수급액이 높았다. 공공부조와 연금 등 사회보험의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음영처리된 부분은 근로연령층의 낮은 소득분위가 여전히 수급액도 낮아서 생계어려움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표 2-4-1-2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수급액

(단위: 천원/연)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625.23	635.66	678.62	837.43	806.57	588.64	716.52
3분위	555.42	317.39	365.60	647.01	821.30	572.90	615.97
4분위	416.36	348.36	335.33	597.05	860.44	707.01	584.77
5분위	316.86	322.97	292.36	618.49	839.34	688.06	569.03
6분위	256.83	335.73	303.61	690.81	829.91	682.40	589.16
7분위	315.57	529.00	425.62	718.81	849.25	682.61	666.17
8분위	309.23	611.81	477.23	725.55	875.27	702.73	690.08
9분위	397.21	644.10	513.58	741.47	852.46	669.50	699.61
10분위	407.90	694.88	548.56	810.64	1053.20	739.85	794.20
계	423.75	441.49	403.36	703.58	834.93	610.64	651.62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공공부조 수급액을 비교하면 재산분위를 막론하고 소득하위분위에서 평균수급액이 높다. 공공부조 수급액에는 소득의 영향이 크고 재산의 영향은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재산 10분위는 소득이 낮아도 평균수급액이 낮는데 재산은 높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에

서만 수급액에 영향을 주는 기준적용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4-1-28〉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수급액

(단위: 천원/연)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568.97	482.28	478.17	504.15	537.35	506.58	473.00	554.94
3분위	662.01	584.58	567.00	568.86	618.32	576.37	441.31	645.82
4분위	471.85	427.56	473.47	471.22	438.69	599.08	546.43	471.55
5분위	397.28	380.48	463.68	495.17	560.18	496.50	457.33	416.53
6분위	385.25	366.87	458.07	450.41	489.10	557.42	551.09	412.92
7분위	363.66	352.75	402.69	417.74	531.38	537.92	511.11	399.04
8분위	354.64	309.60	475.70	412.03	364.00	495.24	535.35	396.28
9분위	383.47	634.47	409.15	409.92	455.95	470.25	393.60	420.71
10분위	326.97	377.00	469.66	332.84	540.24	503.40	510.50	435.20
계	559.64	485.13	485.99	489.33	520.67	529.15	491.33	546.68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선별수당을 추가한 수급액 분석에서는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수급액 비교결과가 다소 상이하
다. 공공부조, 선별수당 평균 수급액을 보면 소득과 재산분위가 낮은 집단에서 평균수급액이 높다.

〈표 2-4-1-29〉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액

(단위: 천원/연)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501.08	415.34	348.47	293.96	290.82	288.90	285.00	420.03
3분위	308.83	332.44	289.71	259.54	281.63	291.64	283.09	297.07
4분위	239.34	273.18	260.57	222.03	234.84	275.43	281.08	244.15
5분위	176.70	226.41	211.50	188.31	227.36	254.71	263.00	195.79
6분위	148.99	199.23	186.02	167.50	197.22	246.53	270.87	174.76
7분위	178.18	224.17	219.38	215.58	245.33	263.54	266.56	213.96
8분위	203.93	235.43	238.51	236.83	262.33	273.19	271.34	239.70
9분위	225.64	241.36	245.24	251.84	260.85	270.48	268.08	252.99
10분위	242.99	247.11	254.73	256.79	254.52	264.13	261.77	256.85
계	327.96	330.16	282.08	238.36	257.23	273.88	272.56	298.36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사회보험을 추가하여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수급액을 비교한 결
과 소득과 재산이 낮은 집단에서 평균수급액이 낮았다. 사회보험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
보험이 소득과 재산이 높은 집단에서 수급율이 높고 수급액도 소득과 재산이 높은 집단에서 과거 소
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 급여가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 2-4-1-30〉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수급액

(단위: 천원/연)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613.85	539.48	568.02	696.50	867.25	1066.76	1389.86	716.52
3분위	472.58	520.87	521.94	603.40	791.54	973.76	1374.57	615.97
4분위	439.89	501.90	542.89	582.33	745.61	971.40	1195.63	584.77
5분위	402.10	456.50	506.98	571.50	746.97	904.55	1126.48	569.03
6분위	414.86	502.10	500.22	535.08	704.04	884.99	1165.96	589.16
7분위	515.31	570.22	539.39	603.28	734.87	838.71	1099.97	666.17
8분위	549.87	545.95	559.56	602.58	712.57	807.28	1039.68	690.08
9분위	608.19	549.09	572.14	579.86	645.42	740.45	969.43	699.61
10분위	739.56	678.48	617.10	625.81	646.65	760.49	977.51	794.20
계	513.80	525.12	542.19	609.74	758.36	910.05	1162.75	651.62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사회보험을 추가하여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 수급액을 비교한 결과 소득과 재산이 낮은 집단에서 평균수급액이 낮았다. 사회보험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보험이 소득과 재산이 높은 집단에서 수급율이 높고 수급액도 소득과 재산이 높은 집단에서 과거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 급여가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편적 수당을 추가하여 수급액을 비교하면 소득분위를 막론하고 재산 7분위(7분위는 소득 1-2분위 제외)까지는 평균수급액이 낮다. 소득이 중간분위인 가구, 그리고 재산이 낮은 분위에서 수급액이 낮았다.

〈표 2-4-1-31〉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액

(단위: 천원/연)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632.15	574.51	612.82	743.99	907.95	1094.26	1409.47	746.49
3분위	490.35	546.32	550.14	634.87	808.25	990.14	1380.27	638.77
4분위	455.25	527.87	569.34	605.38	753.08	965.55	1197.39	602.39
5분위	416.75	482.76	532.02	588.10	752.84	895.74	1106.26	583.09
6분위	422.36	530.51	517.71	540.73	679.04	852.63	1119.58	588.09
7분위	467.03	558.78	525.74	559.11	649.35	748.95	1015.34	607.30
8분위	479.30	524.42	555.26	562.45	627.52	714.80	932.00	619.35
9분위	523.95	540.97	571.59	559.71	597.20	672.02	876.19	637.11
10분위	616.50	620.09	577.74	603.33	602.39	678.68	857.12	699.32
계	515.21	547.96	567.15	620.27	739.13	871.51	1103.36	650.20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이하는 2017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7년 수급액과 2015년 수급액을 비교한 결과이다. 수급액은 개인의 수급액이다. 연령이 낮은 49세 이하에서 수급액 증가가 작았다. 50세 이상에서는 대체로

2015년 대비 2017년 수급액이 높았는데 다만 75세 이상에서는 증가액이 작았다. 물가상승률 정도의 작은 폭으로 수급액이 높아진 비율은 노인집단에서 높았다. 노인 중 낮은 연령의 집단은 연금수급개시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지만 기존의 수급이 단가가 높아진 것, 또는 일부 제도 개선으로 수급액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수급액 감소자 비율이 높은 연령은 17세 이하 집단이다. 아동지원 중 적지 않은 제도가 5세, 12세 등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발생한 변화로 이해된다. 18세는 17세 이하 대비 비수급의 수가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2-4-1-32〉 2017년 소득보장수급자(개인)의 2015년 수급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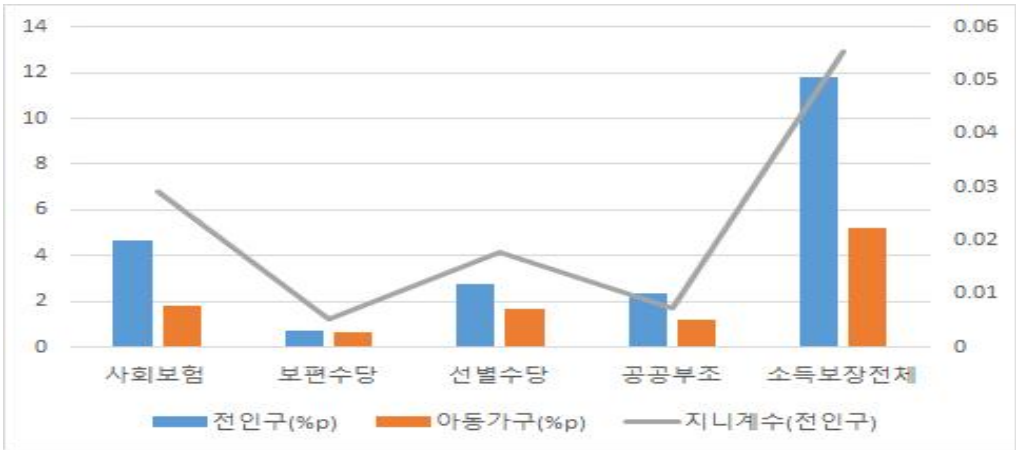
(단위: 원, %)

소득 \ 17년 연령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7수급액- 15수급액(원)	-2.60	3.04	4.03	2.83	51.87	50.29	17.52	17.96
17수급액 10% 이상 증가	10.96	1.88	9.1	9.13	19.38	74.25	81.77	20.24
수급액 불변~10% 이하 증가	-	-	-	-	-	-	-	-
수급액 감소	15.97	0.87	6.76	7.33	7.33	10.42	5.29	8.08
비수급	73.07	97.25	84.15	83.54	73.29	15.33	12.93	71.6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분배효과를 보면 사회보험의 빈곤율 완화효과가 매우 크다. 사회보험은 빈곤율을 4.66%p 낮추었다. 아동가구의 경우에도 사회보험의 빈곤완화효과가 가장 컸다. 이와 더불어 선별수당의 빈곤완화 효과가 컸는데 양육수당이 주로 선별수당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보험과 선별수당은 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는 빈곤율 완화와 불평등 완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완화 효과가 불평등 완화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1-1]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분배효과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4-1-33〉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분배 효과

구분			시장소득	시장소득+사회보 험	시장소득+보편수 당	시장소득+선 별수당	시장소득+ 공공부조	시장소득+ 현금지원
빈곤율	전가구	중위25	32.36	27.71	31.65	29.65	30.01	20.59
		중위50	39.46	35.51	38.85	38.11	38.76	32.08
	전인구	중위25	32.47	27.81	31.76	29.75	30.1	20.67
		중위50	39.57	35.63	38.97	38.22	38.87	32.18
	아동가구	중위25	16.24	14.79	15.65	14.6	14.79	11.44
		중위50	23.77	21.94	23.12	22.1	22.58	18.59
지니	전가구		0.59118	0.55885	0.58607	0.56971	0.58142	0.52658
	전인구		0.53196	0.50276	0.52673	0.51427	0.52477	0.47651
	아동가구		0.47867	0.46656	0.47275	0.46841	0.47165	0.4455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2절 서비스보장 종합분석

1. 서비스보장의 대상포괄성

서비스 보장은 주거, 보건의료, 교육,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서비스 전체의 대상포괄성과 소득분배에 미친 서비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무엇을 서비스 보장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 분석에서는 서비스 형태의 지원,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바우처 지원을 모두 서비스보장제도로 구분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서비스보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급여부를 분석할 수 있었던 서비스보장은 주거임대, 산재의 요양·간병·직업재활, 노인 일자리, 노인돌봄, 발달재활, 장애인활동지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긴급지원, 한부모지원, 보육료 지원, 자활근로, 아이돌봄, 일모아재정일자리, 장학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이다.

일자리제공은 임금으로 급여가 제공되므로 소득보장으로도 볼 수 있고 시장소득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보여주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자리 참여로 얻는 임금을 시장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공적지원으로 분류하였고 해당 지원이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을 주는 형식이므로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긴급지원과 한부모지원은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이 섞여 있는 지원이지만 자료의 한계로 이 지원을 구분할 수 없어서 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이유는 두 제도 모두 지원의 형태를 기준으로 지원종류를 구분하면 서비스보장의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서비스 보장 중 급여액 정보가 있는 서비스 보장에 한정하여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서비스 보장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이 연구가 활용하는 행정자료 결합은 상당한 제약을 주었다. 의료보장서비스(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상한 환급)와 요양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DB 자료에만 결합되어 있고 국세청의 결합자료에는 포

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에는 의료보장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누락된 서비스 보장의 효과 분석을 하여야 했다. 반면 의료보장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포함된 건강보험공단의 결합자료에는 소득의 정확성이 낮고 이 소득구분이 국세청의 구분과 같지도 않아서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기에 어려웠다. 건보공단 DB에 구축된 자료에서 서비스효과를 분석할 때는 소득분위 구성이 두가지로 활용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서비스와 의료보장의 분석에서는 건보료 등급을 활용한 소득분위 구분(10분위 구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나 이하 서비스 종합분석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각종 소득자료를 재 구성한 소득분위(1-2분위 구분되지 않은 분위구성)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기초로 소득분위 구성을 시도한 결과를 반영한 분석을 한 것이다. 다만 노인서비스와 의료보장은 건강보험료기준을 활용하는 제도가 적지 않고 1-2분위 구분이 해석에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건보료 등급 기준 분위구성을 활용하였다.

아래의 분석결과는 건강보험 DB 의 자료와 국세청 국세통계센터의 자료를 번갈아 보여주고 있다. 보건의료지원과 요양을 포함한 서비스 1종 이상 수급가구 비율을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는 1종 이상의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이 전체적으로 평균 수급비율 이상으로 높았다. 근로연령층의 경우 18-25세 가구주가구와 50-64세 가구주 가구 중 저소득가구에서만 수급가구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학생지원과 근로지원, 그리고 보건의료보장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1종 이상 수급가구 비율을 보면 재산이 작은 낮은 분위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높았다. 서비스 수급에 재산기준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재산 7분위가 수급가구 비율의 변곡점으로 보이는데 앞서 소득보장의 재산분위별 수급가구 비율도 재산 7분위 즈음에서 수급가구 비율의 변화가 컸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에서 재산 7분위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강한 것인지, 7분위를 기준으로 계층간 보장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는 조금 더 심도가 있는 추가 분석을 필요로 한다.

〈표 2-4-2-1〉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1종 이상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건강보장 포함)

(단위: %)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27.37	14.27	31.34	35.90	40.02	51.82	37.27
3분위	23.24	15.16	17.92	22.37	41.02	61.87	26.85
4분위	15.51	12.19	15.14	19.29	31.03	46.96	19.66
5분위	11.21	9.56	12.51	17.18	27.39	45.41	16.29
6분위	7.49	7.66	9.76	15.22	26.97	43.56	13.49
7분위	6.69	6.16	8.02	12.93	24.43	40.83	11.24
8분위	7.80	5.44	6.24	10.81	23.46	38.14	9.73
9분위	6.39	4.17	5.61	9.60	21.06	35.04	8.89
10분위	3.21	3.56	5.20	9.16	19.89	33.02	9.20
계	20.29	8.26	11.72	17.72	32.72	49.56	19.17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4-2-2〉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1종 이상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건강보장 포함)

(단위: %)

연령 재산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20.56	10.30	17.99	24.94	41.93	57.93	23.17
5분위	20.89	10.26	16.80	25.80	45.47	61.29	31.49
6분위	16.97	6.80	10.34	16.77	34.27	51.09	22.93
7분위	13.57	4.37	6.21	11.95	27.20	42.40	14.80
8분위	15.19	3.76	5.50	10.97	24.47	39.71	12.47
9분위	16.63	3.34	5.12	10.22	23.53	37.20	11.78
10분위	9.41	3.47	4.93	10.06	21.91	35.38	11.86
계	20.29	8.26	11.72	17.72	32.72	49.56	19.17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수급하는 서비스의 수를 소득분위별*가구주 연령별 기준으로 비교하면 보건의료보장과 요양서비스를 포함한 분석결과와 이 두 제도군을 제외한 분석결과가 매우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보장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경우 평균수급 서비스의 수는 .25개이다. 그리고 근로연령층의 평균적인 수급서비스의 수는 작지만 노인의 수급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많다. 물론 근로연령층 가구주가구의 경우에도 26-39세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고는 낮은 소득분위에서 수급하는 서비스의 평균 개수가 높았다.

그러나 보건의료보장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제외한 분석결과를 보면 일단 수급하는 평균 서비스의 수가 절반이하로 줄었고 노인가구주 가구 중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서는 수급하는 평균 서비스 개수가 작게 나타났으며 반면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에서도 낮은 소득분위는 수급서비스의 평균이 낮지 않았다. 두 개의 서비스 보장을 포괄하는지에 따라 서비스의 대상 포괄성 분석결과는 매우 상이해진다.

요양과 건강보장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이 수급여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반면 이 결과는 건강보장이나 요양서비스가 포괄되지 않고는 서비스 보장의 수급현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게 됨을 보여준다.

〈표 2-4-2-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수급 서비스 수(건강보장 포함)

(단위: 개)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0.33	0.18	0.44	0.48	0.58	0.80	0.53
3분위	0.27	0.18	0.22	0.28	0.60	1.04	0.37
4분위	0.18	0.14	0.18	0.22	0.41	0.72	0.24
5분위	0.12	0.10	0.14	0.19	0.35	0.71	0.19
6분위	0.08	0.08	0.10	0.17	0.35	0.64	0.16
7분위	0.07	0.06	0.08	0.14	0.31	0.60	0.13
8분위	0.08	0.06	0.06	0.12	0.29	0.53	0.11
9분위	0.06	0.04	0.06	0.10	0.25	0.47	0.10
10분위	0.03	0.04	0.05	0.09	0.22	0.40	0.10
계	0.24	0.09	0.14	0.21	0.45	0.76	0.25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4-2-4〉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수급 서비스 수(건강보장 제외)

(단위: 개)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0.31	0.15	0.22	0.27	0.24	0.26	0.24
3분위	0.43	0.17	0.20	0.18	0.33	0.60	0.28
4분위	0.31	0.12	0.15	0.13	0.15	0.24	0.15
5분위	0.16	0.09	0.11	0.10	0.11	0.16	0.11
6분위	0.09	0.07	0.07	0.07	0.08	0.16	0.08
7분위	0.06	0.05	0.06	0.06	0.08	0.14	0.06
8분위	0.06	0.04	0.04	0.04	0.07	0.12	0.04
9분위	0.06	0.03	0.02	0.03	0.05	0.11	0.03
10분위	0.03	0.01	0.01	0.01	0.02	0.06	0.01
계	0.23	0.07	0.09	0.11	0.19	0.29	0.12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노인은 재산분위와 무관하게 수급하는 서비스의 수가 평균이상이었다. 재산분위별 수급하는 서비스 수 평균을 보면 재산 5분위에서 제일 높다. 젊은 가구주 가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강한데 이 경향은 건강보장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유사하여서 젊은 가구주 가구의 교육서비스와 취업서비스 수급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주로 재산 6분위까지는 수급하는 평균 서비스 수가 높으며 이러한 경향을 유사하다. 그러나 건강보장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제외한 분석에서는 18-25세의 수급하는 서비스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과 취업관련 지원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한편 26-39세를 제외하고는 재산이 적은 집단의 수급하는 서비스의 수가 많았다. 서비스 보장에서는 재산 기준이 일부 작용하고 있지만 26-39세의 경우에는 각종 서비스 수급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에서는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에 재산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재산분위별 수급하는 제도 수가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비스 보장에서는 소득보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재산이 수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2-5〉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서비스 수(건강보장 포함)

(단위: 개)

재산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0.24	0.12	0.22	0.31	0.59	0.92	0.31
5분위	0.26	0.11	0.20	0.32	0.65	0.97	0.44
6분위	0.20	0.07	0.11	0.19	0.49	0.80	0.31
7분위	0.14	0.05	0.07	0.13	0.37	0.65	0.19
8분위	0.16	0.04	0.06	0.12	0.32	0.58	0.15
9분위	0.17	0.03	0.05	0.11	0.29	0.53	0.14
10분위	0.09	0.04	0.05	0.11	0.26	0.45	0.13
계	0.24	0.09	0.14	0.21	0.45	0.76	0.25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4-2-6〉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서비스 수(건강보장 제외)

(단위: 개)

재산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0.23	0.09	0.17	0.21	0.34	0.45	0.20
5분위	0.25	0.09	0.15	0.20	0.34	0.39	0.23
6분위	0.18	0.05	0.07	0.08	0.18	0.27	0.12
7분위	0.12	0.02	0.02	0.03	0.10	0.17	0.05
8분위	0.15	0.01	0.02	0.02	0.07	0.13	0.03
9분위	0.13	0.01	0.01	0.01	0.05	0.10	0.02
10분위	0.08	0.01	0.01	0.01	0.03	0.05	0.02
계	0.23	0.07	0.09	0.11	0.19	0.29	0.12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을 보면 재산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이 높았다. 반면 소득분위가 동일할 때 서비스 수급가구의 비율이 재산분위가 낮을수록 높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에서는 재산이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재산 5분위, 6분위에서 서비스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서비스가 소득보장과 달리 다양한 목적의 제도로 구성되고 있고 따라서 기준 적용이 소득보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다양한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취업지원과 학비지원의 경우 재산이 많은 가구가 수급할 확률이 낮지 않다.

〈표 2-4-2-7〉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1종 이상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건강보장 포함)

(단위: %)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42.06	52.70	40.36	28.95	25.92	24.08	22.47	37.27
3분위	28.30	41.46	29.79	17.86	15.96	14.56	16.28	26.85
4분위	21.07	25.16	23.67	14.81	13.86	14.47	14.50	19.66
5분위	18.01	20.66	18.71	13.19	10.94	11.65	12.32	16.29
6분위	15.27	19.07	15.29	11.98	9.61	9.78	10.40	13.49
7분위	12.39	16.88	12.59	11.08	9.45	8.88	9.62	11.24
8분위	10.54	14.49	11.09	8.85	9.02	8.53	9.02	9.73
9분위	9.20	11.06	9.81	8.10	8.09	8.43	9.36	8.89
10분위	10.09	9.50	9.84	8.80	7.61	8.03	9.24	9.20
계	23.17	31.49	22.93	14.80	12.47	11.78	11.86	19.17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노인은 재산분위와 무관하게 수급하는 서비스의 수가 평균이상이었다. 재산분위별 수급하는 서비스 수 평균을 보면 재산 5분위에서 제일 높다. 젊은 가구주 가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강한데 이 경향은 건강보장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유사하여서 젊은 가구주 가구의 교육서비스와 취업서비스 수급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주로 재산 6분위까지는 수급하는 평균 서비스 수가 높으며 이러한 경향을 유사하다. 그러나 건강보장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제외한 분석에서는 18-25세의 수급하는 서비스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과 취업관련 지원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한편 26-39세를 제외하고는 재산이 적은 집단의 수급하는 서비스의 수가 많았다. 서비스 보장에서는 재산 기준이 일부 작용하고 있지만 26-39세의 경우에는 각종 서비스 수급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에서는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에 재산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재산분위별 수급하는 제도 수가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비스 보장에서는 소득보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재산이 수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장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제외한 수급서비스 수를 보면 재산이 동일하여도 소득하위 1-2분위에서 3분위와 비교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수급하고 있지는 않다.

〈표 2-4-2-8〉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평균 수급 서비스 수(건강보장 포함)

(단위: 개)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0.61	0.77	0.59	0.42	0.35	0.32	0.28	0.53
3분위	0.39	0.63	0.43	0.23	0.20	0.17	0.19	0.37
4분위	0.26	0.32	0.32	0.18	0.17	0.17	0.17	0.24
5분위	0.21	0.25	0.24	0.16	0.13	0.14	0.14	0.19
6분위	0.17	0.22	0.19	0.15	0.11	0.11	0.11	0.16
7분위	0.14	0.20	0.15	0.13	0.11	0.10	0.10	0.13
8분위	0.12	0.17	0.13	0.10	0.10	0.10	0.10	0.11
9분위	0.10	0.13	0.11	0.09	0.09	0.09	0.10	0.10
10분위	0.11	0.10	0.11	0.10	0.08	0.08	0.10	0.10
계	0.31	0.44	0.31	0.19	0.15	0.14	0.13	0.25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4-2-9〉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평균 수급 서비스 수(건강보장 제외)

(단위: 개)

소득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0.36	0.34	0.16	0.05	0.03	0.02	0.02	0.24
3분위	0.35	0.44	0.35	0.21	0.15	0.11	0.05	0.28
4분위	0.22	0.22	0.13	0.07	0.05	0.03	0.03	0.15
5분위	0.17	0.18	0.09	0.04	0.03	0.03	0.02	0.11
6분위	0.12	0.14	0.06	0.03	0.02	0.02	0.02	0.08
7분위	0.10	0.12	0.06	0.03	0.02	0.02	0.01	0.06
8분위	0.07	0.10	0.04	0.02	0.02	0.01	0.01	0.04
9분위	0.05	0.05	0.03	0.02	0.01	0.01	0.01	0.03
10분위	0.02	0.02	0.02	0.01	0.01	0.01	0.00	0.01
계	0.20	0.23	0.12	0.05	0.03	0.02	0.02	0.12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2. 서비스 보장의 수급액 분석과 한계

서비스 보장제도의 수급액을 활용하여 수급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수급액 정보만 있는 서비스를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는 수급액이 없었으므로 이 영향이 분석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평균서비스 수급액을 보면 젊은 연령층의 서비스 수급액이 높다. 주로 학비지원과 일자리 지원은 포함되고 노인의 수급율이 높은 제도는 누락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수급액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석의 한계는 매우 크다. 이 두 종의 서비스 수급액을 분석에 포함한다면 노인가구주 가구의 서비스 수급액이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4-2-10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서비스 수급액

(단위: 개)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369.65	311.02	285.33	249.11	158.27	146.22	232.56
3분위	340.03	327.61	323.59	332.49	212.06	227.19	280.96
4분위	348.32	316.47	310.51	323.61	233.91	282.67	308.87
5분위	316.73	336.82	303.93	315.99	203.11	261.61	306.86
6분위	270.11	330.71	302.42	298.31	211.34	280.55	303.71
7분위	249.48	321.25	276.39	291.26	227.18	225.88	294.42
8분위	181.51	313.48	260.75	261.75	240.38	263.46	280.07
9분위	230.62	313.54	254.87	225.14	248.90	264.76	267.97
10분위	185.11	318.26	273.63	229.33	247.94	272.52	279.50
계	330.56	321.13	289.70	288.20	202.81	213.91	284.35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4-2-11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서비스 수급액

(단위: 개)

연령 재산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330.15	300.57	270.58	248.34	139.05	164.71	256.71
5분위	342.18	318.94	270.34	273.49	164.25	210.80	254.09
6분위	357.09	342.34	310.60	330.60	254.19	242.12	301.43
7분위	316.47	346.33	331.30	361.96	267.33	261.52	331.14
8분위	302.78	351.20	308.77	329.54	267.42	270.48	322.34
9분위	353.81	341.16	305.17	308.61	305.38	263.29	314.44
10분위	305.74	334.91	290.50	305.13	276.39	272.58	305.99
계	330.56	321.13	289.70	288.20	202.81	213.91	284.35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3. 일자리 지원의 대상포괄성과 수급수준

근로연령층과 노인의 일자리지원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일자리 지원의 현황을 추가 분석하였다. 2장에서 근로연령집단의 일자리지원을 분석하였지만 노인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노인을 포함한 분석을 일부 추가한 것이다. 최근 노인일자리 제공을 크게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의미가 있는 분석이라고 판단하였다.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일자리 지원의 수급 제도 수를 비교한 결과 노인가구주 가구의 수급 서비스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물론 낮은 소득분위의 18-25세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 제도 수가 많지만 해당 연령이 경제활동연령임을 고려하면 노인일자리 제공은 더 큰 규모의 제공이라 해석해볼 수도 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젊은 청년의 실업률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 수급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50-64세는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율도 낮지 않은 연령층이므로 해당 연령 가구주 가구에서도 일자리 서비스가 보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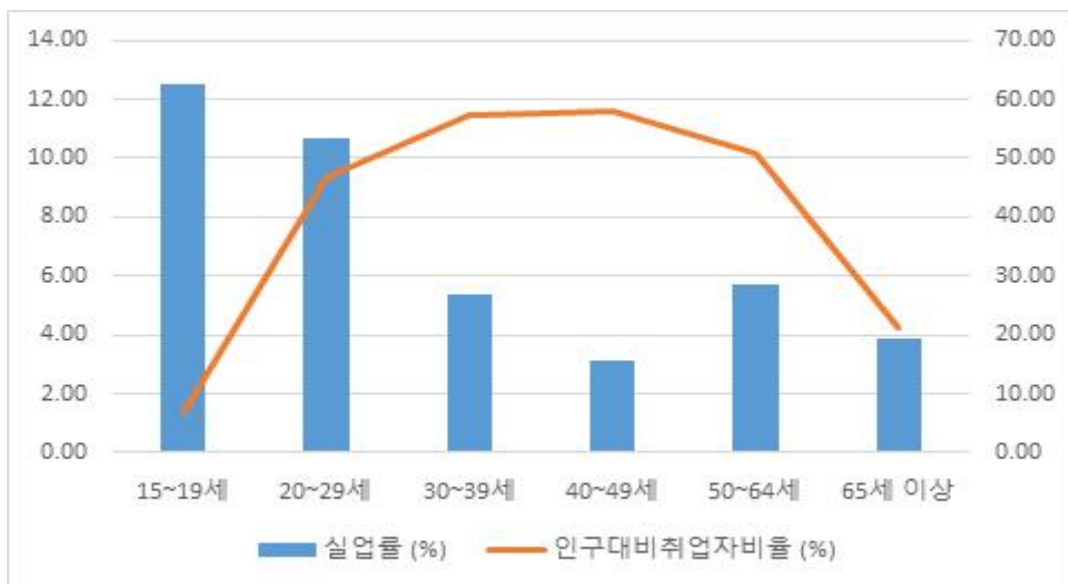
〈표 2-4-2-12〉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수급 일자리 서비스 수

(단위: 개)

연령 소득	0-17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0.00	0.03	0.01	0.01	0.01	0.01	0.01	0.01
3분위	0.00	0.04	0.03	0.02	0.02	0.22	0.51	0.13
4분위	0.00	0.04	0.02	0.01	0.02	0.06	0.16	0.03
5분위	.	0.04	0.01	0.01	0.01	0.03	0.08	0.02
6분위	.	0.01	0.01	0.00	0.00	0.02	0.09	0.01
7분위	0.00	0.01	0.00	0.00	0.00	0.03	0.09	0.01
8분위	.	0.00	0.00	0.00	0.00	0.02	0.08	0.00
9분위	.	0.00	0.00	0.00	0.00	0.03	0.09	0.00
10분위	.	0.00	0.00	0.00	0.00	0.01	0.04	0.00
계	0.00	0.03	0.01	0.00	0.01	0.05	0.11	0.02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그림 2-4-2-1〕 연령별 실업률과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2017년)



자료: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32S01252020. 02. 14 추출

일자리서비스의 수급액을 비교하여 보면 이러한 고민이 더 커진다. 일자리 서비스의 평균 수급액은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높고 근로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5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 소득이 낮은 분위에서 수급액이 큰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노인가구주 가구에서는 소득 1-2분위, 3분위의 가구가 4분위 노인가구주 가구보다 수급액이 낮다. 근로활동의 역량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일자리 서비스 수급액을 보면 수급액이 재산분위와 관련이 적고 소득분위와 관련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2-4-2-1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평균 일자리 서비스 수급액

(단위: 개)

연령 소득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2분위	82.69	102.45	121.09	215.44	147.68	101.96	134.43
3분위	61.25	165.22	173.39	194.13	205.23	217.82	206.30
4분위	80.69	161.92	136.24	133.44	247.80	272.89	191.84
5분위	61.48	123.94	129.41	120.11	202.07	204.29	146.10
6분위	61.08	124.12	137.25	113.23	206.60	214.31	143.60
7분위	71.44	149.82	142.36	119.25	191.16	209.80	145.65
8분위	92.14	142.05	164.42	106.55	205.93	214.31	142.60
9분위	55.67	155.80	181.86	112.50	210.82	213.15	146.64
10분위	85.54	222.60	162.28	101.95	198.62	217.14	128.74
계	70.74	142.35	148.59	130.47	205.63	214.95	174.54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표 2-4-2-14〉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평균 일자리 서비스 수급액

(단위: 개)

재산 소득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23.74	199.35	196.42	174.67	133.66	90.70	85.65	134.43
3분위	193.98	202.54	222.05	218.75	207.64	198.22	179.55	206.30
4분위	164.79	203.87	231.67	223.65	196.81	205.16	171.05	191.84
5분위	127.35	173.79	172.43	163.37	136.22	176.09	129.42	146.10
6분위	127.78	171.88	158.46	153.17	156.37	140.03	145.68	143.60
7분위	128.30	158.92	170.36	144.21	154.80	127.49	176.19	145.65
8분위	126.02	145.69	165.03	142.27	149.66	133.67	155.58	142.60
9분위	126.20	190.17	160.75	155.66	150.18	132.25	161.96	146.64
10분위	124.39	149.93	143.86	125.83	141.23	123.16	125.35	128.74
계	160.37	192.57	206.48	190.06	172.61	158.69	148.78	174.54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4. 서비스 보장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

서비스 보장의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보장에서 돌봄서비스의 빈곤완화 효과가 커서 빈곤율을 중위 50%기준으로 약 0.61%p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의 빈곤완화 효과는 약 0.13%p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한 서비스 전체의 빈곤완화 효과는 1.38%였다. 이 분석에

서 수급액 정보가 누락된 서비스가 많아서 이 빈곤완화 효과는 상당히 실제 효과와 비교하여 평가절하 되었을 위험이 크다.

〈표 2-4-2-15〉 서비스지원의 소득보장효과

구분			시장소득	시장소득+일자리지원*	시장소득+돌봄**	시장소득+일자리와 돌봄 외 서비스***	시장소득+서비스
빈곤율	전가구	중위25	32.36	31.84	31.73	31.58	30.42
		중위50	39.46	39.33	38.84	38.82	38.08
	전인구	중위25	32.47	31.95	31.83	31.68	30.53
		중위50	39.57	39.44	38.96	38.94	38.19
	아동가구	중위25	16.24	16.16	14.41	15.36	13.43
		중위50	23.77	23.7	21.98	22.97	21.1
지니	전가구		0.59118	0.58921	0.58627	0.5861	0.57931
	전인구		0.59183	0.58985	0.58693	0.58674	0.57995
	아동가구		0.47867	0.47806	0.46373	0.47257	0.45722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불평등의 완화에도 돌봄서비스의 영향은 컸다. 분석에 포함된 서비스 전체는 지니계수를 .01188정도 낮추었다. 아동가구의 경우 불평등 완화 효과는 더 커서 서비스로 지니계수가 .02145 낮아졌다. 수급액 정보를 더 보강한다면 서비스의 소득분배 효과가 더 현실에 가까워질 것이다. 현재 분석결과로 미루어볼 때 서비스의 지출보전으로 인한 실질적 소득보장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제3절 소득·서비스보장 종합분석

분석에 포함된 전 소득보장제도와 전 서비스보장 제도를 하나의 틀에서 종합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진한 음영표시는 현금급여수급도 평균이하이고 서비스 수급도 평균이하인 집단이다. 다소 옅은 음영은 두 형태의 보장 중 하나의 지원 수급율이 평균이하인 집단이다. 비노인가구주 가구의 6분위 이상에서 두 제도의 수급율이 모두 평균 이하였다. 이 소득구간은 상대적으로 소득안정성이 높은 곳이므로 평균이하의 수급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6-49세 가구주 가구는 소득 4,5분위에 위치하여도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의 수급율이 모두 평균이하여서 이 집단이 사회보장제도 비수급이 문제를 유발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득이 높은 분위의 노인이 평균이하의 서비스 수급을 받고 있는데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소득계층별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의 고려 등 안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도 고려해볼만하다. 반면 소득이 낮은 근로연령층의 경우 현금지원에서 배제되어 초래되는 위기도 검토가 필요하다.

〈표 2-4-3-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소득								
1-2분위	현금급여수급	9.39	12.53	18.70	38.61	90.38	88.55	57.25
	서비스수급	25.13	11.87	16.84	21.26	19.57	20.98	19.47
3분위	현금급여수급	9.23	32.79	37.54	47.48	95.50	94.93	57.58
	서비스수급	35.72	13.27	16.17	14.47	28.87	53.48	24.03
4분위	현금급여수급	11.95	33.50	35.08	43.61	93.82	86.13	48.08
	서비스수급	27.19	10.39	12.00	10.89	13.14	21.30	12.63
5분위	현금급여수급	14.50	32.04	30.28	39.18	94.07	86.05	44.32
	서비스수급	14.18	8.47	9.60	9.04	9.92	13.86	9.55
6분위	현금급여수급	10.43	22.65	20.96	31.95	92.89	85.42	34.37
	서비스수급	8.74	6.36	7.08	7.11	8.01	14.20	7.29
7분위	현금급여수급	4.48	7.86	9.17	27.26	92.25	83.35	22.69
	서비스수급	5.57	5.06	5.49	6.10	7.27	13.40	5.89
8분위	현금급여수급	2.45	4.03	4.73	22.72	91.02	85.28	16.56
	서비스수급	5.41	3.52	3.61	4.33	6.46	11.00	4.15
9분위	현금급여수급	1.55	2.66	2.72	16.01	89.97	84.47	12.19
	서비스수급	5.42	2.55	2.01	2.64	5.04	10.41	2.71
10분위	현금급여수급	1.38	1.80	1.47	9.28	89.22	74.57	9.00
	서비스수급	3.07	1.05	0.98	1.03	2.12	5.58	1.14
계	현금급여수급	8.80	13.62	16.15	30.65	92.20	88.54	35.93
	서비스수급	19.27	6.03	7.62	9.13	15.81	24.19	10.59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수급가구의 비율을 보면 26-39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 재산이 5분위 이하여도 두 제도 모두 평균이하의 수급율을 보이고 있다. 이 연령은 재산의 소유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즉 재산을 처분하여 소득부족이나 기타 기초육구 충족이 쉽지 않더라도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판단된다. 노인과 비교하면 서비스 필요가 적은 집단일 수 있지만 40대와 비교하여도 서비스 수급이 매우 낮고 현금지원 수급율도 낮다. 40-64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 재산이 1-4분위인 경우 현금급여수급은 평균보다 낮아도 서비스 지원수급은 평균보다 높았다. 서비스의 경우 수급결정에 재산의 영향이 현금지원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2-4-3-2〉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재산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1-4분위	현금급여수급		8.81	15.03	23.40	33.52	89.96	85.26	33.87
	서비스수급		19.60	8.11	13.94	17.10	27.36	35.73	16.41
5분위	현금급여수급		13.02	16.29	21.80	36.22	95.16	95.86	50.55
	서비스수급		19.69	8.40	12.77	16.98	29.25	33.67	20.01
6분위	현금급여수급		9.92	17.06	20.50	34.89	96.02	96.99	50.48
	서비스수급		15.71	4.61	6.05	7.17	16.75	24.95	11.20
7분위	현금급여수급		9.52	16.01	15.38	30.31	96.14	95.95	41.03
	서비스수급		11.13	2.16	2.10	2.68	9.22	16.32	4.84
8분위	현금급여수급		6.56	9.21	8.18	26.29	94.23	93.01	33.03
	서비스수급		13.81	1.36	1.48	1.83	6.22	11.99	3.09
9분위	현금급여수급		2.94	6.23	4.73	25.01	92.40	86.46	30.76
	서비스수급		12.74	1.11	1.00	1.45	4.55	9.08	2.30
10분위	현금급여수급		3.59	4.75	3.82	25.21	87.68	70.05	30.50
	서비스수급		8.04	0.75	0.66	1.06	2.87	5.18	1.53
계	현금급여수급		8.80	13.62	16.15	30.65	92.20	88.54	35.93
	서비스수급		19.27	6.03	7.62	9.13	15.81	24.19	10.59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의 수급가구 비율을 보면 제도 수급에 재산보다 소득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재산분위와 무관하게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이 모두 평균이하인 집단이 포진하고 있다.

〈표 2-4-3-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현금급여수급	48.51	72.56	74.34	69.87	67.65	65.43	59.05	57.25
	서비스수급	27.91	28.29	14.30	4.40	3.05	2.35	2.17	19.47
3분위	현금급여수급	52.30	68.80	74.09	66.46	56.39	54.47	53.31	57.58
	서비스수급	28.05	37.39	31.70	20.05	14.07	10.21	5.05	24.03
4분위	현금급여수급	46.92	56.01	59.65	51.42	42.35	41.60	45.96	48.08
	서비스수급	17.79	18.81	11.49	6.50	4.33	2.98	2.72	12.63
5분위	현금급여수급	42.55	51.64	53.28	48.79	41.04	40.92	42.31	44.32
	서비스수급	14.71	15.98	7.98	3.91	2.93	2.64	1.96	9.55
6분위	현금급여수급	29.75	40.86	43.26	40.86	34.25	35.10	38.40	34.37
	서비스수급	11.26	13.45	5.67	3.30	2.41	2.38	1.89	7.29
7분위	현금급여수급	17.43	29.99	29.07	26.15	23.60	25.72	32.01	22.69
	서비스수급	9.35	11.79	5.37	2.63	1.88	1.98	1.37	5.89
8분위	현금급여수급	11.61	18.99	22.21	19.32	17.67	19.00	23.95	16.56
	서비스수급	6.92	9.51	4.13	1.85	1.49	1.38	1.16	4.15
9분위	현금급여수급	8.25	14.19	15.70	14.81	12.94	13.18	17.01	12.19
	서비스수급	4.58	5.29	3.39	1.71	1.30	0.98	0.86	2.71
10분위	현금급여수급	8.36	9.63	9.63	9.27	7.55	7.98	10.84	9.00
	서비스수급	1.90	2.24	2.01	1.18	0.71	0.59	0.45	1.14
계	현금급여수급	33.87	50.55	50.48	41.03	33.03	30.76	30.50	35.93
	서비스수급	16.41	20.01	11.20	4.84	3.09	2.30	1.53	10.59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아래의 표를 보면 분석에 활용된 자료에서 건강보장성 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누락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단 서비스 평균 수급액이 매우 낮다. 그리고 노인가구주 가구와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평균 수급액 차이가 크지 않다.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고 분석결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평균수급액은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높다. 다만 앞서 언급한 서비스 정보의 누락으로 50대 가구주 가구의 수급액 평균이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보다 높다. 건강보장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누락된 상태에서 보자면 현금지원은 50세 미만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에서 거의 대부분 평균이하의 수급액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급액은 두 종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주거, 산재, 장애인대상 서비스 교육지원 한부모지원 보육료지원 취업지원 등이므로 주로 근로연령층 가구주에서 평균수급액이 높고 노인이 주로 수급하는 서비스는 노인일자리와 노인돌봄서비스 정도만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노인가구주 가구의 평균수급액이 낮았다.

〈표 2-4-3-4〉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의 평균 수급액

(단위: %)

연령		18-25	26-39	40-49	50-64	65-74	75-	계
소득								
1-2분위	현금급여수급	601.17	462.66	635.07	851.67	865.05	637.56	746.49
	서비스수급	276.25	173.45	147.09	60.76	17.16	15.55	38.67
3분위	현금급여수급	564.84	325.86	370.69	658.78	879.65	607.90	638.77
	서비스수급	266.27	157.10	139.98	84.91	69.61	149.71	110.12
4분위	현금급여수급	429.80	350.11	344.96	610.94	925.17	750.81	602.39
	서비스수급	190.43	147.33	129.34	80.33	40.02	88.43	92.45
5분위	현금급여수급	346.92	334.10	299.39	630.76	894.38	742.03	583.09
	서비스수급	124.58	169.61	122.82	74.80	29.36	61.99	88.72
6분위	현금급여수급	278.76	333.74	305.23	702.12	888.23	727.82	588.09
	서비스수급	98.90	174.16	114.82	69.37	27.97	67.76	91.48
7분위	현금급여수급	305.69	365.45	394.44	726.51	907.40	738.96	607.30
	서비스수급	74.50	162.82	109.62	62.58	29.46	53.47	90.45
8분위	현금급여수급	305.78	389.66	431.07	739.99	938.24	774.79	619.35
	서비스수급	51.99	153.49	101.17	54.26	29.17	56.67	86.17
9분위	현금급여수급	364.31	418.78	458.94	757.85	923.36	733.91	637.11
	서비스수급	108.40	142.39	87.80	42.61	27.50	47.89	74.45
10분위	현금급여수급	388.22	406.43	440.78	823.20	1116.40	812.76	699.32
	서비스수급	35.38	139.41	76.39	32.29	13.54	28.31	61.36
계	현금급여수급	430.65	369.72	391.56	716.59	894.43	658.71	650.20
	서비스수급	177.08	158.84	118.56	65.90	31.28	47.73	76.47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현금지원은 소득분위, 재산분위가 낮은 가구에서 오히려 수급액이 다소 낮다. 서비스수급은 소득이 낮은 집단 1-2분위 가구와 재산이 높은 가구, 그리고 소득이 높은 9분위와 10분위에서 수급액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육구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주로 수급액이 소득이나 재산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의료와 요양을 제외한 서비스는 취업과 교육 등의 지원으로 노인 외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간소득계층 가구로 좀 더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4-3-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현금지원 수급가구 및 서비스지원 수급가구의 평균 수금액

(단위: %)

소득		재산	1-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현금급여수급		632.15	574.51	612.82	743.99	907.95	1094.26	1409.47	746.49
	서비스수급		55.10	33.08	25.35	23.52	25.28	18.47	16.58	38.67
3분위	현금급여수급		490.35	546.32	550.14	634.87	808.25	990.14	1380.27	638.77
	서비스수급		117.81	129.39	124.46	115.28	97.16	79.37	50.05	110.12
4분위	현금급여수급		455.25	527.87	569.34	605.38	753.08	965.55	1197.39	602.39
	서비스수급		99.08	104.72	90.60	99.29	85.45	75.43	57.68	92.45
5분위	현금급여수급		416.75	482.76	532.02	588.10	752.84	895.74	1106.26	583.09
	서비스수급		95.75	75.03	87.51	94.32	91.13	77.68	54.24	88.72
6분위	현금급여수급		422.36	530.51	517.71	540.73	679.04	852.63	1119.58	588.09
	서비스수급		99.24	78.49	86.81	94.35	95.58	84.91	63.66	91.48
7분위	현금급여수급		467.03	558.78	525.74	559.11	649.35	748.95	1015.34	607.30
	서비스수급		91.99	77.65	81.78	94.07	99.62	93.72	77.70	90.45
8분위	현금급여수급		479.30	524.42	555.26	562.45	627.52	714.80	932.00	619.35
	서비스수급		89.77	87.48	75.58	83.76	95.68	87.16	77.01	86.17
9분위	현금급여수급		523.95	540.97	571.59	559.71	597.20	672.02	876.19	637.11
	서비스수급		76.02	60.56	59.61	74.33	83.41	74.82	72.63	74.45
10분위	현금급여수급		616.50	620.09	577.74	603.33	602.39	678.68	857.12	699.32
	서비스수급		59.97	60.02	63.88	61.18	67.64	65.47	58.05	61.36
계	현금급여수급		515.21	547.96	567.15	620.27	739.13	871.51	1103.36	650.20
	서비스수급		84.85	70.64	70.98	78.14	77.11	67.70	55.29	76.47

주: 음영 표시된 칸은 평균보다 수급이 작은 집단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현금급여와 서비스 지원의 소득분배효과를 보면 현금지원이 빈곤율을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7.39%p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행정자료 중 소득보장정보가 누락된 제도들이 있으므로 이 빈곤감소 수준을 실제보다 낮은 것이라 보아야 한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분석의 한계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규모가 큰 건강보장과 요양서비스가 누락된 자료 분석결과로 실제 서비스의 소득분배효과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서비스로 인한 빈곤감소 효과는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1.39%p 낮추었다. 전체적으로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은 빈곤율을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8.84%p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25%를 기준으로 보면 빈곤완화 효과가 더 큰데 현금지원의 경우 빈곤율이 12.8%p 낮아졌다. 현금지원이 가구 소득을 중위 50%를 넘길 정도로 충분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중위 25%정도를 넘길 수 있는 조금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조금 더 감소폭이 컸는데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전가구는 현금지원으로 빈곤율이 18.7% 낮아졌지만 아동가구는 빈곤율이 21.8% 낮아졌다.

〈표 2-4-3-6〉 현금지원 및 서비스 지원의 소득분배효과

구분			시장소득	시장소득+현금급여	시장소득+서비스 지원	시장소득+현금지원 +서비스지원
빈곤율	전가구	중위25	32.36	20.59	30.42	19.36
		중위50	39.46	32.08	38.08	30.63
	전인구	중위25	32.47	20.67	30.53	19.43
		중위50	39.57	32.18	38.19	30.73
	아동가구	중위25	16.24	11.44	13.43	9.34
		중위50	23.77	18.59	21.1	16.3
지니	전가구		0.59118	0.52658	0.57931	0.51744
	전인구		0.59183	0.47651	0.57995	0.46436
	아동가구		0.47867	0.44558	0.45722	0.42758

자료: 16개 기관 추출결합 행정자료.

제 3 부

행정자료 연계·활용 기반과 정책과제

제1장 사회보장정책 연구와 자료 활용 경향

제2장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과 시사점

제3장 행정자료 활용 방향과 정책과제

3

행정자료의 연계·활용 기반과 정책과제 <<

제3부는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정책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행정자료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여 미래 근거기반 정책설계의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3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국내 사회보장제도 평가연구를 자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한계와 미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국외 행정자료를 기반 정책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행정자료의 활용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수준에 대하여 보다 중립적인 판단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셋째, 행정자료 활용과 관련된 이슈와 정책과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1장 사회보장정책 연구와 자료 활용 경향

제1절 기존 사회보장정책 연구의 자료 활용 경향과 한계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수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통상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대개 다음의 몇 가지의 자료에 의존하게 된다. 집계된 행정자료, 설문조사 자료, 그리고 연구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의 설계에 맞추어 마련되는 행정자료 등이다.

각 자료는 장단점이 서로 다르다. 우선 집계된 자료는 접근성이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의 총 예산이나 대상자 규모 변화 등 정책의 발전을 빠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집계자료는 제공되는 자료 외 요인들 사이의 관계나 연구자가 의도하는 분석틀에 따른 분석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설문조사 자료는 연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 연구에 맞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경비도 높고 소요되는 시간도 대체로 길다. 통계청 등의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되어 제공되는 설문조사 자료는 대개 조사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문제를 지닌다. 물론 제한된 범위에서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분석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자료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는 그나마 사회보장 정보를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지만 분석할 수 있는 제도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도 조사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수급여부 외에 수급액을 조사하는 제도는 더 적다.

〈표 3-1-1-1〉 주요 설문조사자료의 사회보장제도 정보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출산장려금포함) 장애인 연금, 수당 공공부조(현금성 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공공부조수급(의료급여등수급액 정보 부재)/ 장애수당 연금가입과 수급, 수급액, 기초연금수급액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보육료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한부모지원 학비지원/ 주거보장 수급 긴급복지/ 근로장려세제 에너지감면과 보조금/ 통신비보조 등 보조금 기타 바우처 수급액 장애인·노인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연구자의 신청에 따라 마련되는 맞춤형 행정자료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분석틀도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구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다. 자료를 활용하기 전 승인과정이 길고 복잡할 뿐 아니라 자료 활용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표 3-1-1-2〉 설문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장단점 비교

	설문조사자료	행정자료
장점	높은 접근성	정보의 포괄성
단점	제한된 정보 높은 비용(별도 조사 수행 시)	낮은 접근성(정보 정의 부재 등) 인식과 태도 파악 취약 욕구 정보 부족
공통 이슈	자료의 정확성, 자료의 시차	

원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한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 다수이다. 기존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분석은 해당 설문조사의 조사 내용에 한정하여 분석범위가 정하여지므로 계속 확대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기 어렵다.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정 제도군이나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대상 포괄성을 분석한 연구는 그리 흔하지 않은데 이는 설문조사 자료가 대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자료는 개별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로 거의 모든 정책은 행정자료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책대상의 규모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정책은 행정자료로 기록되어 있고 따라서 거의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행정자료로 제도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분석하고자 하는 제도에 대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여왔다. 하지

만 이 연구들의 경우 대개 정부가 위탁하는 연구이다. 정부위탁연구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분석을 특정 제도 또는 제도군으로 한정하게 된다. 물론 정교한 가설을 수립하고 분석을 하여가기에는 분석의 범위를 좁히고 심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기저에는 여러 원천의 행정자료를 입수하고 연계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연구를 위탁하는 주체도 담당하는 특정 제도의 효과로 한정하여 연구의 범위를 요구하고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여도 상보성, 대체성을 지니는 일정한 수준이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정책들로 한정된다. 각 정부 부서들은 담당하는 정책 외 행정자료를 입수하고 결합하는 그 어려운 과정은 감수할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러기에는 행정자료 연계·활용 기반이 취약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 이해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자료 활용의 기반과 관련하여 상당히 제약을 받았다.

행정자료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약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행정자료는 인식과 태도에 관한 정보를 거의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욕구정보도 일부에 국한되어 입수가 가능하다. 욕구정보 중 일부 정보는 표준화되지 못한 점도 행정자료의 약점이다. 예를 들어 고용불안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종사상 지위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비되지 않았거나 학력 등의 정보 연계 가능성 등이 행정정보의 불완전성을 높이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분석 연구들이 경험하는 공통적 한계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²⁷⁾. 첫째, 기존 정책평가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 이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평가는 단일제도나 제도군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설문조사자료로는 이러한 분석이 쉽지 않고 행정자료의 경우에도 각종 자료를 연결하여 분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상보성이나 대체성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분석하기 어려웠다.

둘째 전인구 대표성을 가지는 일부 설문조사에 정보가 있는 제도 외 사회보장제도나 제도군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은 결국 특정 제도의 정보만 담은 행정자료에 의존하게 되는데 분석대상 집단의 소득이나 재산분위별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수급집단의 특성, 제도적 배제위험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한다. 이러한 행정자료의 구성은 행정적 문제의 발견, 또는 부적절 수급으로 연구주제를 한정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 전 인구의 소득 중 특정 제도 수급 집단의 소득 분포를 이해하지 않고는 빈곤 및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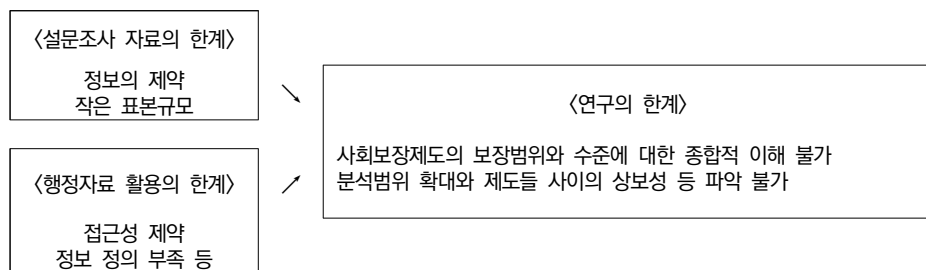
셋째, 앞의 두 번째 한계와 관련된 것으로 기존 연구로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위험이 있는 집단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전 인구를 표본으로 하면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가진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제도의 효과분석에 국한되고 오히려 전 가구, 전 인구 중 누가 위험에

27)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가 경험하는 공통적 한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현주 외(2019). P. 46-47.

농인 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기술발전으로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일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보호하지 못하는지를 파악하는 점검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이 낮아진다면 대안적인 다른 제도가 확충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대상 포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가능하다.

많은 연구들이 의존하는 설문조사 자료는 자료의 한계, 즉 포괄하는 정책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반면 행정자료는 자료의 범위가 넓은 정보를 포괄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평가연구들은 사회보장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하기 어려웠고 관련이 있는 제도들 사이의 상보성 등에 대한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별 제도 수준의 분석으로 한정된 상태의 분석으로 심도를 높이거나 또는 일부 제도군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하면서 분석의 정확성을 낮추어야 했다.

[그림 3-1-1-1] 자료의 제약과 정책연구의 한계



향후에는 행정자료의 약점을 보강하면서 강점을 살리는 자료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의 강점을 고려한 자료 기반도 병행하여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행정자료 활용 기반의 최근 변화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연구의 환경은 과거 20년 동안 크게 변화되어 왔다. 중요한 환경 변화로는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할 수 있다. 하나는 정책정보가 빠르게 전산화되면서 정보기반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그 이전과 비교하면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연구의 수가 그나마 증가하여왔다. 두 번째, 정부를 비롯하여 한국 사회는 행정자료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자료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다양한 정부 방침을 발표하면서 행정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자료의 활용에 그리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지만 함께 논의하여야 하는 환경변화도 있다. 근거 기반정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의 변화를 중심으로 환경변화를 정리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각종 행정업무가 전산화되면서 당연히 정부의 정책집행은 전산자료로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표준화·전산화한 시스템은 새 행정시스템이었다. 1980-90년대에는 국세업무의 전산화가 이미 확대되었다. 행복e음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2010년 개통되었고 2013년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범정부 시스템이 개통되는 등 사회보장제도 영역에서도 전산화가 빠르게 추진되어왔다. 전산화의 추진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정보인 수급자의 특성 정보, 수급내용과 수준 정보 등 풍부한 정보가 원자료 수준의 행정자료로 축적되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수당을 포괄하여 현금보장과 서비스 보장의 대부분 정책이 관련 정보를 개인, 가구, 지역단위 행정자료로 구축,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표 3-1-2-1〉 행정자료가 존재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예

구분	현금급여	서비스
자산조사형	생계급여, 근로장려세제 등 주거급여,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지원, 대학장학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공공임대 등 각종 주거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각종 돌봄서비스 등
비자산조사형	아동수당,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보훈급여금 등	보육서비스 등
사회보험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고용보험(서비스 포함),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각종 사회보장을 집행하면서 얻어진 행정자료가 소관부처의 책임 하에 정보관리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각 행정자료가 어느 부처 소관인지, 그리고 관리조직은 어디인지를 간략하게 볼 수 있다. 열거된 자료를 보면 짐작하듯이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의 기반이 매우 견고하여졌다. 물론 이러한 자료는 개별 기관의 자료로 한정하여서는 분석의 의의를 살리는 분석을 해내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회정책의 효과를 이해하자면 소득과 재산 등 수급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함께 연계한 행정자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행정자료가 구축되었으나 행정자료를 정책평가와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그리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는 행정자료를 연계한 자료를 활용한 정책연구는 쉽지 않았다. 자료기반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근거기반 기획에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왔다.

〈표 3-1-2-2〉 행정자료의 종류와 관리기관의 예

소관 부처	대상 사업	정보 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정보원
	돌봄지원 등 서비스	사회보장정보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취업지원	한국고용정보원
교육부	교육급여	사회보장정보원
	교육비 지원사업(자체, NE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 학자금 지원 사업	한국장학재단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LH공사/SH공사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국세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재산정보	지방정부 관리 정보 다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사회보장정보원

최근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졌다. 2010년대 이후 정부는 행정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적극적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되고,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번 정부 들어서고는 2016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16년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된 정부발표에서 ‘공공정보 개방·공유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에, 빅데이터 활용은 과학적 정책 집행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수단’임을 밝히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기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인데(관계부처합동 2016), ‘법에서 허용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국한된 목적으로만 제공하는 경우 적정성 평가 제외’(관계부처합동 2016, p. 65)하고 한편 ‘임시대체키 생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관계부처합동, 2016, p.74)이라고 적시하여 자료의 결합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8년 7월, 개인정보 빅데이터 공개와 관련 개인 식별 정보가 제거된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안을 마련 중임을 재차 밝힌 바 있다(2018. 7. 4. 한경미래니엄 포럼). 대통령은 2019년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의 추진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혁신종합계획(‘19. 3.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데이터 과학에 기반 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등 과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추진과제 중 ‘행정빅데이터 간 연계성 제고를 통해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정책수립 개선기반’을 포함하기도 하였다(제6회 국무회의, ‘19.2.12.).

정부의 관심이 높아진 것과 달리 행정자료의 활용은 아직 적지 않은 논란을 경험 중이다. 예를 들어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4개 기관 의료 빅데이터를 모아 연구 목적으로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민간 시민사회의 소송이 있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민간의 이의제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밖에도 행정정보를 관리하는 개별조직, 행정정보 담당부서의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전담부서 또는 분석센터를 신설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행정자료의 활용기반을 두고 조직 간 경쟁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 정보 보유기관, 통계청, 정보관리기관 등의 역할이 모호하여 행정정보의 연결과 활용은 실제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기 일수다. 정부의 행정자료 활용 추진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행정자료 활용 과정 중 개인정보보호조치 및 그 확인 일선 실무자의 부담이 적지 않아 조직의 경계를 넘어 행정자료 간 연계는 아직 협력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산업쪽의 동기는 매우 커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적 개선이나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하게 추동되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서 보건의료산업을 뒤에 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은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유럽의 경우 의료정보는 소득정보보다 더 민감한 정보로 연계와 활용에 더 높은 수준의 감시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행정자료 연계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이와 다른 경로를 걷고 있는 듯 하다.

행정자료 등 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안정성은 높이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아져서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었다. 이로써 2020년 1월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 통과하였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었고 개정된 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적용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이면에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대응하여 EU의 적정성 결정을 받고 상호인정국가가 되기 위한 동기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동법의 개정 중 사회보장제도 등 정책평가에서 자주 이슈로 등장한 자료의 추출과 자료와 관련된 조항의 신설과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는 개인정보에 가명정보도 포괄하게 된 것인데, 가명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법 제 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서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8항에는 과학적 연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행정자료를 가명 처리하여 정책평가를 위한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연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평가와 관련된 정부관계자와 많은 연구자들이 8월 이전 마련 예정인 시행령에 주목 중이다.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제 28조의 3)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 가명정보에 대한 안정조치의무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 가명정보의 안전한 연계와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자료 활용으로 정책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과거보다 용이해지기를 기대 중이다. 물론 이 조항에서 과학적 방법이 확대 해석되면서 기업의 상업적 연구에도 가명정보가 활용되어 특허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제2장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과 시사점

제1절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 기반

1. 행정자료 활용 정책 분석의 배경

세계 여러 나라들이 행정자료의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유럽국가를 선두로 유럽 및 영미권 국가들도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연구기반, 그리고 정책 근거마련을 강화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유는 북유럽 국가들의 행정자료 활용 역사가 길고 그 활용 기반이 여러 국가들의 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주고있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등록센서스를 구축한 후 2010년대 중반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 모델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구축, 운영해오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던 통계생산에서 등록 행정자료 기반의 통계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등록행정자료를 연구에 활용해왔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덴마크는 1981년 이후 인구, 사업체 정보, 주택, 거주, 교육, 고용, 가족, 가구, 소득정보 등을 등록기반 센서스에 통합하였고 이렇게 마련된 행정 자료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자, 기업, 일반 시민에게 폭넓게 연구, 분석을 위해 제공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2018: 349-350). 아래의 표를 보면 북유럽 국가들에서 행정자료의 범위가 얼마나 빨리 확대 구축되어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어떻게 센서스 자료와 통합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노르웨이의 행정자료의 공개는 1989년 통계법(The Statistics Act)를 근거로 행정등록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졌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각종 행정자료가 센서스로 통합되면서 행정자료 활용기반이 이른 시기에 확보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2-1-1〉 북유럽 국가들에서 등록 자료의 생성과 센서스에 통합

(단위: 연도)

구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생성	센서스 통합	생성	센서스 통합	생성	센서스 통합	생성	센서스 통합
중앙 인구 등록	1968	1981	1969	1970	1964	1970	1967	1975
사업체 등록	1975	1981	1975	1980	1965	1980	1963	1975
거주	1977	1981	1980	1985	2001	2011	2008	2011
주거환경	1977	1981	1980	1985	2001	2011	2008	2011
교육	1971	1981	1970	1975	1970	1980	1985	1990
고용	1979	1981	1987	1990	1978	2001	1985	1985
가족	1968	1981	1978	1980	1964	1980	1960	1975
가구	1968	1981	1970	1975	2001	2011	2011	2011
소득	1970	1981	1969	1970	1967	1980	1968	1975
총 등록기반 센서스		1981		1990		2011		2011

자료: UNECE(2007). Register-based Statistics in the Nordic Countries: Review of Best Practices with Focus on Population and Social Statistics. United Nations. p.5(한국보건사회연구원외, 2018. p. 352에서 재인용)

북유럽 국가들의 행정자료에 대한 태도와 행정자료의 활용 기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소득정보에 대한 태도와 활용이다.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19세기 중반부터 개인과 기업의 과세 정보를 공개하여왔다(유종성, 2016). 소득정보 공개로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납부 세액을 늘이는 효과가 있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성실 납세 문화에도 불구하고 자영자 소득신고는 완전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이 있었으나 과세정보 조회가 가능해지고 변화가 있었다. 2015년 한 보고서에서는 과세책자가 발간되지 않았던 일부지역에서 2001년 이후 온라인 과세정보 조회가 가능해진 이후 자영자 신고가 평균 3%정도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개인의 소득정보 공개는 이 밖에도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동일노동동일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가 수월하여졌다. 노르웨이에서는 온라인 과세 정보 공개 후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놀림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누가 내 소득정보를 보았는지도 공개하였다. 이 조치 이후 소득정보에 대한 검색빈도는 급감하였으나 여전히 소득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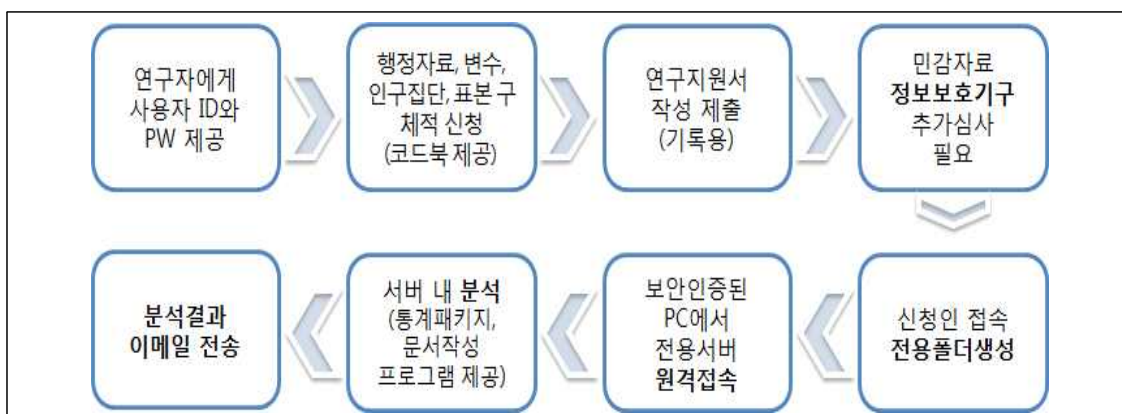
2.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 정책연구의 절차와 특성

가. 행정자료 활용 절차

북유럽 국가에서 등록행정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절차를 덴마크의 사례를 들어 약술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소유조직으로 자료 활용 승인신청을 한다. 자료신청을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안내서와 자료의 설명서를 제공받는다²⁸⁾. 이후 자료를 관리하는 조직이나 중개조직이 자료 활용을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중 중개조직의 역할을 하는 통계청에 없는 행정자료는 자료 관리조직에 자료 활용 요청을 하고 해당 자료 관리조직이 승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 없는 정보 중 사회부(Ministry for Social Affairs and the Interior)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활용하고자 신청하는 연구자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활용 승인은 우선 사회부로부터 구해야 한다. 이후 필요한 자료 결합을 하면 이 결합자료에 대한 승인과정은 통계청에서 다시 시작하고 담당한다. 또한 의료정보, 범죄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는 추가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신청인이 원격접속으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자료가 생성·저장된 배타적 전용 폴더를 할애받는다. 보안인증으로 접속이 가능한 분석공간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분석이 가능해진다. 통계청에서는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자료를 결합한다. 하지만 결합한 행정자료는 개인식별번호를 제거한 후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게 된다. 개인 식별번호를 제거한 후 원격분석 시스템에 저장-연구자가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개인정보 보호가 준수되었는지의 검토를 거쳐 이메일로 전송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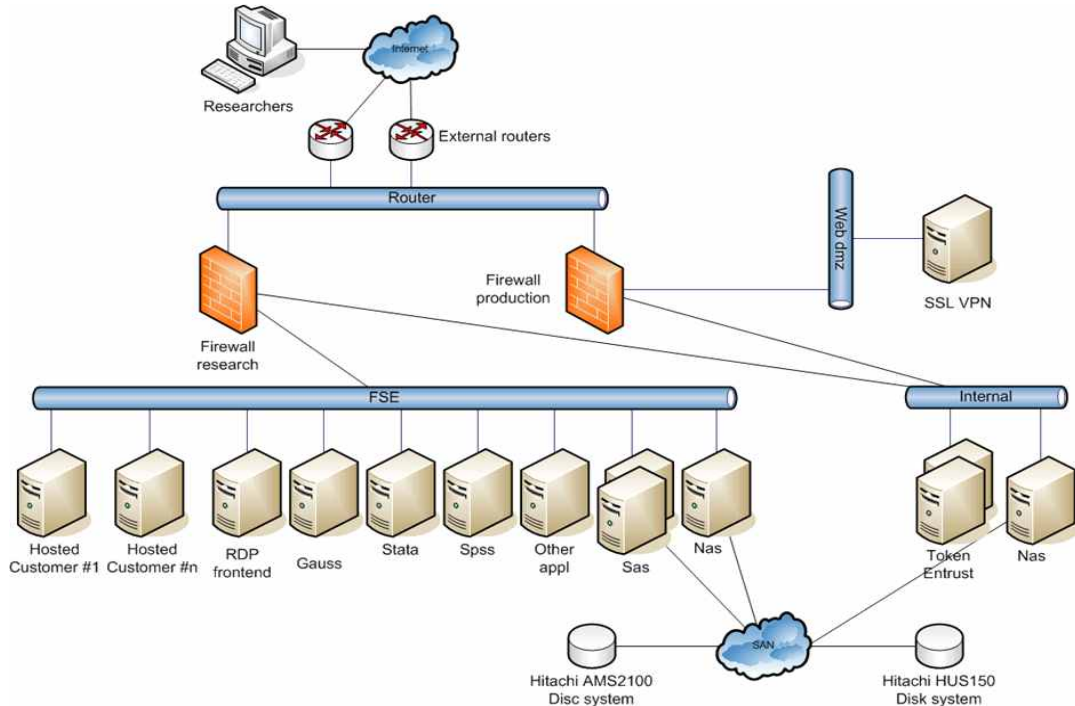
[그림 3-2-1-1] 덴마크의 행정자료 신청과 원격접속 방식의 활용과정



자료: 덴마크 통계청(2019. 6.19). <https://www.dst.dk/da/TilSalg/Forskningservice/Vejledninger>

이 과정은 우리나라의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연구가 경험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다만 원격으로 접속하여 분석하는 환경 조성은 우리나라와 다소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행정자료는 원격접속보다는 자료 관리 조직의 공간을 방문하여 지정된 컴퓨터에서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경우 스웨덴보다 약간 빠른 2000년에 연구자들을 위한 원격 데이터 접근 시스템(Remote Data Access for Researchers; RDAR)을 구축해서 발전시켜왔다.

28) 연구를 위한 노르웨이 통계청의 자료에 대한 소개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법적 근거와 신청 과정 등이 공개되어 있다. <https://www.ssb.no/en/omssb/tjenester-og-verktoy/data-til-forskning>

[그림 3-2-1-2] 덴마크 통계청의 원격분석 체계도²⁹⁾

덴마크 통계청에는 맞춤형 분석 공간(customized solutions³⁰⁾)도 운영된다. 필요한 자료의 구성과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한 것인데 이 원격분석기제는 각 원천으로부터 구한 행정자료를 횡단 또는 종단으로 구성하여 연구자가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방식인데 맞춤형 분석공간은 앞의 과정과 차이가 있는데 이 방식은 미리 확보, 구축한 정보에 한정하여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덴마크 통계청은 승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자, 학생들이 통계청 행정등록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승인 기관 중 공공기관은 약 80-90%이다. 최근에서야 자료 관리에 대하여 안전 환경을 조성한 민간기관의 비율이 증가 중이지만 민간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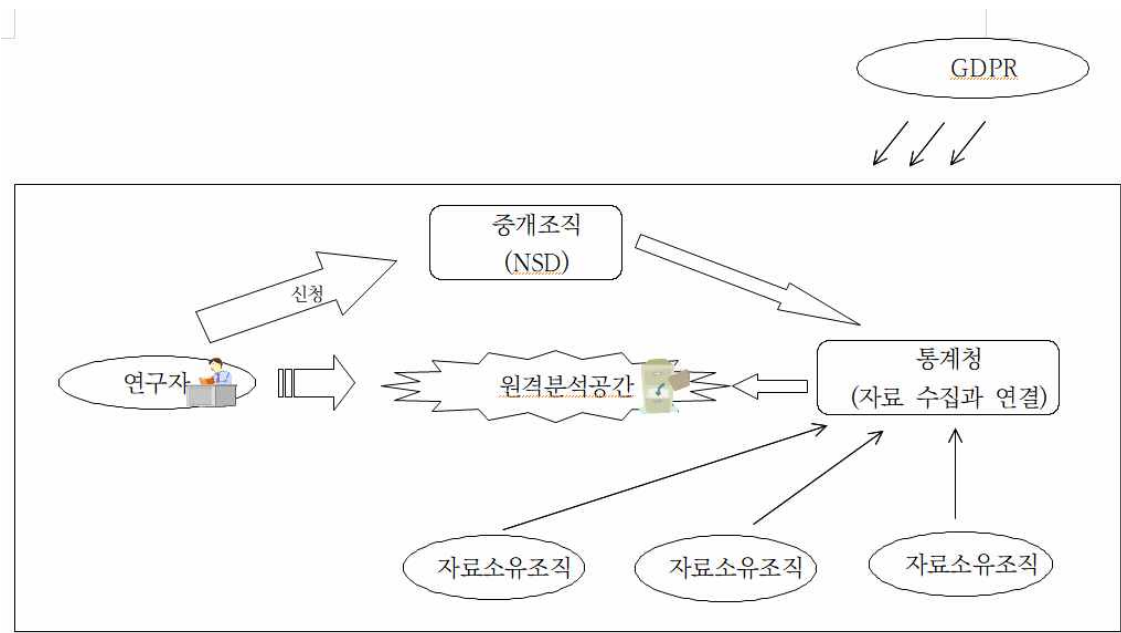
노르웨이도 통계청과 연구자료지원센터(Norwegian Centre for Research Data: NSD)³¹⁾가 공동으로 원격분석 기제(Remote Access Infrastructure for Register Data), microdata.no를 운영한다. 아래의 그림은 노르웨이에서 행정자료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전 과정이 덴마크의 그 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행정자료 등 정보를 활용할 때 GDPR을 준용하고 있다.

29) Ivan Thaulow. 2019 Researchers Access to Administrative Micro-Data at Statistics Denmark. 미발간발표자료

30) <https://www.dst.dk/en/TilSalg/skraeddersyede-loesninger> 를 참조.

31) 연구 자료를 담당하는 국가차원의 정보보관기구(archive)이다.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의 산하 조직이다.

[그림 3-2-1-3] 노르웨이 행정자료 활용 전 절차 개요



나. 북유럽 국가의 특성과 이슈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의 활용이 갖는 특성을 이슈별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주로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방식,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법적 문화적 기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과 행정자료 활용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특성을 정리하였다. 행정자료 활용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북유럽국가들에서는 근거기반 정책을 추진하면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사례는 일상적으로 발견된다. 이 점도 일부 언급하였다.

북유럽에서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승인된 기관의 연구자들은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다. 승인된 기관은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이다. 덴마크는 민간조직도 일정 수준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면 승인기관으로 포괄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조직의 비율은 높지 않아서 500여 개의 승인된 기관 중 10-20%만이 민간조직이고 이 비율도 최근 높아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인기관의 연구자가 자료 활용 신청을 하여도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과정을 거친다. 자료 활용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승인에 필요한 정보는 연구목적, 연구대상, 필요한 등록자료, 외부자료(결합을 추진하는 설문조사자료 등), 연구기간, 연구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³²⁾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해당연구에서 요구한 행정자료의 활용 근

32) Ivan Thaulow. 2019 Researchers Access to Administrative Micro-Data at Statistics Denmark. 미발간발표자료

거가 연구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연구목적으로 신청된 경우 자료 활용이 거부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연구에 필요하다고 신청된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이상 자료가 요청되지 않도록 협의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정부의 위탁으로 진행되는 연구들은 필요성이 사전에 검증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도 있다.

행정자료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문화적 요인도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활용될 수 있다는 문화가 상당 수준으로 수용되어 있고 이러한 문화가 행정자료의 활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가 실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료의 결합과 제공을 주관하고 있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한 몫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통계청을 방문하였을 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방문하였을 때 공히 대부분의 기관에서 해당 기관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덴마크의 경우 자료의 공유는 다분히 일방적이라고 설명되었는데 자료를 관리하는 주체, 즉 각 부처들이 통계청으로 자료를 보내고 통계청에서 결합된 행정자료를 부처가 요구하여도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등 통계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목적 외 이용을 요구받을 경우 그 요구가 자료 관리조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여도 거부하는 것이다. 일례로 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찾기 위하여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통계청으로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활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로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북유럽의 문화는 자료활용에 영향을 준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북유럽국가에서 개인의 소득은 개인정보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약하다. 개인소득, 납세는 공공성이 강한 정보라고 간주하는 문화가 있고 따라서 공개되고 있다. 반면 질환과 관련된 정보는 민감정보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공공정보, 개인정보의 분류가 상이하고 정보 범주화에서도 공공의 이익, 공공성, 연대의 강조가 강하다.

행정자료 활용에는 법적 기반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법적 기반을 보면 노르웨이 행정자료의 공개는 1989년 통계법(The Statistics Act)을 근거로 행정등록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졌다. 이후 여러 차례 통계법의 개정이 있었으나 행정자료에 대한 활용은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 부처 등 자료소유자(data owners)사이의 협력도 통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자료 구축, 연결, 배포의 중심조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점은 한국 통계법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 통계청의 행정자료 활용이 몇 가지 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집중되어있고 아직은 기타 연구로 확대, 제공하는 역할은 활발하기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이 비단 통계법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개인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법적 의미를 갖는 법이지만 이 법에 공공 이익을 위한 자료 활용에 대한 조항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대체로 GDPR을 준용하며 따라서 높은 수준의 보호규정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다루는 part 6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를 명시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통계적 목적으로만 정보가 처리될 때에도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제외

가 적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자료의 활용은 GDPR을 준용 수준과 같이 엄격하게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정책과 병행된다. 행정자료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의 GDPR의 적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고, 자료 활용의 방식이나 과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GDPR이전에는 노르웨이의 경우 NSD의 규정을 따르고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 Datatilsynet: DPIA)에 근거하여 자료 활용을 승인하고 있었다. 민감정보는 유전자 정보, 건강정보, 성취향 정보 등인데 이 정보들은 GDPR에 따라 특수정보(special category data)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보건자료는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그 활용에는 대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정보 중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는 분석에 사용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승인과정은 까다롭게 진행된다. 거부되는 비승인 사례는 적어도 대부분의 신청이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승인을 얻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새로 구성하여야 하는 행정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신청에서 분석 가능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기 일수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기간이 긴 편인데도 이 시간은 연구에 부담이 된다. 한국과 비교하여 연구기간에 대한 설정 관행도 상당히 다르다. 북유럽국가의 연구들은 적지 않은 연구가 3년 정도의 중기 연구로 구상되어있다. 이 점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자료의 활용은 자료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자료의 활용이 활발해지면 자료의 질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향상될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자료의 질이 좋으면 해당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등록된 행정자료들은 자료 소유조직이 질을 관리한다. 통계청은 자료 관리조직의 자료수집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덴마크 통계청은 이러한 질 관리를 위하여 자료소유조직과 협업하고 지원한다.

행정자료에 대한 활성화 정책, 공익 중심의 개인정보보호와의 건강한 균형을 갖춘 행정자료 활용, 문화적 지지, 그리고 자료의 질 관리 등이 밑바탕이 되어 근거기반정책에 행정자료가 일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노르웨이 통계청 연구부서는 ‘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보건, 장기요양, 교육, 실업수당을 위한 지출추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2070년까지의 재정추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사회보장 개혁에 반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일례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노동복지청(Norwegian labour and welfare services :NAV)에서 서비스를 받은 사회부조 장기 수급자들의 역능(capabilites)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덴마크도 다르지 않다. 덴마크의 사회부(Ministry for Social Affairs and the Interior)는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부서를 부내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부서의 연구자들은 행정정보를 활용한 사회정책 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기반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정부 초기에는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분석을 행정자료

를 기반으로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통계 기반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등이 정부 초기 작업이 대부분 행정자료를 활용한 분석에 기초한다. 사회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2019년 6월 즈음에도 신정부의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초기 4~6개월 동안 행정 통계자료가 작성되었고 이 자료들은 정부 정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바 있다.

제2절 북유럽 국가사례의 함의

북유럽의 행정자료 활용 사례는 행정자료의 활용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채 그 준비를 추진 중인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북유럽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우리나라의 그 것과 다르지 않다. 북유럽국가와 한국의 상이점은 행정자료 활용기반에 있다. 한국이 북유럽 국가와 다른 점은 행정정보의 공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수준이고, 이와 더불어 자료 접근에 표준화와 형평성 보장의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어쩌면 공적 활용에서 민간에게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온 북유럽과 달리 산업용, 또는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목적이 더 우선하여 고려되는 한국의 정책방향 또는 행정자료 이용에 대한 논의나 요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유럽 사례가 갖는 의미가 있는 시사점 중 첫 번째는 행정자료의 활용을 추진하여 온 역사와 관련된다. 북유럽에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공익이다. 행정자료를 제공할 것인지의 결정과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 공익을 중시하는 행정자료 활용은 사회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제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였다.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회의에서 만난 자료 관리를 하는 주체, 자료 활용 경험이 있는 연구자 모두 행정자료의 활용에서 신뢰가 매우 중요한 근간임을 강조한다. 행정자료의 활용에서 공공, 그리고 안정성이 높은 사례부터 활용 경험을 축적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정책방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법적 기반도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려되어 있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북유럽의 거버넌스와 문화가 만들어낸 성과가 자료접근에 대한 형평성과 과정 공식화라는 점이다. 행정자료의 활용에 앞서 자료 이용 승인요청은 연구자의 몫이다. 정부위탁연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리고 자료 승인의 절차도 동일하고 표준화되어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료신청을 불승인하기보다는 연구에서 자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의 자료만으로 자료를 신청하도록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자료 신청을 합리화하고 이후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료 활용에서 일정 수준이상 형평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문화, 그리고 공공에 대한 우선고려 등이 실제 행정자료의 활용으로 구현되는데 있어서는 해당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역할분담과 해당 기관들의 독립성 확보가 기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행정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관련조직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거버넌스가 작동한 것이다. 행정자료를 승인기관의 연구자들이 활용하도록 지원하는데 관계된 주체들은 명확하게 정리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절차는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연구의 설계와 진행을 도와준다. 자료소유조직과 자료연결조직,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 판단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분담을 공식화하여 자료접근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한국의 현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이러한 역할분담에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승인기관, 개인정보보호기관, 자료연결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중요하다. 북유럽의 경우 행정자료를 연결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감독하는 기관의 독립성에 대하여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해당 조직의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북유럽에서는 연구자의 자료 활용과정에 대하여 편의성, 접근성도 고려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연구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지 자료 승인과정의 공식화 뿐 아니라 원격분석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원격분석기제는 연구자가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호된다. 행정자료 활용 연구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을 취하지만 여러 행정자료를 연결하여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고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격분석시스템을 적용하여 결과만을 연구자가 취할 수 있게 하고 개인자료에 대한 접근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제3장 행정자료 활용 방향과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행정자료 활용 기반과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북유럽의 선진적 사례도 정리하였다. 앞서 검토한 이 내용들을 기초로 향후 정책평가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개선하여야 하는지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과제는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정책의 방향과 주요 이슈별로 개선하여야 하는 정책 내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1절 행정자료의 활용 방향

앞으로 정책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것은 사회적 요청이라고 본다. 다만 과학적 근거가 단순히 계량적 분석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접근을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적 분석을 통한 근거마련도 활용하는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분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행정자료의 활용이 정책분석에서 가능하도록 기반을 검토하고 정책을 개선하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행정자료의 활용기반을 강화하여 정책분석의 합리성을 높이면서 이후 설문조사와 행정조사의 강점을 살리는 결합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기획이 가능한 기제를 갖추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기획에서 종합적 정책분석이 선행되도록 하여 정교한 설계가 되도록 지원하는 기제를 갖추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보장제

도의 구성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정부는 제도의 효과변화를 감지하는 지표를 관리하는 일이 과거 대비 중요하여 지고 있다. 정책평가와 달리 지표의 관리는 정책 전반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 지표관리에서도 주기적 생산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생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책 근거를 강화하는데 있어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 평가가 갖는 이점은 앞의 서론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물론 행정자료가 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나 욕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취약하다. 따라서 설문조사 등으로 파악된 행태, 인식, 욕구 정보와 맞물려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시도도 이어져야 한다. 요는 이러한 자료의 연결과 상호 보완을 위해서라도 행정자료의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행정자료가 정책분석에서 갖는 가장 주요한 강점은 행정자료의 결합으로 정책에 대한 종합적 분석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일정 주기로 수행된다면 사회보장제도의 중기계획의 수립 및 정책 조정에서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게 된다면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제도 내에서도 최근 중범위 수준의 중장기 정책 기획을 수립하는 제도군이 계속 확대 중이다. 개별 정책의 개선과 달리 이러한 정책계획은 행정자료에 기반을 둔 종합적 분석을 필요로 하므로 행정자료의 활용 기반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표관리에도 행정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기여할 수 있다. 각종 사회 지표도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될 경우 그 정확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지표의 범위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산되는 지표들은 한 부서에서 관할하는 정책의 수급으로 한정된 정보와 달리 관련 요인이나 정책을 고려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정책에서 고려할 수 있는 측면 중 자료의 한계로 누락되는 측면이 줄어 정책 기획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표를 산출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정기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요 지표들을 생산하고 이 지표들의 점검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를 가늠하고 정책을 수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획에 분명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제2절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행정자료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정책을 평가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아래의 이슈들과 직면하게 된다. 근거기반정책에 대한 강조는 매우 강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지만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 아래의 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변화를 위하여 긴요할 것이다.

행정자료의 연계, 활용과 관련된 정책이슈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크게 행정자료 활용인프라, 자

료의 질, 그리고 분석환경과 관련된 이슈들로 구분이 가능하다. 행정자료 활용 인프라는 정보활용의 안정성과 접근 형평성을 확보와 관련된 이슈이다. 자료의 질은 주로 자료의 포괄성과 정확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된다. 분석환경은 다소 실무적인 이슈이지만 접근형평성이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이슈로 볼 수도 있어 단순한 이슈라고 하기는 어렵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슈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즉 법적 기반이 분석환경 조성에 영향을 줄 것이고 절차의 공식화는 자료의 목록과 정보 정의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위하여 일단 이슈들을 구분하였다.

〈표 3-3-2-1〉 행정자료 활용 정책분석의 주요 이슈

행정자료 활용 인프라: 안정성과 접근 형평성	자료의 질: 포괄성과 정확성	분석환경: 안전성과 효율성
법적 기반 마련 합리적 거버넌스의 구축 정책지향의 합의와 준용 절차 공식화	소득·재산 등 정보구성 정보의 시차 지방정부의 행정자료 분석단위: 가구의 정의 자료연계의 결함키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체계 분석환경의 조성(기간과 물리적 분석공간) 자료의 목록과 정보 정의

1. 행정자료 활용 인프라: 안정성과 접근 형평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행정자료를 연계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법 정비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현재 적용이 가능한 유사한 법률 수준의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각 조직들마다의 정책, 이해관계로 인한 자료의 연계, 활용과정의 혼란이 적지 않다. 법적 기반과 더불어 이러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실질적 활용기반이 정돈되어야 한다. 공식적 절차를 거쳐 예측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행정자료의 활용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 정보관리조직 등 관련 조직들, 행정자료 활용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 사이의 합리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법적 기반과 이를 구현할 거버넌스 정착에서 중요한 중간단계는 정책지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러한 합의의 준용이 될 것이다.

가. 법적 기반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 기반은 일반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공익을 위한 정책평가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근거기반정책을 위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더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연구 및 사회보장제도의 기획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관련 법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료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준용하여야 하는 개인정

보보호법과 활용과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리고 연계의 가능성을 전망하는데 근거로 고려가 가능한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이 밖에도 자료의 연계에서 개별법률 수준에서 자료의 반출을 가로막았던 관련 법률, 국세법과 의료기본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3-3-2-2〉 적용 내용 별 행정자료 활용 근거 법 조항

개인정보보호	사회보장 행정자료의 활용	행정자료 등 빅데이터의 활용	개인정보 처리자료의 연계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 6: 가명정보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	「사회보장기본법」제41조: 사회보장 정책수립등을 위한 자료협조 요청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지원대상자발굴을 위하여 정보요청 가능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0조, 제10조, 제19조, 제26조: 보건의료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및 자료 요청 추진 근거, 정보연계전담조직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안전조치 고려 개인(가명) 정보 이용 가능성 명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과학적 연구에 활용 가능	「통계법」 제24조: 여러 기관의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기반 마련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행정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근거 조항이 있다. 이법 제 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있다. 그리고 2항에는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적시하고 있다. 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여 각 기관의 행정자료 등 자료제출의 요청에 힘을 실어 주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개인정보보호 등이 제기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한 강력한 조항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는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는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 수급 요건과 절차, 기타 수급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에서 보장기관의 장은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정보의 공유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근거로 할 수 있는 조항들로 자주 언급되어왔던 조항들이지만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안정적이지 않았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행정자료를 추출하고 연계하는 근거조항으로 수용되기에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 그리고 법률 수준의 행정자료 활용의 목적과 방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항상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 연관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상충위험이 지적되었다. 안전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 해석의 이견을 넘어서는 것은 항상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회보장행정자료의 활용을 다루는 또 다른 법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있다. 이 법은 보건의료 기술의 진흥 등으로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 1조). 국민건강증진을 공히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 법이다. 이 법 제26조(자료의 제공) ①, ②, ③항은 아래와 같다.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법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에서는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보건의료기술과 이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설립한 연구원이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요구하고 받아 결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4개 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때도 이 기관의 법적 근거가 활용되어 해당기관이 자료 연결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의료법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제19조(정보 누설 금지)가 대표적이다. 동 조항 중 내용을 보면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보건의료 관련 정보는 대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는 셈이다. 유럽 등 국외의 경우 보건의료정보는 행정정보 중에서도 보호의 수준을 높이는 정보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오히려 보건의료정보의 연결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다소 파격적인 활용의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보건정보 중 건강보험관련 정보만 하여도 행정자료 연계과정에서 정보보안을 이유로 비식별조치된 상태로도 관리 기관 밖으로 반출, 결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의료분야의 내부의 기관 사이 자료 결합만 별도의

파격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빠르게 추진되어 가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의 개정에는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둘러싸고 관심이 뜨거웠다.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를 위한 안전 조치에 대한 규정도 강화, 확대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에는 개정으로 3항이 신설된 것인데, 2020년 2월 4일 기준으로 신설된 조항은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이다. 이 조항은 가명정보 처리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관련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이전에는 제18조 2항에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었다. 이 조항도 행정자료를 공익목적의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와 가명처리로 개인정보 활용을 공히 다루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정보의 비밀유지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의 1항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조세나 과징금부과 관련 외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소득정보를 결합한 행정자료를 구축, 분석하는데 있어 정보결합의 주관기관을 국세청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

관련 법 중 또 다른 하나는 통계법이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기관이 통계목적으로 행정기관에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통계법 제 24조 행정자료의 제공의 조항 내용을 보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자료의 요청과 대상조직의 자료 협력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통계법에서 통계란 ‘통

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이 법 조항은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지만 통계작성기관을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가, 또는 다른 법령의 통계목적에 대한 해석에 준용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여러 정책 연구에 통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미 통계청에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동 법이 통계청의 자료 연결과 지원으로 정책 등 연구에서 행정자료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법의 관련 조항은 행정자료의 활용 뿐 아니라 행정자료의 연결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료의 결합의 근거조항을 다루고 있는 법은 통계법 외에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경우 그 활용 가능성을 높였고 이 자료의 결합 근거도 강화하였다. 이 법은 법 목적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처리에는 연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법에서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항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가명정보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따를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구체적인 조항적용을 위하여 시행령 마련 중이다.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이후 행정자료 활용여건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결합도 시행령에 의하여 절차 등이 구체화될 것이다.

사회보장 정책의 종합분석·연구를 위해서는 원자료 수준의 행정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견고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 단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국세청 등 일부 행정자료는 연계에서 한계를 지녀 해당 자료 관리조직의 범위에서 반출되지 못하였다. 물론 비식별화를 전제로 한 반출의 경우로 추진한 협의에서도 법률 미비로 자료 연계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세청 과세정보는 다른 법률에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만 제공(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과 같은 법률 수준에서 사회보장행정 자료의 연계 및 활용의 근거 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할 방안이다.

나. 합리적 거버넌스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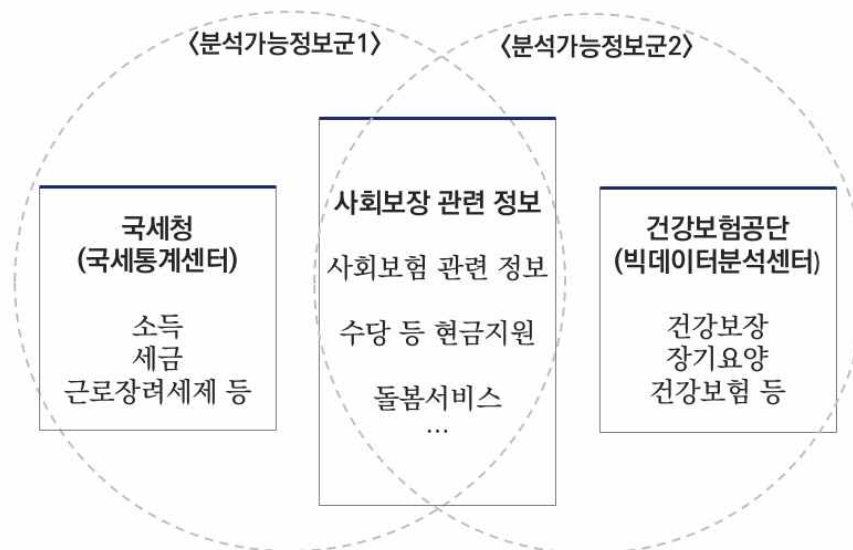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법적 기반이 변화 중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법 수준에서는 유럽의 나라들과 상이성이 그리 크지 않다. 행정자료의 활용 기반에는 법적 근거 외에도 중요한 요소들이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으로 행정자료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거버넌스가 작동하는가도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거버넌스가 잘 구축 정리되지 않으면 여전히 일부 기관들은 각기 해당 자료의 비식별화하고 가

명정보가 되어도 반출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자료의 활용,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분석 등 관련 조치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를 담당할 추진 주체와 각 주체들의 역할분담, 협력의 근거와 협력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이 분명해져야 한다.

행정자료 소유조직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행정자료의 연계, 활용 과정을 경험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언급되어왔다. 심지어 정부의 위탁연구라고 하여도 자료소유기관의 자료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는 부정적인 경우가 다수였다.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자료 소유조직, 관리조직은 행정자료의 활용에 대하여 다분히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법 해석에 이견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또는 동일 자료라 하여도 동 기관의 위탁과제인지 또는 동기관의 추진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자료의 추출과 반출에 대한 결정이 다르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자료 소유기관들간의 협력 장애는 영향을 주었다. 국세청의 소득자료는 가명정보라 하여도 국세법에 따라 반출이 어려워 결합된 여러 사회보장정보를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에서 소득정보와 결합하여 분석해야 하였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기관의 방침으로 가명정보 상태로도 반출을 승인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기 결합된 사회보장정보와 건보공단의 건강보장제도, 요양제도 정보를 건보공단의 맞춤형 DB 공간에서 결합하고 분석하여야 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자료에 소득과 건강보장성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수 없었고 소득계층별 건강보장과 여타 제도의 수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도 없었다.

[그림 3-3-2-1] 사회보장 정보의 단절 사례



행정자료의 활용에서 자료소유조직들이 협력을 하고 실제 자료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는 법의 법 내용을 추진할 추진체가 필요하고 자료에 대한 안전한 협력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일선 담

당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버넌스가 없다면 번거롭고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료 협력을 할 이유를 갖기 어렵다.

행정자료의 활용 과정 중 관련 조직의 역할이 현재 상당히 모호하다. 이 이유로 각 자료소유기관은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자료의 연계, 구축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료 확보로 정보기관의 권력을 강화하고 조직성과를 높이하고자하는 경향이 자주 목격된다. 행정자료가 필요하면 누구에게 자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중개조직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기획과 관련된 이슈검토와 필요한 조치의 추진을 담당할 주체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근거기반정책위원회(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의 구성과 활동을 눈여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³³⁾. 이 위원회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 2016년에 보수당과 민주당, 양당의 지지를 받은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의하여 구성되었다. 이 법은 기존 자료의 개선된 활용이 정부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료 활용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위원들은 어떻게 자료, 연구, 평가가 근거를 마련하는데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정부의 근거구축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야 했다.³⁴⁾

이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학술연구 경험자, 자료 전문가, 프로그램 관리자, 그리고 개인정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그들의 학제간 협업으로 설문조사와 행정자료 활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가 수집한 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장애, 정책연구와 평가를 하는데 있어 적절한 인프라와 안전장치를 갖추면서 자료를 잘 통합하는 전략, 정부프로그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천방안, 정보처리기관이 정책평가와 연구기회를 제고할 수 있는지 등이 이러한 이슈들의 예이다. 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에 따라 결과를 발표하고 2017년 9월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위원회는 정부 자료에 대하여 안전하게 접근성을 높이고 근거의 생산과 활용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생산하였다. 이후 미국 정부는 후속 법(일명 Evidence Act)을 제정, 자료의 개방과 자료 관리 향상을 도모하고 연방정부의 자료를 전략적 자산으로 전제하고 정부 자료에 대한 접근성, 관리, 그리고 활용을 개선하는 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밖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개별기관이 권고를 준용하도록 가이드자료를 보급하였다. 이후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 국가수준의 안전한 자료서비스(Nation Secure Data Service)를 개발하여 자료연결과 개인정보보호를 함께 추진되도록 하고, 소득과 임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기존 정부의 기존 정책을 변화하는 각종 노력으로 이어졌다.³⁵⁾

33)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cep.gov/about.html>.

34) <https://www.cep.gov/about.html> 2020. 3. 10 추출.

35) <https://www.datacoalition.org/two-years-of-progress-on-evidence-based-policymaking-in-the-united-states>

다. 정책지향의 합의와 준용

행정 자료의 활용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과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견고하게 하고 활용에 대한 지지적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북유럽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정자료의 활용에서 공공의 이익우선, 공공의 활용 우선은 사회적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행정자료 활용은 자주 산업육성과 연관이 되어 거론되고 정부의 발표에서도 주로 산업육성에 방점이 두어지는 경향이 있다.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에서 산업분야에 행정자료의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논의는 행정자료 활용이 사적이익과 개인정보의 침해위험으로 연결되면서 자주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2월 제3차(2020~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경제 활성화는 이 계획에서도 중요한 목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 점은 이전의 계획과 차별화된 점이다. 이 계획은 정부 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사회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공 내부의 칸막이를 넘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연계·활용함으로써 과학적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정부 내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으로 빅데이터 센터, 플랫폼 등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계획의 골자 중 하나이다. 정부 내부의 협력적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하겠다고 하고 그 중심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배치하였다. 한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정부의 정부 내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어떻게 추진하여 갈지 주목된다. 이 과제는 행정자료의 활용에 대한 신뢰 구축은 물론이고 그동안 등한시 되었던 정책기반을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이 제대로 검토, 추진될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행정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거버넌스가 취약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공익을 위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각개약진으로 추진되는 조직의 단절적 플랫폼 구축과 이로 인한 행정자료 연결의 장애 등은 합리적 거버넌스로 극복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공공의 행정자료 활용 사례의 축적으로 이어져 행정자료의 활용이 공공 사례 축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라. 절차 공식화와 형평성 확보

행정자료에 대한 신청과 승인과정을 공식화하고 연구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행정자료 등 자료의 이용을 위한 신청 자격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기준에 부합하면 자료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여야 한다. 접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두

번째로 절차가 공식화되어야 하는데 결합자료의 신청창구가 명확해져야 한다. 이 절차의 공식화는 앞의 두 가지 과제 거버넌스 구축과 공공 우선의 정책 지향이 전제되어야 한다. 당장 행정자료 특히 결합된 행정자료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가 어느 조직으로 자료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각 자료 소유조직에 자료신청을 하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는 대체로 여러 조직의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필요로 하여 부적절하다. 그러나 결합자료가 필요한 경우 어느 조직에 자료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모호하다. 북유럽의 경우에는 통계청이 정보거점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별도의 정책추진이 없다면 통계법에 근거하여 통계청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방안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자료이용의 형평성 확보는 분석을 위한 물리적 조건조성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맞춤형 행정자료를 분석하는 공간은 현재 자료 소유조직이 지정한 특정 공간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 방식은 자료이용자의 접근성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한다. 대부분 이 공간은 전국의 몇 곳에 한정되는데 원거리의 거주하는 이용자는 자료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북유럽과 같이 원격분석방식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속히 개선이 하여야 한다.

2. 행정자료의 질: 포괄성과 정확성 확보

행정 빅데이터는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포괄범위와 정확성에서 일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평가에서는 이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보완이 필요한 대표적인 정보는 소득과 재산이다. 소득과 재산정보의 포괄성이 일부 낮고 이로 인한 정확성 문제가 남아있다. 정보의 포괄성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정보가 포함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사회보장제도 분석의 주 단위가 되는 가구 개념도 자료마다 상이하여 분석의 장애로 작용한다. 한편 자료연계에서 핵심적 이슈가 되는 연계 결합기의 정확성도 개선을 고민하여야 한다.

가. 소득과 재산 정보의 취약성과 보완

이 연구에서 활용된 행정자료에는 소득정보와 자산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였다. 국세청의 소득정보와 16개 기관의 정보를 결합한 자료에서도 소득의 경우 사적이전소득, 재산의 경우 금융재산 정보가 포괄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활용된 행정자료의 소득은 설문조사자료와 적지 않은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제2부의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소득빈곤은 기존의 통계청 설문조사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분석결과와 상이하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모두 설문조사자료와 비교하여 행정자료의 빈곤율이 높다. 설문조사자료와 달리 시장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이 없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소득개념을 고려한 논리적 설명

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차이는 소득파악의 차이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 설문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소득 빈곤율 차이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인한 차이보다는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유는 설문조사자료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부분시장소득으로 한정하여 빈곤율을 비교하여도 행정자료과 설문조사의 빈곤율 차이를 모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상 낮은 소득분위와 높은 소득분위에서 국세통계와 비교하여 설문조사자료의 소득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차이의 일부는 소득파악과 연관된다. 낮은 소득구간의 비공식부문 근로소득에 대한 파악의 어렵고 고소득집단의 소득에 대한 과소보고를 넘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비과세 면세소득이 행정자료에서는 과소 보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소득하위계층에서도 일부 프리랜서나 특고의 소득누락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용직도 1개월 이하 단기 고용의 경우 누락의 위험이 클 것이다. 또는 주 15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중 일부도 소득의 누락위험이 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하위소득구간에서 적지 않은 소득의 하위 보고 위험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수준의 면세점은 소득관련 행정자료의 포괄성과 정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정책의 자사조사에도 큰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소득분포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는 행정자료와 비교하여 소득 자료를 보완하는데 전체적으로 두 자료 중 높은 금액을 취한다. 설문조사와 행정자료 중 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 신고대상이 아닌 소득의 경우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따라서 설문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행정자료의 소득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득을 반영하게 된다.

행정자료 중 소득 자료의 부정확성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할 때 더 혼란스럽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경우 보험료 자료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산정방식이 상이하다. 이를 근거로 한 소득 추정에서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을 결정하는 점수 또는 전체 재산 정보가 없이는 보험료를 활용하여 소득수준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유는 건보료 책정 과정에서 재산을 반영하면서 전월세의 보증금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국세청의 자료와 비교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는 시장소득이나 납세정보로서의 소득정보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서 일부 국세청 소득자료보다 정확성이 높을 수 있다. 문제는 소득을 파악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제공된 건강보험료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일부 집단의 경우 국세청의 소득정보와 달리 보완된 소득정보이기 때문이다. 소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선으로 기본적 여건의 변화를 기대하여 볼 만하지만 현재 환경에서도 각 기관의 소득정보를 가공 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정보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소득정보가 아니라 가공된 보험료 정보로 한정되어 있다.

금융 재산 중 전월세보증금은 우리나라의 거주형태를 고려할 때 재산 중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는 특히 큰 의미를 지니는 재산이다. 하지만 금융재산 정보가 누락된 행정자료를 분석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이나 제도적 배제위험 집단을

파악하는 것은 정확성이 상당히 낮아진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재산이 누락된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소득이 높아도 재산이 0인 가구들이 적지 않았다. 이는 금융자산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표 <2-1-3-3>를 보면 소득 4분위에서 재산이 0인 가구 비율이 오히려 3분위보다 높다. 재산이 없는 젊은 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전세 등을 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비율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북유럽의 경우 은행권 금융자산은 행정자료로 입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료의 보완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한 바 있으나 각종 정보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설명력이 그리 높지 않고 추정소득의 소득분와 행정자료의 소득분위가 불일치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나. 정보의 시차

자료의 정확성은 자료의 시차 문제와도 연관된다. 행정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약 2년의 시차가 있는 자료를 분석하게 된다. 정책평가를 횡단면비교를 통하여 통시적으로 이해할 경우 이러한 시차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집권기에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정책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 이 시차는 매우 큰 장애가 된다.

국세청의 국세정보와 건보공단의 소득정보 중 시차를 줄일 수 있는 정보원은 건보공단의 소득정보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확인과 보정 전 자료들일 가능성이 높다. 경향을 파악하는데 큰 결함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오류의 비체계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자료 소유기관으로서 자료 이용을 승인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통상 자료의 정확성과 자료의 최신성은 서로 상충되는데 정책분석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다. 지방정부의 행정자료 연계

자료의 포괄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행정 빅데이터는 대체로 중앙정부의 정책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의 사회정책 비중이 높아지면 중앙정부로 한정된 정책평가 연구가 갖는 한계도 커질 것이다. 정책적 기획 및 적용의 순서를 고려한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선 시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기획과 집행을 분담한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다고 하여도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보는 국가 정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한편 지방정부도 정부의 정책 평가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분석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자료 협력이 두 정부 모두에게 긴요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자료를 정부 사이에 어떻게 연계,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기획이 필요하다. 북유럽의 경우 필요한 주요 행정자료는 지방정부로 부터도 입수하여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라. 분석단위: 가구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

통계청의 설문조사에서 기준이 되는 가구와 주민등록 행정전산망의 가구는 다소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통계청의 설문조사는 주로 거주 뿐 아니라 경제를 공유하는 단위로서 가구개념을 중시한다. 만약 거주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가계를 공유하는 경우 하나의 가구로 간주한다. 물론 사적이전의 경우는 예외다. 주민등록 DB에서 가구는 거주를 기준으로 하며 엄밀하게는 신고된 거주를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 가구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주민등록 DB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과 근접하는 가구개념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는 센서스, 통계청의 설문조사에서 준용하는 가구개념을 소득분배 등 사회보장관련 연구에서 준용하여 왔다. 한편 각종 사회보장제도 중 가구단위 지원은 실사를 정확하게 하고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 DB의 가구 개념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서 가구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평가 수요에 맞춘 가구개념을 행정자료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등록 DB 에서 표본을 추출하였으므로 가구개념은 거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구규모별 가구의 비율이 센서스 자료의 그 것과 상이하다. 하지만 기존의 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통계청의 센서스 기준 가구개념을 활용하던 관행을 고려하여 가능한 선에서 가중치로 표본대표성을 확보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하여도 주민등록 DB의 집계자료로는 센서스와 동일하게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는 가중치를 구하기 쉽지 않다. 분석단위 가구개념을 검토하고 분석단위를 고려한 표본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보강 등 제반 보완책을 고민하여야 한다.

마. 정확매칭(exact matching)의 매칭키에 대한 숙고

행정자료를 활용한 종합분석에서는 정보 간 정확한 연결이 중요하다. 행정 빅데이터의 장점인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정확매칭(exact matching)이다. 자료 간 결합에서 가장 정확성을 높이는 결합키는 주민등록번호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르면 정책연구 등에서 연계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비식별처리된 연결키를 구성하는 것도 불법이다. 현재 행정적 목적으로 목적 외 등록 개인식별번호의 활용(법률 수준에서 필요성이 적시된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통과 등의 절차를 마친 경우)이 더 활발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평가를 위한 연구 등에서는 이러한 활용이 승인되기 쉽지 않다.

자료들 사이의 결합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키는 연령, 성, 이름 등으로 구성된 비식별정보

이다. 이 연구도 생년월일, 성별, 이름으로 비식별조치된 결합키를 구성하고 이 키를 활용하여 자료 사이 결합을 하였다. 문제는 이 결합키에서 중복사례가 적지 않아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점이다. 북유럽은 등록개인식별번호(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를 결합키로 활용 중이다. 등록 개인식별번호를 활용하는 각종 사례와 정책연구의 차이, 그리고 적용하는 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안이 조금 더 면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3. 행정자료의 분석환경: 안전성과 효율성

행정자료를 분석하는 환경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정책평가 등의 연구가 추진되기 어렵다. 한편 분석환경도 적절하게 조성되지 않으면 행정자료의 활용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원격접속을 이용한 분석은 행정자료 활용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자료의 목록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불필요한 시간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로 한정하여 자료신청과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준비이다.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료 이용에 대한 시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된 이슈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체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 중이다. 당연히 행정자료를 이용하게 정확하게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도 증가 중이다. 이러한 시도보다 더 앞서 추진되었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은 산업적 수요에 부응하는 자료의 활용이다. 과학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바로 뒤에 산업이 자리하는 연구수요가 적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연구수요에 부응하여 자료를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 정책평가는 개인을 특정화할 동기가 별로 없다. 제도에서 배제되어 극단적 위기로 전화될 사례를 발견하고 조기 대응할 목적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산업영역의 경우는 다르다. 서비스 소비 등 전체적인 경향을 발견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을 어느 정도 특정화할 수 있는 연구수요도 적지 않다. 이러한 확인이 바로 시장에서 소비자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특히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연구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후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정책평가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일 수 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도 수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영역에 관계없이 다른 목적 이전에 지켜져야 한다.

나. 분석 환경의 조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자료의 이용을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행정자료 이용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 원격접속방식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면 이용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도 물리적 공간을 마련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결국 원격접속방식은 자료 이용의 형평성 뿐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이다.

다. 자료의 목록과 정보 정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자면 우선 행정자료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현재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연구의 초기 어려움은 정보의 목록에 대한 안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행정자료, 해당 자료에 있는 정보의 목록이 정리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 목록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정보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마련이 될 일이지만 이러한 목록을 작성하자면 이에 앞서 자료의 순도가 높아져야 한다. 각 정보 중 결측의 처리, 오류의 확인과 보완, 범주화의 타당성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목록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정보소유조직들은 정보의 순도가 높지 않아서 정보의 공개, 이용을 꺼리기도 한다. 정보의 순도를 높이는 정책조치가 없다면 행정자료의 정보 중 상당한 규모의 정보가 목록으로 구성되지 않고 당연히 정책분석에 고려되지 못할 것이다. 모든 행정자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자료를 입력하는 사회구성원의 노고로 만들어진다. 당연히 자료의 순도를 높이는 의무가 정보 주체에게 주어지고 정부는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각 자료 소유 또는 관리 조직은 행정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공유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목록이 소유 정보의 목록규모와 비교하여 차이로 크지 않아야 한다. 행정자료 목록이 제대로 작성, 그 활용도가 높아지면 자료의 순도가 높아질 것이고 자료 중 행정적 필요성이 낮고 분석활용도 낮은 정보의 수집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선순환을 고려하는 초기 노력이 중요하다.

행정자료 중 특정 정책 정보는 정책 평가에서 중복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사업은 재정일자리 사업에 거의 대부분 기록된 상태이다. 이러한 정보의 확인과 분담, 처리, 공지 등은 기관 경계를 넘는 자료의 확인과정으로 파악된다. 자료의 순도를 높이는 일은 자료 소유 주체 경계 내에서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중복 처리 등의 오류를 줄이자면 정보의 정의가 정확하게 주어져야 한다. 자료 이용자는 제공된 정보 정의를 보고 해당 정보를 분석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자료 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정보가 존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이라는 정보는 조직마다 행정동과 법정동을 상이하게 선택하고 있다. 지역을 결합키에 활용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이러한 예는 적지 않다.

참고문헌 <<

- 공공주택특별법. 2019. 법률 제16417호(4월 30일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019. 대통령령 제30179호(10월 29일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공단. (2018). 국민연금 공표통계(2017년 12월말 기준). <https://www.nps.or.kr>에서 2020. 4. 28. 인출.
- 국세청. (2017a).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298만 가구에 신청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https://www.nts.go.kr>에서 2020. 4. 27. 인출.
- 국세청. (2017b). '17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참고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https://www.nts.go.kr>에서 2020. 4. 27. 인출.
- 국토교통부(2017). 2017년 주거급여사업안내.
- 국토교통부(2017). 2017년 주택업무편람.
- 국토교통부(2019). 2019년 주거급여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http://www.mohw.go.kr>에서 2020. 4. 27. 인출.
-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http://www.mohw.go.kr>에서 2020. 4. 27. 인출.
-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http://www.mohw.go.kr>에서 2020. 4. 27. 인출.
- 보건복지부. (2017c). 2017 기초연금 사업안내. <http://www.mohw.go.kr>에서 2020. 4. 28. 인출.
- 보건복지부. (2018a). 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 <http://www.mohw.go.kr>에서 2020. 4. 28. 인출.
- 보건복지부. (2018b).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http://www.mohw.go.kr>에서 2019. 6. 27. 인출.
- 보건복지부. (2015a). 2015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5b). 2015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15c).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5-126호, 2015.7.1. 시행.
- 보건복지부. (2017a). 2017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7c).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6-242호, 2017.1.1. 시행.
- 보건복지부. (2018). 2017년 장애인 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1&conn_path=I2
- 여유진·김미곤·류정희·정은희·강지원·정희선·김명중·우명숙·이원익·조준용. (2017).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강희정·류정희·손병돈·이재원·박형준·김성아. (2018).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보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박형준, 이정윤. (2019). 2019년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희·백승호·김성아. (2018).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9a).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처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에서 2019.12.26. 인출.

통계청(2019b).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12.26. 인출.

통계청(2019c). 성, 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시군구.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2019.12.26. 인출.

통계청. (2017). 2017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에서 2020. 4. 28. 인출.

행정안전부. (2018). 2017년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명부 추출 원자료; 인구총조사 집계자료(통계청, 2019a, 2019b).

16개 기관 추출결합 원자료.